제427회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2025년8월4일(월) 오후 2시

［국회법 제10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무제한토론 실시로 8월4일 개의하여 8월5일 산회하였음］

의사일정

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4)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34)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647)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37)
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33)
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35)
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639)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29)
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28)
1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41)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24)
1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38)
1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39)
1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40)
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3)
1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42)
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22)
1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2)
19.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8)

20.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6)

상정된 안건

o 의원(이주희) 선서 및 인사 ····· 3
o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인사 ····· 5
o 국무위원(통일 정동영·국방 안규백·국가보훈 권오을·문화체육관광 최휘영·산업통상자원 김정관·국토교통 김윤덕·해양수산 전재수·중소벤처기업 한성숙) 인사 ····· 6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문진석 의원 등 167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11959) ····· 9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34) ····· 10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647) ····· 10
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639) ····· 17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29) ····· 23
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28) ····· 23
1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41) ····· 26
1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38) ····· 27
1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39) ····· 27
1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40) ····· 27
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3) ····· 27
1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42) ····· 29
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22) ····· 29
1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2) ····· 29
19.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8) ····· 29
20.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6) ····· 29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37) ····· 31
- 무제한토론 의원(신동욱) ····· 32
- 무제한토론 의원(김현) ····· 129
- 무제한토론 의원(이상휘) ····· 165
- 무제한토론 의원(노종면) ····· 222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문진석 의원 외 166인 서면동의) ····· 318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37) ····· 319

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33) ····· 319
- 무제한토론 의원(김장겸) ····· 320

(14시06분 개의)

○의장 우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달 폭우 피해가 채 수습되기도 전에 밤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극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또다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이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도 이재민 여러분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비는 잠시 소강상태이지만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고 있고 모레는 다시 호우 예보가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드립니다.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그것을 위해 현장과 제도, 시스템을 점검하는 일에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김승묵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이주희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승계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7월 31일 송언석·김병기 의원 외 272인으로부터 제428회 국회(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8월 6일부터 집회한다는 공고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우원식 방청석에 손님들이 와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복기왕 의원실이 소개해서 충남 아산의 신리초등학교 학생들……

(박수)

잠깐 들으세요. 아직 멀었습니다.

이광희 의원실에서 소개한 두꺼비마을신문 어린이청소년기자단, 이소영 의원실의 경기 과천시 지역주민들, 황희 의원실이 소개한 서울 양천구 지역주민, 배현진 의원실이 소개한 송파구 배명고등학교 학생들, 안철수 의원이 소개한 성남 분당구 지역주민 그리고 정춘생 의원실이 소개한 서울특별시당 청소년 의회 리더십 캠프 청소년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

o 의원(이주희) 선서 및 인사

(14시09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7월 23일 자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승계하신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주희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주희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 의원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8월 4일

국회의원 이주희

○의장 우원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이주희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주희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함께 일하게 된 이주희입니다.

엄혹했던 계엄 정국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온몸으로 지켜 내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국민과 함께 모든 것을 걸고 광장에서 싸우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가 제게는 아직 낯설고 벅찹니다. 20년 전 대학가 거리에서 진보 정당 깃발 아래 정치란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외쳤던 청년 이주희가 지금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섰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국회본회의장에 선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겨울 민주주의의 숨결이 얼어붙던 계엄 정국에서 광장을 지킨 것은 다름 아닌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헌법을 지켜 낸 선배 의원님들과 함께 저 역시 거리에서 또 법정에서 싸웠습니다. 그 시간 저는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한다’. 4·19 혁명, 6월 항쟁, 촛불 혁명 그리고 가장 최근의 빛의 혁명까지 민주주의는 늘 광장에서 시작되었고 그 끝에 정의로운 정부를 만들어 낸 것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여성으로서, 시민으로서 살아오며 저는 많은 벽에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벽에 부딪치며 배운 것도 많습니다. 불의 앞에 침묵하지 말 것, 강자보다 약자의 편에 설 것, 소수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것. 이제 저는 그 가치를 법정이 아닌 국회라는 공간에서 실천하려 합니다. 막중한 무게를 잘 알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결코 평범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기대는 높고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내란 세력의 불가역적 청산,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압도적 다수가 함께 잘사는 복지국가 그리고 평화로운 한반도와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 그 미래를 향해 두려움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숨 쉬고 노동이 존중받고 서로의 다름을 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의

정활동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주희답게 성실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많이 듣고 또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이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말씀 드립니다.

---

o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인사

(14시14분)

○의장 우원식 다음은 신임 헌법재판소장과 국무위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님 여러분!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뜻을 모으고 실현하기 위하여 언제나 애쓰고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지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보여 주신 신임과 우려를 공히 명심하고 특히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해 주신 국민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는 다짐을 하여 봅니다. 임기 동안 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무거운 준거로 삼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권한 역시 국민으로부터 비롯되었으므로 국민의 신뢰가 없거나 미약하다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맡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저와 헌법재판소의 모든 구성원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헌법재판소가 창설 이래 37년의 시간 동안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꾸준히 걸어왔던 그 길을 이어받아 사건의 접수부터 심리,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헌법의 뜻과 정신에 부합하도록 한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믿고 승복할 수 있는 헌법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헌법재판으로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국민들의 문제 제기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이 격렬하게 맞서는 사회적 분쟁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두터운 믿음 위에서 소명을 다하기 위해선 저희 헌법재판소의 노력과 함께 헌법재판의 발전을 위한 국회의 다양한 제도개선 입법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각종 국정 현안 및 입법에 관한 논의로 여념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과 바람에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장님과 모든 국회의원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수고하셨습니다.

---

o 국무위원(통일 정동영·국방 안규백·국가보훈 권오을·문화체육관광 최휘영·산업통상자원 김정관·국토교통 김윤덕·해양수산 전재수·중소벤처기업 한성숙) 인사

(14시17분)

○의장 우원식 다음은 정동영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통일부장관으로 임명받은 정동영입니다.

정부조직법상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통일 업무를 담당합니다.

1991년 노태우 정부의 노력으로 맺어진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조항은 모든 대북정책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의 대표이신 의원님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지난 6년간 단절되고 적대화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의 빛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다음은 안규백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남다른 감회를 느끼면서 몇 말씀 인사드리겠습니다.

51대 국방부장관 안규백입니다.

엄중한 한반도의 안보 상황 가운데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가장 먼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우리 군이 그림자를 벗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할 수 있도록 또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초급장교, 중견간부의 처우개선을 포함한 장병들의 다양한 사기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군복을 입고 있는 그 자체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 없다는 수어지교인 관계, 저는 국회와 국방부가…… 오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국방부와 군이 함께 노력할 때 대한민국 안보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튼튼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조언과 고견을 적극 수용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군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고 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질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3대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입니다.

15년 만에 공직에 임하다 보니 많은 것이 서툴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보훈부장관으로서 독립·호국·민주 유공자에 대한 균형 잡힌 보훈정책으로 시대적 과제인 국민 통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명예가 되고 이에 따른 보상이 따르는 보훈문화 창달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임명받은 최휘영입니다.

지금 K-컬처는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대전환 속에서 현장의 지혜를 모아서 문화가 곧 국가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더 큰 문화의 저력을 키우기 위한 단단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콘텐츠 산업의 큰 도약을 통해서 K-컬처 300조 원 시대를 이끌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다음 K-콘텐츠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온 국민이 체감하는 체육정책을 추진하고 3000만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관광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 속의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입니다.

우리 산업과 기업은 미 관세 조치, 중국의 추격 등 엄중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대내외의 어려운 여건을 우리 산업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산업정책을 추진하면서 수출·투자 확대의 선봉장으로 나서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펴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추진 정책에 대해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임명된 김윤덕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민생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모두가 잘사는 사회, 진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주거정책의 전환과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국토 균형발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 시스템 전반을 정비하고 작은 위험까지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RE100, AI 산업단지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도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국회와의 진심 어린 협력을 통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우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4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임명된 전재수입니다.

저는 바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가라는 시대적 소명을 엄중히 여기고 해양 강국을 만드는 길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는 해양 전진기지를 구축하는 데 매진하고 기후위기에도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혁신하는 한편 어촌과 연안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새 정부 해양수산부의 행보에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우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임명받은 한성숙입니다.

우선 국회본회의장에서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들이 생존과 성장의 갈림길에 선 엄혹한 시기에 소임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선 100만 폐업의 절박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 긴급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제대로 위로받고 회복하여 재기할 힘을 얻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AI 전환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한 사업환경 조성 및 급변하는 수출환경의 대응에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혁신 인재가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하고 지역에서도 창업하여 성장할 수 있고 벤처 투자자들이 더 큰 모험을 감당하는 튼튼한 창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에 많은 관심과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오늘 신임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총 19개 부처 중에 2개 부처 교육부·여가부는 아직 임명이 안 됐고 1개 부처 농식품부 장관은 유임이 돼서 총 16개 부처의 장관들이 임명이 됐는데 이제 16개 부처가 다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인사를 했는데 이것은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저도 강조했습니다만 국회는 민심과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와 협력할 때 더 성공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 앞장서서 소통하고 또 국회와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과 국익을 중심으로 국회와 정부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함께 협력해서 대한민국을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자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문진석 의원 등 167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11959)

(14시34분)

○의장 우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문진석 의원 등 167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 및 의사일정 제11항, 이상 5건의 순서를 변경하여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다른 안건을 먼저 상정·심의한 후에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 의사일정 제11항, 의사일정 제1항의 순서로 각각 상정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문진석 의원 나오셔서 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석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 출신 문진석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방송 3법, 노조법, 상법 등 민생 개혁 입법 5건에 대해 국민의힘의 이유 없는 발목 잡기와 입법 방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본회의를 열어 지난 한 달간 입법 성과의 결실을 맺기 위해 20여 건의 법안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방송 3법, 노조법, 상법 등 5건의 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남발로 21대, 22대를 걸쳐 재발의를 반복해 왔고, 그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논쟁과 심의가 있었습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해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서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권력기관과 정권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법입니다.

노조법은 국제기준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실효성 있게 구현하고 노동쟁의를

억압하는 과도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근절시켜 노사 교섭을 촉진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여 공정한 노사관계를 만들어 갈 꼭 필요한 상생 법안입니다.

상법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통해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선진화와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들은 시급한 민생 개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남용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뒷받침이 되어 주지 못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법의 경우 윤석열 정권이 21대, 22대에 걸쳐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고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한 노사관계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 국회에서 어렵사리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은바 회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한 내에 반드시 처리가 필요하여 의사일정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제1항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항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5건의 순서를 변경하여 다른 안건을 당일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상정, 심의·처리한 후에 제4항, 5항, 6항, 11항, 1항의 순서로 상정하여 심의·처리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문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 및 의사일정 제11항, 이상 5건의 순서를 변경하여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다른 안건을 먼저 상정·심의한 후에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 의사일정 제11항, 의사일정 제1항의 순서로 각각 상정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173인, 반대 92인으로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처리가 됐는데요. 필리버스터가 예정된 법안들은 뒤로 하고 비쟁점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여야 교섭단체 간 그 순서를 정함에 있어서 협의가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34)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647)

(14시41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2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김준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준혁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준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문정복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2027년까지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최대 47.5% 이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지영 의원, 고민정 의원, 강경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김준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03인, 반대 29인, 기권 27인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문정복 의원 외 3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문정복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복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9조의2제2항에 기준 수립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정해진 적용 유예기간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부칙 제1조에서 해당 조항의 시행일을 당초 2026년 9월 1일에서 같은 해 3월 1일로 앞당기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원안이 아닌 수정안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문정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지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교육위 소속 부산 동래구 출신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2월에 이어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는 퇴행적 법안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교과서의 질을 공고히 하는 같은 법안을 냈기에 오늘 대안으로 이름이 올라와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것은 여러분들도 매우 익숙한 중학교 영어 교과서입니다. 여러분들도 배웠고 저도 배웠던 형태의 똑같은 종이 교과서입니다. 오늘 AIDT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시키면 우리 모두가 수십 년 전부터 공부했던 이 종이 교과서만으로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게 됩니다. 이 교과서는 영어가 들리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도 못합니다. 그저 글자만 가득한 고요한 물체일 뿐입니다.

하지만 AI 디지털교과서는 말하고 듣고 교정하며 채점까지 합니다. 학생별 수준에 맞는 문항을 제시하고 성취도를 끌어올립니다. 데이터를 축적하고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여러분이 누려 왔던 교육은 아날로그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러분과 똑같은 형태의 종이 교과서로 공부하며 영포자·수포자가 넘쳐나는 잠자는 교실, 부모님들은 경쟁적으로 사교육에 매진하는 그런 시대를 지속시키겠습니까?

AI 교과서의 지위를 박탈하면,

첫째, 교과서이기에 제공되던 확실한 무상교육의 혜택이 사라집니다. 비용 주체에 대한, 부담에 대한 갈등으로 아예 교육자료로 채택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둘째, 검정 절차가 없어 내용과 품질을 담보할 수도 없고 정부가 책임지는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도 어려우며 저작권 문제도 발생합니다.

셋째, 무엇보다 교육 기회의 박탈입니다.

저기 앉아 계신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께서 꼭 이 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교육을 못 받는 저소득층 아이들, 산간벽지의 아이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경험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다문화 아이들에게 다국어 인터스페이스로 수업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장애 아이들에게 음성 지원이 되는 교과서, 자막과 스크린리더가 제공되는 교과서를 빼앗는 것입니다. 교육 격차를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개발에 참여했던 수많은 개발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1조 8000억 원의 국가예산과 8000억의 민간 투자사업이 투입된 사업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 교육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비록 낙마했지만 이 정부가 지명했던 교육부 장관후보자가, 교육의 세습으로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장관후보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요.

공교육을 책임지는 장관후보자는 두 따님을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으로 조기 유학을 보냈습니다. 총리후보자는 배추 투자로 수억 원대 미국 유학을 보내고 국제고에 진학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교육의 현장은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는 철저히 교육의 세습을 할 테니 너희는 똑같은 교실에서 혁신 따위는 집어치우고 소리 없는 교과서로 묵묵히 공부하며 노력만 하라고 여러분은 외치시겠습니까? 그렇게 대한민국 교실을 방치하겠습니까?

대통령께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야말로 소년공으로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교육의 힘으로 이 자리에까지 오신 분입니다. 우리 공교육을 혁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교실을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들 합니다. 교과서를 백 년 동안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백 년을 좌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가 가져올 모든 변화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자는 교실을 깨우고 교육 격차를 줄이는 혁신에 동의하신다면 이 법안에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손에 우리 아이들의, 우리 선생님들이 이끌어 갈 교육의 혁신이 달려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서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민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

제가 발의한 초·중등교육법은 문제풀이 도구에 불과한 AIDT를 멈춰 세우는 법안으로 향후 AI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수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미 AIDT가 왜 필요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위 안에서도 여기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앞서서 서지영 의원께서 많은 말씀 주셨지만 잠자는 교육을 일깨워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아마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나 어른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만 언제까지 아이들을 문제풀이 학생으로만 만들 겁니까?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갈데없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아이들을 이 사교육시장에 그리고 계속해서 입시 경쟁에만 매몰되고 있는 이 현장에 그대로 놓기만 할 겁니까?

윤석열 정부의 AIDT 정책은 AI를 만들 줄 아는 인재를 키우는 정책이 아니라 학생을 문제풀이 기계로 전락시켜 버리는, 공교육을 아예 사교육시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무모했

던 교육정책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멈추려 하는 것입니다.

첫째, AIDT에 AI 기능 있습니까? 없습니다. AIDT에는 당시에도 AI 기능이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그저 맞춤형 문제가 끝없이 출제될 뿐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수백 번 외쳤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니만큼 실증을 동반한 검증 없이 부작용에 대한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AIDT의 학습 성과에 대한 연구용역은 했습니까? 아닙니다.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AIDT를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학생을 가르쳐야 할 교사 연수는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AIDT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서 실물 교과서가 없는 상태였으니 말하나 마나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사의 절대다수는 AIDT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넷째, AIDT가 학력 격차를 줄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격차는 더 커질 것입니다. AIDT가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만들어 종국에는 격차가 좁혀질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위권 학생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즉 불가능한 일입니다. 꼴찌 학생이 열 문제 푸는 동안 1등 학생은 더 높은 수준의 문제를 더 많이 풀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결국 평균 올려치기라는 개미지옥으로 학생들을 국가가 밀어 넣는 형국입니다.

다섯째,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 이후 지난 한 학기 동안 꽤나 많은 학교들이 AIDT를 썼습니다. 그러나 잘 썼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작년 윤석열 정부는 AIDT 준비 미흡을 스스로 인정했고 그래서 1학기부터 17개 시도에 자율 채택권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채택하지 않은 곳들이 대다수입니다. 서울 24.3%, 인천 18.8%, 충남 15.4%, 경남 9.9%, 채택률이 30%에도 못 미치는 지역이 대다수입니다. 이 가운데 직접 써 본 학교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접속률을 살펴봤더니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즉 채택을 하고서도 실제로는 사용하지도 않는 학교가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AI 시대를 맞아 분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AIDT가 아니라 인재 양성을 위한 AI 교육입니다. 문제풀이를 더 빠른 시간에 많이 맞추는 교육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고 창의적 사고를 키워 주는 교육입니다.

AI에 익숙한 인재가 아니라 AI와 협업할 줄 아는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AI를 활용한 어떤 교수법이 필요한지, AI를 교육의 어떤 부분에 접목시켜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AI 교육에 대한 R&D 투자도 절실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주호 장관이 이미 출판사와 정부 간 소송을 한 번 유발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교과서 자율화 정책, MB 정부 때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박근혜정부가 제동을 걸었고 문재인 정부 당시 2327억의 배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주호 장관은 이번에도 또다시 출판사와 교육부, 정부 간의 소송을 알면서도 유발한 사람입니다. 그걸 알고도 속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몰라서 무능했던 것입니까? 이제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 주실 것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간곡

하게 호소드립니다.

찬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우원식 고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성국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국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진구갑 정성국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AIDT가 교육 현장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 교육정책을 실행해 보지도 않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를 재단하는 것은 백년대계 교육을 바라봤을 때 우리 정치인들도 아껴야 될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시행하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 이것이 나중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라는 말은 여기서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AI 디지털교과서를 현재의 교과용 도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려는 여당의 반미래적 행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AIDT는 교과용 도서로 인정을 받아서 학교에서는 다양한 활용을 고민하고 많은 교육청에서 이의 지원을 위해서 계약 체결과 예산편성까지 마쳤는데 그 몇 개월 사이에 AIDT는 교육자료로 격하되는 희한한 일이 우리 교육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 선진국으로 다른 나라의 존경과 찬사를 받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이 되기 전 교육현장에 있었던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 법률이 불러올 문제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정책 일관성의 상실이자 정부에 대한 불신의 조장이 되는 것입니다.

AIDT는 국가가 미래교육을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한 핵심 사업 중 하나이며 교육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AI 기반 차세대 교과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교육부의 정책 발표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AIDT 도입을 위한 예산편성, 시범학교 지정, 교사연수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취하였으며 민간 출판사와 에듀테크 기업들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투자해 콘텐츠와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법적 지위 변경은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정부를 믿고 기꺼이 공교육에 투자한 교육 협력자들에게 큰 혼란과 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다른 분야의 공공·민간 협력에도 부정적인 선례로 남아 정부정책 전반의 신뢰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 자명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육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어 온 것이 바로 고질적인 잦은 정책의 변경과 일관성 부족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이 약화될 것입니다.

AIDT는 모든 학생이 동일한 수준의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권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며 특히 소외지역이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는 교육 격차 해소의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를 단순한 교육자료로 격하하면 무상제공의 원칙이 무너지고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지며 지역별·계층별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셋째, 본질은 콘텐츠가 아니라 정책 추진의 문제입니다.

AIDT에 대한 현장의 부정적 반응은 주로 콘텐츠 자체보다는 도입 과정의 절차적 미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지난 7월 전국 3485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80%가 AIDT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살펴보면 현장 준비 부족, 연수 미비, 업무 부담 증가 등 사전 시스템 구축과 행정적 지원의 부족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반면 실제 사용 경험이 있는 중학교 교사들의 반응을 보면 이와는 대조적입니다. 사용 교사 중 약 55%는 AIDT가 수업 몰입도 향상, 맞춤형 학습, 수업 준비 효율화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도입 초기의 문제점이 콘텐츠 자체의 한계가 아니라 실행 방식에 있다는 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명히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간이 다 돼서 줄이겠습니다.

여야 의원님들께 호소드리겠습니다.

이렇듯 AIDT는 단순한 교육자료가 아니라 AI 시대를 대비하는 국가 수준의 공공교과서이자 디지털교육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교육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AIDT의 교육용 도서로서의 지위는 그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 어떤 예측도 불허하는 미증유의 미래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오직 교육만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과 우리 아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소신 있는 반대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원식 정성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162인, 반대 87인, 기권 1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의안번호 2211639)

(15시04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7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이광희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대리 이광희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이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첫째, 목적 조문에 지방소멸 완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가하고,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며, 셋째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받아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하고, 넷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사업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이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범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울주군 출신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서범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국가재정의 근간을 흔들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며 지역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첫째, 이 법안은 행정부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행정부의 핵심적인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과거 정부의 행정안전부조차 반대의견을 낸 바 있으며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현금성 지원을 법률로 강제하면 재정의 경직성을 높여 더 시급하고 중요한 다른 민생 사업의 기회를 박탈할 것입니다.

둘째,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고유 업무인데 중앙정부가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지방자치 원리에 역행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재정 여력이 있는 지자체는 국비 지원으로 더 큰 혜택을 보지만 재정 부담으로 신청조차 어려운 지자체는 소외되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법안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입니다.

셋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모든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사라진다고 발표했고 재정 승수효과도 0.3에 불과해 정책 효과가 미비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도 지역화폐의 신규 도입이나 확대 발행은 지역의 고용유발효과가 적다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예산 소요에 대한 추계도 없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될지 지방비 매칭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법안을 깜깜이로 심사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재정 원칙을 파괴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며 지역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안은 단기적인 착시효과에만 매몰되어 더 큰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저는 국고 지원 의무화 조항을 포함한 이 개정안이 단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또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신속과제 추진안으로 제안됐다는 이유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일방적인 강행 처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의 목적인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에 배치되지 않도록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논의와 토론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원식 서범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송재봉 의원실 소개로 청주대성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음으로 박정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박정현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참 어렵습니다. 경제성장률과 민간소비 증가율 모두 4분기 연속 0%대를 기록,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경기동향지수 100 미만, 지금 국민 모두가 경기 위축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2024년 폐업신고 자영업자 수 100만 명, 그중 절반 이상이 사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13년 만에 최고치 기록, 지금 자영업자들은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효과적이고 검증된 정책 수단입니다. 2020년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는 한 달 평균 거주지역 내 소비를 약 30만 원 가까이 늘렸고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은 87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2023년 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총공급액이 1% 증가할 때 종사자 수는 2.1%, 사업체 수는 1.39%, 업종별 평균 매출액은 4.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대기업으로의 소비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의 선순환을 창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구감소지역과 같은 존립이 위태로운 지역일수록 지역사랑상품권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사실도 함께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상품권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비 지원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면 지자체는 할인율 부담을 덜고 상품권 발행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작년 국정감사 시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 물었고 그 결과 191개 지자체 중 157개 지자체가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 답했습니다. 부산, 대구, 강원도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자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지역사랑상품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민생 사무입니다. 국비 지원 의무화는 국가가 지방사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 국민적인 민생 안정을 위한 공동의 책임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재정 여건이 넉넉한 지자체는 지역화폐를 운영하고 그렇지 못한 지자체는 혜택에서 소외되는 것은 균형 성장에도 맞지 않습니다. 재정이 넉넉한 서울 강남구 주민들은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재정이 열악한 경북 영양군·봉화군 지역주민들은 지역화폐를 쓰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됐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쿠폰 배포 첫 주 전국 소상공인의 평균 카드매출액은 전주 대비 2.2%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을 지역에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용처를 지역과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이 가진 지역경제 활성화 잠재력을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생경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동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남병 국민의힘 고동진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왜 반대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법적 기반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지자체에 지역화폐 발행을 강제하고 중앙정부가 매년 수천억 원의 국비를 지속 지원하도록 구조화하는 포퓰리즘 법안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정부는 유사한 취지의 온누리상품권 제도를 운영하면서 최대 10%에 이르는 할인율을 국비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의 예산 지원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막대한 국가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중 지원 체계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역화폐 사업은 이미 수년간 민주당 주도로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국비가 투입되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본예산에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었으나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도로 6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추경으로 부활됐습니다. 이처럼 수년간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진작 효과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는 미미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 오히려 민간 운영사의 배만 불리고 있는 그런 점도 우려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지역화폐는 기존 소비를 대체할 뿐 신규 소비를 유발하지 못한다, 재정 투입 대비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화폐 발행 시 수반되는 운영비와 발행 비용이 상당하며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제도가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산됨에 따라서 역외 소비지출 차단 효과도 미미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소상공인 매장으로의 소비를 유도하는 것조차 비슷한 성격의 온누리상품권으로 인해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운영사인 코나아이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에 경기도의 승인 없이 충전금을 자사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채권 등에 투자해서 막대한 부당 수익을 챙겼지만 경기도는 어떠한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즉 지역화폐 효과는 지역경제가 아닌 민간 운영사의 몫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화폐 발행의 국비 지원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 제도에 대한 실

효성 평가도 없이 추진되는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경제효과는 미미하고 제도 운영상의 부작용이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외면한 채 정치적인 인기만을 노리는 포퓰리즘 입법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AI·반도체·바이오, 첨단전략산업에서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AI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씨앗이라도 되게 하지만 지역화폐에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속성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임 있는 선택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원식 고동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용혜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가 회복되는 꼴은 못 보겠다라고 하는 몽니에 불과합니다.

소비쿠폰의 효과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비쿠폰 지급 첫 주 전국 소상공인 매출이 전주 대비 2.2% 증가했고 슈퍼마켓 열 곳 중 아홉 곳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이들 지표는 소비쿠폰 지급률이 높아질수록 더 뚜렷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 지표 중에서 소비자심리지수는 단순히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가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교체만으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강화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4월의 소비자심리지수가 93.8이었습니다. 21대 대통령선거일이 잡혔던 5월에는 101.8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6월에 108.7이었고 7월에 110.8이 되었습니다. 이 수치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지독하게 강행됐던 긴축정책이 정권교체와 함께 바뀔 것이다라는 기대에 맞춰서 소비심리지수도 변화해 왔다는 것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죽이기는 윤석열 정부에서 강행한 대표적인 내수 억압·긴축 정책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첫해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중앙정부 지원 예산 0원을 제시했고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가 그때마다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선에서 최저선의 지원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 들어간 미국이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정비에 나서고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폭탄을 던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수출이 추락했을뿐더러 불확실성도 증대됐습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수출 상황의 부진을 내수경기 부양을 통해서 어느 정도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내란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그나마 재정 여력이 있는 지자체가 보편복지를 하려 치면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페널티를 부과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자체 예산으로 평소 해 왔던 수준의 지역화폐 발행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부자감세로 인해서 내국세가 줄어들자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교부세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산편성되어 있는 보통교부세를 추경도 하지 않고 세수 펑크 난 액수에 맞춰서 당해 연도에 2년 연속 감액해 버렸습니다. 지방세마저도 줄어든 지자체가 어떻게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골목상권 살리기와 내수 회복은 범국가적인 과제입니다. 국가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를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이 개정안에는 어떻게 반대할 수 있습니까?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내수가 회복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면 반대할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도대체 어떤 논리로 반대할 수 있습니까? 정부의 경제적 역할, 사회적 역할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왜 국정운영의 한 축인 국회의원은 하시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판매, 환전 등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면 도대체 반대할 수 있습니까? 농어촌 인구가 소멸하도록 방치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아니면 반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법안의 핵심 쟁점 전체에 걸쳐서 반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상공인, 농어민, 저소득 근로자들 다 죽어 나가도 상관없다,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내수경제가 회복되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는 게 낫겠다, 정확히 이런 심리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지역상권은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오늘 참 격렬하게들 반대토론 하셨지만 지역구 가셔서 유권자들 앞에 서서 이 법안에 반대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분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다른 당이 하는 일이라고 옳은 일도 방해하고 보는 일은 부디 중단해 주시고 민생을 살려 달라고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용혜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161인, 반대 61인, 기권 14인으로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29)

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28)

(15시29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8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항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원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 이원택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동일 제명 17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수산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양곡, 채소, 어류 등 대상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동일 제명 15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전체 양곡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미곡 및 논타작물의 재배면적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 미곡의 선제적 수급 조절을 강화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미곡 가격이 하락하거나 초과생산량이 발생하면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된 수급안정대책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도록 하는 등 미곡의 사후적 수급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입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이원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종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의원 진보당 국회의원 전종덕입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와 미국과의 통상협상 속에서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곡법과 농안법은 단지 농민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망, 국가의 식량주권, 농가의 소득 보장 그리고 농촌지역 소멸을 막고 기후위기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으로 좌절됐던 기존 양곡법과 농안법의 핵심은 쌀 과잉 시 정부 매입 의무화와 농산물 가격 안정을 통해 농가 소득 보장과 식량안보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정된 개정안은 그보다 더 후퇴했습니다. 쌀 가격 정책이 양곡법에서 삭제되고 농안법으로 편입되면서 쌀의 특수성과 식량안보 차원의 보호가 약화되었으며,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서 밀릴 위험이 커졌습니다.

기후위기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 갈수록 커져 농가 경영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가격안정제가 상당히 후퇴했고 실효성 또한 심각하게 낮아졌습니다.

가격안정제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가격이 매우 중요하고 소득 보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기준가격 산정 방식에서 평년가격이 제외됐고 생산비 중심으로 후퇴함에 따라 실제 시장가격이 더 낮아도 제도가 발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농식품부가 실시한 5대 채소에 대한 용역보고서입니다. 양파의 경우 2007년부터 21년까지 15년간 생산비가 시장가격보다 높은 해가 단 한 해도 없었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이를 개정된 농안법의 가격안정제로 적용해 보면 가격안정제 발동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농민들은 차액 보전을 15년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이 됩니다.

다음 표를 봐 주십시오.

기준가격을 평년가격으로 했을 때 가격안정제도의 실질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격안정제가 농가에 직접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평년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농안법에서 자조금의 미납, 경작·출하 신고 미이행 농가에 대한 차등지원 조항은 윤석열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과 다를 바 없는 통제적 농정의 반복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업이 위기에 처한 것은 농민 탓이 아니라 99.7%에 이르는 수입 개방과 자연재해 때문입니다. 정부가 결정한 농산물 수입 개방 30년, 농민들에게 멍에를 지우면서 물가가 오르면 수입을 늘려 농산물 가격을 때려잡고 벼 재배면적 감축해라, 생산 줄여라, 수십 년간 지어 온 농토에서 나가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식량안보를 지켜 온 농민들의 땀에 정당한 대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자고 만든 법이 지금처럼 후퇴하는 방식이라면 아무런 실효도 의미도 없습니다.

지금의 개정안으로는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가격안정제 적용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것 표로 다 보셨지 않습니까? 농정의 핵심은 방향입니다. 속전속결보다 중요한 것은 농민의 삶을 살피는 책임 있는 입법입니다.

지난겨울 혹한 속에서 123일 국민들과 함께 싸우며 약속한 민생 입법을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농민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양보할 것도 없습니다. 국가가 농민들에게 면적을 줄여라, 타작물을 심어라 이렇게 요구하려면 먼저 정당한 가격 보장, 충분한 재정 지원, 책임 있는 수급 개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농안법이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이 보장되고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리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재논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전종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금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농안법 개정안은 그동안 반복되어 온 농산물 수급 불안, 불균형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가격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인 진전입니다.

첫째, 사전적 수급관리 체계의 도입과 제도화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광역 단위 수급관리센터 설치를 통해 생육 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수급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법적 근거를 갖춘 수급조절위원회가 설치되어 생산자단체가 3분의 1 이상 참여한 가운데 수급계획, 비축용 농산물의 수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특히 계약거래의 활성화는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계약거래 목표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수급 조절에 활용되는 경우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둘째, 사후적 보호조치 강화입니다.

기존에는 채소류에 한정되던 수매 지원 대상을 농산물로 확대하고 수급 불안 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수단이 보다 다양해졌습니다. 아울러 비축사업을 수탁사업자가 주도적으로 운영·보고하도록 하여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셋째, 가격안정제의 법제화와 기준가격 개선입니다.

선제적인 수급관리와 정부 수매 등 사후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가격안정제가 시행됩니다. 가격안정제는 농가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초 안전망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준가격을 생산 비용 및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고시한 가격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일부에서 평년가격 기준이 빠져서 후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핵심 요소인 생산 비용이 반영되었으며 수입안정보

험 사업이 시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보다 정교하고 복합적인 안전망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넷째, 수입 농산물 관련 거버넌스의 법제화 및 생산자 참여 확대입니다.

농산물무역정책심의위원회가 법적 기구로 격상되며 생산자단체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TRQ 증량, 할당관세 적용, 시장접근물량 관리 등 주요 수입정책에 있어 농민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되는 구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급관리, 가격안정, 수입대행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실질적인 진전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을 넘어 우리 농업이 기후위기, 시장개방, 공급과잉이라는 복합적 위기 속에서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점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을 지키고 국민의 먹거리 안정을 위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문금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3인, 기권 19인으로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5인, 기권 22인으로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41)

(15시42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10항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윤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윤 위원입니다.

작년 2월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으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1년 반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료대란을 촉발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가 제때 개혁하지 못한 뒤틀린 대한민국 의료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의료개혁의 중요한 걸림돌인 직종 간 업무 영역을 둘러싼 갈등을 민주적인 합의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대 정원을 정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법과 함께 의료대란 없이 의료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법률안의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김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0인, 반대 5인, 기권 9인으로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38)

1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39)

1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40)

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3)

(15시45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맹성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위원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 이성권 의원, 권영진 의원, 윤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2016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지정된 사례가 없는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활성화를 위해 국가도시공원의 최소면적 기준을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시설 부지 면적 기준을 완화하며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공원녹지정보체계 구축 및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태년 의원, 김희정 의원, 이용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용갑 의원과 엄태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염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맹성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28인, 기권 4인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3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1인, 기권 2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1인, 기권 1인으로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42)

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22)

1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2)

19.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8)

20.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6)

(15시50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16항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장대리 권영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의 권영진 위원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용갑 의원, 민형배 의원, 김예지 의원, 이해민 의원, 조지연 의원, 진종오 의원, 이춘석 의원, 이수진 의원, 송석준 의원, 문진석 의원, 윤재옥 의원, 권향엽 의원, 김희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류충돌 예방시설의 설치 근거를 두고 공항운영자의 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장비 운용 의무를 신설하는 등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며 활주로 인근에 설치되는 물체가 부러지기 쉽게 설치되도록 공항시설 설치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이 한국공항공사에 대해서도 공항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시설의 귀속에 관한 예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공익사업으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여객자동차운송안정기여금의 세입 근거와 드론 및 도심항공교통 관련 사업의 세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택시 감차, 택시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등 동 기여금의 법적 용도를 세출 근거에 명시하고 현행 공항계정의 명칭을 항공공항계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공항공사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부담한 재원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을 공사에 귀속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항시설법에 따른 절차에 맞춰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권영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먼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5인, 기권 1인으로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24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6인, 기권 2인으로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40인으로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6인, 기권 2인으로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37)

(15시57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4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민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대리 한민수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민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이정헌 의원, 한민수 의원, 이훈기 의원, 최민희 의원, 황정아 의원, 박민규 의원, 노종면 의원, 조인철 의원, 김현 의원, 이해민 의원, 김우영 의원, 서영교 의원, 신장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9건의 방송법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편성위원회 및 방송편성규약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영방송 3사 및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의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인사하고 가세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대리 한민수 죄송합니다.

○의장 우원식 인사 안 하고 가다가 지적당하니까 인사를 훨씬 더 잘하네요.

한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무제한토론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제한토론 중에는 자정이 경과되어도 차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속 본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국회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의원 한 분당 1회에 한정하여 무제한토론을 하실 수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제7항에 따라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면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해당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토론도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신동욱)

(16시01분)

○의장 우원식 먼저 신동욱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야 의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정청래 대표님께 축하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정 대표님 만나 뵈면 악수부터 좀 하려고 했는데 어제 첫 번째 취임 일성이 야당을 인정하지 않겠다, 야당

과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사실 저도 정청래 의원님과 악수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야에서 같이 일을 하는 사이기 때문에 서로 악수하고 또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국회본회의장으로 오는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국회 로비에서 저를 만나서 반갑게 악수를 해 주시고 또 덕담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정작 여당 대표는 '야당을 더 이상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말로 서운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이나 그 개인을 향해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국회의원을 뽑아 준 그 주권자들을 향해서 함께 타협하라고 하는, 대화하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 여러분 대부분 다 자리에서 떠나셔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국회가 지금, 대한민국 21대 국회가 앞으로 3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뽑힌 여당 대표는 야당과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곧 국민과의 전쟁 선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향엽 의원 의석에서 — 호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희 당도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지금 제 앞에 계신 민주당 의원께서 호도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야당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 악수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무슨 뜻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합니까?

(○권향엽 의원 의석에서 — 야당이라고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박지혜 의원 의석에서 — 내란 세력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여당을 여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반미 김민석 총리 그리고 미대사관저 방화 사건으로 미국 갈 자격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를 여당 대표 이렇게 방송, 반미 삼총사가 지금 여권을 이끌고 있습니다.

(○박지혜 의원 의석에서 — 방송법 반대토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방송법 반대토론 하세요.)

자, 시간 많으니까 차근차근 들어 보시고요.

박지혜 의원님, 박지혜 의원님!

지난번 제가 토론할 때도 사사건건 끼어들어서 자꾸 그러시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시 뒤에 여기 나와서 하세요. 제 발언시간입니다.

○의장 우원식 신동욱 의원님!

○신동욱 의원 그리고 그런 태도는 결코 올바르지 못하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드리고……

○의장 우원식 신동욱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16시 3분에 문진석 의원 외 166인으로부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동욱 의원님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의원 예, 맞습니다. 발언 중에 이렇게 자꾸 끼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은 부끄럽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당하다면, 자신 있다면 제 말 끝까지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법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지, 과연 어떤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은 만들고 싶으신지 엄중하게 마음속 깊이 성찰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발언하실 순서 아니시면 조용히 들으세요, 그냥. 그게 국회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발언이더라도…… 김현 의원님도 이런 법안 내놓고 웃으실 일은 아니지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이 법안이 왜 문제가 되는 법안인지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께,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로 걱정이 많으십니다. 저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바로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다지 놀랍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을 규정하는 세 가지 키워드, 반미·포퓰리즘·반기업 정부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 미국하고 관세협상 잘했다고, 지금 잘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지, 걱정되지 않습니까?

우리 500조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하셨지요? 그 500조 누구 돈입니까? 일본, 우리보다 좀 많이 했지요. 경제 규모 비교되지 않습니다. EU, 우리보다 합치면 수배나 더 많은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열 배 이상 더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EU도 우리의 두 배 정도입니다. 우리 지금 500조 미국에 투자해야 됩니까? 그것 누구 돈입니까? 기업인들은 왜 데리고 갑니까?

○의장 우원식 신동욱 의원님, 지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는 것인데……

(장내 소란)

○신동욱 의원 의장님!

○의장 우원식 이렇게 제가……

○신동욱 의원 의장님!

○의장 우원식 그냥 말씀을 하게 합니다만 너무 장시간을 주제와 관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신동욱 의원 의장님!

○의장 우원식 그 주제에 맞춰서 그렇게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신동욱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께서 무제한토론의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장님의 시간이 아니고 저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의 이 발언은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얘기, 방송법에 대해서 우리가 왜 반대하는가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짜고짜 방송법부터 얘기를 합니까?

이 방송법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칠 것인지, 이 방송법이 여러분들이 자랑하시는 K-민주주의를 어떻게 망칠 것인지, K-컬처를 어떻게 망칠 것인지, 우리의 방송인들이 어떤

고난의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여러분께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찬찬히 들어 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관세협상 저것 잘됐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그것 잘됐다고 하시는 분들은 민주당 지지자들, 민주당 국회의원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제가 만나 보면 정말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지금 15%, 잘하셨다고요? 15% 잘한 겁니까? 우리, 일본보다 2.5% 더 많이 지금 관세 물게 생겼습니다. 유럽과도 마찬가지입니다. 2.5%, 10조를 수출하면 2.5%면 2500억입니다. 그 2500억 때문에 대한민국 상품의 경쟁력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생겼고, 지금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관세협상 발표 나는 날 토요타자동차 주가 15% 올랐습니다.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5%, 7%씩 떨어졌습니다.

(「술만 마시는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잘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 말만 나오면 '윤석열' '계엄' 지겹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장내 소란)

대한민국이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김준혁 의원님, 대한민국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그걸로 언제까지 우려드실 겁니까? 그걸로 언제까지 이 나라를, 그걸로 언제까지 여러분들 창피한 것도 모르고, 나라가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내란 타령 하실 겁니까? 무슨 내란을 해요? 무슨 내란입니까?

그래도 나가시는 분보다 이렇게 대응을 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이 고귀한 말씀 제가 귀로 잘 경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우리 지금 무역으로 여기까지 온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 합니까? 아직까지 대통령, 미국…… 저희가 무슨 미국을, 대단히 사대주의라 그런 것이 아니고 세계가 그렇습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역구에 있는 지역구민 여러분 전부 수출하는 기업에 취직하고 그 기업이 쓴 돈들 가지고 지역경제 살아나고 이렇게 나라가 사는 겁니다.

저는 요즘 민주당 보면요 이 세상을 전부 기업과 노동자, 자본가와 근로자,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구분해서 봅니까? 요즘 세상은 미국으로부터 수출 많이 하는 기업이 고용 창출 많이 하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고용 많이 하고 그분들에게 임금 많이 주고 그들로부터 임금 많이 받은 근로자들이 동네에서 지출하고 세금 내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역화폐가 나라를 살린다고요? 여러분, 지역화폐로 이 나라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지역화폐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현금 살포 정책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위험한 곳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뜨려서 우리 국민들을 포퓰리즘의 단맛에 중독되게 하고 그들의 이빨이 썩어서 다 빠져나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미의 베네수엘라로 가는 이 길을…… 여러분들, 이 길이 맞다고요? 맞습니까, 정말로 이 길이?

(○전용기 의원 의석에서 — 방송법 반대하는 이유를 알려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전용기 의원님. 제가 오늘 한 10시간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억장이 무너져서…… 주가 5000 보낸다고 합니다. 주가 5000 보내려면 방송국도 잘해야지요. 방송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국이 제대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국, 돈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방송법이 왜 악법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주가 5000 보낸다고 그럽니다. 주가를 누가 보냅니까? 대한민국 주가가 무슨 이재명 대통령 손에 든 야구공입니까? 주가를 어떻게 올립니까?

미국 가셔서 무슨 골프 치신다고 골프 연습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과거에 듣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장타시랍니다. 그런데 OB가 많이 나신대요. 진짜 제가 이것은 주변 분 들은 얘기입니다. 골프도 좋아하시고 가끔 하시면 정말 멀리 치시는데 OB를 많이 내신대요, 이재명 이분이. 저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골프 치시면서 제발 OB는 내지 말고 정상적으로 협상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정권 잡기 전에 우리 국민의힘 정부였을 때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가 미국 가서 협상한다고 그랬더니—세 분밖에 안 계시네요—어떻게 그렇게, 곧 본인들이 물려받을 정권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뒷다리 잡습니까?

저는 이분들이 나라를 어느 정권의 시점에서 끊어 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영원한 것이고 우리 국민도 영원한 것이고,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까, 하루아침에? 정치를 잘해야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의 정치를 보면서, 이게 지금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폭주하시면 정말 싹수 노랗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싹수 노랗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선거 할 때 정말 목이 터져라고 외쳤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 걱정했습니다. 독재국가로 가지 않을까, 경제가 망하지 않을까, 국회가 무력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한구석에서 우리가 집권하지 못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여러 가지 문제는 많지만 그래도 잘하시겠지 일말의 기대를 가슴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 지금도 품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그런데 오늘, 그저께 이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일 났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법사위에 있습니다. 이 방송법이 지난주 8월 1일 날,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 방송법, 제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지난 정부에서 이 방송법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10시간 반대했습니다. 10시간 필리버스터 했습니다. 제가 어쭙잖은 공명심으로 이 자리에 섰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방송계에서 정확히 31년을 일했습니다. 민영방송에서 25년, 종합편성채널에서 6년 그렇게 일을 하고 정치권으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저희가 정치적 후견주의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방송국이 어떤 논리로 움직이고 방송국이 어떻게 이익을 내고 방송국이 어떻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방송국 종사자들이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곳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것이 간혹 민주당에게 입맛에 맞을 때도 있고 또 간혹은 국민의힘의 입맛에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방송의 구조적 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정말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방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어떻게 독립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0시간 이상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됐고 그 법이 다시 돌아와서 국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법사위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비록, 우리가 이제는 이 법안을 막을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2층에 계시는 우리 청중 여러분들께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이 국회에서 법안을 막을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아무리 우세해도 그 숫자로만 밀어붙이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민주주의는 대화하고 타협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반대하면 조금 참아 주고 좀 기다려 주고 당신들의 의견은 무엇인가 물어봐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법사위가 시작되자마자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 토론을 요구하더군요. '아, 이제 지금부터 내가 왜 이 법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지 열심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설사 이것이 표결로 통과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국회 속기록에 내가 한 발언을 남겨야 되겠다. 국민들에게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순간 대한민국의 방송을 논할 때 그때 법사위원 신동욱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기록에 남기를 바랐습니다. 그 소망과 열망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국회에 와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의 열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면 국회의원 뭣 하러 합니까?

야당은 적이라고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선거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선거 없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로 시작된 다수당의 독재가 결국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숫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토론을 기껏 듣고 여당 위원 한 분의 '토론 종결 신청합니다'라는 말을 신호로 법사위원장께서 토론을 곧바로 종결시켰습니다. 저희가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민주주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위원장님,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이 중요한 법안을 어떻게 2명의 토론자만, 2명의 토론만 받고 이렇게 멈출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방송이 법사위원들 2명의 목소리만 듣고,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야 될 만큼 대한민국의 방송이 그렇게 간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31년간 방송계에 머무르면서 제 나름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정파적 입장에 따라서 저를 비난했던 분들도 계셨고 저에게 박수를 보낸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방송에 종사하시는 대부분의 후배 언론인들은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취재 현장을 누비면서도, 그분들이 왜 그런 고생을 자청하겠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촬영하시고 취재하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여

러분들은 왜 이런 힘든 일에, 힘든 직업을 가져서 왜 여기에서 10시간, 20시간 마룻바닥에서 앉아서 버티고 좀 더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서, 좀 더 좋은 한 컷을 건지기 위해서 이 시간에 왜 여기 남아 계십니까? 언론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언론을 제사부(第四部)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말이 언론은 우선 대단한 권력을 가진 곳이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박봉에 시달리면서 그리고 새벽같이 나와서 밤늦게 들어가면서 가족들에게 정말 고개 들지 못하고 살면서 '그래도 나는 언론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하는 이 한 줄의 기사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올바로 전해 줘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 때문에 우리 언론 종사자들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짜고짜 '그 법이 뭐가 문제예요'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냥 통과시키세요. 저는 제가 할 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민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공영방송 사장 임명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편성위원회 만들어서 마음대로 해 보세요, 프로그램. 언론사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뒤에 왜 되지 않는지 조목조목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특히 민주당—방송, 이제는 저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혁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시는데요, 개혁은요 껍질을 벗겨서 좋게 만드는 겁니다. 개혁은 그래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껍데기도 벗기지 않고 날름 입안으로 집어넣기 좋게 만드는 것이 개혁이 아니고……

민주당 방송 9개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껍질도 벗기지 않고 날로 민주당 방송 만들어서 집어넣기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언론개혁은 여러분들이 불편한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언론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회사가 언론개혁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언론개혁입니다.

언론을 도대체 뭘로 보고 이렇게 허접하기 짝이 없는 법안 가지고 언론을 수중에 넣으려고 하십니까?

방송개혁 하신다고요? 제가 정말 기가 막혀서, 제가 31년 동안 방송계에 종사를 했습니다만 이게 방송개혁이라고 하는 이 주장에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 방송개혁 주도했다고 하시는 최민희 위원장님, 김현 간사님 들으셔야지 어디 가셨습니까?

민주당 성향 시민단체, 민주노총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것이 언론개혁입니까? 방송개혁입니까?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방송입니까?

감사합니다. 김현 간사님 들어오셨군요.

그래서 이것을 언론개혁, 방송개혁이라는 말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 우리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여러분 이렇게 불러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슨 국민을 위한 방송입니까, 이게?

(○김현 의원 의석에서 — 국민을 위한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장 앉히면 국민을 위한 방송 됩니까?

말씀하세요. 물 좀 먹겠습니다.

(○김현 의원 의석에서 — 낙하산 사장 안 좋아합니다.)

낙하산 사장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공수부대를 떼로 내보내시려고요? 낙하산 사장 그렇게 싫은 분들이 공수부대를 대한민국 방송사에 떼로 투입시키려고요? 지금 이 법이 그런 법 아닙니까?

편성위원회 만들어서, 그 편성위원회 위원님들은 누가 어떻게 만듭니까?

(○김현 의원 의석에서 — 종사자……)

종사자 대표가 만든다고요, 종사자 대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그분들이 만드시겠지요. 민변, 민변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민주당. 그분들이 중립적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겠지요? 언론노조, 그분들이 만드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솔직해집시다, 우리. '여러분들 이러시면 저희도 나중에 정권 잡으면 정말 저희 편 영구히 방송장악할 수 있는 법 만들겠습니다', 이 얘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가상의 상황을 얘기하지만 제가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이 말씀을 차마 여러분께 드리지 못하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여러분께 드리냐 하면 이거는 내용을 따져 볼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방송국의 경영에 대해서, 국회가 이런 식으로 간여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진국에서 민영방송 사장을 특정 정파가 주도해 가지고 사장 만드는 법을 만듭니까? 이거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감당 못 하실 겁니다. 국민이 바보입니까? 당장은 민주노총 조합원들로 대부분이 채워진 그 방송사 종사자들 '우리는 모르겠다. 뭐 잘되겠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정말 기가 막힙니다. 뭐가 문제인지 하나하나 좀 따져 볼게요.

편성위원회라는 걸 만든다고 합니다.

혹시 편성이 뭔지 아세요, 김현 간사님? 아시지요? 편성은요, 방송국의 편성은 그 회사의 제품 라인업을 하는 거예요.

(「방해하지 말고 나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김현 의원 의석에서 — 뭘 방해했어요? 뭘 방해해.)

현대자동차가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우리는 전기차 10%……

(○전용기 의원 의석에서 — 들어오라고 해야지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 들으세요.

제 의견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전기차 10%, 하이브리드 50%, 가솔린차 30%, 이런 제품의 라인업을 결정하는 것이 방송국의 편성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야, 전기차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가 아닌데' 그래 가지고 갑자기 민주당이 현대자동차에 제품라인업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기차 30% 만들어. 그리고 수소차 50% 만들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 아시겠어요? 그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니,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이렇게 난데없이, 지금 전 세계가 전기차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수소차를 50%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현대자동차 남아나겠습니까? 남아나겠습니까?

삼성전자 마찬가지지요. 반도체 종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시스템 반도체도 있고 저장

용 반도체도 있고. 전 세계는 시스템 반도체로 가고 있는데 민주당이, 민주노총이 '그것 만들면 저장용 반도체 만드는 회사 직원들 다 잘라야 돼. 안 돼', 그래서 법으로 '70%는 그냥 저장용 반도체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주당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변명으로……

제가, 과방위 의원님들은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은 방송국이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 제가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현장에서 경험을 해 보시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자동차의 라인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그 방송국이 어떻게 남아나겠습니까? 물론 그 방송국이 본인들의 판단으로 이런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그 방송국의 경영수지가 크게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 누가 집니까? 대주주가 지겠지요. 종업원들이 지겠지요. 그것은 그들의 선택일 뿐입니다. 그들의 판단일 뿐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그들이 잘못한 것은 그들이 책임지게 상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가 책임지게.

그런데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의 편성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책임은 또 자기들이 지지 않는답니다. 내 마음대로 '저녁 7시대에 반미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보지', 그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웃으시지만 지금 편성위원회가 뭘 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뭐 당연하지요—방송프로그램의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시청자위원회 추천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그 밖에 방송편성규약에서 정하는 사항.

자, '그 밖에'. 이것 저희 예전 특검 할 때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밖에 특검 수사 중에 드러난 혐의 내용', 별건.

이 편성위원회가 그냥 편성위원회에서 우리 이것 합시다 그러면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 거지요. 마음대로 합니까? 편성위원회가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방송사 이사회는 뭐 합니까, 그러면? 편성위원회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상법에 맞습니까?

이런 편성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곳, KBS MBC SBS EBS 채널A TV조선 JTBC MBN YTN 이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국이 다 이 편성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국이 민주당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편성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받으면 재허가 못 받습니다. 방송국의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쭉 나열시켜 놨지만 저는 이것을 당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방송국에서 재허가로 압박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아픔……

웃으시잖아요. 김현 의원님, 저 많이 압박하셨잖아요. 저 TV조선 있을 때 많이 압박하

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김현 의원 의석에서 —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TV조선 재승인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방송사의 목줄을 죄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방송국이 '그깟 3000만 원 우리 과태료 내고 말지', 이게 일반 기업하고 다릅니다. 방송국은요 이 3000만 원짜리 과태료 한 방 맞으면 방송국 문 닫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런 독소조항들을 이 방송법안에 지금 넣어 봤다고요. 잘 아시니까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어떤 의미인지 김현 의원님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넣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라고요.

제 말이 뭐가 틀렸습니까?

(장내 소란)

언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지금 여기의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현 의원 의석에서 — 거짓말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현 의원 의석에서 — 사과하세요, 사과!)

김현 의원님, 그렇게 억울하시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TV조선이 민주당으로부터,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았는지는 세상이 다 아는 겁니다. 점수 조작해 가지고, 점수를 매기다 매기다 안 되니까 조작까지 해 가지고 방송국 문 닫게 하려고 했던 것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씀하시면 얼굴이 너무 두꺼우신 거지요.

(「신동욱 의원님, 잠깐 중단하고 기다리세요. 의장 자리 비우셨어요」 하는 의원 있음)

(「잠깐 중단하십시오. 의사진행을 해야 되는 의장단이 지금 좌석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의장님 계셔야 되는 거지요?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화장실 갔대요, 화장실」 하는 의원 있음)

잠깐 쉬겠습니다.

(「오실 때까지 잠깐 중단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방해를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의원 있음)

(「발언자도 화장실 갈 수 있는데 의장님도 가도 되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좀 기다리시지요.

(○김현 의원 의석에서 — 2020년 4월 달에 방통위원은……)

(「조용히 하세요! 왜 시끄럽게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여기 법에 편성위원회 제대로 안 된 데는 재승인할 때 불이익 준다고도 써 있습니다, 벌금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잔뜩 들어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요 과태료도 물리고 재허가 때 벌점 주면 이중처벌 아닙니까, 그것?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본인들 마음대로 법 만들어서 방송국들 목 조르지 마시고요.

김현 의원님, 역사가 김현 의원님 이름 다 적어 놓습니다.

(○김현 의원 의석에서 — 방통위원 아니었어요, 그때. 제대로 알고 하세요. 2020년 4월 달에 TV조선 재심의할 때 저 방통위원 아니었어요.)

제가 사과드린다고 했는데 계속 목소리 높이시는 것 보면 뭔가 찔리시는 게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찔리세요, 지금?

(○김현 의원 의석에서 — 기자 출신이 사실관계도 모르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내용을 알고 하셔야지요.)

(「방해세력 좀 내보내세요, 의장님.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의원을 내보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는 의원 있음)

(○김현 의원 의석에서 — 왜 나를 내쫓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김현 의원님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나셨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물리고 재허가할 때 결정적인 타격이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대한민국 방송국들 다 재허가……

김현 의원님 그렇게 떠드셔도 안 들립니다. 저만, 제 목소리만 나갑니다, 방송에. 그러니까 개딸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개딸들 별로 안 좋아하고요……

(○김현 의원 의석에서 — 점수 조작에 관여한 적 없고 방통위원 아니었어요.)

과방위 가서 하세요, 그것은. 국회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하실 건 아니니까.

(○김현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잘못 얘기했으면 사과하셔야 돼요.)

사과했잖아요.

(○김현 의원 의석에서 — 관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떠드셔 가지고 도대체, 중간에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하면요, 지금도 편성위원회 있습니다. 그 말씀 민주당 의원님도 하시지요. 지금도 방송사가 편성위원회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어떻게 편성을 해서 방송을 내보내는 것이 우리 방송국에 이익이 될 것인가, 우리 방송국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가 이런 것 지금도 논의합니다, 자율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걸 법으로 강제하고,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요 위헌입니다, 위헌. 아시지요, 위헌이 무슨 뜻인지? 헌법 위반이시라고요. 이것 이미 다 위헌 판결 난 겁니다. 방송사의 편성책임은요 방송사업자가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법을 도대체, 헌법도 나는 모르겠다, 다른 법하고의 관계도 나는 모르겠다, 방송국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다,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법을 만드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반대하고 여러분은 밀어붙이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 방송국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국에 정치가 너무 개입해서 이래라저래라, 감 놔라 대추 놔라, 정말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992년도에 김영삼 대통령 취임할 때 기자가 됐어요. 1997년 DJ가 대통령 됐을 때 정치부 기자였습니다. 김현 의원이 그때 저하고 아신 분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됐을 때 앵커

였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 왜 싸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방송을 장악하고 싶어 가지고 노력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전 회사 다닐 때 회사 문 닫는다는 얘기 두 번 들었습니다. 회사 문 닫는다는 얘기 두 번 들었어요. 제가 다닌 회사가 두 개입니다. 두 회사 모두 문 닫을 거다 또는 주인 바뀐다는 얘기를 두 번 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한 번, 문재인 정부 때 한 번.

우리 밥그릇은 깨지 맙시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집요하게 방송장악하고 싶어서 이제 이 법안으로 마침표 찍으시려고요? 이 법안으로 이제 마침표 찍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가만있겠습니까?

방송사 종사자들이 지금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민주노총의 휘하에 있으니까 어쩔 줄 모르고 그러고 있겠지만 나중에 이 편성위원회라는 곳에서 정말로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프로그램 만들게 하고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 없애라 하고 진행자 바꾸라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간부 시키라 그러고 보도국장 바꾸라 그러고, 그것 한 번 당해 보시면 과연 이 법 좋다고 그럴까요? 저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목이 터져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국민 여러분들께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본인이 있는 그 자리에서 본인의 기사를 쓰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열심히 프로그램 만드는 피디분들에게 그리고 방송사 해외 진출해서 우리 국가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해외 마케팅하시는 분들에게, 자기 직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대한민국 언론을 지킨다, 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킨다, 내가 대한민국을 지킨다, 이런 마음으로 방송사 다니시는 분들 마음에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게요,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조금만 있어 보세요. 방송사 경영진만 싫어한다고요? 기자·피디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취재·보도 제작의 자율성입니다. 독립성입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라는 거예요. 언론은 내 주관에 따라서 소신에 따라서 보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편성위원회에서 이것 다 간섭하게 돼 있네?

정말 안 됩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데 이것 정말…… 김현 간사님, 이 필리버스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 정말 이렇게 하시면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언론은요 목에 넘어갈 때 목에 좀 걸리는 것이 언론입니다. 내가 얘기할 때 언론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언론, 그 언론이 참 언론입니다. 너무 먹기 좋게 언론을 그렇게 만드시면요 처음에는 그것을 '아, 참 좋네'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후회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먹기 좋게 만들어 놓으면 먹을 때 맛이 없거든요. 정치가 언론과 투쟁하셔야지요. 본인들을 견제·감시하는 언론과 투쟁하셔야지요.

이번에 한 민영방송사에서 강선우 후보 검증보도를 집중적으로 했고 강선우 후보자가 결국 낙마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대표 되신 정청래 의원님은 '나는 강선우의 손을 잡아주고 싶다. 강선우의 눈물을 닦아 주고 싶다. 동지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국민과 싸우자는 겁니까?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언론사 만들면 이번에 아마 강선우 후보님 무난하게 장관 되셨을 겁니다. 언론이 아무 얘기 안 하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지요. 저희가 국회 상임위에서 아무리 떠들면 뭐 합니까? 언론이 얘기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강선우 후보님이 장관이 되시는 게 민주당에 유리합니까, 아니면 강선우 후보님이, 돼서는 안 될 분이 낙마하는 게 민주당을 위해서 옳은 일입니까?

저희도 저희 당 집권하면 저희 당 국무위원후보들 언론이 공격하는 것 정말 불편합니다. 국회에서는 그분 막으려고 애를 쓰겠지요. 그러나 국민들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언론 없는, 언론이 완전히 통제된 나라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강선우도 오케이, 이진숙도 오케이, 비록 지금 취임하시긴 했습니다만 김민석도 오케이. 이게 제가 말씀드린 날로 드신다는 겁니다, 날로 드신다는 것. 그 날로 드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당장의 기분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자꾸 날로 드시면요 너무 과식하셔서 배탈 나시고 고지혈증 걸리시고 비만 걸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언론이 여러분들의 손아귀에 들어 있으면 참 좋으시겠지요? 여러분, 국민의힘도 결코 언론이 이렇게 한 정파의 손으로 들어가는 것 바라지 않습니다. 저 역시, 저도 '언론개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정청래 의원님이 하도 언론개혁, 개혁 하셔서 제가 같은 개혁으로 오해받을까 봐 개혁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겠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저는?

언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변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언론개혁, 사법개혁……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정파적 전술에 언론, 사법 그 말 함부로 붙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먹기 좋게 손질하는 겁니다.

자, 뭐가 문제인지 하나하나 따져 볼게요.

방송법 제4조를 보면요—현행법입니다—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그 주체는 누구? 방송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며, 벌써 여기서부터 틀렸지요? 아니, 편성위원회 만들어서 자기들 원하는 편성위원들 잔뜩 집어넣는데, 공수부대 잔뜩 투입시켜 가지고 무슨 언론과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합니까? 그러면서 법에는 또 뭐라고 써 놨어요? 방송사업자가 주체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렇게 앞 다르고 뒤 다른 이런 법 만드시면요……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두 번째, 방송법 제6조,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등 방송의 책무를 천명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편성위원들 잔뜩 들어가서 무슨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민주당 방송이 공적 책임을 완수하는 방송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시더군요, '우리가 정의다. 우리가 하는 것이 정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주장하는 방송이 공정이고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물러서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것 우기시면 안 됩니다.

방송법 69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권은 방송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여 편성의 주체와 법적 책임의 소재가 방송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편성권

은 방송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지 잘 팔리고 우리 직원들에게 월급 많이 주고 이 프로그램이 세계로 잘 팔리고 우리 회사가 성장하는지는 방송사업자가 결정을 하는 거지요. 아니,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자, 결정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공공성, 방송은 공공성이 있어야 되고 방송은 국민의 것이어야 하고…… 좋습니다. 레토릭이지요. 그런데 왜 책임은 안 집니까, 그 편성위원회가? 잘못되면 편성위원회 위원들 집 팔고 땅 팔아서 회사에 손실보상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들, 상법에 주주 충실의무 있다면서요. 상법에 주주 충실의무 있다면서요. 사외이사도 결정 잘못하면 책임 묻겠다면서요. 그런데 편성위원회는 왜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일반 사외이사나 기업의 이사진보다 훨씬 더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많이 계시지요? 이 편성위원회, 말만 편성위원회지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회사 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책임 못 물으면 민주당이 지세요, 앞으로. 저는 민주당이 지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글쎄요, 제 얘기가요 너무 비약이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도 저는 좋습니다. 그러나 비약해야지 최악의 사태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약일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비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문법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다 보는 법을 이렇게 앞뒤 말이 안 맞게, 문법도 안 맞게 써 놓으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방송법 69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권은 방송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대로 만듭니까? 우리 법에 이런 체계를 갖추는 게, 이게 맞습니까? 이런 체계를 만들어서 방송국의 목을 죄는 게,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제가요 과방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급하게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제가 물론 방송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말이 뜻하는 것을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도대체 어떤 법이길래 이렇게 말이 많은가 그래서 벼락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한 줄 한 줄이 한국어인지 영어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가 이렇게 막 통과시켜도 되는 겁니까?

편성위원회라는 게 왜 생긴지 아십니까? 보통 회사는 이런 것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자동차에 제품 종목 정하는 그런 위원회 있습니까? 이사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민영기업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민영기업은 그냥 이사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성위원회라는 게 생긴 역사가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이 요구해서 생긴 거예요. 뭐 그렇게 복잡한 것 없습니다. 이미 이 편성위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민주당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민주노총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강령 제1호 편집권·편성권의 노동자 쟁취. 언론노조 강령 제1호, 편집권·편성권의 노동자 쟁취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 이 편성위원회가 순수합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 이 편성위원회에 대해서 단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습니까? 고민하셨습니까?

그래요. 노동자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노동자들을, 방송 노동자들을 나락으로 밀어 버리기 위한 법 아닙니까, 이 법이.

그 편성위원회가 앞으로 뭘 할지 모르지만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이 법에는

이 편성위원회가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불리하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 법이,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노동자들은요 내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일반 기업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언론 노동자들은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는 것 가장 싫어합니다. 특히 제품의 경쟁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디들 엄청 싫어할걸요.

정치 피디들은 좋아할 겁니다.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 우리 민주당이 이뻐할 만한 프로그램, 우리 민주당에게 칭찬받을 만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 만들면 회사에서 '야! 너 이런 프로그램 만들면 안 되지. 정치적으로 이게 오해받을 만한 프로그램이잖아' 이렇게 얘기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민주당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을 만들면 회사에서 사장님이 '이리로 와 봐. 이런 프로그램 만들면 되겠어, 공영방송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상식이고 보통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참 좋아합니다. 정치 피디들은 참 좋아하실 겁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되게 중요하게 됐잖아요, 이제 편성위원회라는 것이 생겼으니까. 어떤 사장님이 들어오셔야 될까? 사장님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혹시 브레이크가 걸릴지 모르니까 이분들이 이 방송법 개정안에 뭘 만들었냐 하면 민영방송에 사장추천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민영방송에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YTN, 완전히 민영화됐습니다. 과거 YTN은 약간의 공공성을 가진,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지만 완전히 민영화가 됐습니다. 그 방송국 사 가시느라고 수천억 원의 돈을 들였습니다, 지금의 방송국 대주주가. 그런데 갑자기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들라고 그래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도 언론 노동자 출신이고 그런데, 그래서 사장추천위원회를 보도전문……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KBS·MBC·EBS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자고요. 보도전문채널, 방송사업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합의, 정말 정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입맛에 맞지 않는 제2노조가 '내가 대표야'라고 협상장에 나올까 봐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사장추천위원회 만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언론노조 YTN지부 노조가 협상권을 가지는 겁니다. KBS는 2노조·3노조 있지만 어쨌든 1노조는 전부 민주노총 언론노조 조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뽑느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합니다. 반드시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만드냐? 방송사업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의.

여러분, 합의가 뭔지 잘 아시지요? 논의하거나 협의하는 게 아닙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해야지 사장을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노동조합이 합의 안 해 주면 사장 못 뽑는 거지요. 이게 무슨, 방송사업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노동조합이 뽑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 보시기에는 '아니, 방송사업자하고 합의해서 하라니까 당신들도 의견 내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만 그럴

뿐이지 사실은 노동조합이 원하는 사장이 아니면 사장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좋습니다. 공영방송, 백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민영방송 사장을 왜 노조가 뽑습니까? 노동조합이 기업의 경영권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노동조합이?

저는 노동조합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반노동적이고 반인권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노동조합 중요하지요. 노동조합도 정말로 국가가 어려울 때, 회사가 어려울 때 또 그들의 권익이 심대하게 침해될 때 목소리 높이고 파업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방송 독립 지켜 주는 소중한 곳, 노동조합 맞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무슨 사장까지 뽑습니까?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사장을 우리 편을 뽑아야지 우리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제동을 못 걸잖아요.

여러분, 국민들은요 방송에 나오는 장면 하나, 신문 1면의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세상을 봅니다.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국민들은 방송, 한 장에 나오는 사진을 보고 세상을 봅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담장 넘으시는 그 사진 한 장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장 우리 편 된다고 해서요 여러분들 결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장면,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 백날 내도요 그게 우리 국민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송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방송종사자들은 자유가 있어야 하고 그게 국가를 위해서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편성위원회 만들어서 일단 한번 방송종사자들 목 조르고 사장추천위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뽑아서 한 번 더 목 조르고……

그냥 제가 다 묻지 않겠습니다. 방송국의 특수성 인정합니다. 방송국 잘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방송국 잘되겠습니까?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해야지 사장 뽑을 수 있는 이런 나라에서 방송국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이런 법 있어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30년 후퇴하는 겁니다. 이 법은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 조르기 법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역사의 죄과를 어떻게 갚으시려고 지금 이런 법을 막 함부로 던집니까?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의 일부, 방송에 깊은 원한을 가지신 일부, 이 부분 지도자들께서 대통령도 고개를 갸웃하고 있는데 밀어붙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잘 아시겠지요. 평생을 언론과 싸우면서 대통령까지 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당장의 마음은 '아, 언론이 내 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대통령씩이나 되신 분이 이런 법에 저는 동의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 김대중 대통령,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당을 취재를 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언론 때문에 굉장히, 죽음의 사선을 몇 번 넘으신 분 아닙니까? 그래도요, 지금 안 계십니다만 그때 대변인 하셨던 박지원 의원님, 정동영 의원님, 김현 의원님 제가 그때 다 인연을 맺었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이렇게 적대적으로 언론을 대하고 내가 죽을 뻔했다고 해서 언론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이 언론이 특정 정파의 소유물이 되는, 이런 반민주적인 폭거는 그분은 절대로 저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K-민주주의가 발전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랑하시

는 대한민국의 K-민주주의가 바로 이런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끄럽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이 법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끄러워서 제가 준비도 못 했지만 이렇게 두서없이 여러분들 앞에 나서서 필리버스터라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제 말에는 다 동의하지 못하시더라도 그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권이 바뀌는 모습을 언론계에서 너무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런데 감히 말씀드리면 우리 편이 아니라고 해서 언론을 함부로 대하는 정권은요, 그래요. 무슨 말씀하실지 제가 짐작이 가는데, 우리 편이 아니라고 언론을 함부로 대하는 정권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난주 금요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이춘석 위원장께서 '저도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논쟁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강행 처리하는 거 양해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좋습니다. 뭐 양해해 드리지요, 그거는.

그런데 적어도 대한민국의 언론이 그런 가벼운 농담 같은 얘기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가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참 답답한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이준웅 교수님께서 경향신문에 기고한 '방송개혁을 이렇게 내딛다니'라는 칼럼을 한번 잠시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숙고는 했는데 이거 완전히 망쳤다', 첫 문장입니다.

'심사숙고 끝에 망칠 각이다. 국회 법사위 심사를 앞둔 방송 3법 개정안 이야기다. 2000년 방송법 제정 이래 땜방을 거듭해 온 방송법을 개정하자는 게 고작 이따위 규모의 짜깁기인가. 게다가 이건 때워 봤자 다시 해지고 찢어질 게 뻔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질타를 합니다.

이준웅 교수님, 방송계에서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교수님이라는 거 다 알고 있고 경향신문이 굳이 이런 글까지 실어야 될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도 제 마음처럼 이번 방송법 개정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방송 3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들은 일단 속도를 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부터 개혁하자고 한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손봐서 사장 선임부터 바꾸자고 한다.'

그렇지요. 사장 선임 어떻게 바꿉니까? 공영방송의 사장을 일단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이분들이 이렇게 공영방송 사장 바꾸는 데 목숨을 걸까?

지금 KBS 사장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분 저희한테 그렇게 잘해주시는 것도 없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사장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바꾸고 싶지요. 왜요? KBS 뭐 잘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KBS 사장 임기가 3년이거든요. 3년이면 이재명 정부 중반까지는 이분이 가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지금 KBS 사장 뽑는 이사회가 11명인데 15명으로 늘리자고 합니다. 그런데 사

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요, 일단.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하도록 10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여론조사기관 중 방통위 규칙상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구성 업무 의뢰가 가능하다. 위원회는 사장후보자의 경영계획 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 등을 통해서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추천한다. 그리고 보도전문채널은—아까 말씀드렸지요—방송사업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합의로 한다. 그리고 사장후보는 이사회 임명제청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가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법안들을 밀어붙이는데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세 개의 큰 기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둥이, 사장추천위원회든 편성위원회든 이게 지금 민주당이 만들어서 소위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것인데 이 세 개를 밀어붙이는 큰 기둥은 뭐냐 하면……

첫 번째, 말씀드렸지요. 민주노총의 언론노조입니다. 민주노총이 민주당의 후견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다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노총의 조합장 하셨던 분이 노동부장관이 됐습니다. 이분은요 제가 그저께 법사위에 나와서 물어봤더니 방송법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 왜 모르시냐? 지금 이 방송법은 방송종사자들, 방송 노동자들의 권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법인데 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신 노동부장관께서 방송법을 전혀 모르냐' 이렇게 물었더니 본인은 잘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어쨌든 민주노총의 이해관계를 극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민노총 하명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진보 성향 언론학회 학자들 그리고 사장님 뽑는 데 변호사단체가 또 들어가 있어요. 사장추천위원회에 변호사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이 변호사단체가 뭘까? 결국은 여러분들, 민변 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 개의 큰 축을 가지고 무슨 위원회를 막 만들다 보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국민분들은 이것 자세하게 설명드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언론노조, 민변, 진보 성향의 언론단체 이 세 군데에서 들어가는 쪽하고, 국회 있지 않습니까, 국회. 지금 KBS 이사 15명 가운데 국회에서 6명을 추천합니다. KBS 이사 15명 가운데, 11명을 15명으로 늘리는데 국회가 6명을 추천해요. 의석수를 보는 거지요. 지금 구조에서 국회가 6명을 추천하면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2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도대체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자, 방송 독립을 확보해 주자,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자…… 아니, 국회가 방송사 사장 추천하는 데 이사회 15명 중에 6명을 추천하면서 무슨 방송의 공공성이 강화됩니까? 여러분들 논리의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두 번째, 변호사가 방송 경영에 뭐 아는 게 있습니까? 물론 그중에서는 변호사분들이 방송 관련한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방송에 대해 비교적 해박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느닷없이 변호사가 왜 들어갑니까, 거기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객관적인 공공성은 대단히 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놨지만 실질적으로 전혀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방송사 사장을 뽑겠다는 이 구조 자체가.

무엇보다 이것은 위헌 소지가 대단히 큽니다. 이렇게 사장을 뽑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지 않잖아요. 방송의 독립성이라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 가지

고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사장 뽑으려는 거지요.

이번 방송법안의 핵심적인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추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하고 추천 권한을 다변화한다.

다변화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여러분들의 다변화는 여러분들의 편을 많이 집어넣겠다는 다변화예요, 이 법을 보면. 그래서 그런 다변화는 객관적인 공공성은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공공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장추천위원회의 추가 도입과 의무화.

말씀드렸지요, 사장추천위원회 도입한다. 보도전문채널사업자에 대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시에 노동조합과의 합의 의무화. 제가 이게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1교섭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서 사장을 뽑는다는 게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편성위원회 구성의 의무화와 처벌 조항 신설.

말씀드렸지요. 기업이 자율적으로 편성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것을 결정을 하면 되는데 이걸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편성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들이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지요. 지금 대부분 다 친민주당 성향의 위원들로 이 편성위원회를 가득 채워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송 만들겠다……

다섯 번째, 시청자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자 확대.

이 시청자위원회라고 하는 것도요, 제가 방송국 오래 다녀 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시청자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 방송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 물론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비판적이라면 아주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비판적인 분들을 시청자위원회에 대개 초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덜 괴롭히니까, 시청자위원회라도 그렇게 구성을 해야지 덜 괴롭히니까.

저도 민영방송사 보도본부장을 하면서 시청자위원회가 열리면 꼭 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보도책임자가 왜 시청자위원회에 가서 인사합니까? 안 그러면 굉장히 괴롭히니까. 그분들이 시청자위원회 의견이라는 것으로 굉장히 많은 리포트를 합니다. 저는 그 지적들 굉장히 겸허하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반영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도가 지나치면 안 되는 거지요. 이번에는 무슨 시청자위원회를 TV홈쇼핑까지 확대한다고 그러네요.

읽어 드릴게요.

기존에는 어디에 시청자위원회가 있었느냐? 종편, 보도전문채널, TV홈쇼핑…… 아, TV홈쇼핑은 원래 있었네요. 그런데 개정안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TV홈쇼핑, 그 외에 대통령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령에서 무제한으로 시청자위원회를 두게 강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까지 왔으니까, 제가 국회에까지 왔으니까 불편한 진실 하나 말

씀을 드릴게요.

일자리 만들기 아닙니까, 이것? 민주노총 성향, 재야 방송계 인사 일자리 만들기 아니고서는 이렇게 무자비하게 편성위원회 만들어라, 사장추천위원회 만들어라, 사장도 우리가 뽑겠다, 시청자위원회 무자비하게 만들겠다……

좋습니다. 말은 다 좋지요. 시청자위원회 있으면 좋지요. 좋습니다.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역할이 있지요. 그런데 이건 여러분 편들 일자리 만들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송국에 있어 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들어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폄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자격을 갖춘 분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우리 방송을 모니터해 주고 의견 주시면 정말 고마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너무하시는 겁니다.

시청자위원회가 예전에는 프로그램 모니터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은 어떻다 저떻다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제작자들이 보고 '이것은 이분들 말이 맞네. 시청자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고쳐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청자위원회는 이사 추천권이 있어요, 이사 추천권요. 시청자위원회가 무슨 기업의 이사를 추천을 합니까?

제가 자꾸 현대자동차 예를 들어서 죄송스러운데 현대자동차에도 상품 모니터단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식품회사 같은 데 가서 보면 새 제품 나오면 그분들 불러 가지고 '이거 맛이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거마비도 좀 드리고,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내는 상품에 대해서 평가해 달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방송의 시청자위원회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이고 조금 더 격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방송학계의 교수님들도 많고 또 전직 방송인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격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순수하게 의견 개진을 하시는 분들이지 시청자위원회가 무슨 이사를 추천합니까?

우리 과방위 위원님들, 이런 법을 막 합의하신 것 아니지요? 강행 통과하신 거지요? 정말 이거…… 시청자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한답니다.

두 번째, 여기 또 있습니다. 방송편성과 더불어 채널의 구성과 운영에도 의견 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방송편성의 시정요구를 시청자위원회가 할 수 있습니다.

방송편성의 시정요구 별것 아닌 것 같지요? 그 프로그램 바꾸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진행자가 방송하는 프로그램은 그냥 두고, 김어준 씨 이런 분들이 방송하면 '아, 잘한다', 반대 성향의 방송인이 진행하면 그 프로그램 없애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채널의 구성과 운영에도 의견 제시까지는 좋습니다, 이건 시청자위원회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시정요구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송국에서 외부 시청자위원회 또는 편성위원회에서 '그 진행자 내리세요', '저 프로그램 없애세요'라고 얘기하면 그 말 안 들을 수 있습니까?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장이 못 버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매우 결기 있는, 김장겸 의원님 가셨네요. 매우 결기 있는 분이 사장이 되면 '이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지요.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청자위원회, 편성위원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 내려 올려, 진행자 바꿔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도 사장이 말을 안 들을 수 있지요. 그래서 사장추천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중 삼중으로 방송사의 목을 죄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방송의 부칙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이 방송법 개정안 부칙에 법안 통과되면—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3개월인가 6개월인가—사실상 바로 시행하는 겁니다.

(「3개월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3개월이지요. 3개월 안에 이 법이 바로 시행이 돼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급합니까? 방송사 사장 바꾸는 게 그렇게 급합니까? 정말 이 법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면 현재 있는 사장님들 임기는 보장해 주셔야지요.

여러분들 지난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방송 무슨 철학 어쩌고 운운하면서 끝까지 버티시고 말이지요. 그것 가지고 정치 탄압받았다고 그렇게 울고불고하시고. 그런데 지금은 왜 잣대가 달라졌습니까? 기가 막히는……

(「시청자위원회……」 하는 의원 있음)

사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장.

(「시정요구 권한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이 그렇게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요 정치권력이 이렇게……

의원님, 잘 압니다. 제가 방송사에서 시청자위원회하고 늘상 대화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늘려 놓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소위 방송사업자들에게 시청자위원회를 다 만들도록 강제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잘못하시는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을 바꾸는 데 임기 보장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로 옳은 법이면, 대한민국 방송을 위한 백년대계면 앞으로 2년을 못 참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 사장을 쫓아내고 우리 마음에 드는 사장으로 뽑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영방송 사장 뽑을 때 지금까지는 방통위원회가 이사들이 모여 가지고 공영방송 사장을 뽑았잖아요. 이제는 방통위원회의 영향력을 전혀 없앤 거지요, 이 법안을 보면. 그래서 이사 추천위원회 이사들이 추천하면 방통위원회에서는 그냥 임명제청만 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임명 안 하면 그냥 강제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방통위원회는 뭡니까?

우리 이진숙 위원장 지금 나와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진숙 위원장 싫으시지요? 그래서 국무회의도 못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법을 위반했으니까 못 들어오는 거지요」 하는 의원 있음)

지난 정부에서도 법 위반하신 분들 많이 임기 채웠습니다. 여러분들 내로남불하지 마세요. 국민 여러분들이요 민주당을 바라보는 가장 큰 민주당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동일한 잣대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했을 때는 로맨스, 내가 하면 불륜입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위원장 한 번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한 번도」 하는 의원

있음)

(「그걸 따라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따라 하지 마시고요.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송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방송의 근간과 뿌리를 2000년대에서 25년 만에 바꾸는 겁니다, 이 방송법은. 25년 만에 드디어 여러분들이 소망하던 민주당 방송, 대한민국 방송 전부 민주당 방송 만드는 데 성공하기 직전이시라고요. 그러시면……

방통위원장이 몇 마디 한다고 이게 돌아갑니까? 여러분들 강행하실 거잖아요. 방통위원장 비록 전 정권에서 임명되신 분이지만 국무회의에 불러서 '당신 생각은 뭐냐' 말 들으세요. 그거 말 들어야지 국민들이 이 법이 통과돼도 '방통위원장 의견도 들었고'…… 야당 말이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야당 말도, 의견도 들으세요.

법사위, 과기정보통신위에서 뭐가 그렇게 급해 가지고 서둘러서 야반도주하듯이 법안을 통과시킵니까? 다 들으시고 그 절차적 합리성을 획득하시면 이 법안이 더욱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안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상하게 야바위하듯이 앞뒤 맞지 않는 조문들 좀 다 빼시고요. 적어도 현재 있는 방송사 사장들의 임기는 채워 주시고요.

그런데 교묘한 게 제가 보니까…… 제가 지금 다 외우지를 못해 가지고요. MBC 사장님은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지금 자리를 지키시기 좋게 그렇게 또 이게 설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너무 복잡해 가지고.

(「내용 파악이 안 됐잖아요, 내용 파악이」 하는 의원 있음)

듣기가 괴로우신 건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MBC는 방문진에서 지금 이사를 뽑습니다. 방문진법에는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립니다. MBC 사장 뽑는 방문진법에는 어떻게 바꾸느냐?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립니다. 여기에 민주당 추천이 2명 그리고 임직원 추천이 2명, 현재 민노총 출신의 사장이 임명한 시청자위원회 임명 2명, 학회 추천 2명, 민변 추천 1명.

법이 바뀌어도 MBC 사장 추천 위원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13명 중의 10명이 기본적으로 친민주당 이사가 방문진의 이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MBC 사장은 지금 대단히 안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표 비율 5분의 3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13명 중의 8명만 찬성해도 마음대로 사장을 임명할 수가 있는데 친민주당 성향의 인사들을 기본적으로 10명 정도는 확보되게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지금 국회는 민주당 추천이 3명이고 저희가 2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다음 총선에서 여야의 구도가 바뀌어서 저희가 3명이 되더라도 민주당이 2명, 임직원 추천 2명, 시청자위원회 2명, 6명. 학회 추천 2명, 8명. 민변 추천 1명, 9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총선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MBC 사장은 안전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정교하게 설계된 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우 우호적인 방송사의 사장님들은 설사 다음 총선에서 여야 구도가 바뀌더라도 그대로 그냥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들, 이런 기가 막힌 방송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방송의 미래를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는 저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행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라는 것이, 공영방송이 MBC와 KBS만 있었던 시절인 87년은 군사독재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 그때는 군사정부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방송사를 다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방식은 사실은 정치적 후견주의를 채택한 측면이 있습니다. 군부독재가 직접 추천하지 못하도록, 야당에게도 정치적 후견인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여야의 추천을 받는데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들의 협의를 거친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고 기본적으로 합의를 통한 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명이지요. 공영방송 이사가 11명인데, KBS는 여야 추천 비율을 7 대 4, MBC는 6 대 3으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 자체로 사장을 뽑을 수가 없고 방통위원회에서 사장을 저기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정치권이 사장 선임을 할 수가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에 따르면 방통위원회의 기능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지요. 여야가 곧바로 사장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이 그렇게 방송개혁이라는 말로 이게 포장될 수가 있나, 이게 과연 방송개혁인가?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민주당 방송, 지상파 3사 KBS·MBC·SBS, YTN, 연합뉴스TV, 종편 4사 이렇게 9개 민주당 성향의 방송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의 토론을 하자고 하더라도 저는 이 토론에 응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대단히 방송법에 대해서 해박하고, 조금 전에 김현 간사님께서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 사실은 내용 파악이 필요가 없어요. 무슨 숫자가 몇 명이니 이런 것들은 제가 과방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팍팍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한 번만 읽어 봐도 이게 얼마나 허접한 법인지 너무 쉽게 보이는데 이 법을 가지고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지금이야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고 설명하는 저도 이렇게 복잡한데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편성위원회라는 것이 생겨서 국민들이 이게 우리의 방송국, 내가 좋아하는 방송국의 프로그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알게 되면 경악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KBS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좋아하는 MBC가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요 저는 왜 민주당이 이런 무리한 법안을 만들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거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요 방송사 사장들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사실 우리 방송사 사장들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자리를 지킨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MBC 사장님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정권이 바뀌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쫓겨납니다. 방송국 사장만 쫓겨나는 것이 아니고 MBC로 치면 방문진 이사, KBS는 KBS 이사님들도 쫓겨납니다. 왜 그 이사님들을 쫓아내겠습니까? 그분들의 구도가 바뀌어야지 사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방문진의 구도를 바꿔야 MBC 사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KBS 이사회 구도를 바꿔야지 KBS 사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사들을 공격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나게 고통받은 KBS의 강규형 이사라는 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강규형 이사를 KBS 이사회에서 내쫓을 때 어떤 방식을 사용했냐 하면 노동조합이요 그분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분들의 법인카드에서 무슨 김밥을 사 먹었네, 애견용품에 뭐 몇천 원을 썼네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또 이분 한양대학교 교수, 한양대학교까지 찾아가서 거기 앞에서 꽹과리 두드리고 그 사람 악마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 KBS 이사진을 바꿨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이사진이 바뀌면서 사장도 바뀌었지요.

MBC 어떻게 사장 바꿨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계셔서 나오셔서 직접 증언을 하시라고, 제가 듣고 싶습니다만 MBC 어떻게 탄압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회사를 풍비박산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MBC는요 그 회사 직원들끼리 얼굴도…… 인사도 안 하고 평생을 같이 일해 온 선후배들끼리 반목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왜? 무리하게 이사를 바꾸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일을 했느냐? 일단 노조가 정권이 바뀌면 파업을 하지요. 우리 보수 정당이, 보수 정권이 들어섰는데 파업했겠습니까? 대한민국 언론의 흑역사, 대한민국 방송의 흑역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송사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의 산별노조인 언론노조의 휘하로 들어가면서부터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흑역사가 시작됐다고 저는 단호히 생각합니다.

그전에는요 정권이 바뀌어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의 뜻에 따라서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일단 파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는 투쟁을 하다 보면 마음 약한 이사님들이 손들고 나가고 그렇게 해서 이사회 바꿔서 사장 몰아내고 이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마다 반복되어 온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흑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요 어떤 상황이 생겼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파업을 해도 이제 국민들이 알아주지를 않아요. 방송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감소한 겁니다. 파업을 하거나 말거나 그냥 알아주지를 않아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아무리 파업을 해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로 써 왔던 그 방식이 통하지를 않게 된 겁니다. 뒤에서 민주노총을 부추겨서 파업하고 민주노총 조합원 출신의 사장 만들고 그 사장이 보도본부장 임명하고 그 보도본부장이 보도국장 임명하고 주요 보직 간부들 전부 민주노총 출신으로 다 갈아 끼우고 이렇게 해서 언론을 장악해 오던 여러분들의 수법이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권 바뀌었잖아요. 예전 같으면 벌써 파업해서 꽹과리 두드리고 이사들 악마화시키고 사장 물러나라고 그러고 그렇게 했겠지요. 여러분들 불편한 진실이지만 맞는 얘기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내세웠던 것 뭡니까? 방송 민주화, 항상 내세웠던 게 방송 민주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신 오늘날의 방송이 언론노조 덕분에 더 민주화됐습니까? 방송 독립, 그렇게 열심히 투쟁하셔서 오늘날 방송 독립을 쟁취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법이, 공영방송 민영방송 가릴 것 없이 이런 법이 무차별하게 방송국을 침탈하게 만든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 온 방송 민주화의 결과물입니까? 그렇게 해서 방송 민주화 하셨으면 이런 법은 만드실 필요가 없는 거지요.

잘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방송국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방송국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장악하고 싶어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아예 법을 만들자'. 이 법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정부 때—여러분들이—재의요구권까지 행사해 가면서 충분히 토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이 법안을 왜 만드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동안 해 온 방식대로 방송국이 장악되지 않으니까 아예 방송국의 구조를 바꿔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출발한 게 바로 저는 이 방송법 개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법 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에서 절대 떨어질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 법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견을 받는 정치세력들이 방송국에 낙하산부대로 마음껏 투입되어서 대한민국 방송을 여러분들 입맛대로 좌지우지하고 선거 있을 때마다 민주당 편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법을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방송을 민주당의 볼모로 만듭니까? 놔주세요, 그냥. 정말 애원합니다. 방송국들 본인들이 알아서 하다가 망하면 망하게 두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게 뭡니까? 도와주는 겁니까, 뭡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책임 못 지신다…… 책임지는 것은 지금 단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YTN 사장 만들고 YTN에 편성위원회 만들어서 여러분들 원하는 프로그램 다 한다…… 절대 그럴 일 없다라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러면 YTN 사장은 왜 벌써 사표를 냅니까? 왜 벌써 알아서 사표를 냅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법을 시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주장하시겠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서 방송사 간부들 얘기 다 듣지 않겠습니까? 좋다 그럽니까?

(○김현 의원 의석에서 — 예.)

좋다 그래요?

김현 의원님, 농담으로 받겠습니다.

정말 많은 방송사의 경영진들이 저희에게 SOS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분들의 단순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은 김현 의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김현 의원 의석에서 — 왜 이름 얘기하고……)

한 분밖에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언급 안 하겠습니다.

자꾸 제가 말씀할 때 말씀을 하셔서 저도 모르게 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할 때, 얘기할 때는 조용히 계시면 제가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대답을 하시니까 저도 뭔가 성의를 보여야 될 것 같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제 길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제가 보기에는 패닉이고 공포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 방송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야, 더 잘되겠네. 이렇게 법이 좋아져서 대한민국 좋은 나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합니까?

기왕에 민주노총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하지요.

지금 민주당이 빨리 통과시키고 싶어 하는 법이 이 방송 개악 3법 그리고 무제한 파업

허용법—노란봉투법이라고 아름답게 얘기하지요—그리고 상법 개정안.

유명한 말이 있는 것 아시지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장미로 장식돼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생각합시다. 이 법들 이대로 통과되면 대한민국, 지옥으로 간다는 것 우리 잊지 맙시다. 제가 왜 이렇게 단언하냐 하면 이 법은 국민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된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선택을 해서 법을 만들었다면 그 길로 가면 되지요. 그런데 이거는 국민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된 법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하명법입니다. 세상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서 정치공학만을 앞세운 민주노총 하명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송법,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잖아요. 방송국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들 공수부대처럼 낙하산 타고 내려가서 편성위원회 위원 되고 시청자위원회 위원 되고 사장님 되고 보도본부장 되고 보도국장 돼서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민주노총의 의사가 너무 많이 반영된 법이다, 이 법. 그래서 걱정된다.

또 하나 있지요. 노란봉투법, 장밋빛입니다. 노동자가 언제든지 파업할 수 있는 세상, 아름답지요? 어떤 피해를 입히더라도 기업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으로만 분리되어 있는 이중적인 세상, 그래서 그 세상은 노동자들을 위한 세상이 되어야 한다. 참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이요 70년대 어떤 인권도 누리지 못한 채 일했던 우리 노동자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지금 대한민국을 차지하는 대다수의 노동자는 여러분들이 외면하고 있는 배달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언론사 말씀드릴까요? 언론사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분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부분들은 제가 언론사의 경영진으로 있을 때 그분들을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했는데 민주당이 단 한 번도 그분들을 위한 법을 낸 것을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뭐 했냐고요? 2년 지나면 정규직 만들어 주는 법, 민주당이 만들어 주셨지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분들이 비정규직으로 들어와서 2년 지나면 정규직 만들어 주겠다는 그 달콤한 법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계시는지 혹시 아시냐고요.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에 똑같이 닥치고 있는 문제입니다. 2년 있으면 자릅니다. 왜 현실을 외면하십니까? 현실이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비정규직 제로, 그래서 대한민국에 비정규직이 몇 %로 낮아졌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법으로 언론사의, 법으로 기업의 비정규직을 0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장밋빛 향기가 가득하지만 그 입안에는 정말 독설이 가득하다고 저는 느끼는 겁니다. 독소가 가득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름다운 말로 대한민국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드셨고 그 대한민국 국민들에는 국민의힘 지지자도 있고 민주당의 지지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함부로 갈라치기 해서 가진 자와 없는 자, 노동자와 사용자 그렇게 갈라서 대한민국을 파업천국으로 만들어서 그 회사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도무지 상상이나 하

고 이런 법들을 함부로 만드십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런 법을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노조법 20년 됐어요, 20년」 하는 의원 있음)

20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좋습니다. 그런데요 20년이 지났으면 기업주와 노동자가 상생하는 법을 만드셨어야지요. 막 때려 부숴도, 어떤 손해를 입혀도 그 노동조합에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하게 하면 파업이 줄어듭니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갑니까? 발전합니까? 사업자의 범위는 무제한으로 늘려서……

(「노조법을 제대로 한번 읽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읽어 봤습니다. 읽어 봤어요. 제가 다 읽어 보지는 않았지만 법사위에서 그 법을 강행 통과시키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제가 다 읽어 봤습니다.

그 법을 보면요 책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없이 고용한 사람과 고용당한 사람으로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용한 사람도 고용을 당한 사람들이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법, 그것이 바로 노동법 개정안,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표현한 노란봉투법입니다.

왜 노란봉투법이냐고요? 잘 아시잖아요. 노란 봉투에 돈 담아서 해고된 노조원들을 도와주게 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들의 노란 봉투에 나의 작은 급여를 잘라서 우리 동료들의 삶을, 우리 동료들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했던 그 노동자들의 노력을 여러분들, 이 이상한 법으로 훼손하지 마시라고요.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기업 때문에, 기업이 노동자들을 탄압해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떨어집니까? 2025년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기업이 노동자들을 탄압해서 외국이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외국 투자자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관세협상 해서 우리 기업들이 느닷없이 15% 관세 물게 생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잘못은 아닙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요. 그러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500조, 결국 기업이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정부 곳간을 열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3500억 불 내주고 나면 IMF 생길지도 모른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4000억 불 조금 넘습니다. 그 돈 다 가져가서 미국에 투자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저는 기업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준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법 만드시면…… 제가 조금 벗어났습니다. 방송법이 아니고 좀 벗어났습니다만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이런 거 만드시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생산하면 매일 파업하고 와서 때려 부숴도 아무 책임도 묻지 못하는 법 만들면 이 기회에 참 잘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오늘 자꾸 현대자동차 얘기를 하게 되네요. 현대자동차 조지아 공장의 생산성이요 울산 공장의 생산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잊어버렸는데 아마 1.5배 이상 된다고 제가 과거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

국에 팔면 관세 15% 물어요. 연말 되면 민주노총의 노동조합이 보너스 3000만 원 내라, 5000만 원 내라 막 그래요. 그분들 잘살면 좋지요. 기업이 보너스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좋습니다. 3000만 원이면 어떻고 5000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국가의 국민소득과 그 나라 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은 연동돼 있는 것이지요. 아니, 그런데 미국보다 훨씬 더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에서 훨씬 더 많은 급여를 줘야 되고 거기에 관세 15% 두드려 맞고 틈만 나면 대통령이 불러서 얼마 투자할래 압박받고 이런 나라에서 기업을 뭐 하러 합니까?

상법 개정안 또 잠시 보지요. 왜냐하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이 몰아붙이고 있는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건 민주노총 하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급하게 몰아붙여야 될 법입니까? 지금 우리 근로자들이 우리 국민들 보통의 눈높이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의 파업을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근로자들의 조건, 근로조건에 맞는 파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정치파업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정치파업 하게 만드셨잖아요. 정치파업을 해도 아무도 제지할 수 없는 그런 법안을 만드는 것이 과연 민주노총의 이해관계가 아니면 도대체 누구의 이익입니까? 그게 민주노총을 위한 법이 아니면 누구의 법입니까? 이 법을 만드시면 지금도 위험하게 배달하시는 배달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방송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방송국 비정규직 노동자들 파업 못 합니다. 그분들은 아직도 열악한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파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보너스 500만 원, 1000만 원 안 올려 준다고 공장 전체를 세우는 민주노총의 귀족노조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노동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노동시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그러시지요? 맞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든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민주노총을 위한 정당 맞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말씀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소비쿠폰 15만 원씩 나눠 주고 국가, 나라 곳간이 어떻게 비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정당, 그게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법 좀 보겠습니다.

법인세도 올리겠다, 증권거래세도 올리겠다. 저희가 걱정한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가진 자를 적으로 생각하는 매우 적대적인 정치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으로부터 관세 뒤통수 맞고 법인세 더 내야 되고 노동자들 마음껏 파업하게 만들고 언제든지 기업경영권 위협받을 수 있는 상법 만들고 이렇게 하면 도대체 대한민국 기업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서 사업합니까? 정말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대한민국 기업들은?

그리고 증권거래세, 주식투자 많이 하는 분들은 증권거래세가 1%든 2%든 막 올려도 됩니까? 주가 5000 시대 열겠다면서요. 그래서 증권거래세 올리겠다 그랬더니 지난주에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위의장님은 '나는 주식투자를 잘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 주식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반

대하셨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왜 이것을 몰아붙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은 아니지.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대주주 자격을 10억에서 50억으로 올려놨는데 다시 10억으로 내리겠다, 이것 주식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되겠어…… 그래요. 우리나라 국민에 비하면 그 숫자가 크지 않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저는 진성준 의장과 달리 주식투자를 좀 해 봤습니다. 12월 달만 되면요 웬만한 사람들 주식 많이 팝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그것은 매수의 기회 아니야? 그때 주식 사면 되잖아'. 이게 지금 국민을 대하는 태도입니까, 국민을 향한 말장난입니까, 이게?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 가서 주식 살 기회 아니냐는 이 얘기가 말장난입니까, 여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입니까? 저는 도무지…… 입법·사법·행정 다 장악하셔서 마음대로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국민들 가슴에 염장은 지르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국장'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국장이라고 그래서 저는 무슨 기재부의 국장이라고 얘기했는데 국장을 떠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국장이라고 그러더군요. 듣고 보니까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걸핏하면 이제 국장을 떠난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걸핏하면 국장을 떠나자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도대체 여당의 지도부라는 분들은 저렇게 한가롭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것이고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를 떠받치는 가장 기본적인 말초신경이라는 것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 무너지면 기업이 무너집니다. 주가 5000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것이 주가 5000으로 가는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고.

두 번째로 걱정스러운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면, 잘못된 것은 아셔야지요. 오늘 주가가 조금 반등했더군요. '이건 뭐지' 봤더니 지난주에 민주당이 내세웠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이것 다시 검토해야 되겠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주식시장을, 주식을 팔았던 분들이 오늘 다시 조금 산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가를 올리는 것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주가를 올리는 것이 여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정치력으로 주가를 올리지 못합니다. 주가는 투자자들이 올리는 것이고 주가는 대한민국 경제가 올리는 것이고 주가는 기업이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2연타, 3연타로 기업들 뒤통수 때리고 2연타, 3연타로 개미투자자들 짓밟으면 언제 주가 5000 갑니까?

주가 떨어지면 정부 곳간 열어서 기업에 대출해 줍니까? 이 정부가 할 줄 아는 것은 나라 곳간 열어서 돈 퍼 주고 기업들 곳간 열어서 있는 돈 쓰게 만들고, 이게 이 정부가 할 줄 아는 가장 잘하는 경제 아닙니까? 이 정부가 가장 잘하는 경제 아닙니까?

기왕에 말 나온 김에, 우리 경제에 활기가 돈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동네 편의점의 소비가 제일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왜 편의

점의 소비가 많이 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 봤어요. 사시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한번 코로나 때 돈 나눠 줬을 때 우리 국민분들이 고기도 사 먹고 여러 가지 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의점에 제일 많이 소비가 늘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생필품 사시는 거잖아요, 생필품. 우리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보태 줘서 잠시, 아파서 죽어 가는 우리 서민들 눈 잠깐 떴다가 감으라고 그것 주시는 겁니까? 내년에는 두 배로 풀어야지 성장률 유지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0%대입니다. 그렇게 곳간 막 열어서 그렇게 다 해 주시고 나면……

저희들에게도요, 저희 지지자들 또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지역에 사시는 저희 국회의원들도 소비쿠폰이 됐든 전 국민 보조금이 됐든 돈 막 풀어서 해 주자는 분들 많습니다. 야당인데, 우리 야당인데 우리가 왜 여당처럼 나라 곳간 걱정해야 됩니까? 저는 한편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 곳간 걱정은 여당이 하셔야지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곳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1200조로 우리 국가 부채 늘려 놨잖아요. 그런데 제가 충격 받았지요. 총리후보자가 우리 한 해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국가 부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러니까 이분들이 돈을 막 퍼 주자고 그러는구나'. 국가경제가 기본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 도대체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민주당 의원님들도 다 경제학 전공하시고 박사학위 받으시고 정부에서 높게 계시고 한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왜 침묵하십니까? 우리가 남미로 가면……

(「방송법은 다 끝나셨어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이 얘기가 방송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강행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송법, 노동법 개악안, 상법 개악안은 민주노총의 하명법입니다. 그 기저에 방송법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엉뚱한 거 많이 하면요 방송국들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언론사 굉장히 신경 쓰이시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 폭정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막갈 겁니다. 지금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맞습니까? 저희를 향해서 무슨 '내란이다' 이런 얘기 자꾸 하시는데……

(「내란을 부정해요?」 하는 의원 있음)

예,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수사를 받을 것은 받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적어도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이시라면 그렇게 함부로 동료 의원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여기는 여야 관계가 아니다', '악수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딸들만 좋아하실 겁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그렇게 간단합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하실지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밀어붙이시고 있는 이 법안들이, 정말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장내 소란)

제가 참 마음이 짠합니다. 마음이 짠합니다. 저는 적어도 170석 넘는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이,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이,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집권 여당이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내란 아니면 내란몰이 아니면 이 정국을 이끌어 갈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 놓아서 외쳐도 여러분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당이시잖아요. 자신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못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법 마음대로 다 통과시키시잖아요.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인사 다 하시잖아요. 국회, 저희에게 토론도 안 주고 토론 종결시키시잖아요. 절차 무시하잖아요. 마음대로 특검 하시잖아요. 하세요. 자신이 없습니까? 그렇게 다 하시면 다만 좀 겸손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입만 열면 동료 의원 눈앞에 두고 '내란당, 내란당'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품격입니까? 자신감 가지세요. 여러분들, 적어도 앞으로 몇 년간은 하시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세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역사의 평가가 뒤따를 것이고 국민들의 평가가 뒤따를 거라는 것만 가슴에 담으시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큰소리 내시더라도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마음속 깊이 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맞는가, 우리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집권 여당이 맞는가, 이게 지금 맞는 길인가 한 번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열렬하게 지지하시는 지지자들 많은 거 잘 압니다. 그분들 말만 듣지 마시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과거에 야당들 해 보셨지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렇게라도 목소리 높입니다. 외칩니다. 왜? 이것 외치면 뭐 합니까? 24시간 지나면 토론 종결될 것이고 거부권이라는 것도 없잖아요, 이제. 바로 통과 아닙니까? 제가 국민들에게 이런 얘기를 뭣 하러 합니까? 야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되는 길로 가는 것을, 그래도 여러분들 밉지만 할 말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허영 의원님, 김현 의원님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또 악수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 악수 안 하더라도 악수하고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토론 안 할래. 우리 마음대로 할래' 이거는 하지 말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국회에서, 세비 받고 나와서 국민들에게 너무 면목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사정이 어렵지만 해야 될 일을 해야지요. 이렇게 대한민국 방송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겠다는 방송법을 앞에 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방송법이 대한민국의 헌정체제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판례를 몇 가지 좀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시는데 판례까지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해서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 4월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시의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해서 항의한 사건 잘들 아실 겁니다. 사건의 개요가 뭐냐 하면요……

(「국민의힘이……」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민주당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전화로 항의하고 비판적 보도 중단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방송법 제4조 2항—제가 조금

전에 방송법 4조 2항 말씀드렸지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입니다. 방송법 제4조에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위반 혐의로 기소되어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방송법 4조 2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이 이루어졌고 또 헌법소원까지 갔습니다.

여기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 하면 이 방송법 제4조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판례를 제가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그때 일어난 일을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드리겠습니다. 세월호의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박근혜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때 당시 공영방송이었던 KBS도 연일 비판적인 방송을 이어 갔습니다. 그러자 당시에 청와대 홍보수석을 했던 저희 당의 이정현 전 대표가, 당시에 청와대 홍보수석이었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 번만 봐주소. 이거 대통령이 보시는데 나도 죽을 지경이에요. 좀 살살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잘 아시지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까지 갔는데, 헌법재판소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판정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9인 전원일치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은 제21조 1항에서…… 자, 잘 들으세요. '헌법은 제2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방송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 중 하나로 인정된다. 방송 자유의 내용으로는 방송설립의 자유, 방송운영의 자유, 방송편성의 자유'라고 그랬습니다. '방송편성의 자유'라고 규정하여, '그중 방송편성의 자유야말로 방송 자유의 핵심이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당시에 판시를 했어요, 2014년에.

방송편성의 자유야말로 언론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다.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평소에 잘 알고 있던 보도책임자에게 전화해서 '우리 너무 힘드니까 조금만 봐주세요'라고 인간적으로 호소한 것이 방송편성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9인 전원일치로.

그래서 '이것은 방송 주체가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언론적 과제나 방식, 즉 방송프로그램의 선정, 내용·형식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방송법상으로는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이 편성위원회 이것 정면으로 다 위배하시는 겁니다. 다 위배하시는 거예요. 편성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방송사 편성의 자유를 침해하시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도에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방송 주체가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언론적 과제나 방식, 즉 방송프로그램의 선정, 내용·형식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요 뉴스 보신 분들 잘 알겠지만 뉴스는 여러 가지—흔히 얘기하는 방송사 언어로—꼭지를 다룹니다. '오늘은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런데 대통령실의 관계자라든지 홍보수석이라든지 대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평소에 안면이 있는 보도국장이나 보도본부장을 통해서 '그것 좀 밑으로 내려 주세요. 우리가 톱으로 나가면 너무 힘듭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자꾸 반발하시는데 그런 얘기 정말 민주당 의원들 잘하십니다. 많이 하셨어요, 그런 얘기.

그런데 이게 세월호 사건 때 문제가 돼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홍보수석이 방송사 국장에게 보도 수위 좀 낮춰 달라고 부탁한 것이 유죄라고 하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든 법안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것은 뉴스의 꼭지 한두 개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민주당이 만든 방송법의 방송 편성위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방송프로그램의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에 관한 사항, 시청자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방송편성규약에 정하는 사항.

제가 말씀드린 다섯 번째 '그 밖에 방송편성규약에 정하는 사항', 전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특검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듯이 방송국의 편성에 관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여러분들이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합니까? 방송 주체가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언론적 과제나 방식, 즉 방송프로그램의 선정, 내용 및 형식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하시는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방송법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지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러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고 누구도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 만들어 가지고 규제나 간섭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헌법재판소가 법에 따르지 않고는 규제나 간섭 못 한다고 그러니까 법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지금 간섭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저희 당이 규제나 간섭하라고 이것 만드신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저희가 간섭하라고 이 법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규제나 간섭하시기 위해서 이 법 만든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세상사의 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법에 보장된 편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게 저희 좋으라고 만든 법안은 아닐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홍보수석이 방송사 국장에게 '좀 잘 봐주세요'라고 전화한 것에 대해서 심각한 방송편성의 침해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 사건 간섭 금지 조항은 누구든지 간섭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므로 이 행위의 주체는 가리지 아니한다. 그러나 일차적으로—일차적으로요—국가권력을 가리키고 나아가 다양한 사회세력을 모두 포괄할 것이다. 여기서 다양한 사회세력이란 정당과 같은 정치권력은 물론 시민단체, 노동조합—언론노조 및 기타 노조—그리고 대기업이나 광고주 등을 포함하여 방송편성의 자유에 영향을 끼칠 만한 모든 존재를 가리킨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일차적으로는 국가권력,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국가권력을 얘기하지만 이 간섭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대통령실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정치세력—정당, 야당—시민단체, 노동조합, 여기에 특별히 언론노조를 강조해서 지금 넣어 놨습니다. 헌법

재판소가요. 이런 것으로부터 편성의 독립을 간섭받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낸 법안에 편성위원회 어떻게 구성하느냐? 방송사가 소속 구성원 중 5명을 추천합니다, 편성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그러니까 회사의 사주가, 오너가 5명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보도본부장, 제작본부장, 편성본부장, 영업·경영본부장 뭐 이런 분들이 들어가겠지요. 또 5명은 취재, 중요합니다,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5인을 추천합니다.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종사자는 누구입니까? 종사자가 혹시 사장님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요. 대주주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겠지요. 이 종사자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노동조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10명으로 위원을 구성하는데 이 종사자 대표가 그 절반입니다. 그 종사자 대표 절반은 제가 보건대는 지금의 구조에서는 민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노조의 노동조합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방송사의 편성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절반이 들어온다고요? 저는 그 노동조합이 정말로 이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순수하게 대변할 수 있는 우리 직종의 대표자라면 충분히 그것 또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편성위원회를요 이렇게 슬쩍 속여 놓는다고…… 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5인을 추천하는데 순수하게 바라보면 종사자 대표라고 그러니까 보도국장일 수도 있겠다, 보도본부장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그거는 회사에서 사장님이 보실 때 국장, 본부장이 대표자인 것이고 종사자들이 볼 때는 노동조합장이 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이 편성위원회가 편성의 전반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시민단체, 노동조합으로부터의 간섭도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민단체, 특히 노동조합(언론노조), 대기업, 광고주를 포함하여 방송편성의 자유에 영향을 끼칠 만한 모든 존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성위원회는 노골적으로 노동조합이 사실상 회사의 이사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사 5명을 뽑을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거는 종사자라는 말을 이렇게 해 놨지만 실제로 이건 노동조합이 편성위원회 5명 추천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도에 이렇게 판결했어요, 이거 위헌이라고.

또 보겠습니다.

‘간섭이라는 행위의 다양한 양태를 세부적으로 모두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 더구나 방송의 자유를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에 비추어, 방송의 자유를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에 비추어 방송에 대한 간섭의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끊임없이 등장할 것’.

진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대단합니다. 인정합니다. 2014년에 이미 대한민국의 방송의 자유를, 민주적 여론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는데 방송에 대한 간섭의 방식이 시대에 따라서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끊임없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것 쓴 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권 바뀌면 노동조합 동원해서 시위하고 꽹과리 치고 이사 쫓아내고 사장 바꾸고, 이것 잘 안 되니까 이제는 아예 법을 바꿔서 방송사 영원히 우리 편 만들겠다고 하는 그것이 이 법의 본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 주장인 줄 알았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미 2014년에 본인들의 판결문에 써 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방송에 대한 간섭의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끊임없이 등장할 것이므로 행위의 양태를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입법 취지에 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다 열어 놓은 것이에요. 이를테면 청와대 홍보수석이 보도국장에게 전화하고 뭐 이런 걸 세세하게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의 방송장악 시도를 할지 모르므로 다 열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편성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사의 편집에 관여하고 보도에 관여하고 보도책임자를 마음대로 임명하고 시청자위원을 편성위원회가 임명을 합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이것 아마 제가 하는 이 말이 국회에서만 떠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들을 거예요.

물론 방송법 이렇게 만드는 것을 정말로 눈물겹게 기다리시는 분들은 저보고 미친놈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편성위원회 이것 위헌입니다, 위헌. 위헌이라고 이미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렸어요.

여섯 번째, 방송법 4조 2항 심판대상 조항은 1963년 방송법 제정 이래 현행법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지되어 온 것으로서 방송이 국가권력 등으로부터 간섭받은 과거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고 그럽니다.

방송이 국가권력 등으로부터 간섭받은 적이 참 많았지요. 방송이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받았던 우리의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 아픈 과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저 같은 방송인입니다.

방송인은요, 언론인은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정치인들로부터 전화 한 통화 받았을 때, 정치인들로부터 읍소가 됐든 뭐가 됐든 한마디 들으면 굉장히 위축됩니다. 언론인이 뭐 힘이 있습니까? 언론인의 힘은 그냥 펜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사에서 나오는 거지, 정치인들이 '당신 그러면 안 돼'라고 하면 굉장히 위축됩니다.

더구나 군부독재 시절에 얼마나 이런 게 심했습니까? 80년대 언론 통폐합이 돼서 언론사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언론인들이 강제로 이직했습니다. 많은 언론인들이 언론 독립을, 언론의 자유를 외치다가 해고됐습니다. 그분들이 겪어 온 고난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조차도 지금은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 들어 보세요. 그분들이, 정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아닌 일반적인 언론인들이 과연 이 편성위원회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면 '아, 이제 드디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방송국이 등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방송은, 우리나라 언론은 정치권력과 끊임없이 싸워 왔기 때문에 그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우리 언론은 스스로를,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스스로의 주체성을 확립해

온 곳이 언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언론은 여러분들한테 좀 불편한 언론이 좋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 잘 듣는 언론 만든다고 해 가지고 언론 발전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 잘 듣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 편성위원회 통해 가지고, 노조 통해 가지고……

저는 이 정도의 편성위원회는 아니지만 노조의 간섭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방송국에 다니면서 많이 봐 왔습니다. 뉴스 제작의 독립성이 침해되는 것,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방송 앵커 생활을 하면서 뉴스 제작의 독립성을 침해받는 현장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뉴스 제작과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위원회를 만들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도 감당 못 하실 겁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의 얘기를 듣고 이런 법을 만드셨는지, 누구의 얘기를 듣고 이런 구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100% 민주노총의 요청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그래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존경하는 민주당 방송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들, 저는 굉장히 이게 어떤 폐단을 가져올 것인지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것 굉장히 위험한 거지요.

대한민국 방송종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민주노총 말고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방송사, 평균적인 보통의 방송사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시면 이 법이 얼마나 위험한 법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일곱 번째,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입니다.

‘방송의 자유를 비롯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초인바 국가권력은 물론 정당, 노동조합, 광고주 등 사회의 여러 세력이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방송편성에 개입하여 자신들의 주장과 경향성을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여론화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 의사가 왜곡되고 우리 사회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어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

저는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말 의미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국가권력은 물론 정당, 노동조합, 광고주 등 사회의 여러 세력이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방송편성에 관여하면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법률에 정해 놓으면 괜찮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세상이, 노동조합 풀어서 막무가내로 사장 내쫓고 시위하고 파업하고 이것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KBS, MBC가 파업한다고 일반 국민들 관심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KBS의 방송이 멈춰 서고 MBC가 멈춰 서면 국민들이, 왜 방송을 멈추려고 하느냐라는 국민들의 비판이 있어야지 노동조합의 정치적 구호가 힘을 받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노동조합이 아무리 ‘누구 물러가라’ 꽹과리 치고 소리 지르고 떼쓰고 드러누워도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성위원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정해진 절차,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합법적으로 영원히 대한민국 방송국, 공영방송도 아니고 9개, KBS MBC EBS SBS YTN 연합뉴스TV TV조선 채널A JTBC MBN, 제도적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주무르

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법안이. 편성위원회라는 것 만들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겠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 여덟 번째, '방송의 역할과 영향력이 큰 만큼 국가권력 혹은 정치권력, 기타 사회세력들이 방송을 장악하고 이용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물론, 방송 또한 그러한 권력들에 편승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실제 우리 방송법의 역사에서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달콤하지요. 저도 정치인이 되고 나니까 언론에서 저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는지, 저를 언론이 어떻게 감시하는지, 저의 한마디 한마디를 언론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반성도 합니다. 과거에 제가 언론인으로 살았을 때 정말 저의 말 한마디 한마디, 저의 세 치 혀가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줬겠구나, 의도하지 않았던 상처를 줬겠구나, 반성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도 저는 그것이 누구의 지시나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언론인으로서 제 소신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누구의 간섭에 굴복해서 그들에게 맞는 말을 했거나 그렇다면 정말로 부끄러웠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7년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가 SBS에서 TV조선으로 옮겼습니다. 가서 보니까 'TV조선 문 닫게 할 거야', 민주당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언론사를 어떻게 문을 닫게 합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재허가라는 촘촘한 올가미를 방송국 경영에 곳곳에 심어 놓아서 정말로 잘못하면 재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속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앵커를 하지 않았습니까? TV조선의 메인뉴스 9시 뉴스 앵커를 했는데 저희 재허가 조건에 어떤 것이 있냐 하면 '보도 방송의 진행자가 단 한 번 법정제재를 맞으면 진행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소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도 진행자가 한 번 실수했다고 방송 진행자 자리에서 물러가게 만듭니까? 이게 민주주의가 맞습니까? 저는 그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법정제재 받으면 앵커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6년 동안 제가 그 자리를 잘 지키긴 했습니다만 정말로 이 방송법이라는, 방송 허가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이게 무슨 법으로 하나를 규정해 놓으면요 그 법의 잘못된 규정 때문에 생기는 파생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 편성위원회라는 것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하나 지적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연쇄적인 효과가 일어나서 사실상 방송국의 근간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정치권력이 방송을 또는 언론을 장악해서 내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유혹이 정말 클 수 있겠다.

특정 방송국이 내 편을 들어주면 좋겠지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저희에게 우호적인 언론이 있고 또 적대적인 언론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나 저는 적어도 언론인 출신 입장에서 정치권력이 방송에 지나치게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께서 어제 얘기한 언론개혁이 도대체 뭐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법안이 통과하는 것이 언론개혁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추석까지 기다립니까, 내일이면 통과될 텐데.

언론개혁,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개혁은요 누군가의 껍데기를 벗기는 일입니다. 가죽을 벗기면요 피가 흐르고 그 피에서 새살이 돋아납니다. 더 아름다운 새살이 돋아나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방송국 9개 만드는 것, 저는 결코 그 개혁이라는 표현에 동의하기도 어렵고 또 제가 앞으로 입이 있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개혁에 끊임없이 반대 목소리를 낼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방송국에 31년을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낸 이 법안이 얼마나 불순한 법안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비록 과기정통위는 아니지만 법사위원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법안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재고해 주시라고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계시는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도 다 방송 출연해 가지고, 방송국에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그 방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만큼은 모르시더라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패널 나오다가 잘려 보기도 하시고 또 새로운 패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들어왔지?' 이런 느낌적인 느낌도 항상 가지시고, 그것은 아마 굉장히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요 저는 이 편성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방송 출연자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고 또 방송프로그램의 개폐에 대해서 너무나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조가 그렇습니다. 방송편성규약에서 정하는, 그러니까 편성위원회가 결정하는 모든 사항을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국의 이사회는 왜 필요합니까? 민영방송에서 방송국 이사회가 그 회사의, 기업의 경영을 책임지고 그 경영이 잘못됐을 때 국가로부터 재허가를 받고, 또 상장된 회사라면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시청률로 평가받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그 프로그램 폭삭 망하는데 편성위원회는 정작 '나는 몰라. 나는 아무 책임이 없어'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시면 도대체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것 안 됩니다.

다들 나가셔서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의 결정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이…… 왜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까. 이게 민주당에게는 도리어 정말로 중요한 두 가지 조항이기 때문에 정말 잘 연구해서 만드셨다는 것 제가 인정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민주당이 원했던 것들, 방송장악이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제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로 잘 연구해서 이 법안을 만들었다는 사실 동의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방송계를 장악하면 어떤 폐단이 발생하는가? 저는 대한민국의 방송이 망가지기 시작한, 정치권력과 유착되어서 '내가 권력의 후견인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새로운 정권을 창출할 수 있겠구나'라고 대한민국의 방송국이 터무니없는 욕심을 품은 것은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파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PD수첩’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소가 주저앉고 광우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울부짖는 그 장면, 나중에 광우병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지요. 그런데 당시 이 방송을 제작한 MBC는 이명박 정부 시작하자마자 광우병 소를 주저앉힌 것이 아니고 이명박 정부를 무릎 꿇렸습니다. 적어도 그 이전에는 방송사가 이렇게 방송이 무너질 정도로, 현 정부가 무너질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했다라고 생각한 적은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MBC가 한 것이 바로 정권을 주저앉히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방송을 제작한 분들이 양심을 가지고, 저널리스트로서의 양심을 가졌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다는 것, 거짓이지요. 거기에 등장하는 아레사 빈슨이라는 여성이 광우병에 걸려서 사망했다, 거짓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인 유전자가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 거짓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재미를 보고 나니까 방송사들이 ‘내가 정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정권을 다시 세울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권력과의 유착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민주노총의 영향력입니다. 제가 90년대에 방송국 다닐 때만 해도 방송국의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조합이 아니고 그 회사의 단위노동조합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론노조가 만들어지고 방송사의 노동조합이 전부 다 민주노총으로 편입이 되면서 실제로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민주노총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방송국 사장이 되고 지금은 민주노총이 장악한 회사에서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은 으레 언론노조 노동조합장 또는 공방위원장 이런 출신이 아니면 방송국에서 출세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는 방송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민주노총 언론노조 출신 위원장 신학림, 대장동 피의자 김만배가 만든 가짜뉴스가 대선 하루 전에 그대로 종합편성채널 JTBC에 방송되면서 방송의 엄청난 영향력을, 대선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던 이런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정말로 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이런 법을 가지고 방송을 옥죄기 위한 시도는 우리 정치가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방송을 또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해 줘야 될 것들은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선거 치를 때마다 방송국 찾아다니면서 항의하고 방송국 비난하고, 이제 지겹지 않습니까? 방송이 방송의 길을 갈 수 있게 그냥 놓아주시는 것이 우리 정치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편성위원회, 사장추천위원회가 법으로 발효가 된다면, 물론 저희 국민의힘이 어떻게 숫자로 막겠습니까? 그대로 갈 겁니다. 그러나 이 편성위원회와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반목과 갈등이 반복될 것이고, 특히 사장추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민영방송의 사장을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합의해야 민영방송, YTN 같은 경우에는 사장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영방송 사장을 노동조합이 합의해 주지 않아서 장기간의 경영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 그 회사의 경영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러면 합의해

주면 되지’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업의 경영이라는 것이 노동조합이 원하는 대로만 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 것이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나름대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조합이 방송사업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낸 이 법안을 보면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편성위원회를 장악하고 사장추천위원회도 장악해서 실제로 노동조합이 그 회사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입니다. 그 노동조합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민주노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지부 노동조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방송권력이 왜 방송장악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몇 번의 선거 과정에서 방송권력이 선거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온한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신학림·김만배의 불법 녹취 보도도 마찬가지고 또 지난 서울시장선거에서 소위 얘기하는 생태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가 방송이 이런 특정 정파의 영향력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방송 구조를 만들면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런 시비와 방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방송이 그렇게 되면요 방송을 누가 믿겠습니까? 방송을 믿지 않습니다. 공영방송도 이제는 믿지 못할 존재로 전락하는 겁니다. 종합편성채널, 믿지 못할 방송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보도전문채널, 믿지 못할 방송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면 믿지 못할 방송, 방송의 생명이 끊어지는 거지요.

방송의 생명은 신뢰 아닙니까? 그 신뢰받지 못하는 방송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도대체 그 방송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정치권이 방송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신뢰받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방송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방송을 친민주당 방송을 만드신다고요? 독재국가로 가자는 뜻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독재국가로 가는, 과거 유럽의 독재국가들, 남미의 독재국가들 이런 나라들에서 반드시 하는 것이 언론장악입니다. 정해진 코스지요, 사법부 장악, 언론장악.

입법부는 국민들이 선택해서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니까 마음대로 못 할 겁니다. 그러나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나면 그다음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권력에 대한 유혹은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는 것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정청래 대표께서 ‘언론·사법개혁 추석 전까지 마무리하겠다’,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독재화의 완성을 추석 전에 하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자리를 비우셨습니다만 저희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입니다. 독재국가의 국회의원, 독재국가의 거수기 노릇을 저는 민주당이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 개혁도 중요합니다만 이 언론 문제만큼은 도대체 다른 위원회에서 만든 것이니까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자 이렇게 그냥 두시면 정말 이 법은 민주당에게도,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우리 방송사를 위해서도, 방송종사자를 위해서도, 그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이 법은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헌법재판소의 이 여덟 가지 항목의 판결문을 보면서, 여기에서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경고하는 헌법적 경고는 어떤 것들인가.

제가 생각을 하건대 이렇습니다. 방송편성의 자유를 포함하는 방송의 자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송과 언론의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방송은 편성의 자유고 신문은 편집의 자유입니다. 이 편성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을 만드신다면 이것은 정말로 방송의 자유를 그대로 짓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편성의 자유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그 자유의 주체는 허가를 받아 방송편성의 권한과 책임을 지닌 방송사다, 그 방송편성의 자유의 주체는 허가를 받아서 방송편성의 권한과 책임을 지닌 방송사입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의 이사회가 경영의 감독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겁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가 그래서 구성이 되는 것이고 민영방송의 이사회도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공영방송 이사회가 방송편성, 방송 자유의 최종적인 책임자라고 대한민국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고 헌법이 그 취지를 보장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만든 법안을 보면 사실상 방송사 이사회의 기능을 편성위원회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회가 민영방송의 사장을 뽑는 것은 상법에도 보장된 당연한 권리인데 이 사장 선출의 자유를 민영방송으로부터 박탈하는 법안, 저는 이 법안은 반드시 위헌심판 대상에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위헌적인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 방송법 개정을 개혁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로 포함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나 국민들이 보는 측면에서는 정치권력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고 간섭하기 쉬운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법을 만든다, 여야 합의 없는 국민적인 공감을 받지 못하는 어떤 법을 만든다, 그것 자체가 이미 방송의 독립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방송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외부 세력에 국가권력과 다양한 사회세력이 있고 사회세력에는 정당, 시민단체, 노동조합, 대기업, 광고주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당이 무슨 지고지순한, 방송사의 언론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특정 정파가 주도해서 만든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방송국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고 싶은 유혹을 가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바꾸고 싶어 할 때는 정말로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공감대를 모으고 여야 합의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법안을 만들 때 그것이 바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방송국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 외부 세력의 간섭으로부터 방송사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 방송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외부 세력으로 정당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당을 대단히 무슨 지고지순한 법안을 만들기 위한, 방송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어떤 주체적인 세력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 역시 정당이나 권력기관이나 또는 상업주의나 노동조합은 언제든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고 싶은 유혹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안을 만들 때는 정말로 신중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헌법의 명령에만 비추어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이 방송법은 정말로 반헌법적인 법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영방송의 이사회 변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KBS 이사회는 11명의 이사로 구성이 됩니다. 이 11명의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요. EBS는 9명의 이사가 있습니다. 이 9명의 EBS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합니다. MBC도 9명의 이사가 있습니다. 방문진이라 그러지요. 방송문화진흥회 9명의 이사, 이사장을 포함하는데 이것 역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을 합니다. 공영방송 KBS만 대통령이 임명을 할 뿐이고 EBS와 MBC는 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겠습니다. KBS는 5개의 추천 그룹이 총 15명을 추천합니다. 여기에서 방통위는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임명을 제청합니다. 임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통위원회의 역할이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이 방통위원회의 역할을 사라지게 한 것에도 대단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통위원회 문제는 이 기구의 존속 자체를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단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간에 이렇게 법에서 변칙적으로, 분명히 방송사들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렇게 중간에 건너뛰어서 사실상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게 만드는 것, 이 법안도 굉장히 불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5개의 추천 그룹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국회 교섭단체가 6명을 추천합니다. 국회 교섭단체라고 하면 여야의 의석 배분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구도로 계산을 해 보면 민주당이 4명, 국민의힘이 2명을 추천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KBS 시청자위원회가 2명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KBS 임직원의 과반수가, 그러니까 KBS의 임직원들—이 경우에는 아마 노동조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3명을 추천합니다. 방송·미디어학회 3개의 합의로 2명을 추천합니다. 변호사단체에서 1명씩을 추천을 합니다.

여기에서 추천이 되면 방통위는 무조건 임명을 제청을 해야 되고 대통령은 14일 이내에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경과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 임명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6명 중에 민주당이 4명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KBS 시청자위원회가 또 2명을 추천합니다. KBS 노조에서 3명을 추천합니다. 방송·미디어학회는—상당히 친민주당 성향의 방송·미디어학회에서 추천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2명입니다. 그러면 KBS 시청자위원회를 제외하더라도 국회 민주당이 4명, KBS 노조가 3명, 7명. 방송·미디어학회 2명, 9명. 변호사단체 2명. 11명까지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변호사단체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명은 친민주당 성향의 KBS 인사로 바로 바뀔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KBS 사장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임기가 3년입니다. 작년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아직도 2년여의 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 법안을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 KBS 사장을 제도적으로 쫓아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지금, 즉 3개월 뒤가 아니라 현행 방송사 사장들의 임기는 보장을 하고 그다음에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왜 이렇게 급합니까? 저는 민주당의 이런 조급함에서 이 법안이 어떤 불순함을 담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EBS는 9명의 이사를 가지고 있는데 7개의 추천 그룹이 총 13명을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MBC는 5개의 추천 그룹이 13명을 임명을 하게 돼 있는데 추천 그룹과 추천 방식은 KBS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KBS 이사회, 방문진 이사회, EBS 이사회가 바뀐다면 지금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은 거의 100% 민주당 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법은 전혀 객관적이지도 않고, 물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 공정성은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공정성은 전혀 담보되어 있지 못한, 저희 방송계에서는 이 추천 몫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정치권의 후견으로부터 벗어나서 방송국을 국민의 손으로 돌려주자고 하는 분들이 왜 정당 추천 몫을 6명씩이나 가져가야 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15명 중에 국회가 6명을 왜, 실질적인 방송사 사장을 결정하는 이사회의 6명의 이사를 왜 국회가 다시 가져갑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장하시고 있는 말씀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호사단체가 도대체 방송국의 경영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변의 막강한 영향력을 여기에 개입시키려고 하는 것 이상은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하겠습니다. 방송사 사장을 추천받는 데 왜 변호사단체가 개입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KBS 임직원의 과반수가 3명을 추천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KBS 공영방송 사장 뽑는 데 노동조합이 이사를 추천합니까? 저는 이것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KBS 이사회 구성에서부터 이것은 심각한 실질적 공정성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 법안이.

여러분들 굉장히 깊게 생각하셨지만 이 깊은 생각이 방송사를 위한, 대한민국의 방송 발전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는 이런 것을 했다. 민변, 민주노총, 보고 있습니다. EBS, MBC 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장을 뽑을 때는 영구히 친민주당 성향의, 이 세 방송국은 친민주당 성향의 방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체계상으로도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KBS 이사회 구성권은, 인사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KBS 이사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사회의 구성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함부로 막 흐트러뜨려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이사로 하는 것은 법체계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통위가 KBS 이사 추천에 관한 심의·의결권을 현재로서는 이 법안에 따르면 부인하고 있는데 그러면 방통위는 도대체 현재 있는 기구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인가. 이것은 방통위의 기능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무작정 방통위를, 지금 이 법을 당장 바꾼다고 하더라도 방통위의 추천권을 그냥 둔다면 전 정부에서 임명된 방통위원장이 이것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봉쇄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법체계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방통위원장은 아무것도 못 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법체계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KBS의 문제만을 두고 본다면 대통령도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KBS

사장 임명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도 사실상 권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사회에서 추천을 하면 방통위는 무조건 임명제청을 해야 되고, 추천되면 방통위는 무조건 임명제청을 해야 되고 대통령은 14일 안에 임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14일 안에 임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임명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임명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 행정권도 무력화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체계에 대한 연구 없이 그냥 방통위를 중간에서 배제하기 위해 가지고 마구잡이로 이런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추천 그룹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도 저희가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KBS는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회 구성은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사회 이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에 의해 가지고 전혀 선출되지 않은 사적인 주체가,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변호사단체다. 이런 사적인 단체에서 어떻게 공영방송의 사장·이사 추천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객관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사회가 관행으로 오랫동안 가져왔던 어떤 주관적 정당성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변호사단체가 과연 객관적으로 사람을 뽑아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국민적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방송국 이사 선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무차별하게 그냥 KBS 이사로 무조건 임명하게 만드는 이런 법안을 가지고 과연 방송국의, 그것도 국민들의 정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KBS의 사장으로 임명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민주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추천권이,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통령에게 실질적으로 방송사 사장…… 공영방송 KBS 사장 임명권을 방송사 사장이……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통위원회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대통령은 추천을 받으면 무조건 임명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로 법안을 만들어 놓으면 대통령의 인사권도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아무 권한이 없지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라는 의문도 일부 가집니다. 사실은 이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알았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별로 썩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을 만든 이유가 저는 민주노총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면 이런 법안이 만들어졌을 리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하더라도 임명을 안 하면 14일이 지나면 임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어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비토할 수 있는 권한이라도 줘야지 행정기구로서의 대통령,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을 존중하는 것이 되는데 여기는 대통령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교섭단체가 6명 이걸 나누어 가지게 되면 이 6명의 KBS 이사를 둘러싸

고 저는 사회적 갈등이 영원히 종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당이 됐든지 간에 국회가 이 6명의 이사임명권을 가지고 언제든지 KBS 이사회 구성을 지연시킬 수도 있고, 지난번에 민주당과 저희가 극단적인 대립을 할 때 방통위원회가 사실상 거의 형해화됐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도 저희가 굉장히 큰 갈등을 겪었던 것처럼 정치권이 방송국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사 선출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결국은 특별다수로 KBS의 사장을 뽑는 그 절차 자체가 무력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KBS, 특히 공영방송의 이사 선출 방식에, 국회가 15명의 6명이면 거의 3분의 1이 넘지 않습니까? 3분의 1이 넘는 이사 추천권을 국회가 가지는 이런 방식도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대립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송을 무슨 국민의 손으로 돌려줍니까, 노동조합이 3명 추천하고 변호사단체가 2명 추천하고 국회에서 6명을 추천하는데. 이게 과연 객관적으로 공정한 방송 독립, 편성의 독립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제가 경험한 것에 따르면 어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만 그 조직을 마비시키려고 하면 얼마든지 마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뽑는 인물들이 정말로 대한민국 방송의 발전 그리고 KBS의 발전을 위해서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는 이상 이런 구조를 가지고는 KBS가 국민들이 신뢰하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민주적 책임성을 묻기 위한 국회의 개입은 이렇게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방송국이,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 방송국의 끝없는 갈등과 내부 분쟁 그리고 정치권과의 갈등의 모습을 지켜봤는데 국회가 거의 3분의 1이 넘는 이사 추천권을 가지는 이런 것은……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출 권력이 KBS 이사회 구성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유혹에서 이제 우리 정치권이 벗어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국회가 KBS의 경영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역할에 머물러야지 국회가 KBS 사장 선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다수의 이사를, KBS·MBC·EBS 이사 구성에 국회가 참여하는 것은 저는 적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회가 한다고 하더라도 교섭단체가 합의하거나 또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성향에 매우 가까운 인사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어떤 제도적 보완, 그러니까 교섭단체 간의 합의라든지 또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절대다수제 같은 것을 도입을 해 가지고 피추천인을 결정하도록 해야지 방송국의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다. 민주당이 4명을 추천하고 국민의힘이 2명을 추천하고 이렇게 되면 그 추천된 이사들이 KBS 이사회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쟁을 하고 또 어느 한쪽에서 더 선호하는 인물들이 KBS 이사가 됐을 경우에 대통령이 과연 그 사람을 제대로 임명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방식을 가지고는 KBS 이사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민주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KBS의 이사회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KBS 방송편성규약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편성규약은 방송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KBS, EBS, MBC 같은 방송사 등의 내부 규약인데 이게 전혀 무관한, KBS 내부 규약을 결정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

는 사람들이 조직의 인사에 대한 내용을 규율하는 것은 이 규약의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성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업의 제품 생산을 결정하는 총체적인 결정의 기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국 언론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을 규율하는 이 편성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과연 이렇게 외부인들이 여기에 개입해서, 편성의 자유에 개입을 했을 경우에 과연 올바르게 방송국이 운영될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은 정말로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편성규약이라는 것은 지금도 편성위원회가 있는 회사들을 보면 방송사 내부적으로 편성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편성위원회 의견을 방송제작에 참조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KBS 같은 기관의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아주 객관적이고 법령에 의해서 KBS의 편성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영방송의 이사회는 방송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며, 방송법 46조에 공영방송의 이사회는 방송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며, 사장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집행하는 최고책임자로서 자율적인 방송편성권의 실질적인 주체다 이렇게 방송법 46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가 선출한 사장이 자율적인 방송편성권의 실질적인 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실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개입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객관적으로 구성을 하고 그 이사회에서 뽑힌 방송사 사장이 방송 내 편성권의 실질적인 주체라는 것을 우리 법체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국가권력이나 다양한 사회세력의 간섭으로부터 방송사의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방송의 자유는 방송편성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헌법의 명령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방송편성권의 실질적인 주체인 사장의 선임 과정에 다양한 사회세력, 그러니까 100명 이상의 다양한 사회세력을 직접 끌어들여서 복수 추천을 하게 하고 이사회는 그중에서 임명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방송편성권에 대한 사회세력의 간섭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문제가 됐을 경우 이것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청구가 됐고, 단지 전화를 걸어서 보도를 잘해 주기 바란다는 정도의 아주 가벼운 간섭도 어쨌든 우리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이 정말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는 방송편성권에 대한 사회세력의 간섭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허용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고의결기구 아니겠습니까? 그 책무 수행을 위해서 사장 임명에 관한 자율적 선택권을 갖는 것이 이른바 권한과 책임 일치의 원칙이라는 조직 원리에 부합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외부인들이 다수 참여하는 이런 기구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방송사 경영이 어떻게 되더라도 책임은 또 방송사의 기존 이사회가 다지게 하는 이런 것들은 어떤 조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책임과 권한은 반드시 일치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통념상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 방송법안을 보면 책임과 권한이 도무지 맞질 않습니다. 이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지 않고 과연 영리를 추구하는 민영방송, 특히 민영방송 같은 경우에 책임 없는 사람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어떻게 그 회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방송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주장하시는 공적 책무라는 것도 책임성을 가지지 못한 편성위원회가, 책임성을 전혀 부여받지 못한 사장이 어떻게 그 책임을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법체계라든지 헌법의 취지 어떤 것을 보더라도 방송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방송사업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현행 KBS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뽑힌 사장이 실질적인 책임자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법체계를 완전히 무시한 법안으로 우리 방송사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KBS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것이 바로 민영방송, 그러니까 KBS MBC SBS EBS와는 다르게 보도전문채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TN 같은 보도전문채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강제로 두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복잡한 설명을 제가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도대체 민간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민영방송에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방송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이 방송사를 사실상 국영화시키겠다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YTN이 지금의 YTN의 지배구조가 생길 때 지금 대주주가 수천억 원의 본인 자금을 투입해서 YTN을 인수를 했는데 그러면 YTN 인수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도대체 사장 임명도 하지 못하는, 사장 임명을 하지 못한다면 사장만 임명을 안 하겠습니까? 사장을 임명을 못 하면 언론사의 생리상 보도본부장도 임명 못 합니다. 제작본부장도 임명 못 합니다. 보도국장도 구성원들의 임명동의제가 있기 때문에 사장이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한 경영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기본적으로 상법상에도 전혀 맞지 않고 헌법의 기본 취지에도, 아무리 우리가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사장조차도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민영방송을 만들어서, 도대체 민영방송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발상을 하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민영방송의 사장추천위원회는 회사 측에서 5명의 위원을 선발을 하고 또 종업원 대표, 그러니까 노조가 되겠지요, 노동조합에서 5명을 추천하는데 이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없으면 사장을 추천 자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장의 공백이 경영상의 큰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노동조합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추천하지 않으면 그 사장을 임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반은 기업에게 사장 추천에 대한 권리를 준 것이 아니고 사실은 100% 노동조합에 사장 임명의 권리를 다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적어도 이 법안이 회사 측과 노동조합 측이 협의하도록 한다라든지 이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그래도 협의를 통해서 기업의 대주주가 원하는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립니다만 반드시 합의하도록 돼 있다, 합의 안 해 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대주주의 사장 선임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 언론사들이 정말로 좋은, 대한민국 방송국들이 정말로 좋은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K-컬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창작물은 자유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좋은 창작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보도채널이라고 하더라도, 보도채널의 경쟁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그것이 보도채널이라고 하더라도 자율이 기반되지 않으면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기업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과연 어떻게 민영기업의 사장 추천권까지 노동조합이 사실상 사장을 지명하게 만드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을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방송법 제4조는 1항에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방송편성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편성위원회를 강제로 만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방송법 제4조 1항에 천명하고 있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와 맞습니까? 전혀 법체계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그러니까 방송법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방송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을 하고 이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방송법이 천명하고 있는 방송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편성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에 대해서 마음대로 거의 무한대로, 방송편성규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의 무한대로 방송편성을 하게 간섭하고 개입할 수 있게 만드는 이 법안을 과연 어떻게 언론의 자유를 증진시키고 대한민국 방송의 발전을 위한 법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4항입니다. 방송법 4조 4항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그러니까 TV조선, 채널A, MBN, JTBC 같은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연합뉴스TV, YTN을 얘기하겠지요—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위원회라는 것이 강제가 되면 이런 방송편성규약이라는 것이, 적어도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방송편성규약의 제정이라는 것이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이것은 이 방송법 4항에 나와 있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서'라는 이 부분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겁니다. 의견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방송 편성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모든 것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개정법안은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자유에 의해서

보장받는 방송편성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함으로써 방송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제37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 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언론의 자유, 출판·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같은 언론의 자유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이 바로 이 국민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이라든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언론·출판·결사·집회의 자유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누려야 되고 보장되어야 하는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개정하고자 하는 이 방송법은 우리 이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방송종사자들이 자유롭게 제작·보도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보도책임자들이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는 권리, 방송책임자들이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권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위헌적인 요소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방송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방송의 자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방송의 자유는 방송편성의 자유라고 사실상 거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바로 이 편성위원회 설치에 이렇게 목을 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송편성의 자유를 빼앗겠다고 하는 것은 방송의 자유를 빼앗겠다는 것이고 또 자본주의국가에서 방송사업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사에서 근무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지, 그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어떤 주장을 담을 것인지 이런 것들은 제작자들의 완전한 자율에 맡겨져야 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국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법부에 어떤 판사의 자율적인 판결을 방해할 수 있는 판결심의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외부에 있는 어떤 정치적 색깔을 가지신 분들이 잔뜩 들어와서 그 판사의 판결을 이렇게 판결해라 저렇게 판결해라 한다고 하면 그 나라의 사법부가 올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방송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방송국 종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말로 절체절명의 과제이고 이것을 확보하지 못하면 방송의 자유를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지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송편성권을 방송사업자가 뺏기게 되면 뭐가 남느냐? 방송 편성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사업자한테 남는 것은 방송 편성위원회에 5명 추천하는 것, 그것도 5명을 본인들 마음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소속 구성원 중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속 구성원으로 한다고 하면, 대개 우리 방송국의 구조상 방송사 소속 구성원으로서 편성위원회 위원 5명을 한다고 하면 편성본부장, 보도본부장, 제작본부장, 경영본부장 뭐 이런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보도

본부장이라든지 제작본부장 이런 분들 가운데는 임명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내부 종사자는 2명 내지는 3명, 방송종사자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2명, 3명밖에 편성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편성위원회가 10명 가운데 6명 내지는 7명이 어떤 특정 정치, 정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또는 노동조합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민주노총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이런 편성위원회가 방송사에 구성되었을 경우에 도대체 이 방송사는 누구의 방송입니까?

여러분들, 국민의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구호인 것이지 민영방송은 민영방송 나름의 생존의 논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방송이라는 것은 방송의 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방송국의 편성권이라든지 프로그램 제작권이라든지 보도의 자율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규정할 수 있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로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송종사자들에게 이익이 되겠습니까, 기자들에게 이익이 되겠습니까, 피디들에게 이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 마음껏 만들지 못하게 하는 어떤 상위의 규율 제도가 하나 생기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방송국입니까? 저는 이것이 좀 비약해서 비유하자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인민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공식적인 기구를 다 통제하는 것과 같은, 그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면 방송국은 왜 운영을 합니까? 방송국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전부 노동조합과 또는 외부 정치세력과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는 분들이 방송국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고 하면 방송국을 왜 합니까? 그러면 이 방송국은 결국 제대로 경영이 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이 방송국이 생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일시적으로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보도 좀 해 주는 그런 방송국 하나 만들겠다고 우리 헌법에도 맞지 않고 우리 상법에도 맞지 않는 이런 방송국을, 민영 보도채널 방송국을 다 만들어 가지고 도대체 이 나라의 언론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미국에도 진보 성향을 표방하는 CNN이라는 보도전문채널이 있고 또 극도의 보수적인 성향을 표방하는 FOX TV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청률 경쟁을 합니다. 시청률 경쟁을 하는 것은 그 방송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FOX TV가 미국 보도채널 중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FOX TV를 장악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법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는 하겠다고 얘기하시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안 맞는 것이지요. FOX TV가 꼴 보기 싫다고 FOX TV의 경영에 간섭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를 저는 들어 보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이, 미국의 공화당이 CNN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CNN에 편성위원회를 만들어서 CNN의 보도를 본인들이 통제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정치권이 개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고도의 공영성이 필요한…… 미국으로 치면 3대 지상파방송도 그렇지 않지요. 왜? 민영방송이기 때문에. PBS라는 조그만 공영방송 그거 하나에 대해서만 국가기관이 통제하고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지, 그것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력이 미국 공영방송의 보도라든지 이런 것에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선토론회가 이루어질 때는 항상

미국 공영방송의 앵커가 대선토론회의 사회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도 그 작은 공영방송 하나 가지고 있지만 거기조차도 정치권력의 입김을 거의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정파적으로 무시무시하게 보수적인 성향의 방송을 하는 FOX TV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FOX TV를 국민에게 돌려주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이 누굽니까? 현대사회는 다원화된 사회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 여러분이 생각하는, 민주당이 생각하는 국민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YTN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YTN을 보는 것이고 TV조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TV조선을 보시는 거고 MBC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MBC를 보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그 방송사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저는 언론개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생각하는 언론개혁이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 10시간, 이번에 또 벌써 5시간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목에 피 터지게 얘기를 해도 도대체 이 언론개혁이라는 것을, 우리 편의 언론을 만드는 것이 언론개혁이라고 생각하는 이걸 저희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물론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이나 편성위원회 구성이 우리 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저한테 반박하지 마시고 방송국에 다니고 있는 지인분들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편성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장을 이렇게 뽑으려고 하는데’…… 방송국에 계시는 노조위원장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언론노조 노조위원장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민주당 의원님들 방송국에 다니고 있는 지인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 사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본부장도 계실 것이고 또 아니면 일반 프로그램 만드는 피디도 많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대체 방송국이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가.

저는 우리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기업에 계시던 분들 많이 와 계십니다. 물론 보도물이라든지 제작물이 공공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제품을 만드는 문제에까지 정치권력이 관여하는 것은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소비자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어떤 자동차를 살 것인가, 어떤 텔레비전을 살 것인가, 어떤 휴대폰을 살 것인가, 이것은 소비자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제는 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똑같은 성향을 가진 방송국 9개를 만들면 이것은 국가의 불행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이 방송법 개정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지금 방송가들의 움직임을 보면 적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YTN 사장이 벌써 사표를 냈습니다. 이 움직임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매우 입맛 맞는 보도를 하는 보도책임자가 들어설 것이고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사장님들이 들어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언론은 좀 껄끄러워야지 제맛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언론을 무서워할 것이고, 우리도 언론을 무서워합니다. 어떤 정치권력이든 언론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무서운 언론을 만드는 것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기본 중의 기본 아닙니까? 그게 어느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게 바로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국민을 위한 방송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국회의원 300명, 우리 편하자고 언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겠

다는 그런 생각은…… 저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저에게 이쁜 말 해 주는 언론, 고맙습니다. 저희에 대해서 좋은 얘기해 주시는 언론, 좋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저분들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쓴소리를 해 주는 것이 저희에게 맞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 청문회를 통해서 낙마한 분들 언론이 열심히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여러분들은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국민과 함께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법이 통과되고 이 법으로 우리 언론 지형이 바뀌고 난 다음에 했으면 그분들 다 장관으로 임명됐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민주당에게 좋은 일입니까? 아무 쓴소리도 하지 않는 민주당 성향의 방송국 9개……

저는 정말로 놀라운 것은, 예전에는 공영방송만 국민의 힘으로 돌려주자고 그래서 KBS·MBC의 이사진 구성에 대해서만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 줄 알았는데 이번에 개정된 이 법안을 보니까 대한민국에 방송국이라고 이름 붙인 곳은 전부 다 우리 손아귀에 넣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우리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하는 방송국을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언론사 전부 다 우리에게 맞는, 우리 말 잘 듣는 사장 보내고 우리 말 잘 듣는 편성위원 보내고, 그 회사는 어떻게 망가지든지 관심 없고 거기서 조금 잘못하면 과태료 물리고 사장 징역 보내고 재허가 떨어뜨리고, 이런 식의 구조로 만들어 놓은 방송법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저는 여야를 떠나서 제가 언론계에서 오래 생활을 해 왔고, 특히 방송국에서 오래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법이 실제 기업 현장에서, 방송국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악용될 것인가가 너무나 눈에 선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니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요. 헌법재판소도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물론 지금 이 방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은 아니지만 과거에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서 미루어 볼 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방송법 개정안과 배치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방송법 개정안이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정권을 잡으시면 언론을 장악하고 싶은 유혹,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에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는 유혹은 시대에 따라서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제 민주당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써먹었던 방식, 노동조합을 동원해서 파업하고 이사진 내쫓고 사장 바꾸고 보도책임자 바꾸고 제작책임자 바꾸는 이 루틴이 더 이상 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유효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방송사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장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장악하는 것이지요.

이게 저만 아는 진실입니까?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언론과 사법부를 장악하는 것이 마지막 순서입니다. 저는 사법부를 장악하는 것보다 언론을 장악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언론인들이 면면히 지켜 왔던, 어려웠지만 우리가 부끄러운

과거도 있었지만 우리 언론이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권력에 굴종한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키려고 했던 우리 언론인들의 노력과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항상 권력의 편에 서서 단물만 빨려고 언론인의 길을 택했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언론사의 경영환경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굉장히 더 열악합니다. 기자, 피디 정말 어떤 곳은 열악한 환경에서 월급 많이 받지 못하고 일합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론이 무너지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미국의 유명한 얘기, '나는 언론 없는 국가에서 살기보다는 국가 없는 언론에서, 언론이 있는 곳에 살고 싶다'. 언론이라는 것은 이 민주주의를 규정하는 정말 중요한, 언론 자유는 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말 중요한 뿌리와도 같은 것이고 우리 사회를 버텨 나가게 하는 정말 큰 힘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좋아하시는, 언론 통폐합 때 해직 언론인분들이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그분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 언론의 자유, 그 언론의 현장이라는 것이 정파적으로 이렇게 마구 휘둘러서 그 언론사 안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취직시켜 주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마구잡이로 낙하산처럼 투입시켜서 그렇게 함부로 흔들 정도로 대한민국 언론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릎 꿇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릎 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겁날지 몰라도, 지금 당장은 어떤 위해가 가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재허가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그분들이 찾아와서 '잘 봐주세요'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들 모욕 주지 마시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회의원들도 나름의 소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만 언론인들도 자기 나름의 소명을 가지고 국가를 지키는 심정으로 일하고 있는 언론인들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력이 마음대로 위원회 만들고 사장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두 번째, 지금 방송사들이 예전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MBC KBS, 2개의 방송국이 있을 때는 방송광고라는 것이 영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송사에 광고를 넣어 달라고 로비를 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KBS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위치를 가져 왔지만 MBC는 무지무지한 부자입니다, 지금도. 그 당시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말을 들을 시절에 그냥 프로그램만 제작하면 시청률 40% 50%, 보도채널 영향력 1등, 늘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전국에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정말로 부자입니다.

SBS, 91년도에 해서 처음에 제 기억으로는 일이 년 정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제외하고는, 국가적인 큰 위기가 있을 때 손실이 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어렵습니다.

YTN, 95년에 개국을 했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중간에 YTN 직원들 임금도 주지 못할 정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갈등을 겪었고 내부 갈등이 있었고. 어쨌든 지금은 새로운 대주주가 탄생을 해서 안정적으로 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마찬가지지요. 연합뉴스가 본인들의 방송국을 독립시켜서 YTN으로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최근에 다시 보도전문채널을 받아서 본인들의 경영을 위해서 이 보도

전문채널을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제가 방송국 관계자들을 만나면 정말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방송사의 경영 상태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정말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상파 3사가 그나마 가장 낫습니다만 지상파 3사도 어렵다 그러고 또 일부 종합편성채널은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종업원들의 급여를 주는 것을 걱정할 정도로 지금 경영 상태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관점에서만 그들을 쳐다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보도를 했던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방송국으로 우리를 대할 것인가,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대하지는 않을까 또는 저들이 국민들의 여망에 맞는 방송을 할 것인가. 굉장히 우아한 단어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속된 말로 모양 빠지게 방송국이 기업들 찾아다니면서 광고 압력 가하고 돈벌이하려고 이런저런 돼먹지 않은 프로그램 만들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기업의 첫 번째 덕목은 생존입니다. KBS가 공영방송이니까 수신료를 받지요. 2500원 받습니다. 그 2500원짜리 KBS 수신료를 두고 얼마나 많은 우리 사회적 갈등이 있습니까? 지금도 KBS는 분리 수신 이후에 다시 원대 복귀를 했습니다만 분리 수신이 문제가 아니고 KBS의 경영을 근본적으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공영방송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방송국이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어야 한다, 국민을 위한 방송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한 것 외에 그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제가 국회에 와서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이니까요. 수신료를 올려 줄까, 말까 여기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이지 그 수신료의 문제를 떠나서 KBS를 경쟁력 있는 방송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시대 상황에서, 이 시대의 변화를 어떻게 KBS가 잘 적응할 수 있는 방송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데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한 적이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적어도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MBC·SBS, MBC는 공영방송을 표방합니다만 지금은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사로 본인들이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MBC의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MBC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언제나 좋은 친구 MBC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와 다른 편에게 적대적이고 우리에게 편한 방송 이것이 과연 우리 정치세력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옳은 길일까, 옳은 일일까요라는 근본적인 의문은 늘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MBC도 우리에게 매서운 회초리를 들 수 있는, 우리가 잘못하면, 특히 저는 집권 여당이라면 더더욱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언론을 잘못 다루어, 언론과 잘못된 관계를 맺어서 실패했던 많은 경험들 모든 정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본인들에게 유리한 사례만을 자꾸 내세우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모든 정권이 언론과의 관계 설정에 실패해서 결국은 그것이 그 정권에 불행으로 돌아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지나치게 언론을 자기편으로 활용하려고 했을 때 바로 그런 일이 생깁니다. 국민의힘 정부 역시 그런 일이 많았

습니다. 민주당도 저는 마찬가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MBC는 국민의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정파적으로 치우친 방송, 여러분들이 MBC의, 그래서 지금 경영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는 제가 이 법안을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심지어는 국회의 구도가 바뀌더라도 MBC의 사장만큼은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MBC 방문진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려고 하시는지, 13명의 MBC 방문진 이사 중에서 여야의 구도가 바뀌더라도 5분지 3을 넘어서 MBC의 경영진을 친민주당 성향의 사장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이 법안 속에 녹여 넣었는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시점에서 합니다. 방송국들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정권의 수혜를 받아서인지 MBC는 경영 사정이 좀 낫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만 그 나머지, SBS, 종편 4사, 보도전문채널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일부 채널은 직원들의 임금 지급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의 관세협상으로 기업들이 이렇게 심하게 본인들의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이 시점에 법인세 올리고 그리고 그 기업들의 부담을 자꾸 늘리는 각종 법안들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면 도대체 이 정치는 누구를 위한 정치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법이, 이 방송법이 막연히 기업들의 경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거라는 그 뜻으로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방송국이, 특히 민영방송이 건강하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것처럼, 우리 방송법이 규정하는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것처럼 방송의 자율성이 가장 효율적으로 보장될 때, 방송의 자율성, 방송편성의 자율이 가장 효율적으로 보장될 때 그것이 바로 그 방송국이, 그 조직이 생존을 위한 최적의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이게 바로 대한민국 방송을 위해서 우리 국회가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맛에 맞는 사장…… 자꾸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사장추천위원회, 사장추천을 노조에서 5명이 들어와서 하면 노조가 원하는 사장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합의한다고 하면, 합의해야 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면.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방송에 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논의할 때 우리 내심의 마음이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내가 그 회사에 있었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느냐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 이 법을 만드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저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듯이 지난번에 방송법 필리버스터 할 때 MBC 출신의 민주당 의원님께서 나와서 본인이 MBC 노조원으로서 겪었던 나름의 어떤 절절한 사유를 얘기할 때 저는 그런 것들도 중요한, 우리가 방송국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 의견을 청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은 지난번에 공영방송 사장을 뽑을 때 서른몇 명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부분에서 도대체, 어떤 합법적인 권한과 책임도 확보하지 못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저희가 질문했을 때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법안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을 때 적어도 방송국을 다녀 보셨

던 분들이나 민주당의 많은 방송 전문가분들은 저는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일정 부분은 이 부분은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법을 보면서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공영방송 장악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을 장악하겠다라는 정말 정교한 수단들이 이 방송법에 들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고 정말로 경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상임위를 강행 통과되면서 법사위로 올라와서 적어도 이 법에 대한 문제만큼은 내가 지적을 해야 되겠다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춘석 법사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토론만큼은 충실히 받아 주시겠지, 또 더 큰 기대는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시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희 법사위원들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소위로 넘겨서 적어도 최소한의 자구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번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겠지라고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 자리에 지금 저희 법사위원들 많이 와 계시지만 일방적으로 토론이 입이 막히고 그 법이 그냥 저희가 서 있는 상태에서 거수로 통과되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는, 도대체 이 국회를 뭐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민주당은 이 국회를 뭐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더 큰 의문은요 뭐가 이렇게 급할까, 왜 이렇게 급하실까.

방송법이 200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법의 근간은요, 1980년도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에 방송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개정된 방송법은 200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방송법이. 그래서 저는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처럼 방송법도 시대에 맞게, 우리가 커진 국력에 맞게 대한민국 방송사들의 생존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포함돼 있는 방송법으로 거듭나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실망스럽게도 민주당은, 제가 느끼기에는 도대체 이 법안에 그런 진지한 고민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방송사에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을 위한 일자리 만들어 드리는 것 외에 아무런 내용도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과 보도에 대해서 그 편성위원회를 통해서 마음껏 간섭하시고 또 사장 전부 우리 편 만드시고, SBS 같은 민영방송사는 사장추천위원회는 그렇다 치고 남들이 다 그렇게 하면 하는데 나 혼자서 내 길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언론사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정교하게 협박하시는 거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이렇게 해서……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만들면 그 편성위원회가 대한민국 방송을 위해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대한민국 방송국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이분들이,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가 도대체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편성에 제의하고 편성에 관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좋습니다. 자, 우리 헌법과 맞고 맞지 않고 이거 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싶다면서요? 그런데 그 방송의 사실상 상왕 지위에 있는 편성위원회가, 편성위원회가 상왕 아닙니까? 시청자위원도 임명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5개 조항을 보면 어떤 것도 편성위원회가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편성위원회가, 제가 아까 심지어는 이게 무슨 공산주의 국가의 인민위원회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편성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방송사를 장악하시면 이게 이 방송사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우리는 방송국을 다 우리 수중에 넣고 싶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정부에서 두 번의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저도 그 당시에 10시간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만, 필리버스터 충분히 논의했다라고 저희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법은요 그때 논의했던 법과는 또 다른 법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법사위가 무슨 상원인 줄 아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러면 법사위가 이게 법체계상 맞는 법인지 헌법과는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인지 적어도 그 정도의 연구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에 앉아서, 그러면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은 법사위에서 다 통과시켜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매우 답답하게 느꼈다는 겁니다.

이 방송법을 처리하는 내용도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방송법을 도대체 민주당은 왜 이렇게 목을 맬까, 제가 생각하기에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송을 망가뜨려서 민주당이 얻어 갈 것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방송국의 내부 생리라든지 방송국의 운영체계를 잘 모르는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 한 백오십 분 이상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그저 이렇게 가니까 가시는 건데 실제로 방송국 현장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지금 민주당의 법안에 들어 있는 것이 적용되는 것을 보면 정말로 많은 걱정스러운 일들이 저는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과연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저도 법안을 낼 때 저희 보좌진들과 상의를 많이 합니다만 헌법재판소가 얘기한 방송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진 방송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집단—정치권력, 여야 정당, 노동조합, 시민단체 이런 분들과 생각을 같이하는 어떤 이익단체를 위한 법안이다 이런 데 제 결론이 이르렀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방송을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이익단체들에 이익을 주기 위한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들은요, 우아한 말로 다 포장하셔도 좋습니다. 편성위원회를 만들고 어쩌고 하는데 결국은 보면 전부 자리거든요. 이게 전부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자리라는 것이 기존에 경영권을 가진 방송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자리를 빼앗아서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편성위원회 편성위원도 마찬가지고 시청자위원도 마찬가지고 사장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부 자리를 주기 위한 법인데 도대체 민주당 의원님들은 민주당에 어떤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밀어붙일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권, 민주당을 지지하는 어떤 이익단체들의 보은을 위한 법안인가? 제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동 개악법, 여러분들이 노란봉투법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경제와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하등 서두를 이유가 없는 법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환경이 엄청나게 변해서 100만 민주노총만이 대한민국의 노동자가 아닙니다. 훨씬 많은 수의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제가 말씀드린 비정규직 알바생이라든지 배달 노동자라든지, 특히 언론사에서 보면 언론사의 비정규직들.

언론사의 비정규직 문제도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분들이 쟁의행위를 해 가지고 회사의 기물을 때려 부숴도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하는 그런 혜택 못 받습니다. 하지도

못하고요.

그러면 소위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누가 봐도 아주 조직화된 귀족노조들이 불법 파업을, 현행법으로는 불법 파업을 감행했을 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 주는 법이거든요, 그 법이.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와 대한민국 기업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동단체가, 노동자가 셉니까, 사업주가 셉니까? 돈은 기업주가 많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이 좋게 지내지 않고는 대한민국에서 기업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정치적 파업을 해도 오케이, 기업에 불법 파업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쳐도 오케이, 이런 법을 이렇게 서둘러서 오늘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민주당의 이익과 맞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주주의 충실의무, 상법에 넣었지요. 좋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당내에서도 저는 그것을 넣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 정도면 이제 우리가 선언적으로 외국의 투자자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도 기업에 대해서 주주에게도 충실하라는 의무를 부과한 상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됐다면 해외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좋게 평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이 정말로 공포스러워하는 부분들, 이를테면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감사인을 외부에게 완전히 맡긴다든지,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기업도 생각을 해야지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여야 지도부 사이에 일단 이 정도 해 놓고 그다음에는 우리 기업의 성장과 우리 종업원들의 이익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이 법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끝나자마자 바로 2차 상법 개정안 들고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것일까, 원·투·쓰리 이게 과연 민주당 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가, 그러면 누구의 의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제가 듣기로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과 용산 대통령실과도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럴까.

세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지요. 난리 났잖아요. 진성준 위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아무 영향 없다고 하지만 오늘 좀 올랐습니다. 왜? 재고한다고 하니까. 재고한다고 하니까 오른 거예요. 아마 그 정도의 코멘트가 없었으면 오늘도 제가 보기에는 주식이 폭락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반론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시장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이라는 거 시장이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아니, 그건 잘못된 방향이야'라고 목놓아 외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가가 오르면 제 말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지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식으로 해서 주가 5000 되면 제 페이스북에 저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사과의 말 쓰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가는 기업의

내재적 가치가 성장을 해야지 오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특히 국가 리스크, 정권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주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기업이 성장을 해야지 주가가 오르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방송사 얘기하다가 조금 흘렀는데 방송국도 굉장히 어렵지만 대한민국 기업이 지금 공포와 패닉입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여러분들 소비쿠폰 줬더니 시장경제가 살아나서 난리 났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그냥 머리 아프니까 아스피린 하나를 준 정도 아닙니까? 그 정도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야당이 되고 나니까 나라 곳간을 열어서 막 줬으면 좋겠어요. 여당 때는 '아, 이렇게 하면 국가경제가 박살 날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의 수준이 이렇게 현금 살포를 막 할 정도로 우리가 여유가 있지 않은데'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이 건전해야 된다는 건 상식적인 것이고요.

그 건전성의 기준은 민주당과 저희 당의 기준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국가채무가 '이거 50% 넘어가면 굉장히 머리 아픈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과거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셨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리께서는 우리 국가 부채가 몇 프로인지를 모르고 계셔서 속은 편하시겠다. 막 퍼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 경제를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4200억 불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에 3500억 불 투자하기로 했어요. 1000억 불 더 한답니다. 만약에 저희 국민의힘 정부에서 이렇게 협상하고 왔으면 아마 민주당 머리띠 두르고 전부 다 용산 앞으로 저는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외환보유고 4200억 불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데 우리만 내놓은 거 아니지요. 그런데 이거 잘했다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창피한 겁니다. 시장이 알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 주가가 뚝뚝 떨어지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 아니고 기업들한테 그거 투자하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재용 회장 왜 갔습니까? 여러분들 기업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재벌 안 좋아하시잖아요. 이재용 회장은 왜 미국 갔습니까? 최태원 회장 투자시키려고 간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우리 기업 그렇게라도 국가를 위해서 도와주시면 정말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바로 법인세 올리겠다 그러고 또 바로 증권거래세 올려서 주가 쑥 빠지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더 두려워하는 것은 단기적인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기업활동을 구조적으로 방해하는 이런 시스템적인 변화를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상법도 마찬가지,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 방송법도 마찬가지.

방송법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좀 재미있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넷플릭스가 됐든 해외시장이 됐든. 그런데 조금 막장이다 그러면 편성위원회가 '야, 이것은 국민을 위해서 공익성에 반하는 거야. 이런 프로그램은 만들지 마', '대본 좀 가져와 봐',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이런 일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못 만들겠지요.

그리고 방송국이 ‘우리는 AI를 이용한 보도 프로그램을, 보도 제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얼마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편성위원회에서 ‘아니, 지금 회사도 어려운데 무슨 그런 투자를 하니, 지금 노조에서 이번 달에 당장 임금 15% 올려 달라고 난리인데’ 그러면 투자 못 하잖아요. 그러면 세계적인 조류와는 계속 벗어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법안들이, 제가 편성위원회가 상왕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경영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영진은 아무것도 못 하고 책임만 지는 경영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과연 이 책임을 누가 지지’, ‘기업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민주당이 낸 법안에 귀담아들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방송법만 보면 평생을 방송국에서 일한 저로서는 이게 과연 양식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분들이 만든 법일까라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몇십 년 방송국을 다녔지만 ‘아,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우리 입맛에 맞게 회사를 장악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그 추천위원회에 들어가는 내부 구성원들은 ‘아, 이렇게 하면, 민변에서 하나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어디서 하나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여야가 바뀌더라도 우리가 계속 영향력을 유지할 수가 있겠네’.

기존에 KBS 이사회, MBC 방문진 이사회는 정권 바뀔 때마다 그분들 쫓아내려고 하면 엄청 힘들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이사 한 명 쫓아낸다고 그분이 쓴 법인카드 다 뒤지고 그 난리를 치고, 대학교수인 이사분 사표 내게 하려고 학교마다 찾아다니면서 시위하시고……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사회 바꾸고, 그렇게 해서 사장 바꾼 것이 정권 바뀔 때마다 일어났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노력을 한 것에 저희 당도 ‘100%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라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방송법이, 특히 공영방송에 정치적 후견주의를 왜 집어넣어서 오늘날의 이 사달을 만들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지요. 이제는 이런 정치적 후견주의가 필요 없는 방송국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BS 이사, EBS 이사, MBC 이사 하는 데 국회가 6명, 5명, 5명씩 이사를 추천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민주당이 생각하는 국민을 위한 방송은 국민을 위한 방송입니까, 국회를 위한 방송입니까, 국회의원을 위한 방송입니까? 그렇게 하면 저희도 이사 추천 좀 하고……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구조를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이사 추천해도 이제는 저희 입맛에 맞는 사장은 못 뽑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워도 절제하는 것, 자제하는 것, 이게 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참으시지요. 방송이 누구의 편도 아닌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 언론인들이 정권 바뀔 때마다 줄 잘못 서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울고불고 동료들끼리 반목하고 모른 척하고 이런 방송국을 저희가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물론 이 법이 통과되면 저는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 민주당 앞으로 줄 설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여러분들 뜻대로 되실 겁니다. 제가 방송국을 다녀 본 경험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국민분들이 국회를 다시 구성해서 이 법안의 잘못된 부분을 잡아 주지 않을 때까지는 이 법안이 계속 가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 우리 방송사들이 정말 국민의 방송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세계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방송국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집니다.

저희가 공영방송 사장 얘기할 때 늘 예로 드는 것이 영국의 BBC와 일본의 NHK입니다.

영국 BBC가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영국 BBC 이사회 정원은 14명입니다. 이 가운데 상임이사가 4명이고 비상임이사가 10명입니다. BBC 이사 14명 중의 5명은 영국 정부가 임명을 합니다. 5명, 의장 1명 있고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이 약간 연방제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각 연방을 대표하는 이사가 1명씩 들어옵니다. 5명 이렇게 합니다. 이 5명은 우리로 치면 문화부장관이 추천해서 국왕이 재가를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정치권력이 영국의 전통적인 역사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고.

나머지 BBC 이사 9명은 BBC의 이사회가 뽑습니다. 그 9명 가운데 BBC 사장도 포함됩니다. 이 이사들을 뽑는 것에 추천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이 추천위원회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제안하면 전체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대표를 하는 거지요. 저는,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에 지역 대표를 넣는 방식은 지난번 민주당 개정안에도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은 각 지역의 이해관계도 충실하게 반영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KBS 같은 경우를 보면 신입사원을 뽑을 때 지방 출신들을, 아마 구체적으로 할당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방대학 출신들을 꼭 뽑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사도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1명씩 넣는다 이것은 공영방송에 채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민주당이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상임이사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5명은 비상임이사들입니다. 그리고 BBC 이사회가 비상임이사 5명을 선출하는데, 나머지 4명이 상임이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상임이사 중의 3명은 BBC 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KBS 이사진을 구성하는 이사에, 14명을 구성한다 그러면 3명은 제작본부장·보도본부장·경영본부장 이런 분들이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러네요. BBC 사장·경영본부장·보도본부장 이런 분들이 상임위원장을 구성을 하고요. 지역 대표가 5명이고 회사의, 소위 간부들이 4명이니까 거의 10명 가까이는 사실 그렇게 정파적일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인 거지요.

그러니까 BBC 이사회가 14명이라고 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무슨 변호사단체에서 이사를 선임한다라든지 학회에서—저는 언론학회라는 것도 대한민국에서 참 지나치게 방송이나 언론사에서 과대 포장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2명을 선발하고 이런 것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전혀 맞지 않다.

그리고 적어도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까도 보셨습니다만 경영본부장·보도본부장·사장·제작본부장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통제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그런데 우리의 KBS 이사진이라든지 방문진 이사진들의 구성을 보면 사실은 방송사업자가 본인들의 의사를 관철시킬 여지가 별로 없어요. 더구나 이번에 민주당이 제안한 법안을 보면 KBS 같은 경우에 13명을 뽑는데, 15명을 뽑습니까? 그런데 6명을 정당에서 추천하잖아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15명 중의 6명을 정당 추천 몫으로 두는 것은 계속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15명 중의 6명을 정당이 추천하면 이것은 계속 싸우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중에 3명은 무슨 종업원이 뽑고 또 2명은 변호사단체에서 뽑는다 그러는데, 이게 전부 다 정치적 지향을 가진 이런 분들을 KBS 이사로 계속 뽑게 만드는데……

저는 이 의도는, 지금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린 의도는 지금 구조에서 당장 법을 바꾸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장을 뽑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극대화시켜 놓은 것이다, 이것은 즉각적인 KBS 사장 교체를 염두에 둔 것이다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는 '경과규정을 두어서 현행 사장들의 임기는 보장해라' 이런 논의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사장 선출이 객관적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일이긴 합니다만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언론노조에서 토론회를 하면서 어떤 분이, 언론노조 관련된 분이 발언을 하는데 'BBC 이사회는 집행위원으로 BBC Worldwide 책임자, 방송책임자 등 BBC 사원들이 주도하게 되어 있다', 역시 BBC 이사회의 집행위원으로 BBC 임원들이 들어 있음을 근거로 'BBC 이사회를 사원들이 주도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원은, 언론노조에서 주장하는 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노조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노동조합의 공방위원장이라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BBC는 그런 게 아니고 보도본부장·제작본부장·경영본부장, 회사 경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이사회에, 지역 대표가 크게 정파성이 없다면 실제로 나머지 8명 중의 4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BBC는 굉장히 정파적인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전혀 참고하시지 않았는지, 제가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고요.

두 번째, 일본. 저희가 BBC하고 NHK를 가장 많이 공영방송 시스템의 모범 사례로 보고 있는데, 일본 NHK의 최고경영자는 회장입니다. 이 회장은 NHK 경영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특별다수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NHK의 경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NHK 경영위원회는 12명인데 여기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채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 후견주의와 어떤 함정이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명 모두 내각총리대신이 민의원과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본의 방송법은 정부가 NHK 경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잘 들어 보시지요—교육·문화·과학·산업…… 우리와는 뭔가 결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영국은 지역을 배려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사회의 각 산업을 배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치인이거나 변호사거나 언론단체를 이사로 추천을 합니다. 우리의 설

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고 우리의 설계가 더 이상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는 아주 결정적인 얘기들입니다.

‘경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교육·문화·과학·산업 등 각 분야와 전국 각 지방이 공평하게 대표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만약에 민주당이 이런 안을 가지고 나오시면 저희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회의 각 분야를 골고루 배려하고 또 각 지방이 공평하게 이사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법안을 가지고 나오시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남도 1명, 호남도 1명, 중부지역 1명, 서울·수도권 2명, 이렇게 들고나오시면 그분들을 어떻게 선발하느냐에 따른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이걸 저희가 반대할 수는 없지요.

또 일본처럼 교육·문화·과학·산업같이 각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이 온다, 이게 우리보다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교육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방송사 이사로 들어온다, 지당하신 말씀이지요, 방송이라는 것이 어쨌든 국민을 교육하고 계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화를 대표하는 분, 방송국은 문화콘텐츠를 창출해 내는 곳이니까. 과학·산업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평하게 대표가 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NHK 직원들이…… 직원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종사자나 직원이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민주노총 산하의 노동조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법이 정말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만 굉장히 환영할 만한 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법에 포함돼 있는 함의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민주노총 외에는, 언론노조 외에는 별로 좋아할 만한 사람이 없는 법이에요, 이 법이.

그래서 NHK 직원들이 NHK 경영위원회 위원 임명에 개입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노동조합은 교섭단체로서 본인들의 어떤 근로조건이라든지 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업주와 협상하고 또 방송국 노조는 백번 얘기해서 언론 자유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경영위원회에 직원, 특히 노동조합이 참여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NHK 노조가 성명으로 특정 위원 임명 안 된다 이런 성명은 가끔 낸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대표자를 경영위원회, 제가 보기에는 이 경영위원회의 역할이 편성위원회가 될 것 같은데 우리의 대표를 편성위원회에, 그것도 과반이나 노동조합 대표를 넣는다고요? 노동조합 대표 또는 추천한 사람을 넣는다고요, 과반이나?

그래서 방송법을 개정하려면 우리도 우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각 지역 대표성을 강화한다라든지 또 세대별, 연령별로 배려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이 반드시 이사회에 참여를 하고 여성을 할당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무슨 특정 정치단체만 전부 사장 추천을 할 수 있는 이사회에, 특히 공영방송 이사회에 들어오는 이런 법안은 정말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는 대한민국 방송사들이 저는 단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을 합니다.

이것 안 보셨습니까, BBC가 어떻게 하는지, NHK가 어떻게 하는지? 아까 안 계셔서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사실은 갑자기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가 이 법안을 만드는 데 집중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내용을 잘 모르고 벼락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이건 큰일이다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지금.

(○서영교 의원 의석에서 — 내용을…… 차라리 마치세요.)

내용을 잘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서영교 의원님이 이것보다 더 잘 아십니까?

(○서영교 의원 의석에서 — 그럼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 보세요. 영국과 일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뽑고자 하는 공영방송의 이사가 전부 정치집단에서 뽑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국은 지역 대표 뽑고 일본은 각 산업계 대표 뽑고 또 지역도 공평하게 배분하고 이렇게 해서 공영방송의 이사를 뽑아서 사장을 선출하자는, 그 취지 중에 어떤 게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영위원회를 그렇게 뽑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늘 하는 얘기가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려 주자고 그러면서 민주당 몫 추천위원이 4명 들어가시면 그게 무슨 국민의 방송입니까? 민주당 방송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공부를 똑바로 하세요, 공부를!」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민주당분들, 제가 무슨 얘기 하면 늘 '잘 모르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데 여러분들, 무슨 내용을 모릅니까?

(장내 소란)

싸우지 마세요.

MBC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라는 것을 한번 해 봤거든요. 이번에도 100명씩 사장후보추천위원회 만든다 그러는데, MBC가 시민평가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난번에 사장을 뽑았는데, 2023년입니다. 지금 현 사장이 뽑힌 게 MBC 사장 선임에 대한 시민평가단 제도를 도입해서 MBC 사장을 뽑았습니다.

어떻게 뽑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예단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토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론조사기관에서 156명을 선발했는데, MBC의 주장입니다. MBC의 발표입니다. '지역과 나이·성별 비율을 맞췄다'. 좋습니다. 지역과 나이·성별 중요합니다. 156명 시민평가단, 지역·나이·성별…… 그리고 방문진이 MBC 사장 지원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 가운데 3명을 뽑았고 시민평가단, 그러니까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시민평가단을 도입해서 사장후보자 3명 가운데 시민평가단이 한 번 모여서 이 3명의 경영계획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때 기억이 나고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이 원했던 분이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제가 그때 얼핏 듣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3명의 경영계획을 들은 다음에 투표로 1명을 탈락시키고 방문진이 2명 가운데 1명을 투표로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MBC 내부에서 이 시나리오 가운데, MBC 내부에서는 이 시나리오를 두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하고 MBC 사장이, 저희가 들은 걸로서는 박성제 당시 사장을 연임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들을 MBC 내부 구성원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얘기한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들었고 또 저희가 보기에도 그 당시에 아마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더 맞지 않았나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시 MBC 사장을 연임시키기 위해서 미리 경쟁이 될 만한 후보들을 다 탈락을 시켰는데 결국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엉뚱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나는 들러리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민평가단이 투표를 해 봤더니 어쨌든 원했던 후보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본인들의 시나리오대로 됐다면 ‘정말 이렇게 하니까 역시 공정하게 좋은 후보를 뽑았잖아’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선전을 하고 싶었는데 박성제 사장이 정작 탈락을 하고 나니까 ‘이게 뭐야. 이런 제도를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된 사장을 뽑겠어’라고 MBC 내부의 노동조합에서도 굉장히 비판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사장추천위원회를 어떻게 뽑고 이런 걸 떠나서요 흠결이 많은 제도로 뽑으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도 않고, 저희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도 않고, 방송국 구성원들 대다수가 원하는 사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슨 누구를 미리 정해 놓고 뭘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만든 법을 보면 전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방송국을 여러분들 수중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지만 정도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정도예요」 하는 의원 있음)

이게 무슨 정도입니까? 민영방송 사장을 5명·5명, 노조에서 5명 와서 합의해야지 뽑아주는 이게 지금 정도입니까? 왜 노동조합이 사장을 뽑는 데 관여합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맞는 법이냐고요, 이게. 이게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대명천지에, 전 세계에 사장 뽑는데 10명 중의 5명을 노동조합이 관여하는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무슨 사장추천위원회 10명 중의 5명 관여를 해요? 공부 좀 제대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노조가 5명 들어가지를 않아요」 하는 의원 있음)

(「발언대 나가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전문채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반드시 만들게 되어 있지요? 방송사업자와 교섭……

(「노조하고 합의해야 되지요」 하는 의원 있음)

자, 들어 보세요.

방송사업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합의로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합니다. 방송사업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합의를 해야지 사장추천위원회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가 결정이 나는데 노동조합이 합의를 안 해 주면 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노동조합이 그 회사의 사장을 뽑는 구조라고요.

제가 아까 숫자를 말씀드린 건 잠깐 착각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추천위원회를 방송사업자와, 소위 회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그러니까 대부분의 방송사에서는—여기는 민영 보도전문채널이니까 YTN과 연합뉴스 채널 얘기하겠지요—방송사업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합의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노동조합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이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사업자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사장을 못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간의 경영 공백이 생길 거예요. 장기간의 경영 공백이 생기면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사장 뽑아야지요. 그러니까 노동조합한테 잘 보여야지요. 결국 노동조합이 사장을 뽑는다는 거예요, 이 논리가.

(「20년 동안 그렇게 해 왔어요. 윤석열 정권이 없애 버렸지」 하는 의원 있음)

(「잘못된 사실을 아시면 안 돼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이것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자꾸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보도전문채널이요 방송사업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합의로서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두 번째, 방송사업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로서, 합의를 한다는 것 이게 전부다 정관 및 운영규칙에 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제반사항을 규정해요. 도대체, 사장추천위원회도 노동조합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정관·운영규칙도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법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노동조합이 사장 뽑는 것 아닙니까? 이게 상식적인 해석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뽑습니까? 사장추천위원회가 뽑는데 그 사장추천위원회 만드는 것을 노동조합이 합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사장을 누가 뽑습니까, 도대체?

민영 보도전문채널에서 노동조합의 허락을 받아서 사장 뽑았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듣습니다.

(「사장들이 그 정도 역량이 됩디다」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사장 뽑았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혹시 그 부분이……

(「제도를 만드는 데 왜 자꾸 노동조합을 얘기해」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잘못된 제도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혹시 그게 민주당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해 왔다면 그것 하지 마셔야지요. 그런데 그것 자꾸 하는 것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제도 만들어 가지고 제도화시켜요? 노동조합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장 뽑지 못하는 것을 제도를 만들어서 제도화를 시켜요?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이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입니까?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민법상, 상법상……

(「부의장님 회의 정리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시잖아요, 당사자가」 하는 의원 있음)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자꾸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장내 소란)

토론은 그만하시지요, 자꾸 목소리 커지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상 노동조합이 뽑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워딩을 그렇게 써 놓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노조가 뽑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을 속이시는 겁니다, 지금. 아니, 노동조합이 합의해야지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것을 합의를 해 줍니까? 노동조합이 합의해야 된다면서요.

(「멀쩡하게 잘 합의하는 걸 없앤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멀쩡하게 누가 잘 합의를 합니까? 협박하니까 합의하는 거지요. 아니, 방송사업자가 노동조합하고 멀쩡하게 사장 추천을 잘 합의를 했다고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단체협약은 다 노조가 협박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 여러분들이 이 법을 만들어 놓고서 마음에 찔리시는 게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제가 방송국을 오래 다닌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물론 방송국마다 문화가 다르고 또 처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민영방송의 사장 이거 공영화시키는 겁니다. 사장 이렇게 만들면요 이거 공영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공영화시키겠다는 거고—공영화라는 표현도 맞지 않지요, 이런 경우에—공기업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민영기업을 이런 식으로 다 개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방송은 국민의 것으로 돌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시고 반도체 만드는 회사는, 반도체는 국가기간산업이니까 경영위원회 만들어서 우리가 통제하겠다고 그러고, 제 말이 굉장히 비약 같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논리를 들어 보면 이 비약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방산기업은 국가방위산업이니까 우리가 무슨 경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탱크는 못 만들게 하겠다……

이거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방송이 공공의 기능을,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맞지만 방송이 공공재인 경우는 다른 얘기입니다. 민영방송,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의 FOX 뉴스가 아무리 민주당에게 비우호적이라고 하더라도 FOX 뉴스에 무슨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보도 못 하겠다, FOX 사장을 우리가 임명하겠다 이런 것 하지 않습니다.

CNN이 아무리 진보적인 방송이라도, 공화당 정부 트럼프가 'CNN 기자, 백악관 들어오지 마' 이거 얘기하지요. 그러나 CNN의 경영에 관여하겠다…… 또 윤석열 말씀하시네요. 우리 미래 좀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 이미 지나가신 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그렇게 할 말이 없고 자신감이 없습니까, 맨날 '내란' '내란' 하시게, 김용민 의원님. 아니, 이제 집권하셨잖아요. 집권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170석 넘는 의석 가지고 계시고 이만큼 다 민주당인데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이 하는 말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김용민 의원 의석에서 — 내란정당이야! 사퇴하세요!)

(「누가 내란정당이야!」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을 보면 절망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지금 필리

버스터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참 안쓰럽습니다.

(장내 소란)

아니, 좀 전에 소리를 지르시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지요. 제가 왜 얘기를 못 합니까? 김용민 의원, 김용민 의원, 제가 필리버스터하는데……

(○이강일 의원 의석에서 — 대응을 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아니, 이강일 의원님, 제가 필리버스터하는데 계속 끼어드는데 왜 말을 못 합니까?

김용민 의원, 조용하세요. 김용민 의원, 나와서 하세요. 조용하시라고요.

(○김용민 의원 의석에서 — 비켜요, 내가 하게!)

비켜? '비켜, 내가 하게'?

○부의장 이학영 의원 여러분들, 방송에는 신동욱 의원님 발언밖에 안 나갑니다. 방송에는 신동욱 의원님 발언밖에 안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크게 해도 국민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동욱 의원님 토론 열심히 하세요.

○신동욱 의원 이렇게 발언하는 의원에게 반말로 '비켜, 내가 할게'? '비켜, 내가 할게'?

(○김용민 의원 의석에서 — 자기 얘기만 하셔야지요. 왜 남의 얘기하냐고요!)

아니, 큰소리로 나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김용민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왜 저를 걸고넘어지냐고요!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여기 앉아 있는데!)

아니, '내란정당 해산되면 국회의원 사퇴하세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김용민 의원 의석에서 — 먼저 얘기를 하니까 제가 대응을 한 거지요. 다 토론하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사퇴할 용의 있으면 사퇴하세요!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부의장 이학영 의원 여러분들, 잠시만요. 지금 방송에는 마이크 앞에 서 있는 의원님 발언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신 의원님, 무제한토론 계속하십시오.

(장내 소란)

○신동욱 의원 자, 잠깐.

(○김용민 의원 의석에서 — 사과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걸고넘어진 것이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리는데……

지금 제 발언에 대해, 제 발언 중에 정말로 너무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호응을 해 주셔서 저는 도리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무슨, 여기가 지금 토론을 하겠다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자꾸 반박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부분은 이것 때문에 여야 의원님들이 목소리 높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사장추천위원회를 노사 합의로 하게 된 이 부분이 정말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방송 부분에서 이렇게 한다면 이게 지금 민영방송에……

(「내란……」 하는 의원 있음)

다 들립니다, 제 귀에. 그래서 자꾸 끼어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제

귀에 자꾸 들리기 때문에 김용민 의원님, 제가 큰소리 냈습니다. 그러니까 동료 의원이 발언할 때 품격을 좀 지켜 주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자꾸…… 또 시작하네」 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품격을 지켜 주세요.

(「사퇴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갑자기 사퇴하라 그러시면, 발언 중에…… 갑자기 사퇴를 하라는 얘기를 어디서 많이 들어 보기는 했는데……

○부의장 이학영 신 의원님, 무제한토론 계속하세요. 토론 대꾸하지 마시고요. 대꾸하지 마시고, 신 의원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만 쭉 하시면 됩니다.

○신동욱 의원 하여튼……

(장내 소란)

알겠습니다. 저는 가던 길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보건대 이 방송법…… 제가 가던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너무 큰소리로 주고받으셔서 길을 잃었습니다. 잠깐만 좀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교대해요」 하는 의원 있음)

교대하라는 말씀은 약간 덕담으로 들리는데 갑자기 사퇴하라 그래서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제가 일관되게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그리고 이게 토론 비슷하게 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최민희 의원님도 방송계에 워낙 오래 활동을 하셨고 또 노종면 의원님도 저 못지않게 방송가에서 오랫동안 경륜을 쌓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 말이 적어도, 물론 민주당 법안을 발의하신 분들로서 이 말에 동의는 못 할지 모르지만 제가 하는 이 말이 어떤 맥락에서 하는 얘기라는 것을 저는 두 분이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부분 제가 충분히 존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를테면 공영방송의 사장추천위원회의 지역 대표성을 이번에는 한번 강화를 해 보자, 각 직역대표를 해 보자 이런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법안은요 민주당이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신 법안입니다.

이게 도대체, 지금 저희 당 의원님들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됐습니까?

(「의원님이 과방위에 안 계셔서 그래요. 과방위로 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고 제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도 반영이 안 됐고, 이 법안 미뤄 주시면 제가 과방위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 미뤄 주시면 제가 과방위로 가서 논의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법안을 가지고 대한민국 방송이, 앞으로 제대로 된 방송국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우리가 방송이라는 것이 국민의 생각과 우리……

(「과방위로 가, 법사위가 아니라」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열화와 같은 반응을 불러일으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웃지만 정말 제 마음속에서는 지금 웃는 게 웃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적어도 이 방송법만은 반드시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방송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고 언론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방송국들의 생존과 우리 방송종사자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법안만큼은 반드시 재고해 주실 것을 민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갑자기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져서 더 이상 필리버스터를 하기가 조금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 핵심적인 부분, 방송사 편성위원회를 만드는 부분……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민주당에서 전부—무슨 편성위원회가 됐든 뭐가 됐든—공영방송을 위해서 어떤 제도의 개선을 계속 주장을 하시다가 이번에 사실상 대한민국 방송국 전체를 대상으로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정말 너무나 노골적으로 보이셔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제가 계속 여러 차례 말씀드리다시피 방송은 우리 정치에게 좀 불편한 존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방송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 언론 자유가 저는 엄청나게 후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권이 한두 번 바뀌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게 옮아가고 이런 것들을 둘러싼 논쟁도 대한민국 사회의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제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이 부분을 둘러싸고……

보십시오. 끊임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영방송의 사장추천위원회, 노조와 합의를 거쳐서 사장추천위원회 만든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만들겠다 이걸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혼란이 있을 것이며 공영방송의 사장 추천 무슨 시민평가단 같은 걸 100명씩 만들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얼마나 크게 일 것이며 또 민영방송 방송국들이 편성위원회를 구성할 때 5 대 5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5명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를 둘러싸고 각 방송국마다 하루가 바쁘고 한시가 바쁜 이 시기에 얼마나 많은 소모적인 논쟁 속으로 몰아넣어야 될 것이며, 이 부분을 저는 정말로 심각하게 걱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대한민국의 방송국이 그런 데 시간을 쏟을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정말 어려운 방송국들이 많고요 내일의 생존을 걱정해야 될 방송국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무슨 편성위원회를 만든다,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든다 해 가지고 정말로 석 달, 넉 달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대한민국 방송이 어떻게 되겠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정말로 진심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보고 과방위로 오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이 법 이번에 미뤄 주시면 제가 과방위로 가서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과 토론하고 대한민국의 방송을 위해서 저도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종사해 온 곳이기 때문에 비록 민주당과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방송을 올바르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어쨌든 그 충정은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만은 정말 국민 여러분들과 함

께 좀 막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저의……

(○송언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오셨으니까 다시 하세요. 아까 신동욱 의원님이 좋은 얘기 했는데 의장님이 못 들으셨어요. 처음부터 다시 좀 해 주세요. 의장님 오셨잖아요.)

○의장 우원식 방송으로 다 들었습니다.

○신동욱 의원 원내대표께서 지금 계속하라고 그러시는데 덕담입니까, 아니면……

한 번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

밤늦게까지 저의 방송법 토론을……

(○송언석 의원 의석에서 — 더 해, 더 해.)

알겠습니다.

(○송언석 의원 의석에서 — 화장실 다녀와서 하세요, 화장실 다녀와서.)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의장님,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의장 우원식 내려간다고 그랬다가 또 화장실 다녀……

○신동욱 의원 한 번도 제가 화장실을 못 갔습니다.

(「힘내세요!」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여당 의원님들하고 좀 논쟁을 벌이느라고 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지금 민주당이 오늘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송 3법 개정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물론 저희가 의석수가 부족하고 또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만족하실 수준으로 저희가 막아 내지 못한다는 점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나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민영방송에서 25년 그리고 종합편성채널에서 6년, 31년간 대한민국 방송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저의 청춘을 그곳에서 바쳤고 또 방송사 근무를 통해서 저희 가족을 부양했고 또 앞으로 그래서 대한민국 방송이 저와 같은 꿈을 가진 많은 우리 언론사 지망생들에게 꿈의 직장이 되기를 지금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법안을 성안하는 과기정보통신위원회 위원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평생을 제가 방송사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해 왔는가, 우리 언론사 기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휴일도 없이 박봉에 일을 해 왔는가,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가, 언론은 어떻게 지켜지는 것인가, 언론이 한 나라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부족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왔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영방송을 떠나서 2017년도 TV조선으로 옮기면서 사실은 그전에도 오랫동안 방송의 현실, 방송과 정치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인가 또는 대한민국의

언론사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어떻게 살아남아 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또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92년도에 제가 언론사에 처음 입사를 했을 때 이른바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문민정부가, 민주정부가 탄생을 했지요. 그리고 정치부 기자 시절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국민의정부와 정치부 기자 생활을 시작을 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하던 시절에 앵커로 활동을 했고 또 그때 앵커가 되면서 정말 대한민국 정당의 부침을, 정치권력과 방송의 관계에서 어떻게 방송사들이 생존해 나왔느냐를 정말 현장에서 치열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언론계 생활을 마치고 정치권으로 들어올 때는 그래도 저 나름대로, 제가 비록 어떤 자리에 있든 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또는 언론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 평생을 바친 직장이었기 때문에 관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나름의 생각을 하고 국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단히 민주당을 비난하는 말로 이 토론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이 법안들의 속도감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사고가 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물론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다시 한번 통과가 되지 못했던 그런 법안들입니다만 이번 특히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나서 더 큰 자신감을 얻었다, 첫 번째 이렇게는 보이는데 그 자신감이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자신감으로 느껴집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국가가 어떻게 민주주의가 붕괴되는지 또는 일종의 국가 전체주의로 가는 길들 그리고 독재로 가는 길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서적들을 보면 결국은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에,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모든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언론개혁과 사법개혁을 잘못했기 때문에 또는 의도적으로 언론과 사법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한 나라에서 굉장히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들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지금 민주당이 이 법안에 대해서 여야의 정치 후견을 완전히 없애고, 그러면 완전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외국의 사례처럼 각 직역별 이해관계를 고려한 어떤 이사회를 구성한다든지 또는 지역별 배려를 한 이사회를 구성한다고 한다면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생각이 있습니다만 이 법안은 정치적 후견주의, 여러분들이 그토록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더욱 강하게 반영한 법안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한 대목 한 대목 잘 짚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거의 모든 방송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편성위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방송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상파가 있지요, KBS MBC SBS EBS. 그리고 종합편성채널, 채널A TV조선 MBN JTBC. 보도전문채널, YTN 연합뉴스TV. 이 모든 채널에 편성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 이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거의 모든 방송사에서 저에게 사실은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송사들의 하소연이 단지 방송사업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것을 하소연한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

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편성위원회라는 것이, 방송국에 근무를 해 보지 않은 분들은 이 편성위원회가 어떤 것인지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성위원회는 그냥 말 그대로 방송사가 어떤 제품을 생산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방송사 자유의 핵심은 편성의 자유이고, 신문사 언론 자유의 핵심은 편집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아침 6시부터 방송을 시작해 가지고 밤 12시, 1시에 보통 방송사를 정파를 하게 되는데 이 시간 동안에 어떤 방송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성격을 가진 방송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이것은 방송사의 전적인 자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어떤 정치 후견인들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프로그램이 나간다고 해서 항의를 하지요. 전화해 가지고 '그것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당과는 전혀 생각이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항의를 하시는데 이게 관행적으로, 저는 방송국에 들어오면서부터 청와대로부터 그런 항의 전화도 받고 정당의 주요 간부들로부터 그런 전화를 받고 개인으로부터도 그런 전화를 받고 노동조합으로부터 항의도 받고 이런 것들과 싸워 나가는 과정들이 사실은 어떤 특정한 정파적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보건대 그것은 언론의 속성이고 그것은 언론의 기본적인 책무인 것입니다. 언론은 모든 사회적 비판 세력, 언론은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썩지 않게 이 세상을 만들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적인 책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송사의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프로그램을 없애라 또는 그 방송사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진행자를 바꿔라, 그동안은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 온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TV조선에서 앵커를 하던 시절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허가 조건을 저희가 받은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로 방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저희가 재허가를 받으면서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뉴스 앵커 같은 경우, 보도책임자의 경우에 방송을 하다가 법정제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법정제재를 한 번 받으면 그 진행자, 앵커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 있는 이런 조건들도 저희가 가지고 방송을 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제가 재허가를 받으면서 이 부분만큼은 좀 삭제해 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호소를 했는데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없애 주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입장에서 보면 방송은 그렇게 껄끄러운 존재이고 그렇게 불편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권력이 방송을 끊임없이 통제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80년대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90년대는 신문과 방송이 세상을 바라다보는 거의 유일한 창이었기 때문에 그 방송에서 한마디 나가는 것, 그 방송에서 나에 대해서 하는 한마디의 평가 이런 것들이 정치인의 생명을 좌우하기도 하고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창출할 수 있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방송의 영역이 끊임없이 확대돼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방송의 그런 부분들도 지금의 시대에 맞게, 제가 말하는 지금의 시대는 방송이 이제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왜냐하면 80년대까지만 해도 MBC KBS, 두 개의 방송국밖에 없었고 91년도에 SBS가

생기고 95년도에 YTN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역 민방들이 여러 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종합편성채널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방송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생겼습니다만 방송사가 두 개밖에 없던 시절에는 정말로 방송의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 시대에는 어떻게 그 방송사의 힘을 좀 줄일 수 있게 통제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이 힘으로 방송국을 굉장히 억누르려고 하는 욕구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80년대의 대한민국 방송 저널리즘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손석희, 엄기영, 이윤성 또 KBS 보도본부장 하시던 이런 분들이 방송 앵커를 하던 시절에는 방송의 영향력이 굉장히 셌습니다. 더 잘 아시는 분 있지요. 봉두완 이런 분들이 TBC에서 방송을 할 때 정말 권력에 대해서 가감 없이 말씀을 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방송 저널리즘의 전성시대, 미국으로 치면 1980년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방송의 힘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권력이 방송을 어떻게 통제하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송의 힘을 권력이 통제하는 시대로 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다시 방송을 세계 속의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게 우리가 방송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판단되는 이 권력으로부터의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풀어 줘야 될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방송사가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특히 이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굉장히 새로운 제도를 많이 도입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방송국을 더 옥죄기 위한 법적인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민주당 의원분들이 방송국들은 잘 통제를 해서 우리 말 잘 듣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역사적, 전 세계적인 주류가 이렇게 방송을 권력이 함부로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법 개정안의 더 결정적인 문제는 영국이라든지 일본식의 공영방송의 문제가 아니라 민영방송까지 통제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편성위원회라는 것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 편성위원회가 공영방송에만 편성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영방송의 편성을 외부 통제를 받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의 제도개선 저는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민영 보도전문채널이라든지 종합편성채널까지 편성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물론 지금도 편성위원회가 노사 자율로 잘 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으로 강제하는 겁니다. 강제하는 정도가 그냥 만들어야 한다가 아니고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센 거지요. 굉장히 센 겁니다.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것이 이 정도 벌금을 맞으면 방송사들이 재허가에 치명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편성위원회 설치안을 구체적으로 봤더니 정말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방송사업자가 소속 구성원 중 5명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방송사 쪽에서 5명, 사 측에서 5명을 추천합니다.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5명은 아마 방송사 임원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도본부장, 경영본부장 이런 분들이 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5명을 뽑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지금은 이석하셨습니다만—노종면 의원, 최민희 의원과 제가 좀 언쟁이 있었습니다만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의 종사자 대표……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김현 의원님은 자꾸 쫑알쫑알하시지 좀 마세요.

(○김현 의원 의석에서 — 처음 얘기했는데요, 지금은.)

하지 마세요, 좀.

(○김현 의원 의석에서 — 쫑알쫑알이 뭡니까?)

하지 마세요. 그동안에 김현 의원님이 제 발언을 방해한 것에는 그 발언도 아깝습니다. 조용 좀 하세요. 김현 의원, 조용 좀 하세요! 다음 순서에 하신다면서요. 다음 순서에 나와서 하세요.

(○김현 의원 의석에서 — 쫑알쫑알이 뭐냐고요. 막말하지 마세요.)

다음 순서 하신다면서요. 그때 나와서 하세요. 제가 방해 안 하겠습니다.

(○이성윤 의원 의석에서 — 사과하세요. 쫑알쫑알이 뭐예요!)

(○김현 의원 의석에서 — 뭐라고요?)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의 종사자 대표가……

(○김현 의원 의석에서 — 사과하세요!)

오늘 사과를 너무 많이 요구하셔 가지고, 사과를 너무 많이 요구하셔서 김현 의원님 말에 제가 일일이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김현 의원님은 이렇게 지금 제 발언을 방해하시는 것이……

(○김현 의원 의석에서 — 뭘 방해했다는 겁니까? 뭘 방해했어요?)

이 방송법을 만든 것에 대한 개인적인 수치심을……

(○이성윤 의원 의석에서 — 사과하세요!)

○의장 우원식 신동욱 의원님……

○신동욱 의원 좀 가리기 위한 것일지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의장 우원식 다른 입장으로 토론할 때는 가급적이면 들으시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면서 과한 표현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동욱 의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성윤 의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의장 우원식 의원 간에 쫑알쫑알 이렇게 얘기한 건 적절치 않지요.

○신동욱 의원 제가 여러 가지 과한 비난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우원식 그리고 발언을 할 때 가급적이면 들으세요. 그리고 다음번에 나와서 반론 이야기하면 되니까.

○신동욱 의원 그러세요. 다음 순서에 민주당 순서가 있잖아요. 제가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세요. 들으세요.

○의장 우원식 그리고 표현은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의원 지금 제가 4시경부터 발언하는데 아마 제 발언시간의 한 30분 정도는 김현 의원님이 제 발언에 끼어들어서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히 하셨습니다. 충분히 하셨고, 그렇게 방해하셔도 제가 여기서 안 하겠습니까? 계속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안을 만든 것에 대한 비판이 불편하실 수는 있습니다. 김현 의원님이 주도하셔서 아마 만드신 것 같은데 불편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국회는 토론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 토론에 대해서 들어 보시고……

(○김현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제 이름 거론하지 않기로 해 놓고 바로 거론하십니까.)

제가 발언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제가 이름을 거론한 것 이상으로 더 매너가 나쁘신 거예요.

(「그냥 진행하세요. 읽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좀 조용하세요. 그러니까 좀 조용들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하시라고요. 자꾸 서로가 말이 끝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행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지금 발언자를 향해서 저렇게 원색적으로 소리를 지르시는데 자꾸 그냥 하라는 얘기는 도대체……

(「그러니까 할 말을 다 하셨으니까, 자꾸 지적을 하면 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꾸 지적을 하니까 또 말이 나오잖아요. 그냥 하시라고」 하는 의원 있음)

자꾸 지적을 하니까 말씀이 나오신다고 그래서 앞으로 지적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 하시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5명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의 종사자'라는 표현이 대단히 모호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기자협회장도 있을 수가 있고 피디협회장도 있을 수가 있고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의 종사자들은 상당 부분 노동조합의 영향력하에 있는 사람들이 편성위원회에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게 어떤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냐? 편성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회사의 제작에 관한 대부분의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작과 보도를 결정하는 데 대부분의 심의·의결권을 이 편성위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편성규약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방송편성규약의 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규약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준수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세 번째는 방송프로그램의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 물론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 시청자위원도 편성위원회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밖에 방송편성규약에서 정하는 사항.

그러니까 방송편성규약은 편성위원회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편성규약이라는 것 안에 이 편성위원회가 광범위하게 어떤 것도 심의 의결할, 편성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어떤 것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방송편성규약에 정하는 사항'.

결국 이렇게 보면 회사의 이사회라는 것이 유명무실해지는 겁니다. 방송사의 경영을 좌우하는 편성위원회를 이렇게 노동조합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 둔다고 하면 실제로 방송국은 노동조합의 방송국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왜 이런 우려를 표시하느냐? 이것 자체도 맞지 않습니다. 회사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자본주의사회의 기업 저기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방송의 상당 부분이 다 민주노총 소속의 언론노조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언론노조 KBS본부, 언론노조 MBC본부·지부, 언론노조 SBS지부, 언론노조 YTN지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경험으로는 방송사의 노동조합은 거의 언론노조의 행동지침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한 진실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은 민주당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그 방송사의 노동조합을 사실상 상위 기구로서 통제합니다. 그리고 그 언론노조 지부노동조합에서 편성위원회의 과반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 방송사는 누구의 방송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언론노조의 방송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노총이 원하는 보도를 하고 민주노총이 원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노동조합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도 노동조합 간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 들어서 노동조합의 정치화 성향을 보면 과연 방송국을 중립성을 지키는 방송국으로 그냥 둘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건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민주당 의원님들도 우리 편이니까 예뻐 보일지 모르지만 진실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방송국들이 언론노조 휘하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민주노총 휘하에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방송국의 경영에, 방송국의 편성에 노동조합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법, 이게 바로 이 편성위원회에 대해서 방송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노동조합도 방송사업자의 대화의 파트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동조합이 방송사업자와 건전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어떤 정치 목적의 주장을 하지 않고—이런 노동조합이라면 아마 이거 별로, 그런 노동조합으로 지금 언론노조가 기능을 해 왔다면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각 방송국들의 노조가 방송국 보도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여러 차례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언론이, 그냥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얘기만 해 주는 언론이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사가 됐을 경우에 그것이 저는 민주당에게도 결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민주당도 건전한 언론의 견제를 받을 때 정말 좋은 정당으로 기능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썩는다. 그 견제의 요체는, 정당을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힘은 저는 언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합니까? 힘세시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못 할 거 없잖아요. 민주당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어쩌면 그게 여론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그것이 언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견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역시 언론입니다. 그것도 역시 여론입니다. 그 비판적 여론을 조성하는 언론의 기능이 민주당에게만 일방적으로 우호적인 여론으로 갔을 경우에 과연 민주당에게는 그게 좋을까요?

그런데 이 편성위원회 법안을 보면 아무리 봐도 이거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방송 독립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편성위원회라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

드린 이 5개의 조항을 가지고 방송사의 경영에 대해서 좌지우지한다면 회사 이사회는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특히 민영방송의 이사회가 사실상, 방송사업자가 소속 구성원 5명을, 여기 이사들이 대부분 들어갈 것 같은데—제작본부장, 보도본부장, 경영본부장—이사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이 편성위원회가 민영방송사의 모든 것을 규율하는 사실상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 편성 부분, 편성위원회에 5명 들어가게 되는 종사자 대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과 같은 이해관계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방송국은 노동조합이 통제하는 방송사로 전락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여러분,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자유 아닙니까? 언론 없이 민주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 언론이 저희에게 불편한 언론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불편한 언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불편한 언론이든 제가 바라는 것은 언론은 모든 사람에게 불편한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보면 이 부분은, 제가 민주당이라고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극대화시켜 놓은 이 편성위원회의 구성안을 보면 이것을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과연 민주당에게는 좋은 것인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법을 만드실 때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만드시지는 않았겠지요. 민주당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드셨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일까요? 언론이 마냥 정치권력의 애완견이 된다고 하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우리의 지주 하나가 사실은 부러지는 겁니다. 그 지주를 부러뜨리는 법안을 지금 민주당이 발의하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견해 차이를 가지고 고성이 오가고 하는 것 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편성위원회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은 편성위원회의 제청에 따라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위원회가 제청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역시 노동조합이 편성책임자를 선임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문 보시면요 발행인이라는 게 있고 편집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편집인을 따로 두고 있는 것은, 발행인은 신문의 발행에 관련한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편집인은 편집의 독립을 천명한 것입니다. 물론 발행인과 편집인이 같은 회사도 있습니다만 편집인을 따로 두는 것은 상징적으로나마 신문은 편집의 독립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내외에 천명을 하는 것입니다.

방송편성책임자, 여러분들 아마 TV 블루 바 나올 때 보면 편성책임자라고 나옵니다, 마지막에. 사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편성책임자 이름으로 나오느냐, 마지막에? 우리는 방송편성을 독립해서 책임지고 있다라는, 편성책임자는 누구인가, 제조기업의 생산책임자가 누구인가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 놨겠습니까? 방송 자유의 핵심이자 요체가 바로 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편성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게 모든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편성의 자유를 침해하면 방송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은 노조가 편성책임자를 임명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뭐 대단히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법은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그 방송사의

언론의 자유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송 자유, 방송국에서 시행하는 언론 자유의 핵심은 편성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편성한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방송한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도한다, 이게 편성의 자유입니다. 이 편성책임자는 방송 자유를 수호할 최종 책임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노동조합에게 편성책임자를 선임할 의무를 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노동조합이 여러분들을, 저는 노동조합 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알지만 아무리 민주노총이 이뻐도 이런 법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노총의 가치보다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가 더 소중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이제 밖에서 오시는 분은 다 저한테 시비를 거시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김현정 의원 의석에서 — 존중은 해야지요. 다른 조직을 왜 이렇게 욕을 합니까?)

김현정 의원님, 제가 욕을 한 것이 아니고요,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김현정 의원 의석에서 — 민주노총 얘기 말고 하세요, 그냥.)

아니, 민주노총은 민주당의 성역입니까?

(○김현정 의원 의석에서 — 민주노총이 국민의힘한테 왜 여기서 그렇게 매도당해야 됩니까?)

아니, 제 말씀 들어 보세요.

(○김현정 의원 의석에서 — 민주노총하고 가서 토론을 하세요, 그러면.)

아니, 들어 보시라고요.

이걸 왜 민주노총과 토론을 합니까? 민주당과 토론해야 될 법이지.

김현정 의원님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짤막하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편성위원회에 노동조합이 5명의 위원을……

(○김현정 의원 의석에서 — 밖에서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왔어요.)

그러신데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 방송법은 여러분들이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방송사 안에서 극대화시키기 위한 법이다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법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민영방송 사장후보추천위원회 문제 그리고 편성위원회 문제인데 이 편성위원회는 도대체 이 아이디어를 누가 내셨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편성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배후가 도대체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편성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제가 하는 의심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러면…… 저도 민주노총하고 척지고 싶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이 저 좋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노동단체가 대한민국 방송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포진해서 방송국을 본인들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하는 시도를 민주당이 자리를 깔아 주시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건 괜찮아요?)

지금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시니까 마음대로 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현정 의원 의석에서 — 윤석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현정 의원님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괜찮으시냐고 하기 때문에……

(○김현정 의원 의석에서 — 그것에 대한 비판도 하세요.)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인데 과거 얘기를 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이 법안을 보시면 아마, 요즘 바쁘셔서 아마 못 보신 것 같은데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방송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으신 분인데, 아마 휴가 가셔서 이 법안이 이렇게 강행처리되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셨으면 '아, 그것 참 잘하는 것이네'라고 말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편성위원회 얘기를 제가 자꾸 하게 되는데, 방송편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방송사의 핵심입니다. 방송사의 콘텐츠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 국회가, 국회의 핵심적인 기능이 법안을 만드는 것이고 기업의 핵심적인 기능이 상품을 만드는 것이듯이 방송사의 총체적인 철학이 바로 이 편성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정치권력이 이렇게 회사의 제품 구성까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방송을…… 저는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게 불편하시면 그렇지 않다라고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이 법은요 어쨌든 노동조합이 회사의 제품을 만드는 데까지 전면적으로 개입하는 법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정확하게 제가 비유를 들자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보너스 더 줘라', '임금 더 줘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전기차의 비중이 너무 작으니까 좀 더 늘려라', '수소차 만들어라', '휘발유차 그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는 민영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그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회사 경영진의,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지 생존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은 경영진의 고민입니다. 이 고민을 왜 편성위원회가 하게 만듭니까? 저는 그래서 편성위원회가 정말로 좋은 결정들을 해서 돈 많이 벌게 해 주시고 하면, 그래서 나중에 대한민국 방송사들이 전부 부자 되고 돈 많이 버시면 제가 오늘 한 발언 다 취소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연코 취소할 일은 없을 것 같은 걱정이 들어서…… 나중에 '그러면 그때 당신들이 반대하지 왜 법안 논의할 때 아무 얘기도 안 했어?' 이런 얘기 아까도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런 말씀은 사양하겠습니다.

민영기업의 제품 만드는 데 대해서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위원회 기능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서도 대체로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 곳은 정치적 후견주의가 굉장히 강한 공기업이거나 또는 그 회사 제품의 공공성이 매우 강해서 회사의 경영진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는 경우거나……

그래서 저희가, KBS 같은 데 그동안 끊임없이 정치권력이 이래라저래라 간섭들 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저희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전 방송사에 편성위원회를 의무화한다고요? 어떻게 이런 위험한 발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는 이미 대한민국헌법에도 규정이 돼 있고 방송법의 너

무 많은 부분에서 이게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제 생각으로는 방송사들도 이 법이 통과되면…… 모르겠습니다. 워낙 정권 초기여서 눈치를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헌법소원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고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송법 4조를 보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지금 만든 이 법안에서 이게 자유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독립적인, 방송사업자로부터 분리된 독립적인 편성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회사의 경영에 전면적으로 간여하는 것, 이게 저는 민주당이 자꾸 자유라고 생각을 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기업도 사주와 뭘 분리하는 것, 근로자를 분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유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노동조합을 위한 자유와 독립이 아닙니다. 방송은 그 자체로서 사회의 부패를 막기 위한 공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독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방송이 독립해야 될 대상은 첫 번째 정치권력, 두 번째 정당, 세 번째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단체, 네 번째 상업권력, 이런 것에서부터 독립하는 것을 방송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지 방송사업자하고 종업원 집단을 분리시키는 것, 이게 방송 독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거예요, 이 법 만드신 분들.

방송사가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오너를 거의 쫓아내다시피 한 방송사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방송사의 방송 독립 지수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방송사가 대기업인 경우에 그 방송사의 대주주가, 대주주만 쫓아내면 그 방송사의 독립이 보장된다고 자꾸 말씀들 하시는데 대주주로부터의 간섭과 침해는요 제 경험으로는 정말 미미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있던 직장이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SBS가 무슨 대주주가 보도에 그렇게 큰 영향력 행사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못 합니다. 저는 SBS에서 10년 가까이 앵커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대와 달리 대주주 쪽의 분으로부터 제 앵커 멘트를 이래라저래라 하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자꾸 뭐 써 주면서 방송사 오너가 이렇게 방송해라, 저렇게 방송해라 요구하시는 것 같지요? 이미 그 정도는, 방송 제작자와 소유주 사이의 제작과 경영의 분리는 이미 상당 부분 대한민국 방송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제하는 장치가 너무나 많습니다. 노동조합의 간부가 편집회의에도 참여하게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방송사업자로부터 뭔가를 떼어 내야만 이게 독립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독립에 결정적인 위해가 될 정도로 간여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MBC·KBS는 사주가 아니라 월급 사장이니까 더 그렇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인사권 정도 아마 행사하실 겁니다, 인사권 정도. 물론 그 인사권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철학에 좀 더 근접해 있는 사람을 사장을 시키고 그 사장이 본인이 지명받은 취지를 감안해서 간부를 임명하는 구조, 이 구조는 민영기업이 그 정도를 할 수 없으면 그것은 민영기업이 아닌 거지요. 그런데 그 민영기

업이 그렇게 해서 탈선을 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통신위원회·방심위 무섭습니다. 정말로 방송사들이 잘만 운영하면 어떤 것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제도적 견제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사 오너가 본인 원하는 대로 '오늘 뉴스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앵커는 이렇게 얘기해라'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이런저런 공격만 하지 않으면 우리 방송사 종사원들, 방송기자들 다 자기의 책임하에 좋은 기사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의사소통이 왜곡되느냐? 위에 계신 분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상업권력으로부터 노동조합으로부터, 저는 노동조합으로부터의 압박을 받아서 편성이 침해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 왔습니다. 이런저런 간여를 받으면서 본인이 괴로우니까 보도책임자, 제작책임자에게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도 가만두면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분들이 아래에 영향력을 자꾸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어떤 경우에는 '대통령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봐주라' 또 어떤 경우는 여당 대표가 '우리 이런 프로그램 하려고 하는데 좀 봐주라'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방송 독립을 지켜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요 방송사들은 이미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구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편성위원회 굳이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편성위원회를 설치할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누군가를 위한 자리 만들기 위한 법이 아니면 이런 것을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왜 만듭니까, 옥상옥인데?

편성위원회 구성됐다고 칩시다. 편성위원회 회의를 하겠지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씩. 노조 쪽에서 지명하신 분 5명, 방송사 사용자 쪽에서 지명한 5명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저는 그 상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말 아찔합니다.

자, 보도본부장하고 기자협회장이 앉아 있어요. 제작본부장하고 노조사무국장이 앞에 앉아 있어요. 그래도 10명이 회의를 하면…… 이게 도대체, 기업에서 오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결정, 결론 나겠습니까? 안 나지요. 제가 보기에 절대로 안 납니다. 계속 싸우다가 감정은 감정대로 상하고, 결국은 노동조합에서 막 압박하겠지요. '이것 안 들어주면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막 압박하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서 결론 내릴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천천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편성위원회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의 방송사들이 그렇게 느긋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서 중요한 투자의 기회를 다 놓치고 정말 중요한 제작프로그램 결정하는 데 편성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이것 안 돼', 피디가 무슨 좋은 기획을 해 가지고 오면 편성위원회에서 '여기 진행자가 누구야, 출연진이 누구야, 이놈은 우리한테 별로 우호적이지 않은 출연자인데, 우리가 싫어하는 진행자인데, 이것 안 돼'.

그러면요,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몇 달을 기획합니다, 프로듀서들이 또는 보도책임자들이. 그런데 몇 달을 기획하는데 편성위원회 가 가지고 그것 논의하다가 '안 돼' 그러면 또 몇 달 걸릴 것 아닙니까? 또 몇 달 걸리겠지요. 이게 봉숭아학당이라고 하

는 겁니다. 이게 봉숭아학당이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로 제가 냉정하게 여쭙습니다. 직원 대표 5명하고 사 측이 지명한 대표 5명이 회의를 해요, 그것도 방송사의 중요한 프로그램을 두고. 방송사의 중요한 투자 결정을 두고 회의를 하면 결론이 안 납니다. 제가 경험했던 방송사에서는 절대로 결론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론 나느냐? 회사 쪽에서는 개인적으로 잘 구슬릴 수 있는 구성원을 하나씩 맡아 가지고 '이것 이렇게 좀 해 줘. 우리 이것 안 하면 큰일 나는 것 너도 잘 알잖아' 이런 방식으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편성위원회가 구성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용자 측에서 지명한 편성위원은 예를 들면 기자로서 본부장까지 간 사람이고 종사자 쪽에서 한 기자협회장은 이제 한 10년 차 된 아주 정의감 넘치는 기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싸우면 결론이 나겠습니까? 저 결론 안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편성위원회가 아주 제한된 범위 내의 어떤 것들만, 중요한 결정만 하는 거면 그게 한 달이 걸렸든 6개월이 걸렸든 좋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요 정말로 중요한 결정은 하세월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기업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또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장추천위원회는 사용자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 민주노총의 1노조 이렇게 합의를 해야지 민영방송의 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YTN 같은 경우에.

그런데 처음에는 사 측에서 경영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 사장추천위원회 이런이런이런 사람으로 만듭시다' 하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노동조합과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장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면 절대로 합의해 주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면 본인들이 들러리를 서는 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조합의 합의를 거쳐서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본인들이 원하는 사장을 뽑을 수 있는 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절대로 합의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두 가지가 되겠지요, 극단적인 어용노조를 만들어서 회사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대로 하든지 아니면 회사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든지.

회사가 사장 못 뽑아서 몇 달 동안 허송세월해. 어렵게 사장 만들어 놨더니 편성위원회라는 것이 사사건건 발목 잡아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들어. 방송사 프로그램 좀 괜찮은 거 있는데 진행자가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바꾸라고 그러네. 그러면 누구로 바꾸지? 그러면 저쪽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바꿔 놓으니까 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 그건 안 되지', 저는 이런 걱정이 제가 방송국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한번 상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도 없어, 편성위원회는 사사건건 이해관계가 충돌돼 가지고 싸워, 그러면 그 회사는 누가 경영합니까? 그렇게 하다가 서로가 골치 아프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 가지고 어떤 중요한 투자 결정했어. 그러면 그거 망가지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민영방송의 이사들은 주주 충실의무 있다면서요. 우리 상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외이사들도 전부 다 '이거 그만둬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소송 들어올까 봐.

그런데 편성위원회는 책임도 안 져요. 편성위원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은 방송사업자가 집니다. 방송법 4조, 방송편성의 주체는 방송사업자로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맞지 않지만 도대체 책임지지 않는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 권한을 가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간부들이 책임지겠지요, 본부장들이. 적어도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책임과 권한은 일치시켜 줘야지 그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방송프로그램 편성권은 방송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게 무슨 방송사업자의…… 저희가 방송사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좀 더 원색적으로 표현을 하면 대주주잖아요. 오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듣기에는 '방송국은 오너들이 간여하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아마 민주당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게 굉장히 지고지순한 철학일 거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회사이기 때문에 사장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아니라요……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은 월급 주는 날이 돌아오는 게 가장 무섭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회사 망하는 게 가장 걱정이겠지요. 지금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방송국들. 시청료 받는 KBS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영방송사들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민영방송사들이 사장 뽑느라고 날 새고, 무슨 중요한 투자 결정은 하지도 못하고, 투자 결정 잘못해서 사고 나면 책임지라고 막 그러고, 정작 그 중요한 결정을 하는 편성위원회는 책임도 안 지고. 이런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물론 극단적인 예를 든 것입니다. 아름답게 잘해 나가는 곳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잘못될 수 있는 여지를 너무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구조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드신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언론의 자유를 위한 것이고 명실상부하게 방송의 독립을 위한 것이고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방송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왜 못 해 주시냐는 거지요.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편성책임자는요 법적 책임도 집니다. 편성책임자가 잘못했을 때 사표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위원회는 아무 책임을 안 지잖아요. 세상에 그런 좋은 꽃보직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결정은 다 하면서 책임은 아무것도 지지 않는다.

방송편성규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노조하고 합의해서 편성규약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이제는 이 편성규약을 전부 다 편성위원회에서 만들게 돼 있어요.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는 것이지요.

편성규약이 방송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만 편성위원회가 그 정도까지만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길을 너무 많이 열어 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이거는 방송사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떤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시더라도 방송사를 지옥으로 보내는 길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방송국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되고 방송은 방송종사자들의 것이고 방송의 자율성이 보장될 때 더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말씀들 하시겠지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는 게요, 전국언론노동조합 강령 1호가 편집권·편성권의 노동자 쟁취입니다. 저는 여기서 왜 편집권·편성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일반인들이 듣기에 편집권이라고 하면 보도 부분만을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보도 부분의 편집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공정, 흔히 방송사 노조에서 파업할 때 공정 방송 공정 보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 보도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언론노조 강령 1호가 편집권·편성권 독립이 아니라 편집권·편성권의 노동자 쟁취입니다.

물론 노동조합이니까, 언론노조니까 노동자 쟁취라는 표현이 그렇게 함부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그렇게 강령 1호로 넣을 정도로 편집권·편성권은 방송 독립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데 노동조합이 방송 독립을 뺏어 가는 것을 강령 1호로 넣었을까요? 쟁취라고 하지 않습니까? 쟁취는 뺏어 가는 거지요. 왜 뺏어 가는 것을 강령 1호로 넣었을까요?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언론노조가 대한민국 방송 노동자들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언론노동조합 강령 1호가 편집권·편성권의 노동자 쟁취라고 돼 있습니다. 왜?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신문에서 편집권을 쟁취하고 방송에서 편성권을 쟁취하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아마 오늘 제 말이 불편하셨겠지만 제 말을 들으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시게 된 분들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언론노조가 강령 1호로 내세운 편집권·편성권 노동자 쟁취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이 편성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방송법 개정이 노동운동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언론 사주가 보도에 불필요하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방송의 편집권·편성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정치권력이 나서서라도 막아 줘야 되겠지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 언론사가 그렇게 언론 사주, 소위 방송사업자가 시시콜콜 편집·편성,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 저런 프로…… 물론 간혹 가다가 본인이 아이디어가 있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면 어때’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도 간혹 말 잘 듣는 피디들은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 그대로 따라서 하시는 피디들도 있고, 또 피디들이 자기도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작자로서. 말 잘 안 듣습니다, 이미. 기자들이 기사 쓰라고 한다 해서, 보도국장이 기사 쓰라고 해서 기자들이 기사 잘 안 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기사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쓰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노동조합이 관여하면 조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기에 방송사업자가 보도나 제작에 관여해서 자율성을 침해했을 때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하나가 있고요. 권력이 방송사의 편집이나 편성에 관여해서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상업권력이 편집이나 편성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광고를 무기로. 그런데 그 상업권력이 관여하는 부분은 돈과 결부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양해되는 경우가 이제는 많습니다. 방송사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무슨 삼성이 대한민국 언론을 물밑에서 다 주무르고 이런 것 없습니다. 물론 광고 때문에 삼성이, 현대자동차가 어떤 부탁을 하면 언론사가 광고 실어 주면서 기사도 좀 써 드리고 이런 경우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무슨 보도의 방향에 대해서 기업이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한다? 적어도 20년 전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요체는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의 편성권을 독립시키는 것이 방송 독립의 지고지순한 가치인 것처럼 묘사가 돼 있어서 시대를 굉장히 잘못 읽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민영방송에서 대주주라고 하고 있는 분들이, 신문사는 많지요. 방송국은 없습니다. SBS하고 YTN밖에 없습니다. 물론 종편 4사가 있지요. 그런데 종편 4사는 대주주가 신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우가 좀 다릅니다. 대주주가 메이저 신문사들이지 않습니까, 종편 4사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송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SBS하고 YTN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SBS하고 YTN에 다니시는 간부시거나 이런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 되면 도대체 이 회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진영을 불문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분들이 이 법안에 무슨 진영을 따지겠습니까?

편성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허가할 때 그 회사가 심각하게 '편성 이게 방송사업자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 이런 회사들은 방송사들 자율적으로 편성위원회 만들라고 권고해서 편성위원회가 만들어진 회사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용기를 주고, 가급적이면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제품을 만들고 방송을 만들고 보도를 할 수 있게 어떤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줘야 될까 이것을 저희가 걱정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법적으로 강제를 하면 어떡합니까? 이것 안 하면 감옥도 보내시겠다고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번 방송법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가 결국은 방송사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하느냐, 방송사의 경영을 어떤 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이냐 하는 이 문제 아닙니까? 공교롭게도, 그런데 공교롭게도 민영방송사의 사장을 선임하는 문제에 노동조합이 아주 직접적으로, 소위 얘기해서 노동조합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장을 뽑을 수 없는 구조,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사장을 만들어 놔도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회사의 운영을 그 위원회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 이 두 개의 족쇄를 채우는 겁니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지요. 지난 정부에 방송법을 민주당이 가지고 오셨을 때 무슨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30명으로 늘리고 여러 가지 안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것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상적으로는 여러 사람이

뽑으니까 좀 더 나은 사람을 뽑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상상을 할 수 있지만 불가능하다, 이것 현실적으로. 그리고 지난번에 MBC에서 사장추천위원회라는 것 백몇십 명 뽑아서 해 봤더니 배가 산으로 가더라. 민간방송사는 생존이 중요한데 이것은 도대체……

방송사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일단 경영 사장으로 뽑아 놓고 그 회사의 노동조합과의 방송편성규약을 통해서—보도 부문은 임명동의제 다 하시지 않습니까—보도 부문은 간섭하지 말아라, 그게 언론 독립의 아주 핵심적인 요체니까, 그냥 이 정도로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 사장 문제는. 왜냐하면 이게 무슨 토끼몰이도 아니고 정권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사장 쫓아다니면서 나가라고 꽹과리 치고 시위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막아야지요. 우리가 적어도 방송사 사장들의 무슨 안위를 대단히 걱정해서가 아니라 그래야지 그 사람이 방송사에 재직할 때 소신껏 그 회사를 이끌어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경영의 성과를 가지고 그 사람을 해임할 수도 있지요, 이사회가. 그런데 정치적 후견자들이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토끼몰이하듯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조금 더 심한 경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무슨 법인카드로 김밥을 사 먹었네, 떡볶이를 사 먹었네 이런 것 가지고 망신 주고, 적어도 대한민국 공영방송 사장에 대해서…… 잘못하면 벌 받아야지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우리 국회의원들도 언론에서 '저 사람이 어디서 뭘 어떻게 했는데', 억울할 때 많지 않습니까. 우리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특권 내려놓자고 얘기하는 것이고. 언론이 막 이상한 기사 가지고, 괴롭힘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것 너무한데'……

그런데 방송사 사장도 적어도 그 사람이 품위 있게 일을 했다고 판단하면 물러날 때도 명예롭게 물러나게 해 주고…… 이게 언론의 자유와 별개의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방송사 사장들이 정권만 바뀌면 새 정부하고 줄 대려고 노력하고 어느 날 갑자기 보도가 바뀌고, 망신당하지 않으려고.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 아닙니까? 그것 계속하시겠다고요, 앞으로? 이 구조를 보면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앞으로는 정권이 어떻게 되더라도 언론만큼은 확실하게 우리 편 드는 언론을 만들어야겠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유혹 이해합니다. 정치권력은 언론이 도와주면 좋지요. 언론이 우리 조금 잘못하더라도 좀 덜 세게 때리면 그 언론 예뻐 보이지요. 또 결정적인 순간에, 대통령선거 할 때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해 주면 고맙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 유혹을 조금 떨쳐 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방송사를 위해서, 한국 방송을 위해서, 세계적인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가진 대한민국 방송의 생존을 위해서, 더 많은 좋은 방송 콘텐츠가 자유롭게 만들어지는 여론의 자유시장 형성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언론을 좀 놓아주고 그들이 만들어 내는 여론의 자유시장 속에서 정치도 언론의 진영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MBC나 JTBC에서 방송 출연하라 그러면 되게 불편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TV조선 방송 출연하려고 하면 되게 불편하시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언론계에 오래 있으면서 그런 구조

속에서 한 축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언론이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면, 물론 이게 참 꿈이겠지요. 전 세계적으로 양극단화 현상이 매우 심각하게 정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언론도 거기에 맞추어 가는 듯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한 정당이 원하는 방송국이 대한민국 전체 모든 방송국인 것은 민주당을 위해서도 정말 불행한 겁니다.

저는 MBC가 부르더라도, JTBC가 부르더라도 또 오마이뉴스가 부르더라도 정말 가서 제 생각을 마음껏 얘기하고, 제가 비난받는 게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송사에 나가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 밑에는 욕설만 달리기 때문에 이게 자유로운 여론 형성 시장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언론을 떠나서 정치로 왔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데 나가서 저희가 얘기하더라도 찬반 여론이 자유롭게 꽃피고 저 사람 말에 동의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아름답게 논쟁하고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것은 제가 너무 무리한 생각이겠지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만들 자신이 없으면 법을 이렇게까지 만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방송사들 알아서 하게 둡시다. 도대체 방송사들이 알아서 하게 두면 안 되는 이유는 또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방송사들의 발목을 붙잡는 법을 굳이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언론계 생리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국회의원 여러분, 편성위원회를 굳이 법으로 강제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 아세요, 혹시? 제가 민주노총 얘기를 하니까 이게 민주노총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발끈하시는데 혹시 아세요? 이 편성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없어도 관계없는 거예요. 방송국이 운영을 못 합니까? 경영을 못 합니까? 아니, 이것 왜 만드시는 건데요, 도대체? 이것 만들어서 무슨 방송국에 좋은 점이 있습니까? 편성위원 5명 자리 만드셔서 방송국 좌지우지하는 즐거움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돼서요 어떤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회사 집행부가 구성이 됐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유로운 여론 시장의 형성에 정말로 장애물이 될 겁니다, 이것은. '그 방송 진행자 누군데? 바꿔'. 민주당 성향에 맞지 않는 진행자가 등장하면 편성위원회에서 바꾸라 그러면 안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꿉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100% 바꿉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얘기, 대한민국 방송사 9개가 달콤한 얘기해 주면 좋으시겠습니까?

과거에 땡전뉴스, 대한민국 언론의 흑역사를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말, 땡전뉴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독재국가들 가 보면, 중국도 가 보면 시진핑 뉴스가 항상 처음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방송사가 대통령 뉴스를 일제히 틀어 대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를 꽃피웁니까.

제 상상이, 제 걱정이 너무 과했다면, 너무 과했다면 참 다행스럽겠습니다. 제 걱정대로,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아무리 봐도 이것이 그렇게 나쁜 쪽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법인 것 같아요. 나쁜 쪽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법인 것 같아서, 이게 무슨 제가 어떤 특정 언론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서 YTN 얘기를 자꾸 합니다만 YTN은 그냥 민영방송입니다. 민영방송 탐나신

다고 이렇게 날로 드시면 안 되지요. 사장을 이렇게 마음대로 뽑아 가시면 됩니까? 못 뽑게 하면 됩니까? 내가 가지고 싶더라도 참을 건 참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민영방송의 사추위를 노동조합과……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아니, 우리가 노동조합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래. 그냥 노동조합이 원하는 사장 뽑으면 좋잖아.' 이 말이 어폐가 있다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요 그 노동조합이 누구의 편인 노동조합을 떠나서 기업 경영의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가치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사회에서 대주주가 사장을 누구의 허락받고 뽑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의 허락받고 사장 뽑으라고 하는 이런 법을 만드는 나라가 과연 자본주의국가입니까?

언론사 한두 개가 우리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를 한다고 해서 지금 뭔 그런 걱정을 그렇게 세게 하십니까? 민주당이 못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입법·사법·행정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무슨 언론까지, 이렇게까지 장악하셔야 되겠습니까?

입법·사법·행정 장악하고 언론장악 하면 그게 바로 독재 아닙니까? 독재가 무슨 사람 잡아가고 감옥에 집어넣어야지 독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 귀담아듣지 않는 것, 저는 그것이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회에서의 독재는 제가 신물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법 통과될 때 토론도 막으셨잖아요, 그동안 충분히 토론했다며. 무슨 토론을 충분히 합니까? 저는 이런 얘기 오늘 처음 합니다. 제가 법사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자료 가지고 갔어요, 그 5분발언 한 번 하려고. 그런데 그 발언 못 하게 막았습니다. 국회에서 이미 충분하게 독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민주당이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사실 그렇게 감동받지 않으리라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국회 다 장악하셨잖아요. 행정부야 당연히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제 검찰도 없애신다면서요. 대법원 판사도 서른 명 만드시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다. 우리 사회에 마지막 남은 소금 한 톨까지 다 그렇게 쓸어서 가져가셔야지 민주당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이 대한민국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 시장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한쪽만의 이해관계가 집중적으로 보도되는 9개 방송사를 둔 그런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20대, 30대들이 살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우리 청년세대들이 결코 용납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20대 아들이 있습니다만 방송 안 봅니다. 방송은 보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다 압니다. 그 친구들한테 방송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언론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알 겁니다, 아마.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관용, 제도적 자제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관용은 '우리 소수 정당이니까 좀 봐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힘을 많이 가진 사람이 다 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관용과 제도적 자제라고 생각합니다. 다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급하게……

아니, 저희가 여당이었던 시절에 곧바로 통과시키지 못하니까 한번 논의해 보자……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논의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냥 민주당이 일방적인 안을 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막았고 재의를 요구했고 통과 못 시키신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법안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내일 바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하시겠지요. 이 상황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막 할 수 있지만 저들이 막아서 어쩔 수 없이라도 좀 자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언론까지 완벽하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이 욕심만큼은 반드시 버려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가장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그 언론의 자유를 수행하는 주체는 방송사업자입니다. 그 방송사업자에게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켜 주는 것, 그것이 언론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고 책임에 맞지 않는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려고 했을 때 그 언론을 사회적 통제하는 것이 바로 방송위원회도 있고 방심위원회도 있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편성권을 방송사업자로부터 떼어 놓는다고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대단한 개혁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방송 현장에 혼란만 초래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대명제, 대전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편성위원회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는 방송사에 대해서 국민들도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방송국이 잘못하면 그 방송사의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사회적 압박을 가해서 그 방송사업자가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것, 이게 공적인 통제였습니다. 그걸 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해 왔지요, 그 공적인 통제를.

그 공적인 통제를 왜 위원회가 했겠습니까, 독임제 기구가 아닌 방송통신위원회. 왜냐하면 언론의 가치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독임제 행정기구가 통제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방송통신위원회도 무력화됐다, 방송사업자도 무력화됐다,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없습니다. 잘 보세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방송사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이 편성위원회가 무한대의 간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정말 밀어붙이시면 안 된다, 정말로 밀어붙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국 종사자들의 자존심은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방송사 종사자들의 자존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방송사업자들이, 소위 방송사 오너들이 그 자존심 위에서 대단히 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변했지요. 방송사 종사자들의 자존심은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방송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힘은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

지 않습니까. 정권 바뀌니까 YTN 사장이 바로 사표를 내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표를 바로 내는 것은 내가 여기 있어 봤자 험한 꼴 당할 것 같기 때문에 사표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사전심의입니다, 사전심의.

여러분 그 유명한 보도지침이라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신문사가 오늘의 신문 판을 쭉 짜면 보안사 대위가 와서 빨간 볼펜으로 쭉쭉쭉쭉 그어서 이것은 빼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제목은 이렇게 바꾸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보도지침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야 생기겠습니까? 아무리 법이 어떻게 되더라도 그런 일은 안 생기겠지만 의외로 방송사업자들의 몸이 약합니다, 요즘은. 이제 알아서 사전심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데 이 프로그램에 적합한 진행자는 A인데 A는 민주당이 싫어한다는데, 노조가 싫어한다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KBS·MBC·EBS 그리고 보도전문채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를 의무화한다',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로써 사장이 임명하는데 임명동의를 요하는 보도책임자의 범위와 동의 절차는 편성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규정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장이 어떤 보도본부장을 임명하고 싶어도, 임명동의를 받게 만들어 놨는데 누구에 대해서 임명동의를 받게 하느냐 이것은 편성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도본부장도 되고 보도국장도 되고, 심지어는 '정치부장 임명동의 받아' 그러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래도 편성위원회가 무소불위가 아닙니까? '보도책임자들 전부 다 임명동의 받아라' 편성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그렇게 된다.

과거에 SBS·MBC·KBS 또 신문사들도 한겨레신문 이런 곳에서 보도책임자 직원 임명동의제를 많이 실시를 했고 지금도 일부 제도를 가지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일정 부분은 임명동의제를 하지요. 그런데 이 임명동의제가 대부분 굉장히 큰 부작용을 낳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사의 임명동의제는 이게 보도책임자가 돼 가지고 임명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방송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조가 방송사업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임명동의제를 활용해 온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임명동의제를 했는데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정말로 방송의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지금은 내부 구성원들도 임명동의제 이걸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서는 KBS·MBC·EBS·보도전문채널 보도책임자의 임명동의를 의무화하는데 이 보도책임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편성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작용이 있든 구성원들이 원하지 않든 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누가 임명동의를 받게 할 것이냐는 편성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야말로 회사의 효율성과 회사 경영의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매일 하는 얘기가 규제 혁파를 외치지 않습니까? 일반 기업의 규제는 관으로부터의 규제 이런 것을 없애 주는 것이지만 언론사의 규제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의 규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편성위원회 만들어라, 사장추천위원회 만들어라, 임명동의제 해라……

방송국은 지금 프로그램만 방송하면 부가가치가 생산되는 그런 자판기가 아닙니다. 방송사 드라마가 시청률 1~2%로, 수백억씩 투자한 방송사 드라마가 1~2%도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정들을 우리 정치가 하면 큰일 나는 거지요.

참고로 임명동의제 도입과 관련한 KBS의 의견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법원은 언론사에서 직원에 대한 임명동의가 문제 된 사건에서 임명에 관해서는 사용자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고 임명동의는 인사권을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이어서 부당하거나 사용자의 인사권 내지 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제한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함. 위법 소지가 있는 직원에 대한 임명동의제도가 도입될 경우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거나 오히려 단체협약 체결을 제약할 수 있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동의제가 불필요한 내부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편성위원회 설치를 강제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과잉입법으로 방송사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거나, 현재 방송사들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편성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편성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하고 관련해서 형사처벌 조항까지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한 경직성과 과도한 국가 개입을 초래한다, 편성위원회의 방송편성규약 제·개정권 독점으로써 방송편성·경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 종사자 대표 추천의 형평성과 민주성에 논란이 있다, 편성위원 중 절반이 종사자 대표 추천으로 구성되나 종사자 대표 선정 방식 자체가 불명확하고 다수 노조가 존재할 경우에 형평성에 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은 상식적인 걱정입니다.

두 번째로 KBS·MBC·EBS를 저희가 흔히 공영방송이라고 하는데, 방송사업주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공영방송이라고 하는데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영방송 이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KBS나 EBS의 경우에는 사장을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특히 민주당 정권이 탄생하면 이 이사들을 바꾸기 위한 굉장히 집요한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지요. 그래서 소위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논의는 그동안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안을 보면 개선이 아니고 개악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BS는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합니다. 그런데 15명 중에 국회에서 6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석수로 해 보면 국민의힘이 2명, 민주당이 4명 이렇게 배분이 되고요.

민주당에서 4명을 뽑을 수 있습니다, 15명 중에. 시청자위원회 2명입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편성위원회가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인 편성위원회가 시청자위원을 만들고 그 시청자위원회에서 KBS 이사 2명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제 가정에 따라서 이 편성위원회가,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극대화된 편성위원회

에서 시청자위원을 뽑았을 경우에는 친노동조합 성향의 또는 친민주당 성향의 이사가 2명 또 뽑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민주당이 추천하는 4명 그리고 시청자위원회 2명, 임직원 3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이 임직원은 추천할 때 임직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임직원이라고 해서 방송사업자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임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보면 이것도 역시 노동조합의 몫입니다. 임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노동조합이 반대하면 절대로 못 받거든요.

그러면 벌써 몇 명입니까? 6명에 3명, 9명 아닙니까? 방송·미디어학회 2명인데 1명이라고 치자고요, 반반. 그러면 10명입니다. 변호사단체가 2명이 들어가 있어요. 변호사단체가 왜 방송사 사장 뽑는 데 2명씩이나 들어갑니까, 15명 중에 2명?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민변이 왜 KBS 사장 뽑는 데 추천을 합니까? 그러면 10명이에요. 2명인데 1명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그러면 1명을 친민주당 성향의 변호사단체에서 추천하면 10명입니다. 이렇게만, 아주 그냥 정상적으로만 보더라도 15명 중에 10명은 기본적으로 KBS 이사는 친민주당 성향으로 뽑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거의 그렇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MBC 13명, 지금 현재 방문진 이사가 9명인데 13명으로 뽑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5명, 그러면 민주당에서 3명 뽑겠지요. 시청자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편성위원회에서 시청자위원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위원을 추천하기 때문에, 2명 뽑습니다. 민주당 성향 5명입니다. 임직원 2명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MBC 임직원 과반의 동의를 얻으려면 MBC 노동조합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 뽑습니다. 그러면 벌써 7명 아닙니까? 방송·미디어학회 2명인데 1명만 그렇다 치고요, 8명. 역시 변호사단체가 2명이, MBC 사장 뽑는 데도 변호사단체가 2명을 추천합니다, 9명. 그러면 13명 중에 9명입니다.

EBS 예 들지 않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구조가. KBS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양보해도 15명 중에 10명이 친민주당 성향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는 13명 중에 9명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왜 KBS 이사 뽑는 데 15명 중에 6명이 들어갑니까, 국회의 몫이? 다른 것 다 그냥 두자고요. 왜 KBS 이사 뽑는 데 국회가 6명이 들어갑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의 BBC도 그렇고 일본의 NHK도 그렇고 이렇게 뽑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대부분이 다 정치 성향의 단체들이 뽑는 겁니다. 정치적 성향의 단체들이 뽑는 거예요. 아니,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주자면서 전부 정치 성향의 이사를 뽑겠다 그러면 KBS 이사가 어떻게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겠습니까. 숫자만 늘려 놓고 민주당 쪽에 유리하게 만들어 놨을 뿐이지 실제로 아무것도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MBC는 13명 중에 무려 9명이 기본적으로 민주당 성향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예요.

그런데 MBC가 지금 13명 중에 9명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다수당이 돼서 민주당이 3명이 아니라 2명이 되면 8명이 되지요. 13명 중에 8명이기 때문에 특별다수제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제 MBC의 사장은 영원히 민주당 성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 법을 너무 정교하게 만드셔서…… KBS는 11명을 15명으로 만들고 MBC는

왜 9명을 13명으로 만들었을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4명씩 늘린 것인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너무 예민한가요? 이것은 방송 영구장악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의 공식을, 방정식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계산이 복잡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이사 수를 늘려서 방송의 민주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런 구조로 만들면 안 되지요. 정치 후견주의를 더 극대화시켜 놓은 이런 구조로 이사를 만드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15명을 뽑는데 국회에서 6명이나 뽑아 버리고 무슨 변호사단체가 들어오고, 국회에서 10명 뽑는데 임직원은 3명밖에 추천 몫을 주지 않는 것은 또 어떤 이유입니까?

저는 공영방송의 방송사 사장을 뽑는데 임직원 대표가 들어가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임직원 대표가 여기에 들어갑니까? 임직원 대표가 경영 임원도 아니고, 방송사 직원의 과반 동의를 얻어야 된다면 그것은 경영 임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노조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의 이사가 무슨 지역 대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역 간 대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별 대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대 간 대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영방송은 대한민국의 모든 이해관계가 집결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역 대표라든지 직역 대표 이런 부분들은 들어와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처럼 문화부장관이 1명을 추천해라, 교육부장관이 1명을 추천해라 이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변호사단체가 추천을 합니까? 방송사는 방통위원장이 추천을 해야지 왜 변호사가 추천을 합니까? 그게 객관적이라고요? 그게 어떻게 객관적입니까? 변호사 열심히 하시면 방송사 운영도 잘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변호사단체를 집어넣은 이유는 뻔하지 않습니까? 정치단체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방송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방송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한다는 분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합니까? 이것은 방송을 방송사업자에게서 뚝 떼어 내 가지고 정치권력에게로 주겠다는 거지요. 그것 이상으로 저희가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현대사회는 정말 다원적으로 분화돼 가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지역적으로도 계층적으로 연령적으로 다원적으로 분리돼 가는데, 그래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는 그런 다양한 이해관계를 아주 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반영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저는 공영방송 거버넌스 재정립의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맨 정치인들만 공영방송 이사로 들어가 가지고 정치투쟁 하게 만들어 놓은 법, 이럴 수는 없습니다.

국회 추천 몫은 그래도 그나마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구에서 추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라도 일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도대체 노동조합이 뽑을 수밖에 없는 임직원 3명, 변호사단체 2명, 이것은 무슨 민주적 정당성이 있습니까? 사법시험 붙으면 방송사 이사도 막 뽑습니까? 국회는 바람직스럽지 않지만 어쨌든 국민이 뽑은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6명이든 5명이든,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나마 민주적 정당성이라도 있지만 도대체 변호사단체, 언론학회 이런 곳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뽑아야 된다는 이 인식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는 거지요. 잘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정말로 생각합니다.

MBC에 노동조합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언론노조의 노동조합이 가장 크지만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습니다. MBC 노동조합 노조원이 낸 자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필리버스터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런 글이 있습니다. MBC 얘기입니다.

'MBC에 와서 수많은 선배, 후배들과 만나고 함께 즐겁게 일하며 지냈지만 지난 6년처럼—문재인 정부 당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고통스러운 경력단절과 사내 차별을 겪은 적이 없어서 과연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 공정과 정의, 자유와 평등 같은 우리 사회의 주요 담론을 논의하는 기자로서, 피디로서 활동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입사 후에 주로 경제부 기자로 일하다가 회사 기획부장을 2년 하고 도쿄 특파원으로 4개월 반—4개월 반이요. 4년이 아니라 4개월 반—정도 일하다가 갑자기 회사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시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으로 보입니다.

'아이도 집사람도 모두 한국에서의 활동을 정리하고 한국 학교의 선생님, 친구들과 인사하고, 3년 뒤에 돌아온다고 인사하고 도쿄로 떠나 열심히 적응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이는, 회사가 설마 이렇게 혹독한 일을 기획할까 하는 생각에 1년 뒤에는 다시 도쿄에 있는 가족들과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2년 동안 저희 가족은 이산가족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돌아와서 알게 된 현실은 도쿄에서 느낀 것보다 매우 참혹하고 암담했습니다. 2017년 하반기 민노총 파업에 동조하지 않고 파업에 불참했던 88명의 기자 전원이 보도국 취재부서에서 쫓겨나 뉴스영상센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8명의 기자 전원이 보도국 취재부서에서 쫓겨나 뉴스영상센터 또는 뉴스영상국이라고 불리는 카메라 기자와 영상 편집자들의 조직으로 발령받아 아무 일도 부여받지 못하고 대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가 2018년 3월 5일 자로 귀임했을 때는 이들 중의 상당수가 기자는 하지 않던 방송 작가나 섭외 업무를 부여받고 일하고 있었고, 뉴스 자료 정리와 기자회견 스크립트를 기록하여 저장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배현진 의원, 박용찬 전 시사제작국장과 같은 분들이 있었던 조명창고가 마치 유배자 수용소처럼 존재했습니다.

제가 서울 본사로 돌아오고 안내받은 사무실은 보도국 8층 뼁 뚫린 공간의 공용책상에 종이로 만든 명패와 전화기 한 대가 달랑 놓인 책상이었습니다. 그 뒤에 있었던 일들은 한 인간으로서, 한 기자로서 견디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당시 그 이전에 MBC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걸핏하면 아이스링크 발령받았다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속상하셨겠지요. 기자가 기사 쓰는 일을 하지 못하고 마케팅 부서로 가야 하고 아이스링크로 가서 속상하셨겠지요. 그러나 누가 더 잘못됐는지를 제가 따지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파원이요? 가는 분들에게 특혜받아서 특파원까지 무려 4년 5개월이나 있다가 왔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특파원을 한 번 가는 것이 기자로서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기자의 꽃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평생을 소홀히 해왔던 가족들에게 다소간의 위로와 보답을 하는 보직이기도 합니다, 특파원 가는 것은.

그런데 갑자기 정권 바뀌면서 소환 통보를 합니다. 강명일 기자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워싱턴 특파원은 현지에서 그만두고 미국에서 취직했다는 친구도 있고, 거의 모든 지국

의 기자들을 소환합니다.’

이런 글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의 일들을 다시 소환하는 이유는 정권이 바뀌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그때 이런 일을 당했던 분들이 명예회복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정년퇴직을 한 친구들이 많이 있고 또 아직도 명예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자리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방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방송국 종사자들이 겪는 이런 극심한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정치가 결국은 이들의 소중한 일자리에서 이런 참혹한 일들을 당하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긴 시간 여러분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는 지금 민주당이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정치가 방송의 발목을 잡으면서 더 극심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법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것인지 이 법안의 구석구석에서 정말로 많은 부분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방송사들이 이런 정치적 격랑에 휩싸여서 소중한 그들의 경력이 단절되고 그들의 인권이 탄압받고 그들의 가족이 희생하는 이런 방송국을 만들면 그들 자신도 문제겠지만 그 방송국 전체가 이제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송국 직원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은 제작과 보도의 자율성입니다. 그 제작과 보도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규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송편성규약입니다. 이 편성규약은 어쨌든 지금은 사업자와 노동조합이 잘 협의해서 그 회사에 맞게 편성규약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편성규약을 만드는 기능을 이런 편성위원회에 맡기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 방송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국회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방송사가 될 것이라고 저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이 법안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법안입니다.

긴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의 자유에 대한 헌법의 최종 해석 기관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례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4월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잘 아시지요. KBS 보도국장에게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화해서 좀 잘 봐 달라라는 이런 내용의 전화를 한 이유로 기소가 된 적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있었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례를 남겼는가?

9명, 그 9명의 헌법재판관은 2021년도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9명 전원일치의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헌법은 2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며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방송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 중 하나로 인정된다’.

두 번째, ‘방송의 자유의 내용으로는 방송설립의 자유, 방송운영의 자유, 방송편성의 자유 등이 언급되고 그중 방송편성의 자유야말로 방송 자유의 핵심이다. 이것은 방송 주체

가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언론적 과제나 방식, 즉 방송프로그램의 선정, 내용 및 형식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방송법상으로는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방송법상으로 방송편성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종류뿐만 아니라 내용, 분량 그리고 시각적으로 어떻게 배열하느냐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방송편성의 자유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고 누구도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을 할 수가 없다', 방송법 4조입니다.

'이 사건 간섭 금지 조항은 누구든지 간섭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므로 그 행위의 주체는 가리지 아니한다. 그러나 일차적으로는 국가권력을 가리키고, 나아가 다양한 사회 제 세력을 모두 포괄할 것이다. 여기서 다양한 사회세력이란 정당과 같은 정치권력은 물론 시민단체, 노동단체 그리고 대기업이나 광고주 등을 포함하여 방송편성의 자유에 영향을 끼칠 만한 존재를 모두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간섭이라는 행위의 다양한 태양을 세부적으로 모두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 더구나 방송의 자유를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에 비추어 방송에 대한 간섭의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끊임없이 등장할 것이므로 행위태양을 일일이 규정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반한다.'

시대에 따라서 방송의 자유에 대한 간섭의 방식은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끊임없이 등장할 것이다. 저는 이 방송법도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명시돼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심판대상 조항은 1963년 방송법 제정 이래 현행법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지되어 온 것으로서 방송이 국가권력 등으로부터 간섭받은 과거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이래 여러 차례 방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명을 이어 온 조항이다.'

일곱 번째, '방송의 자유를 비롯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초인바 국가권력은 물론 정당, 노동조합, 광고주 등 여러 사회세력이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저는 여기에서 끊임없이, 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정당과 노동조합을 열거합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제가 이렇게 노동조합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노동조합은 방송국 종사자들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조합을 방송의 경영에 전면적으로 개입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방송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송편성에 개입하여 자신들의 주장과 경향성을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여론화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 의사가 왜곡되고 우리 사회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된다.'

'방송의 역할과 영향력이 큰 만큼 국가권력 혹은 정치권력, 기타 사회세력들이 방송을 장악하고 이용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물론 방송 또한 그러한 권력들에 편승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제 반대토론을 마치면서 마지막 두 대목, 우리가 정말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이 두

대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자유를 비롯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초인바 국가권력은 물론 정당, 노동조합, 광고주 등 사회 여러 세력이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방송편성에 개입하여 자신들의 주장과 경향성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여론화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 의사가 왜곡되고 우리 사회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어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

‘방송의 역할과 영향력이 큰 만큼 국가권력 혹은 정치권력, 기타 사회세력들이 방송을 장악하고 이용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물론 방송 또한 그러한 권력들에 편승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정치권력뿐 아니라 방송 스스로도 권력의 압박에 편승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점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이미 오래전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들이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이 방송법에 대해서 숫자로 민주당과 저희가 표 대결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장시간 제가 방송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대한민국 방송뿐 아니라 방송계 종사자 모두 그리고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K-콘텐츠가 여기서 이 방송법이라는, 방송법이 만들어 놓은 두 개의 거대한 족쇄가 한국 방송의 발목을 잡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장시간 보고드렸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신동욱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김현)

(23시33분)

○의장 우원식 다음은 김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 김현입니다.

신동욱 의원님께서 방송 3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해 주셨는데요. 필리버스터가 많이 왜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무제한토론이라는 거겠지만 그래도 방송 3법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그 사실관계에 부합한 것에 기초해서 반대하면 반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이 매우 왜곡되고 있어서 밤늦은 시간까지 국민들께서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방송 3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통해서 시도하려 했던 다양한 움직임과 그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방송 3법은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있었습니다. 2016년 7월 21일 날 박홍근 의원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이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11월 9일 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와 2016년 12월 28일 날 법안소위, 2017년 12월 5일 3차 법안소위 등에서 논의를 했으나 2020년 6월 19일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당시의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정원을 13명으로 확대하고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 선임 시 이사회가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 독립성과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 회의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20대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 출범이라는 정치적 전환기 속에서 운영되었고 국회 과방위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 독립의 훼손에 대한 우려 속에서 관련 논의를 계속 이어 갔습니다.

21대에서도 마찬가지로 3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2020년 8월 31일, 허은아 의원이 2021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2020년 6월 11일, 2021년 10월 22일, 2022년 4월 27일 이렇게 열심히 방송 3법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한준호 의원 역시도 2021년 1월 27일 날, 권칠승 의원도 방송 3법을 발의했습니다.

2022년 12월 2일 과방위에서 1차 법안이 가결됐고 23년 11월 9일 본회의에 의결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11일 날 의결된 법안을 정부에 이송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했고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때의 법은 이사회 정원이 21명이었고 시민사회 지역 대표성 강화, 사장추천위원회의 자격기준 명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고 4년 만에 여대야소 국면을 형성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언론개혁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되고 정부는 언론 자유를 강조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22대 국회의 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24년 5월 31일 정청래 의원을 시작으로 6월 13일까지 안호영 의원과 고민정 의원, 권인숙 의원, 한준호 의원 등이 방송 3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024년 6월 18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대안이 결정되었고 6월 25일 법안소위, 7월 28일 본회의를 거쳐서 정부에 이송되었습니다. 이때 역시 2024년 9월 26일 재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 정원을 21명으로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시민사회 중심으로 다양화했고 KBS·MBC·EBS 사장추천위원회를 100%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재의결이 부결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들은 2025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으로 발의가 되고 난 다음에 1월 6일, 그다음에 12월 27일 그리고 노종면 의원은 2024년 12월 23일, 박민규 의원은 12월 23일, 신장식 의원은 2025년 3월 25일, 이정헌 의원은 2024년 10월 29일, 이해민 의원은 2024년 12월 31일, 이훈기 의원은 2024년 12월 19일, 조인철 의원은 2024년 12월 24일, 최민희 의원은 2024년 12월 20일, 한민수 의원은 2024년 12월 18일, 황정아 의원은 2024년 12월 20일, 서영교 의원은 2025년 1월 8일, 총 13명의 의원이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구성 내용으로는 공영방송 이사를 확대하고 추천 주체의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명문화했고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했습니다.

방송 3법 관련해서 과방위에서의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22일 과방위는 언론노조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청취했고 4월 29일에

는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민변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서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5월 9일에는 국회 과방위 2소위 공청회를 첫 번째 실시했고 같은 달 5월 15일, 21대 대선 이재명 대통령후보와 전국언론노동조합과의 정책 협약식을 통해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후에 과방위는 4월 17일과 6월 27일, 7월 2일 방송 3법에 대해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목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한 겁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구현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3법을 개정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는 정치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장 선출 방식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방송 3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국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에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보도를 통제했습니다. 2008년 3월 달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면서 8월에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습니다. 아울러 2014년 7월에는 청와대에서 세월호 보도를 통제하고 공영방송,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KBS·MBC·YTN을 중심으로 언론인을 해직하고 정직하는 등 징계를 시켰으며 MBC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 발생하는 등 언론장악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의사결정 구조에 집권 여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뽑는 위원장과 차관 1명, 즉 2명의 상임위원과 그다음에 방통위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사장을 결정하는 이런 수직체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 교체에 대한 요구가 강제되면서 공영방송이 통치의 도구로 전락하기도 하고 방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습니다. 때문에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방송계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KBS는 방송법에 따라서 설립된 공영방송입니다. 이사회는 총 11명으로 구성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해 왔습니다. 사장 임명절차는 이사회에서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만 대략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이 사장이 되는 구조가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여권 7명, 야권 4명으로 7 대 4의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KBS 사장은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이 되거나 또는 대통령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 그동안 진행돼 왔던 방식입니다.

MBC 역시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한 방송사로 이사회가 9명으로 구성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합니다. 사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서 추천해서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여권이 6명, 야권이 3명을 추천해서 청와대 영향 아래 사장이 임명되는 것은 그동안 관행으로 되어 온 것입니다.

물론 보수 정권과 민주정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KBS 사장 추천 관련해서 그동안 20명의 사장이 있었고요, 그중에 4명은 간혹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이사회에서 추천이 되고 다시 국회에 와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번 있었습니다. KBS 양승동 사장과 KBS 김의철 사장이 문재인 정부 때 그런 방식으로 됐고, 적어도 정치권

의 배후는 약화되는 형태로 사장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리고 MBC 역시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추천을 했는데 최근에 단 한 번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100여 명이 추천해서 최종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장이 아니고 예상 외의 인물이 사장이 되었던 경험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이유는 정치권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국민들이 추천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적어도 국민주권정부를 실현시키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방송3법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마치 이 법이 대통령실에서 원하지 않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주장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KBS와 MBC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BS에 대해서는 잘 알다시피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징수를 2023년도에 전격적으로 했습니다. 텔레비전 수신료는 1981년도에 컬러 텔레비전이 도입된 이래 2500원, 당시에 종이신문 구독료가 월 2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수신료를 흑백 텔레비전에서 컬러 텔레비전이 도입되면서 2500원의 수신료를 징수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공영방송이 되었고 공영방송이 된 것은 1974년도 박정희 정부 때 국영방송, 즉 대한뉴스와 같은 국영방송을 공영방송으로 전환시키고 1981년도에 말씀드렸던 컬러 텔레비전이 도입되면서 2500원의 수신료를 분리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분리징수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징수하는 인원이 많고 효율적인 징수 방식이 아니어서 1994년도에 김영삼 정부 들어서 통합징수로 한국전력공사에서 함께 통합징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징수 비용도 적게 들고 징수액도 늘어나서 공영방송 KBS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됐던 방식이 바로 통합징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2023년도 윤석열 정권에서 KBS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리징수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김효재 상임위원과 이상인 상임위원, 저, 3인이 있을 때 이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1년에 800억가량의 재정손실을 보게 돼서…… KBS는 낙하산 사장이 투입돼서 지난 8·15 때 우리가 다 기억하는 기미가요를 광복절 날 국민들이 보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바로 KBS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KBS 종사자들 안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통합징수 형식으로 다시 법률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박장범 사장도 이 문제만큼은 반대할 수가 없었고 통합징수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법을 바꿨습니다.

졸속적으로 추진했던 분리징수를 통합징수로 했던 그 배경에는 바로 이렇게 KBS 재원을 압박해서 방송을 좌지우지하는 방송장악을 하려고 했던 윤석열 정권의 단적인 예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징수로 가면서 지금 재원이 안정적으로 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잘 기억하는 파우치, 조그마한 파우치라는 희대의 단어를 만들어 낸 사람이 바로 현재의 KBS 사장입니다. 2024년 1월 4일 생중계로 진행된 대담이 아니라 녹화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진행됐던 그 자리에서 디올백이라는, 명품 디올백이라는 단어조차도 쓸 수 없는 그런 공영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선 직전에 1월 7일날 방송이 됐고 그리고 그다음 날까지 재방송이 됐습니다.

12%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건희 씨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뇌물이 공영방송에서는 조그마한 파우치라는 단어로 둔갑이 돼서 대통령 내외에게 잘 보인 사람이 바로 지금 공영방송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많은 부분이 왜곡되고 굴절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관련한 방송프로그램이 보도되지 못하는 일이 2024년도에 있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3법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언어도단이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방송을 장악할 뜻이 없다라고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는 법이 바로 방송 3법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송 3법이 어떤 내용으로 변경됐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PPT 준비되어 있으면 띄워 주실 수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송 3법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11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이 11명이고 이 이사를 추천하는 단위는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정치권에서 여권이 7명, 야권이 4명으로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내정을 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내려보내면 방송통신위의 5인 구조에서 서류 면접을 보고 그다음에 실질 면접을 봐서 최종적으로 11명을 확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KBS의 경우는 재적위원의 과반이 찬성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추천 주체는 방통위였습니다. 임기가 3년이고요. 임명절차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회에서 제청하고……

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은 이사회에서 제청을 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KBS 사장의 임명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장을 임명할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는 과반이 찬성하는 의결정족수를 기존의 방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22대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의 내용에 이사회 구성을 15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된 가장 주요한 배경에는 7 대 4로 했을 경우에 2명 또는 3명만 이사를 자르면 바로 이사회가 해체돼서 사장을 자를 수 있는 그런 구조 개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사회 규모를 늘렸다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추천하는 단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정치권이 KBS 이사회를 좌지우지한다 또는 KBS 사장을 정치권이 좌지우지하거나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는,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 추천을 명료화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국회에서 6명이고요, 그 6명 중에는 국회의원 숫자에 맞춰서, 현재로 한다라면 더불어민주당이 167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107로 한다면 4 대 2 구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임직원 대표에서 3명, 과반수를 넘는 3명을 하고 미디어학회에서 2명, 법조계 2명 이렇게 9명이 추천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법정기구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의 신동욱 의원님이 시청자위원회를 굉장히 이상한 조직으로 지속적으로 폄훼를 했습니다만 시청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14개 단체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보호단체입니다. 세 번째 여성단체, 네 번째 청소년 관련 단체, 다섯 번째 변호사단체, 여섯 번째는 언론 관련 시민·학술단체, 일곱 번째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여덟 번째 노동단체, 아홉 번째 경제단체, 열 번째 문화단체, 열한 번째 과학기술단체, 열두 번째 인권단체, 열세 번째 외국인 관련 단체, 열네 번째 물류유통단체 이렇게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방송법 규칙으로 명문화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15명의 시청자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이 10~15명의 시청자위원회는…… KBS·MBC·EBS 그리고 SBS 이렇게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사업자, JTBC·MBN·채널A·TV조선 이렇게 4개의 종편사업자와 그리고 보도전문사업자, 연합뉴스TV와 YTN이 있고요. 그리고 방송위원회에서 규정한 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14개 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 10~1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기구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청자위원회에서 민주적인 절차로 투명하게 추천한 2명이 이사가 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종사자 대표에 대해서, 3명인데 이 종사자 대표는 임원 또는 직원으로 과반수를 확보하는 사람이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천해서 이사가 된 분들은 대부분 전직 KBS 종사자, 전직 MBC 종사자, 전직 EBS 종사자가 각각 이사를 구성하고요. 그다음에 전문 영역에 있는 변호사나 학계 출신이 이사로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2명이 되는 것은 언론·미디어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하등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조계에서 두 분의 추천을 받는데요, 대한변협과 민변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의 자격이 있는데 이 자격에 변호사들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가 2008년도부터 6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때 상임위원을 하셨던 분들이 법조인 출신이거나 언론사 출신이거나 정치인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국민의힘에서 강력히 비토했던, 변호사 출신이 왜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이미 2008년부터 상임위원도 변호사로 주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을 포함해서 방송법 그다음에 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을 포함한 여러 법률의 이해관계들을 조정해 내고 새로운 법으로 제·개정을 하기 때문에 법조계 출신이 이사로 들어오는 것은 이것도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구성하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를 3인 이하로 추천을 해서 이사회에 보고를 하면 이사회에서 제청을 해서 그중의 한 명을 선출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 보내게 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이번 방송법의 가장 핵심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공영방송의 사장과 보도전문채널, 보도를 24시간 하는,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보도전문채널에 한해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두어서 여기서 100명을 뽑아 가지고 3인 이하를 이사회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서 방송 3법 중 방문진법을 보면 방문진은 현행으로는 9명이 이사를 구성하고 있고요. 임명절차는 방통위에서 임명하고 임기는 3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경안은 각 단체에서 추천하고 방통위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정합니다. 13명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인원은 5명이고 시청자위원회에서 2명, 종사자 대표 2명, 학회에서 2명, 법조계에서 2명, 이렇게 13명의 추천 단체를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3년입니다.

(8월4일 24시 경과)

사장 임명 관련해서 MBC의 경우는 이사회에서 추천해서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하던 방식을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3인 이하를 추천해서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방문진의 경우 사실은 그동안 MBC는 이 제도를 정착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방통위의 권한을 왜 가져가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중요하게 앞서 얘기했던 시청자위원회나 종사자, 학회, 법조계에서 각각 추천하면서 국민들에게 추천 범위를 돌려드리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뒤의 교육방송공사법도 마찬가지로 13명으로 변경을 했고요. 각 추천 단체가 추천하면 방통위가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국회에서 5명, 시청자위원 2명, 종사자 대표 하나, 학회 1명, 교육단체 2명, 교육부장관 추천하고 교육감협의체에서 1명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교육단체 2명이 추천하는 것이 새롭게 포함됐고요, 교육감협의체 1명 추천도 새롭게 도입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KBS, EBS, MBC에서 하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법 개정을 해 왔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 3법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얻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사장이 중간에 잘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타임라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3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두 달 남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 처리를 했습니다. 이 면직 처리하게 된 것은 TV조선 점수를 수정한 것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소가 되었다는 이유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시킨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이거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

다. 물론 그 외에 법률에 위배가 되거나 직무를 장기간 할 수 없는 경우 또한 면직의 사유는 됩니다.

다만 이렇듯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무리하게 기소하고 쫓아내기 위한 전방위적인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1년 가까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2023년 3월 9일 날 임명되자마자 한상혁 위원장에게는 국무위원 회의에 불출석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도 본인에게 통보한 것도 아니고 비서실을 통해서도 하지 않고 그냥 언론발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농지법에 위반됐다고 경찰이 몇 날 며칠을 뒤졌습니다. 그러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TV조선 점수가 수정된 것을 가지고 조작했다는 사유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 그다음에 방통위 압수수색을 전방위적으로 진행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방통위는 대부분 방통위 출신이 사무처장을 맡아서 사무처를 관할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감사원에서 조성은이라는, 느닷없이 감사원에서 사람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서 한상혁 위원장이 해임되는 즉시 감사원 감사를 시작하면서 국세청, 경찰, 교육부에서 파견받은 인사들로 구성한 그것을 가지고 시청자미디어재단, KOBACO에 대한 감사를 전방위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2023년 8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3명의 상임위원을 통해서, 그중에 김효재, 앞서 말했던 김효재와 이상인 두 사람이 남영진 KBS 이사장을 해임제청하고 정미정 EBS 이사를 해임시킵니다. 그리고 이사 2명을 잘라서 그 이후에 김의철 KBS 사장을 해임시킵니다. 그것이 2023년 9월 12일입니다.

그리고 8월 21일 날 방통위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2024년 12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을 취소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문진 이사장은 권태선입니다.

이렇듯 윤석열 정권은 최민희 방송통신 상임위원을 7개월 7일 동안 임명하지 않고 5인 구조로 운영해야 될 방송통신위원회를 본인이 임명한 방통위원장과 본인이 임명한 차관, 2명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송장악을 진행을 합니다.

8월 28일 날 방문진 EBS 보궐이사에 김성근, 강규형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12일 날 김의철 KBS 사장을 해임하고 11월 12일 방송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문화일보 출신의 박민 KBS 사장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18일 날 EBS 보궐이사에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를 임명하는 무리한 수를 지속적으로 진행합니다.

2024년 2월 7일 방통위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의결로 보도전문채널을 사영화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이것 역시 2024년 8월 달에 이동관, 이명박의 방송장악을 진행했던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건진법사와 국민의힘 윤핵관의 한 사람과 통일교와 연관되는 YTN 사영화를 그때 당시 2022년 4월 달부터 7월까지 집요하게 진행을 합니다. 이때 YTN이 사영화되지 않은 배경에는 한상혁 위원장이 윤석열 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통일교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 낼 수 있었다는 점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의 여전사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합니다. 저희가 3일 동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

통신위원장이 되면 안 된다라고 국민들과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막아 내지는 못했습니다.

7월 31일 날 2인 구조에서 김태규 부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루 만에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를 졸속적으로 선임합니다. 당시 네 가지 안건을 2시간 만에 처리를 합니다. 그때 이진숙 위원장은 출근 9시, 11시 취임식, 11시에 보고받고 12시에 점심 먹고 오후에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 82명을 두 명이서 투표를 통해서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의 이 2인 구조의 불법성과 문제를 제기하면서 탄핵을 발의를 하고 150여 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 6명의 이사 효력정지 가처분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2인 구조에서는 결정을 하지 마라,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5명의 완전체로 합의를 하고 진행해야지 2명이 하는 것은 불법하다라는 판단이 8월 26일 날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MBC는, 적어도 MBC는 윤석열 정권의 나팔수 역할은 막아 낼 수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전에 MBC에 대한 탄압은 '바이든-날리면'이라는 희대의 사기극이 진행이 됐고, 국세청 세무조사 있었고,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를 쫓아내려는 각각의 시도가 있었지만 법원에서 번번이 패소하고 지금까지 방문진 이사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달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조그만 파우치' 박장범 앵커, 그러니까 2024년 2월 4일 날 녹화본으로 디올백을 디올백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조그만 파우치'라고 정권에 아부한 박장범 앵커가 KBS 사장으로 12월 10일 날 첫 출근을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KBS는 어찌 된 영문인지 퇴근했던 보도국장이 다시 KBS로 복귀해서 8시경에 '10시에 무엇인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라는 그런 의혹 제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특검에서 더 밝혀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날 박장범 앵커가 임명된 이래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것은 추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28일 2인 구조에서 방통위는 KBS 감사를 임명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나중에 문제가 돼서 박찬욱 감사, 쫓겨난 박찬욱 감사가 다시 지금 KBS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27일 불법 2인 구조에서 방통위원장이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 EBS 사장을 선임합니다. 방통위 알박기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에서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임명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신동호 EBS 사장은 집으로 갔고 지금 그동안 EBS 사장을 했던 사장이 재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단면만 보여 드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의한 청부민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19일 방심위에서는 뉴스타파 김만배 음성파일을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서 유례없는 중징계 처분을 내립니다. 이때 9월 4일부터 대략 19일까지 1억 4000만

원에 가까운 중징계를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만들려고 했으나 불법하다는 것을 알고—본인은 부인하지만—방심위에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만들어서 100일 동안 방송사들을 탄압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 나갑니다.

2023년 10월 6일 날 방심위의 팀장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가짜뉴스 심의 대책 일방적 의사결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11일 날 방심위는 인터넷신문법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뉴스타파에 대한 심의를 신속심의 안건으로 합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13일 날 김만배 인터뷰를 한 보도에 대해서 KBS MBC JTBC YTN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수위의 제재를 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23일 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이 권익위에 익명으로 신고가 접수됩니다. 이때 방심위의 직원들 149명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청부민원을 했다라는 고발을 하고, 이 문제는 최근 경찰에 의해서 공익제보한 사람들은 검찰에 송치가 되고 류희림의 청부민원은 무혐의 처분을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심위에 대한 탄압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2024년 1월 15일 날 경찰은 방심위 민원상담팀, 개인정보 유출로 1차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23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 추천 몫에 방심위원 류희림 등 3명을 위촉하고 청부민원을 제기한 류희림을 연임을 시킵니다. 충성을 한 대가라고 보여집니다.

2024년 7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류희림 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을 보고받은 사실을 공개했으나 류희림 위원장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2024년 7월 8일 권익위에서는 류희림 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조사, 방심위에 이첩을 해서 류희림 위원장의 진술과 참고인들 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류희림 편을 들어줍니다.

2024년 8월 26일 날 방심위 직원들은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셀프조사 기피 신청을 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 방심위 직원들은 지속적으로 1년 넘게 저항합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10일 서울경찰청은 방심위 사무실과 방심위 직원 자택, 방심위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청부민원과 관련해서 저희 국회 차원에서 류희림 방송심의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서 진실을 파악하려고 했으나 류희림 위원장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 국정감사에서도 민원사주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고 새빨간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5일에는 민원사주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장경식 팀장이 다섯 차례에 걸쳐서 본인이 거짓진술을 했다라고 진실을 고백합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본인이 거짓말을 지속할 수 없다, 심경의 변화 배경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면서 민원사주, 류희림 위원장이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양심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10일 권익위원회에서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이 추가조사

필요성이 인정된다, 방심위에 재조사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13일 날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서 저희 과방위의 감사요구안 및 방심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합니다.

2025년 4월 21일 권익위에서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인정되고 감사원에 사건이 이첩이 되고 그 와중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2025년 6월 3일 날 이주호 국무총리권한대행은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직원을 재가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천경찰서에서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무혐의 결론을 내립니다. 불송치 처분을 한 거고, 이 논리는 매우 기괴합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그 민원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분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100여 건입니다. 청부민원이 100여 건이고 21명이 70여 건을 복붙한 청부민원에 대해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것에 공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 날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단에서는 민원을 사주했다라는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 방심위 직원 3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그런 일을 지금 경찰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해서 두 차례 소환조사를 했으나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 검찰이 발부하지 않았다는 것도 검경이 짜고 치고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청부민원을 봐주기 했다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렇듯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방송장악에 대해서 더 이상 공영방송을 쥐고 흔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방송 3법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해서 방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앞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더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협의를 하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 중에 그 누구도 방송 3법에 대해서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협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송 3법에 대한 설명은 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제1조(목적) 항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방통위원회 설치법입니다.

방송 3법이 처리가 되면 이 방송 3법을 관리하는 주무 행정관청이 방통위원회입니다. 그런데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방송통신위원장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배석해서 지난 6월 10일 날 독임제 기구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전환시켜 달라는 발언을 한 것이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임기를 보장해 달라고 하고 방통위원장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합치시켜 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회는 2006년부터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맞추어서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일부 독임적 기능을 당시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보내고 방송통신위원회라는 합의제 기구, 즉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급 위원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급 위원 1명 그리고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야당에게 2명의 상임위원과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 1명 그렇게 해서 5명이 이 중요한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해 주는 정책을 구현하라는 것이 당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서 만들어지고 가꾸어 온 것이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이것을 독임제로 전환하라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느냐라는 것은 바로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저질러진, 독임제 성격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KBS를 장악하고 MBC 사장을 쫓아내고 TBS를 폐지하고 YTN을 사영화시키고 그래서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을 장악해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동관·이상인, 김홍일·이상인, 이진숙·김태규, 김태규, 이진숙·김태규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31일 날 KBS 이사를 무리하게 선임했고 방문진 이사도 무리하게 선임하는 과정에서 방문진 이사 선임이 불법하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이고 방송을 정권에 좌지우지하라는 취지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또는 유튜브에 나가서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노조활동을 하는 언론인을 비하하는 그런 정치 발언을 할 수 없도록 정치 중립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월 23일 날 복귀한 이래 지금 현재까지 여러 가지 불법행위도 저질렀고 탄핵 국면 시기에 유튜브에 네 번 출연하고 특정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방하고 그리고 보수의 여전사라고 자처하는 이런 일을 한 것을 두고 감사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이 '이진숙 위원장은 중립의 의무를 훼손했다'라고 주의조치를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경찰·공수처는 김홍일 이동관 김태규 이상인, 덧붙여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대전MBC 시절에 했던 많은 배임 혐의와 관련된 의혹이 1년이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7월 31일 날 대전유성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 실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수사를 받았는데 경찰의 전언에 따르면 수사에 비협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수사에 비협조하고 있는 공직자가 공직자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해서도 양천경찰서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송치를 합니다. 방통위원장과 방심위원장이 대통령 부부보다 훨씬 높은 자리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이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제 역할을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렇듯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이용자의 복지와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이 한 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방송

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방송통신위원을 7개월 동안 임명하지 않고 YTN을 사영화하고 TBS를 폐지 직전까지 만들어지게 한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방통위원을 추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로 추천을 하기로 했었으나 당시 여당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치행위에 동조할 수 없다며 저희의 방통위원 여야 합의가 깨졌고 그 이후에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지금 대통령에게 임명을 해 달라라고 얘기한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방통위원장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그리고 MBC 사장 시절에 있었던 배임 혐의 등을 포함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를 저희가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경찰이 더 늦기 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사실은 결격사유, 신분 보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 정도가 되면, 방송 3법이 처리가 되면 방통위가 정상화돼서 순탄하게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것을 이진숙 위원장이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안 계시는데요. 또 하나가 그동안 위법적인 2인 구조의 의결로 수많은 소송이 진행됐고 그로 인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021년도에 방통위가 전체 10건이었습니다. 22년도에는 9건이고 23년도에 12건이고 24년도에 44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심위의 방송사에 대한 표적 탄압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8월까지 방통위 10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2000만 원가량을 썼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을 초과했고 아직까지 외상값이 있다는 내용까지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에서는 지속적으로 2심을, 항고를 포기하지 않고 있고 대통령 뜻과 어긋나는 일이 방통위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전 국민이 듣기평가 한 '바이든-날리면' 이것이 바로 또 MBC가 지금까지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KBS 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일지 한번……

2023년 6월 달에 대통령실에서 국민제안 온라인 의견수렴을 근거로 해서 수신료 분리징수 법령을 개정합니다. 그리고 2023년 7월부터 방통위원회는 TV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제가 이때 당시 방송통신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려고 단 한 번도 연구를 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용산 비서실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분리징수를 하는 게 옳다라고 바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2024년 7월부터 KBS에서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고지하고 징수 시행을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대략 355억의 수신료 수입이 감소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4년 12월 26일 텔레비전 수신료 통합징수법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

시키고 2024년 다시 한번 재의를 요구해서 저희가 212표로 통합징수법이 통과되는, 당시 여당의 협조로 이 분리징수를 통합징수로 바꾸어 냈습니다. 이렇듯 KBS를 장악하고 MBC를 장악하려고 했던 일이, 더 이상 정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송 3법으로 저희가 개정안을 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BS, MBC만큼이나 국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 중의 하나가 TBS 사태와 YTN 사태입니다.

먼저 YTN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YTN은 2022년부터 윤석열 정권이 대통령 되자마자 YTN을 매각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이 최근에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건진법사가 김건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고가의 명품 핸드백을 전달하고 그것이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어디 가족의 일원이 소지하고 있다 그러고 신발의 사이즈가 250이니 260이니 이런 얘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YTN을 민영화했기 때문에 방송 3법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앞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장을 했지만 YTN의 매각 과정은 매우 의심스럽고 잘못되게 진행돼 왔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16일 날 한전KDN이 산업부에 YTN 주식 계속 보유하겠다는 것을 제출합니다. '현시점에서 매각 시 투자원금 대비 손실로 이어지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광고수익 증가 및 사업영역 확장으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향상되는바 향후의 재무 전망이 긍정적이다'라고 한전KDN이 산업부에다가 주식을 계속 보유하겠다라는 입장을 전달합니다.

2022년 8월 23일 날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혁신 TF에서는 한전KDN의 매각 권고 결과를 회신하며 'YTN이 향후 수익이 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수익이 날 때까지 정리를 미루겠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 주장이 될 수 없다'라는 걸로 답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2022년 9월 16일 한전KDN이 산업부에 매각 추진 의견 혁신계획 제출을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통일교가 YTN을 인수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시기에 한전KDN과 산업부가 주고받은 내용과 산자부가 KDN에 보낸 것은 매우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9월 16일…… 8월 16일, 9월 16일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사이에 산업부에 매각 추진 의견 혁신계획을 제출합니다.

2022년 10월 4일 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전KDN의 YTN 매각 관련 발언을 합니다. '1997년 YTN 주식을 가진 후 25년 갖고 있었는데 수익률도 별로 높지 않고 그런 공익적 기능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공공기관 혁신 차원에서 TF에서 매각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17일 날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이 YTN 매각 관련 발언을 합니다. '방송매체의 특성상 말산업 홍보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YTN 지분 매각을 지금까지는 검토한 바 없고' 그리고 '8월 말에 농림부와 협의 중에 혁신계획안을 낼 때도 그때까지는 구체적인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21일 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KDN의 YTN 매각 촉구 발언을 합니다. '자꾸 방송장악이다 뭐다 하는데 현재 YTN의 보도 태도를 보면 특정 집

단, 특정 세력에 의한 방송장악이 돼서 선거 때 특정 후보를 편들고 응원하고 특정 후보를 폄훼하고 하는 등 현재 지배구조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질 수 있는 경영 주체가 가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조속히 매각을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YTN 매각 촉구 발언을 한 겁니다. 통일교와 연관되어 있는 시점이지요.

2022년 11월 11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 발표를 합니다. YTN 지분 전량 매각 추진 결정, 한국마사회와 한전KDN이 효율화 계획을 발표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2022년 8월 16일부터 11월까지 세 달 동안의 YTN 주식 최다액출자자 변경과 관련된 것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2022년 11월 23일 한전KDN은 YTN 지분 21.43% 전량 매각을 의결합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21일 한국마사회는 YTN 지분 9.52%를 전량 매각 의결합니다. 2023년 2월 24일 한전KDN은 YTN 매각 주관사 입찰 접수 마감 1순위로 삼성증권을 선정합니다. 삼성증권은 선정 당일 매각 주관사 자격을 반납하고 2순위인 삼일회계법인이 YTN 매각 주관사로 계약을 합니다.

이 삼일회계법인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방통위 사무처장으로 있었던 조성은이 최근 사무처장을 그만두고 가려고 했던 법인이 바로 삼일회계법인입니다. YTN 매각을 주도하고 2인 구조에서 불법한 행위를 저질렀던 사무처장이 그만두고 가려고 했던 곳이 바로 삼일회계법인입니다. 그런데 아마 성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한국마사회 YTN 매각 주관사로 삼일회계법인으로 선정이 되고 2023년 9월 한전KDN·한국마사회가 KBS 지분 공동입찰 공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16일 유진이엔티 법인 설립을 중개하고, 2023년 10월 23일 날 유진이엔티가 YTN 지분 최종 낙찰자로 선정이 됩니다. 한전 및 마사회 지분 30.95%를 3199억 원에 인수를 합니다.

이때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관입니다. 2023년 11월 10일 유진이엔티, 한전KDN·마사회 지분 중 30.95% 취득 계약 체결을 하고 2023년 11월 15일 유진이엔티,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방통위는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합니다.

23일부터 26일까지 심사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외부위원 8인으로 구성해서. 23년 11월 29일 날 다행히도 이동관 위원장은 이것이 무리한 지 알았던지 변경승인안을 보류하고, 변경승인을 보류한 배경에는 방통위 의결 주문을 보면 '유진이엔티의 YTN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대하여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 유진이엔티의 유관사업 경험이 미흡하며 방송·미디어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보도전문채널사업 최다액출자자로서의 명확한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방송 공적 책임의 구체적·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것이 당시 이동관 위원장이 변경승인안을 보류하게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2024년 2월 7일 이동관의 탄핵이 발의되고 사직을 하고 그 뒤를 이어 들어온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안을 최종 승인해서 유진그룹의 YTN 인수가 확정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11월 29일, 불과 두 달 전에 YTN을 하기에는 유진이엔티가 미디어 분야

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최다액출자자로서 명확한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고 방송 공적 책임의 계획에 구체적·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 만에 YTN 인수를 확정한 것은…… 그래서 저희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줄기차게 주장한 바입니다.

통일교에 넘기려다가 좌초되고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한 유진이엔티가 3000억을 투입해서, 방송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유진그룹이 인수하게 된 배경은 방송장악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석연치 않은 일이 더 크다는 점을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진그룹이 인수하고 난 다음의 YTN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과거 보도에 대해서 2024년 4월 3일 새로 취임한 공정언론연대 출신의 김백 YTN 사장이 YTN 보도가 불공정하다며 대국민 사과 방송을 합니다. 이 사과문에는 대선에서 YTN이 김건희 비판 일방적 주장만 보도했다, 그리고 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생태탕 의혹은 중점 보도하고 박영선 후보의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를 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선에서 김건희 비판의 일방적 주장만 보도했다, 이것이 첫 일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주당 분량이 많다고 '돌발영상'을 불방을 합니다. 4월 3일입니다.

대통령의 등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칠십 평생 지금처럼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라는 발언과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의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정부는 문재인 정부'라는 발언을 담아서 여야 네거티브 공방을 다뤘습니다. 이때 김승재 보도제작국장이 '돌발영상' 당일 방송편 시사 과정에서 제작진에게 불방을 지시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균형에 불일치 소지가 있다, 불균형·불공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돌발영상'의 경우 한동훈이 인트로와 클로징에 등장하면서 이재명·조국 비판한 내용이 123초였고 이재명, 현 정부 국민의힘 비판하는 내용이 32초였고 한동훈 분량이 3배 안팎으로 많았다. 그다음에 4월 24일 방송된 '새롭게 바꾸겠습니다'에서는 신임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발언, 민주당의 원내대표 출마 관련 발언, 국민의힘의 비대위 관련 발언 방송의 정부 여당 비율이 1 대 1 대 1로 정부 여당에 편향적이다라는 이유로 '돌발영상'을 방송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YTN 프로그램의 대거 폐지, 앵커의 하차입니다. YTN 사 측은 노사 협약인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파기했습니다. 2024년 4월 1일 자로 보도국장 임명을 강행했고 4월 2일 자에 'YTN24'로 모든 뉴스를 바꾸고 임시 편성 개편을 시행하고 4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임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자, YTN의 기존 뉴스 프로그램 12개를 모두 폐지했습니다—자정뉴스, 뉴스출발, 굿모닝 와이티엔, 뉴스라이더, 뉴스LIVE, 뉴스N이슈, 더뉴스, 뉴스Q, 이브닝 뉴스, 뉴스라운지, 뉴스퍼레이드, 뉴스NIGHT. 그리고 담당 앵커 7명도 하차하고, 정규직 앵커 9명 중에 7명을 하차시키고 앵커 직무와 관련 없는 보도국 기자, 편집부 피디로 발령을 냈습니다.

이게 YTN이 유진그룹으로 인수되고 나서 김백 사장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몇 가지 파편적인 내용입니다. 앞서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없애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없애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왜 했냐, 보도전문채널에 왜 했냐, 바로 이 이유입니다. YTN을 사영화시키고…… 오랫동안 YTN은 보도전문채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성과도 거둬 냈고 보도전문채널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도전문채널에 대해서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의무화하는 것을 법제화시켰습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면 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진행이 되고,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보도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듯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앵커 중도에 하차시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YTN 대주주인 유진그룹이 부적격하다는 것은 앞서 이동관·이상인 체제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의 심사 항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점이고 세 번째로는 시청자의 권익보호, 네 번째로는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YTN 대주주는 부도덕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은 2008년도 유진그룹에 대한 내사 무마 대가로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수억 원의 거액의 뇌물죄로 기소됐고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대기업 대표 지위를 이용해서 관련 임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과정을 은폐했고 유진그룹 일가인 유경선 동생 유순태 현 유진홈센터 대표 역시 유경선 회장과 같이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유 회장은 2008년 하이마트 인수 과정에서 벌어진 하이마트 전 회장과의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지난 7월에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 파기환송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유진그룹은 오너 리스크 때문에 2017년 10년간 위탁운용하던 나눔로또 사업자에서도 탈락했고, 수억 원대의 뇌물 공여자가 이런 큰 규모의 정부수탁사업을 맡는 것이 부당하다며 도덕성 점수가 크게 깎였기 때문에 로또 위탁사업을 못 하는 기업에 대해서 대한민국 보도전문채널의 경영권을 준다는 것은 모순이다라는 것이 당시에 지적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투자 손실 돌려막기와 관련해서 경영진이 관여되었다는 의혹 또한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회장님 안가 불법 산지전용 의혹이 있었습니다. 서울 종로 유진인재개발원에 유 회장의 별장 혹은 안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언론에서 불법 산지전용 의혹 제기, 임야를 불법 훼손해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되었다는 내용으로 실제 종로구청은 2022년 5월에 원상복구 시정명령 처분을 했습니다. 유진 측은 행정소송까지 간 끝에 건물 뒤편 대체부지 160㎡에 묘목 60그루를 심는 방식으로 용도변경을 했고 당시 YTN 노조가 확인 결과 유진 측은 현재까지도 종로구 땅을 16년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초고속 승진 3세 승계, ESG 경영에서도 최하위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렇듯 유진그룹을 둘러싼 도덕적이지 못한 것과 기업의 이런 오너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YTN 매각 과정에서 졸속적으로 처리됐고 그 이후에 YTN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YTN 종사자들은 YTN 매각 과정의 불법성, 2인 구조에서 YTN이 유진그룹에 넘겨지게 된 과정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고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희 과방위에서는 이 YTN 매각 과정과 YTN 사영화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거라는 점과 아울러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매년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실함이 없는지 방통위가 살펴보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방송에 대한 탄압입니다. 서울시미디어재단티비에스 사태입니다.

TBS는 2919년 7월 18일 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는 TBS 변경허가 승인을 의결해서 2022년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티비에스가 출범했습니다. 지상파 라디오 사업으로 허가가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31일 서울시의회에서는 TBS 예산을 320억 의결을 해서 TBS가 시민참여형 지상파 라디오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320억을 TBS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9일 날 대선에서 윤석열 정권이 정권을 잡은 뒤에 치러진 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는 국민의힘의 다수결에 의해서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고 2022년 12월 5일 저희 방통위원회에서는 조례 폐지에 대한 의견을 공문을 보냈습니다. 폐지할 것이 아니라 더 논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보냈으나 2023년 7월 5일 날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TBS 추가경정예산 73억 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19일 서울시가 TBS 신임 이사장에 박노황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를 임명하고 2024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10일 서울시는 행안부에 TBS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신청합니다. 출연기관에서 해제되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TBS를 추가 지원할 근거가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6월 11일 TBS 노조는 야 5당과 TBS 탄압 국정조사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1980년 언론 통폐합 이후 공영방송이 사라지는 최초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TBS 종사자들은 180명 남아 있고 30여 명이 무임금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TBS 종사자들은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TBS에 대한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고 정상적이다, 제대로 방송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입장입니다.

현재 TBS는 24시간 중에 5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2시부터 4시 '최일구의 허리케인'을 하고 있고 또 3시간은 서울특별시의 협찬으로 겨우 방송하고 있고 나머지 시간대 19시간은 음악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방송은 지금 방송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고 TBS TV는 방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태규 위원장이 있을 때까지 2인 구조에서 숱하게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하면서 TBS 문제에 대해서는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서울시미디어재단티비에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상파방송으로 역할을 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허가증을 내준 공영방송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없애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 방송국이 해체되는 수준으로까지 왔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얼마 전 서울시의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를 들어서 TBS를 폐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프로그램 없애는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했습니다. 홍보수석이 방송사에 전화를 해서 방송편성에 관여하는 일은 있어도 이렇듯 방송사를 없애고 방

송사를 졸속으로 사영화시키는 이런 무도한, 무모한 일을 한 것은 윤석열 정부밖에 없습니다.

공영방송을 강화시키는 일을 했었습니다. 박정희는 국영방송을 공영방송으로 했고요. 전두환은 공영방송을 확대시켰습니다. 동양방송을 공영방송으로 가져와서 KBS를 1과 2를 만들고 EBS를 독립시키는 교육방송으로 만들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영삼 대통령은 방송사에 재원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 통합징수라는 획기적인 징수 방식을 도입해서 안정적인 재원구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박정희·전두환·김영삼·이명박·박근혜 정권 그 어디에도 볼 수 없었던 일을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겁니다.

그래 놓고 지금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이 방송장악법이다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정상화법입니다. 공영방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부터 또한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시청자위원회와 보도국장 임명동의제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편성위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국장 임명에 관한 것은요 방송법 21조에 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KBS와 방문진과 EBS와 보도전문채널은 독립성이 보장돼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보도책임자를 임명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편성책임자, 편성규약, 편성위원회에 관한 부분입니다. 편성책임자 지정 및 편성규약 제정,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에 관한 개정 사항인데요. 방송법 개정안에는 방송사의 편성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송편성책임자를 지정하고 편성규약 제정 의무를 더해서 방송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를 법제화했습니다. 현행 방송법 제4조 3항에는 모든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편성책임자를 방송위원회의 제청으로 선임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방송편성책임자의 선임은 단순히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KBS 낙하산 사장이 되면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하지 않고 YTN처럼 민간기업이 최다액출자자가 돼서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없애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방송법에 보면…… 앞서 신동욱 의원께서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조항의 4항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1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3항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 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4항입니다.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이 기 있습니

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제하기 위해서 의무화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방송 편성위원회 설치 대상이 되는 방송사업자는 어디냐라고 하면 이 부분은 45조 2항에 있는 것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보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입니다. KBS, MBC, EBS, SBS입니다.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채널A, TV조선, MBN, JTBC가 해당되고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즉 YTN과 연합뉴스TV가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방송사업자입니다.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을 좀 더 강제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방송 편성위원회의 설치기준 및 구성은요 방송 편성위원회는 반드시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구성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편성위원회 의장은 방송사 내부 인사가 아닌 외부 인사여야 하고 방송 편성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소속 직원 중 추천하는 5명, 편성·보도·제작 직무를 수행하는 방송종사자들이 추천하는 5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규약은 방송 편성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의견 청취가 의무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게 합의가 안 되거나 협의가 안 되면 부지하세월로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송사업자는 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 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된다' 그래서 1회 이상 공표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못 한다거나 이걸로 인해서 방송이 사고가 난다거나 그런 억지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송법에 방송의 공적 책임은 5조에 있습니다.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및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조항입니다.

제6조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송에 관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2항은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4항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5항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항 '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7항 '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8항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9항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하는 경우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

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균형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방송법에 적시되어 있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방통위 설치법에 대해서도 목적을 말씀드렸지만 방송법의 목적도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청자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정기구입니다, 시청자위원회는. 거기서 2명의 이사를 추천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오늘 10시간 필리버스터 하면서……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법과 설치법을 준수해야 될 위치에 있는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방송 3법이 통과되고 방통위가 정상화돼야지만 앞서 얘기드렸던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고 시청자의 권익보호도 할 수 있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과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와 자구를 상당 기간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방송법과 방통위 설치법을 통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적임을 할 수 없는지는 이미 누차에 걸쳐서 국민들도 알고 국회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또 방송법을 통해서 국민의 알권리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이용자의 복지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3법이 저희가 논의를 하는 동안에 국민의힘은 그 법이 처리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당 기간 노력을 기울였고, 이 방송 3법에 대해서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를 소개드릴까 싶습니다. 꽤 내용이 많은데요, 양승동 전 KBS 사장이 기고한 내용입니다. '방송 3법 과방위 통과를 지켜보며' 이 내용인데요.

'7월 7일 날 방송 3법 개정안이 과방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수일째 계속되던 폭염을 식혀 주는 한줄기 시원한 소나기 같았다. 방송 3법 개정안은 35년에 걸친 방송인들의 오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덕분으로 그해 말 방송법이 여야 합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개정됐으나 1990년 3당 합당으로 다시 여대야소 국회가 되자 집권 여당 민자당은 다시 개악을 했습니다. 문민정부를 거쳐 국민의정부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방송인들은 수차례의 파업과 투옥을 불사하는 등 이른바 방송법 투쟁을 통해 방송의 독립과 보도·제작의 자율성을 쟁취하고자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2000년에 시행된 통합방송법에서 방송편성규약의 법제화 등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시대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이사 추천권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이던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올해 들어 대통령 탄핵에 이은 6·3 대선으로 정부가 바뀌면서 기대감이 고조될

수 있었습니다. 방송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주요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달여 진통이 계속되면서 다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법 개정에 찬성하는 일부 전문가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비판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전격적으로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방송 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축소됐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와 편성위원회의 법제화 및 실효성 강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명문화 같은 한국 방송의 역사상 큰 획을 긋는 의미심장한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후견주의 축소는 물론이지만 이에 더하여 사추위와 편성위원회의 법제화,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 신설 그리고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명문화도 획기적인 것입니다.

먼저 정치적 후견주의 축소를 통한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입니다. 학계 전문가들은 우선 방송법이 정치적으로 후견주의 요소를 갖고 있어서 문제라고 오래전부터 지적해 왔습니다. KBS의 경우 이사 11명은 여야 7 대 4 구도로 계속 선임돼 왔고 이사회는 과반수 의결로 사장후보자를 추천해 왔습니다. 1973년 공영방송이 된 이래로 총 20명의 사장이 재임했는데 선임 과정에 사추위나 시민자문단이 참여한 네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후견주의가 강하게 작동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이사 숫자 12명으로 늘리고 그중에서 6명만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사회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낮춘 것입니다. 나머지 9명에 대한 추천 주체를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로 다양화했습니다. 디테일을 참신하게 잘 규정해 놓았습니다.

시청자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는 경우 추천 주체인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부터 획기적입니다. 다시 설명하겠지만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을 편성위원회라는 데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KBS의 경우 15명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사장이 임의로 위원들을 임명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골적인 낙하산 사장 시기의 시청자위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나머지 추천 주체인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그리고 변호사단체의 경우도 각 추천 주체의 자격기준과 추천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가 여전히 6명을 추천하는 것에 관해 비판적 의견도 있지만 나머지 9명의 추천 주체가 다양하고 민주적 절차와 방식,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법제화했다는 점에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사추위 설치를 명문화함으로써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KBS의 경우 사장 선임 때마다 구성원들과 노동조합에서 사추위 설치를 요구했지만 이사회로부터 번번이 거부당했습니다. 딱 한 번 구성된 적이 있었는데 정연주 사장이 선임됐던 2003년이었습니다. 이후 유사한 제도가 도입된 게 세 번 있었습니다. 2016년 촛불혁명 후인 2018년 2월 사장 선임 때는 이사회가 시민자문단 제도를 도입해 사추위 역할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4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KBS 사장 선임 과정에서 사추위나 시민자문단을 두었을 경우 낙하산 사장 논란이 사

라졌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시민자문단 제도를 폐기해 버렸습니다. 법에 규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낙하산 사장이 왔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박민 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추위 구성을 법으로 명문화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경우 이사회에 사추위를 두되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고 여론조사기관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위원회 구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 경영계획 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들에 대해 이사회가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자를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도 큰 변화가 있는데 의결정족수를 기존의 과반이 아닌 이른바 특별다수제로 한 것입니다.

세 번째, 편성위원회 법제화 및 처벌 조항 신설을 통한 편성규약의 실효성 강화입니다. 지상파 TV와 보도전문채널뿐만 아니라 종편채널에도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25년 전에 통합방송법 제정 과정에서 방송인들은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법제화를 주장했지만 관철해 내지 못했습니다. 방송법에 편성규약에 관한 4조 4항은 명문화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방송사 노조들이 연대한 방송법 투쟁의 성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법제화 수준으로는 편성규약의 실효성을 담보받기 어려웠습니다.

KBS의 경우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사 합의로 2003년과 2018년에 두 차례 편성규약을 강화하였고, 특히 2003년 노사 간 단협을 통해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까지 두게 되었으나 2008년 이후로 낙하산 사장 시대가 되면서 또다시 유명무실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성위원회를 방송법에 명문화함으로써 실효성을 명확히 담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편성위원회는 방송사업자 소속 구성원 중에 추천하는 5명과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일선 기자와 피디 등을 포함한—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이 5명, 10인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에서 호선하는 겁니다. 방송법상 명문화를 요구해 왔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의 편성위원회가 법제화된 것입니다. 노사협의회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효성이 크게 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명문화한 것 또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한 것입니다. 2018년 4월 양승동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보도와 시사 분야 담당 국장을 임명동의제로 노사 합의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KBS 구성원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제작 자율성 보장 장치입니다. 이 제도는 후임 사장 시기에도 이어졌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낙하산 사장 시대가 되면서 사장의 인사권 훼손 등의 이유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사장의 인사권은 충분히 살아 있었고 오히려 보도에 관한 외부 압력을 차단하는 명분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21조를 신설하면서 방송사업자의 대표가 보도책임자를 보도 분야 직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법제화한 것은 또 하나의 진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5월 중순, 필자는 한 토론회 ‘KBS의 길을 묻다’에서 KBS 이사 선임 시 정치권

개입 최소화를 비롯해 사장 선임 시 사장후보추천위원회 등 시민참여, 보도·시사 국장 임명동의제 그리고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까지 모두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방송, 특히 공영방송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부침을 계속해 왔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이 독립성을 상실하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시청자로부터 신뢰를 받아야만 그 바탕 위에서 뉴스와 시사는 물론 교양, 예능, 드라마, 스포츠 등의 프로그램도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넷플릭스로 대변되는 디지털·글로벌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의 미래 비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 독립과 제작 자율성 보장은 공영방송의 생존과 지속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후견주의 요소의 축소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지만 국장 임명동의제나 편성위원회까지 법제화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방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이런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법제화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방송사 내부 구성원과 시민들의 집단지성에 대한 믿음, 오욕의 공영방송 역사에 대한 성찰과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야당 시절에는 찬성하다가도 집권 여당이 되면 소극적으로 바뀌는 소위 내로남불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이번 개정안은 의원들이 제출한 총 19건의 법률안들을 조율해서 안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노조 등 방송사 구성원들, 학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제안과 지적도 수렴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방위 의결 과정에서 1야당인 국민의힘 일부 위원들이 퇴장해 버린 것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행위여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얼마 전 정연주 KBS 전 사장이 제도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면서 제도도 물론 바뀌어야 하지만 사람과 문화까지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지만 진짜 개혁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정되는 방송법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방통위가 면밀하게 관리 감독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송사 임직원들의 지혜와 용기, 성실과 절제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화와 관행으로 단단하게 뿌리내려야 공영방송의 독립과 자율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대상에서 SBS와 일부 지역 민방들이 제외돼 노조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일어 4개 종편이 함께 빠진 모양입니다. SBS와 일부 지역 민방들은 지상파 범주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조정되거나 추후 2단계 개정에 포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는 양승동 전 KBS 사장의 기고문은 오랫동안 방송종사자로서 KBS가 어떤 정권에서는 정상적으로 방송이 되다가 어떤 정권에서는 방송이 형해화되는 것을 현장에서 본 방송사 종사자의 간절한 글이라서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대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기고문에도 있었지만 20명의 사장이 있었고 4명만 선임 과정에서 사추위나 시민자문단이 참여해서 사장을 선출했다는 점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사장후보추천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보도의 공정성과 시청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방송사 사장이 됐을 때는 땡전뉴스, 땡윤뉴스, 땡이뉴스, 땡박뉴스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했습니다.

만약에 방송이 장악되지 않고 방송이 정상적으로 보도를 했다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월 3일 계엄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송이 정상적으로 또는 언론이 제대로 보도됐다면 윤석열 정권은 망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한 헌법재판관의 얘기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궤를 같이하는 정당에서는 귀담아들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 크고 딱딱한 침대 매트리스를 설치하고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순방 시에 전용기에 싣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몸이 안 좋으면 운동이라도 하시지 웬 딱딱한 침대 매트리스를 전용기에 싣고 다니느라고 경호실 직원들에게 힘들게 했는지 참 괴이합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청구됐는데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드러누워서 체포를 거부하고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대한민국 민주국가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망상에 사로잡혀서 본인이 어떤 죄로 감옥에 갇혀 있는지 모르고 현실 인식이 지극히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정상화돼야 되고 공영방송이 제대로 보도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TN·TBS 정상화가 신속하게 되려면 방통위가 정상화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 '바이든-날리면' 대리소송 불가 판단에도 강행했다라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8개 현업 단체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진상규명을 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 MBC 보도국장은 외교부가 대리소송한 경과부터 밝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바 있고요. 외교부는 소송 주체가 안 된다고 했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묵살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잘 알다시피 2022년 9월 22일 날 오전 7시 반에 영상이 모든 방송매체 서버로 송출되었습니다. 방송 기자들은 동영상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각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오전 7시 40분경에 욕설로 들리는 단어가 있다는 이야기가 기자들 사이에 오고 갔습니다. 기자들은 기자실에 있던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바이든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지만 이 관계자가 '나는 다르게 들린다. 좀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전 9시 전후로 바이든으로 적시된 발언 녹취와 영상이 지라시로 돌았고 MBC가 오전 7시에 보도를 했고 당일 대부분의 언론사가 바이든으로 표기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같은 과정에서 대통령 관계자는 영상취재 기자단에게 어떻게 해 줄 수 없느냐고 말한 데 이어서 방송사 취재 기자단 간사에게도 외교상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비보도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진이 퍼진 3시간에서 4시간 뒤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사적 발언을 외교 성과랑 연결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설명은 기자들에게, 대통령실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언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했고 이 시점부터 윤 대통령 발언을 두고 기자들과 대통령실 사이에는 논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나가고 며칠 지나서 국민의힘이 고발장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후 고발장 12장이 한꺼번에 날아왔고 여기에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있고 일부 단체가 MBC를 이적죄로 형사고발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명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현재 MBC 그다음에 언론노조에서는 외교부장관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외교부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의 주체도 당시 외교부장관, 홍보수석, 윤석열 본인이 사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1년이 넘도록 갖은 탄압을 자행했고 TBS 탄압, MBC 탄압, KBS 수신료 분리징수로 낙하산 사장 내려보내서 8·15 때 기미가요를 트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있었고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알았다면 방송을 틀었겠습니까'라고 격앙돼서 발언해서 박민 사장은 밉보여서 쫓겨나고 연임을 하지 못하고 파우치 사장이 현재 KBS 사장을 하고 있고 YTN 사영화라는 흑역사가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된 방송장악입니다.

저희가 방송 3법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방통위 설치법 개정하고 그리고 통합미디어법을 통해서 미디어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는 더 이상 대통령이 방송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글로벌 스탠더드로 대한민국의 방송 지원과 융합 시대에 맞는 그런 미디어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이라는 점 역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상휘 의원님 아직 안 오셨지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다리고 계십니까? 밖에 계시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서너 시간 하려고 했는데 지금 3시간 했나요?

(「2시간 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2시간 했어요?

(「4시간 한 것 같은데」 하는 의원 있음)

야당 의원님들이 조용히 계셔 가지고 차분히 진행되는 게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 드린 것 같고요. YTN 매각과 TBS 상황도 보고드렸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관련해서 언론사만 말씀을 드렸는데 피해자들 얘기를 좀 전해 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피해자들께서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장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서 부당하게 해임됐거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3사를 중심으로 정권의 조직적인 방송장악 시도에 맞서 싸워 온 당사자들 이야기입니다.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한 해임조치가 군사 작전을 방불케 했고 전격적이고 폭력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해임 사유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명확한 증거 없이 왜곡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된 것에 불과하고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검찰,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정권에게 우호적인 인물로 교체해서 방송사 사장 선임을 장악하려는 노골적인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입맛에 맞게 재편하고 방송장악의 야욕을 거리낌 없이

드러냈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무시한 채 방송과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이때 가장 피해를 본 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023년 5월 30일 면직이 됐습니다. 사건명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불구속기소가 됐고 1심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요.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재판이 진행돼서 지금 이 재판은 내년 12월이 돼도 끝날지 말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통위 직원 2명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했다라는 프레임이 덧씌워져서 한 사람은 구속…… 두 사람이 구속됐다가 지금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3월 달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에 일부 심사위원의 점수에 대해 방통위 간부가 점수 조정을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점수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당시 검찰은 한상혁 위원장이 점수를 조작했고, 조작을 사실상 지지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불구속기소를 했고, 참여한 공무원 둘을 기소한 사건이고 심사위원 일부도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 직원 40여 명 가까이가 수사를 받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지금 재판에 불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을 기소하고 대통령은 정상 직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고 2023년 5월 30일 면직당했습니다. 지금 한상혁 위원장은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1심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고통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었던 정연주 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이었던 이광복 부위원장, 김유진 위원 이렇게 3명이 해임되었습니다. 2023년 8월 17일 날 해임이 됐고 그다음에 해임처분 취소와 관련해서 1심 승소를 했고 더 이상 재판이 진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광복 부위원장도 마찬가지로 2023년 8월 17일 날 해임됐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김유진 위원은 2024년 1월 17일 날 해임이 됐고 1월 24일 날 제소했습니다. 해촉처분 취소돼서 1심이 승소됐고 2심이 취하돼서 최종적으로 김유진에 대한 해촉처분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 법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공영방송 임원 해임 관련 소송도 많습니다. KBS는 남영진 이사장에 대해서 지난 2023년 8월 14일 날 해임했고, 제소를 했고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2심 남영진 이사장이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상고를 취하해서 최종적으로 남영진 이사장의 해임처분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KBS 윤석년 이사에 대한 건입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김의철 사장에 대해서 지난 2023년 9월 12일 날 해임했습니다. 제소일이 9월 14일이고 1심에서 승소해서 해임 취소, 부당하다라는 것이 판정이 났고 2심이 취하돼서 최종적으로 해임처분이 부당한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방문진 이사장, 권태선 이사장의 건입니다. 2023년 8월 21일 날 해임됐고 제소했습니다. 해임처분에 대해서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선고일이 2024년 12월 19일이고 2심 진행

중에 집행정지가 됐고 3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권태선 이사장 역시도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방문진의 김기중 이사 역시도 2023년 9월 18일 날 해임됐고 2023년 9월 18일 날 제소했고 해임처분을 1심 승소했고 지난 5월 31일 날 마지막 3심까지 승소한 것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정미정 EBS 이사 역시 TV조선 점수 조정 사건에 연루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임원 불법 임명 관련 행정소송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능희 방문진 이사 지원자에 대해서 이사 임명처분 취소했는데 본안 1심이 진행 중입니다.

권태선·김기중·박선아 방문진 이사 세 분에 대해서는 이사 임명처분 무효 확인했고 본안 1심 진행 중이고 집행정지 3심 승소 확정이 됐습니다.

박찬욱 KBS 감사에 대한 건입니다. 감사 임명처분 무효 확인됐고 집행정지 1심 패소, 2심 승소, 3심이 진행 중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찬욱 KBS 감사는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김유열 EBS 사장도 마찬가지로 25년 3월 27일 날 사장 임명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했고 2심은 진행 중이고, 본안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유시춘 이사장의 경우는 2024년 10월 15일 검찰에 의해서 법인카드 사적으로 사용했다, 업무상 배임으로 불구속기소 돼서 3차 공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장은 1년이 넘도록 깜깜무소식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방위적으로 공영방송……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 위원장 정연주, 전 부위원장 이광복, 전 위원 김유진, 그다음에 KBS 전 이사장 남영진, 전 이사 윤석년·조숙현 이런 분들, 그다음에 방문진 이사장 권태선, 이사 강중묵·김기중·김석환·박선아·윤능호, EBS는 이사장 유시춘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재판을 받았고 정신적·물질적·경제적 손실을 봤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래 놓고도 방송장악 안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 3법 정상화법을 가지고 방송장악을 한다, 독재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때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민에게, 계엄과 내란으로 인해서 정신적인·물질적인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종사자들의 오랜 염원인 방송 3법이 제때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협조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것을 밤새 필리버스터를 하고 많은 공직자들이 퇴근도 못 하고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억지논리와 거짓과 가짜뉴스를 내뱉는 그런 공간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공간을 장악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긴급담화문을 발표했던 게 2024년 12월 3일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국회는 지금까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고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 10명을 탄핵 추진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도 유례없는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고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장관을 탄핵하고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고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 행정부를 마비시켰습니다—중략하고요—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 가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하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겁니다.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 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소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겁니다'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붕괴되는 상황도 아니고 풍전등화의 운명도 아니고 헌정질서가 파괴되지도 않았고 대한민국은 건재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포고령을 내렸는데 여기에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1항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여론조작·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이 대목입니다. 이게 계엄사령부 포고령입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이재명 정부를 독재라고 얘기하면서 방송법을 폄훼하는데, 가짜뉴스를 만들고 여론조작을 하고 허위선동을 하고 있었던 세력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추종 세력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 대한민국 국회와 법원과 선관위와 군 일부와 국민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윤석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 세력이 민주세력에게 독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잘못된 관행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호도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쭉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강제로 쫓아내고 감사원과 검찰 공권력을 동원해서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네 번에 걸쳐 압수수색을 했고 억지 표적수사를 통해서 한상혁 위원장을 기소했고 결국 면직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YTN 사영화를 전격적으로 진행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방통위를 장악해서 김효재와 이상인,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까지 2명의 여권 측 방통위원만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하고 불법·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방송통신 분야 심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을 불법적으로 해촉했습니다. 새로운 위원장으로 임명된 류희림 위원장은

법적 근거나 권한도 없이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심의하겠다고 나섰고 당시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만들어서 100일 동안 가동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가족, 지인, 그다음에 회사 동료 등을 동원해서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보도에 대한 민원을 접수시키고 류희림 위원장 본인이 직접 일곱 차례 심의에 참여하는 식의 청부민원과 셀프 심의의 위법을 자행했습니다. 더 나아가 완벽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해 정민영 방심위원을 해촉하는가 하면 합리적 이유도 없이 김유진·옥시찬 방심위원을 해촉하고 친윤석열 정부의 인사인 문재완·이정옥을 보궐 상임위원으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김유진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정지 집행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방심위원으로 복귀하도록 했고, 그 후임으로 임명된 이정옥을 해촉하지 않아 대통령 위촉 몫 3인 이내의 범위를 벗어나는 4인 상태를 유지하는 방심위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불법을 자행했으나 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출범한 지 2년도 안 되어 대표성을 결여한 특정 극보수 성향의 학회·시민단체에 위원 추천권을 주는가 하면 심의 대상인 특정 보수 언론사에도 추천권을 주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보수 진영의 인사 다수로 포진해서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MBC와 CBS 등 특정 방송사에 대한 표적심의를 했고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비판 방송에 대해서는 심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을 행사하여 법정제재를 남발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감사원과 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공영방송 이사들을 강제 퇴출시켰었고 숙청에 가까운 불법적 인사조치를 강행한 바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KBS 남영진 이사장, 윤석년 이사, 방송진흥위원회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EBS 정미정 이사 등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한 후 이사회를 장악하여 MBC 사장을 교체해서 공영방송을 정권의 홍보·선전 방송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KBS 이사회는 야권 추천 인사 2명이 해임된 자리에 정권의 입장을 대변할 여권 성향의 보궐인사를 임명하여 여야 6 대 5 구조가 되자마자 KBS 김의철 사장 해임건의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즉시 해임하도록 하고 방송에 문외한인 박민 사장을 임명하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MBC에 대해서는 '바이든-날리면' 보도 이후에 MBC 소속 기자에 대해 전용기 탑승 배제를 하고 막말 보도에 대한 형사 고발, 보도를 담당했던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감사원의 감사 및 방통위의 방문진 감사 실시,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에 이어 김기중 이사까지 불법적으로 해임하는 등 MBC에 대한 탄압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법원에서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서 윤석열 정권이 불법적으로 이사를 해임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나아가서 대통령 임명 2인의 위법한 의사결정 구조하에서 준공영방송 YTN의 최다액 출자자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지분을 인수한 유진이엔티로 변경승인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법 기업인 유진그룹이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고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안을 2024년 2월 7일 날 의결했

습니다.

YTN 민영화 결정은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명의 의결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그 자체로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과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아울러 YTN 매각 처분을 의결한 위원 2명 가운데 1명인 이상인 부위원장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배임 증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변호를 맡은 바 있습니다. YTN 지분을 인수한 유진이엔티는 유진기업이 51%, 유진기업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동양이 49%의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이처럼 심의 의결의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할 만한 결격사유를 가진 이상인 부위원장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의결함으로써 방통위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김효재 직무대행 등 단 2명의 여권 측 방통위원만으로 KBS 수신료 통합징수의 합법성과 당위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국회의 입법권도 무시한 채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을 강행 처리한 바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 KBS의 재정 파탄을 초래해서 이를 무기로 KBS가 권력에 대한 비판·감시 기능과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영방송사의 책무를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KBS를 대통령 부부와 정부 여당 찬양 방송으로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감사원과 검찰 등을 총동원해서 전방위적인 압박의 불법성,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불법 면직과 후임 이동관·김홍일 위원장 임명을 통한 공영방송 장악·통제 기도, 위법적 2인 구조하에서 방통위의 기형적 운영,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한상혁 위원장을 비롯한 KBS·EBS·방문진 이사 및 방심위 위원장 등에 대한 해임·면직·해촉의 불법성, 준공영방송 YTN의 공기업 보유 주식 매각의 위법성, 정치적 목적에 의한 공영방송 TBS 지원조례 폐지 및 방통위의 직무유기 의혹, 이동관 및 류희림 위원장의 인터넷언론 검열·통제 획책 등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불법적인 방송통신 장악을 막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 3법 통과를 위해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 위원들은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 그리고 국회는 그동안 공영방송을 위해서 노력했으나 탄압받았던 분들에 대한 억울함을 풀고 공영방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방송3법을 처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통위 설치법을 재개정해서 정상화를 해야지만 이 모든 문제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첫 단추를 여는 것이고 큰 산 하나를 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망가지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9일 날, 방통위는 다음 날부터 고초를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아무 이유도 모른 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도에 방통위가 설립됐고 방송위원회로부터 변화를 맞았던 통신산업이 변화하는 환경, 급성장하는 휴대폰 시장에 따라서

SK·LG·KT 같은 기업이 등장했고 전통적으로 방송 부문에 속해 있던 역할을 통신 주체가 담당하는 융합 시대가 도래해서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의 융합 시대에 맞추어서 많은 일들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방송통신위원장을 쫓아내려고 1년 넘게 탄압을 가했던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추천한 방송위원은 임명을 거부, 상임위원을 거부하고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방송 탄압을 했습니다.

2023년 텔레비전 수신료를 시작으로 했던 일이 정말 사실은 KBS에서도 설마설마했었고요. 방송통신위원회 안에서도 직원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빨리 분리징수를 진행할 거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시행령으로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수백억의 손실을 보는 일을 시행령으로 바꿔서 진행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텔레비전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국민참여토론을 통해서 했다고 하지만 여론조사 방식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해도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분도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이 문제도 훗날, 곧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30년 동안 유지해 온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징수 방식을 한 달 만에 여론조사 방식이라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텔레비전 수신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앉혀서, 당시 방통위원회에 두 가지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통위 김효재 권한대행은 두 가지 권고를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분리징수를 감행했습니다. 그 덕에 지금 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임기를 마치고 또 다른 자리를 가기 위해서 방송을 장악하고 탄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을 또다시 언론을 재갈 물리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분 또한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김효재 위원과 안형환 위원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던 한상혁 위원장을 그만두라고 기자회견도 하시고 국회에 나와서 발언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과 철학이 다른 사람이 위원장을 하는 게 맞냐고 하던 그분은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이율배반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억지로 쫓아내고 없는 죄도 만들었던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 윤석열 정권에서 핍박받았고 아무런 죄가 없는 한상혁 위원장은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다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의 TV조선 건 관련해서 국민들이 좀 지난 얘기라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당시에 여당 정치인들은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냐, 나 같으면 그만둘 텐데'라는 수모를 주기도 했고요.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안 맞으니까 나와야 된다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가 수정된 것을 조작됐다며 검찰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다섯 번에 걸친 압수수색을 했고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감행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1월 달에는 재승인을 담당했던 국장과 과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차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과장이 구속이 됐고 검찰은 국장에 대해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둘 다 구속시켰고 심사위원장도 구속을 시켰습니다.

TV조선은 2017년도에 기준점에 미달한 바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653점으로 그중에 과락이 50점 미만인 분야가 있어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TV조선 재승인 심사 결과에 대해서 TV조선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상혁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은 한상혁 위원장을 면직시켰습니다. 임기 보장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는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서 그만두게 한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인사혁신처의 청문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기소됨에 따라서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제3호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근거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제56조(성실의무), 59조(친절·공정의 의무), 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 면직), 제73조의3(직위해제)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자 방송통신 상임위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툼의 소지가 있지만 법상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라고 보여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당시에 정말 이 문제를 두고 수도 없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장도 방송통신위원이다. 그래서 탄핵 이외에 직무상의 법률를 위반했을 경우에 면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선례를 남겼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쭉 진행됐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KBS를 장악하려고 하면서 잘랐던 윤석년 이사, 남영진 이사장…… 특히 남영진 이사장은 억울하게 해임됐다라는 것이 최근 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이때 감사원에서 진행 중인 감사 내용이 MBC의 경우에 방문진 이사를 해임할 때 정보를 유출한 건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방통위 안에서 벌어졌던 일,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진행됐던 방송장악 일들이 결코 그냥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잡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한편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공동체라디오라고 지역주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하는 지역 밀착형 미디어가 있는데요, 여기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나중에 원상복구 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렇듯 아주 촘촘히 다양한 형태의 방송장악을 시도했었고 많은 부분이 실패하게 된 겁니다.

가장 큰 사건 중의 하나는 결국 최민희 방송통신 상임위원을 내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몰락하게 되는 과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동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3월 30일 날 최민희 상임위원 내정자를 국회에서 교섭단체 몫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최민희 내정자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

회장직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 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법령 해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하게 되면 일주일 내지는 2주, 아주 길어야 한 달이면 유권해석을 내리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방통위에서 4월 13일 날 법제처에 내정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법령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한두 차례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2017년도에 유사한 일이 있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 문의를 했었고, 그 이전에는 고삼석 방통위원 내정자에 대해서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5일 만에 유권해석의 결과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당시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 협회 및 단체의 임직원도 방통위 설치법의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포함되는지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했으나 답을 주지 않았어요. 초창기에는 이삼 개월이면 결론을 내릴 거다라고 했는데 7개월이 되도록 유권해석의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에 YTN 사영화가 차곡차곡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방심위에서 청부민원 등을 통해서 특정 언론에 대한 탄압이 노골적으로 진행됐고, 돌이켜 보면 총선을 앞두고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실력으로 승리할 수 없으니 계엄을 머릿속에 놓고, 또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몇몇 언론사에 대해서 설계도면을 가져갔다라는 게 최근에 알려지게 된 내용들입니다.

고삼석 후보자는 2014년도에 있었고요, 6일 만에 방통위가 회신을 줬다는 점 다시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번 기억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둘러싼 갈등이었습니다. 이때 2022년 10월 29일 날 용산 이태원에서 158명이 압사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을 했고 당시 정부는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습니다.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면서 리본을 착용하도록 했는데 통상 '근조'라는 글씨가 적혀 있는 리본을 달도록 평소에는 그랬는데 이번의 경우는, 이태원 참사의 경우는 글씨가 없는 리본을 착용토록 했고 그다음에 영정과 이름도 없는 그런 국가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희생자 명단을 일부 단체에서 공개를 요구했는데 그것 또한 비공개가 원칙이다라는 걸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고요. 세월호 참사 때는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명이인이 있었고 남녀가 혼동이 돼서 생존자와 희생자가 서로 엇갈려서 제2, 제3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영정과 피해자 유가족들의 동의하에 피해자 명단을 공개했는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은 공개한 언론사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론사를 압수수색했고 해당 기자에 대해서도 자택과 핸드폰에 대한 압수까지 해서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물론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최초로 정부로부터 희생자 공식 명단을 받았습니다. 3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세월호 때도 세월호가 인양되는 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2014년도에 침몰된 배가 2017년도에 인양될 수 있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희생된 국민들을 기억하고 기록해야 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감추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일들이 세월호 때도 있었고 이태원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도 언론사들은 진실을 밝

히려고 했고 공영방송은 진실을 은폐하고 보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보수 정권과 민주성이 보장되지 않은 정부에서 있었고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그것을 가리려고 했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 급급했기 때문에 공영방송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공영방송이 제자리에 갔을 때 사과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보도를 했었던 것으로 우리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KBS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다큐 보도를 불방하도록 한 것도 앞서 얘기했던 편성규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고 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파생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영방송이 신뢰도가 떨어지면 광고 수익도 줄고 신뢰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잡는 노력은 바로 민생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저희는 주장합니다. 특히 텔레비전 수신료를 좌지우지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방송의 질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광고 수익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방송 3법이 통과돼서 공영방송이 제 위치를 찾아야지만 국제적인 신뢰도도 그렇고 공영방송의 믿음도 정상적으로 될 때 수신료 문제도 제대로 잡을 수 있고 광고 수익도, 콘텐츠 수익도 제대로 돼서 보도가 잘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방심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2023년도에 이동관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원 스트라이크로 퇴출을 시키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신뢰도 보고서와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이 표 순위로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순위가 다시 올라갔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3년 5월 3일 날 지수가 22년도에 비해서 4단계 하락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바로 방송 3법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이런 국경 없는 기자회나 영국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언론에 대한 신뢰도들이 제대로 바로잡아질 때 믿고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방송 3법을 두 차례 거부권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저께 올렸습니다. 국민들께서 밤잠 설치며 방송 3법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에 대해서 응원을 해 주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이 방송법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987년도에 국민 항쟁을 통해 제대로 만들어지기를 간곡하게 원했지만 많은 부분이 훼손됐고 윤석열 정부하에서 공영방송 관계자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방송 3법은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8월 4일 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시민주권 강화, 방송 제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방송 3법이 눈앞에 와 있고 반드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공영방송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추천 단체를 다변화한 것은 정치권에서 좌지우지하던 경영 지배구조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린다라는 취지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100% 정치권에서 하던 것을 40%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는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주당이 독재를 한다, 이재명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시청자위원회 그다음에 방송종사자와 학계, 법조계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공간을 넓혔다라는 점이 가장 의미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공영방송 사장 선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드렸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낙하산 사장을 꽂아서 조그마한 파우치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8·15에 기미가요를 듣는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송 3법은 시청자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고 그리고 미디어·방송학회에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방송사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절차도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방식을 반드시 도입할 것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노조가, 민주노총이 방송사를 장악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KBS는 노조가 3개 있습니다. 그리고 MBC도 주요 노조가 3개, 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장악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노조활동에 경기한다거나 알레르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조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고요.

그리고 우리도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국회의원도 임기가 4년이고요. 그 4년 안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것이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불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송 3법 개정안도 이것이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시대의 소명, 시대의 부름을 그때그때 반영해서 국민들의 뜻을 수용하고 또 발전하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이 방송 3법은 개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공영방송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낙하산 사장을 임명해서 방송사의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을 빠른 시간 안에 바로잡고자 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고, 그 바로잡는 노력 중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방송 3법과 관련해서 법 개정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을 내놓고 함께 머리를 맞대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법 개정은 내놓지 않고 소위를 열면 퇴장하고 그리고 항의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3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여해서 반대하셨습니다. 11명의 찬성과 3명의 반대로 방송 3법이, 오늘 본회의 표결이 남겨져 있는데요.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방송 3법이 국민의힘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염원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그동안 오랫동안 이 법이 20대, 21대에 논의되어 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오늘 반드시 방송법이 처리가 되고 그 뒤에 방문진법 그다음에 EBS법이 처리돼서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고 그리고 종사자들이 더 이상 길거리에서 파업하지 않고 직장에서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방송 3법이 잘 처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어제 방송 3법이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께서 합의를 통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방송법이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심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을 강화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고 오랫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특별부담금을 부과해서 방송을 키워 온 것이고 그 방송은 정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영원하게 국민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의 다변화된 조건에서 저희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의 체질을 강화시키는 법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늦게까지 함께해 준 동료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리고, 저의 필리버스터는 여기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 방송 3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이상휘)

(02시38분)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이상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휘 의원 늦은 시간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현 의원님께서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행스럽게 단상을 그렇게 조절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점에서 참 기쁩니다.

오늘 방송 3법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23일 날 제가 국회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 철강산업에 대한 위기, 산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쌀 같은 존재가 철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5분발언을 한 적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 지역구가 포항입니다만 포항이 무너지게 되면 철강산업이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특단적인 대책과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행히도, 어제지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이게 소위 말해서 K-스틸법이라고 해서 민주당의 어기구 의원과 제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해서 여야가 나름 협치에 대한 물꼬를 트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야 합쳐서 106명의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협치의 물꼬를 트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갈등과 대립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생의 해결에는 여야가 없다, 정치적 대결이야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똑같은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결국 정치의 본질 자체가 국민들의 삶에 있다는 그런 점에서 뜻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참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어기구 의원님과 그리고 또 우리 여야 국민의힘·민주당 의원님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방송 3법에 대해서 참 무거운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초선 국회의원 처음 들어와서 지난 1년 동안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맡았고 또 과방위의 활동을 하면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로 민주당 의원님들과 대립도 하고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협치의 대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급기야는 계속해서 이런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진상을 이야기하고 또 그에 대한 배경, 그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2주 만에 다시 섰습니다마는, 이게 민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어쩌면 민생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방송 3법 같은 이런 법에 대한 통과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권력에 대한 견제적 기능에서 방송 3법은 그 자체가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1700년대에 존 로크라는 사람이 당시에 이권분립이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후로 몽테스키외라는 사람이 삼권분립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그 삼권분립을 상당히 무력하게 하는 그런 어떤 권력에 대한 장악력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견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방송이고 언론입니다. 방송이고 언론인데 이 기능마저도 특정 세력이라든가 특정 조직에서 이것을 장악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권분립이 아니라 일권분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권독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실도 우리가 묵과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방송은 지난 1987년도의 민주화 이후에 계속 방송에 대한 합리화 과정 그리고 여기에 대한 민주화 과정을 쭉 거치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역할은 국민들에게 여론, 그 정당성과 공정성·형평성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여론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본연의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것이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백마고지 진지전을 하듯이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대립이 돼 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점을 지적하시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점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쩌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일종의 전리품처럼 챙기게 되는 그런 걸로 만들어진 것이 방송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난 1987년 이후에 방송에 대한 민주화운동 그리고 방송의 공정성·독립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부침을 거쳤지만 결국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만들어진 이 방송법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생각들이 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방송법이 아니라 법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부침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해적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충돌되는 그런 것들을 완화시키면서 그렇게 법이 안착이 돼 가고 적응이 돼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법도 마찬가지지요. 예를 들어서 구태여 비유를 하자면 어떤 법이든지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법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이 출렁이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법이 가지고 있는 생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파도를 넘고 만들어지고 고쳐지고 가면서 법이 실제 국민들의 생활에 맞게끔 그렇게 적용이 되어 가는 것이 법에 대한 또 다른 본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방송법 같은 경우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정권교체 때마다 그렇게 충돌과 갈등을 야기해 왔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방송 3법은 단순히 배가 항해를 하면서 출렁이는 그런 부분들을 이겨 내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항로를 바꾸고 또는 배를 바꾸겠다는 그러한 의도

가 많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순리적인 법 개정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을 가진 그런 법 개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 이 정권들을 다 관통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야기했던 방송법, 방문진법, EBS법 이런 법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더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야 의원 모두 다가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좀 적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치라는 것이 이 면에 대고 이야기하면 그 면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다른 쪽은 또 다른 쪽 면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리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방송에 대한 부분들은 입맛에 맞는 잣대에 따라서, 권력에 맞는 잣대에 따라서 적용이 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지금까지 왔던 항로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까지 항해해 왔던 그 배를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배를 만들어 가겠다, 새로운 항로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항로로 가겠다 그러면 그 항로가 도대체 어떤 항로인지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고 승객을 싣고 가야 되는 그 배는 어떤 배인지 그건 분명히 수많은 토의를 거쳐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을 이야기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승객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송 3법이 본격적으로 거론된 지가 제가 초선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입니다만 과연 그런 과정들이 정말 성의를 가지고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만들어 왔던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용히 한번 반추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당신네들은 뭘 했느냐’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성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성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크나큰, 더군다나 거대 여당이 등장이 되고 권력에 대한 독점 현상이 우려가 되고, 급기야는 거기에 대한 독재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과정에서 그것을 견제해야 되고 그것을 감시해야 될 방송·언론에 대한 부분들이 토의와 과정 없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에 대한 역사적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따져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의 권력은 나타나는 그 방송 3법에,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대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반발해야지요. 왜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어느 정도 토론도 많이 거쳐야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국민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 자체가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아주 무시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라고 물으시는데 몇 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대안은 현행법을 유지시키고 그 과정에서 흔들리는 배처럼 간다 그러면, 또 문제가 크게 생기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바꿔서 개선시켜서 나가는 것이 우리 목적이었습니다.

왜냐? 87년 이후에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던 이 방송법이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거나 또는 방송계를 완전히 위기에 빠뜨리거나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본다면 중대하고 결정적인 결점은 없었다는 데서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얼마든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대안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대안을 내놓고 이야기해라라는 것인데 그것은 방송법이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내지 않았다라는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그런 마음들로, 그러한 발로에서 또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필리버스터는 국회 다수결의 폭주를 견제하고 소수의견을 보장하는 고귀한 제도라고 봅니다.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이든 통과시킬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의 수단밖에 되지 않는 이 마지막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우선 앞서 개략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송 3법은 공영방송에 특정 세력을, 이 공영방송을 특정 세력의 어떤 영향에 두려는 그런 위험한 법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본질과 위험성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론적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방송은 표현의 그리고 자유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가장한 다수의 언론 독점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내부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말할 수 없다면, 노조나 추천 단체의 입장에 따라 말과 생각이 제한된다면 그게 바로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검열이라는 것입니다. 표현의 다양성을 억압하는 제도는 결코 언론개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국회 등원하고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야당 같은 여당으로 지내기도 했고 또 계엄과 탄핵의 소용돌이 속에서 결국은 지금 야당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 같습니다마는 저는 17대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보좌진의 아픔 그리고 정치에 대한 복잡한 셈법들 이런 것들은 어깨너머로 배우기도 하고 직접 목도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했었습니다. 반면에 그런 연장선에서 지금의 국회 상황을 목도한다 그러면 그러한 경험한 많은 순간들이, 배웠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이 쓸모없다라는 생각에서 또 다른 회의감이 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에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만 선배 의원들 간의 암묵적인 합의로 지켜져 왔던 아름다운 관례들, 이것들이 법대로 하겠다는 다수의 힘 앞에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계속해서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또 아울러 드립니다.

저는 벌써 두 번째 필리버스터입니다. 1년 새에, 22대 국회가 참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벌써 두 번째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 모두

가 이 방송 3법입니다. 방송 3법인데, 이게 먹고사는 문제와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라는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또 먹고사는 문제가 서민들에 굉장히 발등의 불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철강산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국 관세 문제도 그렇고 과연 이런 법이 필리버스터의 첫 번째 법으로 상정될 만큼 그렇게 민생하고 직결되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인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많이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가지고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그 사실 자체도 우리가 국민들한테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합의와 협치의 정신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송두리째 발로 차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늘 이 무제한토론의 주제가 되는 것인데요. 방송 3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법제와 대상은 다릅니다만 내용과 구조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정안의 내용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어서 소위 방송 3법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사실상 간단합니다. 많은 의원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만 공영방송 이사를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참여기구를 통해서 추천하고 방송사 사장까지도 그 추천을 거쳐 선출하자 이런 구조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 언뜻 들으면 이게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고 갈등을 일으켰던 방송법이 이렇게 되면 민주적이고 공정한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다르지요. 어두운 면이 내포가 돼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급기야는 이것이 합의와 협치의 정신이 실종된 채 이렇게 필리버스터의 현장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 법이 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이야기하고 여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그러면 무제한토론까지는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방송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야기가 돼 왔었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의 여지, 바꿔야 되겠다는 마음들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야기가 된다 그러면 오늘 필리버스터에서 새벽녘까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방송 3법은 기준에, 상식에 부합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이 구조는 국민과 시민단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이념적으로 편향된 조직이나 특정 노조 세력이 공영방송을 좌우하게, 흔들 수 있게 만든 장치가 여기에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파적 논리로 이것을 단순하게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세력이 어떤 공정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국민의 재산인 전파, 국민의 알권리인 공영방송을 좌우하겠다 이런 논리를 갖다 대는지 그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진짜 우리가 공영방송을 개혁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올바른 길을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제시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반문하지 않

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협의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되지 않는 혁신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공영방송 혁신이고 개혁이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보도에 대한 문제점, 편파적이다, 공정성을 잃었다, 독립성을 잃었다라는 그러한 문제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가 그렇고 MBC가 그렇고 정치적 중립성을 잊고 있다 그런 비판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법이 이러한 상태로, 여야가 협치가 되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고 국민에 대한 설득구조가 따라 주지 않는 상태에서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 법은 편향되고 제도화된, 편향된 그런 상태에서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야당이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공영방송은 정권, 어느 특정 권력의 방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후견주의로부터 벗어나서 국민께 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후견주의가 문제라고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후견주의를 양성화하는, 표면화시키는, 더욱더 고착화시키는 그러한 걸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특정 정당이라든가 이념, 노조, 외곽 시민단체의 방송이 되어서도 안 된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전파를 사용하고 있고 그 전파는 어느 누구의 재산도 아닌 국민의 재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노조라든가 특정 세력이라든가 특정 정당이 유리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구조 또는 그들이 독식할 수 있는 구조로 공영방송이 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송 3법은 겉으로는 시민단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시민단체와 학회와 등등을 내세워서 민주적인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다는 모습으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내면에는 특정 세력, 특정 정파가 방송을 이끌어 나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편향된 대로 방송을 맞춰 나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 좀 드시면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물 먹어도 됩니까?

지금까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정말 오랫동안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계속된 이유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권으로부터, 권력으로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라는 그런 비판이 늘 상존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치권, 정치에 대한 후견주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권력으로부터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 이런 비판 이것이 이제 뒤로 숨었다는 것이지요. 정치이념을 가진 외부 세력이 정치세력을 대신해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공영방송에 대한 중립성은 꼭 지켜 나가야 될 시대적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것인데 이것을 민주라는 또 시민단체라는 그러한 포장으로, 소위 말하는 위장적인 그런 면으로 포장을 해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그런 시도가 분명히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송 3법이 뭐냐고 국민들이 사실 많이 묻습니다. 민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쩌면

정치 쟁점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을 민생법도 아닌데, 그러면 도대체 방송 3법이 뭐냐 이렇게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 방송 3법이 뭐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생, 먹고살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필리버스터 1번으로 올리고 여야가 그렇게 대립해서 싸우느냐, 왜 저렇게 아우성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정말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급해서 국회가 등원하자마자 득달같이 개정안을 내고 또 원 구성 협상도 안 된 상황에서 상임위를 열어서 일방적으로 또 날치기로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재의요구권으로 몇 번이나 반려가 된 법안 자체를 다시 속전속결로, 형식과 구색을 갖추고 제대로 된 토론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사실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방송 3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의견을 구했고 이 대통령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수정할 건 수정하고 숙의를 거쳐 차기 원내지도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꽤 걱정을 많이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지요. 이분은 방송 3법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국회 법안 심사 여건이 충분치 않아 좀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원만한 법안 집행을 위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견제와 균형, 숙의와 합의라는 기본적 책무를 망각한 채 정치적 목적에 따라 법안을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배 의원들이 미덕으로 알고 지켜 왔던 합의 정신 그 자체가 송두리째 없어지는 것이지요. 여야가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을 찾아서 갈등을 해결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국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이런 토론을 해야 된다는 것이 무척 안타깝다라는 부분입니다.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언론이 과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립국어원이지요. 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언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말이나 글로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는 일 혹은 매체를 통하여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사회여론을 형성하는 활동' 이렇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언론에 대한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정보 전달, 여론형성, 의제설정—이게 어젠다 세팅(Agenda setting)이지요—환경 감시, 오락 제공을 언론의 5대 기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런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고요. 국민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언론의 뉴스를 보고 사실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에 강아지가 눈밭을 뛰노는 걸 보고 우리는 흔히 저 강아지가 참 좋아서 뛰는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강아지가 눈이 오는 눈밭이 좋아서 뛰는지 싫어서 뛰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강아지가 이야기하기 전에는. 강아지가 발이 시려서 뛰는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좋아서 뛴

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언론의 관점에서 대비해서 이야기한다면 언론은 그 강아지를 취재해야 되는 의무와 책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좋아서 뛴다라고 규정을 짓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아한 듯 보인다라든가 좋아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든가 이런 것들로 언론이 보도에 대한 공정성을 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확증편향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언론이 어느 하나의 객체적인 사실, 어느 하나의 사실을 두고 얼마나 많은 확증편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지적해 볼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론을 만드는 것은 지금도 방송의 기능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의 여론형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 공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이상 국민들은 그 뉴스를 보고 신뢰와 공정을 담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은 사회적인 여론형성,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형성되는 여론에 굉장히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기 때문에 공영방송에 대한 법과 제도의 틀, 그 개혁의 방향은 그만큼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세제개혁을 우선 여론에 대한 형성 이 부분의 본보기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저도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했던 부분이라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여론의 중요성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말씀드렸듯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여론조사가 시행된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지금부터 600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서구 유럽의, 미국의 역사보다도 훨씬 오래전부터 여론조사는 조선시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현명한 선조들이었고 또 민주적 방식을 어느 나라보다도 어느 대륙보다도 먼저 실시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이 제도가 뭐냐 그러면, 조선 초의 전세 제도는 과전법하에 공전과 사전을 막론하고 10분의 1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손실답험법인데요. 손실답험법 이게 뭐냐 하면 매년 토지 작황을 보고 거기에 대한 손실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율을 작황을 보고 차등 적용해서 조세를 수취했다, 조세를 거둬들였다 하는 것이 바로 손실답험법입니다. 몇몇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이 손실답험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로 봅니다.

세종대왕은 손실답험법을, 이게 고려시대 때부터 이어졌던 법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손실답험법이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소작과 지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관리들이 직접 전에 나가서 확인할 때도 좀 담합을 한다든가 부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굉장히 원성도 많이 받았고 관헌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손실답험법은 답험의 주체인 수령과 위관, 경차관이 농간을 부렸다 그러지요. 손실 비율을 왜곡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이 여기에 대한 폐단을 개선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거해서 전세 수취율을 조정하고자 공법이라는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이 개혁의 역사를 보면 개혁안은 모두에게 환영을 받았던 것은 아니라고 알려지

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반대론자들이 그 유명한 황희 정승이었고요 맹사성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그 당시에 아주 상당히 조정에 대한 정책에 대해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세종실록에는 이분들은 '손실답험법은 실로 고금을 참작한 만대라도 시행할 만한 좋은 법이라서 경솔히 고칠 수 없다'라고 개선되는 공법에 대해서 황희와 맹사성은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고 세종에게 저항을 했던 걸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종은 개혁 반대자를 극복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던 것이지요.

이 방법 자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했냐 그러면 첫 번째로 기득권층들입니다, 고위 관료들. 고위 관료들의 반대를 여론조사라는 방법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고 극복해 나갔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1430년 3월에 세종은 전국 17만 2806명의 백성을 대상으로 해서 공법 찬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중에서 9만 8657명이 세종이 이야기하는 공법에 찬성하는 걸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보다 적은 7만 4149명이 반대한 걸로 기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세종 지리지에도 이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당시 조선의 인구가 69만 2477명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여론조사에는 인구의 4분의 1이 참여한 대규모 여론조사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어린아이를 빼고 전 백성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최초의 국민투표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만큼 우리 선조들이 민주적인 여론 수렴 방식에 있어서는 어느 서구보다도 몇백 년이나 더 앞섰던 걸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당시 도덕의 기반이었던 유교 정치에서 강조되는 민심이었습니다. 즉 백성 다수가 찬성한다는 사실이 기득권 세력의 반대 논리를 넘어서게 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척박한 이북 지역의 반대에 대해서 공법 제도의 수정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이 척박한 지역주민들에게 과도한 세금이 매겨지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해서 여러 해의 중간을 비교하여 일정한 세액을 매기려 했던 생각이 지역의 작황과 여건을 감안한 세제로 개선이 됐고 개혁이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뭄, 홍수 등의 열악한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시간별·지역별 안배를 통해서 이를 극복하게 됐다. 즉 이것이 세제개혁안인데요. 세제개혁안의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작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동시에 또 기근이 적은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실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세종대왕이 조선의 성군으로 지금까지 추앙받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현명했다라는 것을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도 능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혜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런 마찰을, 그 당시 백성들의 마찰을 최소화시키고 또 기득권층들을 어떻게 어떻게 무마시켜 나가는 방법까지도 당시 그 600년 전에 세종이 이 방법을 고안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종은요 이런 불안 심리들, 개혁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조세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17년 동안 지속적인 토론과 숙의를 했다고 합니다. 17년 동안 계속해서 이 부분을, 백성들의 저항 그리고 이 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고 또 여기

에 대해서 일방적이고 편협된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했다는 것이지요. 단시일 내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론형성에 있어서는 그 당시 600년 전에도 신중했고 조심스러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료들의 의견 외에도 이해당사자였던 일반 백성들에게도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었고 그 표명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개혁안에 충실하게 반영을 했다라고 실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지요. 결정에 대한 정당성, 아무리 좋은 정책과 아무리 법과 제도가 좋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성이 없으면 그 법과 제도는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추진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동력에 대한 정당성이라는 것은 합의와 협치고 여론에 대한 수렴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손실답험법에 대한 부분들은 세종은 17년 동안, 그 600년 전에도 백성들의 이해충돌을, 또 백성들의 손해, 백성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2025년에 방송 3법은 단 한 번의 숙의 기간과 합의 기간과 또 여기에 대한 협치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데서 정말 부끄러워 해야 될 그러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600년 전에 백성에 대한 여론이 그 군주적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구태여 수렴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은 조선의 600년의 역사를 관통시킬 수 있는 그런 성군으로서의 자질을 여지없이 보였다, 백성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안착시킬 수 있는 방향성과 당위성을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국회, 이 본 원당에서 그런 세종의 여론에 대한 부분, 백성에 대한 부분, 정책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귀담아 반추해서 들어 보고 반성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세종은 성군으로서 거듭날 수 있었고 정말 서구의 어느 나라보다도 몇백 년 앞선, 여론에 있어서는 가장 민주적이었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금의 대한민국까지 이르렀다, 이런 것들을 의원들께서도 한 번쯤은 되새겨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언론의 의제설정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젠다 세팅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이 어젠다 세팅이 언론이 가질 수 있는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편협되고 사실과 왜곡되는 다른 상업주의적이라든가 또는 정치적인 방향 그 목적으로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언론이 가질 수 있는 어젠다 세팅, 즉 의제설정 기능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특정 이슈를 보여 주고, 틀 짓기 효과라고 봅니다. 이것은 정치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악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이슈를 바라보는 관점을 정해 줄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콩쥐팥쥐’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도 이 어젠다 세팅의 굉장히 중요하게 대표적인 본보기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설화이기는 합니다만 전주성 서문 밖에 최만춘이라는 댁에 계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오게 되지요. 그 계모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고, 들어가서 최만춘과 같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최만춘의 딸이 바로 콩쥐이지요. 콩쥐인데, 백일도 채 되기 전

에 친모가 사망을 했고 그래서 최만춘은 딸의 손을, 딸을 업고 젖동냥을 하면서 키웠던 그런 설화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조 씨라고 하는데 그 조 씨가 세상을 떠나고 최만춘은 팥쥐라는 딸을 가진 배 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배 씨가 계모로 그 집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배 씨는 친자식인 팥쥐만을 총애하면서 사람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아주 가혹하다 할 정도로 콩쥐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걸로 설화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착한 콩쥐는 계모의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여러 동물들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난관을 헤쳐 나가고 선녀가 준 꽃신, 이 꽃신의 인연으로 고을의 원님과 혼인하는 그런 얘기로 해피엔딩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걸로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얘기지요. 이게 사실상 알려진 통상적인 '콩쥐팥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콩쥐팥쥐'는 알려진 설화보다도 더 아름답지 못한 그런 묘사들이 많이 들어 있는 설화이기도 합니다. 실제 원작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대창서원판 콩쥐팥쥐전'인데요. 여기 결말 부분에 보면 팥쥐는 원님과 혼인한 콩쥐를 연못에 빠뜨려서 익사를 시키고 자신이 콩쥐 행세를 하면서 원님을 속인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콩쥐가 또 부활했다 그러지요. 부활한 콩쥐에 의해서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원님이 팥쥐를 거열형에 처한다. 아주 제일 강한 그런 사형 제도, 사형 형태가 되지요. 거열형에 처한 뒤, 이야기하기가 참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그 시체를 젓갈로 담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것을 또 계모 배 씨에게 보내고 배 씨는 그 젓갈로 담긴 딸의 시체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아서 심장마비로 즉사한다라고 '콩쥐팥쥐' 얘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콩쥐팥쥐전'의 결말은 오늘날 받아들이기에는 잔혹한 부분이 농후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 동화책에서는 팥쥐와 계모 배 씨가 죄를 뉘우치고 콩쥐와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식으로 순화돼서 출판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럽니다. 또 여기에 미디어를 통해서 접한 사람들은 잔인한 원작과는 정반대로 행복한 결말의 콩쥐팥쥐전만 기억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언론으로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일종의 당시 의제설정 기능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작자의 의도 또는 당시 정부의 의도 등등으로 귀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뽀빠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도 그게 많이 나옵니다.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기에 만들어진 것이 뽀빠이인데요. 1868년도에 '주먹대장 뽀빠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최초의, MBC에서 최초로 방영이 된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줄거리는 뭐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로 메인 히로인 캐릭터지요. 히로인 캐릭터가 올리브, 그러니까 이 올리브가 블루토라는 이 빌런 역할에게 납치당하거나 희롱당하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온갖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주인공인 뽀빠이가 나타나서 시금치 통조림을 먹고 구해 주는 것이 주요 패턴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 뽀빠이는 항상 악의 무리와 싸워 이기는 정의의 사도로 나와 있고 올리브는 아주 아름답고 착한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젠다 세팅으로, 의제설정 기능으로 관점을 조금만 달리해서 본다고 그러면 또 다른 얘기지요. 뽀빠이는 과연 약자만을 구하기 위한 정의의 사도인가 아니면 자기의 힘만 과시하는 폭력적 성향을

가진 마초적 본성을 가진 사람인가 이런 것들로 이야기할 수 있고.

올리브 역시도 착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만 비춰 주지만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상당히 페미니즘적 측면에서는 반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여성으로, 여성운동상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여성상이 아닌 그런 캐릭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의제설정 기능의 가장 대표적인 동화 애니메이션으로 또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흥부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흥부는 아시다시피 아주 심술궂은 형에게 부모님 재산 한 푼도 못 받고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되지요. 그러나 가난하게 살면서도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형수에게 밥주걱으로 따귀를 맞는 수모를 버티면서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의제설정 기능, 어젠다를 달리 본다고 그러면 과연 흥부는 찢어지게 가난한 와중에서도, 호구지책도 없는 상태에서 자식들을 20명이나 줄줄이 낳을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열심히 일할 생각은 없고 형님께 구걸이나 하러 다니는 그런 대책 없는 가장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었을까 이런 것들입니다.

또 놀부는 다른 관점에서도 본다고 그러면 처자식이 줄줄이 달린 불쌍한 동생을 돈 한 푼 없이 내쫓고 못살게 군 비정한, 아주 질이 나쁜 그런 형으로만 봐야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아니면 역설적으로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고 그 삶을 부유하게 유지해 온 사람인데 어떤 일로 해서 한꺼번에 재산을 잃어버린 그런 불쌍한 사람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역설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언론에 대한 어젠다 세팅은 그만큼 관점을 달리하는 바에 따라서 상황 자체가 정반대로 이해되기도 하고 한 인물이 역설적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그런 점을 단점으로 '뽀빠이전'이나 '흥부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모라는 부분들도, '콩쥐팥쥐'에 나오는 계모라는 부분들도 오늘날의 사회적 현실에서 이야기하면 계모는 무조건 나쁘다라는 그런 등식으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모가 정말 나쁜 것이냐, 콩쥐팥쥐전이 아니었다 그러면 계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아가는 훌륭한 여성으로도 묘사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어린 팥쥐의 손을 잡고 남의 마을, 남의 집을 찾아가는, 시집을 가는 그 동네 어귀에 섰을 때 불안한 계모 배 씨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느냐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굉장히 불안했고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다.

그런 계모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는 쳐다보지 않고 무조건 동화에서 비롯된 그것만 우리가 인식이 돼서 오늘날 계모는 무조건 나쁘다는 등식이 그렇게 확증편향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언론에 빗대어 이야기하자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선 언론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한두 가지 엮어서 여론에 대한 중요성, 세종대왕의 손실답험법에 대한 여론의 형성…… 여론조사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선조들부터 시작이 됐다는 점 그리고 언론이 사회를 정반대로 만들 수 있고 사람을 역설적으로 착한 사람을 거꾸로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그런 무서운 기능을 가진 어젠다 세팅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언론의 본질 두 가지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민주당의 방송장악법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방송관계법 개정안 논의에 대한 경과를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는 방송법을 비롯한 방송관계법 개정 논란은 그 역사가 참으로 오래됐다고 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정권이 바뀌고 국회의 구성이 바뀔 때마다 방송관계법 개정안들이 발의됐고 임기만료 폐기가 반복되었습니다. 20대 국회도 그랬고 21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는요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절차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관계법 개정안이 총 24건 발의됐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까지 구성됐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회의를 거치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결국 결론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2022년 12월경 단독으로 과방위 전체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관련 17개 법안을 통합 조정한 방송 3법, 즉 방송법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그 당시에도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물론 이때도 국회의 합의 정신과 협치 정신은 실종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듬해입니다. 1월경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또다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였고 과방위에서 본회의 부의, 직회부를 해서 의결했었습니다.

2023년 11월에는 민주당의 뜻대로 방송 3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여야 합의가 없는 법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또 그것이 일종의 인지상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인해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다시 더 강력한 방송법을, 지배구조 개선부터 편성위원회까지 다 바꾸는 그런 아주 강력한 초강력의 방송 3법을 지금 들고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살펴보자면 우선적으로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방송 3법은 주장과는 달리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안입니다. 민주당의 언론노조, 친민주당 성향의 학회와 단체들의 이야기만으로 구성된 법률안입니다.

민주당에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방송 3법은 과방위에서 계속해서 논의된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나 수석전문위원과 해당 기관과의 사전 조율이 없이 강행 처리된 법률입니다. 민주당은 방송 3법 처리 과정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해서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회의 일정조차 협의 없이 일방 통보하는 파행을 계속해서 일삼았습니다.

당시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통보도 협의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국회운영의 기본을 무너뜨리면서 오늘 본회의에까지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방송 3법에 대해서 YTN, 연합뉴스 등 보도전문채널에도 시청자위원회 구성을 편성위원회 합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에 사실 이게 충분한 논의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영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논의를 해야 되고 합의를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수기를 통해서 이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점

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위헌적인 얘기, 위헌 소송까지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 27일입니다. 지난 6월 27일 열린 과방위 제2소위인데 그 당시에도 불과 하루 전에 기습적으로 회의 개최를 사실 통보를 했었습니다. 심지어 당일 오전 과방위 행정실조차도 존재를 몰랐던 정체불명의 문건이었지요. 이게 민주당 통합 대안이라는 부분으로 방송 3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논의하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도 모르고 또 야당인 우리 쪽 입장에서도 방송법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 대안이 만들어졌는지 사전에 전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회의장에 그 안을 들고 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시 수석전문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자칫하면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려를 심각하게 제기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경고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의 법안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두 번째로 열렸는데 마찬가지로 또 하루 전에 통보했습니다. 당일 오후가 돼서 방송 3법 검토보고서가 비로소 배포가 됐습니다. 몇 시간 뒤에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과방위에서 통과시키는 그런 촌극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이것을 합의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지, 협치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지, 이것은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법안을 모르는 상태에서 회의장에 앉아서 이것을 통과시킨다 그러면 야당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우리가 입장을 바꿔 놓고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방송 3법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권한의 다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추가 도입과 의무화입니다.

세 번째는 보도전문채널사업자에 대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시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의무화하는 안입니다.

네 번째는 편성위원회 구성의 의무화와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시청자위원회 구성을 편성위원회의 합의를 거치도록 의무화시켰습니다.

이게 노동조합 또는 기자회입니다. 또 PD협회 이런 단체들이 사 측과 동등한 위치에서 편성권을 행사하고 이사회에 대한 강력한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방송 3법을 이야기하면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과연 이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우리를 납득시키려 그러면 최소한 이 사람들의 성격과 방향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해야 되고 토론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그런 말 뒤에 민노총 언론노조라든가 이미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특정 세력과 결탁을 해서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 이런 술수가 있지 않은가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경영권을 특정 세력에게 넘겨서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고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악법입니다.

더 나아가서 종편과 보도채널 이런 민간방송사, 상법상 주식회사인 이 민간방송사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법으로 강제했습니다.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보도, 편성, 제작, 경영 전반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공영과 민영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방송미디어산업 전체를 입맛대로 재단하고 통제한다, 그리고 언론을 흔들려는 그런 시도가 다분히 내포된 것이 바로 이 방송 3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현행 이사추천제도에 문제가 없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 왔습니다. 흡족지는 않아도 국회가 대의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그래도 최소한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법으로 보장돼 있는 그런 국회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다른 어떤 학회라든가 PD협회라든가 노조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이사 추천권 또 편성위원회 주도권까지 가져간다는 것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미명하에 또 다른 세력에게 넘겨준다는 그런 의도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들의 이야기는 그 대표성에 대한 확실하고 명쾌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마련하라 이런 것이 오늘날 지금 이 시간까지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87년도 방송법 개정 이후 정당의 직접적인 공영방송 임원 인사개입 원칙이 이렇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 것인데 자꾸 대안을 만들어 오라는 그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87년도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인사개입 금지 이것이 이루어져 왔고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하려면 이 원칙 자체가 바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 3법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고 많은 진통이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힘이라든가 다른 학회라든가 등등에서도 이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도 그랬고 그래서 사실상 이게 누더기 방송법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민주당 통합안과 같이 KBS 이사회 이사 전체 수가 15명이고 국회 추천 몫이 6명으로 늘어난다면 5분의 3 특별다수제하에서도 9명의 친민주당이나 친민노총 이사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다수제 시행과 전혀 관계없이, 상관없이도 KBS의 즉각적인 사장 교체가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MBC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는 대신 민주당 추천 3명, 임직원 추천 2명, 현 민노총 출신 사장이 임명한 시청자위원회 추천 2명, 학회 추천 2명, 민변 추천 1명까지 모두 10명 이상의 친민주당 또는 친민노총 이사를 추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도 결국 특별다수제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다수제를 넘어서는 이사 투표 비율이 5분의 3이라고 할 때 13인 가운데 8명만 찬성해도 마음대로

사장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국회 5인을 국민의힘 3, 민주당 2 이 비율로 나눠 가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수 성향 이사는 3명에서 4명 정도 그 선에서 그칠 수밖에 없고 총선에서 이겨도 보수 정당은 MBC 대주주 이사회를 장악하질 못하고 특별다수제를 활용해서 진보 사장의 선임을 막는 일조차 완전히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체제가 계속해서 영구장악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흘러가게끔 이 방송 3법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민주당이 야당이든 소수정당이든 MBC는 지금 형태의 친민주당 방송에서 영구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행 공영방송 이사 추천은 여야의 추천을 받되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들의 협의를 거친 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합의를 통한 결정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의 견해에 따라서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에 들고에 대한 그런 게 있습니다만 이런 합의는 몇 차례에 걸친 정권의 교체를 통해서 이미 여기에 대해서 안착이 돼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또 최소한의 그런 합리적 기구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 좀 마시고 할게요.

이에 따라서 추천 비율을 KBS의 경우에 7 대 4, MBC의 경우 6 대 3으로 유지하면서 정당의 직접적인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배제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장치입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민주당에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자, 그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법과 제도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번 방송법은 교섭단체인 정당이 KBS의 경우 6명, MBC와 EBS의 경우 5명을 추천하고 현재 의석 비율에 따르면 여당인 민주당이 KBS에 4명, MBC와 EBS에 3명의 이사를 추천해서 파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당 추천 인사가 이사장을 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추천 단체의 배정 이사 수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치적 입김과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KBS와 MBC에 전달될 공식적인 통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방송법 제4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개입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위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하는 단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주창해 온 정치적 이익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친민주당 세력으로 이미 보편적인 상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 MBC본부와 민노총 언론노조 EBS 지분은 교섭대표노조로 직원 수의 과반을 노조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추천권 2명분을 직원의 대표인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이 행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법입니다. 특히 강성 민주당 성향인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소중한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KBS 3명, MBC 2명 부여하는 그 자체가 정당성을 입증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단체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두 개의 변호사단체가 각 1명씩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민변이지요—민변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 단체로 들어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또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지요. 결국 보수적 성격

을 갖는 변호사단체, 예를 들어서 서부자유변호사협회나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나 이런 단체들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정치적 좌우 비례 균형에,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민변만 들어가도록 법제화하는 것 이게 타당한 것이냐, 어떤 자격으로, 어떤 명분으로 민변은 무조건 들어가게 하느냐, 이것도 사실상 국민에게 설득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 3법에서는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법제화시켜 버리는 것은 공영방송 이사진이 정치적 편향성을 띠도록 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민노총도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민변 역시 그러한 어떤 움직임이 강하고, 대부분이 친민주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정치적인 재단과 정치적인 판단을 가지고 공영방송의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학회도 그렇습니다—학회를 좀 살펴보면요.

규칙에 의하면 3개의 학회입니다. 3개의 학회는 친민주당 성향인 방송학회, 언론학회, 언론정보학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들 3개 학회가 합의해서 이사를 추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청자위원은 기존에 KBS와 MBC 사장이 시청자위원들을 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편향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학회 언론학회 언론정보학회, 저도 언론을 전공한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이 학회들은 친민주당 성향으로 사실상 고착화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천하는 사람들은, 이사 추천은 결국 친민주당 성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순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자위원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BS·MBC 사장이 이 위원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편향될 가능성이 높고요. 친민주당 또는 친민노총의 진보 성향 인사를 공영방송 이사로 추천할 가능성도 높다. 시청자위원회가 시청자 입장에서 제대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럴 가능성은 잘 보이지 않는다,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번 방송 3법 개정안에는 편성위원회,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 신설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송사업자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와 심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편성위원회를 통해서 방송편성책임자의 선임과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을 하도록,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데, 이 법이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게 되다 보니까 이게 악법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설명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이뿐만 아니지요. 지금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의에 있어서 이것을 반영하고 벌칙 규정이라든가 과태료 규정의 의무 이행까지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안을 통해서 관련 의무가 신설·강화되는 대상을 보면요 텔레비전 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30개, 종합편성PP사 4개, 보도전문방송사업자 3개, 거의 다 망라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 사업자들은 노사 동수 각 5인씩입니다. 5인씩으로 구성된 10인의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되고요. 여기에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편성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방송편성규약을 제·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

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요. 결국 일반 기업으로 따지자 그러면 경영위원회입니다. 경영 결정을 하는 그런 겁니다. 기업을 방송국에 빗대서 이야기하자 그러면 생산을 하는 것은 방송에서는 결국 프로그램 편성 이 부분이 생산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기업의 물건과도 같은 것이지요. 어떤 물건을 생산하고 어떻게 팔고 이런 것들은 기업에서는 경영위원회가 있다면 거기서 다 결정을 짓는데 이 편성위원회는 방송의 경영평가위원회, 경영결정위원회 뭐 이런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방송의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이라든가 방송사업자의 인사권·경영권이 당연히 침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작용이 대단히 크게 발생이 되고요. 추가로 사업자의 권한 침해나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상 주식회사인 보도전문PP에 대한 엄격한 규제 시 상법상 주식회사의 민영이 여기서 엄격하게 규정이 돼 버리면 법률의 형평성 저해가 우려가 되고 기업경영 자유 침해 등의—이게 과잉 입법이라고 그러지요—과잉 입법 소지 또는 이사회 권한 및 주주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법률적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영을 완전히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가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조차도 위헌의 소지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도전문채널 같은 경우에 사 측 5명, 취재·보도·제작·편성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명, 이것으로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편성위원회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상 이렇게 되면 노조하고 기자회, PD협회가 추천하는 5명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조항의 신설 및 강제화는 민노총 언론노조의 약진 그리고 사내 세력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양측이 다 합의를 잘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런 협치의 정신이 있고 목적과 이익이 없다 그러면 좋겠지요. 겉으로 보면 그냥 민주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뭔가 경영권, 즉 다시 말하면 편성권, 방송보도에 대한 제약까지 관리까지 통제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편성위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방송 내용에 개입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방송법 제4조제2항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방송편성에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게 방송법 제4조제2항입니다. 이게 방송의 독립을 규정짓는 명확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 자체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지적이 됩니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기존의 종편, 지상파, 보도전문채널, 홈쇼핑 채널에만 의무화하고 있던 시청자위원회 이 부분을 또 의무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런 의무화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 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에까지 확대해서 규제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미디어산업 전체를 그냥 장악하는 것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요. 미디어의 ‘미’ 자만 들어가도 결국 특정 세력에 의해서 편성위원회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경영권·인사권·방송의 자율성까지도 다 침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것이 잘되리라는 그런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자위원회는 방송편성뿐만 아니라 채널의 구성과 운영에까지 의견을 제시하고 또 시정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 관여를 아예 법률적으로 뒷받침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막강하지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지금 사실 민노총 출신 위원들이 임명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 아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상파와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편성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시청자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청자위원을 선정하려면 편성위원회에 영향을 끼치는 민노총 언론노조와 먼저 합의해야 되는, 어떤 말로 좀 황당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의 주인이 민노총 언론노조가 되는 겁니다. 거기와 합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상 민노총과 언론노조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방송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위원회의 방송사 이사 추천권을 민노총, 언론노조가 행사하게 돼서 결국 방송사를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되면 한마디로 채널의 구성과 운영에까지 직접적 간섭, 간접적 간섭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이게 공영방송이 아니고 바로 노영방송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민노총이 연대하고 있는 유관단체들의 인사들만 대거 시청자위원으로 선발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더 나아가서 현행 사장단까지 교체하려는 것을 부칙으로 여기에 숨겨 두고 있습니다.

부칙 제2조가 있습니다. 부칙 제2조에는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새로운 방송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로 구성해야 된다'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사장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걸 법으로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장과 이사, 한국방송공사 사장과 부사장, 감사는 개정 규정에 따라서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여 3개월 이내에 KBS 사장을, 아예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부칙 3조입니다. 부칙 3조에서는 보도전문편성채널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적고 있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책임자 선정이 새로운 방송법에 의거해서 시행돼서 새로운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만 기존 사장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장은 후임자 선정 시에는 바로 해임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YTN과 연합뉴스TV 사장을 방송 3법 통과와 함께 해임시키기 위한 이런 것들을 방송법에,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책임자 과반수동의제를 명문화시킨 것입니다.

또 방송사 사장 선출 시—이게 사추위입니다—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 만료 90일 전입니다. 그래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 지역, 나이를 고려해서 일반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해서 구성하고 100명 이상의 재석으로 개의해서 3인 이하의 복수 후보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문화시켜 놨는데, 100명 이상 재석으로 개의하고 3인 이상의 복수 후보를 추천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추위가 사장을 추천하면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특별다수제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도전문채널사업자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섭대표노조가 대부분 민노총, 언론노조인 상태에서 사장 선임 과정에 노골적으로 노조가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노사분리의 원칙

을 깨는, 노영방송화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과도한 영업 자유의 침해로 경영권 본질을 해치는 위헌 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법률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에 대해서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이 결정됩니다. 14일 이내에 의결되지 않는 경우 최고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은 너무 과도하게 정치색을 띤 후보를 걸러 내는 그런 효과는 다소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기업도 아닌 사기업, 민영방송 또 주식회사인 MBC 또 보도전문채널에까지 이것을 의무화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민영까지 경영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국가가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또한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방송 3법 개정안은 KBS와 YTN, 연합뉴스TV 사장을 해임시키고 민노총, 언론노조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앉히고 싶다는 의도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법안입니다. 악법이라는 겁니다.

또한 87년 방송법 개정 이후 정당의 직접적인 공영방송 임원 인사개입 원칙의 그 룰이 이번에 KBS 6명, MBC 5명의 이사 정당직접추천제 도입으로 무너져 내릴 위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아예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정치적 후견주의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것을 정치적 후견주의로 법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는 것은 크나큰 이율배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방송 3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공영방송 임원 선정 주체로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이 민주당이 되는 것입니다. 정당 추천 이사가 이사장이 될 가능성도 매우 커집니다. 결국 정치권의 방송 개입이 다양한 방법으로 노골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들어갑니다.

이게 강제 조항도 굉장히 많은데요, 처벌 조항이지요.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합니다. 시청자위원의 추천을 편성위원회가 하고 시청자위원이 채널 구성이나 운영에까지 간섭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방송편성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방송의 독립성을 이해한다면서 방송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대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율배반의 극치라고 봅니다. 이게 민노총과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노골화시킬 수밖에 없는, 노골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될 수밖에 없고요.

이 밖에도 보도책임자의 직원 과반 동의제를 편성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편성규약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를 물도록 또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그렇다 하더라도 민영방송에까지 정부가 이렇게 과도하게 규제와 법적인 제재를 한다는 게 과연 옳은가. 편성이라는 것은 기업으로 따지면 경영과도 같은 것인데 경영을 국가가 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방송법 제17조 재허가 조항을 개정해서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 설치·운영, 심의와 의결에 대한 준수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해서 방송사 재허가에 반영하도

록 명문화한 조항, 이것도 종합해서 보면요 편성규약 및 편성위원회 의무화, 형사처벌, 재허가 반영 등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강제적 개입입니다. 이런 강제적 개입을 통해서 방송사업자가 자유롭게 사업을 운영할 권리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받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위헌 소지 역시 높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번 방송 3법 개정안은 특정 세력과 특정 정당이 공영방송 임원 임명권을 영구히 장악하고 보유하겠다는 의도가 심각하게 내포돼 있다고 봅니다. 국민이 원하는 방송과 비판, 그런 시각들이 공영방송 채널에서 자칫하면 영구히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현실 그 자체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참 어렵다라는.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이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가 돼 있는지 이런 걸 읽어 보고 이야기를 해 보면 정말 여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걸 국민에게 설득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결국 특정 세력과 특정 정당이 방송,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가는 것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한다는 것이 국민들을 공분시키는 결론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참담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것은 이렇다라고, A는 B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온갖 전문용어가 다 들어가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지금 방송 3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악법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정면으로 법과 제도로 침해하는 것이고 공영방송이나 민영방송의 경영권과 편성권까지 침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다 같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입니다. 방송을 공유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지지를 받고 국회의원이 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도 당연히 국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 모두의 방송을 위해서 대화하고 타협해서 정말 국민의 방송으로 만들어 나갈 자격이 있고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입법 과정에서 제대로 된 논의 과정을 성실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의결함으로써 이게 설계가 치밀하게 됐을지 몰라도 반쪽짜리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눈에 뻔히 보이는 법안입니다.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와 논의가 결여된 법안, 또한 법안에 대한 문제점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이 분열과 갈등으로 갈라져 있고 지역으로 갈라져 있고 사분오열 되다시피 국론이 통합되지 않은 그런 현실에서 이걸 더 노골화시키고 이념과 진영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을 가져가는 법입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방송이고 언론이고 여론입니다. 이걸 편파적으로 한쪽과 특정 세력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정치를 하는 그 본질의 목적 자체가 정말 위선이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결국 갈등과 진영 간 대립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이 아무리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고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무리 좋은 정책과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이 있다고 한들 여기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전제되지 않고 또 여기에 대한 동의가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정책과 법과 제도와 틀이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불을 보듯 뻔하다. 한쪽에서는 이 법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이 법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열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등입니다.

결국 한쪽 편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정치구조화가 되는 것이고 국민의 알권리는 한쪽 귀만 열고 한쪽 말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기형적인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법을 우리는 지금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책임이 뒤따라 줘야 될 것이고 법 시행 후에 따라서 올 수 있는 국민적 분열과 국민적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대화와 타협이 정치의 본질입니다. 22대 국회 교섭의 당사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입니다. 이렇게 대화와 타협으로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1년 내내 이어져 왔습니다. 정치가 실종됐다라고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다수결의 원칙을 몰라서 오랫동안 대화하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고수할 것은 고수하면서 타협을 해 왔을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관례로 굳어져 온 것들을 조금 늦게 가고 좀 힘들게 가더라도 다 함께 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과 서로의 입장을 하나씩은 내려놓아야 되지 않나,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그동안 지켜 온 관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현재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을 다수당이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은 관례다,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적어도 법제사법위원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2당인 국민의힘에 좀 넘겨주는 것들도 지켜 온 관례로서 해 줘야 될 만한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져 봤습니다.

삼권분립을 지켜 오는 것은 국가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회 원 구성도 마찬가지지요. 국회 내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서로 주고받아 왔던 것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선배 의원들이 지켜 온 그런 관례를 이번 22대에서 과연 지켜 왔는지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방송 3법의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의적인 방통위의 기능 마비 그리고 방송 관련법 개정에 대한 명분 만들기를 우선적으로 좀 지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조는 친민주당 성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친민주당 성향의 노조가 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매우 높게 만든 그런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방송 3법을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방송사의 지배구조는 방송정책 총괄기구인 방통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앞장서서 이 방통위의 무력화에 지극한 노력의 주체가 된 걸로 저는 봅니다.

아시다시피 방통위의 구성은 대통령이 2명, 국회가 3명의 각 상임위원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국회 몫의 3인을 추천하지 않으면서도 2인 체제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왔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성공된 것이지요. 현재는 여당이 되었음에도 방통위의 정상적인 구성에 사실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직접적이고 또 아예 그 방송의 체질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방송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최소한의 합의 기구로 지금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거치면서 지금까지 최소한의 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합의제 기구로 만들어 왔고 그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방송통신위원회였습니다. 그 합의제 기구에서 대통령 몫과 국회 몫이 나뉘어져 왔고 거기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합의가 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방통위에 행정부처에 대한 고유의 성격과 기능이 바로 있지요. 방통위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성격과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 붙었습니다마는 방통위의 그 업무와 기능에 대한 성격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일부 법원의 판단이 있어서 상당히 혼란을 가중시킨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우선 방통위의 기본구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련해서 두 가지로 접근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방통위의 소관 사무, 방통위법 제11조입니다. 방통위의 소관 업무나 방통위의 심의 의결 사항—방통위법 제12조인데요—이것을 보면 당연히 행정 작용을 이행하는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대통령을 수장으로 하는 정부부처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제1호도 부·처·청과 같은 중앙행정기관 중의 하나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앙행정기관인데 이걸 위원회 형태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에게 정무직 공무원의 일부 구성을 맡기고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제의 정부 구성 원리에서 이러한 형태를 취한 데는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고 방통위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해서 국민의 전파가 공정하게 사용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국민의 권익을 최소한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이 들어 있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의 목소리도 방송정책 등의 결정에 있어서 소홀하게 다루지 마라라는 의도가 여기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2명의 임명권을 주었고 이것은 대통령제의 기본 성격이 그대로 여기에 정신이 녹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부처로서의 성격만 강조한다면 독임제 부처로 두거나 혹여 위원제 부처로 둔다고 하더라도 정부에 임명권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혹여 야당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면 그 형태를 위원회로 하되 일부 위원의 추천을 야당이 하게 하고 야당 추천 위원의 수가 정부 여당의 수를 넘기지 않도록 해서 모든 위원의 임기를 정부와 함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행 방통위법은 그 목적 조항에서 국민의 전파가 정부의 목소리만 대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데 그 중점을 둔 것처럼 보입니다.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에 있어서 좀 더 친화적인 형식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형식의 방통위 설립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들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에서 방통위가 정부와 운명을 같이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의 추천을 통하여 여야의 목소리가 함께 반영되도록 하되 무엇보다 임기의 보장이 절

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개별 위원이 선임되는 순간부터 임기는 새로이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방통위법은 위원에게 결원이 생겼을 때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에 한정하도록, 이게 방통위법 제7조입니다. 7조 2항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잔여 임기에 한정하지 않으면 결원이 돼서 후임으로 온 사람이 새롭게 3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임기의 종료 시점이 서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3명 이상의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대개 사법적, 준사법적 판단과 같이 사후적인 평가·심사·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관의 독립성이 강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 등과 관련된 경우는 정부정책의 일관성, 다른 부처와의 연계성, 통일성 등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되고 독립성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방송정책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발생하는 많은 갈등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 없이 정부의 부처로 취급하면서 동시에 독립적 운영도 구현하겠다는 상충하는 두 기관 구성 원리가 함께 작동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예 정권의 진퇴와 상관없이 위원회의 구성은 임기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고 또 그 어느 정부든 임기 보장에 최선을 다하는 게 방통위법의 목적에 또 그 정신에 충실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즉 임기를 지켜 주면서 그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 국회 추천 몫을 묶어 두고 방통위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 노력했던 그런 사실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민주당 방통위 상임위원후보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절차가 늦어졌다는 것이 사유였습니다만 그 내용을 선뜻 수긍하기가 어렵고 또 혹여 그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심리적이나 정치적 시효가 충분히 지났기 때문에 그 노력을 해도 될 만한 시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임기를 두며 국회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기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방통위라는 기관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십분 활용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방통위를 자신들이 원하는 정부기구로 만들고 방송사들의 지배구조를 장악하는 그런 노력들에 지나치게 골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선임되는 모든 상임위원에게 3년의 임기를 주고 그 임기를 충분히 보장하더라도 방통위의 독립성은 보장이 되고 기관의 마비도 현저히 줄어든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합의의 흔적입니다. 이게 합의의 흔적도 없고 장악에 대한 부분만 도드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방송 3법의 부칙에서 종전 법률에 따라 임명된 방송사의 임원진을 신속히 교체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것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부칙 제1조입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같은 제2조에서는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라 구성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감사는 개정법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되면

바로 그 직에서 물러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완전한 장악을 위한 방송사 경영진의 교체를 시도하고 또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부칙 조항에 현 경영진의 임기 단축 조항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이라든가 또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에서도 같은 내용의 부칙이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추가로 추진 중인 방통위법의 개정을 시도하면서도 만약에 방통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조항을 여전히 두고 기관의 장악을 시도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것 관련해서 최근에 방송 3법이라 할 수 있는, 미디어위원회인가요 이것 설치하는 법안도 지금 발의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방통위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의 경영진이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모두에 대해서도 같은 시도를 할 여지가 보입니다. 결국 새로운 정부가 형성이 됐고 그 정부에 맞는 그런 인사를 배치하려고 그러면 어떠한 경우든지 지금 전 정부에서 임명된 그런 기관장들이라든가 임원들 이런 분들이 사표를 내든가 배제가 좀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랬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랬습니다만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젠틀맨스 어그리먼트(Gentleman's Agreement)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될 그런 원칙과 룰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자리를 계속해서 보전하고 있는 바람에 들어서는 정부의 철학과 기조에 맞지 않는 운영이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이런 법적인 부분들로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법률을 개정하면서 각 방송사 임원들의 임기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소급입법을 통해서 단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원들 개인적으로는 직업의 자유가 아무런 이유 없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방송사 임원들의 진퇴를 임의대로 결정하게 되면서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방송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방송사의 임원들이 이렇게 재단이 되어 버리고 퇴출이 법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편성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 전파를 정권의 전파로 사용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우가 범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 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노조가 합의하지 않으면 사장 임명이 불가능하게 되는 입장입니다.

이번 방송 관련법 개정안은 한쪽의 의견만을 담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 같습니다. 복잡한 내용을 본문 안에 넣으면서 그 본질을 숨기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그냥 보면 이 법은 현 정부 여당이 항구적으로 방송을 가져가겠다는 취지구나 이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법에서는 정부 여당과 정치적 성향을 같이하는 언론 관련 노조나 조직, 시민단체 이런 조직과 특정 세력이 사실상 모든 결정의 주체를 맡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방송법 개정안 제20조는 제1항에서 사장추천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아예 보도전문채널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문화시켜 놨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를 의무 규정으로 해서 기업의 경영에 국가가 관여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요. 그 구성에 노조가 합의권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합의권,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더욱이 공영방송도 아닌 보도전문채널사업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심각한 경영권 침해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헌법 질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헌법상에서의 노동조합의 존재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의미가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이익단체입니다. 노동권을 통해서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탓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왜 경영권까지 관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어떤 명분과 근거로 방송 지배구조까지 관여하겠다는 것인가 이게 숙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긍할 만한 설명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방송사업자가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기업의 경영권에 노조가 관여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과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부인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노조가 모든 방송사 직원들을 포섭하고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파는 국민의 것입니다. 노조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전 국민의 대표성을 취득하게 되는지도 설명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YTN은 사기업이지요. 사기업인 YTN과 같은 방송사를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향후 모든 사기업에까지 이런 식의 노조 경영을 제도화할 구실을 만들어 주는 마중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YTN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방송사의 매각과 관련해서 설왕설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법으로 따져서 문제를 파헤치고 거기에 대해서 단죄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편성규약이라든가 편성위원회를 둔다든가 사장추천위원회를 둔다든가 이런 식으로 노조가 본질적으로 경영권과 편성권까지 다 장악하게 하는 법으로 재단해 버린다 그러면 그에 대한 목적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는 11명의 이사로 구성하되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방송법 제46조입니다. 그러면서 정당의 직접적인 관여를 배제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송을 둘러싼 정파적 투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아예 정당에 추천권까지 부여합니다. 정파성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 후견주의를 정면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양새입니다. 정당이 추천하고 방통위는 추천 대신 임명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만드는 것입니다. 추천권이 실질적인 인사권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바로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임명제청권이나 임명권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방통위에서 의결로 임명제청을 거부하거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초래되는 정치적 갈등이 어떠할지도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과 임명의 이중 절차에서도 만만치 않았던 정치적 충돌이 삼중 절차까지 가지면 더 심한 정치적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여타의 주체로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학회, 변호사단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게 도대체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어떤 주체들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없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유리하도록 그 주체를 선정할 것이라는 그러한 사정 외에는 이것은 일종의 무원칙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전문성, 지역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한다라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상식적인 생각을 동원하더라도 좀 모호하다, 이게 대표성을 갖기가 정말 명분이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임직원’이라는 표현입니다. 임직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수의 다수를 점하는 직원들의 의중대로 이사가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단체를 2개로 제한해서 공식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를 포함하면 추가로 특정 성향의 변호사단체만 참여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지정된 학회도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학회만 참여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번 방송법은 국민이라는 이름을 대신해서 마치 민주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방식입니다만 그럼에도 다수의 많음을 이유로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임직원은 다수이기는 하나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들을 경영진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명분도 사실 애매합니다. 때로는 임직원들의 이익이 국민 전체의 이익과 충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들은 국민을 배신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 우위에 의한 지배를 민주적 지배나 합법적 지배로 동일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임직원이라는 부분들은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가지고 가장 큰 명분인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종사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경영권과 편성권을 재단할 수 있는 그 어떤 명분도 약하다고 저는 봅니다.

목적을 호도하는 방식 중에 시민단체나 사회단체를 표방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건 국가기관이 관여하면 국민의 이익을 무시할 가능성이 크고 민간이 하면 민주적이다 또는 중립적이다 이런 것은 환상적인 개념으로 저는 이해됩니다. 시민단체나 사회단체를 폄훼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에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정당성을 부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견제가 심하게 되면 견제가 아니지요. 간섭이 되는 것입니다. 간섭이 지나치게 되면 직접적인 권한으로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그 설립과 의도가 순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수해야 되는 만큼 견제적 기능도 순환의 고리를 따라서 보편적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견제 장치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돌이켜 보면,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 그것이 점점 심화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많은 시민단체나 사회단체 이런 단체들의 상당수가 친민주당·친민노총의 성향을 가지고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지 민간 영역이라고 해서 마냥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면 오히려 정치적 갈등만 고조하게 되는 것이 정말 불을 보듯 뻔합니다. 공공연구기관이 아닌 학회나 대한변협이 아닌 변호사단체 등에서도 역시 정파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이런 단체들에 관해서 정파성을 고려한 안배를 하지 않는다면 방송사에 지극히 편향된 지배구조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쉽게 말씀드리자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민단체와 활동하는 시민조직들, 사회단체들은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정치

적으로 정파적으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이야기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이들이 함부로 독립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그런 명분으로 참여하게 되면 크게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 알권리는 직접적인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의 형식을 빌리는 것도 많이 통용되는 방법입니다. 위원회 조직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실상 1인의 결정권자가 다수의 힘을 빌려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시청자위원회, 필요하기는 합니다. 방송이 제대로 된 방송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시청자의 눈으로, 그 잣대로 당당하게 객관적으로 지적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송사업자의 영향력에 따라 편의로 선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방송사업자의 이사회 구성 권한까지 주게 된다, 이게 과연 합당한 권한 부여라고 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정당성 확보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생산되는 방송의 프로그램과 보도가 정말 국민의 알권리에 충족하고 있는지 또는 사회적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이 특정 목적을 위해서 조작되거나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이것을 객관적으로 밝혀 줘야 되는 겁니다. 즉 시청자위원회는 정파나 특정인으로부터 왜곡된 이념과 진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여기에 추천권까지, 구성 권한까지 준다는 것은 방송의 알권리를 위해서 심사하고 평가하는 일을 넘어서는 권한 밖의 일이 되는 것이고 심각한 우를 범하게 될 수 있다, 또 이것을 민주적 절차의 방송이라고 명분으로 삼는 것은 지나치다,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편성위의 설치를 강제하고 형사처벌까지 하는 이유가 모호합니다.

개정안은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등 모든 방송사업자가 반드시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명문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편성위원회는 사 측 인사 5명과 직원 대표 5명으로 구성되며 편성규약의 제·개정, 편성책임자의 임명, 시청자위원회 구성까지 모든 핵심적 방송편성 관련 의사결정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글자 그대로 최고의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진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직원 대표가 현 상황으로 봤을 때 대부분 노조나 기자단체 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이들이 가진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방송편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겁니다.

편성책임자의 임명도 편성위원회의 제청을 거쳐야 되고 편성책임자의 이름을 매일 방송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신설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이러한 과도한 규제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그리고 영업의 자유까지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장실 갔다 와도 되나요?

잠시만 좀 실례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번 방송 3법 개정안은 결국은 방송을 장악하겠다 이런 쉬운 얘기를 법률안에 차곡차곡 쟁여 넣어서 굉장히 어렵게 표현했다,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방송법 개정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송의 개혁이다 이렇게 아무리 포장해도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특정 정파적 세력이 신속하고 또는 영구적으로 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도가 많이 엿보인다 이런 것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정권이 바뀌더라도 영향력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해석이 된다면 그대로 영향력이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설계입니다. 장악된 보도 그것을 유지하고 나아가서 방송사 경영권까지 영구히 장악하겠다, 이게 장악의 주체만 바뀌었을 뿐 옛날의 언론 통폐합 그것과 좀 비슷한 그런 맥락까지도 오해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먹구름 같은 것들이 좀 느껴지고요. 이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든가 국민의 기본권, 시장경제 질서 이런 헌법적 가치를 너무 가볍게 보고, 또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법상 주식회사인 민영방송에 대해서 과도하게 경영권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미 보도라든가 학자들로부터 지적된 위헌성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넣은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참 험난합니다. 당연히 위헌소송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한쪽에서는 이 법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 법에 대한 명분과 이 법 시행에 대한 병폐 그리고 이 법 통과에 대한 정당성, 명분 이걸 가지고 또 싸울 것이 뻔합니다. 이게 과연 정말 방송에 대한 독립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될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방송에 대한 독립을 이야기할 때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정치로부터의 독립 등등 이야기합니다만 요즘에는 한 가지가 더 붙어 있지요. 카르텔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미 공공연하게 방송은 권력과 자본, 정치 등과 함께 일종의 특정 세력이 방송을 좌우하는 형태가 되어 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방송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기능 중에 어젠다 세팅, 의제설정 기능 이것이 국민의 알권리의 본질, 그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됐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순응되는 뜻으로 비춰진다 그러면 이 카르텔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 카르텔이 아무리 순수하다 하더라도 방송이라는 특성과 방송이라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되새겨 본다고 그러면 그 카르텔에 대한 형태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것들이 횡행하고 그런 것들이 방송을 장악하게 될 수 있는 구도가 된다면 알권리는 침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노조라든가, 앞서서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했습니다마는 MBC도 여러 개의 노조가 있고 KBS도 여러 개의 노조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그래도 상위에 위치해 있고 다수를 점령하고 있고 소위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노조가 친민주당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앞으로 거쳐야 될 이념에 대한 대립, 갈등, 진영에 대한 대립은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방송이 이야기하는, 앞으로 취해 나가야 될 민주적인 방송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공정한 방송이 될 수 있겠느냐, 그것이 국민들에게 충족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정말 먼 얘기같이 자꾸 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배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죽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방송·언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편성위원회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법은 지금까지 방송법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그런, 다소의 손질과 다소의 개정이 아니라 지배구조 자체를 뒤엎는 그런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숙의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세종대왕이 17년 만에 손실답험법을 만들어 냈듯이,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고 그것을 장착시켰듯이 이렇게 중차대한 법을 아무런 토의와 합의 절차와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도 없이 이걸 만들어 낸다는 것이 이 법이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 지배구조를 얘기하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알아 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 방송관계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관계법에는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 지위 및 책무가 사실상 정립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지배구조를 논의하기 이전에 각 공영방송 간의 역할과 책무를 먼저 규정을 하고 그 뒤에 지배구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배구조를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성은 없습니다마는 공영방송에 대한 역할, 책무를, 이 또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체계 자체가 방송관계법에 대해서는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선후를 따져서 먼저 해야 될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책무를 따지는 겁니다. 그 역할을 먼저 정립을 시켜 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당연히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배구조를 논의하는 것도 늦지 않다, 그것도 순서에 틀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법, 지금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런 법들은 단순히 이사 그리고 사장 그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데 초점과 핵심이 몰려 있습니다. 그게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급한 것은 역할과 책무이지 주인이 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할과 책무가 만들어지고 주인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공사비를 책정하는데 설계가 없이 공사비가 나오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설계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산정이 되고 그래서 공사비가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또한 방송법도 그러한 범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따라서 각 공영방송에 적합한 역할이 좀 부여가 되고 이에 따른 제작의 자율성 그리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토론하는 이 방송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전무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정말 역사적인 부담을 지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송은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될 소중한 자산임은 명약관화합니다. 이건 어느 누구 개인과 어느 정당의 몫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특정 정파를 위한, 특정 세력을 위한 그런 방송 지배구조가 있다 그러면 정말 이건 잘못됐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개정 시도는 그만둬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송법 개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공영방송의 기능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다소의 개인적인 견해가 들

어가 있음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공영방송의 기능입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정치적·상업적으로 독립되어야 됩니다.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되어야만이 그 명분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공익적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이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구조와 운영 방식은 각 나라들의 환경과 문화에 따라서 그리고 또는 역사와 정치적 배경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독립보다는 상업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데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또 독일의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 영향력보다는 정치적 권력, 특히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그 비중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특성, 환경, 문화에 따라서 정해지는 그런 질서가 다 제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살펴보면 영국은 2017년 법 개정을 했습니다. BBC 트러스트를 이때 해체를 했지요. BBC에 대한 규제와 감시는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이 담당하게 됐습니다. 경영 책임은 BBC 이사회가 갖는 다원 구조지요. 이원 구조입니다. 이원 구조로 개편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7년에 출발한 BBC 이사회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서 경제 전문가와 내부 구성원 비중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영방송의 경영적 측면은 크게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BBC에 대한 감시 규제는 오프콤이 전체 미디어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경영 책임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외부 감독, 규제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 이후 BBC는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은 분명한 정책목표에 따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정치권이지요, 심지어 학계에서조차 통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버넌스라는 용어 자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도적 측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 기구들이 운영되는 제도적·인적·환경적 요인들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임명 같은 형식적 제도만 가지고 거버넌스를 논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우리나라에서 공영방송 거버넌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치 구도입니다. 정치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 여당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그리고 사장 임명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공영방송 구조는 한국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는 승자독식 정치 구도와 방송을 정치적 도구로 간주하는 낡은 인식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회 구성이나 운영 같은 형식적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일종의 구성주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람직한 제도라 하더라도 비민주적으로 불합리하게 운영된다면 긍정적인 결과만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정치권의 낡은 언론관과 정치문화를 개선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개량적인 제도개선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공영방송의 정상화라는 진정성이 아닌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공영방송을 장악·통제하려는 목적에서 나왔다 하면 그것은 정말 바람직하다 볼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방송 3법도 그러한 범주에서 시도가 된다면 이 부분은 바로잡아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전에 있었던 많은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법안 역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제도는 오랜 기간 정치권력과 사실상 공생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차례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좀 자조적으로 표현한다면 현행 공영방송 거버넌스는 마치 선거에 승리한 집권 여당, 집권 정당의 전리품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공영방송 이사 구성에 있어 정파 간에 정치적으로 안배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는 솔직히 근본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개선 방안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는 탈정치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제기된 개선 방안들은 한결같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중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공영방송을 더 정치에 예속시키고 정쟁과 갈등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법안들이 공영방송에 대한 여야의 득실, 이해득실을 고려해서 거버넌스를 개편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이런 정치적 접근의 정점이 아닌가,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민주적인 방법의 방송으로 포장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그런 공영방송의 장악 시도가 있다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악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 같은 인터넷 OTT 서비스들이 급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영방송 시청률이, 점유율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뉴스의 영향력도 인터넷 포털과 온라인 뉴스 매체들에게 극심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거의 세계의 모든 공영방송들의 위상과 존립 근거가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경쟁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생존을 먼저 도모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치적 도구로서 공영방송을 바라보는 인식부터 버려야 합니다. 공영방송 문제를 정치적 이해득실 판단으로 접근하게 되면 정치적 독립이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와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실제 많은 정치학자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러한 구조들은 상당한 변화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아마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인식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소위 2000년에 접어들면서 민주사회의 시민들이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많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달라지고 있냐고 그러면, 사안을 바라보는 부분 역시 정치학자들은 이것이 훌리건 현상 그다음에 벌컨 현상 이런 식으로 막 구분을 해서 보고 있는데요. 인터넷 시대가 도래되고 다양한 미디어 시대가 도래하면서 소위 나홀로족들이 많이 되고 혼밥을 먹는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청년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드리자 그러면 공동체 생활공간, 공동체 구조가 이미 허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식의 양태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판단하는 구조의 사회의식 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뉴스를 접하고 또 정보를 접하는 것이 굉장히 편협과 편식 위주로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기준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리고 그에 대해서 생각을 공유하는 집단 이런 사람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는 경향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팬덤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팬덤에 대한 현상은 다른 말로 해석을 하자 그러면 뉴스가 주는 또는 정부가 주는 그런 가치 그리고 그에 대한 진실성, 거기에 대한 정직성, 거기에 대한 공정성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개인의 이익에만 부각되는 정보를 준다거나 본인 개인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표하는 그런 집단에게 집단적인 팬덤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것이 훌리건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거기에 편중돼 있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집단에 대해서 다른 제삼자가 공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폭력성을 띠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과도한 연예인에 대한 팬들의 집착증, 그 잘못된 팬덤 현상이 오늘날 사회문화와 정치문화에도 많이 팽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따지기 전에 그리고 국가의 정책적 방향을 따지기 전에, 국가의 미래를 따지기 전에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시민들이 좋아하고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정책만 우선적으로 발표하게 되는,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적 정책과 그런 제도들이 많이 횡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대사회의 인식구조의 변화에 따른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회 또는 사회 전반에 지금 그대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투표라는 행위도 정당화되기 힘들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표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민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투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이고 정신적인 가치가 정당성과 정의로움을 이야기할 텐데 지금 나홀로족과 이런 혼밥이 성행하는, 혼자만의 생각을 강요하는 그런 집단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공영방송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지금 어쩌면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있다,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다, 공영방송을 설사 우리가 또 다른 목적으로 장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후일에 의도하는 대로 쓰여질 일은 만무하다, 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고 그러면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차고 넘쳐흐르고 있고 거기에 취하는 수단과 방법들이 차고 넘쳐흐르는 상황이고 거기에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 지극히 팬덤으로 흐르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공영방송 몇 개를 장악했다 해서 정치적 목적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게 보지 않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사회 또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방송 3법에 대한 부당성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급변하고 있는 사회인식 구조 그리고 사회질서의 구조, 미디어 시장의 다양한 구조 그 변화에 있어서 공영방송이 뉴스 전달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는 그런 본질적 가치를 그대로 이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물음표를 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본질적인,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미디어를 연구하고 다른 방향으로 그것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객관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도구들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배구조보다 좀 우선이 돼야 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공영방송은 다른 미디어들과 차별화돼서 시장에서 생존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미디어의 약진, 스마트폰 그런 이용자들의 매체 접근 형태가 변화되고 있고 제로 TV 가구의 증가, TV가 아예 없는 가구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공영방송의 존립 근거와 경쟁력을 급속하게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없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부분부터 우리가 먼저 사실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의 패턴으로 간다고 그러면 정보의 전달 기능, 뉴스의 전달 기능,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기능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고 오늘같이 이렇게 방송 3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느 분이 그랬지 않습니까? 공항의 활주로를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막 합니다. 공항을 건설하고, 가덕도도 그렇고 많이 이야기합니다마는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항을 건설하려면 합의 과정부터 시작해서 설계, 그다음에 공사기간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릴 텐데 드론이 상용화되면 공항 활주로가 필요할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흡사 그런 형태, 유사한 형태로 우리는 지금 방송법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정치·사회적으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거대 공룡 같은 공영방송 시대는 정말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고품격 콘텐츠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지배구조 변화가 아니라 공영방송 규제체제의 전반적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의도 앞에 있는 거대한 KBS가 지금 이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보다 더 못하게 되는 현실이 지금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눈앞에,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의도 앞에 있는 거대한 건물 KBS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공영방송의 범주와 목표 설정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이념은 첫 번째로 공영방송의 책무와 공익적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토대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가능케 하는 안정적 재무구조, 이 세 가지 토대 위에서만 사실 구현될 수가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에서 고래고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고래고기에 아주 조예가 깊으신 의원이 계셔서 고래고기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들었는데, 실제 고래고기는 지금 포획도 금지되고 있고 일부만 좀 허용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사실 고래고기에서 나오는 고래기름은 산업의 발달과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래고기는 옛날에 유용한 에너지 자원으로 사용을 했지요. 그래서 일본이 개항을 할 때도 실질적으로 서구 유럽 사회의 고래고기, 고래잡이를 위한 그런 전초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에 개항을 요구했고 그것이 일본의 항구를 열어 주는 그런 역사적 사실도 있습니다. 실제 유럽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고래기름을 두고 전쟁까지 벌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래고기가 역사적으로 1700년대, 1800년대를 넘어서면서 지나치게 많이 포획이 됐었지요. 고래기름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부유하게 될 수 있는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충돌하게 되지요. 마치 지금 거대 공영방송과 새로운 뉴미디어의 출현과 똑같은 형태로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석유가 발견된 것입니다. 석유가 발견돼서 그 에너지가, 고가의 고래기름과 달리 석유라는 무한한 에너지가 발견됨으로써 사실상 고래기름이 과거의 역사의 현장으로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배경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비유가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휴게실에서 갑자기 고래고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지금 지적했다시피 공영방송에 대한 부분들은 지배구조는 정말 눈감고 우리끼리 그냥 박수 치고 앉아서 우리만 무대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남들이, 관중은 아무도 보지 않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연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나타날지도 모르는 AI 시대, 이 시대에서 과연 공영방송이 얼마만큼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 KBS 같은 경우 저 거대한 조직이 AI 시대와 디지털·뉴미디어 시대에 있어서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저 거대한 몸집으로. MBC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편중된 조직문화를 가지고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이 아무도 깊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본인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지배구조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기 전에 언론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참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에서 많은 말씀 드린 세 가지 토대가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이념적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2와 3의 수단들이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영방송의 책무와 공익적 목표를 분명하게 정의를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방송법에는 공영방송이라는 개념은 물론이고 상업방송과 차별화된 목표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공영방송의 목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상업방송과는 다른 목표, 즉 상대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송이 공영방송인가에 대한 범주 설정이 우선돼야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공영이고 어디까지가 민영이고 이게 범주 설정조차도 안 된 게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공영방송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르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공익적 방송이라는 개념보다는 공적 소유에 대한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공기업,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등등 국가나 공공기관들이 소유하고 있는 방송들,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배구조만 이야기하는 거지요. 기관, 국가기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냥 공영방송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영방송이 뭐고 그 범주가 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 고민은 아무도 하지 않고 있고 할 노력도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영방송으로서 차별화된 목표가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거버넌스 개편 논의 자체가 정치적 지배력 쟁탈전으로 비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 공영방송의 목표를, 가뜩이나 없는 목표를 더욱더 왜곡하게 만드는, 공영방송 그 자체는 정치 방송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뉴미디어가 하루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참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왜곡된 목표가 자꾸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면 심각한 정쟁의 장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아무도 MBC와 KBS 뉴스와 공영방송의 뉴스는 믿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거기에 채널을 맞출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지배구조의 논의는 정말 우리 스스로가 무대 만들어 놓고 우리 스스로가 관중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박수 치고 우리 스스로가 노래하고 춤추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광대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배구조의 장악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 논의보다는 공영방송 개념의 정의, 범주의 설정 그리고 차별화에 대한 목표 설정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별도의 공영방송법 제정을 고려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방송 3법 개정법안에는 이러한 공영방송의 책무와 공익적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만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가능케 하는 안정적인 재원구조에 대한 대안도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자금이 앞으로도 더 계속 요구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거버넌스만 해결된다고 공영방송이 정상화될 리 만무합니다. 안정적인 공적 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공영방송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현실에 부닥치게 됩니다.

기초 작업을 하지 않고 건물만 자꾸 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건물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지렛대를 만들어대야 되는 겁니다. 그 건물의 기초 공사가 튼튼해야 다른 공사도 부실하지 않게, 다른 지렛대가 필요치 않지요. 공영방송이 그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뉴미디어 시대, 디지털 시대, AI 시대를 대비해서 기초 공사를 해놔야 되는 겁니다.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립하고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며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이것부터 먼저 해 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렛대를 받치고 건물을 올리는 불안정한 동거를 할 수밖에 없고 급기야는 심각한 태풍이 분다거나 심각한 지각 변동이 오면 그 건물은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공영방송의 현실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신규 매체들과 OTT 서비스들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에 KBS를 굳이 보지 않아도, MBC를 보지 않아도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자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KBS의 건물보다 몇천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이 핸드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핸드폰 기능보다 어쩌면 더 못한 그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영방송 수신료 문제, 이게 경직된 상태에서 상업적 재원에 대한 유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파성, 방만한 경영, 조직 이기주의, 공적 재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지금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계속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환경은 달라지고 있는데 그대로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공영방송 수신료 문제를 이해득실에 따라 접근하면서 정치 쟁점화시켰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거버넌스의 개편도 공익성을 도리어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영이 아니라 그냥 상업화되는 것입니다, 정치화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되면 공익성 자체를 입에 올리지도 못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공영방송의 재원을 관리하는 가칭 수신료위원회 같은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원화된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영방송이 외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이 되어서 공익적 목표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한 법·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공영방송이 외적 압력으로부터, 자본으로부터, 정치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카르텔로부터, 여기서 독립될 수 있는 규제적·제도적 장치들이 사실상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그런 독립성이 보장돼야만이 공익성을 담보로 하는 공영방송의 본질적 목표에 부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여러 가지 규제적 사안들 가운데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봐지는 게 현실적입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 근거도 전무한 상태에서 방송법에는 KBS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가기간방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은 없습니다. 국가기간방송은 방송법에 KBS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MBC는 공영방송으로 규정할 만한 어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규제의 편의성이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주기 위한 통념상의 공영방송 체제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정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좀 그렇습니다. 지금 공영방송에 대한 책무, 공영방송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국의 BBC만 보더라도 사실상 규제체계를 놓고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져 온 게 사실입니다. 2002년 설립된 BBC 트러스트 그리고 오프콤, BBC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심의·규제 권한을 놓고 이 두 축이 오랫동안 대립을 해 왔습니다. 결국 2017년 BBC 트러스트가 해산이 됐지요. 경영은 BBC 이사회, 규제·감독은 오프콤으로 나누어 맡는 체제가 됐습니다. 그동안 그 갈등을 굉장히 많이 겪어 왔습니다. 우리도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이야기한다면 이런 갈등구

조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이걸 넘어설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BBC를 감독하는 기구가 BBC 의사결정도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BBC 트러스트를 해산하고 경영은 오프콤으로 맡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규제 방식의 변화 추세를 BBC의 사례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영방송 규제체제는 영국의 BBC에 비하면 정말 턱도 없습니다. 공영방송을 별도로 규율할 수 있는 법률적 기구나 법률적인 제도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지상파방송, 보도·종합편성채널 그리고 통신서비스까지 함께 규율합니다. 어디가?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이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책 사안에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거나 공조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다른 기구까지 만드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업무를 조정해 나갈지, 정책 조정할지 저는 사실상 궁금합니다. 지금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렇게 하여튼 수많은 난제들이 있고 개선해야 되는 일이 한참 남아 있는데 또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한다? 글쎄요.

무엇보다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행정부처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성이 강한 공영방송 규율기구로서는 사실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둘 다 오염이 돼 있다는 겁니다. 방송을 규율해야 되는데 방송은 이미 정치 방송으로 돼 있고, 방송위원회도 그 정치 방송을 규율해야 되는 합의 기구가 돼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바꾸는 방법을 사실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연구 안 하고 다른 기구 만든다고 그러면 그게 해소가 되겠습니까? 지금 불편하다 해서, 뭘 정리하기 위해서 기구를 없애자는 그런 논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 거버넌스 모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역할을 경영과 규제 두 차원으로 나누고 거버넌스 관련 기구들의 위상을 내·외부로 구분하면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영방송 거버넌스는 공영방송 내부에서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회가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외부 규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비상임기구로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에는 좀 취약하다는 것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외부 규제 역시 사실상 방임 상태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료위원회라든가 공영방송위원회 같은 경영과 규제를 각각 책임지는 외부 규제기구 설립이 좀 필요하다는 이유가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서 발로가 되는 겁니다. 영국이 BBC 트러스트를 해산하고 이사회를 부활하면서 오프콤의 외부 규제와 분리한 이유도 결국은 경영의 책임성과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봉착하고 있는 경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경영 책임성을 강화해야 됩니다. 디지털·미디어 시대에 공영방송의 존립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내적 규제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들과 차별화되기 위한 외적 규제도 동시에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영방송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규제기구 설립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영방송의 재정적 안정성과 공적 재원의 효율적 배분·집행을 위한 외부

기구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결국 역할별로 분산되는 거버넌스들을 체계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다원적 체제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방송법에 공영방송 관련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고요, 별도 공영방송법을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공영방송 규제체제를 다원화해서 정치적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이사회 같은 비효율적 규제기구의 독점력을 분산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정파 간 나눠 먹기식 이사 추천 방식도 개선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방송법 개정안처럼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 주체들의 대표성 문제에만 집착하면요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정치적 독립 또 효율적인 규율 능력 이런 것은 좀 기대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공영방송 제도가 가진 문제의 가장 큰 본질은 공영방송 존립 근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만들어진 형식적 제도라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았던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혁 혹은 개선 논의가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구성에 있어서 여야 추천 수만 따지는, 정말 솔직히 저급한 수준에서 머물렀던 것도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다른 건 검토하고 연구할 엄두도 안 내고 그냥 이사 숫자를 어느 정당이 많이 가져가느냐 여기에만 골몰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뉴미디어 시대에 공영방송이 허덕이고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기형적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정치권 책임입니다. 나중에 국민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됩니다. 어쩌시려고요, 조그만 핸드폰보다 못한, 스마트폰보다 못한 그런 공영방송이 되는데.

문제는 정치적 예속성입니다. 정치적 예속성은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편성, 공정성 등 여러 곳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치 예속성 혹은 정치 병행성이 심화되면서 공영방송 스스로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체질화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 보도가…… 가짜뉴스, 가짜뉴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선거에 임하시는 분들이고 또 선거활동을 해 보신 분들이라 다 느끼시겠습니다만 정치인들 치고 가짜뉴스에 시달려 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지방 언론은 어쩌고 중앙 언론은 어쩌고 사람마다 욕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짜뉴스, 과장뉴스, 왜곡뉴스 이게 사실 애매합니다, 어느 것을 가짜뉴스로 봐야 될지.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요. 자기가 한 짓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말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주위에 따르면,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이렇게 한 듯이 보인다, 그렇게 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 이렇게 보인다 등의 수식어를 통해서 문장을 통해서 보도를 합니다. 우리는 그걸 허위 보도라고 이야기하지요.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예는 실추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익은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송을 합니다. 허위사실 보도 명예훼손 하지요. 이긴 거 보셨습니까? 못 이깁니다. 왜 못 이기느냐? 공익성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 악의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익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실질적 악의를 가지고 이익을 침해하기 위해서 기사를 썼다고 그걸 입증하기가 어

렵습니다. 입증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횡행할 수밖에 없지요. 왜? 그게 입증이 안 되면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론이 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영방송에 대한 부분들도 이게 자꾸 정치적 예속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배구조가 달라지게 되면 충분히 그러한 유의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걸 통하면 권력이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장악될 수도 있고요. 그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키운 애완견에게 잡아먹힐 수 있는 그런 꼴을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방송이 애완견이 아니라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살을 뜯어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급기야는 정치를 가지고 있는 정의적 기반조차도 허물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된 공영방송은 사실상 없습니다.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도 자주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정치적 균형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치적 균형이 역설적으로 공영방송을 더욱 정치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익이나 의견들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이 정당밖에 없다는 점도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승자독식 구조의 대통령제를 가진 우리 정치 구조가 지닌 근본적인 한계이기도 합니다. 결국 형식적 균형일 뿐 다수당 혹은 집권 정당의 방송 지배라는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내자면 이렇습니다. 결국 600년 전 세종대왕에게 배우자는 겁니다.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할까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이 모든 논쟁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공자는 미래를 결정하고 싶다면 과거를 공부하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지요.

여기 계신 의원분들에게 제안 아닌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같은 일방통행 이런 극한 대립은 우리 스스로가 좀 자제하고 성찰해야 되고 또 멈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의 과거에서 좀 배울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다시피 600년 전에 손실답험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국민의 대다수를 여론조사에 참여시켜서 그것을 성공리에 제도를 안착시킨 세종대왕의 선례가, 아주 훌륭한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다시 한번 그런 공론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론 수렴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 수정하고 보완하고 정말 정치적 후견주의 없애고 정치로부터의 독립,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카르텔로부터의 독립 이것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수정하고 보완하는 또 토론하는, 그래서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종대왕은 17년에 걸쳐서 여론 수렴을 해서 손실답험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방송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고 민심을 이야기한다면서, 민심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우리 정치는 늘 이야기하면서 17년이 아니라 몇 년을 거치더라도 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법으로 공영방송이 정치적 독립이 되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이 방식대로 법이 통과된

다면 대한민국의 KBS와 MBC 등등 공영방송은 정치 방송이 될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한쪽으로부터 정당성이 입증이 되고 어느 정도의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법을 통해서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갈등은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늦지 않다면 다시 한번 세종의 지혜를 빌리듯이 세종의 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고 그에 대해서 순응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는 이 다양한 뉴미디어 시대와 AI 시대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바닥보다 못한 스마트폰의 역할도 못하면서 그것이 아주 만능,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환상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언컨대 지금 현 상태의 공영방송은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좁쌀만 한 미디어에도 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과 책무와 범주부터 새롭게 선정하고 그것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모아서 서로 의논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방송 3법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갈등은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좀 불편한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민노총의 방송장악 실태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가 있으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한번 들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굳이 민노총 언론노조 그래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특정 세력이 방송을 장악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양평군의 고속도로 주장이라든가, 천공의 대통령실 부지 선정 주장이라든가,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의 청담동 술집 방문 주장이라든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주장이라든가, 이와 어떤 반대되는 민주당의 입장도 또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정파적 이익에 따라 제기되고 과장되어 유포되지만 사실상 실체라고는 없는 언론으로 포장된 일방적인 정치공세의 도구로 방송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부당하고 불공정한 여론 선전·선동의 목적은 정치권에서 부풀린 의혹을 확성기처럼 증폭시켜서 정권을 흔드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보편적이고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런 일반적 정치 선동에 공영방송이 앞장서고 있는 모습은 정말 끔찍하게 타락한 공영방송의 현주소입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두 사람이 모두 탄핵소추 발의나 표결 직전에 방통위 기능 정지를 막겠다며 자진사퇴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도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불거진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4년 MBC의 세월호참사 전원 구조 오보 이 부분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파장을 일으켰던 그러한 일들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의 조급증이 민간 잠수사의 죽음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도하면서 유족 폄훼 논란에 휩싸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보도는 MBN이 최초로 전원 구조 자막 오보를 유포시켰지요.

2018년 3월에 MBC 최승호 사장이 정상화위원회라는 조사기구를 신설해서 전원 구조 오보하고 관련된 민노총 기자 15명을 조사했습니다만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MBC가 편향된 곳으로 간다, 민노총 방송으로 간다, 이런 것들이 트리

거 역할을 했던 것들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언론은 왜 언론노조에게 휘둘리게 되었느냐? 이러한 성향은 태생적 한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현재 KBS·MBC·EBS 3대 공영방송사의 주력 노조, 대표적인 민영방송인 SBS, 기독교 최대 방송인 CBS,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뉴스 도매상이지요—연합뉴스, 24시간 보도채널인 연합뉴스TV와 YTN, 경향신문·국민일보·서울신문·한겨레신문·한국일보 등등 주요 언론사 노조가 사실상 민주노총을 상급노조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지적이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당연히 노동자 권익을 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노총의 행동강령이라든가 지금의 행태를 보면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연방연합제 통일, 이런 북한의 노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 훼손에 앞장서고 있는 것도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민중 정권 수립,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선동하는 행위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판시했습니다. 2003고합997이지요. 아직도 그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언론노조의 강령과 규약 규정은 민주노총 및 진보좌파 정치세력과 연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의 강령에서 정치세력화를 기치로 내세우고 노조 규약 규정에는 정치위원회라는 조직을 둬서 민주노총과 제 민주단체 및 진보 정치세력과 연대해서 모든 노동자의 정치활동 역량 조직화와 각종 정치사업을 벌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 강령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오해를 하고 확대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처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에 대해서, 안정상 법학 박사가 있으십니다. 이분이 중앙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의 교수이신데요, 그분 법안 검토의견이 있는데 한번 되새겨 볼 만한 그런 사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소개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과방위원 단일안 추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검토’라는 얘기인데 제가 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이 정치적 독립성을 가지고 공공·공익성을 지향하는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이사와 사장을 선임하는 방식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매우 중요함.

그동안 관행적으로 대통령실, 여야 정당 등 정치권이 이사와 사장 선임에 개입했고 이를 통해 공영방송을 정치권력의 하수인 내지 꼭두각시로 전락시켜 왔던 사실은 우리나라 방송·언론의 흑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영방송의 정치도구화, 즉 대통령과 집권 여당 등 정치권력을 위한 편파·왜곡 보도를 일삼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여론을 왜곡·호도했던 악습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시청자인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고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거나 극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사와 사장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아울러 이사나 집행기관의 신분보장과 금지된 정치활동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정치활동을 하게 되면 신분보장을 할 경우에는 처벌을 통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강제 조항을 여기에 넣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당이 되어도 야당이 되어도 공영방송 사장의 정권의 낙하산 임명 같은 일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는 신념으로 법안 개정에 나서야 된다라는 책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민주당 과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6월 27일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에서…… 7월 1일 토론을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단일안을 발표했다. 이 단일안을 검토한 후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강화하는 합법적인 인정 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KBS 이사 총 15명, 방문진·EBS 13명 중 각각 6명과 5명을 국회가 추천한다' 이것은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후견주의를 그대로 고착화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동안 방송·언론 현업단체나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전문가들은 공영방송 이사 시 견지해야 할 핵심 가치로 정치적 후견주의 배격을 강조해 왔다'. 민주당도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는 공개적으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언론 쪽도 그렇고 시민사회단체들도 방송의 독립성에서 가장 걸림돌이 정치적 후견주의라고 여야 막론하고 다 제기돼 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단일안은 정반대로 정치권에서 공영방송 이사 6명과 5명 선임을 주도하고 공영방송에 대해서 정파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전형적인 정치적 후견주의를 합법적으로 강화 내지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방송 역류 현상을 노정하고 있다. 역대 보수 정권이 이사 선임 시 암묵적으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자행했다면 민주당은 합법적으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보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비판이 있다라고 이 교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후견주의가 합법적으로 보장이 돼서 이사회가 구성이 되면 공영방송의 경영을 감독·관리하는 이사회가 여야 정치권의 대리인들의 전쟁터로 바뀌게 되고'…… 당연하지요. 후견주의가 공식화되게 되면 공영방송의 경영 관리·감독은 그냥 파벌과 갈등, 대립에 대한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를 위해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영방송을 정권의 꼭두각시로 유인하는 데만 혈안이 돼서 공영방송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라고 안정상 박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나타났던 공영방송의 흑역사가 이를 방증해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과거에는 암묵적으로 정치권이 이사 선임에 개입했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정치권이 법적 근거하에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이사를 추천하기 때문에 피추천 이사들은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추천권자의 지휘·지시를 받게 되고 이렇게 추천된 인사들은 상시적으로 추천권자의 특정 정당의 눈치를 살피는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40%에 이르는 정치권 피추천 인사들이 정파적으로 공영방송의 보도·제작·편성에 개입하거나 시비를 걸면서 싸움판이 벌어지게 되면 나머지 이사들도 결국 입김 센 정치권 인사들과 결탁하거나 최소한 진영논리에 따른 호불호의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러한 가능성을 이 논문에서도 그대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치 역학 구조는 정파적 이해 대립이 첨예한 국회에서 정파적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정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매우 높다. 더구나 당초 추진하는 단일안대로 진행되어 의석수 비율로 국회 여·야당이 이사회 이사를 추천한다면 KBS는 7명 중 4명, 방문진과 EBS는 6명 중 최소 세 사람이 정부 여당 측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15명 중 7명, 13명 중 6명을 국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가 정치적 후견주의가 강하다는 비판이 일자 다시 KBS는 7명에서 6명, 방문진과 EBS는 6명에서 5명으로 각각 1명씩 줄이기로 하였고 6월 27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소위원회 내부 공개가 되었고 7월 1일 토론회에서 확인되었다. 그렇다고 정치적 후견주의 강화라는 비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정부 여당 추천 이사들을 중심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추천된 이사들과 결탁 내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이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초적 환경을 구축해 주는 모양이 된다. 따라서 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 구성에서 추구해 왔던 정치적 후견주의 탈피라는 가치는 훼손 내지 무시하고 오히려 정치적 후견주의를 더 강화하는 이사 선임 법안 추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안 박사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국회의 국민 대표성에 대한 자의적인 시각이 있다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가 다수의 이사를 추천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법안을 옹호하는 시각이 있다. 그런 의미라면 총선·지방선거 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국민투표를 같이하거나 전 국민이 다수결로 뽑은 대통령이 이사 모두를 임명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그런 논리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합리화시키려는 논리로 매우 불합리한 주장이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나 대통령을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서 영향력을 배제하거나 극최소화해야 하는 이유는 정파성 때문이다. 즉 정치권력을 대표하는 국회나 대통령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사 추천권을 배제시키거나 최최소한으로 축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이 추천한 공영방송 이사들은 공공·공익적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또는 사장과 결탁하여 공영방송에 대해 간섭하거나 압박하는 데 집중하느라 공영방송 이사 본연의 공적 책무를 소홀히 하게 되고 그 결과 공영방송은 편파·왜곡 보도가 횡행하고 정파적 이해를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방송 예정된 프로그램을 불방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결국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이 피해를 안게 된다’라고 안정상 박사가 논문을 통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국회의 이사 추천권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회가 추천권을 갖는다는 것이 그래도 학계나 시민단체, 사회단체 등등이 추천하는 것보다는 좀 나을 것이다는 그런 가정적 논리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것은 국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최소한의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틀을 만들고 있고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안 박사의 논문에서는 이조차도 정치적 후견주의를 오히려 고착화시키는 그런 논리라서 국회가 헌법기관을 대표한다는 그런 논리만으로 여기의 추천권을 확대하는 것

은 바람직하다는 논리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단체의 정치적 후견주의, 극구 반대에서 찬성으로 선회했다 이 부분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 연합체는 국회 등 정치권이 이사 선임에 개입하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극구 반대해 왔다. 2018년 8월 16일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241개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목표로 구성한 연대 기구인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를 위한 시민행동—방송독립시민행동이지요—이들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철저히 보장하고 정치적 개입을 원천 차단하도록 방송관계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강력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2018년 12월 5일 방송독립시민행동은 18년 5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1.7%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있어 관례였던 정당 추천 방식을 폐지하고 국민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응답했던 사항을 언급하면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시민들과 함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권을 배제하고 시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음을 강조했다.

방송법 개정 논의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를 발표했는데 그중에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대한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권을 행사하되 선임 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 이를 위해 정치권 등 외부 개입을 금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할 경우 방송법 제4조처럼 처벌 규정을 두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회 구성 시 종사자 대표의 참여와 성평등, 지역 대표성, 다양성 보장을 의무화해서 이사회의 사회적 대표성을 강화해야 된다'.

다른 부분은, '2019년 1월 22일 방송독립시민행동은 국회 과방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를 앞두고 지난 2018년 12월 5일에 발표한 이사 선임에 대한 원칙을 다시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론 다수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또 그를 위해 정치권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야가 적당히 갈라먹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청산해야 할 때가 왔다. 만일 정치권 누구라도 공영방송 이사 자리 수, 사장 선임 과정에서 캐스팅보트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안 심사에 접근한다면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가 스스로의 권한을 내려놓는 결단으로 지난한 논의에 종지부를 찍길 바란다'라고 주장을 좀 강력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2021년 5월 25일 언론개혁 촉구 시민사회 비상시국선언 참여단체 일동은 언론개혁 촉구 시민사회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서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 그만 공영언론에 대한 기득권을 완전히 포기하라. 국회와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공영언론 사장과 이사 선임에 국민 참여를 법으로 보장하고 기득권을 완전히 청산하라. 언론에 대한 정치적 기득권 청산으로 시작되는 개혁은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축소하는 정치개혁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언론 관련 시민단체 연합체는 국회 등 정치권이 이사 선임에 개입하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극구 반대해 왔다. 그런데 7월 1일 개최된 토론회 주최자로 예전에 시민단체 연합체가 들어가 있는 회원단체가 거의 그대로 가입돼 있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민주당 과방위가 내세우는 단일안 이사 선임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에 동의하는 걸로 보여서 매우 당혹스러웠다. 입장이 바뀌게 된 이유가 뭔지, 92개 가입 단체가 모두 찬성하는 입장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안정상 박사는 토론회 자료를 통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대선공약하고 배치된다는 부분도 지적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방안으로, 첫째 시청자 중심의 공영방송 경영진 구조 및 선임 방식 개선, 두 번째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의 자격요건 엄격 법정화, 세 번째 공영방송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의무 강화 등을 내세웠다. 이게 대선공약집 42페이지에 있다'라고 적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정치권에서 상당 부분 개입하여 정치적 후견주의 강화라는 비판을 가져온다는 것은 공약에서 밝히는 시청자 중심의 공영방송 경영진 구조 및 선임 방식 개선 약속에 배치되는 것이다. 현재 추진하는 과방위 민주당 단일안은 시청자 중심이 아니라 정치권 중심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는 과방위 민주당 단일안에서는 대선공약에서 밝힌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의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는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법정화하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추진하는 과방위 민주당 단일안에서 공영방송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화하는 규정이 배제되어 있다. 즉 임기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내·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배제하도록 하고 정치활동 금지를 의무화하도록 명문화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이 규정이 신설되어야 공영방송 이사나 사장의 정치적 연계 활동, 정치 이념의 편향적 행태의 방지를 통한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할 수 있다.

또한 결격사유,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간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면직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요. '이는 이사나 사장에 대해 정권의 배후 조종에 의한 인위적이고 불법적인 해임·면직 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 면직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불식시키는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안정상 교수 본인의 제안인데요. '민주당이 정치적 후견주의를 강화한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회 추천 몫을 이사 총원 중 3명 또는 5분의 1 이하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이훈기 의원님하고 김우영 의원님 법안에 의석수 비율로 3명 추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대신에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자율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며……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 다른 추천권자의 몫을 늘려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불합리한 추천권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임직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를 추천하는 문제, 이게 법안에서 임직원 과반수로 3명의 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것도

민주당 의원님들의 기이 제출된 법안 안에 다수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이 의도하는 것은 공영방송사 구성원 전체의 총의를 대변하는 사람을 이사로 추천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이게 뭐냐 하면 불명한 이사 추천 방식의 혼란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임원과 일반 직원 전체가 어떤 방식으로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 3명을 추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 방향에 대한 규정 없이 무조건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복수 노조가 있는 공영방송에서는 노조 간 이사 선출 방식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고 임원들이 사 측을 대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노조들과 이사 선임 방식에 대한 대립으로 이사 선임이 늦어질 수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사회의 공영방송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보인다’. 그래서 총 사원 투표에 의한 이사 추천이 필요하다고 여기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영의 핵심 요소인 구성원들의 존재와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임직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 이사 추천 대신에 공사에—즉 방문진이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지요—소속하여 근무하는 전체 사원의 중지를 모아 이사 구성에 반영함으로써 자주의식을 가지고 공영방송의 공공·공익성을 지키도록 총 사원 투표를 통해서 다득표순으로 3명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방식으로 이사를 추천하게 되면 전체 사원의 총의를 모은 결과를 얻게 되고 이사 선임 방식·절차 등에 대한 종사자와 종사자 간, 노조와 노조 간, 종사자와 임원 간의 분쟁이나 혼란을 막고 절차가 지연되는 우려를 차단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권을 갖는 사원의 범위—사규 등을 참고해야 되겠지요—및 전자투표, 직접투표 등의 투표 방식, 기타 투표 관련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도록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민주당의 김우영 의원님 법안에 총 사원 투표 다득표순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장식 의원님 법안에도 임직원 투표 다득표순으로 이사 추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문제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변호사(민변) 추천에 대한 문제인데 ‘단일화로 추진한다는 법안에서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해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2개의 변호사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으로 2명을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변협과 민변이 각각 1명씩 이사를 추천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종면 의원님도 변협과 EBS 제외하는 것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관련하여 변호사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한 법안은 20대 국회, 2017년 11월 자유한국당이지요.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출신 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개정안에서 13개 기관에서 각 1명씩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중의 하나로 변협에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 경우가 유일한 입법사례였다고 여기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안은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단체 추천 명분이 부재하다는 겁니다. ‘변호사단체들이 무슨 명분으로 추천권을

가지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유가 좀 불분명하다. 법안 내용에 보면 진보 성향을 보이는 민변에도 이사 1인을 추천할 수 있게 된 것도 독특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각 변호사단체에 소속돼 있는 변호사들이 방송·미디어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한 경우 공격자와 방어자 양쪽에서 공방을 벌이는 대리인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할 수 있지만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명분은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특히 변협의 경우 회원들 중 판사·검사 재직 시 정치적 이념을 이유로 판결이나 수사를 하여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사람도 회장으로 당선되어 변협의 수장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치 이념에 매몰된 사람이 회장이 되었을 경우 공영방송 이사 추천 시에 정치적 이념의 잣대가 강하게 작동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변도 공영방송 이사 추천 시 정치적 영향력에 강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것이지요. 진보 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진 민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할 경우 보수 진영 변호사단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라든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등 이런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런 변호사단체 및 여타 중소 각 변호사단체도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요구하는 그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시민단체 추천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기서 분석하고 있는데 그동안 방송 분야 시민단체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많은 법안들이 제출된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미디어 분야 시민사회단체들은 시청자들의 시청권 문제나 공영방송의 보도 공정성 문제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요구하고 시청자들 편에서 의견을 제시해 왔다. 따라서 미디어 분야 시민사회단체들이 시청자인 국민의 편에서 활동해 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터무니없는 변호사단체에게 이사 추천권을 줄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과 자격을 갖춘 미디어 분야 시민단체에게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주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서영교 민주당 의원님 법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압니다.

결국은 이게 방송·영상·미디어 분야 활동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 아마 여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위원회 이사 추천 문제도 거론했는데요. '이 법안에서는 시청자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2명을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구성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 무조건적으로 시청자위원회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고요.

'시청자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과 각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에 따라 선정하고 있는바 현 사장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편파적으로 위원을 선임하는 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와 위원장은 대부분 부사장이 맡고 선정위원도 사 측 인사가 더 많은 점이 그동안 사장 친화적 인사로 시청자위원이 선정되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아울러 각 공영방송마다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 구성 형태가 다르고 그 구성 행태에 따라 시청자위원 선정의 불공정성 논란이 야기되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시청자위원회 구성이 필수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공영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현행 방송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시청자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시청자위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추천 기준 및 절차, 사장의 개입 방지 등의 규정을 두기 위한 방송법상 법적 근거를 명시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방송법 시행령에 위임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순위다라고 보고 있고요.

'공평·공정한 시청자위원회에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진술한 시청자위원 관련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 실제로 이에 관한 개정안을 추가 제출, 심의 의결한 후 개정된 법에 의해 선임되어 구성한 시청자위원회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시행령 시청자위원회의 구성에서 첫 번째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두 번째 시청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시청자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규정, 이게 방송법 시행령 제64조 그 규정이 전부이다. 따라서 시청자위원 추천자 자격·위촉, 임기, 독립성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제출된 법안과 같이 지역시청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MBC와 KBS의 경우는 중앙방송의 시청자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이사를 추천해서는 안 되고 MBC 지역총국의 시청자위원회와 합의하여 추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민주당 일부 의원님들의 법안에도 들어가 있던 걸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학회의 이사 추천 문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안에서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개가 합의하여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여러 법안에서 제시되었던 바와 같이 학회에서 공영방송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다. 문제는 어떤 기준에 따라 학회에 추천권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사 추천권을 갖는 학회의 기준을 방통위 규칙에 전적으로 위임할 경우 방통위의 전횡이 우려된다'라고 논문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정치적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다수를 점한 정부 여당의 진영논리에 따라 자의적으로 특정 학회를 선정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보수 정권이 등장하면 철저하게 진영논리에 따라 정권에 유리한 학회가 이사 추천권을 갖도록 규칙을 정하거나 개정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는 학회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통위 규칙이 정한 기준으로 추천된 이사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치권력의 하수인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천권을 부여할 학회의 기준, 즉 상위 3개 학회로 자동 지정될 수 있도록 창립일 이후 연간 활동기간, 연간 주요 활동내역, 회비 납부 회원 수 등을 기준으로 모법에 규정을 명시하고 모법 시행에 필요한 부대사항만 시행령,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방통위 규칙에 맡겨 두면 학회의 이사 추천은 정치적 영향력 아래 종

속되고 말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 추천권을 갖는 학회의 기준을 방통위 규칙에 전적으로 위임할 경우 방통위의 전횡이 우려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치적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다수를 점한 정부 여당의 진영논리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특정 학회를 선정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 소지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 정권이 등장하면 철저하게 진영논리에 따라 정권에 유리한 학회가 이사 추천권을 갖도록 규칙을 정하거나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여기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는 학회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통위 규칙이 정한 기준으로 추천된 이사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치권력의 하수인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정치권력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를 법적 제도화시키는 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려해 봤을 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일괄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추천권을 부여할 학회의 기준, 즉 상위 3개 학회로 지정될 수 있도록 창립일 이후 연간 활동기간, 연간 주요 활동내역, 회비 납부 회원 수 등의 기준을 모법에 규정을 명시하고 모법의 시행에 필요한 부대사항만 시행령,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안 힘드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노영민 의원님 오셨습니까? 노영민 의원……

눈이 막 희미해지려고 그래 가지고……

(「노종면이요」 하는 의원 있음)

미안합니다. 노종면……

중요하면 좀 받아 적고 이러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에 대해서 중앙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인 안정상 법학박사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정상 박사의 개인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우리가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들 수가 있는데 결국은 정치로부터,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배후 조종의 가장 막강한 영향을 가졌다 해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해야 된다는 그런 지금까지 주장과는 달리 법안에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완벽화시키는, 제도화시키는 법안이라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오히려 고착화시키게 되면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법안으로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EBS 관련입니다.

교육부장관, 교총 및 전교조의 이사 추천 문제입니다.

소위 단일화 안으로 추진한다는 법안에서 기존과 같이 교육부장관 임명이 추천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교육부장관이 추천권을 갖게 되면 전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이사를 추천하게 되고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동안 EBS가 교육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또는 교육전문방송이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에게도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논리가 작용해 왔다. 그런 취지라면 방발기금 또는 일반예산을 지원하고 방송사업의 재허가권을 갖는 방통위도 당연히 이사 추천권을 가져야 된다는 반론이 성립하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일화 추진 내용에서 방통위에게 이사 추천권을 전혀 부여하지 않으면서 교육부장관에게만 추천하는 것은 이중적인 잣대고 또 모순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EBS가 교육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과 제작·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이사 선임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배제, 아예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여기는 지적을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교육단체 2명을 추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교총과 전교조가 각 1명을 추천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명시는 되었겠지만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원총연합회가 추천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추진하는 단일화 안에서 2명을, 1명 늘린 것은 보수적 성향이 강한 교총과 함께 진보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전교조에게 각각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여 이념, 성향에 따른 기계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런데 실제로 교육은 공급자인 교사와 수요자인 학생으로 구성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급자인 교사단체에만 이사 추천권을 주면서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보호자인 학부모단체에는 이사 추천권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게 모순이다라고 봅니다. 교육 관련 교사 중심의 이익단체인 교총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잘못된 관행이다라고 여기서는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교육방송이라는 특징에 걸맞게 교육 공급자와 수요자 대표가 추천하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교육단체와 함께 학부모 대표단체에게도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국회 추천 몫을 줄이거나 교육부장관 추천 몫을 제외하는 대신 일정한 조건을 갖춘, 일정한 조건이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교육 분야 활동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4조로 명시가 돼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학부모 대표단체가 2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단체도 이게 학부모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대표단체도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방통위의 임명제청에 의한 대통령 임명의 문제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안에서는 이사 후보 추천 후 방통위가 임명제청권을 행사하여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정치조직으로 비판받고 있는 방통위가 이사 임명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여 자칫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임명을 위한 제청 자체를 거부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통위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이사 임명제청권을 박탈하고 각 추천권자가 이사 후보를 추천하면 바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공영방송 이사 구성과 이사회의 역할을 보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민주당 김우영 의원님하고 서영교 의원님 법안을 참고로 해서 지적을 해 놨습니다.

방송 3법 Q&A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자문자답해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과 관련한 궁금증, 문제점들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문자답을 통해서 조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방송 3법은 양당의 합의로 이끌어 낸 법률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3법은 과방위에서 계속해서 논의된 사항은 맞기는 맞습니다. 꾸준하게 이야기가 되어 왔던 사안인데, 그런데 합의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전제로 이렇게 올려진 것은, 그 결과물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민희 위원장님이나 김현 법안소위원장님 등 다수가 사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각자 정리된 안을 바탕으로 사전 조율 없이 처리된 법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민주적 절차가 좀 부재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방송 3법은 수차례 검토하고 논의된 내용으로 절차적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회의 일정이라든가 내용 이런 부분들이 좀 일방 통보하는 식으로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조금 무리하게 이야기된 것이 아니냐. 분명히 수차례 검토하고 논의된 내용에 신장식 의원님 안이나 노종면 의원안이 추가되면서 새롭게 논의해야 될 내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YTN, 연합뉴스 등 보도전문채널에도 시청자위원회 구성을 편성위원회의 합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추가됐는데 이것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송 3법은 두 번째 법안소위를 열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진행된 법안소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7일 열린 과방위 제2소위도 하루 전에 기습적으로 회의 개최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전에 과방위 행정실조차 존재를 몰랐던 이런 단일화 문건 가지고 민주당 통합 대안이라고 논의를 제의했고 강행을 했습니다.

당시에 국회법상 거쳐야 할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대체토론 이런 게 사실 무시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과정에서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이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일이다라는 경고까지 했던 부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후에 또 두 번째 법안소위도 마찬가지로 하루 전에 통보가 됐고 당일 오후가 돼서 방송 3법 검토보고서가 배포되고 몇 시간 뒤에 법안소위를 강행했던 그런 촌극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방송 3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이번 방송법안은 크게 볼 때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권한의 다변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장추천위원회 추가 도입과 의무화, 그리고 세 번째는 보도전문채널사업자에 대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시 노동조합과의 합의 의무화, 네 번째 편성위원회 구성의 의무화와 처벌 조항 신설, 그리고 다섯 번째 시청자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자의 확대, 여섯 번째 지상파·종편·보도전문

채널에 대한 시청자위원회 구성을 편성위원회 합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 글자 그대로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이라든가 기자협회, PD협회가 사 측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편성권을—기업으로 치면 경영권이겠지요—행사하고 이사회에 대한 강력한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 방송 3법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인가? 공영방송의 경영권을 특정 세력에게 넘겨줄 수 있는 우가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의도로 생각한다면 권력 유지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로서 위헌 소지가 다분한 그런 법이다. 실제로 겉으로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민주적인 발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소위 민노총 언론노조라든가 특정 세력과 결탁해서 공영방송을 계속해서 장악해 나가겠다는 그런 아주 치밀한 설계도가 그려져 있는 걸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종편과 보도채널 등 상법상 주식회사인 민간방송사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법으로 강제를 해 놓은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결국 특정 세력이 보도·편성·제작, 경영 전반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 명백한, 헌법에 보장되는 언론·출판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매우 강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공영과 민영을 떠나서 자칫하면 대한민국 방송미디어산업 전체를 통제·관리할 수도 있는, 그런 시도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은 오히려 야당에 유리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행 이사 추천 제도에 문제가 없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를 했습니다. 밝혀 왔고요. 오히려 대안을 마련하고 반박할 경우 지난 1987년 방송법 개정 이후에 정당의 직접적인 공영방송 임원 인사개입 금지 원칙이 무너지게 돼서 현행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통합안처럼 KBS 이사회 이사 전체 수가 15명이고 국회 추천 몫이 6명으로 늘어난다면 5분의 3 특별다수제하에서도 9명의 친민주당이나 친민노총 이사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다수제 시행과 상관없이 KBS의 즉각적인 사장 교체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MBC의 경우에도 이사 수를 13인으로 늘리는 대신 민주당 추천 3명, 임직원 추천 2명, 현 민노총 출신 사장이 임명한 시청자위원회 추천 2명, 학회 추천 2명, 민변 추천 1명까지 모두 10명 이상을 특정 정당의 이사들 또 조직의 이사들을 추천할 수 있게 돼서 특별다수제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주장을 합니다.

특별다수제를 넘어서 이사 투표 비율이 5분의 3이라고 할 때 13인 가운데 8명만 찬성해도 사장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해서 국회 5인을 국민의힘 3, 민주당 2의 비율로 나눠 가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보수 성향의 이사는 3~4인으로 그치기 때문에 보수 정당은 총선에 이겨도 MBC 대주주 이사회 장악은 힘들고 특별다수제를 활용해 진보 진영의 사장을 막는 일조차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송 3법 가운데 공영방송 이사 추천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은 여야의 추천을 받되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들의 협의를 거친 투표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기본적으로 합의를 통한 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야 추천 비율을 KBS의 경우 7 대 4, MBC의 경우 6 대 3으로 유지하면서도 정당의 직접적인 공영방송 추천을 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송법은 교섭단체인 정당이 KBS의 경우 6명, MBC와 EBS의 경우 5명을 추천하고 현재의 의석 비율에 따르면 여당인 민주당이 KBS에 4명, MBC와 EBS에 3명의 이사를 추천하여 파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 추천 이사가 이사장을 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추천 단체의 배정 이사 수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치적 입김과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KBS와 MBC에 전달될 공식적인 통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방송법 제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개입할 수 없다라는 원칙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노조, 임직원, 변호사단체, 학회 등에 주는 건 국민 추천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주창해 온 정치적 이익단체이고 특정 정파와의 친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 MBC본부하고 민주노총 언론 EBS지부는 교섭대표노조로 직원의 과반을 노조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원 추천권 2명을 직원의 대표인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이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강성 민주당 성향인 각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소중한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KBS 3명, MBC 2명 부여하는 것 자체가 정당성을 입증받기 어렵다.

변호사단체의 경우도 두 개의 변호사단체가 각 1명씩 이사를 추천하고 있는데 사실상 민변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 단체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서부자유변호사협회나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나 이런 보수적 성격을 갖는 변호사단체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이 정치적 좌우 균형을 막는 기계적 균형이 아니냐라는 것인데, 무조건 민변만 들어가도록 법제화하는 것은 공영방송 이사진이 정치적 편향성을 띠도록 하는 법제화 시도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학회는, 규칙에 따르면 3개 학회는 친민주당 성향의 방송학회, 언론학회, 언론정보학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들 3개 학회가 합의하여 이사를 추천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객관성과 형평성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시청자위원회입니다. 기존에 KBS와 MBC 사장이 시청자위원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매우 편향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청자위원회가 시청자 입장에서 제대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게 보편적 시각입니다.

다음에 편성위원회,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 신설 등은 오히려 방송환경이 공정해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방송사업자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와 심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편성위원회를 통해 방송편성책임자의 선임과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을 하도록 하고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의에 있어서 반영하고 벌칙 규정 및 과태료 규정을 통해 의무 이행을 담고 있습니다.

화장실 갔다 와도 됩니까?

○의장 우원식 예.

○이상휘 의원 죄송합니다.

생리적인 것은 참 극복하기가 힘듭니다.

(「너무 빨리 오셨어요」 하는 의원 있음)

노종면 의원님 준비하시지요.

(○노종면 의원 의석에서 — 좀 더 하세요.)

더 하라고요?

이것 읽고 제 개인적인 생각 이야기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방송사업자의 편성위원회 설치와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아, 이거는 읽었네요.

(「계속 읽으셨어요」 하는 의원 있음)

좀 진지합시다.

민주당 안을 통해 관련 의무가 신설·강화되는 대상은 텔레비전 방송을 행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30개, 종합편성PP 4개, 보도전문편성방송사업자 3개로 이들 사업자는 노사 동수 각 5인씩으로 구성된 10인의 편성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편성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방송편성규약을 제·개정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방송 운영의 자율성, 방송사업자의 인사권, 경영권 등이 침해받을 수 있으며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사업자의 권한 침해나 과도한 규제가 될 수가 있고 상법상 주식회사인 보도전문PP에 대한 엄격한 규제 시 법률의 형평성 저해가 우려됩니다. 기업 경영의 자유 침해 등 과잉 입법 소지와 함께 이사회 권한 및 주주 재산권 침해 소지도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보도전문채널은 사 측 5명, 취재·보도·제작·편성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명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노조나 기자회, PD협회가 추천하는 5명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조항의 신설 및 강제화는 언론노조의 약진과 함께 사내 세력의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노총·언론노조가 편성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방송 내용에 개입하는 것은 방송법 제4조 2항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방송편성에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의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방송법에 따라서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편성규약을 마련해 공표하고 있는데 MBC와 KBS SBS뿐만 아니라 TV조선 채널A JTBC MBN YTN 등은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 운영 의무화는 방송의 공정성을 확대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방송법 개정안은 기존의 종편, 지상파, 보도전문채널, 홈쇼핑 채널에만 의무화하고 있던 시청자위원회 운영 의무화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까지 확대해서 규제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편성뿐 아니라 채널의 구성과 운영에까지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요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지상파와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편성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시청자위원을 선정하려면 편성위원회에 영향을 끼치는 민노총, 언론노조와 먼저 합의해야 하는 다소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청자위원회의 방송사 이사 추천권을 민노총 언론노조에서 행사하게 돼서 결국 방송

사를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뜻이며 채널의 구성과 운영에까지 간섭하게 됨으로써 진정한 노영방송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민노총이 연대하고 있는 유관단체 인사들만 대거 시청자위원으로 선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경과규정에 따라서 기존 사장을 임기 내에 해임이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부칙 2조입니다. 부칙 2조에서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는 새로운 방송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로 구성해야 하고 이사장과 이사, 한국방송공사 사장과 부사장, 감사는 개정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여 3개월 이내에 KBS 사장 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칙 3조에서는 보도전문편성채널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적고 있는데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책임자의 선정이 새로운 방송법에 의거해 시행되어 새로운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만 기존 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서 기존 사장은 후임자 선정 시 바로 해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의 시행은 방송환경을 공정하게 바꾼다라는 그런 반론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사 사장 선출 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즉 사추위지요—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기 만료 90일 전입니다. 그 사추위는 성별, 지역, 나이를 고려해서 일반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해 구성하고 100명 이상의 재석으로 개의할 수 있습니다. 또 3인 이하의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추위가 사장을 추천하면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별다수제인데요.

그러나 보도전문채널사업자의 사장추천위 구성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교섭대표노조가 대부분 민노총 언론노조인 상태에서 사장 선임 과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은 노사 분리의 원칙을 깨는 노영방송화의 길이고 과도한 영업 자유 침해로 경영권의 본질을 해하는 위헌 조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에 대해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이 결정되는데 14일 이내에 의결되지 않을 경우 최고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은 너무 과도하게 정치색을 띤 후보를 걸러 내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사기업인 민영방송과 주식회사인 MBC, 보도전문채널에까지 의무화하는 것은 경영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국가가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4시간 이상, 한 5시간 정도 지금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지적하고 이 토론을 종료시킬까 합니다.

시작할 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저께, 정말 민생입니다. 철강산업이 굉장히 힘들어졌고 당진, 포항, 광양, 인천 등 철강산업을 주로 산업의 영역으로 하고 있는 도시들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 전체의 한 70% 구조가 철강산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관세 문제 등등으로 경제가 매우 어렵고 그만큼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

다. 특히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포항의 철강 같은 경우 포스코의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산 철강 제품의 덤핑부터 시작해서 국내 경기가 침하됨에 따라서 건설 경기가 죽고 또 여기에 미국 관세가 50% 유지가 되고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포항 시내 중앙상가의 공실률이 사실상 30% 이상을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생이 그만큼 급박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포항 같은 경우에 철강산업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라고 폄하할 것이 아니라 포항의 철강이 무너지게 되면 대한민국 철강산업 자체가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그만큼 먹고사는 문제가 급박해졌고 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의원님들이 다 공유하고 있고 인식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어기구 의원님과 함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일명 K-스틸법입니다. 이것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여야 의원 백여섯 분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 같이 발 벗고 나서자라는 그런 인식이 공유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여야가 협치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자리를 더불어서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신 여야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런 법안들이 사실상 협치의 단계로 이렇게 한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또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송 3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연장선을 넘지 못하고 있고 결국은 두 번씩이나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까지 오게 된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방송 3법에 대해서 무제한토론 반대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요지는 사실상 간단합니다.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손실답험법을 통해서 17년간의 토론과 숙의 끝에 백성들이 편안하게 정책을 영위할 수 있고 손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군주적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여론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고 협의와 토론과 숙의 과정을 대단히 큰 비중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우리가 본받을 가치가 있다. 비록 600년 전이었지만 세종은 그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마음들을 실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2025년 지금 국회의사당에서는 600년 전 군주제 조선시대 세종이 했던 부분들을 우리는 닮아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중한 역사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고 있고 잊고 있다는 데서 되게 우리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같이 공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송 3법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법, 즉 국민의 알권리, 국민에 대한 여론 이런 것들을 중차대하게 결정하고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그만큼 숙의와 토의를 거쳐서 이 법을 만들어 왔었느냐 그리고 정리를 했었느냐, 여기에 정파적 이익이라든가 개인적 이익이라든가 다른 어떤 연유는 없었던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언론이 갖고 있는 의제설정 기능이 특정 정파나 특정 사람

과 특정 조직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좌우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가져가야 될 방향 자체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언론이 가지는 어젠다 세팅 기능이 그런 정파에 의해서 다르게 해석이 되고 정확한 사실이 아닌 왜곡된 사실로 보도가 되고 그것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사항으로 변질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에 대한 역사적 책무까지도 져야 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미디어 시대가 많이 달라지고 있고 이미 AI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다매체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것은 공영방송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만 가지고 있는 그런 원시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세금을 내고 이끌어 가고 있는 공영방송이 그 범주를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다매체 시대와 AI 시대를 겨냥해서 과연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가치와 정보에 대한 전달 매체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원시적으로 지배구조를 누가 이끌어 갈 것이고 이사 수를 어떻게 늘린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영방송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옭아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이익과 목적을 위한다 그러면 과연 방송이 지금 정보의 전달 기능을 앞으로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손바닥만 한 스마트폰에도 미치지 못하는 KBS와 MBC의 기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로 봤을 때 그런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본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무대에 우리가 그냥 혼자서 추고 우리 스스로가 박수 치고 혼자 하는 1인 연극을 보고 만족하는 그런 형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실에서 방송 3법에 대한 이 원시적인 논의가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우리 공영방송이 국민의 알권리를 성취하는 헌법적 가치를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이 공영방송이 나가야 될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야 되고 법이 필요하면 그 방향대로 법을 맞춰 가는 것이 다매체 시대와 AI 시대를 대비하는 공영방송의 생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미디어 시대가 급변하고 첨단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아직도 지배구조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반성해야 되고 그것을 정파적 이익이나 개인적 목적이나 조직의 이익으로 대변하고 그것을 활용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이상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노종면)

(07시08분)

○의장 우원식 다음은 노종면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부평갑 노종면 의원입니다.

오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방송과 관련된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왜 이런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앞에 토론하신 분들 긴 토론 내용을 제가 전체를 다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순서 기다리면서 요지는 거의 다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는 이 국회본회의 상황 이것도 방송이고……

반대토론 하고 있는 분들의 반대토론 내용은 유감스럽게도 제 기준에는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필리버스터 방송법 개정안 찬성토론을 하면서 이 법의 목적이기도 한 방송의 정상화, 상식의 회복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시간에 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온 여러 가지 토론 내용의 전제가 틀리고 사실관계 오류,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교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 하나하나 교정하다 보면 시간이 아마 오늘 오후 4시 토론 종료가 예상되는 그 시점까지 제가 이 자리 지키고 있어도 모자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토론과 설득이 무의미한 수준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토론이, 제가 하고자 하는 설득 노력이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가닿을까 이런 자괴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시간 버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필리버스터 이 시간을 토론으로 생각하지 않고, 설득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점거 투쟁으로 규정합니다. 제 스스로 이것도 하나의 싸움이고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에서 차지하고자 하는 국민을 만나는 시간을 제가 단 1분이라도 더 빼앗아야겠다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앞서 세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협치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미디어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럴 시점이라고 진정으로 생각합니까? 방송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언제부터 이루어져 왔는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 차이가 없더군요. 입만 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논의를 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왜 지금 하냐고 해요. 앞선 그 말들이 성립이 되면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게 논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 시기는 우리가 아무리 회피하려고 해도 회피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휘몰아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자가 대한민국 정치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우리 사회를 어떤 수준으로 망가뜨렸는지. 윤석열 혼자 했습니까?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끝났습니까? 이제 수사가 본격화되고 이제 법의 심판을 가해야 할 그런 시점에 함께 정권을 이뤘던 사람들이 세종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 입에서 떨어지나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진심으로 우리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당 할 것 없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12·3 비상계엄 그 내란의 시간을 우리 국회가 함께 극복해 가는 과정입니다.

왜 방송법을 개정하냐고요? 현행 방송법 체계에서 국민의힘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무엇을 했는지 정말 하나하나 따져 봐야 됩니까? 21대 국회에서 과방위원장을 가져간 그 순간부터 어떤 계획을 짜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무슨 일을 벌였는지, 어떤 일들이 대한민국 방송계에서 일어났는지 정말 하나하나 다 소환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미 국민들은 다 잊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을 바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 어떤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1년이면 다 까먹는다고 생각하고 국민들 모를 테니까 지금 이 시점에 협치해야 된다, 대화해야 된다, 토론해야 된다, 설득해야 된다 이런 우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방송법을 개정하는 주체가 우리 민주당과 또 함께하는 여러 정당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송법의 실질적인 개정 주체는 윤석열이고 국민의힘 그들이 만들었던 그 정권, 그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방송계에, 우리 사회에 끼쳤던 그 해악이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추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자신들이 얼마나 무도하고 집요하게 방송을 장악하려 했으며 또 망가뜨렸는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멀쩡하던 보도전문채널, 공기관들이 대주주로 있던 그 YTN이 하루아침에 유진이라는 사기업에 넘어갔습니다. 구성원들이 원했습니까? 대주주가 원했습니까? 안 팔겠다는 대주주 팔 비틀어서, 목 비틀어서 파는 쪽으로 입장 정리하게 하고 지분 매각 주관사까지 선정됐는데 갑자기 주관사가 바뀌고 대주주 둘이 각각 따로 팔아야 정상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합쳐서 통으로 매각하고.

그것뿐입니까? KBS 대한민국 제1공영방송 사장에 윤석열의 술친구를 갖다 앉히고 그 무능하기 짝이 없는 박민이라는 KBS 사장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대국민 사과입니다. 하다 하다 KBS의 생명 줄과도 같은 수신료마저 분리징수가 가능하게 만들었던 장본인 그 자가 어떻게 KBS 사장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 바통을 누구에게 넘겼습니까? 이진숙 방통위 2인 체제가 KBS 이사진 갈아 치우고 그 결과로 세운 박민의 후임 사장이 누구입니까? 국민들은 그저 '파우치 박'이라고 부릅니다. 김건희가 받아 든 명품백을 명품백이라고 하지 못하고 조만한 파우치라고 했던 그 자가 그 한마디 비굴한 충성으로 KBS 사장이라는 자리를 덜컥 받아 챙겼습니다.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MBC도 집어삼키겠다고 이사장 내쫓고 이사들 갈아 치우고 별의별 짓을 다 했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나마 법원에서 제동을 걸어서 MBC를 장악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방통위 2인 의결이라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방통위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기상천외한 방식을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참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방송계에 아니,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이런 공직자들, 무슨 계주도 아니고 어떻게 방통위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을 관통하는 3명의 위원장이 이어서 그런 행태를 벌일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어느 한 개인이 한 일입니까? 윤석열 혼자 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진숙 위원장 혼자 했습니까? 거대한 세력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방통위의 2인 의결로 축출됐던 인사들, 방심위원장, 방문진 이사장, 방문진 이사들, KBS 사장, KBS 감사, 그나마 법원이 상식을 확인해서 일부는 자리로 돌아가고 일부는 명예라도 회복했습니다.

방통위와 함께 방송장악에 앞장섰던 류희림의 방심위 어땠는지 여러분들 정말 기억이 안 나십니까? 국민의힘이 그토록 국회에서 방어해 마지않았던 류희림…… 국민의힘이 입만 열면 편파 방송, 불공정 보도의 대표 사례로 언급했던 김만배 녹취록 보도, 그런 방송사들의 윤석열 정권 견제 보도, 비판 보도 족족 때려잡았지요, 방심위 심의라는 이름으로. 소송만 30건이 걸렸습니다. 30건 모두 류희림의 방심위가, 2인 의결의 방통위가 졌어요, 30전 30패. 이런 수치가 쌓여 갈 때 그러더군요, 집행정지 처분일 뿐이라고. 본안 판결만 벌써 17건이 나왔습니다. 본안 판결 17전 17패, 국가 세금으로 방송 때려잡겠다고

나선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사장 바꾸고 경영진 교체하고 방송장악하려 한 일 있었지 않느냐, 이제는 좀 제발 그 고리를 끊자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정도의 차이는 커도 너무 컸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의 이 무지막지함은 유신정권과 5공에 못지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때보다 저항이 더 심했을 테니까 더 정교해지고 더 집요해지고 더 비열해졌습니다.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이런 데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던 집권 여당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수장인 윤석열이라는 자가 내란까지 일으키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방송법에 반대하는 이 모습, 국민들께는 내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 정말 모르십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을 향해서 내란 세력이라고 규정하는 게 개인을 향해서 그러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아직도 전한길·전광훈 같은 그런 극우세력을 끊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는 것이라고는 이해 못 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되면 우리가 지금처럼이라도 동료 의원, 동료 의원 할 수 있겠습니까?

방송의 자율성, 언론의 독립, 헌법적 가치고 우리 법률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시는 국힘, 국민의힘 의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 자율성은 대주주의 자율성이더군요. 어떻게 법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몰각돼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는 국회인데. 그리고 끊임없는 노조에 대한 적대시, 악마화…… 저는 잠깐이었지만 무슨 공안사건 발표하는 줄 알았어요. 민주노총이라는 정식 약칭이 있는데도 왜 굳이, 거의 예외 없이 민노총이라고 합니까? ‘민주’라는 이름을 ‘노조’ 앞에는 못 붙이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진심을 다해서 얘기도 여러 분께 해 봤어요. 그런데 안 고쳐집니다. 노조는 민주노총일 수 없다. 내가 불러 주느니……

(「요새 애칭으로 다 그래요. 한국노총도 한노총이라고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냥 한국노총이라 해 주세요.

(「국민의힘도 국힘이라고 하시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약속합시다, 앞으로. 약속합시다, 그 해당 주체에서 불러 달라는 대로 적어도 국회의원은 불러 주는 것으로.

(「그것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런 상식을 찾아서 갈 수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는 동료가 맞습니다. 그런 상식을 하나하나 확인해 갔으면 좋겠어요.

노조에 대한 거부감, 심한 경우는 악마화, 제 얘기가 과장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너무 반복되고 너무 강하게 노조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노동조합을 할 권리는 헌법 가치입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노조를 선택하든 그 역시 헌법과 법이 보장합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들은 각각의 경험에 따라, 판단에 따라 비판도 할 수 있고 입장을 가질 수 있지요. 그런데 적어도 공당이라면 합법의 영역 안에 있는 단체들을 존중해야 하고 특별히 노동조합에 대해서 헌법이 그 권리를 보장하는 이유 정도는 이해하고 공적인

발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적어도 두 가지만은 힘주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송 독립과 방송 자율성의 진정한 법적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노조는 공직자들이 이렇게 대놓고 적대시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방송법을 개정하게 된 제 개인의, 개정에 나서게 된 제 개인의 정무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방송법 개정을 매우 서둘러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온 국회의원입니다. 대선이 기정사실화되고 정권교체가 임박했다는 그런 판단이 꽤 강해졌을 때는 마음이 더 급해졌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민주당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좀 더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권력의 속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개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판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고요. 제도란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적어도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정치세력도, 어떤 권력도, 그것이 정점에 있는 권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혹을 느끼고 욕심이 생겨도 KBS 사장 마음대로 못 뽑습니다. 예전처럼 못 뽑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갖은 노력 끝에 YTN 팔아 치우고 KBS 사장 바꾸는 데는 성공했지요. 지금 구조하에서도 꼬박 1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MBC는 장악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법이 되면요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정치 후견주의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워낙 논점이 뒤틀려 있어서 제가 그 논점을 바로잡는 데 시간을 허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KBS 15명 이사 가운데 국회가 추천하는 인원이 6명입니다. 의석 비율을 대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4명이 될 것이고 국민의힘이 2명이 될 겁니다. 민주당이 4명을 기지 삼아서, 전진기지 삼아서 사람들을 막 설득해요? 그래서 열다섯 명 조직에서 우위를 점해요? 불가능하진 않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같아서 다수가 되는 것인지, '야, 너 내 말 들어. 나는 집권당에서 추천한 이사야', 어느 쪽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의석 비율이 대입되기 때문에 총선 결과에 따라서 추천 인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3명 내지 많아야 4명, 그 인원으로 사장을 뽑는 것도 아닌 이사회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구조에서는 MBC도 바뀌어야 정상이었어요. 안 되는 겁니다.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은 이사들이 뽑나요? 100명 이상의 국민 참여형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가동돼야만 가능합니다. 거기서 2명이든 3명이든 추려서 이사회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그 4명이 입김을 발휘해야 원하는 KBS 사장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닌 것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법을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의 권한 내려놓기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세요. 최민희 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통령이 내려놓겠다라는 의지 없으면 이 법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리 통합 법안, 민주당의 통합 대안이 공개됐을 때 이거 대통령이 반대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민주당을 믿지 못한다는 말, 물론 저는 우리 당을 자랑스러워하고 신뢰하지만 권

력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대선이 임박해 오니까 사적으로 이루어진 대화 가운데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KBS 사장도 임명 못 하게 되는 것 아니야? 방송법 꼭 해야 돼?'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실제로. 그런 거 이제 하지 말자는 겁니다. 물론 그분의 말씀은 저는 농담으로 들었습니다만 워낙에 권력의 속성을 저는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농담으로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권력 잡고 이러저러한 일 하다가 시간이 흐르다 보면 왜 욕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내에 권력으로서의 욕심이 꿈틀대기 전에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윤석열 정권에 책임이 있다 한들 지금 현재 국회를 함께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협의를 하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 과방위에 속해 있는 국민의힘 위원님들 그리고 그 위의 지도부, 방송법에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윤석열이 저지른 일 수습하느라, 내란이 벌어진 이 상황에서 자기 당 수습도 못 하는 상황에서 방송법에 정말 관심 있으셨어요? 그런데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다 갖고 계시지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 반영 법률안 개수를 보십시오. 19건입니다, 19건. 국민의힘은 한 건도 내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마지막 의결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도 법안의 내용조차 숙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위만 열리면 간사 남고 다 나갔어요. 무슨 협의를 합니까? 실제로 소위원회장에서, 전체회의장에서 국민의힘 간사께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현행법이 입장이다. 대안 자체가 없다. 그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본래 하고 싶었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려 보겠습니다.

방송법, 이 법에는 방송 자율성, 방송의 독립 개념이 아주 친절하고 쉽게 규정돼 있습니다.

방송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를 읽겠습니다.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인다라는 것이 방송법의 대전제요 목적이요 존재 이유입니다.

이걸 우리 방송 현업에서는 이 가치를 보도와 경영의 분리라고 표현합니다. 수십 년간 정착되어 온 방송계의 대원칙이 보도와 경영의 분리입니다. 제대로 지키는 방송사가 있고 그렇지 못한 방송사가 있을 뿐 현업자 누구도 보도와 방송, 보도와 경영의 분리 원칙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돈 있어서 방송사를 소유하고 있다 한들 그것이 공공기관이든 사기업이든 보도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우리 경영계에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를 통해서 경제민주화, 경제 구조의 선진화를 이루어 가는 과정입니다. 방송계도 마찬가지예요. 보도와 경영의 분리, 이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부탁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수십 년을 지내 왔습니다.

제3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과 보도를 분리하는 이유는 시청자, 다시 말해서 방송으로 만나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대주주, 회사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라는 겁니다.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방송과 보도

의 분리라는 겁니다.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송법은 규정합니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제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 법에 따르지 않고서는 비록 행정기관이라도 간섭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제4조 3항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그 이름을—방송시간 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대주주가 방송편성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별도의 방송편성책임자를 두고 심지어 그 편성책임자의 이름을 매일 공표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책임과 지위 보장해 주라는 겁니다.

여기에 개정법률안은 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할 때 편성위원회의 제청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에요. 편성위원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4항 이 부분도 개정 조항이긴 합니다만 취지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기존에는 취재·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세분화해서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것은 이미 방송법에 있던 내용입니다. 방송편성규약 만드는 게 편성위원회예요.

이렇게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편성규약을 만들라고 법에서 규정했는데 들어 먹지를 않기 때문에 이 편성규약을 만드는 편성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한 겁니다. 우리 현업의 방송을 영위하는 경영자들의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법이 좀 더 구체적이고 친절하게 편성위원회를 규정하고 편성규약을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원래 있던 법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현실화한 겁니다.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에요.

5항 ‘편성규약 제정 또는 개정하려 할 경우에는—지금 말씀드린 대로—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습니다.

개정된 내용 편성위원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의2가 새로 추가되어 들어갔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를 둔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게 될 방송사들 가운데 그나마 제대로 된 방송사들은 이미 편성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걸 다른 방송사들도, 법을 지키지 않는 방송사들도 지키게 하려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거예요.

제가 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여러분들 다 아시는 KBS·MBC·EBS·SBS. 2호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여러분들 아시는 종편 4사 TV조선·채널A·MBN·JTBC. 3호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연합뉴스TV·YTN. 이런 방송사들 편성위원회 둬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안 하니까 하라는 겁니다.

편성위원회가 그러면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를 쥐락펴락 경영에 간섭하고 그러는 무슨 경영위원회 같은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이게 경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방송보도와 경영은 엄격하게 분리돼야 된다는 원칙하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데.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방송프로그램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방송편성규약에서 정하는 사항', 여기에 경영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어디에 존재합니까?

편성위원회 규정 제3항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명은 사업자, 경영진이 5명을 선임합니다. 나머지 5명은 종사자들.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더 반복할 것 같은데 방송종사자들이라고 표현된 부분을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지없이 노조로 등치시켜요. 방송종사자들 그분들이 노조에 가입하면 그분들은 노조입니까, 종사자입니까?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노조인가요? 그분들의 종교가 다 같으면 그분들의 본질은 종교단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법에서 종사자라고 한 것은 구성원들, 실제로 방송법이 보장하는 자율성을 향유해야 하는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주체입니다. 그들에게 권리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전 법률, 현행 법률에도 편성규약 만들 때 이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라고 돼 있어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굳이 편성위원회에 5 대 5 동수로 인원 보장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편성위원회를 자체적으로 두고 있는 방송사들이 꽤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방송사들 여지없이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진으로 넘어간 YTN도 5 대 5예요. 이 법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이게 되면 회사가 망해요?

다시 방송의 공적 책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5조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사주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공동체를 구성하는 우리 시민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공존 원칙으로 삼는 민주적 기본질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라는 겁니다. 왜? 방송은 공기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주주가 누구든 방송은 공기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받고 승인받고,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거예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해서 제6조가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정치권력에, 자본의 이익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선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해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을까? 꼭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이것들이 맞서고 있는 가치가 바로 주주의 이익입니다. 권력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향으로 방송법을 강화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방송은 그 자체로 공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가 존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허가부터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분을 돈 있다고 마구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일정한

정도까지밖에 법이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취득해도 공적인 승인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걸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제8조입니다, 소유 제한. '방송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K·M·S), 종합편성(종편 4사)·보도(YTN 등)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40% 지분 규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집단, 대기업 그 계열 회사의 신문, 뉴스통신 이들은 지상파방송의 지분은 10%까지밖에 소유를 못 하고요, 보도전문채널은 3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분 규제 조항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9조에서는 허가·승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전 허가입니다. 위성방송사업—스카이라이프—전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유선방송사업—케이블방송 사업자들—과기정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편·보도전문채널,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 사업자들은 허가를 받으면 재허가 심사를, 승인을 받으면 재승인 심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서 공기임을 끊임없이 확인받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분을 획득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사업 영역에 따라서 과기정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주주로서 자격이 있음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KBS 사장을 어떻게 뽑지', 'KBS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지' 저라면 매우 궁금했을 것 같은데, 몇 달 동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께서 다 볼 수 있게 발의도 하고 수시로 논의하고…… 우리 과방위는 대선 기간에도 거의 매주 모여서 논의했어요, 이 법이 중요하고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이제 와서 이러니저러니 말씀하십니다.

앞서서 어떤 박사님의 논문을 매우 비중 있게 반복적으로 국민의힘 의원께서 말씀하셨어요, 금과옥조로 여기시나 생각될 정도로.

그런 논문들이 논의 과정에 이미 다 들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안정상이라는 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출신이에요. 얼마나 국민의힘에 자체 논리가 없으면 저 논문을 들고, 우리가 이미 다 검토해서 반영할 부분 반영하고 안 되는 부분 안 된다고 설명하고……

또 일전에 마침 제가 안정상 교수하고 국민의힘의 최형두 의원하고 한 토론회에 나가서 이런저런 토론을 하면서 안정상 위원이 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본인 입장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방송에서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반대토론 하러 나오셔서 이 법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지한다고 한 분의 논문을 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필리버스터를 왜 하고 계신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마 아직도 구체적으로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0조(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이

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둔다'. 이게 사추위라고 줄여서 부르는 그 조직입니다.

'이 경우 각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뒤에 별도의 규정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라는 이 조직을 두도록 강제하는, 이런 강제를 받게 되는, 의무를 부과받게 되는 방송사는 한국방송공사(KBS), 그다음에 방문진법에 따라 설립된 MBC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 3개 방송사입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보도전문채널에 대해서도 사장 추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만 국민참여형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100인 이상의 이 조직을 두는 방송사는 지상파 공영방송사들입니다. KBS, MBC, EBS, 이 3개사입니다.

그러면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채널은 어떠한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는 다음 항에 따른, 다음 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추위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고요 지금 보도전문채널은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 사업자는 이들 가운데에서 1명을 사장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보도전문채널에 적용되는 사장추천위원회는 어떠한가? 이 제도를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서 설치하고 운영하라라고 제20조 3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노조가 사장을 뽑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아까 제 자리에 앉아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제도는 YTN 같은 경우에 20년이 넘었습니다. 멀쩡하게 노사가 합의해서 잘 꾸려 가던 걸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없애 버린 거예요. 이걸 다시 복원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제도를 만드는데 왜 노조랑 합의를 하냐고요? 이미 대한민국에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들은 전부 노사가 합의해서 단체협약이라는 걸 만들어요. 단체협약은 법에 우선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회사의 제도를 만들어 갑니다. 어려울 수 있지요. 하다가 안 되면 파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노조랑 합의해야 하니까 안 된다? 교섭단체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 법에서 가지고 있는, 법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사원들하고 협의를 하려면 누구랑 합니까? 그때 사원 대표를 따로 뽑아요?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인원, 구성 방식, 후보자 추천 기한 등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에 정한 사항 외에는 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이게 보도전문채널의 사장 뽑는 방식의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노사가 알아서 만들어 내는 거예요.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겁니다.

연합뉴스TV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대주주가 연합뉴스라는 통신사입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을지재단도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어요. 비록 대주주가 있는 회사지만 국민들께서 많이 보시는 보도전문채널, 전국 방송이고 시청률이 아마 YTN과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사장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합뉴스 통신사 사장이 겸직하고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연합뉴스TV의 구성원들이 대주주 회사의 사장이 자동적으로 본인이 몸담아 일하는, 자랑스러워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을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장이 겸직을 하는데.

연합뉴스의 보도책임자는 임명동의제를 노사 합의에 의한 단체협약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합뉴스TV는 사장이 같은데도 그 제도를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거부해서 연합뉴스TV에는 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21조(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 방송사업자는 독립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보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어떻게? 제2항 '제1항에 따른 보도책임자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자가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한다'.

보도책임자·제작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다수의 방송사들이 시행해 왔고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잘 시행되던 걸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일방적으로 없애 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례가 YTN과 KBS입니다. 사장공모제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법에 이런 것들을 규정해서 '그동안 당신들이 하던 것 정권이 바뀐다고 뒤로 후퇴하지 말고 계속하시오'라고 보장해 주는 겁니다. 보도와 경영의 철저한 분리라는 방송의 대명제를 업계 스스로 구축하고 정착시켜 나가는 데 권력이 훼방을 놓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방송법은 KBS에 관한 규율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KBS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또 사장을 어떻게 뽑는지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2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5명으로 구성한다'.

11명을 15명으로 늘린 거예요. 왜 15명이냐? 절대적인 정답이 있겠습니까. 21대 때 발의했고 22대 들어와서도 유지했던 법안은 20명을 넘었지요. 이 인원에 대해서 과방위에서 잠깐 토론한 적이 있어요. 그때 국민의힘 위원께서 '15명 정도면 모르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뭐 그것 때문에 15명으로 한 건 아니에요. 이 정도 수준에서 일정한 정도로 숫자는 늘려야 특정한 세력에 의한 지배, 영향력 행사를 막을 수 있겠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늘려 버리면 이사회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적정한 중간 수준을 찾기 위해서 머리를 맞댔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숫자가 15입니다. 14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16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붙들고 늘어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제약합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권한을 제약합니다.

3항의 1호 '국회의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6명', 이게 바로 우리가 국회 몫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교섭단체별 추천인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아까 결론을 말씀드렸지요. 지금 의석 비율을 대입하면 민주당 4명, 국민의힘 2명을 추천하게 됩니다. 정원 13명인 MBC는 총 5명의 국회 추천 몫이 보장되는데요 민주당이 3명, 국민의힘이 2명 추천하게 됩니다. 한 정당이 쥐고 흔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각 회사에 있는 시청자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할 수 있어요. '공사(KBS)의 시청

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KBS에는 지역 총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방송국에 설치된 시청자위원회를 포함해서 이 시청자위원회 주체가 2명의 이사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공사의 임직원 과반수 이상이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제작·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 방송 구성원들이 투표를 해서 추천을 하면, 과반 득표를 하려면 노동조합에 속해 있는 사람의 지지도 있어야 될 거고 아닌 분 지지도 있어야 될 거고, KBS에 지금 노동조합이 3개 이상 있습니다. 어느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구성원, 임직원 얘기만 나오면 노조로 등치시킵니다. KBS에 대형 노조가 둘 있어요. 그 규모가 막상막하예요. 어느 노조가 과반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 3명이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의 몫일까요? 과장입니다.

그리고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개. 이 미디어 관련 학회는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해서 방통위가 규칙으로 기준을 정하게 돼 있어요, 기준과 그 해당되는 학회를. 이게 왜 들어갔냐 하면 류희림이 선방심위 구성할 때 보니까 시민단체 추천이라고 급조된 극우단체를 추천하게 만들어서, 사실상 그것도 청탁, 청부 추천이지요, 민원사주처럼 추천사주. 그걸로 그 중요한 선거방송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별의별 심의를 다 했습니다. 그 선방심위 심의 내용도 전패예요, 소송 걸려서. 그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미디어 관련 학회는 객관적으로 이력이 확인돼야 되고 회원 수가 확인돼야 되고 활동내역이 인정돼야 됩니다.

그다음 추천 주체로서 변호사단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어디가 된다, 거기에 대해서 왜 판단을 합니까? 이 기준이 맞는지를 판단해야지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한테 결과론적으로 꿰맞추는 식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기준이 합당한지, 과정이 공정한지 그것을 보고 결과는 수용하라고 가르치지요. 이 단체를 하기로 했으면 그 단체가 속칭 듣보잡은 아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준에 문제가 있으면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야 되지요. 왜 특정 단체에 색깔을 입혀서 그 단체가 추천하면 위험해진다고 얘기합니까? 제가 볼 때는 색깔론의 함정에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전히 빠져 계세요. 탈피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인 이상으로 구성돼야 돼요. 그것도 역시 특정 세력이 쥐고 흔들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100명은 어떻게 추출됩니까? 공인된 조사기관에서 무작위 추출합니다, 연령·지역·성별 기준에 따라서. 민주당이 구성하는 것 아닙니다. 이들의 숙의·토론 과정에 민주당 개입 못 합니다. 이사들도 개입 못 합니다. 오롯이 이분들이 스스로 숙의하고 결론을 내서 이사회는 이분들이 주는 그 범위 내에서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제도 역시 KBS, MBC 다 시행해 봤던 것들이에요. 그걸 윤석열 정권이 없애 버렸지요. 방송법이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지, 방송법이 규정하는 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도 나는 모르겠다, 방송의 자율성은 돈 있는 기업하는 자들이 기업할 권리다라고 주장한다면 국회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헌법을 들고 왔습니다, 일하는 사람 근로자·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함께 의정활동 해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노조에 대한 적대감을 가감

없이 표출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다 사적인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지요. 제가 YTN 사 측으로부터 해고된 적이 있다고 YTN 사 측이 늘 나쁘다고 얘기 안 하지요. 노동조합이 어떤 특정한 사례에서 또는 특정한 시기에 누군가와 대립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노조 위원장을 하면서 어떤 분에게인가 상처를 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식, 푸는 상식 또는 주장하는 방식은 적어도 노조를 집단적으로 적대시하고 거부감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방식은 아니어야 한다, 공직자라면.

대한민국헌법 전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저는 색깔론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대표적인 폐습이라고 판단합니다.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자율과 조화의 주체는 세대이기도 하고 성별이기도 하고 지역이기도 하고 노사이기도 합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회의 균등은 정당한 권리행사에 기반합니다.

다시 첨언하겠지만 노동조합 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헌법 가치고 우리 법률의 권리예요. 이를 통해서 방송사의 구성원 개개인들이 본인의 기회로 삼겠다는데 왜 욕합니까?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왜 우리 헌법은 국민생활의 향상이라고 하지 않고 균등한 향상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사회에 힘의 차이, 돈의 차이가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극복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의 안전, 자유 그리고 행복은 최소한 헌법적 가치가 지켜지는 가운데서만 가능해진다고 판단합니다.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를 읽어 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노동조합을 통해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고 존엄을 지키겠다는데, 행복을 추구하겠다는데 이걸 적대시하는 공직자가 공직자 맞습니까?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이 기본적 인권 안에 일할 권리, 제대로 일할 권리, 일하면서 존중받을 권리가 포함돼 있어요. 이를 보장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는데 국회는 국가를 구성하는 중요한 권력기관 아닙니까? 왜 본회의장에서조차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을 적대시하고 범죄자 취급합니까? 불온세력 취급합니까?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적·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라는 권력기관이 민의의 전당 국회본회의장에 서서 국민을 상대로 노동조합이 위험하고 적대적인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11조를 정면으로 어기는 겁니다. 차별하는 겁니다.

노동조합원이라는 그 사회적 신분을 고리로 공격하고 매도하고 차별하는 행위, 더 이상 이 국회본회의장에서 용납되지 않도록 국회의장님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노조 할 권리, 양심의 영역입니다. 제가 1994년 YTN에 입사할 때 사장 면접 질문이 '노종면 씨는 합격하면 노동조합 할 거야?', 공화당과 민정당에 뿌리를 둔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한국노총에 가입하든 민주노총에 가입하든, 제1노조에 가입하든 제2노조에 가입하든 노동자들이 알아서 선택하는 것인데 그걸 왜 자꾸 규정하려고 듭니까, 그것도 국회의원이.

제32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노동조합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헌법 제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얼마나 중요하면 구체적인 권리의 내용을 헌법이 규정하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보장돼야 한다고 헌법이 판단을 했으면 이걸 굳이 여기에 적어 넣었겠어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언론인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도 제한할 수 있는데 법률이 아니면 제한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33조는 이렇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노동조합 활동이 제게는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과정이었고 지금도 뿌듯하게 자랑스러워하는 제 인생 일대의 가치입니다.

(「노조 안 할 권리도 보장해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안 할 권리도 보장해야지요.

(「싫다니까 무지막지하게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공격을 하지요」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비판하시고 바로잡으십시오. 그럴 책무가 국회의원에게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의원님의 사례를 평가할 입장에 지금은 있지 않아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특정한 사례로 일반화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120만입니다. 사업장 수가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일반화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방송사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제약하는 규정이 단 한 글자도 헌법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46조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노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일반화하고 공식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9장은 경제에 관한 규율이 있는데 헌법 제119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9조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지배 남용을 방지하는 주장입니다. 이것도 어떤 집단의 힘의 우위를 앞세운 남용 방지

가 해당이 됩니다. 그건 막아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노동조합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하면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가만 놔두지도 않아요.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럴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는 해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에서 규정된 쟁의권 안에서 행사를 해야지요. 그걸 벗어난 남용에 대해서는 법이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기업과 자본의 우위, 왜 자꾸 노조가 더 세다고 말씀하십니까? 기업과 자본의 우위를 전제로 근로자·노동자와 개인의 인권, 노동조합 할 권리 이런 것들을 함께 균형 있게 보장하라는 규정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이번에 민주당과 다른 정당들이 함께 통과시키려고 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줄여서 노동조합법이라고 하는 이 법의 개정을 두고서도 노조에 대한 몰이해, 적대감이 반영된 논거들이 횡행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떤 법안에 대해서 토론할 때 무작정 찬성해 달라 이런 게 어딨습니까? 토론해야지요. 그런데 전제가 잘못된, 사실관계가 잘못된 그런 비판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오늘 이 자리에서, 벌써 어제군요. 어제 이 자리에서 있었던 노란봉투법의 문제에 대한 지적, 그 논거를 제가 들으면서 사실관계는 바로잡고 가야 되는데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착각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무조건 노조를 나쁘게 몰아가기 위해서 저러는 건 아니겠지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은 귀족노조라고 그렇게 규정하시는 그런 노조들한테 힘 실어 주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원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청에 대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노란봉투법의 핵심 규정 내용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주장하고 노력해 온 겁니다.

원청이 언급되면 바로 그 대척점에 있는 하청, 하청의 하청 이분들과 원청의 관계가 무엇이길래 법으로 규정하려고 하는가? 원청의 지배를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하청의 하청 기업들이 자기에게 하청을 준 바로 위 단계의 하청 기업들하고는 아무리 얘기해도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청 나오라고 하는데 원청은 '나는 책임이 없어', '나는 사용자가 아니야', '협상의 주체가 아니야'. 사회적인 비용을 치를 대로 치르고 누군가 잡혀가고 그런 홍역을 치르고서야 겨우겨우 지역 사회단체나 정치권에서 중재 노력해서 뭔가 합의가 나오는데 그제서야 원청이 등장합니다, 그제서야.

제가 한번 좋게 생각해 볼게요. 법적으로는 원청인 내가 사용자는 아니니 내가 못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규정해 드리는 거예요. 당신들이 실질적인 원청 맞잖아, 실질적인 사용자 맞잖아. 그러니 책임 있게 하청 노동자들 무시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대화해라. 여기에 정규직 노동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여기 귀족노조가 왜 끼어듭니까?

귀족노조라는 극우에 가까운 보수 언론들이 만들어 낸, 제가 어떤 언론이 먼저 만들었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기 때문에…… 노조를 적대시하고 연봉 7000만 원 받는다고 귀족노조로 몰아붙이는 그런 천박하기 그지없는 극히 일부 언론의 그런 용어 장난에, 말장난에 왜 놀아납니까? 노동자는 연봉 1억 받으면 안 돼요? 연봉 1억 받는 노동자들은 헌법에 노조 할 권리가 제약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라. 이게 ILO 등 국제기구의 권고입니다. 이걸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표현 자주 쓰세요. 노동과 관련된 법제를 글로벌 스탠더드, 맞춥시다.

아마 이 부분이 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이 법은 노동조합법이에요. 법에서 규정한 대로 쟁의행위를 했을 때 그로 인해서 회사가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파업권이라는 게 주장을 하면서 실력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손해가 수반됩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에 따른 회사의 손해는 회사가 감수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상식적인 겁니다.

또 하나,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조가 저항하는, 방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이것도 노조의 배상책임 묻지 않도록 해라. 왜? 원인행위가 사 측의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파업이 지난 자리에는 살인적인 가압류 손배소가 남습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보수 언론이, 보수 권력들이, 보수 정치인들이 파업할 때 '너희는 귀족노조야. 너희는 무도한 불법 집단이야' 그렇게 몰아붙이고 때려잡은 끝에 현장에서도 경찰 방망이에 머리가 깨져서 질질 끌려가고 용역 폭력에 피 흘리고……

그러면 그러겠지요, 노조도 쇠구슬 쏘고 쇠파이프 휘둘렀다고. 그것 두둔하는 것 아닙니다. 공권력이라면, 공직자라면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왜 일방에 서서 때려잡는 역할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돈으로 사람을 죽이겠다,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 그러는 자들이 징벌적 손배에는 반대해요. 이런 불합리, 비상식을 이제는 제발 바로잡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노조에 대한 생각을 정말 바꾸셔야 합니다. 색깔론적 시각으로는 어떤 정책적인 진전도 이룰 수 없다고 저는 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몇 장인지도 제가 셀 수 없는데 작은 글씨로 축소 인쇄를 한 겁니다. 민주노총에 가입된 노조들 목록이에요. 몇 개나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언론사, 건설사,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대기업들, 이름도 알 수 없는 작은 소기업들, 단체들, 수도 없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것 다 읽어 보려고 했어요. 나중에 시간을 더 써야 되면 이것을 다 읽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불온세력이 들어가서 암약하고 있고 위험한 세력이 노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망했어야 돼요.

경영진과 노동조합, 정치에 여야가 있는 것처럼 경영·경제계에도 노사가 있습니다. 양대 축입니다. 둘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국회는 오히려 약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기능해야 하고 최소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해야 되고 더 기본적으로는 일방에 서서 상대방을 때려잡는 역할은 하면 안 됩니다. 하물며 색깔론이라니요. 시대착오도 이런 시대착오가 없습니다.

어쩌면 국민의힘은 내란을 극복하는 그 기저에 윤석열이 갖고 있었던 그 위험한 생각, 노조를 적대시하고 본인들의 지지 세력이 아니면 반국가단체로 몰아세우고 그런 인식이 윤석열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왔다고 봐요.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이겨 내지 못하면 국민의 지지를, 제가 말씀드린 지지가 대단한 지지 아닙

니다. 국민이 그나마 그래도 인정하는 공당 그 정도 지위를 회복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제가 방송법을 왜 개정하는지 아까 제 개인적인, 정무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례로도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YTN이라는 보도전문채널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아마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겁니다. 제 출신 회사이기도 하고 또 제가 과방위원으로서 언론계 문제에 관심을 조금 더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YTN은 윤석열 정권에서 철퇴를 맞은 최대 피해 방송사입니다. MBC도 매우 힘들었고 KBS도 조직이 큰 시련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지만 YTN은 아예 공적 지배구조가 사영화 단계로 가 버렸습니다. 저는 이를 YTN 장악이라고 인식해요, 판단해요.

윤석열 정권에 의한 YTN 장악은 크게 6단계로 진행이 됐습니다.

첫 단계는 짐작하시다시피 모의 단계입니다, '이걸 팔아, 말아', '팔아 버리자'. 놀랍게도 이를 모의한 세력이 이번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요. 김건희, 건진법사 전성배, 통일교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현직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까지도 나옵니다.

관련된 기사들을 제가 몇 건 읽겠습니다. 이 기사를 들으시면 모의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이해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국언론노조 YTN지부가 지난해 YTN 지분 매각 변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씨가 있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YTN지부는 성명을 내고 YTN 사영화의—그러니까 원래 공기업 지분을 매각한 거지요—처음과 끝에는 모두 김건희가 있다라면서 YTN 사영화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권이 강압을 동원해 진행하도록 만든 불법 거래 그리고 그 범행을 추동한 배경은 김건희 개인의 복수심과 윤석열의 방송장악 음모 그리고 YTN을 탐내던 세력들의 로비라고 밝혔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럴 것 같았어요.

'지난해 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전KDN 등—YTN의 1대주주였습니다—공기업이 갖고 있던 YTN 지분을 유진그룹 측에 팔도록 허가했고, 유진기업이 해당 지분을 사들여 최대주주가 되면서 YTN의 공적 지배구조는 끝을 맺게 됐다. 노조는 이를 언론사의 재벌 사유화라며 YTN 사영화로 명명하고 있다. YTN지부는 공기업들의 YTN 지분 매각은 지난 2022년 11월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공식화됐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2022년 가을의 국정감사 장면이 떠오르실 수 있어요. 이때 YTN 지분 매각을 놓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매우 날카로운 질문을, 질의를 하셨던 것을 제가 그 당시에도 봤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22년 11월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공식화됐지만 그보다 7개월 앞선 4월경부터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소문으로만 떠돌던—통해 김건희에게 YTN 인수 로비를 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통일교가 전성배를 통해서 김건희에게 로비를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인수위원회 때 이미 YTN을 둘러싼 더러운 거래가 시작됐다는 얘기'라고 YTN 노조가 주장합니다.

'YTN지부는 김건희 씨가 YTN 사영화를 계획한 배경에는 김건희 씨에 대한 YTN 검증 보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YTN은 대선 당시 김건희 씨의 학력 위조 의혹을 보도했

는데 그 이후 김 씨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다'. 가식에 쩐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기자회견입니다.

'YTN지부는 김건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 건 지난 대선 당시 YTN의 학력 위조 보도 때문이었다, 이후 김건희에게 YTN이 찍혔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았다'. 저도 들었으니까요. '통일교 측이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고가의 선물을 김건희에게 건넨 것은—이미 팩트로 확인이 됐고요—YTN에 악감정이 있는 김건희에게 잘 보여야—꼭 그것만이겠습니까. 실력자니까—YTN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역시 YTN의 주장입니다.

'이어 YTN 사영화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권이 강압을 동원해 진행하도록 만든 불법 거래며, 그 범행을 추동한 배경은 김건희 개인의 복수심과 윤석열의 방송장악 음모……', 이것을 특검이 지금 규명하려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관련된 수사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본부를 압수수색했지요. 거기서 뭘 확보했습니까? 수천만 원짜리, 6000만 원짜리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을 확보했다. 그동안 통일교 측은 김 여사 청탁 의혹이 전직 고위 간부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특검팀은 교단 차원의 개입 의혹도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 18일 통일교 본부 등 광범위하게 진행된 압수수색을 통해 그라프 목걸이 구매내역이 담긴 영수증을 확보, 윤 아무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넘버 2라고 얘기되는 사람입니다—2022년 4월에서 8월 사이—인수위 직후 정권 초기입니다—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600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를 전달했는데 김 여사 선물용으로 구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이 발견된 겁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이인자 윤 본부장은 전 씨에게 김 여사에게 줄 선물을 건네며 캄보디아 사업 얘기 지원해 달라고 했고, 대통령 취임식 초청을 요청했고, YTN 인수 등 통일교의 현안을 부탁했다, 이게 검찰 특검 조사 결과입니다.

윤 본부장 쪽은 이런 내용을 윗선에 보고하고 실행했다며 통일교 차원의 청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통일교는 개인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특검팀은 윤 본부장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일인자에게 보고했는지 이 부분까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성배 씨는 받아서 건넨 역할만 했을까? 설마요. 김건희 선물용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 전 본부장이 전성배 씨에게 김건희 여사를 위한 보수적인 언론사가 필요하다며 통일교 현안인 YTN 인수를 청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최근 윤 전 본부장을 불러서 전성배 건진법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인하고 진위를 추궁했습니다. 거기에 담긴 내용입니다.

2022년 11월 이 시점은 고가의 선물을 한 이후이고 그리고 YTN 대주주의 입장이 바뀌기 시작한 시점이고 또 국정감사에서 YTN 대주주를 상대로, 기존의 대주주를 상대로 왜 YTN을 팔려 하냐고 추궁하던 시기였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서. 그때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오히려 팔라고 종용합니다. 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점이

에요.

통일교 이인자인 윤 전 본부장은 전성배 건진법사에게 '통일교는 보수적인 종교단체이고 김 여사를 위해 보수적인 언론사가 필요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전성배가 답장을 합니다, '필요하다'. 이때 전성배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서 YTN 인수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한 바로 그 당시였습니다. 이것도 제가 주장하는 거나 언론이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메모가 나왔어요, 물증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전성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YTN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 한전과 마사회—여기서 한전은 정확하게는 한전KDN입니다—지분 가진 것을 확인하고 이철규 의원에게 인수 방법을 알아보겠다', 문자메시지예요.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김 여사 청탁용으로 건넨 금품의 대가로 통일교 측이 YTN을 인수하려고 추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판단은?

그러면 이런 청탁이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됐을까? 윤 전 본부장이 전성배 건진법사에게 문자로 묻습니다, '김 여사에게 전달됐냐?'. 전 씨가 얘기합니다, '전달드렸다'. 그리고 다른 기사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전성배가 전화하는 것을 윤 전 본부장이 옆에서 봤다고 자기 수첩에다 메모를 했잖아요. 그것까지도 확인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일보도 같은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다른 내용, MBC와 관련된 내용도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지요.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키맨으로 꼽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실명이 이미 나왔으니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윤영호 이자를 조사하며 언론사 대응 및 인수와 관련해 주고받은 휴대폰 메시지 내용을 추궁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주요 현안인 YTN 인수를 청탁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윤석열이 YTN을 없애려고 하는데 강하게 밀어붙이라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다. 누가? 전성배가.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특검팀은 윤영호 통일교 키맨, 이 사람을 조사하면서 왜 이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캐물었고 전성배가 윤영호 씨한테 YTN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를 한국일보도 똑같이 취재했어요.

한전·마사회의 지분 가진 것 확인하고 이철규 의원에게 인수 방법을 알아보도록 했다, 이게 문자메시지고요. 이 문자메시지는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이철규 의원 반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호 모른다', 'YTN 인수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했지요, 언론에다가. 그런데 이철규 의원은 공교롭게도 역할을 좀 했습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공기업이 YTN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가도 저평가된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

아니, 이철규 의원은 왜 YTN을 향해서 지분 팔라 그래요? YTN, 적자 내고 있었습니까? 멀쩡하게 경영 잘하고 있는 흑자기업 YTN을 왜 국회의원이 대주주인 공기업한테 팔라 마라 간섭입니까? 그러니 정말로 전성배·윤영호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지요.

전성배를 통해서 통일교 쪽에서 고가 목걸이, 샤넬 가방 전달한 이후에 이철규 의원의 이런 국정감사 질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전성배랑 윤영호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여기에 이철규 의원이 또 등장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이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MBC 내년에 없애려고 하는데 강경하게 밀어붙이라고 했다. 누가? 윤석열이. 누구에게? 전성배에게. 이걸 전성배가 윤영호한테 떠벌린 거예요. '우리 정권은 이런 기조이기 때문에 YTN도 팔아넘길 거야'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러니 통일교가 잘하면 너희가 가질 수 있어. 내가 이철규 의원 통해서 조치하고 있어'. 전성배가 사기를 친 건지 실제로 이 더러운 로비가 가동이 된 건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진법사, 건진법사…… 정치권에서는 참 들어도 너무 많이 들어 온 이름이지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실체가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소문으로만 무성했고. 천공이 세다, 건진이 세다, 명태균이 세다. 그런데 건진이 세긴 셌던 모양입니다.

'건희, 건희 하고 다녔다는 건진법사…… 그는 어떻게 김건희의 무속 비선 권력이 됐나'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기사를 보겠습니다. 주간경향 기사입니다.

2022년 대선 당시에 윤석열 후보 측의 이른바 비공식 비밀캠프로 신사동 예화랑 또 서울대 법대 동기들이 만들었다는 서초동 캠프 대호 프로젝트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었대요. 이름이 참…… 복조리 캠프.

검색을 해 보면요 건진법사 전성배의 역삼동 법당 주소입니다. 식당으로 위장해 있고요. 전성배가 운영하는 법당, 무당짓 하는 법당. 재벌가, 정치권, 법조계 고위인사들이 드나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법당에는 일본 신이 모셔져 있다고 하지요.

대선 일정이 본격화하면서 복조리 캠프, 전성배 법당, 윤석열 비선 캠프 복조리는 서희건설 빌딩에 사무실을 이전하고 역삼동 캠프로 불렸습니다. 그러니 신사동 캠프 서초동 캠프 역삼동 캠프, 이 가운데 역삼동 캠프가 무속 캠프 복조리.

2022년 1월, 그러니까 대선 전에 세계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건진법사가 윤석열 선대위 고문으로 일한다'. 그리고 동영상이 공개됐지요. 대선후보가 왔는데 전성배가 막 대선후보 어깨에다가 손 올리고 툭툭 치면서 안내하고.

당시 조용헌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조선일보에 '윤석열 손바닥에 왕(王) 자를 써 준 사람은 J 법사'라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했다. 건진법사라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했다. 이 얘기는 명태균도 합니다. 이후 윤석열 캠프의 항의로 포털에 전송된 기사는 삭제됐습니다. 이런 게 보도 개입이에요.

조 교수는 당시 기자와의 통화에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라며 '거론되는 무속인이 한두 명이 아닌 것 같다. 김건희가 컨트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도사들을 왜 좋아하는지 궁금하다'. 도사와의 대화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김건희 씨 본인 입으로 했지요, 서울의소리 기자하고의 대화에서.

또 다른 비밀캠프인 복조리 캠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초 지인의 권유, 이 지인은 주간경향이 만난 제보자입니다. 이 제보자가 건진의 법당을 방문한 시점이 2018년 1월이래요. 그러니까 보도가 나오기 4년 전이었습니다. '건진법사가 누군지도 몰랐고 실명이 전성배라는 것도 알 수 없었다. 법당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건진을 전 고문으로 불렀고 자신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 제보자도 그렇게 알고 있었대요. '건진과 대화를 나눠 봤는데 고 이병철 삼성 회장과 명동에서 술 마시러 다니던 이야기를 했다' 또 'CJ 이재현 회장의 모친인 손복남 여사 등 주로 재벌가와 자신의 인연을 거론했다'. 실제로 이런 분들하고 만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건진은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2018년에 거론했다, 건희 건희 하면서.

건진법사는 내란 비상계엄 터지고 얼마 안 있다가, 한 2주 있다가 체포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병보석으로 가석방돼 있는 상태입니다. 잠깐 체포됐을 때 검찰 조사에서 본인이 신통력과 예지력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런 자가 김건희와 언론사, 그것도 방송 전문 보도채널 인수를 얘기했다? 참 암담한 상황입니다. 그런 일이 국민의힘이 떠받치고 있던 윤석열 정권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지를 묻고 있는 거고요.

건진에게 물건과 청탁을 전달한 사람은 통일교 주요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윤영호 씨가 2022년 11월 30일에 보낸 카톡 문자메시지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여기서 윤심은 당시 대통령 윤석열이지요. 이런 문자도 보내면서 김건희와 지속적으로 접촉했다는 판단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YTN 장악 1단계는 김건희와 건진법사 그리고 통일교, 또 한 축 국민의힘 일부이거나 다수의 모의 단계,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YTN의 공기업 대주주를 향한 압박이 시작됩니다. 팔아라, 팔아라, 팔아라. 팔아야, 물건을 내놔야 그 장물이 팔리니까 내놓으라고 합니다. 흑자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었고 당해 연도에도 영업이익이 예상됐던 YTN이 그 당시 경영진도 반대하고 대주주도 반대하던 매각 쪽으로 급선회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손, 이제 보이는 권력의 검은손.

2022년 9월 기사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2022년 9월, 이미 김건희가 6000만 원짜리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받아 챙긴 바로 그 이후 시점에 YTN 주식을 매각하면 손실이 전망된다던 한전KDN이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을 받은 뒤 매각 추진 계획을 세웠다. 그전에는 못 팔겠다고 하던 1대주주가 국회에서 압박하고 정부에서 기재부가, 산자부가 내리찍으니까 팔겠다고 두 손 든 거예요. 이 얘기는 당시 한전KDN 김장현 전 사장이 올해 YTN 청문회장에 나와서도 확인해 준 내용입니다. 원래 안 팔려고 했다.

한전KDN은 8월 16일, 2022년 8월입니다. 2022년 8월 16일 YTN 지분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혁신계획 초안을 산업부에 제출합니다. 처음에는 이랬어요. 8월까지만 해도 한전KDN은 안 팔아라고, 뭐라고 썼냐 하면 '광고수익 증가 및 사업 영역 확장으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 향상이 기대된다. YTN 주식 보유로 인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여기 산업부에 제출한 문건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9월에 바뀌지요. 9월 16일, 딱 한 달 있다가 한전KDN은 두 손을 듭니다. 'YTN이 향후 수익이 난다는 보장도 없고 수익이 날 때까지 정리를 미루겠다고 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 이게 산업부의 압박입니다. 산업부가 한전KDN에다가 보내요. 이것 때문에 한전KDN은 '알겠습니다. 팔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YTN 내부에서는 이번 민영화설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YTN 기자협회는 YTN을 향해 군침을 흘리는 기업이나 정치권력의 욕심을 막는 방파제가 바로 공영적인, 공적인 소유구조다, 여야를 떠나 어떤 정당이든, 광고주를 떠나 어떤 기업이든 비판할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다'. 무엇이? 공적 지배구조가. YTN이 특정 집단의 손에 넘어가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이때부터 YTN의 내부 구성원들은 밝히기 시

작합니다.

공공기관이 대주주로 있으면서도 경영과 보도에 개입하지 않는 YTN의 지배구조는 방송법 정신에 충실한 그런 모습이었고 지난 수십 년간 YTN을 국내 언론사 신뢰도 부문에 줄곧 1·2위를 차지하게 만들었던 YTN 경쟁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 공적인 24시간 보도채널을 돈으로 거래를 시켜요? 국민 것을 정부가, 정치권력이 힘으로 빼앗아서 자기네 말 잘 듣는 기업한테 장물을 던져준 겁니다.

한전KDN, 버티다가 버티다가 9월에 두 손 들고 국정감사장에 불려 나와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질의에 'YTN은 한전KDN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없다'. 백기 투항 선언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두 회사 간의 시너지를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업무 영역을 넓힐 수도 있고 수익이 기대되고 전망이 밝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 CEO가 그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회에 불려 나가서 '아니에요. 팔게요. YTN 우리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철규 의원이 한 말을 여기서 재확인합니다. '한전KDN은 한전의 정보통신기술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주, 매출이 보장된다', 튼튼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끌어 붙여서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지출과 자산을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공기업이 YTN 지분을 갖고 있으면 효율성과 자산 가치가 낮다는 인식에 주가도 저평가됐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 절차를 진행해라'.

그래서 YTN 팔아서 주가 올라갔습니까? 판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던 시장에 돌을 던져서 혼란을 일으키니까 세력이 붙고 주가가 널뛰기를 하고 3000원 하던 주가가 1만 원이 넘고, 그래서 유진이 가져가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지금도 3000원대예요. 그 과정에서 있었던 개미투자자들의 손실은 누가 보전합니까, 만 원 넘었을 때 꼭지 잡았던 사람들!

한전KDN은 YTN의 1대주주였거든요. 21.4%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공기업이 절대적으로 많은 지분을 안 갖고 나눠서 가짐으로써 YTN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YTN 보도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 매우 이상적인 지배구조가 YTN에서 정착되고 있었어요. 한전KDN은 한 번도 자신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 증자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1대주주인데 21.4%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투자가 필요하면 그때는 증자를 해야겠지요.

그리고 2대주주는 이미 민영화된 KGC인삼공사, 3대주주는 마사회. 마사회가 약 9%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타깃으로 삼은 주주가 1대주주와 3대주주입니다, 공기업. 인삼공사는 이미 민영화됐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다고 판단을 했고.

한전KDN, 산자부 산하 공기관입니다. 마사회, 농림부 산하 공기관입니다. 정권이 내리눌러서 두 대주주가 팔게 되는데 마사회도 안 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비슷한 시점에 팔기로 합니다.

이다음도 문제예요. 이 두 대주주는 YTN을 인수한 가격이 지분 처음 들어올 때 달라요. 이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한 가격에 매각이 되면 둘 중의 하나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따로따로 팔 때 지분의 희소성을 가지고 가격을 높이는 비딩(bidding)의 기술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인수가격이 달라서 상황이 다른 두 회사의 지분을 한데 합쳐서 이른바 통매각을 진행합니다.

처음부터 통매각을 한다는 게 아니었어요. 한전KDN은 어쩔 수 없이 팔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팔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파는 절차만큼이라도. 그래서 매각 주관사를 독자적으로 선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업계의 공신력이 있는 삼성증권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합니다, 입찰을 통해서. 삼성증권이 한전KDN의 매각을 주관하게 됐고 그때 한전KDN하고 삼성증권 간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며칠 만에 삼성증권이 '나 안 할래' 하고 빠져요.

업계에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국정감사에 나온 삼성증권 관계자가 이유를 설명을 못합니다. 만약에 YTN 지분 매각 과정이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부담스러웠으면 아예 입찰에 들어가지도 않았지요. 그 매각 주관사 선정을 왜 받아요? 받아 놓고 반납합니다. 그것을 누가 받아 가냐? 삼일회계법인이 받아 갑니다.

이상한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사회도 팔기로 했잖아요. 삼일회계법인이 매각 주관사로 바뀌는 그 순간에 한전KDN이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는지 삼일회계법인에 약속을 받아 냅니다. '너희들 우리 것만 팔아야 돼.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파는 일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랑 협의를 해야 해'. 매각 주관사, 일감을 준 쪽에서 그걸 수행하는 쪽한테 이런 걸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기지만 더 웃긴 얘기는요 삼일회계법인이 한전KDN에, 발주사에 얘기도 안 하고 마사회 비딩 업무를 따옵니다. 그건 정상적으로 땄을까요?

NH농협이 농림부 산하기관의 그런 비딩 업무를 많이 해요, NH투자증권의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입찰 들어갔습니다. 비딩, 매각 주관사 하겠다고 입찰 들어간 지 몇 시간 만에 NH증권은 철회합니다. 1대주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2대주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넘겨받은 자는 어떻게 삼일회계법인 하나로 같지요? 그것도 한전KDN 1대주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런 통매각 절차를 통해서 비딩, 입찰이 진행됩니다, YTN 지분 매각이.

여러분도 이상하시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대명천지에? 윤석열 정권이어서 가능했던 거예요, 언론사 목줄 확 옥죄고 있으니까. 이게 '바이든-날리면' 보도 나오고 언론사에 대한 탄압이 극에 달할 때 아닙니까?

미디어오늘 매우 중요한 매체 비평지고, 그러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대 언론, 매체력이 큰 언론은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데서만 씁니다. 그나마 미디어오늘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 준 거예요.

'마사회, YTN 지분 매각 결정. 정부 전화 한 통에…… 정권 눈치 보기' 이런 제목입니다. '마사회가 YTN 주식 9.52% 매각 추진을 결정할 예정이다. 마사회 내부에서는 지난주부터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전화와 면담 등으로 연내 지분 매각을 지시한 뒤 마사회가 매각 결정 시점을 급히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원들은 정권 눈치 보기이자 경영 간섭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마사회 내부에서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잘 갖고 있던 지분을 왜 팔아?

여러분들, YTN이 경마대회 주관사인 것 아십니까? YTN 대상 경마대회, 지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 하겠지요. 모르겠어요. 경마사업에 대한 평가가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가가 하는 사업이고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사행성이 근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언론이 홍보해 주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마사회는 YTN에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YTN 경마뉴스까지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그런 마사회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팔라 마라 할 수는 있겠지요, 다른 이유로. 그런데 정권이나 또는 마사회 자체적으로나 팔 이유도 없고 팔아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정부 전화 한 통에, 면담 한 번에 파는 쪽으로 급선회합니다.

YTN 매각 삼일회계법인이 맡는다, 1순위였던 삼성증권이 돌연 포기했다 이런 기사들이 작게 납니다. 기록으로 남았다는 것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작은 기사들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덮어도 되겠습니까?

'한전KDN, YTN 지분 통매각으로 급선회했다'. 한전KDN은 인수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애초에 인수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인수 가격이 낮았던 기업하고 함께 지분을 매각하면 당연히 손해를 보게 돼요. 하지만 낙찰을 받는 기업은 손쉽게 YTN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매각 주관사로 선정된 삼일회계법인, 처음부터 삼일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지요. 원래는 삼성증권이었는데 이 삼일회계법인이 삼성으로부터 의문의 주관사 지위를 넘겨받으면서 그래도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대주주에게 얘기합니다. 한전KDN 지분만 단독으로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제안서를 써요. 마사회 지분과 함께 묶어서 팔면 불리하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겁니다, 이때 이미. 그런데 삼일 측의 입장이 나중에 바뀐 거예요. 스스로 바꿨을까요?

이렇게 매각이 이루어집니다. 각각 얼마를 써 냈는지 보시면, 그 과정에서도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가격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매각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동관의 방통위가 8월 말에 출범해서 9월에 적극적인 실행계획을 발동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정하고도 너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8월까지는 대주주들이 안 팔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9월 중순부터 팔겠다고 바뀝니다. 10월에 국정감사장 나와서 공식적으로 팔겠다고 답변하고. 저는 이동관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봅니다마는 특검이 밝혀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방통위는 이때부터 최대주주 승인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해요. 유진그룹이 쟁쟁한 경쟁자들을, 6000만 원짜리 목걸이까지 선물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YTN의 지분 인수자로 낙찰이 되지요.

돈을 얼마를 써냈냐? 통일교하고 관련이 있다는 기업은 1000억대를 써냈어요. 그리고 한세실업이라고 김건희·윤석열 해외순방 때 행사장 테이블에 김건희 옆에 앉았던 한세실업, 그 한세실업은 2000억대를 써냈습니다. 그런데 낙찰을 받은 유진그룹은 3199억을 써냅니다. 로비를 열심히 했던 통일교 쪽 원코리아미디어홀딩스 이게 글로벌피스재단이라는 통일교 관련 단체가 만든 회사인데 여기는 금품 로비를 많이 해서 돈을 적게 써냈는지 그것도 규명해야겠지만 낙찰가가 이렇게 들쭉날쭉 차이가 나나 이런 생각과 함께 3199억 원, 경쟁자보다 최대 2000억 원 많이 써내고 낙찰받은 유진은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의문들을 다 하나하나 국회가, 특검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매각이 이루어졌어요, 돈 들여서. 유진그룹이 YTN 31%의 주주 지분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방송사업권은 아까 방송법 설명드리면서 제가 다 짚었습니다만 최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자격을 방통위로부터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 매각 심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해요. 그 심사를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시작하고 일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심사 절차까지 진행합니다.

그때 이동관 방통위원장 방통위 체제는 그 유명한 2인 체제의 시작이었어요. 그때 YTN 지분 매각 심사할 때 5명 방통위원 가운데 딱 2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뒤에서 계신 최민희 위원장의 방통위원 자격을 윤석열 정부가 부인했기 때문에 방통위 인원이 안 채워졌어요. 저는 그게 다 치밀하게 계산된 작전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2명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명이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한 겁니다.

하물며 YTN의 지분 매각을 심사하는 방통위 심사 의결 과정이잖아요. 이동관은 YTN과 대규모 소송을 벌이고 있었어요. YTN이 뭐 오보했다고 소송을 걸어서 소송이 진행 중이었어요. 이해당사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상인 부위원장, 낙찰을 받은 유진그룹의 변호인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심사에 참여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결을 합니까?

이동관 체제에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매각 심사는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꾸리게 되어 있어요.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꾸려요. 그러면 보통 이런 대주주 적격 심사나 재승인 심사나 몇 달이 걸립니다. 심사위원회가 핵심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평가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딱 나흘 가동됐습니다. 매각 심사를 해 달라고 계획서를 접수한 바로 다음 날 기다렸다는 듯이 이동관 체제에서 심사 개시를 해 버립니다, 딱 하루 만에. 심사위 딱 나흘 가동돼요.

그때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것 멈춰 세우는 길은 위원장 탄핵밖에 없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동관 탄핵안을 발의하고 의결하겠다고 입장을 굳혔어요. 그러니까 이동관이 보류 결정이라는 비겁한 결정을 내려 놓고 도망칩니다. 본인이 책임도 못 할 일 벌여 놓고, 그 보류 결정도 나중에 후임자가 왜곡해서 써먹을 수 있게 해 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보류면 보류지 매각 입장의 보류라는 건 또 뭡니까? 매각 승인 입장의 보류, 매각 승인이면 승인이고 보류면 보류고 취소면 취소지. 보류는 뭔가를 다시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최종 결정도 못 내리겠다고 도망가는 자가 비겁하게 거기다가 승인 입장의 보류라는 그런 전제를 붙입니까?

그다음으로 들어온 사람이 김홍일 위원장, 역시 둘이서 뚝딱 의결을 하는데 이동관 위원장이 도망간 뒤로 두 달 만에 최종 결정을 내리지요. 보류를 했으니까 보류 대상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어야겠지요. 그게 너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사위를 재가동하지 않았어요. 김홍일 체제에서 심사위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문위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자문위원들 의견도 다 갈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심사위원회 가동된 것처럼 판단하고 의결을 밀어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YTN 매각은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2인 의결 자체도 위법이라는 판단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본안도 위법이라고 나오지요. 가처분도 제기된 소송들 집행정지 결정이 3분의 2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본안에서 다투라는 거고.

이렇게 무리한 2인 의결, 형식적인 위법, 거기에 더 나아가서 매각 절차의 졸속성, 특혜를 준 부분, 그 이전에 입찰 과정의 부정 의혹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져 있는데 최근에 드러난 것이 출발은 김건희였다, 출발은 6000만 원짜리 목걸이 로비였다, 출발은 김건희에 대한 YTN의 검증 보도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청 하루 만에 심사계획이 의결되는 유례없는 졸속 심사, 그래서 YTN의 구성원들, 언론 현업자들 대부분은 YTN의 졸속 매각을 범죄로 규정합니다. 졸속이고 짜깁기고 위법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YTN 인수 과정의 졸속·불법 요소들을 다소 좀 깁니다만 정리해서 읽겠습니다.

'방통위가 자문위원 의견에 반해서', 아까 이동관이 보류 결정하고 도망가고 김홍일 체제에서 자문위를 가동했다고 했잖아요. 이 자문위조차도 적어도 YTN 노사가 기존에 합의해서 유지하던 제도는 지키라고 했습니다. YTN 사장추천위원회, 이것 이번에 법에 들어간 거예요. 방통위가 자문위원 의견에 반해서 이걸 폐지해 버립니다.

그리고 최근 법원이 윤석열 정부 방통위원회 2인 체제 의결에 제동을 걸고 있는데 'YTN 사영화 과정도 2인 의결에 의한 것이었다. 자문위원 의견조차 무시하고 방통위가 YTN 사장추천위원회 폐기에 앞장섰다. YTN지부는 날치기, 짜깁기, 유진그룹 적격 심사 불법 증거들 기자회견을 열고 YTN 사영화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공개했다. 공적 소유구조를 지닌 YTN은 지난 2월 방통위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하며 민간자본인 유진그룹 소유가 됐다. 5인 상임위원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이 같은 의결을 했고 언론계의 반발을 맞은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2인 체제라는 형식뿐 아니라 이를 심사하는 과정 자체가 졸속·부실에 가까웠다는 의혹 제기가 주를 이뤘다.

우선 방통위가 YTN 사장추천위원회 폐기를 반대한 자문위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보도자료 등에서도 아예 누락했다는 근거가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말 방통위는 유진이엔티에—유진그룹이 YTN 인수를 위해 만든 회사입니다—대한 최대주주 변경승인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조건부 승인 이후 같은 심사위원들로 자문위원회를 꾸렸다. 유진그룹은 당초 사추위 유지에서 폐기로 입장을 바꿨고 이에 대해 8명의 자문위원 중 6명이 사추위를 폐지하면 안 된다고 반대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런 법안 개정의 이유가, 스토리가 명확히 있는데 이런 것은 애써 보려 하지 않는 그런 자세는 부디 고쳐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의견은 무시됐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심지어 유진도 언론사를 인수하는데 그래도 공적인 책임을 좀 다하는 것처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애초에 인수계획을, 계획서를 제출한 때에는 노사가 합의했던 기존 제도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넣었어요. 그런데 심사를 하면 할수록 이것 아니구나, 코드가 이게 아니었구나, 220V가 아니라 110V였구나 하고 바꿔 탄 겁니다. 그래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도 폐지하고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도 걷어차 버리고, 윤석열 스타일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맞춰 갔던 겁니다.

'경영진의 합리적인 경영전략 수립을 저해하는 기존 사장 선임제도는', 이게 의결 직전에 낸 유진의 바뀐 입장입니다. 표변한 입장입니다. '이사회 중심의 선진 거버넌스 체제를 반영하여 개선이 필요함'. 기존의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선진 거버넌스에 반한다라는

입장입니다. YTN의 대표이사는 방송 전문가로 이사회를 통해 선임하겠다, 이렇게 입장이 돌변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임한 사람이 누구지요? 김백, 얼마 전에 유진이 내쫓은 것이 사실인, 기정사실인, 방출된 김백 직전 YTN 사장. 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날 공개된—YTN 노조가 공개한—의견서를 보면 자문위원들은 기존 노사가 합의한 제도를 폐지하면 노사 갈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다, 보도전문채널에서 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회의 사장 선임은 방송사업자 공적 책임 차원에서는 우려할 만하다', 이사회가 혼자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구성원의 의사 존중, 노사 간 자주적 해결이 합리적이다. 독립성과 공공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면.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전문경영인 공모 절차 및 자격요건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없었어요. 왜? 이사회에서 그냥 혼자 뽑으려고 했거든요. 공모도 안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노조가 주장했습니다.

당초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직접 기존 협약에 대한, 기존 노사협약에 대한 존중 의사를 밝혔어요. 이 기존 협약 크게 두 개예요.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가동해서 이사회가 그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복수 후보 중에서만 고르겠다, 그런 공모제도를 하겠다라는 약속. 또 하나는 보도책임자를 임명할 때 사장이 임명하지만 구성원들 절반의 동의를 얻겠다. 이 두 개가 YTN이 오랫동안 힘들게 지켜 온 제도예요. 그걸 유진그룹 유경선 그룹 총수가 지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방통위가 자꾸 계획서 다시 써 오라고 하니까 '아, 이게 아닌가 보다'……

유경선 회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장으로 기존 협약, 기존 노사협약 존중 의사를 밝혔는지 잠깐 읽어 드릴게요. '역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건 유진 유경선 회장의 인수, 낙찰받은 직후 방통위에 매각 승인 심사를 요청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YTN 구성원들과의 아주 좋은 협약이라든지 약속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도와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사는요 사기업에 맡기면 이런 폐해가 생기는 거예요.

방통위는 보정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결국은 유진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냅니다.

그리고 YTN 지분을 인수한 유진의 매각 승인 신청과 이후 심사 과정이 진행된 과정은 졸속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인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진그룹이 2023년 11월 15일 방통위에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그 신청서 자체가 복붙, 없는 프로그램 확대 약속, 자료 구성도 졸속으로 막 짜깁기로 하고 갖다 붙이고 엉뚱한 것 막 복붙해 왔어요. 그리고 편성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고.

복붙한 사례를 좀 드릴게요.

1.5페이지 분량의 신청서 개요에—다른 것도 아니고 신청서 개요에—절반 이상, 60~70%가 기존 책자, 기사, 이미 발간돼 있는 책자나 기사 원문하고 빼박이에요. 그걸 복붙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개요, 골자만 요약해 놓은 개요의 복붙된 부분을 보니까 '공영방송의 민영화'라는 책에서 일부를 발췌해 왔는데 이 책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그 내용을, 그 문장만 따 가지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문장이라고 이해를 했는지 그렇게 왜곡을

한 건지 거기다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 이 책의 저자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 글을 복붙한 것도 이건 도둑질이고 심지어 내 글의 의도를 정반대로 해석했다'. 이게 보도전문채널을 운영할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승인해 달라고 신청하는 그 절차부터 이렇게 삐걱대는데 그걸 신청서 검토도 안 하고 11월 15일 접수하니까 11월 16일 심사를 개시해요.

이 개요의 복붙해 붙인 문장을 보면 '민간자본이 방송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읽어 봐도 이 뒤에 문제 되는 무엇인가를 얘기할 것을 예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만 뗀 거예요. '공적 소유구조를 가진 보도전문채널을 민간 소유로 전환하는 첫 사례인 만큼 엄청난 특혜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엄청난 특혜일 수 있음을 지적한다, 제대로 하라고. 이런 걸……

보도사업을 하겠다고 뛰어든 거잖아요. 일 시작도 하기 전에 못된 것만 배운 겁니다. 못된 기술만 배워서 공식 문건에까지 이런 복붙, 짜깁기, 왜곡, 비틀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개요인데요. 붉은색으로 박스 친 부분이 복붙한 데예요. 이게 유진이 작성한 게 맞습니까, 이게? 이것 작성한 저자한테 사업권을 넘기세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유진도, 이런 기업에 YTN이라는 공적 기관을 덥석 넘긴 윤석열 정권도.

신청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청자를 중시해야 된다' 이런 추상적인 구호 정도는 알고 있었나 보지요? 시청자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라는 약속을 신청서에 담습니다.

저도 YTN 재직할 때, YTN이 매우 정성 들여서 유지했던 시청자 옴부즈맨 프로그램 중에 '시시콜콜'이라는 게 있어요. 시청자들의 의견 시시콜콜한 것까지 경청하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프로그램이었는데 여러 이유로 폐지된 상태에서 유진이 그게 여전히 방송되는 줄 알고, 어디서 그 프로그램이 좋다는 기사는 봤는지 그것을 부활시키겠다도 아니고 확대 편성하겠답니다.

이것 말고도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4시 넘어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2시간 조금 넘었나요? 남은 분량이 조금 속도를 내도 될 것 같아서 다음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의를 하고 대주주의 목을 비틀고 매각이라는, 입찰이라는 이름으로 장물을 처분하고 그리고 방통위를 동원해서 졸속 심사를 하고 여기까지, YTN 장악 시나리오 4단계까지 진행이 됩니다.

YTN을 왜 그토록 가지려고 했을까? 건진법사와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의 대화를 상기해 보면 김건희한테 찍혔던 YTN을 김건희 입맛에 맞는 방송사로 바꿔 내는 것, 그 목적이 판 쪽의 실질적인 목적이다. 사 간 유진도 저는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검사한테 뇌물 준 사람이 그룹 총수인 기업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제재를 받은 기업입니다. 나중에 제가 좀 힘주어 말씀드릴, 총수 일가를 위한 부정한 방식의 경영 활동을 서슴없이 했던,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에 YTN 안겨서 김건희 정권, 윤석열 정권 입맛에 맞는 보도 하도록 하는 것이 이 YTN 장악 시나리오의 출발이고 끝이에요.

그래서 유진이든 누구든 YTN을 인수하면 그다음 수순은 사장을 YTN 경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윤석열·김건희 보도를 위해서 수소문하고 찾아내고 사추위도 없앴으니까 자기

들 멋대로 임명시키는 겁니다.

‘YTN 해직 사태 주도자가 사장으로 복귀, 김백·김원배 사내이사설’ 이게 YTN 주총을 앞두고 작년 봄, 이른 봄에 김백 사장설이 보도됐던 기사입니다. ‘최근 인수 잔금을 완납한 YTN 최대주주 유진그룹이 사장 교체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시에는 전해졌지만 팩트였습니다. ‘YTN 해직 사태를 주도한’, YTN 해직 사태는 2008년도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선배인 이명박 대통령 시절, 이명박 정권이 일으켰던 5공 이후 최초의, 최대의 언론인 대량 해직 사태, 2008년의 YTN 징계 사태입니다. 그때 인사위원이었던 김백, 초강성 인사위원으로 류희림과 함께 인사위원장에서 노종면 해고시켜야 된다를 외쳤던 그자들이 윤석열 정권에 부활해서 한 자는 방심위원장으로 한 자는 YTN 사장으로 복귀한 거예요. 그 배후에 있었던 이동관은 방통위원장 노릇을 했고. 여러분들의 선배들입니다.

‘해직 사태를 주도한 김백 전 총괄상무가 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백은 보수 언론단체—보수 맞습니까?—공정언론국민연대 이사장을 지냈다’. 공정이라는 표현, 민주라는 표현, 국민·시민 이런 이름만 갖다 붙인다고 그 가치가 발현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습니다. 공정언론국민연대 이사장을 지냈어요. 그런데 본인은 극우 유튜버 노릇을 했어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호위병을 자처했습니다. 우리 이진숙 위원장도 이 조직하고 연이 있지 않으신가 모르겠네.

하여튼 이 조직 출신자들이 요직을 차지했지요.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최철호, 이진숙 위원장께서 그 짧은 순간 유효하게 남겨 뒀던 2인 의결 그 수혜자가 바로 이 공언련, 김백과 같은 조직 출신입니다. ‘고한석 YTN 지부장은 유진그룹이 YTN 사내·사외이사 6명을 바꾸겠다고 통보했다며 사실상 사장을 지명한 거나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그자는 김백이다, 며칠 안 가서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 김원배는 누구인가?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자는 전무가 됐고요. 사외이사, 그 유명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현재 인권위원장이 이때, 김백이 사장으로 갈 때 YTN의 사외이사로 갔습니다. YTN이 얼마나 대단한 조직이었는지 실감이 오십니까? 그렇습니다.

‘김백, 이명박 정부 당시 YTN 해직 사태를 주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2017년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언론장악 부역 언론인 50인을 지명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류희림과 김백이 자랑스럽게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50인에 들었던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참 많이도 관을 부수고 세상에 나오셨어요.

김백 사장이 가능했다는 것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유진그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김백 씨는 어떤 공모 단계나 경쟁 단계를 거치면 그 경쟁에서 이기기 참 어려운 사람으로 주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요. 이력 내내 그래 왔습니다.

YTN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뿐만 아니라 보도국장, 그러니까 보도책임자에 대해서도 복수후보추천제나 임명동의제 등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수십 년 동안 창사 이래로 내내 실험하고 정착시키고 개선해 왔어요. 그 과정에서 김백 씨는 한 번도 그 대상에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순위에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백 씨의 이력에 보면 보도국장 이력이 있어요. 2008년도 말에 YTN 대량 해직 사태가 나고 그때 이명박 정권이 내리꽂았던 낙하산 사장도 그 여파로 함께 사퇴하게

되는 큰 폭풍이 YTN에 몰아쳤고요, 그 빈자리를 노렸던 세력들이 있지요. 그 빈자리를 노린 세력, 사장도 사장공모제가 폐지된 상태로 사장이 됐고 보도국장도 보도국장 복수후보추천제가 폐지된 상태로 보도국장이 됩니다. 그렇게 사장이 된 자가 배석규고요, 그렇게 보도국장이 된 자가 김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을 공모제로 했으면 김백은 나오지 못했거나 주인이 누구든 떨어져요. 경쟁하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실력과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김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제 평가가 과하지 않다고 쉽게 동의하시리라 판단합니다.

상무를 거쳐서 전무가 되고 지금 YTN 라디오 사장이 된 김원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박근혜 정권 때 미국 특파원을 갔어요. 이자도 스스로 어떤 실력을 인정받기 매우 어려워요. 주변의 세평을 들어 보시면 쉽게 압니다. YTN 기자들 많이 아시잖아요, 김원배가 어떤 자인지. 그런데 특파원을 갔어요. 가서 아주 독특하고도 큰 오보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도했어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경우 한국도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했던 내용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 영문 기사를 해석해서 썼어요. 그런데 원문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결국 사과했어요.

아까 공언련 잠깐 말씀드렸는데 선방심의위에 공언련 사람들 많이 들어갔지요. 그중 한 사람이 아까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했다는 최철호 씨입니다. 최철호 씨는 검사 사칭 사건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옭아매려고 했던 그 사건 거기에 연루돼 있는 자예요, KBS 피디 출신. 모든 것이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거저 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김백이 이렇게 사장이 된 뒤에 YTN을 어떻게 망가뜨리나…… YTN 사장이 이사회에서 임명되고 주총에서 통과된 그날 나온 한겨레 기사에 제가 유감이 있어서 이 대목을 잠깐 읽으려고 기사를 가져왔는데, '새 이사회가 김백 이사를 사장으로, 김원배 이사를 전무로 선임하면서 유진그룹은 YTN 경영진 교체 작업을 마쳤다. 유진은 방통위로부터 최다액출자자 자격을 승인받은 뒤 두 대주주의 지분 인수 대금을 완납해 YTN 최대주주(30.95%)가 됐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의결을 강행한 방통위에 불법 의결, 졸속 심사 지적이 쏟아졌으나 이미 민영화된 YTN의 소유구조는 돌이킬 수 없게 됐다' 이 부분이 유감입니다. 동의할 수 없고요.

지금 들은 이 과정, 이게 다 사실이고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정권 주도하에 버젓이 벌어졌는데 이걸 돌이킬 수 없으면 대한민국이 건강합니까? 이걸 돌이킬 수 없으면 국회가 제 역할 했다 할 수 있습니까? 이걸 돌이킬 수 없으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닙니까? YTN의 소유구조는 YTN이어서가 아니라 불법·위법·부당하게 공적인 자산을 사적으로 거래로 사기업에 팔아넘겼기 때문에 반드시 되돌려 세워야 됩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백 사장이 이사회를 통과해서 취임하면서 YTN이 왜 민영화됐는지를 본인 입으로 얘기합니다. 취임식에서 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4월 1일에 김백 취임식이 있었고요. 그때 김백이 한 말입니다.

‘YTN은 2022년 대선을 전후해 뉴스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지키지 못하면서 편파·왜곡 방송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대통령후보 부인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검증 없이 두 차례나 보도한 이른바 쥴리 보도가 그 정점을 찍었다. 이것이 공영방송에서 민영방송으로 바뀐 이유가 아닌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쥴리 보도 했고요. 반론도 실었고요. 그리고 쥴리였는지 아니었는지 아직, 누가 확인했습니까? 아닌 줄 아시는 분 있어요? 의혹 보도는 사실로 확인되기 전에 할 수 있어요. 보도의 ABC를 지켜야 합니다. 그게 반론이에요. 반론 보도했는데 사장으로 취임했다는 자가 회사의 지배구조가 바뀐 이유가 그거라니…… 그러니 김건희에 대한 보도 때문에 YTN이 매각됐다는, 장물로 팔려 나갔다는 그런 판단에 힘을 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YTN 사장이라는 자가 공개적으로. 사실관계 다 떠나서 이렇게 무책임하고 이런 발언이 문제가 될 거라는 것조차도 판단할 수 없는 수준 낮은 자에게 보도전문방송을 맡길 수 있겠어요?

인사를 합니다. 예상된 그대로 인사를 합니다. 김백의 첫 인사…… YTN이 어떤 경영위기를 돌파하고 지금에 이르렀는데, 제가 여러 명의 사장들 교체를 봤지만 어느 한 명 긴축을 약속하지 않은 사장후보자 없었어요. YTN은 그만큼 고사 직전의 위기를 구성원들 전체가 함께 겪었고 이겨 냈고 공적 구조로 바뀌면서 되살아났기 때문에 돈을 아껴써야 된다, 자리를 늘리면 안 된다 이 인식이 철두철미합니다.

제가 YTN에 복직해서 직원으로 다닐 때 그 당시의 사장은 있던 임원도 줄였습니다. 사장의 운전기사도 뺐습니다.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다녔어요. 그 이전의 YTN 어떤 사장은 사장실 폐쇄하고 일반 사원의 사무실을 썼습니다. 그 이전의 YTN 직원들은 월급을 50% 반납하고 간부들은 80%를 반납했습니다. 그전의 YTN은 임직원 할 것 없이 전원이 6개월 동안 단 한 푼도 월급을 받지 못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김백이라는 자가 작년 4월에 YTN 사장으로 내리꽂힌 다음에 한 일은 임원 자리 일곱 자리를 늘리는 거예요.

YTN에는 임원이 2명 이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2명이 최대치예요. 상무가 하나이거나 상무 하나, 전무 하나이거나. 전무가 있었던 적도 손에 꼽을 만합니다. 전무도 세우고 상무도 세우고 임원급 본부장을 7명, 8명 세워서 자기 사장 되는 데 세력으로 뒷받침했던 자들 하나같이 다 심어 놓고.

노조가 방송을 장악한다는 게 이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전원이 다 특정 노조 소속입니다. 구성원들의 절대다수가 포함돼 있는 조합원들이 임원이 되는 것 피하려야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구성원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조합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조직이 임원들 전원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지요.

보도국장, 보도전문채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언론사는 신문, 방송할 것 없이 대한민국이 민주화된 이후에 줄기차게 보도책임자의 선임·임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도 해 봤고 구성원들이 먼저 다수의 후보를 추천하는 복수후보추천제도 해 봤고 사장이 먼저 낙점하고 구성원들이 동의해 주는 임명동의제도 해 봤고.

이런 실험과 실패와 정착 과정, 수없는 노력을 40년 가까이 이어 오면서 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그나마 유효한 제도라고 확인한 지가 십수 년입니다. YTN에도 보도국장 복

수후보추천제에서 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도입돼서 보도국장 임명을 사장이 하고 사원이 동의하는 이 절차를 지속적으로 밟아 왔는데 김백이 이걸 하루아침에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꿈도 못 꿀 인사를 보도국장으로 낙점합니다.

YTN의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는 이제 방송법이 개정되면 법에 의무가 되겠지만 작년 이 무렵 이 당시에는 단체협약으로 시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단체협약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 회사 내에서는 법에 우선합니다. 그걸 무시하고 본인 말 잘 들을 것 같은 사람을 찍어요. 그 사람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특정 노동조합 소속입니다. 그래도 저는 노동조합 욕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의 자유잖아요, 권리이고.

김응건 보도국장이 김백 사장이 처음 지명한 보도국장입니다. 1년도 못 채우고 물러났습니다. 회사 일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보도 조직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돌발영상’ 삭제하고 불방시키고 말 안 듣는다고 ‘돌발영상’ 제작진들 다 교체해 버리고, 지금처럼 할 거면 ‘돌발영상’ 폐지하십시오. ‘돌발영상’ 창시자로서 YTN 구성원들과 함께 ‘돌발영상’을 키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라도 치욕스러워서 못 참겠습니다.

윤석열 비판하는 ‘돌발영상’ 만드는 것, 윤석열이 술 찾는 게 그게 비밀입니까? 공무 중에, 공식 일정 중에 소주 한 병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말을 보도해야 합니까, 숨겨 줘야 합니까? 그것 보도했다고 ‘돌발영상’ 방송을 못 하게 해요? 삭제해 버려요? 제작진을 교체해요?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제작진, 당장 자존심을 지키십시오. 김응건 보도국장, 지금도 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제가 그 비루한 정권의 나팔수 김백의 추종자 역할을 하지 말고 제발 구성원들 상식에 부합하는 그런 운신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지만 잘된 일인지 못된 일인지 몇 달 전에 보도국장직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후임 보도국장, 지금 보도국장 김호준 그 역시 김백이 그냥 내리꽂았습니다.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김호준 씨는 모릅니까? 그것 그렇게 넙죽 받고 싶어요?

누가 YTN같이 경영상의 아픔을 집단적으로 겪은 조직에 월급 많이 받는 자리 준다고 넙죽넙죽 받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원배 전무는 얘기했고요, 지금 라디오 사장.

제가 이렇게 굳이 실명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기자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십니다, 우리들한테는 잘하니까. 출연하고 오면 심지어 제 얘기를 하더랍니다, 뻔뻔스럽게.

7개 본부가 신설됐습니다. 임원급입니다.

전략기획본부장 이상순, 이자는 누구인가? 류희림 민원사주에 동원된 자입니다.

보도본부장 김종균, 이자는 뒤에서 특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충성 보도의 장본인입니다.

영상본부장 김인규, 경영본부장 이동우, 채널본부장 오승엽, 기술본부장 류근민, 신사업추진단장 류제웅…… 이 류제웅 씨는 과거 최남수 사태 때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김재련 변호사의 남편이고요.

김종균 보도본부장, 박근혜정부 청와대 출입기자였던 당시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매력적인 대통령, 진가 발휘하고 돌아왔다’.

매력적인 대통령…… 세월호 참사 당시에 얼마나 국민 여론이 안 좋았습니까? 구조 실패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을 때 이 기자는 대통령을 매력적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이동우 경영본부장, 지금도 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011년 이동우 씨의 배우자가 관련된 영어교육센터를 홍보하는 기사를 타 부서 후배 기자에게 쓰도록 했다가 이 기자가 응하지 않자 직접 기사를 쓰는 과감함을 보였습니다. 그해 징계받았고요. 2018년에도 사내 성희롱 문제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인규 영상본부장, 차기 경영진, 그러니까 김백 경영진의 노조 탄압 전략 편지를 썼던 것으로 드러난 자입니다. 영상기자고요. 영상취재부가 극단화되고 강성노조원들이 많다, 보도국 기자라는 우월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대처해야 한다, 자기 시켜 주면 잘하겠다.

이런 자들이 윗물이 되면 아랫물이 저절로 깨끗해지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오셨는데 아름답지 못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매우 송구합니다.

YTN은 구성원들의 모진 노력, 어려운, 힘든 10년 가까운 해직 사태의 아픔을 겪으면서 '흑자가 안 나면 누군가가 우리를 흔들 수 있다', 허리띠 졸라매고 그렇게 회사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써 왔는데 정권을 등에 업고 사장 자리를 차지한 자가 자기 측근들 챙기겠다고 급여, 인건비 펑펑 나가는 임원 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공적인 기능을 하는 보도전문채널의 사장일 수가 있겠습니까. 김백만큼은 아니어도 그에 비견할 만한 그런 문제를 지니고 있는 자가 어떻게 KBS 사장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방송법이라도 고쳐서 힘들게 버티고 있는 방송종사자들, 분통 터트리고 있는 이 방송의 시청자들, 우리 공동체의 시민들 편에 국회가 서자는 얘기입니다.

김백 씨가 사장이 되고 줄리 보도 때문에 민영화됐다고 자백을 하고 그 기조에 맞게 보복 인사, 측근 챙기기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한 행동이 대국민 사과입니다. 사과, 좋은 거지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것은 용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백 사장의 이 당시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충성 맹세예요. 김건희 보도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YTN의 사장이 YTN이 했던 권력자에 대한 검증 보도를 조사 활동도 없이, 근거 제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임한 지 이틀 만에 방송 카메라 불러 놓고 이 사회의 공기인 방송채널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김건희 여왕 폐하께, 윤석열 각하께 '저 이런 사람입니다. YTN 접수했습니다. YTN은 그동안 두 분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김건희 보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제가 아는 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송사의 구성원들은 김백 씨의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 보복을 당하거나 징계를 당하는 그런 불이익이 있더라도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삭제를 해도 프로그램을 만들고 회사가 방해를 해도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려고 하고.

YTN의 대표 프로그램 '돌발영상', 아직도 이 브랜드를 유지하고 있는데 김백이 들어가고 완전히 장악됐습니다. 지난해 4월 8일 이때 YTN 노사 간에는 공정방송위원회라는 것을 합니다. 여기에서 '돌발영상' 불방 사안이 공식화되고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논의만 하고 안 바뀝니다. 제작진을 바꿔 버리니까요.

‘돌발영상’만 탄압했을까? 보도국 전체에 지침이 내려갑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김건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선물 받는 그 몰카 동영상 안 본 분이 있을까요? 거의 다 보지 않았을까요? 그 영상이 위험하다고 보도 못 하게 하는 매체가 있을까요?

언론사의 정치적인 성향이 다릅니다만 그 영상 보도 못 하게 하는 언론사는 제가 아는 한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YTN이에요, YTN. YTN 김백 체제 초기 충성 맹세 중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겁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 영상은 방송에 쓰지 마라.

이게 어떻게 보도전문채널에서 가능합니까? 보도전문채널 아니어도 작은 소규모 매체라도 이런 일은 없고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공개돼 있는 영상을 왜 못 쓰게 합니까? ‘저희는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조치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김건희·윤석열에게 불리한 녹취, 방송 못 하게 합니다. 최재영 목사, 명품백을 준 사람이 자기가 이런 일을 했다고 영상도 공개하고 수사받으러 가서 입장도 발표하잖아요. 최재영 목사의 인터뷰는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YTN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보도로 나오는 YTN 가지고 누가 욕먹습니까? 누가 기레기 소리 듣습니까? 일선에서 뛰고 있는 죄 없는 언론인들이, YTN 언론인들이 김백 같은, 김응건 김호준 같은 이런 체제에 협조하고 있는 자들 때문에 애꿎은 구성원들이 욕먹고 있는 겁니다.

제 얘기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일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지난 5월에 나왔던 기사를 제가 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 노종면이거나 YTN 기자 출신 노종면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만큼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만큼은 국회의원 노종면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우리 민주당의 원내대변인 노종면이었습니다. 정치 보도에 제가 원하지 않아도 언급이 되고, 제가 대변인으로서 논평을 내면 기사에 담기고 그런 역할을 상당 기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YTN에서는 노종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출연 섭외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일반 정치 기사에, 일반 보도에 노종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영상은 말할 것도 없고.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활동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YTN에는 노종면은 쓰지 말라는 보도지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5월에 확인됐을 뿐이고 지난해 가을부터, 지난해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던 그 무렵부터 YTN은 노종면의 논평, 노종면의 동정, 노종면의 영상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 놓고 들통이 나니까 한다는 변명이, YTN 출신이라 괜히 더 보도하거나 출연시키면 오해를 살 수 있다.

국민의힘에 YTN 출신 제 동기가 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이라고. 호 대변인은 자주 나가요,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지금도 대변인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해는 여당의 대변인이었고 지금은 제1야당의 대변인이라면 보도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본인들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호준석 대변인 그렇게 알뜰히 살뜰히 챙기면서 노종면 블랙리스트가 탄로 나니까, YTN 회사 출신이어서 자제했다. 어쩜 변명도 수준이 이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윗물이 탁해져 있은 지 오래고, 윗물에 아예 탁한 물질을 뿌린 거고요. 구성원들의 사기는 바닥이고, 그러니 어쩌면 단순 실수라고도 할 수 있을 이런 보도가 실수

로 안 보이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했는데 YTN은 윤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실수가, 어이없는 방송사고가 제 눈에는 구조적인 실패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고 또 나옵니다.

○부의장 이학영 의원님, 잠시 제가 광고 좀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필리버스터로 고생들 많으십니다. 또 나와 있는 장관님, 방통위원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또 우리 의회의 진행을 지켜보기 위해서 학생들이 왔습니다. 홍기원 의원님 소개로 과천시의회 청소년 의정학교 학생 21명이 나와 계십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고 잘 방청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축하 한번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노종면 의원님 계속하십시오.

○노종면 의원 단상이 필리버스터 하기에는 좀 좁은 것 같아요, 자료가 많아서.

유진이 YTN을 인수할 때 비교적 윤석열 정권 초기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꿈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절차가 문제가 많았음에도 그래도 뭔가 좀 해 보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찾아지기는 합니다, 그런 단초들이. 유진은 지금이라도 잘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기대난망이기는 합니다.

내란이 터지고 사회가 대혼란에 빠지고 국민들은 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찬 바닥에서 외치고 견디고 간절하게 소원하고 그랬는데 유진은 '야, 이러다가 정권 바뀌면 YTN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의 회로가 작동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YTN 지분을 압도적으로 늘리기 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2023년에 있었던 매각 절차, 입찰에 들어가서 그것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지분이 30.95%, 31%예요.

그런데 이 퍼센티지는 다른 대주주들이 또 남아 있거든요. 투자의 의미로 지분 참여한 대주주도 있고 또 2대주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삼공사. 이런 다른 중·대주주들 몇 개를 합치면 유진의 지분을 이겨요. 그래서 경영권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증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증자 계획을 발동해요. 그리고 YTN 이사회를 더 튼튼하게 장악하려고 합니다.

유진은 워낙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방통위의 매각 승인을 받을 때 조건이 부여됐습니다. 매각 승인 조건, 'YTN을 운영하는 권리를 이 조건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승인한다'. 그 조건 중의 대표적인 것이 '이사회를 장악하면 안 된다'예요. 이게 김홍일 방통위조차도 보도와 경영, 편성과 경영은 분리돼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 입장을. 그건 방송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내놓고 부인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에 유진 봐주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 조건을 붙여야겠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자문위원들도 다 반대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간 대표적인 승인 조건이 '이사회에 대주주나 유진그룹 관계자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예요. 그런데 여기에 유경선의 오랜 골목 친구도 들어갔고요, 유진그룹 계열사 관계자들이 대거 들어갑니다.

YTN이 이사회의 구성원을 늘리고, 이사회의 구성도 늘렸어요. 여러분들, 방송법 개정으로 KBS·MBC 이사회 늘리는 것, 이래서 우리 공동체가 입을 피해 없습니다. 유진 같은 이런 못된 기업들이 하는 작태에 대해서 더 찾아내고 대처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YTN이 이사회 구성을 늘리고 친유진그룹 성향으로 알려진 사외이사를 추가 선임하겠다고 예고하며 내부 반발을 부르고 있다. 유진그룹의 공적 지분 인수에 따른 YTN 민영화를 반대하는 내부 구성원들은 유진 식민지 체제의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게 올해 3월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 3월에 이런 것 신경 쓸 새 있었어요? 헌재 결정이 언제 나오나 조마조마 애태우고 이럴 때 유진은 자기 지배력 강화하려고 이 수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방통위 매각 승인 조건조차 어기면서. 감시·감독해야 될 이진숙 방통위 체제는 눈감고 못 본 척 꿀 먹은 벙어리처럼…… 그러니 다 공범들인 겁니다, 촘촘하게.

누가 들어갔나? 김진용, 조성욱, 김경록 그리고 원래 김진구라고 유경선 총수의 집사로 불리는 사람이 YTN 인수 때문에 만들어진 유진이엔티라는 회사의 사장을 맡고 있으면서, YTN 사내이사였는데 그건 당연직이기 때문에 유진 관계자여도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유엔이엔티 사장이 바뀌면서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김진구를 안 뺐습니다. 그러니 김진구 유진 관계자, 그다음에 김진용—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어린 시절 목포에서 함께 자란 친구 사이로 유경선 회장에 이어 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 회장을 맡기도 했고, 유경선 회장이 하이마트 창업자와 경영권 분쟁을 벌일 당시 사외이사로 창업자 해임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그냥 부인할 수 없는 친구 사이입니다. 이자는 김진용 삼성출판사 대표예요. 김진용 대표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경선 회장과는 골목 친구로 어울렸다. 한동네에 살며 같이 뛰놀았다. 나란히 트라이애슬론연맹 회장을 맡았다'. 조성욱, 법무법인 화우의 대표변호사입니다. 검찰 출신이고요. 유진투자증권 법률고문 맡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넣지 말라고 한 거예요, 방통위가.

유진그룹이 이런 이사 알박기 그다음에 지분 알박기, 그 지분이 지금 40% 가까이 육박합니다. 39%대예요. 지금 다른 주주들 합쳐도 유진 못 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분 대결을 통한 경영권 회수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자하는 과정에 보통 기존 대주주들이 그러면 왜 지분을 안 늘렸을까? 유진이 마음대로 자기들만 인수한 거예요. 사전에 설명하고 협의하지 않고 막판 통보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할게' 이사회에서 띡…… 그리고 제삼자 배정 없이 자기 배정 다 받아 버렸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증자도 그러니까 위법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재승인 조건 위반입니다.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라면 김백이라는 자가 사임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달에 사임을 했습니다. 저는 김백이라는 자가 스스로 자리 내놓을 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직전까지도 국회를 향해서, 특히 민주당을 향해서 엄청난 로비 시도를 했거든요. 하다 하다 저한테도 만나자고 하더군요, 중간에 다리를 놔서. 그게 안 통하니까, 민주당이 통할 리가 없지요. 국민의힘은 힘이 없고, 대주주는 알아서 살아 보라고 그러는데 살아날 재간은 없고 유진 입장에서 쓸모가 다했으니 방출한 것으로 저는 규정합니다.

아무튼 김백은 떠났습니다. 이제 유진만 떠나보내면 됩니다. 이 과정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안 들게,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유진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이윤 추구하는, 정

상적인 방법으로 이윤 추구하는 기업의 본분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버틸 경우에, 물론 방통위를 정상화해서 유진에게 주어졌던 방송사업권 당연히 회수해야 합니다. 왜? 부당하고 나아가서 위법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 유진이 버틴다면 결국 지금의 지분을 내놓게 되겠지만 감당하기 힘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시민사회단체가 유진에 대해서 다수의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 조치 중에 제가 지난 YTN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던 총수 일가, 유경선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의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읽는 것으로 대신하지요.

90여 개의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유진그룹의 유경선 회장 일가 소유 기업에 대한 부당 지원 의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지난해 YTN 공기업 지분을 인수한 유진그룹 총수 일가가 과거에 계열사를 동원해 700억 원대의 사옥을 매입했고 이를 통해 사익을 편취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문제의 700억 원대 사옥은 그 당시 매입 가격이고요, 이 사옥은 현재 유진그룹의 여의도 사옥입니다. 어떤 계열사가 동원됐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신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여기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유경선 회장 일가가 세운,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세운 게 아니라 유경선 일가, 유진그룹의 총수 일가가 사적으로 만든 부동산 기업이 있습니다, 천안기업이라고. 유진 계열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천안기업이에요. 여기에 유경선, 유경선의 형제 등이 지분을 넣습니다. 1996년에 자본금 2억 원으로 회사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기업이 700억 원을 땡겨서, 땡겼다는 속칭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감을 전달하기에는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700억 원 가까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땡겨서, 누구의 보증으로? 유진의 보증으로. 그래서 사옥을 매입합니다. 그다음부터 이 사옥 임대업을 천안기업이 하는 거예요. 사적으로 만든 기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를 동원하고 그렇게 만든 자산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했어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천안기업의 지난해 연매출, 그러니까 본사 임대사업을 천안기업이 독점적으로 하면서 자본금 2억 원짜리 회사가 얼마나 커졌느냐? 지난해, 2024년 연매출이 80억 원, 당연히 본사 건물을 임대했으니까 계열사로부터 다 수익이 온 거지요. 80억 원 매출 중의 94%, 75억 원이 유진 계열사로부터 임대수입 받은 거예요.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총수 일가라고 이렇게…… 땅에 손 짚고 헤엄을 쳐도 유분수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2억짜리 회사 만들어서 이 정도 키웠으면 이제 먹고 튈 때가 된 거지요. 지난해 11월 유경선 회장 일가는 천안기업 지분을 유진기업에 팝니다. 유진그룹의 대표 회사 유진기업에 자기들 기업 지분을 팔아요. 유경선 회장이 챙긴 매각대금 149억 원, 동생 유창수 97억 원. 이런 부도덕한 자본이 24시간 보도채널, 사회의 공기…… 이거야말로 범죄자에게 흉기를 주는 거예요. 하루빨리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우리 국회도 노력해야 하고 특검도 YTN 매각의 진상이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더 수사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송에 대해서 제도를 만들고 법 개정을 놓고 다투고 이런 과정이 어떤 제도의

개선으로 나아가고 이게 우리 공동체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 시간을 이겨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가? 방송사 종사자들이 원 없이 일하게 해 주는 것? 그거는 아닐 거예요. 물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그런 제도가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 기능을 방송법도 일부 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궁극의 목표는 공정한 보도가 언론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그 보도를 소비하고 향유하는 주체는 우리 공동체의 주인, 국민이기 때문에 공정한 보도, 그래서 공정 보도, 언론 자유 이런 가치들은 결국은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

저는 언론인 출신이어서 그런지 미디어와 관련된 이러저러한 강의, 강연에 초대받아서 다수의 청중들과 대화를 하곤 합니다. 제가 반복이 된다는 것을 감수하고도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을 언뜻 들으시면 저를 사회의 불신을 조장하는 세력으로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미디어를 믿지 마라. 그리고 미디어를 소비하는 자신도 믿지 마라'.

미디어를 꽤 많이 소비해 왔다고 자부하는 분들 중에 그 누구도, 심지어 언론인으로 전문적인 활동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 누구도 인간인 이상 미디어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언론인 활동을 하면서도 지금 언론인들이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하는 매체 비평을 매우 오랫동안 천착해 왔어요. 그리고 저는 언론끼리 서로 이해하고 또 언론인끼리 연대할 때는 연대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보도로서는 상호 간에 늘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진정한 경쟁이고 또 상대, 동료들이 다니는, 내 출입처에 동료들이 다니는 회사라 할지라도 보도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공적인 책무를 수행한다는 그런 자세로 매체 비평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이루어질 때 그런 경쟁 관계에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아는 게 많은, 그래서 미디어의 그런 왜곡 기술을 잘 아는, 그래서 전문가들 눈에는 보이는 그런 오보나 왜곡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는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더 위험하다. 그래서 대전제는 '미디어는 태생적으로 위험한 존재다'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 출발한다라는 말씀을 청중들께 말씀드려 왔습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접하는 방식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내가 원할 때 보도를 소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나도 모르게 보도를 봐 버립니다. 보기 싫을 때 눈을 순간적으로 팍 감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 이 채널 싫어' 하고 돌리는 사람은 있어도, 내가 언제 뭘 봤는지도 모르게 뭔가를 늘 보고 있어요. 식당에 켜져 있는 TV 속에 시뻘건 큼직한 자막으로 자극적인 문구가 내 눈에 들어오면 '아, 나 저것 안 볼래. 나 저것 기억하지 않을래' 그럴 수 있나요? 공항 대합실에서 TV 여러 대가 켜져 있지요. 내가 무엇을 봤는지 한 30분만 지나도 잘 몰라요. SNS 막 이렇게 넘기면서 보다가 내가 세워서 본 건지 지나가다 본 건지 내가 이걸 클릭은 한 건지 그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렇게 플랫폼은 다양해졌고 미디어 소비 행태는 복잡다단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할 수 있어요, 내가 본 것을 모르는데? 그러면 내가 본 것은 잘 기억하고 내 머릿속에 박제돼 있겠습니까?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사람은 기억하는 존재이며 기억이 왜곡되는 존재예요. 나의 의지가 '기억해야지' 하는 쪽에는 반영이 되지만 그 의지대로 안 됩니다. 까먹을 수도 있고, 까먹으면 다행인데 정

반대로 기억하는 경우도 다반사예요. 그런 경험들 아마 다들 해 보셨을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지하철 가판대에서 신문들 1면 제목만 보게 쭉 진열해 놓은 것 슬쩍 보고 가잖아요, 서서 보기도 하고. 어떤 매체인지 가려서 보기 힘든 상황 속에서 보기도 합니다. 전철에서 옆 사람이 보고 있는 신문을 어깨너머로 보기도 하고 식당의 TV, 지금보다는 덜하지만 그때도 있었고요, 라디오도 흘러나왔고 버스 타고 가다가 듣는 라디오 속의 기사들, 제 의지와 무관하게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보도의 방향·내용·키워드……

지금 이 사회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결국 기억에 남게 될 가능성이 높은 그 한 단어만 집중적으로 부각시키자, 맥락 필요 없다, 한 줄로 승부하자, 그래야 사람들이 보는 시대다 그래서 짤 만들고 쇼츠 만들고, '어차피 신문 기사 본문은 기자들이 써 오니까 쓰지만 그것 제목하고 비교해 보는 사람 없어. 제목은 멋대로 달아도 돼' 제목 장사하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정말 공영 언론사 지배구조를 이렇게 바꾸면 KBS, MBC, YTN, 연합뉴스TV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자극적인 보도 하고 나쁜 보도 하고 그렇게 된다고 믿으십니까? 그게 안 되는 쪽으로 기능하지 않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면서 사례별로 좀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는 나쁜 보도,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왜곡 보도, 편파 보도 이런 판단을 너무 주관적으로 해요. 뭐 저도 주관이 있을 거고요. 법은, 정책은 그런 주관의 영역을 객관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과정인 거지요.

어떤 것이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오보인가, 어떤 것이 우리 법이 허용하면 안 되는 왜곡 보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눠 보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온 지 이제 1년하고 몇 달, 얼마 안 됐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가짜뉴스 사례…… 저는 사실 가짜뉴스라는 용어부터 추방했으면 좋겠어요. 가짜라는 규정 자체가 사실 객관적인 표현인 건 맞는데 사용을 하면서 주관이 이미 들어가서 가짜뉴스는 주관적인 용어가 돼 버렸습니다. 류희림의 방송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대응센터를 만드는 순간 저는 용어 사용에 혼란이 왔다고 봐요. 그 전에도 비슷한 흐름이 우려스럽게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가짜뉴스 대신 허위조작정보, 우리가 배격해야 할 허위조작정보, 혐오 보도, 오보 이런 것들을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많이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가짜뉴스라고 얘기했던 그 표현을 제 식대로 이해하면 허위조작정보, 허위 보도라고 했던 것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글귀를 읽어 보겠습니다. '부산저축은행 회장 사촌 처남인 대출브로커 조우형에게 오늘은 올라가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 물어보는 질문에 다 협조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우형이 검찰에 출석해서 2회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실제로 주임검사가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 줬다고 했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 줬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따옴표가 처져 있는 화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남욱 변호사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검찰 조사받으면서 검찰 수사관 앞에서 한 발언이에요. 조우형에 관한 얘기를 한 겁

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하라고 했는데 조우형 같은 사람을 봐준 거 아니야라는 수사 무마 의혹 사건, 그게 이 부산저축은행이라는 여섯 글자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여기 화면 맨 윗줄에 있는 조우형은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의 핵심 인물 회장 사촌 조카예요, 대출 브로커고. 자기 친인척의 힘을 빌려서 대출브로커 짓을 했던 거예요. 조우형도 그 당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참고인 조사다, 피의자 조사다 이렇게 입장이 갈리기는 하지만 조사를 받은 사실은 팩트입니다. 언제? 21년도에. 누가 수사할 때? 윤석열이 수사할 때. 윤석열이 그 수사팀의 뭐였는데? 대검 중수부의 주임검사였습니다.

그런데 남욱이 조우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조우형이 수사받으러 갈 때 조언을 해 줬다는 얘기를 검찰에서 하는 겁니다. 이 검찰 진술조서가 2021년 11월에 작성됩니다. 대선전이 막 달아오를 때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이 대선후보로 선출된 직후에 남욱은 검찰에서 조우형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오면 돼. 내가 다 얘기해 놨어' 이런 맥락이 깔려 있는 거지요. 그랬더니 조우형이 나와서, 조사받고 나와서 남욱한테 얘기했대요. '형, 내가 갔더니 주임검사가 커피 타 주던데, 진짜. 그리고 내가 두 번째 간 건데 되게 잘해 줬어요' 그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임검사가 누구예요? 이것 맞추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2021년 11월 19일에 작성된 남욱의 검찰 조사고 이 조서가 작성된 직후에 JTBC 등이 보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집중하는 커피 타 준 검사 윤석열 보도. 이게 대선 직전에 나온 게 아니라 2021년 11월에 나온 거예요, 그것도 김만배 입이 아니라 남욱의 입에서.

자, 그러면 윤석열이 주임검사였던 것은 팩트인가? 예, 팩트입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조우형에게 커피 타 주고 봐줬나? 커피 타 준 자는 윤석열이 아니에요. 봐줬는지 여부는 몰라요, 아직. 제가 볼 때는 봐준 것 같아요, 아주 단단히 코가 꿰이도록. 그런데 그건 뭐 아직 모르니까. 그런데 커피 타 준 자는 윤석열이 아니라 박길배예요, 그 당시의 담당 검사.

자, 그러면 남욱은 왜 주임검사라고 했나? 이건 남욱이 얘기해 줘야 돼요, 주임검사를 윤석열로 착각하고 얘기한 건지, 아니면 담당 검사랑 주임검사 개념 자체를 혼동해서 박길배인데 주임검사라고 잘못 얘기한 건지.

자, 다 떠나서 이때 2021년 11월의 보도는 모른다고 칩시다, 대선 직전에 뉴스타파 보도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뉴스타파가 보도하기를 윤석열이 조우형 커피 타 줬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예, 윤석열이 조우형 커피 타 줬다라는 건 새빨간 거짓말 맞아요.

그런데 그게 뉴스타파를 향한 비판이 되려면 뉴스타파가 그렇게 보도한 게 전제되어야 되잖아요. 뉴스타파 보도는 보셨습니까? 몇 번을 설명을 해 줘도 애써 모른 척해요. 제가 기사를 띄워 줘도 모른 척해요.

다시 보십시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김만배 음성 파일을 녹취록 풀어서 보도한 뉴스타파의 대선 직전 보도입니다. 제가 편집한 것 하나도 없어요. 이게 김만배가 신학림한테 해 준, 자기가 조우형·윤석열 관련해

서 한 얘기들이에요.

작은 글씨는 신학림. 뭔 대화를 하다가 “누가? 박길배 검사가?”, 이때는 박길배를 익명 처리했습니다. 이후에 실명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얘기합니다. “누가? 박길배 검사가?”, “윤석열이가 ‘니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김만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림이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이것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지요? 그랬더니 김만배가 “응. 박길배가 커피 주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남욱이 했던 얘기랑 일맥상통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윤석열 얘기가 나와요. 이게 다 박영수, 윤석열, 박길배 이걸 다 한 팀으로 보고 지금 판을 읽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박영수 변호사—조우형을 변호했던 사람인데—‘윤석열 검사와 통했던 거야, 이때 주임검사랑?’, 그러니까 이 사람들 대화 속에서 커피를 타 준 사람이 박길배인지 아닌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중수부 수사 과정에서 조우형이 겁도 안 먹고 커피나 찍찍 받아 마시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물 변호사인 박영수가 윤석열하고 통했던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김만배가 “윤석열은 데리고 있던 애지.” 누가? 박영수가. 그러니까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봐줬다는 거야?”,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골인시키고, 아까 그 친인척 김양 부회장도 골인시키고 그랬지.”

이 대화가 조작이라고요? 그리고 뉴스타파가 윤석열이 타 줬다고 조작했다고요? 어디 조작했습니까? 기사로 푼 것에도 박 검사가 줬다고 돼 있어요.

다음 것 보세요.

이건 뉴스타파의 기사 문장입니다. ‘뉴스타파는 김만배 음성파일 내용과 관련해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후보,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 씨와 조 씨를 수사하면서 커피를 준 것으로 언급된 박 모 검사에게 연락해 입장을 물었다’ 이게 대선 직전에 뉴스타파가 쓴 기사예요. 박길배가 타 줬다고 했잖아요. 왜 윤석열이 타 줬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십니까들?

‘조우형 사건을 수임한 것은 기억나지만’, 박영수가 특검 출신 거물 변호사로 이 사건을 수임한 것은 팩트입니다. 그걸 박영수 측에서 인정한 말이에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누구의 소개로 수임한 것인지, 검찰 관계자에게 부탁을 했는지, 김만배에게 질문과 같은 취지의 말을 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난대요, 생짜로.

다음 장도 뉴스타파에 나오는 겁니다. ‘누가? 박 검사가?’ 그거 있잖아요. ‘통했지. 그냥 봐줬지’. 언론이 보도를 할 때 뉴스타파처럼 이렇게 보도를 길게 한 언론은 거의 없었어요. 일부를 뚝 잘랐어요. 지금 제가 붉은색 박스를 쳐 놓은 이 부분을, ‘그냥 봐줬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강조한 언론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이 보도를 싫어하는 분들이 이걸 윤석열하고 막 연결시키시는 것 같아요.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에 무관하게, 무관하지는 않지요. 사실관계에 연결돼 있지요. 본질은 2011년도의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제대로 수사됐는가 그겁니다. 커피를 누가 타 줬고 안 타줬고는 지엽 말단이고, 그게 누구면 어때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 가을부터 해당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넘겨 주십시오.

한겨레도 보도했고 경향신문도 보도했고 한국일보도 보도했고 JTBC도 보도했습니다. 핵심은 대장동의 불법대출을 확인하고도 덮어 준 게 아니냐, 2011년도에 조우형이 조사받은 것은 팩트, 그때 검사가 윤석열은 팩트. 그런데 조우형은 재수사해서 구속됩니다, 같은 혐의로. 그러니 2011년도의 수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면 억울하면 아니라고 해명하고 겸손하게 설득해야지 하지도 않은 보도를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본질도 아닌 커피 타 준 것 가지고…… 그걸 다 알고 그랬을까 봐 겁이 납니다. 부디 보도 내용을 제대로 몰라서, 당의 입장이 그러하니 당을 믿고 정확지 않은 사실관계를 얘기한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좀 오래된 오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보가 이따금씩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거나 사회에 큰 혼란을 끼치는 오보는 많기 어렵지요. 오보도 사실 막 빈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보의 개념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보도까지도…… 내 기준에는 이건 뒤틀린 것 같고 방향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럴 때 오보라고 규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일반인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오보는 사실관계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실수를 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아주 뜨거운 이슈이고 그게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그럴 확률은 매우 떨어지지요. 그런데 대표적인 오보들은 보면 다 그런 큰 이슈하고 연관돼 있어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 고리를 어떻게 끊어 낼 것인가 그게 우리들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일보가 2009년도 말에 1면 톱기사로 보도했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매체 비평 분석 활동을 하면서 만들었던 PPT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보도의 제목을 '사라진 특종'이라고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아시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 2년 차, 1년 차의 광우병 촛불 그 시기를 지나서 무지막지한 탄압을 가하던 2009년도, 용산 참사가 일어났고 언론장악의 강도가 더 드세졌을 때 철도노조가 파업을 했습니다. 공기관 선진화라는 그런 미명하에 철도 코레일이라는 공기업을 민간화하려고, 사영화하려고 입장을 밀어붙였어요. 그럴 때 내가 다니는 회사가 팔려 간다는데 걱정 안 할 구성원들이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회사 직원들이 있겠어요, 게다가 노조까지 있는데? 그래서 노조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반대 파업을 벌입니다. 2009년 5월부터 파업을 이어 가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9년 말에 중앙일보 보도가 나올 때까지 긴 여정이 있었어요.

파업이 시작되자 이명박 정부는 대대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언론은 일사불란하게 정권의 편을 들어 줍니다. 대통령이, 이명박이 잘못된 건 과감히 바로잡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노조의 단체행동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감히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어? 나쁜 거예요.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움직였고 체포당하고 수배 내려지고 압수수색당하고 그런 긴 여정 끝에 12월 3일에 철도파업은 끝납니다. 사실상 코레일 노조가 더 못 버틴 거라고 저는 이해해요.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다 끝나면 파업할 때보다 어떤 탄압의 강도, 절대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마음이 파업하고 있을 때는 내가 노동조합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내

생활이 불편해지면 ‘왜 또 파업이야’ 이런 생각 하지요. 평범한 생각입니다, 매우 자연스럽고.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노동조합을 때려잡고 체포해 가고 그러면 또 ‘정권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지요.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파업이 끝나면, 파업 전에 압박을 가할 때는 언론이 동원되고 일부러 공직자들이 나와서 강경한 입장을 발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파업이 끝나면 조용히 뒤처리를 합니다. 사내 징계를 하고 손배·가압류 들어가고 이런 뒷작업들을 하지요.

철도노조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만 1000명이 징계를 당합니다. 전국에 있는 코레일 노동조합원 1만 1000명이 단기간에, 하루에 사오백 명씩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그 속도전 속에 무려 1만 1000명이 징계를 당합니다. 어마어마한 보복이 감행됐어요.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각종 불이익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파업과 뒷수습이라고 포장된 보복 이 사이에 언론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봐요.

중앙일보의 보도는 12월 4일 자입니다. 1면 톱기사로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파업으로 열차가 멈춘 그날 어느 고교생의 꿈도 멈췄다’. 제목만 봐도 가슴이 좀 찡하지 않습니까?

철도파업이 이루어지면 철도 운행에 차질을 빚게 되지요. 물론 필수인력이 상당 비중으로 투입이 되고 또 대체인력 투입이 일정 정도까지 가능한 직역이기 때문에 운행률이 팔구십 %는 늘 됩니다. 그래서 배차 간격이 늘어져도 제한적이기 마련인데, 어찌해도 배차 간격이 늘어났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선의의 피해를 당했다면 그 피해자의 입장이 가슴 아픈 거지요.

하물며 이 학생은 가난한 가정에서 어렵게 공부해서 전교 1등을 하고 다른 대학도 아니고 서울대학교에 면접 보러 가던 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철도파업 때문에 지각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이 그거예요. ‘파업이 불법이고 합법이고 다 필요 없어. 이런 선의의 피해자를 봐’, 이 기사는 강력하게 그런 주문을 걸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사실 사실이라면 두둔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부의장 이학영 의원님,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복기왕 의원 지역구이신 충남 아산의 탕정미래초등학교 학생들 11명 와 계십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박수)

잘 마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계속하십시오.

○노종면 의원 이 학생 서울대 면접에 못 가고, 그러니 탈락했겠지요? 이분 부모님 인터뷰가 이 기사 안에 실려 있습니다. ‘남들은 다 자가용 태워다 주는데 형편이 어려워 혼자 전철을 태워 보낸 못난 부모가 죄인이다라며 가슴을 쳤다’. 이게 사실이면 노동조합이 당연한 합법 기관이고 또 쟁의권을 이해하는 입장에서도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철도노조가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가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지 않은 사안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금방 판단을 내려 줘요. 학생 면접 지각과 파업에 상관성이 없다, 무관하다.

보통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 중재하기 어렵거든요.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반론을 하라든가 이렇게 서로 타협을 시키지 일방을 손들어 주면서 정정보도 하라고 잘 못 합니다.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는 정정보도 하라고 결정을 내려요.

그런데 중앙일보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그다음 수순은 소송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소송을 하게 돼요. 언론사들이, 특히나 대형 언론사들이 이 언론중재위원회가 법적인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공적 제도인데 이것을 거의 수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정정보도를 거부하고 중앙일보는 소송을 택했어요.

이런 선택을 언론사들이 하는 이유는 한 가지, '시간이라도 벌자. 사람들은 잊는다. 그리고 이 이슈가 잦아들면 내가 정정보도를 해야 돼도 사람들이 관심을 덜 가진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끌고 봅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 4일 자 중앙일보 보도는 하염없이 법적 다툼 속에서 오보인지 여부를 다투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1년, 2년 지나서 중앙일보가 이만하게 썼던 보도에 없었던 다른 내용을 요만하게 넣습니다. 1면에 이만하게 실었는데 30면, 신문을 열다섯 장을 넘겨야 30면이 나와요. 거기에 요만하게 넣습니다.

여러분, 반론보도랑 정정보도가 사실은 다른데 정정보도는 '틀렸어'라고 인정하는 거고요, 반론보도는 '나는 인정할 수 없지만 저들은 저렇게 주장해'라고 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반론이라고 하면서 '알려 드립니다'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반론보도인가? 아니에요. 소송하다가 재판부가 '너네 이것 오보 맞잖아. 그러니 정정보도를 싣거나 아니면 반론보도를 싣고 대신 기사를 삭제해' 그래서 중앙일보가 정정보도는 못 싣겠고 '그래, 반론은 실을게요. 기사는 삭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뒤흔들었던, 사람들 가슴을 아프게 했던, 철도 노동자들을 나쁜 놈으로 만들었던 중앙일보의 그 기사는 사라졌습니다. 특종이라고 자랑했던 그 기사 지금 찾아보십시오. 없어졌어요. 그걸 가지고 썼던 칼럼들, 사설 다 없어졌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보도로 인해서 일어날 일들은 이미 다 일어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1000명이 전원 징계를 당했습니다. 이 가운데 해고자가, 단일 파업에서 해고자가 169명, 해고자가 무슨 의미인지 애써서 모른 척하시면 안 됩니다.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 생계를 이어 가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거예요. 직장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여기에는 혼자 사는 청년도 있을 수 있고 가족을 챙겨야 하는 가장이 있을 수도 있고.

169명을 해고시킬 수 있는 배짱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저는 언론의 동조였다고 봅니다. '양대 노총, 경제 회복에 재 뿌리기로 작정했냐',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조합비…… 노동조합 조합원들 많아서 회비가 많이 걷히는데 이것도 죄예요? '조합비 연 110억…… 철도노조 배짱파업의 힘'. 한 달에 1만 원씩 내면 이렇게 돼요. '시민은 참아 줬고 정부는 원칙 지켰다'. 이런 피바람이 불게 하는 언론의 빌드업입니다. '법과 원칙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철도파업'.

그때 코레일 사장, 철도공사의 사장이 경찰청장 출신의 허준영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많이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오보의 주인공이었던 학생, 그 학생은 죄가 없지요. 그렇지요? 서울대 면접에 떨어졌다는 그 학생을 위해서 모금운동을 벌였습니다, 대대적으로. 그리고…… 이 얘기는 좀, 하여튼 그것은 그랬다 쳐요.

그런데 파업 참가자들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줬다고 했잖아요. 자녀들 장학금도 잘랐습니다. 노동조합이 그렇게 밉습니까? 이것은 2009년의 상황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왜 아직도 이러지요?

다음 사례도 좀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기사입니다, 아주 오래된 기사. 1948년 남북한에 단독정부들이 수립된 직후 '동아일보, 역사를 바꾼 18자 괴담'. 어떤 기사인가? 해방이 되고,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 정부 그다음에 북한의 김일성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3년 동안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일종의 약소국으로 2차 대전의 결과로서 독립이 됐기 때문에 강대국들, 2차 대전 승전국들이 이 한반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하던 끝에 신탁통치라는 개념이 나왔지요. 그래서 찬탁과 반탁으로 우리 남한사회는 양분됐습니다, 정치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짐작도 못 할 만큼의 그런 어려운 시기, 극도로 혼란한 시기, 무서운 시기를 거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보도가 있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 이런 것 많이 들어 보셨을 테고 '모스크바 3상 회의' 역사책에서 배우셨을 텐데 기억을 좀 돌려 보시지요.

동아일보 기사 제목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 반면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소련은 신탁통치, 미국은 즉시 독립.

여러분들, 그 당시 미국과 소련의 입장이 그랬다고 그렇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배우셨나요? 모르긴 해도 다들 어렴풋이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다음 것 넘겨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그때는 미국도 소련도 믿지 못한다 이런 인식들이 팽배했을 때고 정말 나라의 운명을 정하는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보도였고 그것을 조선일보, 신조선보 등등 그 당시에 동아일보 이외의 다른 언론들도 똑같이 보도했어요. 이른바 베껴 쓰기, 베껴 쓰기의 신공은 그때도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사실인가?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신탁통치를 제안한 나라는 미국이다, 알고 계셨나요? 동아일보 오보 다음 날 나온 '모스크바 결정'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장 넘길게요.

미소 그리고 영국의—그래서 모스크바 3상 회의지요—'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결정서', 1945년 12월 28일에 동아일보 보도 직후에 나온. '한국을 독립국가로 재건하며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임시정부 원조를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최고 5년의 미·소·영·중 신탁통치안은 임시정부와 협의해서 제출한다'. 앞단에 있는 임시정부 수립은 소련의 주장이고, 신탁통치안은 미국이 냈다가 임시정부와 협의하는 것으로 후퇴했고.

그런데 이후 보도도 마찬가지로 몰아가기였다고 합니다. 이미 '소련, 죽일 놈'이 확 올라왔기 때문에, 모스크바 결정은 소련이 주도했고 신탁통치이고 결국 식민지 유지다, 그래서 찬탁, '아니야, 이 방안 정도는 받아야 해'라는 그런 입장은 반대 세력에 의해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지금 송진우라는 한민당 당수 피살 보도를 보고 계신데 백주 대낮에 암살이 횡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자기네 세력 내에서도. 이런 틈바구니를 친일파가 그냥 놔둘 리 없지요.

내가 반탁에만 서면 나의 신분은 세탁이 된다.

저는, 보도 하나 가지고 역사가 바뀌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요. 그런데 보도가 조금 더 정확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미군정 배후설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 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있고요. 동아일보의 보도를 지금은 당연히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왜 그렇게 중요한 정치적인 격변기, 민감한 이슈가 불거질 때는 이런 오보들이 나오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이 언제인가요?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지금 당명이 몇 번 바뀌어서 국민의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한나라당 당대표를 뽑는 경선 때 돈봉투가 뿌려졌다고 그 당시에는 친이계로 분류되던 고승덕 당시 한나라당의 의원이 폭로를 했습니다. 그때 당대표 당선된 사람이 박희태 당시 대표인데 그때 비대위를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맡고 있었고 그래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건 문제가 있네 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국회의장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대표였지만 이 사안이 터졌을 때는 국회의장이었어요.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승덕 의원이 계파를 바꿨나 이런 의견도 분분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지요.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한나라당은 그 당시가 총선까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불과 얼마 전에 디도스 사건이 터져 가지고 매우 궁지에 몰려 있을 때 또 돈봉투 사건까지 터졌네. 그래서 많은 평론가들 또 언론에서 몇 달 뒤, 석 달 뒤 치러지는 19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은 두 종류밖에 없을 거예요. 돈봉투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런데 그쪽으로 반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쪽으로, '쟤들도 했어'. 한나라당과 대척점에 있었던 정당이 지금 우리 민주당인 민주통합당이었습니다.

바로 현직 국회의장, 한나라당 소속…… 아, 국회의장이니까 한나라당 소속은 아니었지요. 한나라당 출신 친이계의 거두 박희태 현직 의장을 향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날 KBS에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 터집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돈봉투 살포를 목격했다' 이걸 전하는 앵커가 누구인지 아시겠지요? 민경욱 전 의원, 이때 9시 뉴스 앵커 하고 있었어요. 민주당 돈봉투를 봤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뿌리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KBS가 보도하고 다음 날 박희태 수사하라고 했는데 민주당 수사가 대대적으로 시작됩니다. 제가 이때 압수수색 장면을 또렷이 기억해요, 제가 이때 이 기사를 분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자들이 먼저 가서 카메라 뻗치고 찍을 준비를 딱 하고 있을 때 검찰 수사관들이 영화 찍듯이 쫙 들어옵니다. 압수수색을 그렇게 하나요? 못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못 들어오게 실력으로 막고 이럴 때 카메라가 먼저 대기하고 하지요, 정보가 새서. 그런데 이것은 언론플레이 하려고 먼저 흘린 거예요. 기자들이 먼저 가서 압수수색 증거 찾으러 가는데, 실제로 수색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정보를 먼저 흘려서 그것은 압수수색했다 이것 하나 남기는 겁니다.

그다음 날에는 단서를 발견했대요. 조금 전에는 목격자가 있다고 이렇게 따옴표라도 붙였지요. 지금 것에는 따옴표도 없어요. 단서를 발견했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막 MBC도 난리예요. 권재홍 앵커, 경선 장소 압수수색.

신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돈봉투 수사 의뢰 않는 민주당의 구악 체질'. 돈봉투는 기정

사실이 된 겁니다.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이 터졌는데 수사는 민주통합당이 당하고 언론의 비판도 화살도 민주통합당이 받아 내는 상황, 이때가 총선이 있던 해, 2012년 1월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설 연휴 직전이에요.

설 연휴 직전에 이 기사가 딱 터지고 유권자들은 전국적으로 뒤섞입니다. 정치권에서 명절 연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국의 여론이 뒤섞이는 시기입니다. 1년 내내 못 보던 사람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논거를 가지고 그때 바짝 토론하는 거예요. 그 직전에 KBS가 이런 맞불 보도를 했다라는 게 의심스럽지만 사실이라면 할 말 없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 봤습니다. 그 당시의 설 연휴 풍경이 어땠을까. 오랜만에 아들이 한나라당 디도스 사건이 터졌는데 돈봉투까지 터졌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아버지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부지예, 이번에는 1번—그때는 한나라당이 1번이었어요—안 됩니더. 돈봉투가 뭡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이 자슥 이거, 너 여물려면 아직 멀었다. 세상 모르네. 민주당 압수수색 당하는 것 못 봤나' 이러고 넘어가는 거지요. 보도는 이런 걸 노립니다, 실제로.

열흘 뒤, 설 연휴가 지나고 열흘……

정말 죄송한데요, 정말 죄송한데요,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한참 기다렸거든요.

연합뉴스 기사들 좀 보십시오. 설 연휴 열흘 뒤입니다. 검찰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압수수색까지 하더니 내사 종결이래요. 돈봉투가 아니라 행사 초대장이었답니다. 그래서 종결된 거예요. 민주당 봉투는 돈봉투가 아닌 출판기념회 초대장, 수사 종결. 봉투는 봉투인데, 그렇지요? 모르고 했을까요? 적어도 아니라고 할 때 귀는 기울여야지요.

KBS가 희대의 오보를 하고도 저는 악의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만 실수라고 인정하고 반성이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KBS는 검찰이 어설픈 수사로 검찰 신뢰에 타격을 입혔대요, 자기네들이 오보해 놓고. 검찰한테서 뭔가를 받았겠지요. 그러면 사적으로 따져야지요. 너 왜 부정확한 정보 줬어?

KBS 보도, 검찰은 우리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확인하면 돼요. 검찰은 투표가 종료된 뒤에 뭔가 봉투가 오갔다. 투표 종료, 끝나고 돈봉투를 왜 줘요? 그러니 KBS는 시작 전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KBS는 투표 시작 전이었다고 시점을 특정했어요. 장소는 KBS는 화장실 안이라고 했어요. 은밀한 곳이어야 되는 거지요. 검찰은 화장실 간판이 보이는 로비였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건넨 봉투가 돈이 아니라 초대장.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제가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런 오보만 갖고 오는 것 아니에요. 유독 이쪽 오보가 많아요. 언론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중동, 조중동 그냥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보 사례가, 위험한 오보 사례가 조중동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 사안도. 김무성 전 대표, 숫자를 비교해 봤습니다. 3577 대 347, 거의 10배에 달하는 숫자, 10배 이상인 숫자, 이 의미가 무엇인가? 천하의 김무성이 고개를 숙였다. 고개를 숙인 시점은 2016년, 일이 있었던 건 그로부터 1년 전, 2015년.

2016년에 김무성 대표가 한 사과는 노동자를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과를 하던 그 당시의 기사를 보면서 그래도 김무성 정도 되니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구나,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공개적으로 부당해고를 당하고 거리에서 수많은 시간을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1년 만에

나온 사과예요. 물론 자발적인 사과는 아닙니다. 1년 전에 한 행동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내리고 그제서야 사과를 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라도 해 주니 고마웠어요.

새누리당 당대표였던 2015년 9월 당시 김무성 대표는 콜트·콜텍 노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타 만드는 회사입니다. '강경 노조가 제 밥그릇 불리기에만 몰두해 콜트·콜텍이라는 건실한 회사가 폐업에 이르렀다'. 많이 보던 레퍼토리지요? 노조 때문에 회사가 망한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래요. 노조를 인정하기 싫어. 성가셔. 거슬려. 대화도 하기 싫어. 내 돈으로 회사 만들었는데 왜 법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줘서 임금 올려 달라, 노동 조건 개선해 달라, 짜증 나 죽겠어. 차라리 문 닫고 말지. 어떤 건 위장 폐업, 어떤 건 실제로 폐업, 어떤 것은 여기서는 못 해, 외국으로 가. 대부분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나오면 언론들은, 정치인들은 기업의 말만 듣고 강성노조가 들들들들 못살게 굴고 불법 파업 일삼아서 회사가 매출 뚝뚝 떨어지니 망할 지경이고 실제로 망했다라고 거짓말을 칩니다.

콜트 본사 이름이고요. 콜텍은 콜트의 자회사입니다. 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유명한 기타 회사예요. 이 콜트·콜텍 사태가 터지고 세계적인 거장 기타리스트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이들을 위로하는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2007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당하고요. 공장은 폐쇄되고 폐업을 거쳐서 해외 공장만 가동되던 시점이었습니다.

해고가 일어나면 노동자들은 그 억울함 때문에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통해서 어렵게 구제되기도 하고 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이 내려지기도 해요. 어쩔 수 없는 법 구조 속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원의 판단이 났는데 불복할 방법은 재심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법원 판단은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맞고 그게 법치주의의 한계이자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는 기본원리 아니겠습니까?

해고 노동자들, 자회사·본사 양쪽의 해고 노동자들이 다 소송을 했는데 본사는 이기고 자회사는 졌어요. 이즈음에 언론들이 자회사 노동자들의 해고무효소송이 회사 측 승리로 끝난 것만 가지고 기사를 씁니다. 본사가 졌다라는 것, 본사의 해고가 부당했다는 점은 눈을 감아 버리고. 이게 그 유명한 선택적 정의 아닙니까? 둘을 고르게 균형 있게 보도하지 못하고 그 사안에서, 대립되어 보이는 두 사안에서 본질을 찾아내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데 유리한 근거만 뽑아내서 '얘들 이거 봐. 그랬으니 해고 정당하다고 법원도 손을 들어 주잖아', '경영난 속에 파업을 강행했고 회사는 폐업했고 그래서 노도 사도 공멸했다' 이런 기사들을 썼습니다. 2015년에 문화일보가 소송 결론이 난 다음에 썼고 김무성 대표는 이 문화일보 기사 그대로 입장을 낸 거예요, 강성노조 때문에 회사가 망한다고. '강성노조로 문 닫는 회사 패턴이 있다'.

그러면 문화일보는 그동안 쭉 이러저러한 취재를 해서 이 콜트·콜텍, 2007년부터 있었던 이 사안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문화일보만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을까? 아닙니다. 왜 문화일보만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지는 지금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2007년 콜트·콜텍 사건이 터지고, 사태가 터지고 동아일보와 한국경제가 대표적으로 이 사안과 관련된 오보를 쏟아 냈습니다. 동아일보 '7년 파업의 눈물', 2008년 8월입니다. 콜트·콜텍 사안이 터지고 1년 뒤예요. '7년째 파업·투쟁가만 불러 대니…… 세계 1위 기타업체가 한국 떠난다', 7년째 파업만 했는데 어떻게 세계 1위를 유지할 수 있지요? 참

신기한 회사지요? ‘공장 폐쇄하고 7년 소송에 시달린 기업인의 하소연’ 이것은 2014년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일보의 법원 판결 기사 1년 전에 나왔던 거예요.

‘대법, 콜트악기의 폐업은 노조의 파업 탓이 아니다’,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해서 어렵게 노동자들이 이깁니다. 동아일보가 2008년에 했던 ‘7년 파업의 눈물’이라는 기사는 3년 뒤에 동아일보가 소송에서 패소하고 정정보도를 합니다. 역시 한국경제신문이 2008년에 오보했던 ‘7년째 파업·투쟁가만 불러 대니’ 이 보도도 오보로 판명이 났고 한국경제가 반론보도를 2008년 자신의 보도로부터 5개월 만에 합니다. 이때는 반론보도 형태로 했어요. 사후에 이 모든 것이 오보임이 밝혀진 겁니다. 2014년 한국경제는 두 번째 사실상의 정정보도를 합니다.

다른 언론사들이 보도하고 정정보도까지 했는데, 그것도 복수로, 그 오보했던 내용을 문화일보가 이어받은 거예요. 넘겨받은 거예요. 그랬던 문화일보의 2015년 기사도 9개월 뒤에 정정보도를 하게 됩니다. 이 정정보도 하는 시점에 김무성 대표도 사과를 하게 된 것이고요. 법원이 공개 사과를 명령했던 것입니다.

법원이 김무성이라는 유력한 정치인에게 공개 사과를 명령한 이유는 뭘까요? 정정보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겁니다. 이런 재판부 만나기 정말 어려워요. 보통의 오보는 이만합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소송해서 어렵게 어렵게 이기면 정정보도 요만하게 나가요. 그러니 이 재판부는 그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보를 확산시킨 당사자인 김무성이라는 큰 정치인에게 직접 밝히라고, 그러면 이것이 보도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동아일보는 아예 보도를 안 했습니다. 한국경제는 드라이하게, 건조하게 보도했고요.

그러면 김무성 거짓말의 근거가 됐던 문화일보의 오보, 그 문화일보는 어떻게 기사를 썼을까? 김무성의 사과를, 김무성의 거짓말을 유도했던 문화일보는 어떻게 보도했을까? 차마 김무성 대표가 문화일보 기사를 보고 거짓말을 하게 됐다는 말은 못 썼어요.

이렇게 씁니다, ‘이러한 발언은 전날 모 언론 기사에 상세히 보도된 내용을 보고 이를 기초로 한 것’. 모 언론? 문화일보입니다. 그러면서 김무성을 또 비판하기까지 해요. ‘김무성 전 대표는 과거에도 박 대통령을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부르는 등 말실수로 수차례 구설에 올랐다’, ‘문형구 고려대 경영학 교수는 언어는 마음의 거울이기에……’

‘언어는 마음의 거울이다’ 이런 강한, 뭐라고 할까요, 완전히 타자화를 해야 본인들의 오보를 감출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잘 감춰집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중재법이 전적으로 재판부에 정정보도의 크기, 내용, 모든 것을 일임하고 있어요, 손해배상액까지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오보는 대문짝만한데 어렵게 몇 년 만에 얻어 낸 정정보도문은 단 몇 글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일보의 원래 오보, 본문 글자 수를 세 봤더니 3577자, 9개월 만에 어렵게 따낸 정정보도문은 347자. 이러니까, 이게 현실이니까 언론은 오보를 하고도 바로 이런 수치의 차이 때문에 본인들의 수치를 인정하지 않고 모릅니다.

다른 사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의장님, 화장실 잠깐 다녀와도 될까요?

○부의장 이학영 예, 다녀오세요.

○노종면 의원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제가 한 9년 전쯤에 만든 자료 같은데 이 보도를 보시면 왜 이렇게 특정 언론사를 비판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도롱뇽 탓에 천성산 터널 공사가 늦어졌다. 그래서 6조 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 이 일은 노무현 정부 때 일어난 일이고 그 당시에 천성산 터널 공사를 반대하면서 도롱뇽 생명을 지키자고 오랜 단식을 했던 지율 스님을 만났던 문재인 당시 시민사회수석의 사진을 함께 실었습니다.

천성산 터널을 둘러싼 사회적인 갈등은 이 보도가 난 시점으로부터 훨씬 전입니다. 그런데 2012년 9월 18일 대선 3개월 전에 이 기사가 조선일보에 떡하니 실립니다.

제1 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후보 그가 2004년 시민사회수석으로 사회 갈등의 중심에 있던 스님을, 오랜 기간 단식하고 있던 스님을 찾아가서 몸을 낮추고 호소하고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을 그냥 보면 겸손한 문재인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기사를 함께 보면 환경단체의 발목 잡기에 질질 끌려다니고 단식이라는 몽니를 부리는 데 가서 읍소하고 하물며 그로 인한 손실이 막대해서 6조 원이 되고 공사가 2년 8개월 동안이나 중단됐고, 그때 문재인은 뭐 했던 거야, 이런 인상을 갖게 합니다.

다른 걸 읽어 내기가 어려운 기사입니다. 이 사진에 등장하는 2004년의 문재인은 생떼나 쓰는 환경운동가들에게 질질 끌려다녔고 그로 인해서 6조 원이 넘는 막대한 손실을,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한 무능력자다, 이런 자가 어떻게 대선후보란 말이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얼마 안 있다가 동아일보도 이에 뒤질세라 거의 똑같은 편집의 똑같은 내용의 사진과 기사를 싣습니다. 조선일보는 그렇게 읽히게 했다면 동아일보는 아예 제목에 써넣습니다, 직접적으로. 권력 핵심에 있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갈등 조정의 리더십이 부족했다. 아마추어 정부였다. 내용은 똑같아요. ‘6조 원 이상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도 마찬가지고요. 천성산 터널 공사를 둘러싼 논란을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동아일보의 또 다른 기사예요. ‘천문학적 비용손실-국론 분열 이제 그만’, ‘툭하면 국책사업 발목 잡기’. 4대강도 그랬고 경부고속철도 그랬고—경부고속철이 천성산 터널을 얘기하는 겁니다—새만금 간척사업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 기사 내용에서 천성산 터널 공사 484일 동안 공사가 중단됐고 2조 5000억 원의 직접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보도합니다.

6조 원이 맞아요, 2조 5000억이 맞아요? 왜 자기들끼리도 왔다 갔다 하지요? 아무튼 중단된 시간도 2년 8개월, 484일이면 1년하고 한 3개월 정도. 왜 이렇게 다를까?

다 떠나서 근본적으로 왜 10년이 다 된 사안을 대선 국면에 끄집어 들었을까? 2012년 대선은 쟁점이 4대강이었습니다. 지금도 선거 때마다 4대강 얘기하잖아요. 보를 해체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녹조가 4대강 때문이다 아니다, 홍수에 도움이 된다 아니다, 이 논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주 따끈따끈할 때였어요. 2012년 대선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 4대강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재집권, 박근혜 편이고 4대강을 비판하

는 쪽은 문재인 편이고 이랬던 때지요. 그래서 아까 그 사진은 문재인을 가격하는, 치는 보도였던 겁니다.

제가 비슷한 얘기를 또 반복합니다만 그런 의도가 있어도 사실이면 억울해도 할 수 없다, 괘씸해도 할 수 없다, 사실인 걸 저항해 봐야 자기 입만 아프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연 사실일까.

동아일보, 결론만 말씀드리면 2012년 대선 전에, 대선이 있던 해에 두 건의 천성산 보도를 하거든요, 둘 다 정정보도 합니다. 1년에 같은 사안으로 두 번 정정보도 하기 쉽지 않아요. 동아일보가 그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사실이 뭔데? 공사 중단 6개월, 법원이 인정한 기간입니다. 공사 중단 있었어요. 그리고 손실 145억 원 인정됐습니다.

이 손실은 누구 때문인가? 여기에는 평가가 들어갑니다. 천성산 터널 논란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아무 일도 없었는데 환경운동가들이, 지율 스님이 '꼬리치레도롱뇽 너무 불쌍해. 살려 줘' 정말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꼬리치레도롱뇽은 생명의 상징이고 실제로 그 터널이 뚫려서 고산에 있는 특이한 지형의 습지가 말라 가고 그 도롱뇽의 생태환경이 파괴되고 이 부분을 지적한 거잖아요. 천성산의 고산습지 말이 쉽지요. 고산습지가 가능합니까, 물은 아래로 흐르는데? 물이 빠지지요. 저수지는 아래에 있지요. 그런데 천성산은 산 구조가 특이해서 위에 물이 있습니다. 람사르습지 협약의 보호를 받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필요하면 공사……

모르겠어요. 저는 정치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하라고 환경영향평가 하는 거니까. 환경이 어느 정도 파괴돼도 인간의 삶을,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사회가 합의해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사회적인 합의를 하라고 제도를 만들었고 환경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제대로 해서 진행했으면…… 저는 터널 공사 반대했던 분들 지지 안 해요. 제대로 안 했습니다. 제대로 안 한 것이 법원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됐어요. 습지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고의적으로 자료를 누락시켰습니다. 그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확인돼서 법원에서 공사를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당사자들 간에 합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이 지나간 거예요.

이준석 후보 이번 대선 토론장에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이 피해액을 몇조라고 안 하고 140억 정도라고, 그 부분은 정보를 제대로 갖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 손실의 책임이 누구입니까? 지율 스님입니까?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졌음을 찾아낸 환경운동가들입니까? 왜 그 책임을 문제를 일으킨 자들한테 묻지 않고 제도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자들을 몰아세우고 국론 분열자라고 하고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일으킨 자들이라고 매도하고 자기들끼리도 입을 못 맞춰서 어떤 기사는 6조다, 어떤 기사는 2조 5000억이다, 어떤 기사는 1조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런 수십 건의 보도에 대해서 모조리 다 소송이 걸렸고 모조리 다 원고가 이겼습니다. 언론사들이 다 졌어요. 이 기록은 아마 대한민국 언론 역사상 절대 안 깨질 겁니다.

아까 의석에서 의원님께서 이 보도 너무 유명한 보도니까,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 보도에 대해서 너무도 선명한 입장을 갖고 계시니까 '저건 맞는데'라고 하셨어요. 충분히 이

해합니다. 얼핏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개인은 그 누구도 미디어를 당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어떤 특정 언론사가 반복적으로 오보를 한다, 왜곡 보도를 한다, 그 언론사를 경계하지요. 그런데 바로 그 언론사한테 당합니다, '아차, 또 속았다'. 그냥 경계한다고, 주변에 믿을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니까 믿는다고, 안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미디어로부터 나를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디어는 못 믿을 존재라는 것을 공식화해야 돼요. 거기에 기분 나빠 하는 언론인들은 언론인 자격이 없어요. 언론은 감시 대상을 믿으면서 감시합니까? 못 믿으니까 감시하는 거잖아요. 감시를 잘못했을 때의 폐해가 너무 막중하기 때문에 언론은 누구든지 취재 대상을 일단 의심하고 경계하고 그래서 취재해서 확인되면 보도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언론이 왜 자기들은 무조건 믿으라 그래요, 믿을 짓을 하든가.

이 보도 제가 수십 건이 같은 맥락으로 보도됐다고 말씀드렸지요. 서른 건 가까이 소송이 이루어졌고 그 소송을 제기한 분은 아까 사진에 나왔던, 초인적인 단식을 했던 지율 스님입니다. 그분이 손해배상 그 돈 챙기려고 소송하셨겠습니까? 오보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의 개인적인 삶을 포기하고 신앙인으로서의 시간들도 소송에 다 매달리는 것으로 대신하면서 1원 소송, 10원 소송을 벌였던 거예요. 다 이겼어요, 지율 스님은.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소송에서 진, 언론사가 지기 어렵다는 그 정정보도 소송에서 진 언론사의 행태입니다. 아까 동아일보가 같은 해에 두 번이나 같은 정정보도를 했다고 했지요? 거짓말하고 들켰는데 또 거짓말한 겁니다. 그랬다가 또 들킨 겁니다. 동아일보는 2007년에도 이미 정정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합하면 몇 번이에요?

조선일보도 2009년에 정정보도를 두 번이나 했어요. 제가 조선일보 두 번의 정정보도를 읽어 볼게요. 2009년 6월 5일 자 조선일보 정정보도입니다.

"바로잡습니다. 천성산 터널 공사 중단 기간은 6개월, 본지 2009년 4월 24일 자 '환경운동의 내리막길은 천성산에서 시작됐다' 제하의 사설 및 '고속철 공사 방해 지율 스님 유죄' 제하의 기사와 관련, 천성산 터널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1년이 아니라 6개월이며 공사가 중단된 6개월 동안 직접적인 공사 손실은 145억 원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자연습지에 영향이 없다고 하였으나 지하수 유출 현상이 여러 차례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선일보 2009년 9월 26일 자 정정보도, '바로잡습니다—정정보도 한 지 3개월여 만입니다—본지는 지하수 유출로 인한 습지 등 생태환경의 파괴를 이유로 한 지율 스님의 단식농성으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원효터널 구간의 공사가 1년 이상 중단되어 2005년 12월 1일경 원효터널의 공정률이 5%에 불과하였고, 위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2조 5000여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율 스님의 단식농성으로 인하여 위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얼마라고 했지요—6개월이고, 이로 인하여 시공사가 직접적으로 입은 손실액은 145억 원이며, 2005년 8월 26일 현재 원효터널이 존재하는 13-3 및 13-4 공구 중 13-3 공구의 계획공정률은 13.04% 등등—공정률도 낮게 잘못 보도했던 거예요—바로잡습니다'.

여러 차례 2조 5000억이라고 했다가 정정보도 하고 그리고 또 정정보도 하고.

그러면 2012년의 보도에 대해서는…… 2012년의 보도, 동아일보 선제적으로 먼저 정정

보도를 했어요, '아, 안 되겠다'. 조선일보 버텼어요. 소송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이미 그런 보도들 정정보도 사례가 너무 명확하게 판례로 확립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2년에 한 오보에 대해서 2018년에 정정보도를 합니다. 이게 언론의 현실이에요.

'도롱뇽 탓에 늦춘 천성산 터널…… 6조 원 넘는 손해' 관련 정정보도문. 2조 5000억이라고 수차례 보도해서 정정보도를 했던 조선일보가 2012년에 이르러서 6조 원이라고 또 부풀리기를 해서 오보를 하고 그것을 2018년에 정정보도를 합니다. 한 회사가 한 사안으로 세 번이나 정정보도를 한 거예요. 만약에 21대 때 악의적 오보 개념이 확립됐으면 이것은 영락없는 악의적 오보입니다.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2012년 9월 18일 조선일보 '도롱뇽 탓에 늦춘 천성산 터널…… 6조 원 넘는 손해' 제하의 기사에서 지율 스님의 단식농성과 환경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언급하면서 대법원이 2년 8개월 만에 공사 재개 결정을 하였고 당시 1년간 공사가 중단되면 사회·경제적 손실이 2조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는 내용을 보도하여 천성산 터널 공사가 늦춰져 6조 원 넘는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똑같은 내용이 이어집니다—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개통이 1년간 지체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나 실제로 개통은 지연되지 않았고"……

이준석 후보, 대선 때 거짓말했어요. 개통 1년 지연됐다고 했습니다. 지나간 거라고 막 끄집어내서 쓰는 거예요.

"가처분 사건이 계속 중인 2년 8개월 동안 천성산 구간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6개월이었으므로 6조 원 넘는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조금 이상하신 부분 없어요? 아니, 1년이든 6개월이든 공사 중단은 됐는데 개통은 왜 안 늦춰졌지? 이런 대형 사업에는요 민원제기 기간이 있어요. 그런 걸 다 둡니다, 탄력구간을. 안 그렇겠습니까?

그것을 그저 중단된 기간도 늘려야 되겠고 피해 손실도 이것 끌어다 붙이고 저것 끌어다 붙이고, 정권이 뭐 한다는 이벤트 있으면 진짜 검증할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제효과들 부풀려 가지고 몇십조 경제 이익, 그러던 버릇을 그대로 누구 죽이기에도 쓰는 거예요.

언론이 얼마나 지율 스님을 못살게 굴었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천성산 터널은 '그래, 그때 너무했던 거지' 이런 막연한 생각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믿든 안 믿든 언론이 단체로, 떼로 천성산 터널 공사의 문제를 지적했던 사람들을 마녀사냥 했으니까요.

'환경도그마 폐해 일깨운 도롱뇽 재판 유죄', '환경운동의 내리막길은 천성산에서 시작됐다'. 환경운동이 내리막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제가 반말 좀 하겠습니다—언론 너희들이 끌어내린 거야!

심지어 조롱하고 매도했습니다. 안 그랬습니까? '길거리 단식에 국민은 식상했다.' 설사 그 명분에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의 생명이 위태로워 보였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단식을 했는데 거기다 대고 '길거리 단식, 국민은 식상했다'……

왜 언론은 사회를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는 노력…… 지금 이 시대에 환경운동 안 하고

지구가 버텨 내겠습니까? 재생에너지 확대 안 하면 지구가 버텨 내겠어요? 사람만 잘사는 그런 생존이 정말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도롱뇽 얘기한다고 정말 도롱뇽 한 마리 살리자고 구호를 외치겠어요? 그건 상징이잖아요. 상징을 부각시켰더니 '사람이 중요하냐, 도롱뇽이 중요하냐' 이런 무식한 접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언론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왜 대다수, 상당수의 언론들은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이들, 우리가 운동가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을 '꾼'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분들 급여를 많이 받습니까? 사회의 조명을 많이 받습니까? 누군가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매몰차게 한 마디로 규정해서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갑니까? 그리고 우리 언론은 왜 약자한테 가혹합니까?

다음 기사 보시지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시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 씨를 아마 정치인들은 아실 겁니다. 모르시면 안 됩니다. 산재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인 사례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신다는 전제로 이분에게 언론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에 돌아가셨고요. 오랜 싸움 끝에, 노력 끝에 산재 판정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삼성전자는 그 공장에서 일어난 암 유발 상황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유하고 압박하고 협박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견디면서 황유미 씨의 유족들이, 또 이 사안에 가슴 아파한 다른 선한 사람들이 그 작은 힘을 모아서 어렵게 산재 판정을 받아 냈습니다.

그러고도 한참 지나서 2014년 5월에 이르러서, 황유미 씨가 숨지고 무려 7년이 지나서, 그 이전 그 이후의 유사한 죽음들이 잇따른 후에서야 삼성전자는 대표이사 부회장의 명의로 '중재 기구의 조정 내용을 따르겠다'라고 했습니다.

2015년에 나온 입장인데 중재 기구는 2014년 말에 만들어졌고요. 2015년 7월에, 삼성전자 입장이 나온 직후에 한 두 달 뒤인 2015년 7월에 조정안을 만듭니다. '1000억 원 규모의 공익재단을 설립해서 보상하라'. 1000억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 중재 기구는 사안의 크기, 피해자가 황유미 노동자만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때 삼성전자가 중재안 따르겠다고 미리 발표를 해 놓고 입장을 바꿉니다. '1000억 기금은 조성하겠지만 공익재단은 없다. 그리고 직접 보상하겠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리고 보상 신청을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별 접촉을 하거나 개별 신청을 받아서 일정한 정도의 보상을 마쳤어요.

공익재단 형태로 했을 때와 그냥 삼성전자가 직접 했을 때의 차이를 황유미 씨 사안에 함께했던 노무단체인 반올림은 약 1.5배의 차이가 난다고 추산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를 그냥 둘 수 없다라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이런 대목에서 늘 언론이 등장합니다.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제목에 있는 반올림이 황유미 씨 유가족을 도왔던 노무단체입니다. '그런 기업에 대해 마치 호구를 만난 듯 천문학적인 금액을 요구한다면 이런 환경에서 누가 기업을 하려고 하겠는가', 딸을 보낸 유가족이 기업을 호구로 보고 돈을 뜯어낸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기사를 쓴 기자는 기자 이전에 사람입니까?

삼성이 개별적으로 보상한다면서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본 거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확인이 됩니다. 삼성은 '저 사람은 아니야'라고 했는데 1년 뒤에 산재로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삼성은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어요. 뭐가 이렇게 당당할까, 자기네들이 돈 벌겠다고 만든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죽어 나가는데.

언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산재 인정 기사 없고요. 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그 대상은 소위 말하는 주류 매체들. 그리고 이상한 기사 하나가 갑자기 쏟아집니다. 유엔이 삼성전자의 백혈병 문제 대처를 높게 평가했다라는 기사가 쏟아집니다, 일제히. '유엔, 삼성 백혈병 해결 노력 긍정적', '유엔, 반도체 직업병 논란 종지부…… 삼성 문제 해결 노력 인정', '유엔 인권보고서,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문제해결 노력 인정', '유엔 인권보고서, 인정', '인정', '높이 평가'.

삼성이 로비를 했나요, 유엔이 정말 이렇게 평가를 했나요? 둘 다 아닙니다. 언론이 삼성의 요청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가발전했습니다. 심각한 자가발전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베끼기 신공이 들어갑니다. 연합뉴스가 유엔 기사를 쓰고 다른 언론들이 줄줄이 베껴 썼습니다. 촉발시킨 연합뉴스 기사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 반도체 백혈병 논란에 대해 과학적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고—아, 이것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는 없네라고 유엔이 인정했다는 겁니다—기업의 해결 노력을 높이 평가함에 따라—그럼에도 삼성전자는 해결 노력을 했네—백혈병 논란이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했다'.

이쯤 되면 여러 언론을 비교해서 보던 사람들도 '맞나 보네', '보고서를 쓴 건데 뭐, 맞겠지' 이런 생각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유엔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과 연합뉴스 그리고 그 연합뉴스를 베낀 보도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냥 반대가 아니라 어떤 매체는 이렇게 했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 백혈병 사고 대처법의 궤적을 걷고 있다'. 배터리 문제 때문에 위기에 직면해 있던 삼성전자가 백혈병 문제까지 겹치면 힘들겠다, 이거 안쓰러워서 못 봐 주겠네 이런 생각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갤노트7 사태에도 정공법', 아시아경제.

당사자가 나섰습니다.

'지난주 한국 언론들이 잘못 전달한 내용이 있어서 이 기회에 특별히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삼성전자나 대한민국 정부 어느 쪽도 노동환경이 안전함을 입증하지 못했다', 바스쿠트 툰작 유엔 특별보고관 이 사람이 보다 보다 못해서, 대한민국 언론의 오보, 왜곡 보도 이 행태를 보다 못해서 유엔 인권이사회 중에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국 언론에 기고까지 해요. '최근 일부 기사는 내 보고서를 심각하게 오독해 삼성전자의 노동 조건이 전직 노동자들의 질병과 장애를 일으켰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내가 기업들, 정부, 과학자들, 변호사들, 중재자들, 피해자들과 나눈 대화에 따르면 이는 진실이 아니다'.

진실이 아니래요. 제가 한 10건 정도 여러분들하고 오보 사례들을 살펴본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이 참으로 알고 계셨던 사안에 대한 판단이 혹시라도 흔들리십니까? 그냥 기존에 당이 가졌던 입장에 서시렵니까? 앞으로도 여러 가지 오보가 나올 겁니다.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툼을 하고 그를 통해서 결론이 나오면 따르는, 존중하는 그 정도만 돼

도 우리 정치가 얼마나 나아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쯤 되면 의원님들 한번 싹 뒤바뀜이 있을 줄 알았는데, 좀 듣는 분들이 바뀌어야 했던 얘기를 또 할 텐데요.

(「다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원래 처음부터 다시 할 생각입니다.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가 재방송하는 거를 많이 꺼려 하는 편인데 오늘은 이 자리에 선 의미를 제 스스로 시간 점거 투쟁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아직 제가 점거해야 할 시간이 3시간 40분가량 남아 있기 때문에 지난 다섯 시간 동안 설명해 올렸던 내용들을 조금은 축약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시간을 점거해야겠다고 판단하는 이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앞선 토론에서 나온 주장들의 전제들이 너무 많이 뒤틀려 있고 사실관계에 오류가 많고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정정하고 그것으로 설득하고 하기에는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 민주당의 경쟁자이기도 하고 함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상대인 국민의힘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적인 국면 속에서 이런 방송법 사안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아직 잘 모르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경우에 따라서 바로잡는 노력을 하겠지만 하나하나 일람하면서 다 하기는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래서 지금 단계는, 적어도 지금은 토론과 설득이 어려운 국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시간을 점유하고 설명을 드려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방송법은 이제 드디어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서 의결됐던 사례들이 거부권에 막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라고 규율 대상을 더 넓히는 어떤 성과도 곧 우리가 만나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이해민 의원님과 또 발의해 주신 신장식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이 머리 맞대고 개정안을 준비해 왔어요. 심의 안건 요지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방송법 발의 건수가 19건입니다. 저도 냈다가 한 번 더 수정해서 더 내고, 이번 대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다른 발의도 있었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적어도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협의를 안 했다, 일방적으로 달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없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가지시면 그거야 어쩔 수 없습니다만 공감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왜? 저희는 우리끼리도 열심히 하고 공개회의도 열심히 했어요.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내용도 숙지하지 못한 채로 엉뚱한 얘기로 법안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종국에는 왜 같이 협의를 안 했느냐고 하십니까?

민주당이 올해 이 내란에 대응하면서도 거의 매주, 대선 기간도 거르지 않고 거의 매주 모여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토론도 하고 그렇게 조율하고 또 조율해서 19개의 법안을 단일 법안으로 만드는 그 지난한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말 몰랐습니까, 그 과정을? 방송법 심의하자고 소위 열면 왜 열었느냐고 그러면서 나가는 게 능사였지

남아서 토론했습니까?

공식적인 국민의힘의 입장, 제가 확인하고 속기록에 남아 있는 국민의힘의 입장은 '우리는 개정안 없다. 현행법이 우리 입장이다' 수차례 얘기했어요. 그런데 개정 협의를 뭘 합니까, 무조건 안 한다는 건데.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방안이 이게 어떻다, 주체로서 이게 어떻다…… 저라면 그런 말 못 할 것 같아요, 남사스러워서.

제도 완벽하지 않지요. 어떤 제도도 완벽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좋은 제도는, 좋은 법은 여백이 많은 법이라고 생각해요. 여백이 많은데도 불안하지 않은 법, 여백이 많은데도 합리적인 법 해석이 오히려 사회를 통합시키는 그런 법, 그게 가능한 정치, 그게 가능한 사회.

사실 그냥 내버려뒀으면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잘 돌아갔을 오랜 기간 실험했던 제도들을 왜 권력이 개입해서 멋대로 완력으로 없애 버리고, 왜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장후보추천위원회, 하늘에서 떨어진 제도 아닙니다. 공영방송의 사장을 국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하자는 논의는 제가 들은 것만 해도 거의 20년 다 됐어요. 2008년부터 언론인 현업인들이 요구하고 외쳤던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YTN도 적어도 사장을 공모로 뽑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 것 다 무시해 버리고 혹시라도 없앨까 봐 단체협약으로 격상시켜 놔도 무단협 상태를 만들어 버리고.

국민참여형 사장후보추천위원회, MBC도 가동했고 KBS도 가동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YTN은 노사가 합의해서 만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라는 공모제도를 통해서 사장을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YTN 팔아 치우고 YTN 사추위 없애고 KBS 장악해서 박민 세우고 파우치 박, 박장범 세웠잖아요.

MBC 집어삼키겠다고 방문진 이사장 내쫓고 이사들 내쫓고, 그나마 법원이 그것은 부당하다 돌려세워서 MBC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방심위원장도 KBS 사장도 KBS 감사도 윤석열 정권에 의한 축출이 부당·위법했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드러내 놓고 앞뒤 안 가리고 그야말로 윤석열답게 방송을 짓이기고 장악했던 세력이 공동책임을 질 때입니다. 하다 하다 YTN이라는 공기업을 산산이 쪼개서 유진이라는 사기업에 팔아넘겼습니다. 이제는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논의가 없었다고요? 논의할 자격도, 논의할 준비도 안 됐던 세력이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또 한번 국민께 삿된 말을 하려고……

국민들께서 누군가가 바라는 대로 방송장악 그 3년간의 역사를 벌써 잊으실 리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입을 열면 열수록, 말을 하면 할수록 '아, 방송을 장악해서 내란을 하려고 했구나. 그들이 아직도 반성하지 않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합니다.

류희림을 내세워서 했던 방송사 때려잡기, 방송보도 때려잡기. 제재 결정이 나올 때마다 사상 최고예요. 유례없는 과징금. 일관되게 김만배 보도를 했던, 바이든 보도를 했던 뉴스타파, JTBC, MBC 등 정권 입장에서 눈엣가시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제재를 했습니다.

그 제재들 가운데 무려 30건이 소송에 들어갔어요. 방송사들이 류희림 방심위의 심의 결과, 류희림이 만든 그 선방위라는 이름의 탈을 쓴 극우 세력들의 방송심의 결과를 받

아들일 수가 없어서 30건의 재판을 진행했고 30건 모두 이겼습니다. 방심위가 제재하고 방통위가 의결한 그 방송사들에 대한 징계, 과징금 이것들이 몽땅 꽝이 된 거예요. 거기에 국가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심의한다고, 자료 수집한다고, 소송 대응한다고. 그래 놓고 류희림 본인은 총리급 급여를 받아 챙겨 갔습니다. 그런 자를 비호했던 세력이 누구입니까?

30전 30패, 일부러 하고 싶어도 못 할 거예요. 그런데 류희림의 방심위와 여기—이진숙 위원장 나가셨네—이진숙의 방통위 조합은 그 어마어마한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처음에 소송에서 자꾸 지니까 그러더군요, '이건 가처분입니다. 본안 판단이 나와야 됩니다'. 그 이후로 본안 판단이 17건이 나왔습니다. 17건 모두 방심위·방통위 전패.

이쯤 되면 같은 당 의원들이 '당신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 선거에서 지게 하려고 작정했나' 이 정도는 컨트롤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내버려두셨어요, 그러든 말든. 그래서 국민의 비판, 늘 동료 의원이라고 하지만 한 공간에서도 비판을 하는 이런 상황을 유감스럽지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방송법, 어떤 맥락에서 진행되는 법안인지 아시면 반대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못해 반대하더라도 이 필리버스터라는 최고 수위의 반대 방식을 채택했다는 데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밖에는 못 드리겠네요.

국민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가요? 이 방송법은 무도하다? 일방적이다? 방송법이 무도하다고 할 때마다 무도한 윤석열의 그림자가 선명해집니다. YTN 그 대주주들이 대주주 지분 안 팔겠다고 하는데 목 비틀고 팔 꺾어서 억지로 팔게 만든 그 상황이 떠오릅니다.

이동관·이상인, 김홍일·이상인, 둘이 앉아서 쿵딱쿵딱, 그 중요한 보도전문채널을 심사위원회 꼴랑 나흘 가동하고 팔아 처먹은 그 작태가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조차를 모르십니까.

방송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지요. 당연합니다. 속한 정당은 달라도 겉으로는 누구나 언론의 독립, 방송의 자율성, 보도의 공정성을 위해서 제도를 만든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 나는 그 입장 위에 서 있다,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앞선 토론 내용을 들으면서 설마설마했던 생각이 아, 정말 그렇구나……

방송 자율성은 기업이 마음대로 방송사를 만들고 사고 멋대로 방송하고 사장 내 마음대로 뽑고, 그 자율성이 아닙니다. 방송법을 한 줄이라도 읽어 봤으면 그런 소리 못 합니다.

방송법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방송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누구로부터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것일까? 기업이 방송하고 싶어 죽겠는데 정부가 못 하게 하면 '자유를 보장해 줘', 아니에요. 대주주가 아니라 그 언론 자체, 나아가 그 언론 종사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보도하고 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통해서 대주주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여라. 그래서 제가 한 줄만 읽어 보면 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방송법 1조입니다. 이 문구를 줄여서 방송계에 종사하는, 언론계에 종사하는 이들은 '보도와 경영의 분리다'라고 얘기해요.

경영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것을 생존이라고 표현도

하지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추구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방송법이에요. 공공책임을 높여라, 방송의 공기라는 그 성질을 이해하고 공적인 책임을 높여라,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주인인 그리고 방송 시청자인 국민의 권익보호, 민주적인 여론형성,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라, 이를 목적으로 한다.

방송 자율성이 돈 있는 자들의 방송할 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부디 다른 데 가서는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조금 전에 시청자 권익보호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건 제3조에 한 번 더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건 개정을 통해서 방송사를 옥죄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방송법이 이래요. 시청자도 참여하게 합니다.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 어디에 대주주 입장에 서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이 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보도·경영 분리입니다. 제작·경영 분리입니다. 경영진이 대주주하고 친하다고 대주주 입장에서 또는 돈만 벌기 위해서 방송을 이윤 추구 입장에서만 운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구성원들, 종사자들의 역할을 아래 항에서 규정합니다.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건 간섭하는 자를 막아 내는 거예요. 그게 권력이든 광고주든 대주주든 간섭할 수 없습니다. 아니, 대주주가 방송 아니야? 그게 무식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법을 전혀 모르는.

3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편성책임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그의 이름을—방송시간 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고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의무 조항입니다. 이게 대주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불안해서 여기에 이번에 개정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방송편성 업무를 관장하는 방송편성책임자는 반드시 새로 의무화되는 편성위원회의 제청을 받아라. 편성위원회가 제청하는 자를 경영진이 방송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법은 방송보도·방송제작·방송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자유,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자유, 광고주로부터의 독립·자유 그리고 대주주로부터의 독립·자유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돈만 있으면 방송 할 수 있는 거고 그 방송사업자는 인사권이 있는 거고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냐'…… 앞으로는 제발 그런 말씀 말아 주십시오. 그 말씀 하시는 의원님들이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4항 '방송사업자는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부문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이것도 갑자기 들어간 무시무시한 법률 같지요? 원래 있던 것 문구 조정한 겁니다.

방송 편성위원회가 법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그 정신은 이미 지금 제가 읽어 드린 이 규정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상당수의 방송사들,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아는 방송사들이 이미 편성위원회를 이대로 가동하고 있어요,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 편성위원회 의무화한다고 갑자기 회사가 망할 것처럼…… 조금 이따가 편성위원회가 뭐 하는 데인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의2를 신설해서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습니다. 일단 어떤 방송사업자들이 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지상파 KBS·MBC·SBS·EBS,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종편 4사 TV조선·채널A·JTBC·MBN,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YTN·연합뉴스TV, 이 정도면 공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방송 맞지요?

방송의 공공성은 주주 구성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방송은 허가받아야 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방송법은 규제법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방송법이 규정한,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편성규약을 제정하라는 것을 일부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방송법의 규정을 실질화하기 위해서 편성위원회…… 지금 다른 방송사들은 편성위원회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K에도 있고 YTN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일반화시킨 겁니다, 하라고. 그래야만 방송법이 이미 규정해 놓은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경영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지, 광고 떨어지게 하는 일이 있는지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이건 이미 기존 방송법에서 하라고 했던 거예요. 안 해 왔다고 주장하면 법을 위반해 온 방송사라고 자인하는 겁니다.

2호 ‘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편성규약 준수하라고 만든 거지요.

3호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규정’. 제작하는 구성원들 종사자들, 취재하는 구성원들 자율성을 다 보장해야 돼? 보장해야 돼요. 방송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시청자위원회’, 시청자위원회는 2000년도, 지금으로 25년 전 통합방송법 때부터 들어온 의무 설치 기구입니다. 이미 모든 방송사가 의무적으로 시청자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이 시청자위원회가 그동안 사 측의 입김에 따라서 사실상 사장이 낙점하는 구조였다라는 문제의식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조금씩 노동조합 또는 구성원들 또는 직능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일괄적으로 다 후퇴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참에 법적인 의무 기구인 시청자위원회도 편성위원회에서 뽑아라 그래서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은 편성위원회가 한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회사가 망할 것 같습니까? 왜 편성위원회의 의미도 내용도 모른 채 뭔가 종사자들이 참여한다고 하니까 그저 지레 겁을 먹고, 종사자들이 뭐 범죄자들이에요? 종사자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노조로 살짝 등치시키고……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구성원들이 100% 특정 노조에 가입해 있으면 그 구성원들은 노조입니까, 구성원입니까?

질문을 달리하겠습니다. 구성원 100%가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그들은 종교단체입니까, 구성원입니까?

방송의 공적 책임이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당연하지요. ‘세대간·계층간·성별간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되고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그런

데 노조에 가입한다고 차별하고 적대시하고 이상하게 몰아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해요. 대주주의 주관에 치우치는 보도를 제작하면 안 됩니다. 이 역시도 보도와 경영을 엄격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방송법의 대원칙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방송은 소유자가, 지분 소유자가 공적이든 사적이든 다 방송법의 규정을 받습니다. 제재도 받고 제약도 받고 까다로운 사업 조건들을 부여합니다. 돈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8조에 소유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아무리 사적 자본이 방송사를 차려도 방송 자체가 공기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합의가 흔들리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유지되는 겁니다. 몇 %까지밖에 지분을 못 갖게 되고 그 지분을 갖는 것도 방통위나 또 일부 방송 형태에 따라서는 과기부의 허가 내지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한 번 허가받으면 '아, 이제 내 마음대로 해', 절대로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감사·조사받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승인 심사, 재승인 심사, 재허가 심사, 그러니까 방송사업권이 연장될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 심사를 방통위와 과기부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격하게 규율해 놓은 민간사업 분야가 있습니까? 이것을 '대주주가 민간이니까 방송 규제하면 안 돼'…… 그것도 다른 데 가서는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들이 들으면, 앞에서는 들어 주지요. 뒤에서는 차마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제9조에 허가 대상, 승인 대상 방송 형태가 자세하게 규정돼 있어요. 지상파방송은 방통위 허가, 그다음에 스카이라이프 같은 위성방송사업자는 과기정통부장관 허가, 종합유선방송사는 과기부장관 허가 그리고 종편하고 보도채널은 방통위 승인. 이들은 허가·승인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재승인·재허가 심사를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있다고 지분을 샀어요. 돈이 최고인 자본주의 아닌가? 아닙니다. 방송은 안 됩니다. 허가 내주고 승인 내주는 주체로부터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내가 주주가 됐어요'라고 신고하면 '우리가 한번 심사해 볼게'라는 심사 절차가 이어집니다. 거기서 탈락하면 돈이 천만금이 있어도 방송은 못 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 방송이 우리 법제하에서, 대한민국 법치주의 법제하에서 얼마나 공적인 성격이 강하게 확인되고 있고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는지 공감하시리라 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20조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장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먼저 공영방송인 지상파. 지상파에 SBS는 들어가지만 공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이 규율하는 사장추천제도의 대상은 KBS MBC EBS, 이 세 개 회사입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이들은 사장을 뽑으려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의무조직입니다. 그냥 대주주가 '나 이 사람 시킬래', 안 됩니다. 이사회에서 '이 사람 찍을래', 안 됩니다. 반드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야 돼요. 거기서 먼저 후보를 추립니다, 세 명 내지 두 명으로. 그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각 사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친 사람에 한해서만 이사회가 낙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2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상파 공영방송하고 보도전문채널하고 조금 다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지상파 중 공영방송, 이것들은 뒤에 구체적인 조문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별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보도전문채널들은 어떻게 하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비슷하지요? '국민' 자가 빠져 있습니다. 공영방송보다는 조금 더 간소하게, 간소한 절차로 좀 더 신속하게 사장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 그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노사가 합의해라, 사 측이 일방적으로 만들지 마라, 그러면 말이 공모고 말이 추천이지 결국은 사람 미리 다 정해 놓고 요식행위로서 그런 공모제도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과 합의하라고 이렇게 조건을 달아 놨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까, 이런 제도가? 막 무지무지 무서운 그런 제도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모르셨을 뿐 언론 현업에서는, 방송 현업에서는 수십 년 동안 논의하고 실험하고 시행착오를 거치고 정착시키는 노력을 해 온 제도입니다. 사장을 공모 아닌 방식으로 뽑는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는데 갑자기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이 제도들, 각 방송사들이 귀하게 만들어 온 그 제도들을 뭉개 버린 겁니다. 짓이겨 버렸어요. 그리고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 술친구 박민. 수신료도 못 지키는 그 무능한 사람이 KBS의 사장이라니요. 그 후임은 또 누구입니까? 명품백도 명품백이라고 못 해서 조만한 파우치라고 했던, 그 충성 맹세로 사장이 된 파우치 박. 그게 다 사장공모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이사회가 뽑은 거예요, 자기네들 멋대로. 원래는 국민참여형이었어요.

방송법은 보도책임자에 대한 임명 방식도 규제에 나섭니다.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서 보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원칙이고 원론입니다. 너무 당연하고요. '보도책임자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자가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임명권은 대표이사에게 있지만 임명동의를 보도와 관련된 구성원, 사원들 절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른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파 공영방송하고 보도전문채널하고 공히 다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이것도 '인사권은 기업 경영자의 고유권한인데 이걸 왜 침해해'라고 낯설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앞에 누누이 힘주어 강조한 보도와 경영의 분리라는 방송법의 대원칙, 이 원칙하에서 언론계가 자발적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보도책임자를 이렇게도 뽑아 보고 저렇게도 뽑아 보고 보도국장 직선제, 보도국장후보자 복수추천제, 중간평가제, 임명동의제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실험하고 그러다가 임명동의제로 정착해 온 겁니다. KBS도 임명동의제, YTN도 임명동의제, SBS도 임명동의제, KBS·MBC·YTN·연합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도 임명동의제. 이게 방송통신언론의 표준이 돼 있어요. 그랬던 것을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니까 KBS에서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없애 버리고 YTN에서 임명동의제 없애 버리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없던 제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전문인들이 수십 년 동안 갈고닦아서 제도화하고 있으면 그것을 지지·유지·발전시켜 주지는 못할망정 자기 입맛에 맞는 사장 세우겠다고, 보도국장 세우겠다고 단체협약으로까지 만들어 놓은 그 제도를 없애 버립니까? 그래서 방송법에다가 아예 박아 넣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연합뉴스TV는 보도전문채널입니다. YTN과 똑같은 규율을 받습니다. 일반인들은 연합

뉴스라는 모기업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연합뉴스TV를 보는 게 아니라 연합뉴스TV를 보시는 거지요. 연합뉴스라는, 연합뉴스TV의 대주주는 지분을 갖고 있지만 또 독립적인 통신 언론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은 자회사·모회사 관계이기 때문에 인적 교류는 있을지언정 보도는 철저히 분리됩니다. 경영도 철저히 분리됩니다. 별개 회사예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연합뉴스TV의 사장은 연합뉴스라는 모기업의 사장이 겸임했습니다. 보도 매체로서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개를 연합뉴스 사장이 연합뉴스TV 사장도 독차지했던 거예요. 뭐 그룹사 회장인가요? 이게 정상인가요? 그리고 연합뉴스는 노사합의를 통해서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실시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그런데 연합뉴스TV는 사장이 같은데 그걸 안 해 줘요. 식민지입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좀 더 정상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좀 더 상식적으로 우리 사회가 기능하게 하는 것 국회의 책무라고 봅니다. 내가 모른다고, 나는 그것을 경험한 적도 배운 적도 없으니까 이것은 어색해, 아닌 것 같아, 과격해, 그렇게 쉽게 접근해서 토론할 대상이 애초부터 아니었습니다. 이런 제도를 방송 현업자들이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징계도 당하고 인사 보복도 당하고 쟁의행위도 하고 저 같은 해고자도 나오고, 그 싸움을 또 하라고 할까 봐, 또 하게 될까 봐 제발 법에 넣자고 호소해 왔고 설득해 왔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 어떻게 사장을 뽑는지, 어떻게 이사회를 구성하는지 방송법이 구체적으로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MBC는 방문진법에, EBS는 교육방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큰 골격과 구조는 같기 때문에 KBS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BS 이사회, 지금은 11명입니다. 그것을 제46조를 개정해서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5명으로 구성한다', 4명을 늘립니다. '멀쩡한 이사회 인원을 왜 늘려'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정수라는 부분에서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기 어렵지요. 저는 절대적인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법을 개정하려는 그 방향에 비추어 보면 이사회 인원이 일정 정도 늘어야 한다라는 점은 쉽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왜 늘어야 하는가? 이 법의 개정은 특정 정치세력이나 특정 자본이나 특정 어떤 세력이라도 독자적으로 KBS라는 공영방송의 이사회 조직을 흔들지 못하게, 장악하지 못하게 하자 이게 출발입니다. 그러면 장악의 대상으로 삼는 그 목표물이 덩치가 좀 커야 됩니다. 2명일 때 장악하는 것과 10명일 때 장악하는 게 다르지요. 11명인 지금 현재 장악된 전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갈수록 장악이 쉽지는 않아요. 보니까 자기편 이사들도 말 잘 안 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KBS 사장을 두 번이나 바꿔 냈잖아요, 그것도 2인 의결이라는 위법한 방식으로. 그 결과로서의 박장범 사장이 지금도 직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11명 시대는 효용이 다했다. 늘려야 한다, 더. 얼마나? 그렇다고 끝없이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21대 발의했던 법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본회의 통과시켰다가 거부당했던 법은 20명이 넘습니다. 정답은 없다고 봐요. 주체를 다양화해야 하고 일정한 숫자를 확보해야 한다, 이것을 만족할 수 있는 최소치는 얼마인가, 거기에 논의하는 여러 주체들의 생각들이 달랐고 그걸 조율한 것이 KBS 15명일 뿐입니다. MBC 13명일 뿐입니다.

이건 어떤 상황이 변해서 당연히 바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숫자 논의로 시간을 더 허비할 수 없다. 15명에 타협을 하고 다른 부분의 법적인 개

정 실익을 취하자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사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한다.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천권자예요. 추천으로 끝나지 않지요. 방통위가 의결로써 임명제청을 하면 그때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정 문구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받은 날로'…… 방통위가 최종 추천을 하잖아요.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건 대통령의 임명권한을 제약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민주당이 이 법 통과시키지 못할 거다', 자기 권력을 위축시키는 그런 법이라고 이해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맞아요. 이렇게 대통령의 권한을 제약합니다. 이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이 방송법 개정안을 대통령의 권한 내려놓기로 규정합니다. 최민희 위원장께서 그렇게 규정하셨고 저는 무릎을 쳤어요. 제가 대선이 기정사실화 됐을 때, 심지어 우리 내부에서도 'KBS 사장 정도는 우리가 임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방송법 개정하면 못 하잖아'. 그거 하자는 겁니다.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권력이, 그 욕심 많은 권력이 공적인 영역에 있고 바람만 불면 흔들릴 것 같은 공영방송 사장 자리를 내 사람으로 채우는 그 유혹을 이겨 낼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에 내가 장악해야 하는 대상자가 좀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를 추천하는 주체들이 다양해야 돼요. 내 입김이 닿지 않는 곳까지 다양하게 퍼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정답은 없어요. 앞선 토론자가 BBC 사례를 우리 방송법의 반박 자료로 끄집어냈다가 미리 검토도 안 하셨는지 정부에서 5명을 추천한다고 딱 읽고 나신 다음에 당황하시더라고요. 나라마다 다 자기 처지에 맞게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가져 왔던 방식이 시대의 효용을 다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 주체를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방통위가 자기가 모집하고 자기가 임명해서 그 결과로서 사장까지 바꿔 냈던 그 권력이, 대통령 하나가 방통위원장을 대리인 삼아서 멋대로 이사 뽑고 갈아 치우고 사장 세우고 이랬던 것 하지 말자고 이사들 구성 단계부터 추천 주체부터 다양화하자고 하는 겁니다.

누가 추천하는가? 국회는 대의기관으로서 추천 권한을 이 법은 보장합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분만 추천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극히 일부분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 통합 법안을 만든 민주당은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국회의 교섭단체가 추천하게 하고 의석수 비율에 따라서 추천하게 하고 그 인원은 KBS 이사 15인 가운데 6명으로 한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더 줄이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못 할 게 뭐 있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합리성을 따져 보기는 해야지요. 적기만 하면 좋은 것인가.

정치적 후견주의를 줄이자, 그것은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들을 정점에 있는 권력의 입맛에 따라서 전원을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경계한 거예요. 그런데 대의기관이 일정한 정도의 추천 권한을 갖는

것을 여전한 정치 후견주의라고 하면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만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은 당연히 하나의 의견으로 존중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분들과 토론을 저도 나름대로 했는데 6명보다 5명이 좋은가. 5명을 KBS에 대입하면 3 대 2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지금만 반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홀수는 적정한가? 홀수라는 것은 국회가 5 대 5 구성이 됐다는 것은 반영을 못 하지요. 홀수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맹점에도 불구하고 MBC는 5명으로 됐습니다만 처음에 6명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이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5명이 적정한가. 물론 의석수 차이에도 불구하고 또는 동수가 나와도 3 대 2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합리성에 부합하는가?

또 하나, 그러면 짝수로 더 낮추면 4명은 어떠한가? 4명은 의석수의 차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4명은 2 대 2가 되거나 3 대 1이 되거나 4 대 0이 됩니다. 4 대 0이 비현실적이라는 데야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3 대 1도 우리 국회가 경험해 보지 못한 비현실적인 의석 차이예요. 우리 국회가 경험해 봤고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있고 그게 5 대 5에서 4 대 2 사이인 겁니다. 5 대 2에서 2 대 1 사이인 겁니다.

그래서 6보다 4가 적어서 정치권의 몫이 줄어든다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 4는 불합리한 숫자다. 2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가장 우선적으로 결론을 내야 하는 KBS에서 6명을 특정한 겁니다. 여기에 연계해서 MBC에 홀수의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명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의석수를 대입하면 민주당은 4인을 추천하게 됩니다. 4명으로 어떤 기술을 부리면 15명 정원의 KBS 이사회를 장악하고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국민참여형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장악해서 내 입맛에 맞는 KBS 사장을 뽑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면 법이 부족합니다. 아마 못 할 겁니다.

그다음에 추천 권한을 갖는 주체는 어느 방송이나 의무화돼 있는 시청자위원회입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주체여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물론 여기에 시청자위원회가 사실상 사 측의 입김이 강한 조직이어서 방송법이 규정되고 나면 시청자위원회도 편성위원회의 제청을 거치기 때문에 시청자위원회가 중립 또는 공정하게 구성된다라고 기대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기존 경영진의 입김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일 수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기구이고 그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는 판단으로 시청자위원회의 추천 주체성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KBS를 구성하고 있는 종사자들, 방송 보도·제작·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추천되는 게 아니고요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종사자들 얘기를 하면 노조로 등치시키는 그런 일들, '이것은 KBS노조가 쥐고 흔드는 구조 아니야?' KBS에는 큰 노조 둘이 있습니다. 둘의 지향점이 달라요. 사장을 뽑을 때 입장이 다 달랐어요, 그동안. 원래 하나였던 노조가 갈라졌던 겁니다. 상당한 규모로 서

로 존재합니다. 한 노조는 언론노조에 속해 있고 한 노조는 기업노조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MZ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가 있습니다.

구성원들을 노조로 자꾸 등치시키려는 시도에 동의하지 못하면서도 노조로 본다 하더라도 KBS에서 특정 노조가 3명을 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 떠나서 방송을 만드는 주체들, 학교에 학교 교직원과 학생과 학부모가 있듯이 우리 방송에도 방송사와 방송종사자와 방송 시청자가 존재합니다. 이들에게는 일정 정도의 추천권을 보장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체로서 법에 담은 기구가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입니다. 활동기간 또 주요 활동내역 그리고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이 학회들을 특정해야 합니다.

이 규정이 왜 들어갔는가 하면 류희림의 방심위가 시작부터 청부민원으로 했지요. 가짜뉴스대응센터 만든다고 돈은 돈대로 쓰고 실적은 하나도 없고 한 것이라고는 눈엣가시 언론사 보도들 제재했다가 30전 30패, 소송에서 죄다 진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할 때 기술을 부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듣보잡 단체, 급조된 단체, 극우단체, 정체불명의 단체 이런 데서 추천하는 자들로 선방심위를 구성했어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미디어학회가 한국 방송계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든가 또는 관계라든가 이런 걸 볼 때 학회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겠다, 비중을 무시할 수는 없겠다 이런 판단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학회라고만 하면 오늘 만들어서 내일 추천하겠다고 했을 때 못 막는다, 정권이 그런 장난을 칠 수도 있다. 그래서 활동기간이 많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인지도, 공신력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활동내역이 있어야 되고 회원 수가 일정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 업계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또 활동내역, 이력, 인원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왜 미디어학회랑 왜 법률단체야? 정답은 없습니다. 발의된 안에는 경영단체를 넣자는 의견도 있었고 인권단체를 넣자는 법안도 있었고, 다양한 주체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끝에 공통분모를 찾은 겁니다.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공통분모에서 법, 우리가 법치주의를 살고 있기 때문에 법은 공통분모가 매우 크겠다라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교육방송은 교육단체가 들어갑니다. 미디어학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요. 이렇게 추천된 사람들로 이사회가 구성됩니다.

그러면 사장은 100명 이상의 국민 표본, 여기서 말하는 표본은 지역 비중, 성별, 연령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 표본에 맞게 무작위 추출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100명 이상으로 그러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접수를 받고 여기서 심사하고 여기서 후보를 추립니다. 몇 명까지, 3명 내지 2명. 소위 말하는 공론화, 숙의 과정을 거쳐서 KBS 사장이 되겠다라는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하고 심의해서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으로 압축하는 것까지가 국민참여형 후보추천위원회가 할 일입니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누가 구성할까요? 사장이? 이사들이? 아니면 이사 추천 주체들이? 노조가? 전혀 무관합니다. 오로지 공신력이 인정된 조사기관의 무작위 추출에 의해서만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100명 이상으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100명 이상이면 150이 될 수도 있고 120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의사정족수를 100명 이상으로 했습니

다. 그냥 결정됐는데 '나 안 갈래'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겁니다.

그렇게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 내지 3명으로 축소를 해서 이사회에 넘기면 그때 비로소 이사회가 1명을 낙점을 합니다. 그런데 그 1명 낙점도 다수결로 하지 않아요. 특별다수제를 거치도록 합니다. 5분의 3이 동의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15명이니까 9명이 동의해야 사장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8명으로는 안 됩니다. 물론 계속 그렇게 선출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부결이 되면, 성립이 안 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때는 다수결로 뽑습니다. 최대한 다수의 지지를 받는 자가 KBS 사장이 되게 하자, 이게 법의 취지에 담긴 겁니다.

일관되게 방송법은 방송의 독립, 언론으로서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제작 주체로서의 자율성, 일관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제작과 경영을 철저하게 분리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송 자율성은 마치 대주주가 누리는 자율성인 것으로 오인하는 그러한 경우가 앞으로는 부디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갖고 계신 노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적대감 그리고 거침없이 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본회의장에서까지 노조에 대한 적개심을, 적대감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그 과감성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부적절한지 하나하나 설명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합니다. 전문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사회적 세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노동자에 대한 인식,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노조 할 권리를 거부하고 색깔론을 입혀서 과격분자,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자들 이렇게 매도하는 태도, 색깔론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폐습 중의 폐습입니다. 불의 중의 불의입니다. 이걸 타파하라는 게 헌법 전문의 명령입니다.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 누가 누구와 자율적으로 조화를 이룹니까? 지역별로 그래야겠지요. 세대별로도 그래야겠지요. 더 실질적으로는 강자와 약자, 권력이 있는 자와 권력이 없는 자, 돈이 있는 자와 돈이 없는 자, 경영자와 노조 이런 대립 개념으로 봐 왔던 주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선언입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노조 할 권리를 박탈하면 안 된다는 뜻이 이 문구에도 담겨 있는 겁니다. 사회 영역에 있어서 나의 기회인데 노조 가입하면 이상하게 보고 노조 활동을 하면 위험하다고 하고.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굳이 향상이라고 안 하고 균등한 향상이라고 했습니다. 약자도 함께, 낮은 곳도 두텁게.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 이것을 다짐하면서 만든 게 대한민국헌법이에요.

권리를 누리면서, 권리 속에서 의무를 다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 아닙니까? 나를 보호하라고 나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왜 노조 할 권리는 무시하고 매도하고 헌법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자기도 모르게, 몰라서 그러겠지요.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 의무를 진다.’

저는 YTN의 노조원으로 30년 가까이 회사 생활을 했고 퇴사를 하는 그 순간에도 노동조합원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저는 노동조합 조합원이었던 게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그 시간 시간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했습니다. 제게는 그게 행복추구권이었어요. 노동조합을 할 권리와 같은 기본적인 다른 권리들을 행복추구권과 별도로 보지 마십시오. 다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대한민국헌법 제11조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노동조합 하는 사원들은, 특정 노동단체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은 왜 국회의원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야 합니까? 그들이 불법 단체에 가입해 있습니까? 그러지 맙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공직자가 드러내 놓고 위험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만들어 가고 그러면 개인은 그 공직자가 만들어 놓은 그 틀에서 본인의 양심이 위축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특정 지역의, 국민의힘 당세가 매우 강한 곳의 국민의힘 유력한 정치인이 ‘노동조합은 위험해. 민주노총 안 돼’ 그러면 그를 지지하는 선량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민주노총 가입하는 것을 꺼리지 않겠습니까? 무슨 노동조합 하는 것도 독립 투쟁하듯이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심코 본회의장에서 하는 발언 하나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천부적인 기본권,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헌법 32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근로기준법, 노사관계법, 노동조합법 규율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33조는 노동자들이 가져야 하는,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까지 합니다. 제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헌법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정할까? 특별히 노동자, 근로자가 탄압받고 거리에서 두들겨 맞고 불온시되고 그런 걸 경계하는 취지입니다.

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판단이 헌법에 앞설 수 없습니다. 개인 판단은 사적으로 감추십시오. 사적 대화에서 풀어내십시오.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특정한 대상에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비판적인 발언을 하고…… 어떠한 특수한 경험을 했을 때 그분의 경험은 존중받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그 경험으로 어떤 대상을 일반화하고 비판할 때, 공개적으로 공격할 때 그 폐해 스스로 감당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YTN의 경영진으로부터 2008년도에 해고를 당했고 만 9년 동안 해직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YTN의 경영진을 통째로 악마화하지 않습니다.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사안별로 평가하고 YTN 경영진이라는 지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노동조합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또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일이 반복되고 그것이 그 기업이나 단체의 기질이고 성향이고 그러면 망하게 해야지요. 문 닫게 해야지요. 그게 아

니라 내가 경험했다고, 나한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것이 전체인 양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120만 명입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제가 민주노총 가입해 있는 기업들, 단체들 목록이 적혀 있는 문건을 축소판으로 인쇄해 왔습니다. 책 한 권 분량입니다, 축소판인데도. 여기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단체들이 있겠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기업, 큰 언론사부터 한 번도 들어 본 적 없는 작은 기업, 작은 단체까지.

한국노총도 그렇고 민주노총도 그렇고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인 겁니다. 언제까지 1980년대 사고에 매몰돼서 민주노총을 굳이 민노총이라고, 당사자들은 멸칭으로 느끼는 그 표현을 굳이 써 가면서, 그것도 꾹꾹 눌러 가면서 '내가 한번 그 노조한테 당했으니 민주노총은 전체가 다 악이다'…… 공직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국가 이익을,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헌법 제9장 경제, 제119조 2항을 읽어 보겠습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앞서 본 규정에서도 국가의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국회는 국가를 이루는 중요한 권력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119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누구의 행태를 경계하는 겁니까? 경제주체 간의 조화, 여기에 노조는 안 들어갑니까?

헌법은 이 정도 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도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안 했으면 수많은 노동자들께 뒤늦은 작은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노동자 여러분들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 앞선 토론자가 귀족노조에게 무기 들려주는 거라고 했어요. 귀족노조라는 표현을 정말 쓰고 싶습니까? 국회의원은 귀족 국회의원입니까? 그 귀족이라는 두 글자에 어떤 멸시와 조롱과 배제와 혐오가 들어 있는지 정말 몰라서 귀족노조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까?

노동자는 연봉 7000만 원 받으면 귀족입니까? 제가 기억하는 한 귀족노조가 급격하게 언론계 전반에 퍼지고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귀족노조, 귀족노조 했던 게 유성기업 사태입니다.

유성기업 수십 년 근무한 공장 노동자의 월급명세서를 가지고 7000만 원 받는다고 그때 이명박 정권하에서 귀 정당의 선배 정당이, 뿌리 정당이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귀족노조, 나라경제의 발목을 잡는 무도한 세력으로 매도했습니다.

용역들 폭력이 난무했고 머리가 깨지고 용역들이, 용역 깡패들이 카메라가 찍는데도 소화기 던지고 쇠파이프 휘두르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경찰들까지 투입돼서 그야말로 노조를 박살 냈습니다.

창조컨설팅 기억하십니까, 노조 잡는 전문 노무사 단체? 그들하고 밀착하고 유착해서

기업과 공기관과 깡패들과 노무사 조직이 노조 하나 때려잡겠다고 그 난리를 치는 가운데 노조에 대한 지지 여론이 오를라 치면 '귀족노조', 조합원 피투성이 된 사진이 하나 나올라 치면 '귀족노조', 언론이 그랬고 여러분들이 그랬습니다.

그런 귀족이 존재하지도 않지만 노동조합이 억대 연봉 받으면 어때요? 일한 대가로 받는데 그게 죄입니까? 귀족노조라는 단어 부디 이 의사당에서는 퇴출시켜 주십시오. 국회의원이 나서서 혐오를 조장하면 되겠습니까? 귀족도 존재하지 않지만 그런 노동조합을 위한 도구, 무기, 이게 노란봉투법이라고요?

대우조선해양 사태 벌써 잊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브로커, 끄나풀 명태균까지 개입했던 그 대우조선, 거기서 오랜 농성을 하고 투쟁했던 사람들이 정규직 노동자입니까? 하청의 재하청, 아무리 목 놓아 불러도 의사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하청을 준 바로 위 사장은 '나는 권한이 없어', 원청한테 가서 따지면 '나는 사용자가 아니야', 그래서 노동자만 죽어나도록 방치했던 국회가 지금이라도 법을 만들겠다는데, 그 하청의 하청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실질적인 사용자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데 이게 왜 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법입니까? 비판을 해도 맥락을 좀 잡아 주십시오.

입만 열면 글로벌 스탠더드, 글로벌 스탠더드. ILO 등이 요구하는 국제 기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 삭제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 글로벌 스탠더드에 좀 맞추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입니까? 그러니 굳이 입으로 '나는 재벌 편이야'라고 말을 안 해도 재벌 편으로 의심받는 겁니다, 그 대척점에 있는 노동자를 때려잡는 쪽으로 역할을 하니까.

모든 노동자들한테 규율되는 부분,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파업을 해도 손배·가압류 때립니다. 그것 때문에 노동자들이, 경찰한테 두들겨 맞고도 견뎠던 노동자들이 결국은 손배·가압류 때문에 목숨을 끊습니다.

적어도 법을 지키면서 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를 묻지 마라,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그것 때문에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그 손해를 노동자가 물어야 한다면 법은 왜 노동권을 보장해 줍니까?

또 하나,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노조가, 근로자가 방어하는 차원에서 한 행위, 이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불법을 저지른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불법을 저지르는데 '예, 알겠습니다', 불법을 감수하라고요? 법리에도 맞지 않고 정의에도 맞지 않아서 국회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법을 만드는 겁니다. 방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YTN이 어떻게 처참하게 망가졌는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3년 내내 방송장악을 위해서 절치부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어스테핑이런 걸로…… 뭐라고 할까요, 잠깐 좀 해 봤지요. 한계가 너무 분명한 것이어서 하는 내내 불안했습니다만 결국은 그걸 스스로 접고 시쳇말로 생긴 대로 살자고 결심을 한 건지 그때부터 MBC에 대한 탄압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KBS 사장 교체 작전에 돌입합니다.

동시에 YTN 팔아 치우기도 본격화합니다. YTN은 2024년 2월에 공식적으로 매각 절차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 시작은 그로부터 2년 전이었습니다. 2022년 4월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추정하게 되고, 늦어도 2022년 8월 전에는 YTN을 팔아넘기자는 모의가 시작됐다. 그것은 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특검 수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YTN의 장악 과정을 여섯 개의 단계로 구분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정권 초기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의 음모 단계, 모의 단계라고 규정합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서 그 시기에, 4월에서 8월 사이에 건진법사라는 비선 무속인 전성배 그리고 통일교의 2인자로 불리는 윤영호 본부장 그리고 또 한 명 김건희.

통일교 쪽에서 건진을 통해 김건희에게 접촉합니다.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뇌물을 안기는 접촉입니다. 6000만 원짜리 그라프 목걸이, 샤넬 명품가방 이런 것들을 사다 안기면서 통일교는 전성배를 통해서 김건희에게 접근합니다.

'YTN 노조는 성명을 내고 YTN 사영화의 처음과 끝에는 모두 김건희가 있다라면서 YTN 사영화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권이 강압을 동원해 진행하도록 만든 불법 거래며 그 범행을 추동한 배경은 김건희 개인의 복수심과 윤석열의 방송장악 음모 그리고 YTN를 탐내던 세력들의 로비라고 밝혔다.'

이 더러운 거래는 2022년 8월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에게 YTN 인수 로비를 했다는 보도가 이미 잇따르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인수위원회 때 이미 더러운 거래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건희의 복수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김건희 씨가 YTN 사영화에 동조하거나 계획에 참여한 배경에는 김건희 씨에 대한 YTN의 검증 보도가 있었습니다.

YTN은 지난 대선에 김건희 씨의 학력 위조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건희는 가식적인 눈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건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 건 지난 대선 당시의 YTN 학력 위조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마음에 품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통일교 측이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하고 접근한 것도 YTN에 대한 감정이 나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건희를 조금만 부추기면 YTN에 보복을 하도록, 팔아넘기는 방식으로 보복을 하도록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이아 목걸이 6000만 원짜리 그라프, 일반인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목걸이를 통일교 쪽에서 선물을 했다. 일방적인 주장일까? 웬걸요, 통일교 본부 압수수색해서 영수증이 나왔잖아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통일교 본부를 압수수색하며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을 확보했다.' 그래서 특검은 단순히 윤영호라는 개인이 아니라 통일교 측에서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인물이 또 등장하는데요,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통일교 2인자라는 사람 윤 씨하고 그다음에 건진법사 전성배 간의 관계는 그러면 입증되었는가? 예, 입증됐습니다. 무엇으로? 당사자들 간의 문자메시지로.

포렌식에 성공해서 이런 문자가 확인됐습니다. 통일교 윤 씨가 건진법사 전 씨에게 2022년 11월에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통일교는 보수적인 종교단체이고 김 여사를 위해 보수적인 언론사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전성배가 답합니다, '필요하다'.

놀라운 대화가 이어집니다. 전성배는 통일교 윤 씨에게 'YTN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 이 시기 기억해 주십시오. 2022년 11월입니다. '한전과 마사회 지분 가진 것을 확인하고 이철규 의원에게 인수 방법을 알아보겠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철규 의원에게 인수 방법을 알아보겠다. 문자에 담긴 내용입니다.

제가 시기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드렸지요. 2022년 4월부터 8월경에 뭔가 모의가 시작됐을 것 같고 그 기간 안에 보석이 전달이 됐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YTN의 기존 대주주 한전KDN은 '나 못 팔아'였습니다, '나 안 팔아. YTN 보유할래'.

한전KDN은 산자부 산하, 3대주주인 마사회는 농림부 산하, 이걸 컨트롤하는 것은 기재부. 공기업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자회사 정리하라고 하는데 왜 안 팔겠다는 YTN을 한전KDN 그 알짜 기업한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매년 막대한 이익을 내는 한전KDN한테—한전하고 다른 회사입니다—YTN을 팔라고 그래요. 그때는 한전KDN 그 당시 김장현 사장이 버텼어요, '우리는 안 팔아요'. 마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9월에 정부가 내놓고 요구합니다, '팔아. YTN 필요 없으니까 팔아'. 그 필요성은 대주주가 판단하는데 정부가 팔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KDN 사장을 향해 '팔아. YTN 팔라고' 요구합니다. 속기록 찾아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가. 그 국회의원이 이철규입니다, 전성배와 윤영호 문자메시지에 등장하는. '이철규 의원에게 인수 방법을 알아보겠다'.

건진법사 이름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얼굴 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무슨 역할을 했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해요. 그냥 소문으로 '천공이 세다. 건진이 세다'. 확실한 건 김건희가 제일 셌지요. 그런 건진법사가 '건희, 건희 하고 다녔다'라는 기사가 경향신문에 나왔습니다.

김건희의 무속 비선으로 지칭되는 건진법사 전성배는 어떤 인물인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간경향의 기사 한 대목을 말씀드리지요. 2022년 대선 당시에 윤석열 후보 측의 이른바 비공식 비밀캠프로는 신사동 예화랑이 있고요—민주당 의원님들이 어렵게 찾아내서 세상에 공개했습니다—또 서울대 법대 동기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서초동 캠프, 이른바 대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또 있어요. 이 캠프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복조리 캠프 들어 보셨나요? 이 복조리는 식당 이름입니다, 전성배가 운영하던 무늬만 식당. 실제로는 법당, 일본 신이 모셔져 있다는 그 법당 거기에 재벌, 정치인, 법조계 고위인사들이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본 것은 아니니까 전언으로만 말씀드립니다. 이 복조리 캠프를 주변 빌딩으로 이전해서 역삼동 캠프로 불렀다고 합니다.

건진법사가 언론에, 카메라에 찍힌 적이 있어요. '건진법사가 윤석열 선대위 고문으로 일한다' 이런 세계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보도예요. 당시 조용헌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칼럼을 통해서 조선일보에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 손바닥에 왕 자를 써 준 사람이 건진이다'. 왕 자를 누가 써 줬나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요? 명태균 녹취록 들어 보면 명태균도 건진이 썼다고 합니다. 그런 권력이었어요.

건진은 12·3 불법 계엄 이후 12월 17일에 체포돼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지만 지금은 병보석으로 가석방된 상태라고 합니다. 참 잘 나와요.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신통력이나 예지력이 없었다면 왜 고위공직자들이 나를 만났겠나?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세계에 계속 빌었던 집안사람들은 기도 안 하면 못 산다'. 그렇지요. 한번 나한테 오면 계속 빠져든다 뭐 이런 얘기, 매우 자신감 있는 얘기를 검찰에 가서까지 했다고 합니다. '건진은 2022년 4월에서 8월 사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 줬다

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브로커 역할, 윤영호가 옆에서 지켜보는데 건진이 전화했다잖아요, 김건희한테. 그게 윤 씨 수첩에 적혀 있고, YTN 인수에 관한 내용까지. 이렇게 김건희를 중심으로 한 무속이 결부돼 있는, 또 통일교까지 연루돼 있는 그런 매각 음모, 이것은 실행이 됩니다. 영업이익이 기대되고 지금은 팔 필요가 없다고 8월에 분명히 입장을 냈던 한전KDN.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위에 있는 표가 팔지 않겠다라는 문건입니다. 한전KDN의 공식 문건이에요. ‘광고수익 증가 및 사업 영역 확장으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 향상이 기대되는바 향후 재무 전망 긍정적이다’, 안 팔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8월에 이런 입장을 한전KDN이 산자부에 낸 직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전KDN에 문건을 보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문건입니다. ‘YTN이 향후 수익이 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수익이 날 때까지 정리를 미루겠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주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압박해서 YTN은 팔리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재무 전망이 긍정적이라던 한전KDN 사장이 국회에 불려 나가서 국정감사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철규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합니다, ‘YTN은 한전KDN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없다’. 이철규 의원은 그냥 묻기만 한 게 아니에요. ‘한전KDN은 한전의 전력 정보통신기술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주, 매출이 보장된다’, 매출이 보장되는 튼튼한 기업인데 왜 팔라고 하지요?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지출과 자산을 줄여야 한다’, 팔라 이거예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효율성과 자산가치가 낮다는 인식에 주가도 저평가되니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 절차를 진행해 달라’. 건진법사가 통일교에 얘기한 이철규 의원의 역할이 이것 아니었겠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지 않았겠나라고 저는 의심합니다. 특검이 규명할 일이라고 보고요. 국회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나서 실제로 매각이 진행됩니다. 한전KDN은 보유하고 있던 21.4% 지분을 모두 매각하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이사회에서 의결했고, 내부 이사회의 반대가 있었지만 가결이 됐습니다. 마사회도 지분 매각을 어렵게 결정합니다. 농림부의 압박을 이기지 못했던 것으로 마사회의 내부 구성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정부 전화 한 통화에 정권 눈치 봤다. 마사회도 한전KDN도 경영진은 처음부터 안 팔겠다고 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입장이 바뀌었고, 구성원들은 다 안 팔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안 팔겠다는 공기업 대주주들 목을 비틀어서 팔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지분 매각 절차가 진행돼야 되잖아요. 그 절차는 합리적이거나 합법적이었나? 의혹투성이입니다.

어떻게 YTN 지분이 팔려 가는지 그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전KDN이 지분을 팔기로 하고 YTN 지분을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 출발은 매각 주관사 선정이에요. 그러면 증권사들, 투자자문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들어와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일감을 따려고 경쟁합니다. 그 경쟁 결과 삼성증권이라는 큰 증권사가 한전KDN이 보유하고 있던 YTN 지분을 입찰·매각하는 사업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쟁해서 내가 이것을 하겠다고 매각 주관사 지위를 얻은 삼성증권이 돌연 며칠 만에 그

자격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삼일회계법인이 가져갑니다. 업계에서 좀처럼 있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YTN 지분 한전KDN 것을 삼성증권이 팔기로, 다 매각 주관사로 선정이 됐는데 선정된 지 며칠 만에 삼성증권 스스로 안 하겠다고 빠집니다, 진짜로 스스로인지 모종의 압력이 있었는지. 그런데 그걸 삼일회계법인이 가져가요.

그리고 한전KDN은 삼일회계법인에게 당부합니다. '나는 이 지분 우리 것만 팔 거야' 그랬더니 삼일회계법인도 '그게 주주 이익에 부합합니다'. 그때 마사회에도 지분을 판다고 하니까 그것을 합쳐서 파느니 마느니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전KDN은 따로 팔아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주인을 찾기도 수월하고 가격도 더 좋게 받을 수 있고. 다 떠나서 한전KDN이 YTN을 인수할 때 그 매입가가 마사회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모아서 팔면 한전KDN은 자동으로 손해인 거예요. 자동으로 더 싸게 샀던 마사회보다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매각을 하는 것이 기본이고 정석이었어요. 삼일회계법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지어는 한전KDN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면 꼭 의뢰사인 우리와 상의를 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사회가 지분 매각을 진행하기 위해서 매각 주관사를 선정합니다. 거기에 여러 금융기관들이 입찰이 들어오지요. 가장 유력한 곳은 NH증권, 마사회 업무이기 때문에 농협 계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그런데 농협도 하겠다고 나선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누구 전화를 받았는지, 얘기를 들었는지 '저 빠질게요' 빠집니다. 그리고 그것도 삼일회계법인이 가져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두 개, 인수가격 자체가 다른 그 두 지분을 합쳐서 통매각을 삼일회계법인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삼일회계법인도 지금 압수수색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의문의 절차를 거쳐서 입찰이 진행됐고 결국 유진그룹이 YTN 지분 1대주주, 3대주주 합친 31%를 확보합니다. 그런데 얼마를 써냈냐? 3199억 원, 시장가의 3배 이상의 가격을 써서 돈으로 경쟁자들을 따돌렸는데 정말 돈뿐이었는지, 출발부터 김건희 쪽에 보석까지 들이밀면서 로비를 했던 통일교 측을 꺾었거든요. 더 큰 로비를 했나, 의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일교 쪽에서는 1000억대를 썼고요. 한세실업, 그 입찰되기 직전에 김건희·윤석열 부부의 해외 일정에 동행했고 심지어는 행사 테이블에, 같은 테이블 김건희 옆에 앉았던 한세실업, 유력한 경쟁자로 막판에 떠올랐는데 한세실업은 2000억 원대를 써냈습니다. 경쟁자들보다 많게는 2000억 원, 적게는 1000억 원 이상 써서 유진이 그것을 가져갔어요, YTN 지분을.

이것을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값 후하게 쳐 줬으면 됐지 않느냐'…… 내내 말씀드렸지만 방송은 돈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법 정신입니다. 방송법의 기본 원칙이에요. 방송은 돈 갖고만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최대주주 적격성을 심사받아야 됩니다, 국가기관으로부터, YTN 같은 경우에는 방통위로부터.

그런데 그런 의문의 절차를 거쳐서 의문의 가격으로 그리고 하나같이 미심쩍었던 그런 경쟁자들을 제치고 유진이 낙찰을 받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방통위의 매각 승인 심사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때 방통위에 키를 쥐고 있었던 사람은 이동관 위원장, 부위원장은 이상인 부위원장, 그 이외에 방통위원은 없었지요. 그래서 방통위가 5인 구조인데, 다섯 명인데 불과 두 명,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두 명만, 위원장·부위원장만 소위 말하는 그 유명한 2인 의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정권이 왜 최민희 위원장을 방통위원으로 낙점을 안 하는지 그때 국회 밖에 있었습니다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해가 됐습니다. 최민희를 방통위에 넣고는 하고 싶은 일 못 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때부터, 정권 초기부터 윤석열 세력은 치밀하고도 집요하게 YTN 매각 작전을 벌였던 겁니다.

이동관이 누구인가? YTN과 거액의 소송을 벌이고 있던 소송 당사자입니다, 이 당시에. 이상인은 누구인가? YTN을 산 새 주주 유진그룹, 그 그룹의 총수 유경선과 특수관계예요. 변호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들 둘이 쿵짝이 맞아서 위원장, 부위원장 의결놀이 하고…… 그래서 이들을 심사에서 배제하려고 했지만 이들은 이른바 셀프 각하로 기피 신청도 무력화하고 일정을 일사천리로 진행합니다.

유진이 지분을 샀으니 이제 이 지분을 인정해 달라고 방통위에 심사 신청을 하지요. 그래서 인수 심사계획서를, 기본계획을 요구합니다, 이제 심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달라. 그 요청서를, 신청서를 어떤 주체가 내면 방통위가 이것 좀 검토도 해 보고 그다음에 뭔가 계획을 발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작전이었기 때문에 유진이 오늘 신청서를 내고 이동관 방통위가 내일 심사계획을 발표합니다, 의결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졸속 심사가 빠르게 시작이 됐고요.

왜 졸속 심사라고 말씀드리느냐? 방송사업을 하기 위한 대주주 적격 심사에는 반드시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들이 직접 심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최종 의결을 하는 거지요. 심사보고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었어요. 보통 몇 달 합니다.

그런데 YTN 건은, 다른 작은 지역방송도 몇 달 하면서 YTN은 심사위원회를 가동한 날이 꼴랑 나흘이에요. 나흘 해 놓고 이동관이 국회에서 탄핵한다고 하니까 도주를 했지요? 의결 하나 해 놓고 도주했습니다. 이 상태로 승인을 해 주면 뒷감당이 안 되겠다고 판단을 했는지 보류 의결을 하고 도주를 합니다.

보류 의결도 매우 고려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머리를 많이 굴렸던 것 같아요. 승인 의견 보류를 합니다. 승인이면 승인이고 기각이면 기각이지 보류를 하면서 승인 의견은 뭐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이동관이 물러가고 그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김홍일, 윤석열의 선배 김홍일입니다. 권익위원장이 자리를 옮겨 왔어요. 나중에 부위원장 김태규도 옮겨 왔지만 아무튼 김홍일 체제에서 그 심사 과정을 넘겨받습니다.

그런데 보류를 했다는 것은 뭔가 심사할 거리가 더 있다는 거잖아요. 행정행위에서의 보류를 그것 말고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판단 기준이 동일하고 심사자료가 동일하면 그때 두드렸어야지요. 그런데 이후로 유진 쪽에 서류 보강도 요청하고 새로운 판단도 하고 이런 절차가 실질적으로 더 진행됐습니다, 두 달 동안.

그런데 심사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어요. 심사위원회가 있어야 심사를 하는데 심사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그 심사위원이었던 사람들을 자문위원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자문위원들이, 원래 심사위원이었던 사람들이 그 매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태클을 걸어요. 그러니까 심사위를 가동하면서 이분들이 말을 좀 안 듣는다고 생각을 했는지 자문위로 격하를 시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유경선 회장이 처음 YTN 인수 이 부분을 방통위가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사가 합의해서 하고 있는 제도, 그것 좋은 거다. 그것 잘 지키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동관이 보류 의결하고 물러가고 김홍일 체제에서 서류를 계속 반려하고 보강하도록 요구해요. 그러면서 노사가 합의했던 제도를 완전히 180도 입장을 바꿔서 없애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인수했는데 YTN 기존의 제도들 잘 존중하면서 이것 잘할게. 승인 내 주세요’ 했던 유진기업이, 총수 입으로 그런 말을 했던 유진기업이 김홍일로 바꾸고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 이게 아니네. 내가 번지수를 잘못 짚었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도 없애야 되는 거였구나.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도 없애야 되는 거였구나’ 이래서 유진이 공식적으로 사장후보추천위원회 폐지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통과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심사위원 하다가 자문위로 강등당한 분들이 여덟 명인데 여덟 명 중에 여섯 명이 이것 사추위 폐지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냅니다. 그런데도 그냥 밀어붙여서 매각 승인을 내 줘요, 2인 의결이라는 도깨비방망이로. 위법하고 부당하고 심지어는 비겁하고 비굴하고.

이렇게 YTN을 집어삼킨 유진그룹, 팔아넘긴 윤석열 정권, 둘은 새로운 경영진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한배를 탑니다. 존재도 몰랐을 김백이라는 사람을 유진그룹이 사장으로 앉힙니다. 김백은 YTN 구성원들로부터는 절대적으로 비판받는 사람이에요.

YTN 구성원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교집합이 있습니다. YTN은 2008년도에 5공 이후로 최대 규모의, 최초의 대량 언론인 해직 사태를 겪습니다. 그때 해직자만 6명이었고 30여 명이 징계를 당합니다.

그때 해직 사태가 벌어지고, 우리 사회 전체가 한동안 그런 일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87년으로 끝이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20여 년 만에 그런 일이 터지니까…… YTN이 그렇게 큰 언론사가 아니었어요. 보도전문채널, 케이블방송 그곳의 해직 사태가 공중파 뉴스, 메인뉴스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 저를 해직, 해고시켰던 사람, 저도 그때 해고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서 그 사태 전후의 사정에 대한 증언을 하게 되고 경영진도 나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낙하산 사장이라고, 이명박 정부가 내리꽂은 이명박 캠프의 언론특보였던 YTN에 왔던 그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이 하도 ‘왜 이렇게 무모하게 대량 해직 사태를 발생시켰나’…… 그때는, 그 당시 제가 한나라당이었는지 그 당명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에서조차도 구본홍 사장을 질타했어요.

그때 구본홍 사장이 답했습니다,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YTN 내부 인사위원들이 강하게 요구했다’. 그 답변이 책임을 넘기는 답변으로 평가되기도 했지만 충격을 줬지요. 내부인들은 그래도 좀 허물이 있어도 감싸고 그런데 외부에서 온 사장이 뭔가 권위를 세우거나 기세를 올리기 위해서 해고 사태를 일으켰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류희림, 방심위원장 한 류희림 그리고 YTN 사장이 되는 김백, 이 두 사람이 2008년도 YTN 인사위원회 대량 해직 사태를 20년 만에 이끌어 낸 그 장본인들입니다.

○의장 우원식 노종면 의원님, 잠깐만요.

방청석에 김은혜 의원님 지역에서 분당 지역구민들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계속해 주시지요.

○노종면 의원 너무 딱딱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들어오셔서 좀 송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이라는 사람은 YTN을 나간 이후에, 박근혜정부가 끝나면서 YTN에서 사실상 방출됩니다. 이명박·박근혜 시대를 거치면서 소수의 언론인들이 이른바 권력의 언론 탄압에 협조했다라는 이유로 규정을 당해요. 그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에서 물 만난 고기처럼 펄떡펄떡 뛰어오릅니다. 그 50인을 규정했는데 그 안에 김백도 있고 류희림도 있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으로 부활. 김백, YTN 사장으로 부활.

그런데 이 김백 씨가 YTN 사장이 되기 전에는 극우 유튜버 활동을 했어요. 사고가 매우, 뭐라고 할까 위험해 보이는 그런 유튜브 방송을 지속적으로 해 왔고 이 사람이 활동했던 언론단체가 있습니다. 언론단체라고 해도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명칭만 보면 언론단체예요. ‘공정’이 들어가고 ‘언론’이 들어가고 ‘국민’이 들어갑니다. 공언련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그 단체의 이사장을 했어요.

그리고 같이 그 공언련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런 문제의 활동들을 많이 했다고 저는 봅니다. 최철호, 공언련 대표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KBS 피디 출신이고요, 이진숙 방통위가 2인 의결로 자리를 보전해 준 사람입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에요. 2인 의결이 소송 안 당하고 유지되고 있는 극히 드문 사례가 바로 이 최철호 사례입니다.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방심위의 극우 편향적인 선방심의위 위원으로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활동했던 자가 김백입니다. 정권에서 추천했다고 보고요. 이 사람이 사장이 됐습니다. 되자마자 취임식에서 한 말이 기가 찹니다.

김백 발언이에요. 취임식 때 한 발언이에요. ‘대통령후보 부인—김건희를 가리킵니다—‘김건희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검증 없이 두 차례나 보도한 이른바 쥴리 보도가 그 정점을 찍었다’, YTN이 편파·왜곡 방송이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공영방송에서 민영방송으로 바뀐 이유가 아닌지 자문해 보라’, 회사 구성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YTN이 민영화된 것, 사영화된 것은 쥴리 보도 때문인 거라고 자백한 거나 다름없어요.

검증을 안 했다고요? 의혹 보도는 의혹과 반론을 실어 주는 그런 기본적인 골격을 갖습니다. 그런 유형의 보도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은 보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편파·왜곡이라고 규정하고 이것 때문에 주주 구성까지도 바뀌었다는, 그랬을 수 있다고 ‘너희들 반성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사장 자리를 꿰찬 김백의 첫 번째 인사……

여러분, YTN이 지금은 좀 그럴싸한 회사로 보이나요? 매체력은 매우 커졌고 자산도 꽤 늘었고 매출도 건강한 편입니다, 김백 체제에서 망가졌지만. 서울타워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YTN은 구성원들만 아는 아픈 그런 과정이 있어요. 대충은 아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IMF 전에 대한민국의 케이블방송, 김영삼 정권이 추진했던 케이블방송 정책은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1995년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면서 케이블 정책이, 케이블 PP들이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때 지금 OCN이 되어 있는 DCN 대우시네마네트워크, 한국스포츠방

송, 지금은 여러 개의 지상파 스포츠채널로 쪼개져 있지요. 그리고 보도전문채널 YTN 그리고 투니버스라는 만화채널 그리고 엠넷이라는 음악채널 그리고 현대방송, 현대방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편에 버금가는 정도의 비전을 가지고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블 업계를 이끌어 갈 것으로 촉망받았던 회사들이 그야말로 모조리 예외 없이 망합니다. 김영삼 정권이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전파를 쏘라고 했거든요.

YTN은 하물며 24시간 생방송 채널이잖아요. 생방송은 그 시간만큼 돈이 들어갑니다. 그 시간만큼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YTN은 자본금을 몇 년 안에 다 까먹습니다. 그때는 지금 문체부가 아니라 공보처였어요. 공보처의 위세에 눌려서 각 PP들은 방송을 했고 그 권력자들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사업자들은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의 주인이 다 바뀌었어요. YTN도 원래는 연합뉴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합뉴스가 지분 팔고 갔습니다. 그 지분을 공기업인 한전KDN이 받은 거예요.

그 과정이 이렇게 짧게 설명이 되지만 YTN이 새 주인을 만나서 정상화되는 첫 번째 과정은 월급 50% 반납입니다, 전 직원. 간부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반납해야 했어요, 70~80%를. 그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의무적으로 다 무급휴직을 가야 했어요, 회사에서 줄 돈이 없어서. 그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월급이 제때 나온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 당시 정치는 그게 낭만이었나 모르겠는데 그때는 김영삼 정권 지나서 김대중 정권 하에서 보너스 나와야 되는 날 급여가 안 나오니까 청와대에서 쌀을 보내 줬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전에는 완벽하게 6개월 동안 단 한 푼도 못 받으면서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 시기를 겪어 냈던 구성원들이 여전히 YTN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YTN의 사장을 뽑을 때는 늘 경영 능력…… 물론 경영 스타일에 따라서 공격적인 경영을 할 수도 있지만 안정적인 경영, 다 떠나서 어떤 투자 개념이 아니라 인건비를 헤프게 쓰거나 자리를, 감투를 늘리거나 이건 독약이라고 YTN은 판단했습니다. 어떤 사장후보자도 '내가 사장이 되면 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김백은 들어오자마자 자리부터 늘립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몇 안 되는 극소수들에게 거의 전원 자리를 다 하사합니다. YTN은 제가 다닐 때의 사장은요 운전기사도 뺐어요. 임원 자리 둘인데 굳이 하나만 선임시켰어요, 인건비 줄여야 된다고. 과거 YTN의 어떤 사장은 사장실도 반납했어요, 차도 일반 보도 차량 타고 다니고. 그랬던 경험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사장이 와서 자리를 늘리고 자기 측근들한테 감투를 씌워 주고 이런 것 못 봅니다. 그런데 김백이 준다고 하니까 덥석 받아 문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YTN은 보도전문채널이기 때문에 보도국장의 지위와 역할은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많은 책임을 지고 있고 그래서 사장이 함부로 못 해요. 그리고 그런 지위이기 때문에 YTN의 보도국장은 임명동의를 받아 왔습니다. 사장이 낙점하지만 사원들이 동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보도국장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생긴다, 이 제도가 보도국장 임명동의제입니다.

그전에는 보도국장 복수후보추천제라는 것을 했어요. 사원들이 먼저 투표를 해서 복수후보로 3명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사장은 그 셋 중에서 한 명을 보도국장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이런 구성원과 경영진 사이의 조율과 견제, 이런 묘를 살린 제도를 유지해 오다가 김백이 그걸 없애 버립니다. 자기도 사장공모제가 없어진 상태로 유진의 낙점을 받아서 대표이사가 됐고 자기가 보도국장을 멋대로 임명하겠다고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멀쩡하던 제도, 단체협약이었던 그 제도를 일방적으로 없애 버립니다. 파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보도국장이 된 사람이 김응건, 그는 1년도 못 채우고 바뀝니다.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이런 제도는요 보도국 사원들이 사장하고 싸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보도국장이 보도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책임감 있게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임기를 보장해 주라는 기본이 깔려 있는 겁니다. 내 멋대로 세우고 마음에 안 들면 갈아 치우고 이러면 보도가 망가진다, 이건 우리 방송·언론계가 수십 년에 걸쳐서 확인해 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망가지는 거지요. 그리고 김호준으로 바뀌었어요. 그 김호준도 국장 시켜 준다니까 그냥 받았습니다.

김백이 사장 되자마자 임원급 본부장 자리를 7개나 늘립니다. 이사가 한둘밖에 안 되던 회사에서 임원급 본부장이 7개나 늘어요. 전략기획본부장 이상순, 이 자는 류희림의 그 유명한 청부민원에 자기 이름 하나 올린 사람입니다. 이 외에 YTN 출신으로, YTN 소속으로 류희림의 청부민원에 가담한 인원이 YTN에 확인된 것만 4명입니다. 이상순은 그중 1명입니다.

보도본부장 김종균, 김종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 김현우, 김현우도 청부민원. 영상본부장 김인규, 한자리해 먹자고 신임 사장한테 노조 대응 전략 일러바친 사람입니다. 경영본부장 이동우, 채널본부장 오승엽, 기술본부장 류근민, 신사업추진단장 류제웅, 류제웅은 최남수 사태 때도 대단한 활약을 했던 사람인데 절치부심 또 등장했습니다. 김재련 변호사의 남편입니다.

김종균 보도본부장,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박근혜정부 때 청와대 출입기자를 했는데 해외 순방하고 온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매력적인 대통령의 진가를 발휘하고 돌아왔다'라고 보도합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2014년이고요. 세월호 참사로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라는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고 대통령도 당연히 참사에 대응해야 될 최고책임자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매력적인 대통령이다'…… 김종균 기사는 한두 개가 아니어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장이 와서 자기 입장을 밝히고 인사를 자기 멋대로 하고, 이게 내려꽂히는 사장 인사의 거의 예정된 수순 같은 거지요. 그런데 김백은 한 가지를 더 합니다.

YTN이 이전에 했던 김건희 보도 등에 대해서 취임사 때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매도하고 힐난하고 그러더니 아예 카메라 앞에 세워 놓고 대국민 사과 방송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YTN 신임 사장으로 취임한 김백입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YTN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내 최초의 보도전문채널입니다. 언론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로 국민 여러분께 봉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YTN은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

그걸로 왜 하필 김건희 보도 잘못했다고, 이게 대국민 사과라고 하지만 김건희를 향한 충성 맹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까 봐 창피해서라도 못 해야 돼요. 답이 없는 사장 인사였고 답이 없는 YTN으로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돌발영상’, ‘돌발영상’은 단지 우스개 영상을 짜깁기해서 보도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고도의 정치 풍자, 고도의 메시지, 그래서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그리고 권력자들의 실수나 실언, 문제 발언·행동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영상을 뒤지고 보고 또 보고……

그 ‘돌발영상’을 처음 만든 사람이 저입니다. 2003년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돌발영상’이라는 이름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발영상’에 대한 애정과 자랑이 넘쳐 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돌발영상’이 이명박 정권에서 이명박 비판했다고 폐지되고 불방되고 제작진 교체되고 그랬습니다. 그것 복원되는 데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김백이 들어와서 ‘돌발영상’을 향해서 또 그러고 있습니다. 또 그랬습니다.

윤석열이 술 찾는 것 이미 비밀도 아니지요. 공개적인 행보를 하면서 ‘소주 한 병 있으면 좋겠다’ 이 얘기 영상으로 확보되면 보도해야 합니까, 감춰 줘야 합니까? 그것 ‘돌발영상’에 썼다고 삭제하고 그런 식의 보도 계속한다고 제작진 갈아 치우고. 이름이라도 바꾸지요. 이름이라도 바꿔야지요. 그러니 가끔 한 번씩 시시덕 낄낄댈 수 있는 그런 영상 하나 나오면 ‘돌발영상’, 그렇게 전락하고 있는 겁니다.

김백, 저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느냐? 이 수준은요, 정당을 초월한 수준의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두둔하면 안 되는 행위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경영자가, 보도·경영의 분리가 명백한 법제하에서 우리가 방송을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최고경영자가 보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보도 인사에 개입하고 보도 지시를 내리고…… 세이브 무슨 집회 있었지요, 극우 집회? 세이브코리아인가요? 그것 취재·보도 안 한다고 사장이 직접 전화하고. 그것 실제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삭제된 ‘돌발영상’, ‘소주 한 병 딱 있으면 되겠구먼’…… 아니, 이게 뭐라고…… 하면 안 되는 줄은 아나 보지요? 시도 때도 안 가리고 술타령, 평소에 술에 찌들어 사니까 그냥 농담하고 넘겼다, 우스갯소리였다 이렇게 넘어갈 만도 한 것을 정색하고 삭제하는 겁니다. 음주 정권.

그리고 김백은 전 국민이 다 본 김건희 디올백, 명품백 수수 영상을 YTN은 못 쓰게 했어요. 대한민국 언론사 중에, 영상을 다루는 유튜브 매체를 포함한 모든 매체 중에 이 영상 못 쓰는 언론 없습니다. YTN이 유일해요. 김건희한테 충성 맹세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김건희 디올백 영상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의 인터뷰 녹취, 못 틀게 합니다.

제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YTN에는 제가 안 나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출연 섭외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그거야 출연 섭외 권한은 방송사에 있으니까 제가 할 말은 아니고요.

그런데 상당 기간 동안 제가 개인 노종면이 아니라, YTN 출신 노종면이 아니라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 민주당의 원내대변인으로 정치뉴스의 소재로 활동하고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YTN에는 노종면의 논평도 쓰지 마라, YTN에 노종면의 동정도 쓰지 마라, 노종면의 영상도 쓰지 마라, 그 지침이 실제로 하달됐고 반년 가까이 유지됐습니다. 반년 넘게 유지됐습니다, 그게 지난가을부터 올해 5월까지.

5월에 YTN 내부에서 공론화가 됐어요. 저는 사실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일이어서 물론 공무이기는 하지만 공개를 안 하고 있었는데 YTN 내부에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사로도 나왔어요. 그 내부에서 '왜 노종면은 출연 안 시키느냐? 왜 보도 안 하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을 때 사 측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YTN 출신이라서 좀 그렇잖아'.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에 YTN 출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낙선은 했어요. 그런데 당직을 죽 맡아 왔습니다. 지금도 대변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호준석 대변인이 제 YTN 동기입니다. 그는 YTN에 매우 자주 출연하고 있지요. 보도도 자주 나오고 있고.

이런 일을 직접 경험하고 알고 있는 저한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정 보도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일은 누구에게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MBC가 우리 최형두 의원님 쓰지 마 이러면 안 되지요. 그게 블랙리스트잖아요. 정권 몇 개를 거치면서 하면 안 된다고 확인해 왔는데 연예인 블랙리스트, 문화인 블랙리스트, 이제는 하다 하다 정치인 블랙리스트까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이 다 여기에 책임이 있다 할 수는 없겠고 책임의 크기도 다 다르겠지만 국민의힘이라는 100석 이상의 막강한 여당이 없었으면 윤석열 혼자는 못 하는 일입니다. 국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디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얘기에 100% 동의는 못 하더라도 자당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돌아보는 계기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YTN에서 최근에 아주 엉뚱한 방송사고가 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지가 언제인데 '윤 대통령'이라고 자막을 칩니다. 이걸 고의로 했다고 믿고 싶지 않아요. 이것 해서 뭘 얻겠어요?

그런데 이런 방송사고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정상적인 방송 조직은 자막 하나가 나올 때까지 2단계, 3단계의 게이트키핑 과정을 거칩니다. 특히나 대통령과 관련된 것은 가장 민감하게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갔다는 것은 조직의 나사가 다 풀렸다는 거예요. 김백 같은 자한테 낙점을 받은 자가 보도국장을 하고 있고 한자리 받아 꿰찬 자들이 간부를 하고 있으니까 조직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회사에서 간부 등의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이 결과적으로 특정 노조에 많이 소속돼 있다고 해서 그 노조를 공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한 회사의 노동조합 가입자가 직원들 대부분이면 어떻게 해도 그 조직의 사람이 간부를 하겠지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민주노총 방송이다, 민노총 방송이다, 민노총들이 다 해 처먹는다……

YTN에서 이번에 김백 인사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본부장급 새로 만든 7개 자리, 보도국장·기조실장…… 전원 YTN의 소수 노조, 전체 직원의 10분의 1 정도밖에 가입해 있지 않은 그 노조원들로 다 채웠어요. 확률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 세력과 맞닿아 있는 정치세력이 MBC 욕하고 언론노조 욕하고, 도저히 그런 꼴을 못 보겠습니다.

김백은 쫓겨 갔습니다. 본인이 사임했다고 발표했지만 유진그룹이라는 대주주 입장에서 볼 때 쓸모가 없어졌다. 김백이 자기반성을 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물러나는 그런 캐릭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다 떠나서 제가 알기로도 민주당 인사들을 향

한 접촉 시도 참 무던히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 건너서 저한테도 만나자고 했어요. 그런 철면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유진한테 쫓겨 간 거예요.

문제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유진은 올해 초부터 YTN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사를 늘리고 이사의 비중을 친유진으로 바꾸고 그리고 지분율까지 끌어올리는 부당한 방식의 증자를 단행했습니다. 지금 유진이 31%에서 39% 넘어요. 증자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주들한테는 배정을 안 했어요. 자기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지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정원도 늘리고 그 안에 방통위로부터 방송사업권 승인을 받을 때 부여됐던 조건을 어기는 방식으로 이사를 심었습니다. 방통위가 승인을 내주면서도 이것은 좀 하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왜? 보도와 방송은 분리돼야 되니까—보도전문채널의 이사회에 유진그룹의 관계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딱 적었어요. 그게 승인 조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도 집어넣고 유진그룹사 법률고문도 집어넣고 자기 집사라고 하는 이전 대주주 회사의 대표이사도 집어넣고, 명명백백 명확하게 방통위의 승인 조건을 유진은 어겨 가면서까지 지금 YTN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위법·부당한 방식으로 매각 승인 조건을 어겨 가면서까지 알박기 이사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유진 주주 배정 방식도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자기네들이 다 확보해 가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도 방통위는 입 꾹 다물고 못 본 척하고 있습니다. 다 바로잡아 주십시오.

유진이 YTN을 인수하는 그 과정은 시작부터 끝까지 불법·부당·편법으로 점철됐습니다. 이것도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가 새 정부를 세우고 새 시대를 열고 있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법원이 반복적으로 위법이라고 확인한 2인 의결이 있었고 어떤 방송사도, 방송 주주도 누리지 못했던 졸속 심사의 혜택이 있었고 그 이전에 검은 거래, 6000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가 건네지는 로비가 있었고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YTN은 경영은 악화되고 보도는 망가지고 구성원들은 보복당하고…… 더 이상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방통위를 정상화해서 국민 것이었던 YTN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 졸속·위법·특혜로 허가를 내줬던 방송사업권을 회수하는 것 이게 너무도 당연한 우리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송을 얘기하는 이유는 방송사 종사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부수적으로 그들도 보호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노동조합 문제를 소리 높여 말씀드렸던 것은 비정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으로 돌려 달라는 호소인 것이고요.

방송법,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저는 방송법에도 규정돼 있는 대로 우리 공동체의 주인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로부터, 미디어의 홍수로부터, 미디어가 뿜어내는 정보의 해악으로부터, 오보로부터 우리 국민을,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 방송법이 존재하는 진짜 목적입니다.

여러분, 미디어를 믿으면 안 되고요 또 미디어를 소비하고 있는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나는 언론 경험이 많아. 나는 다 걸러 볼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세요. 저만큼 매체, 기사 비교 분석해 보신 분 계십니까? 수시로 속는 게 개인입니다.

우리는 미디어를 이렇게 소비합니다. 구독해서 소비하지 않아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누가 켜 놓은지도 모를 TV수상기에 나오는 시뻘건 자막을 한 줄 봅니다. 내가 봤는지도 모르고 기억했는지도 모르는데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공항 대합실에서 비행기 시간 기다리는데 여러 대수의 TV가 켜져 있는 그 TV수상기 이미지로 봅니다. 그냥 한 컷 한 컷 이미지로 봅니다. 그러다가 그중의 무엇인가가 내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것 내가 통제 못 합니다. 들어오는 것도 통제 못 하고 까먹는 것도 통제 못 하고 심지어 왜곡되기까지 합니다, 기억의 조작.

SNS 하시는 정치인들 많습니다. SNS가 보여 주는 정보들 제 의지대로 걸러지던가요? 내가 본 줄도 모르게, 내가 들은 줄도 모르게…… 유튜브는 또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다 하다 딱 한 줄, 딱 한 컷 이런 짤과 쇼츠만 넘쳐 납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속에 들어온 키워드가 맥락이 있는 것인지, 내가 그 맥락을 알고 보고 있는 것인지 그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미디어를 소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나를 믿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속고 계신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 보여 드릴 사례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집중해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PPT 준비되나요? 아니, 지금 발언하고 있는 저는 지금……

어디 가셨어요? 어디서 하시지요?

뺀었나 보다.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노종면 멋있다!」 하는 의원 있음)

컨트롤하는 장소는 어디지요?

띄워 주세요, 1번부터.

부산저축은행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윤석열!」 하는 의원 있음)

예. 거기까지 가기 전에 미리 좀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부산저축은행의 회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은 구속됐지만, 그 회장의 인척이 있어요. 사촌 처남이랍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친인척의 위세를 업고 대출 브로커 짓을 했어요. 그 사건 당사자가 조우형입니다. 이자와 관련된 얘기를 누군가가 지금 이 따옴표 속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올라가면’, 이건 검찰입니다. ‘오늘은 검찰에 올라가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 이 말 하고 있는 자가 조우형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물어보는 질문에 다 협조하면 된다’라고 본인이 조우형에게 조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우형이 검찰에 출석해서 2회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실제로 주임검사가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 줬다고 했고—타 줬다는 얘기는 조우형이 했다는 걸 이 사람이 들은 거지요—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 줬다라는 말을 조우형이 하더라’라고 이 따옴표의 주인공이 검찰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이게 남욱 변호사…… 여러분들, 남욱 변호사 아시지요? 남욱 변호사가 4년 전, 2021년 11월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후보로 윤석열이 확정된 직후, 이 시기에 남욱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조우형 얘기를 한 거예요,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무엇인가? 2011년도에 대검 중수부가 수사한 사건입니다. 불법대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나중으로 오면서 사건의 성격 하나가 더 부가가 돼요, 수사 무마 사건. 그 당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출 의혹 사건을 수사 담당자들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 부실 수사를 했다라는 의혹까지 덧붙여진 사건입니다.

조우형은 2011년 대검 중수부 수사 때 조사를 몇 차례 받았어요. 남욱은 2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수로 받은 것은 팩트입니다. 참고인 조사다, 피의자 조사다, 주장이 다릅니다. 조사받은 것은 팩트입니다.

여기서 주임검사라고 돼 있어요. 이 사건, 대검 중수부가 담당했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의 주임검사는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 속에 있는 주임검사가 가리키는 사람이 윤석열인가? 저는 아니라고 판단해요. 다른 자료를 통해서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욱은 이 주임검사를 윤석열이라고 생각하고 했을까, 아니면 다른 검사를 착각해서, 호칭을 착각해서 얘기했을까, 그것은 아직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커피 타 준 사람은 다른 자료에서 박길배 검사로 지칭돼요. 그 당시에 수사팀이 있었고 담당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제 추정은 담당 검사, 주임검사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조우형이 검찰에 가서 커피도 얻어먹고 편하게 수사받았다는 얘기가 핵심이지 주임검사가 윤석열이냐 박길배냐 이것은 지엽 말단이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언론이 이 진술조서, 검찰의 진술조서니까 이 공적인 진술조서를 가지고 의미 분석을 하다 보니까 주임검사가 나오네, 윤석열인가,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본질은 커피 타 준 사람이 누군지가 아니지요. 커피를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수사 분위기 그리고 결과적으로 조우형은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국민의힘에서 시종일관 뉴스타파가 김만배 녹취록 보도 조작·오보·왜곡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윤석열이 커피를 타 주지 않았는데 커피 타 줬다고 보도했다. 여러분의 그 인식이 잘못됐음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뉴스타파는 윤석열이 커피 타 줬다고 보도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뉴스타파의 보도 대목이고 제가 별도의 가편을, 첨가 편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오렸습니다.

보십시오. 이 당시에, 이게 대선 직전에 2022년 3월의 뉴스타파 보도 내용이에요. 그것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 당시에는 박길배 검사를 실명으로 보도하지 않았어요. 박 땡땡으로 보도했습니다. '누가? 박 땡땡 검사가?', 이것은 신학림이 묻는 거예요, 김만배한테. 김만배가 대답합니다.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 보냈단 말이야?', '응. 박길배 검사가 커피 주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 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뉴스타파는 김만배의 발언 그대로 하나도 누락시키지 않고 박길배가 조우형한테 커피 타 줬다고 보도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여기는 박길배든 윤석열이든 그리고 이 사건 수임을 했던 특검 출신 거물 변호사 박영수든 이들이 다 한패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은 박영수가 데리고 있던 애지',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통했지. 그냥 봐줬지'.

누가? 이때 대검 중수부가 누구를? 조우형을. 이런 취지의 대화인 겁니다. 비토를 하려면 그걸 비토를 해야지요. 왜 애꿎은 커피 타 준 사람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까, 뉴스타파는 커피 타 준 사람이 박 검사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조금 전 것은 녹취록이고요, 이것은 뉴스타파의 기사 문장입니다. '뉴스타파는 김만배 음성파일 내용과 관련해 박영수 변호사(전 특검), 윤석열 후보,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 씨와 조 씨를 수사하면서 커피를 준 것으로 언급된 박 모 검사—박길배—연락해서 입장을 물었다.' 커피는 박 모 검사가 줬다고 얘기했어요. 거짓말 보도를 했다면서 거짓말을 하면 어쩌라는 겁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많은 언론사가 지금 제가 저 붉은 박스 쳐 놓은 '그냥 봐줬지' 이게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 사안의 본질은 봐줬다는 거구나라고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윤석열이 커피 타 줬다, 커피 타 주고 봐줬다고 한다 이렇게 의미 비약, 마구 연결해 가지고 오보다 그래 가지고 류희림 내세워서 방심위를 얼마나 때려잡았습니까. 그 제재가 한 건이라도 유효합니까, 지금? 다 부당제재로 법원에서 판결해서 세금만 펑펑 쓰고……

부산저축은행 사건 윤석열의 개입 의혹, 조우형은 왜 2011년도에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나, 그런데 왜 똑같은 혐의로 2014년 수원지검 수사에서는 구속을 당했나, 이게 본질 아닙니까! 그때 왜 수사 제대로 안 했냐고, 그러면 실수를 했다거나 뭔가 설명을 하고 겸손하게…… 뭘 잘했다고, 몰랐다 하더라도 범죄자를 놓쳤으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 잘난 윤석열 검사가 왜 조우형 같은 딱 봐도 알 것 같은 그런 자를 놓칩니까, 조사를 두 번씩이나 하고. 그래 놓고 그것 가지고 3년 내내 언론이 오보했다고……

다음 것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그 기사는, 이게 대선 직전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의원님들도 워낙 일이 많으니까 이게 자꾸 기억이 밀어내기를 하지요. 2021년 가을, 김만배의 검찰 진술서가 나오기도 전부터 나왔던 2021년 10월부터의 언론 보도들입니다. 한겨레도 보도하고 경향도 보도하고 한국일보도 보도하고 JTBC도 보도했어요.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걸 딱 하나 커피만 따 가지고, 할 말이 없으니까.

다음 것 보겠습니다.

2009년도 기사입니다. 2009년도에 전국이 어땠습니까? 2008년도 광우병 촛불집회, 2009년도 연초에 용산 참사 그리고 쌍용자동차 때려잡기, 그런 이명박의 2년 차. 아마 이명박의 2년 차는 윤석열을 참 닮았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때 중앙일보는 철도노조 파업에 매우 관심을 갖고 보도를 많이 합니다. 제목이 '사라진 특종', 무슨 보도가 사라졌을까?

철도노조가 2009년 5월부터 파업을 했어요.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그런 미명하에 철도공사를, 코레일을 민영화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회사 분리 시도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지요. 그 과정에서 철도노조가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파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철도노조 파업은 매우 지혜로웠고 그래서 전면 파업보다는 수시 파업, 태업 이런 여러 가지 파업 전술들을 활용하면서 파업에 대응했습니다. 그때의 노조위원장이 지금 노동부장관이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명박 정권과 언론은 대대적으로 분위기를 몰아갑니다. 불법 파업, 잘못

된 파업, 압수수색, 체포, 수배 이런 전방위 압박. 이명박이 그 당시에 철도파업 상황실까지 가서 밀어 버리라고 지시를 사실상 한 거지요. 그리고 실제로 밀어 버렸고요. 그렇게 파업은 끝났습니다. 철도노조가, 그렇게 지혜롭게 싸우던 철도노조가 무지막지한 압박에 백기를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12월 3일이었습니다.

보통 파업이 갈등 속에서 끝나면, 파업이 진행 중일 때는 대대적으로 몰아치고요. 파업이 끝나면 뒤에서 몰래 때립니다. 뒤에 손배·가압류하고 징계하고 이런 것들은 언론의 무관심 속에서 노동자들이 그야말로 하소연하지 못하고 당합니다. 그런 패턴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철도노조도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했던 조합원 1만 1000명이 전원 다 징계를 당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1만 1000명이 징계를 당하려면요, 제가 이 징계가 이루어진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사오백 명 징계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매일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갖은 인사 불이익, 심지어는 파업 참가자들 자녀들에게는 학자금 지원도, 장학금 지원도 안 했습니다. 배제했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징계를 당한 1만 1000명 중에 해고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169명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무지막지한 해고의 칼바람을 일으켰는데도 철도노조는 여론의 동정조차 받지 못했어요, 정치권의 관심은 고사하고.

저는 언론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기사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파업이 끝난 다음 날 2009년 12월 4일 자 중앙일보 1면 톱기사를 보고 계십니다. 1면에 대문짝만하게 실었던 기사예요. ‘파업으로 열차 멈춘 그날 어느 고교생 꿈도 멈췄다’, 제목 자체가 좀 짠하지 않습니까? 합법 파업이고 정당한 저항이었어도 그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사실 참 어렵습니다. 노조에 대한 이해가 나름대로 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선의의 피해자의 사연을 들으면 힘들어하십니다.

어떤 고등학생의 꿈이 멈췄나? 이 학생은 부천 소사에 사는 학생이었고 가정은 매우 어려웠고 전교 1등이었고 서울대 면접만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고3. 그런데 이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이 학생이 전철을 타고 서울대까지 가야 하는데 철도파업 때문에 차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각을 했다는 겁니다. 면접을 못 봤다는 거예요. 당연히 탈락이지요.

이 기사 속에 부모님의 인터뷰가 담겨 있습니다, ‘남들은 다 자가용 태워다 주는데 형편이 어려워 혼자 전철을 태워 보낸 못난 부모가 죄인이라며 가슴을 쳤다’. 이게 사실이면 아무리 합법 파업이고 노조에 대한 공감이 있어도 이 친구, 이 학생 편에 서지 않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의장 우원식 노종면 의원님, 잠깐만요.

방청석에 새로운 분들이 또 오셔서 소개 좀 하겠습니다.

전진숙 의원실 소개로 광주 북구을 지역주민들 오셨고, 박홍배 의원실 소개로 대구 수성구 지역구민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모처럼 방청을 오셨는데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지금 하는 건 아마 아실 것 같은데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토론을 하는데 방송법 관련해서 어제 4시부터 무제한토론을 시작해서 밤을 새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자기 자리에 다 있지 못한 이유는 24시간 내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번을 정해서 교대로 오는 것이어서 본회의장 좌석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사정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시지요.

(「노종면 화이팅!」 하는 의원 있음)

○노종면 의원 감사합니다.

중앙일보의 2009년 12월 4일 자 1면 톱기사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런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철도노조가 억울해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에 갔어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웬만하면 조정을 합니다. 소송으로 안 가게 하는 목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제도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양자의 입장을 잘 버무려서 중재를 합니다. 정정보도를 요구해도 반론보도로 좀 설득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언론중재위원회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합니다. 지각과 파업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 그러니 중앙일보는 정정보도를 해라. 보도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정정하라.

그런데 중앙일보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언론중재제도는 당사자가 '노'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힘센 언론사들은 대부분 다 불리한 결정은 안 받아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던 쪽이 그것까지 고려해서 이 정도라도 받자 하고 끝나면 끝나지 언론사가 '노' 하면 다 소송 갑니다.

언론사가 소송으로 가는 이유는 명확해요. 뜨거울 때 결론을 내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 과정이 힘들어진다고 판단하는 거지요. 나중에 내가 지는 한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 잦아든다 이렇게 판단하고 대형 언론사 백이면 백 다 소송으로 갑니다. 중앙일보도 소송으로 갔어요.

이로부터 2년이 흐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단락의 제목을 사라진 특종으로, 납량 특집으로, 기괴하게 사라진 특종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2년 만에 이 기사가 없어져요. 2년 어떤 특정 시점에 기사가 싹 없어집니다. 그 1면 톱기사도 없어지고 그 기사를 가지고 썼던 논설, 칼럼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보일락 말락, 안 보이는 곳이지요, 저 귀퉁이 한곳에 '알려 드립니다'라는 글귀가 실려요.

사실 이 정도 사안이면 정정보도문이 나오는 게 맞는데 법원이 철도노조와 중앙일보한테 마지막 중재를 시도합니다, '반론보도문을 실어. 그런데 기사는 없애'. 철도노조는 기사가 없어지는 것은, 사실 정정보도를 해도 기사는 남겨 두거든요. 그것은 철도노조 입장에서는 대단한 진전이라고 생각해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안은 기사를 없애는 방식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뭐 해요, 그 당시에 철도노조에 대한 여론은 악화될 대로 악화됐고 이 기사가 사라진 시점은 그로부터 2년 뒤인데. 언론은 이런 겁니다. 언론의 오보를 바로잡기는 이렇게 힘들고 바로잡아도 별로 우리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코레일의 1만 1000명 징계 이런 것에 동조했던 사설들 제목 보십시오, '경제 회복에 재 뿌리나'. 조합비가 110억이면 잡혀갑니까? 조합원이 1만 명이 넘는데 한 달에 1만 원씩만 해도 110억이 넘잖아요. 제가 YTN에 있을 때 한 달에 한 육칠만 원씩 뗐던 것 같은데, 노조 조합비 많은 것 가지고도 태클을 거는 이 무도한 반노조 언

론들……

‘시민은 참아 줬고 정부는 원칙을 지켰다’, 그 원칙의 결과가 169명의 해고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 놓고 경찰청장 출신 허준영 당시 코레일 대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과도 매우 잘 알 것 같은 이분, 모금운동도 벌이고 뒤로는 징계 칼 휘두르고 이랬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관련된 기사는 사라져 버리는 상황……

기사 하나 더 보지요.

아주 오래된 기사입니다. 1948년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때는 남과 북에 각각 단독정부가 수립된 이후였고요.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 찬탁·반탁 사회 갈등, 정치 혼란이 극에 달했고 무시무시한 정국이 이어졌다고 하지요. 동아일보는 그런 와중에 ‘소련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소련은 신탁통치, 미국은 즉시 독립. 당연히 국민은 미국에 환호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기사는 그때 모스크바 3상 회의가 열리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2차 대전 승전국 간에 이루어졌던 거기 때문에 아주 대특종을 했다고 생각하고 다 받아쓴 거예요. 조선일보도 받아쓰고 신조선보도 받아쓰고, 그 열여덟 글자 그대로 ‘미국은 즉시 독립, 소련은 신탁통치’. 그런데 실제로 신탁통치를 제안했던 나라는 미국.

모스크바 결정서에 담긴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한국을 독립국가로 재건하며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임시정부 원조를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최고 5년의 미·소·영·중 신탁통치안은 임시정부와 협의해 제출한다.’

미국의 신탁통치안이 논의 끝에 임시정부와 협의하는 것으로 조정된 결정서가 채택됐습니다.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소련은 신탁통치, 미국은 즉시 독립. 그런데 이미 불은 타올랐고 정국은 뜨거워졌고 신탁은 협의를 하든 뭐든 무조건 안 되는 거였고. 그래서 신중론자도, 그가 아무리 보수 정치를 하고 있던 자였어도, 송진우 같은 보수 정치인도 우익 정치인도 테러당해서 암살당하는 이런 정국이었습니다. 친일파가 이 정국에 끼어들어서 반탁 대열에 동참함으로써 신분 세탁을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다고 하고요.

다음 장까지 넘기겠습니다.

물론 보도 하나에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제 역할을 했다면 하는 그런 부질없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기사들 다 알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2012년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은 기억하십니까? 2012년 1월에 고승덕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고승덕 의원이 친이계로 분류가 됐는데 친이계를 저격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 때 돈봉투가 돌았는데 그때 당대표 된 사람은 박희태고 그 박희태는 2012년 1월 현재 국회의장이다, 그것을 당내에서 폭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걸 비대위원장이던 박근혜가 받습니다, ‘검찰 수사 의뢰하겠다’.

당연히 수사가 시작이 되지요. 친이계·친박계 혈투였든 어떻든 그것은 별개로 하고, 적어도 한나라당 전체는 악재를 만난 겁니다. 그 직전에 디도스 사건이 2011년 12월인가 터졌지요. 바로 이어서 돈봉투 사건이 터지니까 한나라당은 그해 4월이면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얼마나 곤혹스러웠겠습니까. 대부분의 정치평론가들은 한나라당 망했다를 외쳤습

니다.

그런데 뭔가 반전이 생깁니다. 이런 사안에서 반전이 생기려면 돈봉투 살포 그것은 근거가 없어, 거짓말이야 이것이거나 아니면 이것을 덮을 만한 더 큰 사건이 터지는 거겠지요. 그런데 후자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바로 고승덕 의원 기자회견 하고 얼마 안 돼서 현직 국회의장 압수수색이 벌어지던 날, 바로 그날 KBS는 그 기사보다 더 큰 기사를 만들어 냅니다.

바로 이 기사입니다. 돈봉투 살포 목격, KBS 9시 뉴스에서 비중 있게 다뤘어요. 저 때 저 기사, 돈봉투 살포한 주체가 민주통합당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당으로 돼 있어요. 목격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앵커는 민경욱.

바로 다음 날 수사가 급진전됩니다.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것도 기자들한테 미리 다 알려 주고 사진 멋있게 나오게, 교육문화회관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거기를 압수수색합니다. 그다음 날에는 단서가 발견됐다고 아예 단정을 해 버려요. 원 투 스리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지요. 목격자가 있고 검찰이 급하게 압수수색을 했는데 단서가 나왔네. 이 정도면 딱 떨어지는 사건이지요.

KBS가 아무리 그래도 사흘 연속이나 단독 보도라고 이렇게 해 대는데 다른 방송사가 안 따라갈 재간이 있겠습니까. MBC 권재홍 앵커, MBC도 따라갑니다. 이런 것은 같이 먹어야 해. 민주당을 마구 물어뜯어라. 그렇게 언론에 연속 보도가 나가고 설 연휴를 맞습니다.

정치권에서 설 연휴가 갖는 의미,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전국에 나뉘어 있던, 일상적으로는 다 나뉘어 있잖아요.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여론도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이 한꺼번에 뒤섞이는 계기가 명절입니다. 대이동이 일어나고 내 주변에서 내가 갈고닦은 논거를 가지고 고향으로 달려가서 동네 형들이랑 부모님이랑 맞짱토론을 하는 시점이 명절 연휴, 그것도 큰 선거를 앞둔. 그래서 큰 선거를 앞둔 명절은 여론이 섞이고 어느 여론이 강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직전에 KBS의 단독 보도들이 땅땅땅 터졌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설 연휴에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 가족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제가 아까 힘이 좀 있을 때는 성우처럼 읽었는데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아마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정치는 공격이 있으면 방어가 있거나 맞공격이 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이슈가 터지면 다른 이슈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는 기제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KBS 보도는 그 매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 기자가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로부터 열흘 뒤, 검찰이 불과 열흘 뒤에 갑자기 사건을 종결시켜 버립니다, '봉투, 초청장이다'. 김경협 돈봉투 의혹, 내사 종결. 봉투는 봉투인데 돈봉투가 아니라 초대장이든 봉투였다고 합니다.

KBS 그래도 그 당시에 한 건 했잖아요. 언론이 그렇게까지 판단하면 문 닫아야 되는 건데, 저는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KBS는 검찰의 공식 발표로 오보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어 버렸습니다. 창피도 이런 창피가 없어요. 그런데 이럴 때 하는 언론 수법, 자기 잘못 인정 안 하고 남 얘기처럼 해요, 검찰이 수사를

어설프게 했다.

KBS 보도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시점 관련해서 민주당 경선이 종료되기 전이냐 후냐? 봉투를 주면 매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표 행사하기 전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KBS는 투표 시작 전이라고 보도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투표가 끝난 뒤에 무슨 상황은 있었어'. 무슨 상황, 어디서? KBS는 은밀한 장소여야 돼요. 그래서 화장실 안이라고 보도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화장실 간판이 보이는 교육문화회관의 로비, 무엇을 이게 핵심이지요. 돈봉투래요. 그런데 검찰은 '아이고, 확인해 보니 초대장이었네'.

이런 오보가 가능할 거다. 예, 가능합니다.

설 연휴 전에 KBS 보도만 보신 분들, 뒤에 검찰의 바로잡는 보도를 못 보신 분들 부지기수일 겁니다. 그래서 언론은 한 번 오보를 하면 그 폐해를 절대 복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언론과 긴장관계를 가지면서 언론이 우리 당에,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오보를 하지 못하게 감시해 주셔야 되고 막아 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시간을 보니까 기사 한 두 개 정도는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무성 전 한나라당 대표, 이 건의 제목을 제가 '3577 대 347', 숫자가 한 열 배 차이 나지요. 이것의 의미가 뭔지 조금 있다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천하의 김무성이 2016년 8월 26일 카메라 앞에서 공개적으로 머리 숙이고 사과합니다. 자신이 한 말을 철회하고 자기 말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사과합니다. 그 대상자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고 거리에서 수많은 시간을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 김무성 전 대표는 당시 무슨 사과를 한 것인가, 이 사과를 하기로부터 1년 전에 도대체 무슨 상처를 준 것인가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당대표를 하고 있던 2015년 9월에 김무성 당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강경 노조가 제 밥그릇 불리기에만 몰두해서 콜트·콜텍이라는 건실한 회사 폐업을 야기했다'.

콜트·콜텍은 업계에서,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지명도가 있는 기타 전문회사입니다. 콜트라는 회사가 본사고요, 콜텍이 자회사. 그런데 이 두 회사 모두에서 해고 사태가 일어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안이 터질 때까지만 해도 오랜 기간 세계 기타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인정받고 그랬는데 2007년에 대규모 정리해고가 일어나고 공장 폐쇄, 폐업까지 이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오랜 소송 끝에 대법원이 그 두 회사, 콜트라는 본회사와 콜텍이라는 자회사에 대한 판단을 달리합니다. 본사 해고는 부당했다, 자회사 해고는 정당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것 같아요. 둘 다 범죄를 안 저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건은 범죄를 저질렀고 한 건은 범죄를 안 저질렀어요. 그러면 주체는 하나인데 그 당사자는 잘한 사람입니까, 못한 사람입니까? 범죄를 두 건이나 저지르는 것보다는 한 건에 그친 게 괜찮기는 하지만 한 건이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이 두 회사의 대주주는 한 사람인데 이 대주주가 두 회사의 정리해고를 다 주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는 정당했고 하나는 부당했어요. 그러면 대주주 이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

라도 잘못하면 안 되지요. 그 해고자에게는 인생인데, 그 해고자가 그 가정에게는 우주인데 왜 멋대로 부당하게 해고합니까.

그런데 언론은 자회사의 해고 정당 기사를 써내기 바빴습니다. 정치권도 여기에 부화뇌동했습니다. 새누리당, 그 당시의 청와대 박근혜정부, 경영난 속에 파업을 강행하고 회사 폐업으로 이어지고 그러니 너희들 해고당한 것 구제도 못 받고 꼴좋다.

대법원의 판결에 본사 해고가 부당했다라는 점에 주목해서 회사를 질타하는 보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백 보 양보하더라도 균형 있게 보도해야 됩니다. 비중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왜 언론은 이쪽에 포커스를 맞출까요? 반노조 정서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수시로 습관처럼 노조를 적대시하고 위험한 단체로 몰아가고 헌법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법에 보장된 권리를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정치와 언론이 공범자의 역할을 하면서 한쪽이 치고 한쪽이 받고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김무성은 조금 전에 보신 문화일보의 그 기사를 그대로 읊었던 거예요, 여당 대표가.

그리고 이런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김무성 대표가 실언을 하기 전에, 문화일보가 그런 부당한 보도를 하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의 여러 언론들은 부당한 보도를 해 왔습니다. 동아일보가 2008년에 했던 ‘7년 파업의 눈물’이라는 기사에서 노조를 공격했습니다. 결국 정정보도 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일보의 기사, 한국경제의 기사 이런 것들도 다 정정보도, 사실상의 정정보도.

다음 넘기겠습니다. 그다음 장까지 보시겠습니다.

‘공장 폐쇄하고 7년 소송에 시달린 기업인의 하소연’, 대주주의 일방적인 주장만 기사에 실어서 하루 장사해 먹은 거지요. 1년 4개월 만에 정정보도를 합니다.

이런 정정보도가 같은 사안에서 이미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대법원 판단이 나오니까 또 똑같은 패턴의 오보를 저지르는 것, 이게 우리 언론의 현주소예요. 여기 기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모든 기자들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기사들이 실제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문화일보의 2015년 오보도 오보로 판정이 나서 문화일보도 정정보도를 하게 되고 이 정정보도 명령, 법원의 명령은 김무성 대표에게도 적용이 돼서 법원이 김무성 대표에게 정정하라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저는 여러 가지 정정보도 건을 보지만 이 재판부가 왜 정치인 김무성에게 보도를 한 당사자도 아닌데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명령을 했을까? 오보의 크기와 정정보도의 크기가 너무 불균형이잖아요. 첫 보도는 이따시만하게 합니다, 진짜 대문짝만하게. 그런데 정정보도는 요만하게 합니다, 보일락 말락. 그것을 온전히 우리 언론중재법은 법원이 전적으로 판단하게 해 줘요. 그러니 이 재판관은 거기에 문제의식이 있어서 김무성이라는 유명한 정치인이 이 사안을 언급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정정보도의 효과가 커진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정정보도를 보지 못했어요.

아무튼 그나마 법원이 이 정도로 바로잡아 주고 김무성 대표가 법원의 명령에 응해서 공개 사과를 함으로써 이 보도는 바로잡혀졌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의

오보가, 그 오보의 폐해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아요. 그건 그대로 남아요. 뒤늦게 알게 되는 사람은 새롭게 아는 거예요. 알았던 사람을 해소시켜 줘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언론이 인정이라도 해 주면 좋은데 동아일보는 김무성의 사과조차도 보도하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 애초에 오보 책임이 있는 동아일보. 그리고 한국경제는 그냥 무덤덤하게 썼습니다.

문화일보는 어땠을까요? 아까 KBS가 본인의 오보가 확인됐을 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남 얘기하듯이 이 기사에 보면 '이러한 발언은 전날 모 언론 기사에 상세히 보도된 내용을 보고 이를 기초로 한 것'…… 모 언론이 문화일보입니다. 문화일보 기사에 나오는 문화일보, 모 언론.

심지어는,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부끄러워서라도 이런 식의 기사는 못 쓸 것 같은데 '김무성 전 대표는 과거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부르는 말실수를 했다가 수차례 구설에 올랐다…… 언어는 마음의 거울이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건 제목, '3577 대 347'. 문화일보의 원래 보도는 본문 글자 수를 세어 보니 3577,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정정보도를 한 글자 수는 347. 이 정도 차이면 적게 나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 끌고 시간 끌다가 정정보도 당해도 이렇게 작게 하고 구석에 처박아 놓고 사람들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 본인들의 오보에 대해서도 이런 수치의 차이 때문에 스스로 수치를 못 느끼는 겁니다.

라스트 원이 될 것 같습니다.

도롱뇽 하면 생각나는 사건 있으세요?

확실히 의석이 차니까 힘이 막 나요.

KTX가 지금은 부산까지 KTX 전용선로를 타고 가지요. 그런데 언제까지는 저기 대구까지만 KTX 전용선로였고 거기서부터 부산까지 KTX 2단계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터널들 몇 개를 뚫었어요. 그중의 하나가 양산에 있는 천성산 터널입니다. 이 천성산 터널과 관련된 보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성산 터널 공사는 노무현 정부 때 했는데 엉뚱하게도 2012년 9월, 2012년 9월이면 뭡니까, 대선정국이잖아요. 대선 D-석 달, 이때 대선후보인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사진이, 그런데 너무 젊어 보이는 사진이 조선일보에 뜩 실려요. 이 사진은 2004년에 찍힌 사진입니다, 이때 천성산 터널 문제가 뜨겁게 달아오를 때. 기억을 잠시 더듬어 보시면 지율 스님이 생각나실 겁니다. 꼬리치레도롱뇽이 생각나실 겁니다.

천성산이라는 그 특이한 산, 물은 아래로 흐르기 마련인데 고산지대 산 위쪽에 저수지, 웅덩이가 있는 천성산 고산습지 이런 키워드들이 워낙에 뜨거웠던 이슈이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 사안을 딱 이 기사를 띄웠더니 그 앞에 여러 오보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국민의힘 의원 어느 분께서—그동안에는 좀 공감이 되셨나 봐요—이 기사를 보더니 '아, 이것은 맞잖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틀렸어요. 이것도 오보예요. 이것은 대한민국 언론 역사상 다시 이런 사례가 나오기 힘들 정도의 아주 비참한 수준의 오보입니다. 아주 특이한 사례의 오보입니다.

‘도롱뇽 탓에 늦춘 천성산 터널 공사, 6조 원이 넘는 손해를 끼쳤다’. 아니, 대선정국에 이 기사를, 10년 정도 된 기사를 왜 갖고 왔을까? 이건 대선 때문입니다. 대선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거예요. 얼핏 보면 누군가를 겸손한 자세로 설득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용은 그 당시 2004년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었던 문재인 당시 수석이 일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 주는 사진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사진이에요.

당시 장기간 단식을 하고 있었던 지율 스님을 만나서 ‘스님, 제발 단식만은 멈춰 주십시오. 저희가 잘 대처하겠습니다’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 떠나서 조선일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사가 2년 8개월 중단됐다고 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리고 1년에 약 2조 5000억 원씩 6조 원 넘게 손실이 생겼다고 했어요. 이걸 대입하면 ‘사진 속에 등장하는 문재인은 생떼나 쓰는 환경운동가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다가 6조 원이 넘는 막대한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한 무능력자. 대통령감이 아니다.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아일보가 판박이 기사를 싣습니다. 동아일보의 기사는 내용은 판박이인데 제목은 조금 더 직접적이에요. ‘권력 핵심에 있을 때,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일 때 갈등 조정 능력이 부족했다. 리더십이 없었다. 아마추어 노무현 정부였다. 그 핵심에 문재인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에 똑같이 ‘6조 원 이상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런 보도를 조선일보도 그렇습니다만 주기적으로 해 왔어요. 잊을 만하면 해 왔어요. 그런데 웃긴 게 어느 보도 할 때는 6조 원이었다가 언제는 2조 5000억 원이었다가 공사 중단 기간도 언제는 1년, 언제는 2년 8개월, 언제는 484일, 1년 3~4개월, 자기끼리도 안 맞아요.

자, 다음이요. 다시 질문입니다.

왜 대선 국면에 이 사진을? 4대강 때문입니다. 4대강은 지금도 여러 선거가 이루어지면 또는 정권이 바뀔 때도 그렇고 4대강 보를 해체한다 만다, 녹조가 뭐 탓이다, 홍수 예방 효과가 있다 없다 계속 논쟁이 이루어지지요. 2012년은 첫 번째 붙는 싸움장이었어요, 가장 따끈따끈했던 4대강 이슈.

그런데 4대강 환경 이렇게 이어서 천성산까지 간 겁니다. 4대강을 지지하는 세력은 천성산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박근혜를 지지합니다. 4대강을 비판하는 세력은 문재인을 지지하고 환경운동을 이해하고 지지합니다. 이런 대립 구도를 확실하게 세우는 그런 소재로 천성산만 한 게 없었던 거예요, 워낙에 그때 큰 사회적인 갈등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오랜 기간의 공사 중단, 막대한 손실 이것 다 오보로 판명 납니다. 이런 보도 여러분께 지금 몇 건 보여 드렸지만 수십 건이 나왔고 수십 건의 소송이 이루어졌고 그 수십 건 모두 원고가 이겼습니다. 언론사가 다 졌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기 힘들어요.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그때 장기간 단식을 했던 지율 스님, 그분이 손해배상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보도 하는 언론사 족족 1원 소송, 10원 소송 진행했습니다. 전부 다 이겼습니다.

실체는 무엇인가? 그 당시 공사 중단, 실제로 6개월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왜?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안 했어요.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잖아요. 저는 우리 인간 삶에 필요하다면, 당장 민생에 득이 된다면 정해진 제도를 지킨다는 전제하에 환경 파괴

를 감수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삽니다. 환경부장관님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러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만들어 둔 것이지요. 그런데 천성산 터널 공사할 때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안 한 것으로 법원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아까 천성산이 특이한 산이라고 했지요? 물이 밑으로 줄줄 흘러야 하는데 위에 갇혀 있습니다. 고산습지, 람사르 습지 협약에 따라서 보호하라고 권고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물이 줄줄 새게 되는지, 터널을 뚫으면 그 충격으로 그 여파로 금이 가서 물이 빠지는지 그 영향을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했어요. 그런데 그걸 숨겼어요. 그게 들통났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왜 다 싹 무시하고 '반대했으니까 공사가 중단됐다', 왜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까? 법원이 중지하라고 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중재안이 만들어지고도 환경운동단체에서 그 조정안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대법원이 공사 개시명령을 내려서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 초반에 경험한 이 갈등을 이번 대선에도 누군가가 활용해 먹은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천성산 터널 문제를 거론했어요. 정말 다행으로 피해액 2조다, 3조다, 6조다 이런 허황된 그런 정보로부터는 이준석 후보가 비껴 있었던 모양이에요. 140억 정도의 손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 팩트체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개통이 1년 늦었다고 했어요. 설사 1년 늦었고 손실이 140억이 났어도 그게 지율 스님의 책임입니까?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못했다고 항의한 사람들의 책임입니까? 지켜진 제도를 지키지 않은 자들의 책임 아닙니까? 그런 걸 다 무시하고 '환경론자들은 잡아 족쳐' 이러면 안 되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정보도문, 한 언론사가 똑같은 정정보도문을 세 번씩 실은 사례가 바로 이 사례예요. 동아일보 세 번 실었고 조선일보 세 번 실었습니다. 21대에서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배가 도입됐으면 이런 사례는 적용되고도 남았어요. 정정보도 내용을, 조선일보가 세 번 정정보도를 한 그 언론사입니다.

2009년 6월 5일 자 정정보도, "천성산 터널 공사 중단 기간은 6개월, 조선일보 2009년 4월 24일 자 '환경운동의 내리막길은 천성산에서 시작됐다' 제하의 사설 및 '고속철 공사 방해 지율 스님 유죄' 제하의 기사와 관련, 천성산 터널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1년이 아니라 6개월이며 공사가 중단된 6개월 동안 직접적인 공사 관련 손실은 145억 원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자연습지에 영향이 없다고 하였으나 지하수 유출 현상이 여러 차례 있었음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을 2009년도에 확인하고도 1년 지나면 잊었겠지, 2년 지나면 잊었겠지, 국민 독자를 바보로 알고 했던 거짓말 또 해 먹는 겁니다. 2012년 대선이 되니까 또 해 먹는 겁니다.

2009년 6월 정정보도문이었는데 바로 이어서 한 9월도 그래요. '중단 기간은 6개월이고 이로 인하여 시공사가 직접적으로 입은 손실이 145억 원' 이런 거를 하고 하고 하다가 조선일보의 마지막 정정보도는 2018년에 나옵니다. 아니, 2004년의 사건을 얼마나 오랫동안 우려먹으면 정정보도를 2018년까지 합니까? 부끄럽습니다.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2012년 9월 18일 자, 그러니까 소송을 6년이나 했다는 거예요. 6년 동안 버티고 버티다가 2018년도에 2012년 대선 정국에서 문재인 후보 흠집 내려고 냈던 보도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하는 겁니다. "'6조 원 넘는 손해' 제하의 기사에서 지율 스님의 단식농성과 환경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언급하면서 대법원이 2년 8개월 만에 공사 재개를 결정했고 당시 1년간 공사가 중단되면 사회·경제적 손실이 2조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는 내용을 보도하여 천성산 터널 공사가 늦춰져 6조 원 넘는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추산된 사회·경제적 손실 2조 5000억 원은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개통이 1년간 지연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나 실제로 개통은 지연되지 않았고—꼭 좀 전해 주십시오, 우리 개혁신당 의원님들—가처분 사건이 계속 중인 2년 8개월 동안 천성산 구간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6개월이었으므로 6조 원 넘는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 오보할 겁니다. 우리가 감시한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 주지 않으면 또 오보할 겁니다. 같은 걸로 또 하는 것, 이들에게는 일도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갈수록 힘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공감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운을 듬뿍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한 5분만 더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우원식 아니, 아니……

○노종면 의원 아, 5분 더 해야 돼요?

(「9시간 채웁시다. 9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해요? 더 할게요.

몇 분 더 해요?

(「5분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5분이요? 제가 꼭 하고 싶은 건이……

○의장 우원식 잠깐만요.

노종면 의원, 잠시 토론을 중단해 주시고요.

무제한토론 중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했습니다.

노종면 의원이 토론을 시작한 게 새벽 7시 8분입니다. 시간을 잘 감안해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의원 무슨 시간을 감안하는 거지요?

(「3분 더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 3분 더 하라고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 더 있는데 그냥 할게요.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60번 PPT 준비해 주세요.

2007년 3월에 세상을 떠나신 고 황유미 님,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백혈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뒤로 삼성전자는 돈으로 어떻게 해 보려고 죽음을 덮기 위한 돈, 돈의 크기와 무관하게 그렇게 시도를 했고 압박도 했고 당사자들은,

유가족은 협박으로 느꼈고 그런 일이 있다가 2011~2013년 사이에 산재 판정들이 막 나옵니다. 이 사업장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회적인 여론이 비등하니까 삼성전자에서 대표이사 부회장 명의로, 중재 기구가 그때 가동되고 있었는데 중재안을 받겠다고 선제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2014년 12월에 중재 조정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었는데 활동을 시작한 지 약 7개월 만에 그리고 삼성전자가 '우리도 받겠다'라고 입장을 공식적으로 낸 때로부터 약 2개월 뒤에 중재안을 냅니다, 권고안이라는 이름으로. '삼성전자는 1000억 원 규모의 공익재단을 설립해서 공익재단이 보상하도록 하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중재안 받겠다는 입장을 틀어서 '1000억 원은 조성하겠다. 그런데 보상 주체는 공익재단이 아니라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자체 보상 기준이 만들어지고 실행됩니다. 실력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상을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분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황유미 씨의 죽음 이후에 도움을 줬던 노무사 조직이 있습니다. 반올림이라고 아시지요? 반올림에서 추산컨대 공익재단을 통해서 보상할 때보다 삼성이 독자적으로 보상을 하면 둘 사이에 약 1.5배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했지만 언론은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기업에 대해 마치 호구를 만난 듯 천문학적인 금액을 요구한다면 이런 환경에서 누가 기업을 하려고 하겠는가'. 딸을 잃은 아버지가 호구를 만나서 한몫 챙기겠다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입니까, 이 기사의 주인공은? 어떻게 죽음 앞에서 유가족에게 기업을 호구 취급하면서 돈이나 뜯어내려는 그런 사람으로 규정합니까?

삼성이 자체 보상한다고 했던 기준에 이탈하는 분이, 그래서 삼성으로부터 보상을 못 받는 사람인데 산재 인정을 받는 일이 이 이후에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보상하지 않아요. 왜? 언론이 도와주니까.

삼성 기준에서 이탈해 있지만 산재로 판정받은 분에 관한 기사가 안 나옵니다. 주류 언론이 쓰질 않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엉뚱한 기사 하나가 터집니다. '유엔이 삼성을 칭찬했다. 삼성의 백혈병 해결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높게 평가한다' 이런 기사가 쏟아집니다. 출발은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수십 건에 이르는 기사들을 쭉 검색해 봤더니 연합뉴스가 제일 먼저 출고를 했는데 그 이후로 이어진 수십 건의 기사들이 다 연합뉴스 베끼기예요.

연합뉴스 내용을 한 문장만 읽겠습니다.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 반도체 백혈병 논란에 대해 과학적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고 기업의 해결 노력을 높이 평가.' 인과관계도 없는데 삼성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해결 노력을 했네라고 극찬하는 겁니다. 이런 기사가 복제되고 심지어는 갤럭시노트7 배터리 문제로…… 이런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정공법으로 백혈병 사고 대처법의 궤적을 걷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이런 찬사 보도를 쏟아 냅니다.

그런데 그 유엔보고서 작성자 특별보고관 그분이 얼마나 참다 참다 못 참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유엔 인권이사회 중에 이런 발언을 합니다. '지난주 한국 언론들이 잘못 전달한 내용이 있어 이 기회에 특별히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삼성전자나 대한민국 정부

어느 쪽도 노동환경의 안전함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 보고관은 한국 언론에 기고도 합니다. 끝으로 한 문장만 읽겠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 기사는 내 보고서를 심각하게 오독해 삼성전자의 노동 조건이 전직 노동자들의 질병과 장애를 일으켰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내가 기업들, 정부, 과학자들, 변호사들, 중재자들, 피해자들과 나눈 대화에 따르면 이는 진실이 아니다', 이게 우리 언론의 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노종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침 7시 8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오후 4시 13분이니까 9시간 5분 했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언론의 여러 오보를 들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을 것 같고 천성산 사건이나 황유미 반도체 백혈병 이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은 많은 울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문진석 의원 외 166인 서면동의)

(16시13분)

○의장 우원식 그러면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이 종료되고 부결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을 이어 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토론을 하지 않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남근 의원, 박선원 의원, 박희승 의원, 이광희 의원, 김준형 의원, 박은정 의원, 손솔 의원, 천하람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김승묵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6시15분 투표개시)

○의장 우원식 아직 투표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4시 37분인데 앞으로 5분 더 기다리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6시38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18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8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8표 중 가 187표, 부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37)

(16시46분)

○의장 우원식 그러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빨리 뛰세요.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8인, 반대 2인으로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33)

(16시47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5항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민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대리 한민수 가지 마시고 제안설명을 들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민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한민수 의원, 이훈기 의원, 최민희 의원, 황정아 의원, 박민규 의원, 노종면 의원, 조인철 의원, 김현 의원, 이해민 의원, 이정헌 의원, 김우영 의원, 서영교 의원,

신장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문화방송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의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드린 방송법 개정안을 찬성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국민주권정부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꿈이 이제야 시작된 것입니다.

아울러 제가 금방 말씀드린 방문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날은 고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6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방문진법을 찬성 의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한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김장겸)

(16시51분)

○의장 우원식 먼저 김장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겸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입니다.

방송 3법 가운데 하나가 통과됐군요.

이 방송법을 법사위에서 저희 당 위원들에게 토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았던 법사위원장 이춘석 의원님은 오늘 아침에 사고를 쳤네요. 보니까 더팩트에 이렇게 찍혔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방송법이나 얘기해요. 왜 딴 얘기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방송법 이야기할게요.

이것 좀 잘 가리시지 어떻게 하다가 걸렸네요. 기사를 잠깐 볼게요.

(「아니, 방송법 얘기하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무제한토론을 하세요, 의원님」 하는 의원 있음)

저는 이 기사가 오늘 저녁 공영방송에 보도가 될지 안 될지를 주의 깊게 보고자 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오늘 4일—4일이군요—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타인 명의로 개설된 주식 계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휴대전화 속 주식 계좌의 주인은 차 땡땡으로 이 의원을 국회사무총장 때부터 보좌해 온 인물이다. 현재 이춘석 의원실의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겨냥하고 있는 시점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

고 있는 여당 4선 중진 의원이 차명 주식거래를 한 모양새가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어제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고개를 숙인 채 여러 차례 휴대전화 화면을 응시하며 주가 변동 상황을 주시했다. 이 의원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네이버 주식을 5주씩 분할 거래하고 있었다. 실시간으로 호가를 확인하며 주문 정정을 하기도 했다.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등 주식 정보를 확인하던 이 의원의 휴대전화에 개인자산 내역이 표시됐다. 방금 전까지 이춘석 의원이 주식 정정 주문을 했지만 계좌 주인의 이름은 이춘석이 아니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휴대전화 속 주식 계좌의 주인은 차 땡땡. 차 땡땡은 현재 이 의원을 국회사무총장 때부터 보좌해 온 보좌관으로 타인 명의…… 이춘석 의원이 거래한 차 땡땡의 주식 계좌 투자액을 살펴보면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을 취득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금·신용 합계 매입 금액으로 1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지난 3월 27일 공직자윤리시스템에 공개된 이춘석 의원의 재산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본인은 물론 배우자 등 가족이 소유한 증권은 전무한 것으로 표기된다. 해당 자료는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됐으므로 올해 취득한 주식은 아직 갱신 전이다. 이와 관련해 차 보좌관은 오늘 오전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 의원님은 주식거래를 하지 않는다, 제가 주식거래를 하는데 의원님께 주식거래에 관한 조언을 자주 얻는다며’……

(「의원님, 의원님!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를 먼저 좀 얘기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기자회견에서 책임을 질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하는 의원 있음)

저 의원님은 성함이 안 보이시네. 성함이 내가 안 보이네. 전용기 의원님은 보이고.

(「아니, 그러니까 방송문화진흥회법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라고요.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관련이 있으니까, 관련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련 있기는 무슨 관련이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들어 보세요.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들어 보세요.

‘제가 주식거래를 하는데 의원님께 주식거래에 관한 조언을 자주 얻는다며 어제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자신의 휴대폰으로 알고 헷갈려 들고 들어갔다. 거기서 제 주식 창을 잠시 열어 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장님, 지금 발언 제지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의석이 너무 소란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금 세탁 및 탈세와 같은 경제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장 우원식 김장겸 의원님.

○김장겸 의원 예.

○의장 우원식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할 때 제가 가급적이면 서로 정쟁적인 발언은 피하고 그리고 충분히 토론을……

(「아니, 그러면 아까 할 때는 가만히 계시더니,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아까 민주당 의원 할 때는 정쟁 안 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충분히 토론을 하자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얘기하는 거야 그렇겠습니다만 이렇게 관련이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 너무 길게 얘기해서 본회의장을 소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장겸 의원 예, 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의장 우원식 이 안건에 대해서, 안건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되니까 자꾸 반론들이 생기고 시끄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짧게, 요지만 간단하게 해서 오늘 토론하는 내용을 안건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겸 의원 그런데 우리 이춘석 위원장님이 보니까 보좌관 명의 거래 정황 해 가지고 작년에도 감사 도중 주식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났군요.

(장내 소란)

이 이춘석 위원장이 법사위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방송법, 방송 3법을 통과시킬 때 저희 위원들에게 충분한 토론 기회를 주지 않고……

이강일 의원님, 뭔 협박을 그렇게 또 하세요?

(「협박이 아니라 나도 여기 있는 것 읽어 드리겠다고」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읽어 주시든 말든지, 읽든지 말든지.

자,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게 오늘의 핫뉴스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라고요. 왜 관련된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럽니까!」 하는 의원 있음)

(「오늘 밤 MBC 뉴스가 궁금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늘의 핫뉴스인데 언론장악이, 사실상 장악한 공영방송……

○의장 우원식 지금 무제한토론 시간이니까 토론하는 내용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반론할 때 나와서 반론하시면 되고요. 또 발언하시는 분은 너무 정쟁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언해서 이런 소란을 유도하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장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우원식 그런 점에서 안건에 맞게 그렇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겸 의원 오늘 밤 KBS와 MBC에 과연 이 뉴스가 얼마나 비중 있게 보도가 될지,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이 뉴스가 얼마나 보도가 될지, 과연 MBC가 메인뉴스에, 방송문화진흥회법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켜 줬는데 MBC는 과연 이걸 어떻게 보도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여러분, 이 법사위원장의 공으로 지금 사실상 아주 쉽게 방송법 하나가 통과됐습니다. 오늘 또 방문진법이 상정됐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태까지 편파 보도 행태로 봐서 이것 비중 있게 보도 안 한다에 베팅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들도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자, 지금 저희 당 의원님들은 금요일마다 의원실을 압수수색당하고 있습니다, 특검으로부터. 지난주 금요일은 구치소 간다고 못 왔는지 건너뛰었는데, 김선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집을 압수수색하는데 어머니가 자고 있는 이불까지 다 뒤졌고 장독대까지 뒤졌다 그래요. 그리고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자, 보십시오. 김선교 의원이 양평군수 시절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수사할 게 있으면 의원실까지 뒤지는 게 여러분, 합리적입니까? 임종득 의원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임종득 의원 같은 경우 용산에서 일할 때 일어났던 일인데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압수수색을 많이 당했다고 민주당 의원님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이재명 의원실 압수수색당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법원에서 이런 영장 발부도 해 준 것도 이상한데 KBS·MBC가 이것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본 것 있어요? KBS·MBC가 이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과문해서 그런지 못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론노조가 더 수월하게 방송을 장악하게끔 이 법을 통과시켰고 또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영방송의 현실입니다. 공영방송의 현실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지적 좀 더 준비해서 더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뒤에 계속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저는 오늘 민주당 민노총 방송 영구장악법 통과를 저지하고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지켜 내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고 조금 전에 방송법 하나가 통과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거대 다수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숙의와 합의 없는 일방통행의 국회운영, 입법권을 무기로 전락시켜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권에 부합하는 법안만 밀어붙이는 모습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의회 권력을 이용한 제도적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독일의 나치 정권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33년 독일 나치 정권이 총칼이 아닌 입법을 통해서 독재를 제도화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국난 극복과 민생이라는 명분 아래 의회의 입법권을 정부에 이양하고 정부가 만든 법은 헌법에 위배되어도 유효하다는 위헌적 법률을 의회가 다수결로 의결한 것입니다. 이른바 수권법이 통과된 후에 독일이 히틀러의 나치 독재 체제로 이어졌음을 모두 잘 아실 겁니다. 역사는 민주주의국가가 합법적 형식을 가장해서 독재를 구축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합니다.

민주주의의 외피를 쓰고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다수의 힘으로 반대의 견을 억압하고 이중 잣대와 여론몰이로 소수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방송 3법 역시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준다는 그럴 듯한 명분 아래 독재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는 법안입니다.

본회의에 올라온 추진 과정은 폭주 그 자체입니다. 민주당은 방송 3법을 논의하겠다며 지난 6월 26일 과방위 2소위 회의 개최를 기습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통보도 협의라는 뻔뻔한 말장난으로 국회운영의 기본을 무너뜨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 3법의 내용을 확인한 것은 회의 당일인 6월 27일 오전, 그것도 회의가 시작된 이후였습니다. 과방위 행정실조차 존재를 몰랐던 정체불명의 문건이 여기서 툭 나옵니다. '민주당 통합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국회법상 거쳐야 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의 절차는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오죽하면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이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우려했겠습니까?

과방위 2소위의 의결이 있었던 7월 2일의 상황은 코미디 그 자체였습니다. 전날인 1일 오후 5시에 2일 오후 3시에 회의를 열겠다고 구두로 통보한 뒤 1시간 뒤인 오후 6시에 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여 분 만에 오후 4시로 변경했습니다. 이 역시 협의 없는 통보였습니다. 초등학교 학생회도 이런 식으로 회의를 운영하지 않을 겁니다. 이 위원장 최민희 위원장, 김현 여당 간사입니다. 아마 자신의 집에 있는 반려견한테도 이렇게 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민주당 방송 3법은 몇몇 소수가 밀실에서 제대로 검토된 것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서 군사작전 하듯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숙의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 한번 볼까요? 심각합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 가운데 30% 이상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겠다고 노래를 그동안 진보좌파 진영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공영방송을 정치권에 종속시키는 셈입니다.

이사 추천 그룹을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학회, 변호사단체 등으로 다변화했다지만 사실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지금 공영방송의 주요 간부와 임직원 대부분이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들입니다. 그들은 국민이 아니라 노조의 눈치를 먼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 관련 학회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민노총과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방송장악 문건에 따라서 김장겸 MBC 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을 끌어내리는 데 힘을 보탰던 단체가 바로 이 학회들입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김장겸·고대영 사장의 임기를 지켜 줘야 한다는 상식적인 목소리는 당시 학회들에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편파 보도가 기승을 부려도 이 학자들이 입도 뻥끗 안 했습니다, 제 기억은.

그리고 변호사단체는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았지만 둘 중 하나는 민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변 관계자가 이 법안 만드는 데 깊숙이 관여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여러분, 민변이 어떤 곳인지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민주당 율사 출신 의원들 상당수가 민변 출신이며 이재명 정부 요직에도 두루 포진해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이사를 추천하리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단체가 추천 그룹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대한변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송의 전문성과 지역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한다는 법 문언에 부합하지 않고, 무엇보다 민변은 민간단체로서 변호사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없다' 이런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민변뿐만 아니라 방송 3법에 적시된 이사 추천 그룹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국민 대표성이 없고 중립성을 담보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민노총 언론노조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이사 추천권 다수를 확보해서 공영방송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얄팍한 계산만 숨어 있습니다.

방송 3법은 공영뿐만 아니라 민영방송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했어요. 그런데 이 편성위원회에 취재와 보도·제작 및 편성에 이르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영방송을 사실상 노조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정부의 관리 감독은 받지 않고 경영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 법안이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민노총 언론노조가 책임은 경영진에 전가하고 공영·민영 모든 방송의 경영 전반에 관여하는 전가의 보도를 쥐게 될 것입니다.

또 보도채널 사장 선임을 위해서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동의를 법으로 강제했습니다. 이 역시 노조의 동의 없이는 사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할 가능성이 큽니다. 명백히 방송 독립과 시장경제질서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가히 1980년대, 여러분, 신군부 언론 통폐합 기억하시지요? 거기에 버금가는 민노총의 공영·민영 방송장악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방송법 하나가 통과됐으니까 KBS 사장은 그 법에 따라서 3개월 이내에 새로 이사진을 구성해서 다시 뽑게 됩니다, 여러분. YTN도 민영방송사인데도 사장추천위원회를 노조와 합의해서 그렇게 해서 새로 뽑게 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다가 여의도의 유진그룹 사옥 앞을 지나가니까 이미 언론노조가 작업을 시작했더라고요. 거기 앞에서 시위를 벌써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노종면 의원이 열심히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민영 방송장악 시나리오가 이제 본격 행동 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2017년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2017년 제가 사장직에서 쫓겨날 때를 보면 KBS, 오늘 이 KBS가 사장이 바뀌면요…… 그때 진실과미래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MBC는 정상화위원회, 이제 YTN도 만들 겁니다, 새로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 사장이 들어오면. 그게 인민위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무슨 감사실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소위 직원들을, 이른바 자기들이 적폐 직원들을 불러올립니다. 아무 권한도 없는데 조사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법적인 처벌도 받고 그랬는데 아마 또 그런 재판이 일어날 겁니다.

그중에 MBC의 정상화위원회 조사실장이라고 했던 송요훈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자는 민주당의 비호 아래 우리 과방위 상임위에 출석해 가지고 저에 대한 온갖 거짓말을, 아예 노골적인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정치부장 때 안철수 의원 논문이 표절됐다는 그런 보도를, 조작 보도를 하게끔 지시를 했다고 증언을 했는데—여기 앉아 계신 이정헌 의원님이 또 잘 들으셨을 텐데—이 친구요 명백한 거짓말을 누구 힘으로, 거대 민주당 힘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발해 가지고 위증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그걸 다시 보완 수사하라고 경찰에 내려보냈다고 그래요. 그걸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냥 그자 때문에 회사를 관둔…… 그러니까 비판하는 세력에서는 일제 고등계 형사가 따로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일들이, KBS 또 오늘 방문진법이 상정된 MBC 또 이제 YTN에도 그런 아주 악마 같은 물결이 또 들이닥칠 걸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진짜 심각한 문제는 방송장악 기도가 비단 방송에만 그치지 않을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공영·민영 방송장악이 끝나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과연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신문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광고를 매개로 신문사들을 길들이는 움직임이 이미 감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언론진흥재단이 대행하던 정부광고의 일부를 KOBACO로 넘기고 유튜버들에게도 정부광고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민주당과 민노총이 장악한 공영방송 또는 친명방송에 정부광고를 몰아주겠다는 그런 의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옛날의 TBS,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TBS를 통해서 김어준에게 혈세 24억 원을 퍼 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미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같이 언론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정치 편향 유튜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 등록시켰습니다. 이거요 친명방송에 노골적인 특혜를 주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신문사들은 광고시장 축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경영상의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광고를 매개로 해서 정권이 신문을 길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또 유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신문법을 바꿔서 신문사에도 방송사처럼 노사동수 편집위원회, 방송은 편성인데 편집위원회를 강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민노총 언론노조가요 2025 대선 언론노조 7대 미디어 정책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여기 보면 신문법 개정을 통한 편집위원회 및 독자권익위원회 설치 의무화 이게 3번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1번 항목이 뭐겠습니까? 지금 바로 강행하고 있는 방송 3법 개정안입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친민노총 언론노조 중심으로 바꾸고 민영방송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이런 게 다 1번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노총 언론노조의 요구를 민주당이 방송 3법 개악을 통해서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노총은 형식적으로는 노동조합을 표방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실질은 정치적 지향성을 가진 정치결사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치적 이념은 아시다시피 종북 성향에 매우 가깝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 이분이 민노총 위원장 출신 아닙니까? 이게 방증하는 겁니다. 사망한 김정일을 추모하려 방북을 시도하면서 천안함·연평도 전사자 장병 조문은 안 했습니다.

이런 민노총의 하부 연합 단체가 어디겠습니까? 언론노조입니다. 언론노조 역시 강령에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노총과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개 성명에서 보수 궤멸 운운할 정도로 정파적 목소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문재인 정권 방송장악의 피해자입니다. MBC 사장 취임 8개월 만에 강제로 끌어내려졌고 그 2017년 일이 마치 어제처럼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대대적인 파업을 주도했고요, 좌파 정권의 방송장악 돌격대를 자처했습니다. 언론이라는 외피를 쓰고 각종 허위사실을 쏟아 내면서 여론몰이를 하는 데도 여념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나중에 다 알려 드릴게요.

좌편향 매체들도 여기에 동조해서 일제히 저를 향해서 좌표를 찍고 가짜뉴스로 공격했

습니다. 허위사실임이 밝혀져도 끝내 왜곡 보도를 정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퇴근 시위라는 명목으로 저를 가로막고 면전에서 모욕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 영상도 있습니다. 목적만 달성할 수 있다면 불법적인 수단이라도 상관없다는 게 이들의 태도입니다.

피해자는 저뿐만이 아니지요. 당시 최남수 YTN 사장은 퇴진을 요구하는 언론노조원들에 의해서 감금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것으로 성이 차지 않았는지 한 여기자는 최 사장의 얼굴에 침까지 뱉고 도저히 언론인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정도의 단어를, 용어를 써 가면서 욕까지 했습니다.

제가 MBC 사장에서 해임된 뒤에 수십 명의 임원들이 임기가 남았음에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해고된 본사 직원만 16명이었습니다. 해고가 안 됐더라도 파업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취재 업무에서 배제되는 인사 보복을 당한 후배들은 부지기수고요. 민노총 언론노조의 압박에 못 이겨서 명예퇴직을 선택한 직원까지 피해자가 정말 적지 않습니다.

최승호·박성제 전 사장, 제 뒤를 이은 사장이 이 사건으로 1심에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이 상당함에도 처벌은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서부지방법원이었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MBC와 민노총 언론노조의 눈치를 보고 봐주기 수사와 솜방망이 판결을 한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8년 전의 제 과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같은 일이 또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정상화위원회, 진실과미래위원회 이런 등등 소위 북한의 인민위원회와 다를 바 없었던 그 위원회를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김백 YTN 사장이 얼마 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임기가 많이 남은 민간방송사의 사장이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문재인 정부가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장악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다수 의석을 동원한 입법으로 하고 있다, 그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법이라는 국가시스템을 건드려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자신들과 민노총이 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더 치밀하고 악질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방송 3법이 모두 처리된다면 공영방송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채 이재명 정권과 민노총의 확성기로 전락할 것입니다.

최근에 대북 확성기를 다 없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정권의 선전·선동 확성기는 확 늘리는 법입니다. 반대파 제거를 목적으로 음해성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특정 정파를 위한 정치적 선동이 방송을 통해서 난무할 것입니다. 윤석열 커피, 생태탕, 선거 때마다 기승을 부렸던 가짜뉴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생태탕은 아직도 끓고 있다고 그러데요. 이것 누가 생산하고 확산시켰는지, 여기에 공영방송이 매개돼 있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민영방송도 정권과 민노총의 눈치를 보고 그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방송은 특정 정파나 이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공영방송은 국민 전체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반영해야 하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대선 승리의 전리품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방송을 특정 진영이 사유화하는 그날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방송 악법을 막아 내지 못한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롭고 공정한 방송환경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방송과 미디어 산업은 사실 어렵습니다. 글로벌 OTT의 공습…… 여러분, 집에서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많이 보실 겁니다. 또 그리고 광고시장 위축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거버넌스를 둘러싼 이념 논쟁이 아닙니다. 이념 전쟁이 아니고 방송산업 구조개혁과 규제혁신을 포함한 근본적인 산업 진흥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민노총 하청 방송 3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시고 대한민국과 국민의 미래를 위한 진지한 논의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민노총과 언론노조의 실체가 무엇인지 민주당 방송 3법이 왜 민노총 영구 장악법인지 PPT를 함께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 2번.

이 이사회 구성 문제가 민주당, 언론노조, 방통위 지정 학회 추천 등을 통해서 진보 성향 인사들이 다수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독소조항 4개를 보겠습니다.

사장 임명 문제만 봐도 100명 이상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이 추천하는 시스템으로 사실상 이것은 방송의 경영권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사권 이런 것의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회 임기 문제는 방송 3법 시행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방송법 하나가 통과됨으로써 KBS 같은 경우에는 이사진을 새로 꾸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 이사들은 법 시행 3개월 내에 강제 퇴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구성된 진보 성향 이사진은 6년간 연임할 수 있습니다. 임기가 유지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진보 성향 언론노조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법적으로 구성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KBS, MBC, EBS, 보도전문채널 이런 데 보도책임자 임명 시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법으로 방송 장악 구조를 마련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 상영)

오디오는 원래 안 나오게 돼 있다고 합니다. 저 자막을 보십시오. 법사위원회에서 신동욱 위원이 발언하는 장면입니다.

저게 중요합니다. 노조에서 합의하지 않으면 사장추천위원회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이 SBS, TV조선에서 근무를 해서 민영방송사의 사정에 대해서 잘 압니다. 법무부장관님이 여야 위원들 잘 논의해 달라고 했는데 이춘석 위원장이 그냥 두 사람 의견 듣고 잘라 버렸지요.

방금 보신 동영상이 지난 8월 1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방송 3법이 여당,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될 당시의 상황입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국회법에 따라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한 명씩만 토론하게 한다, 그리고 그 후에 곧바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여야 위원님들께서 잘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협치를 무시하고 논의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다음, 4번 PPT.

방송 3법 제대로 된 논의가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말뿐인 협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23년 3월 23일 2022헌라2 결정문을 제가 잠시 보겠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면서 심사보고와 토론 절차를 생략한 채 표결을 진행한 사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정인데, 법사위 위원장은 토론을 생략하면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간사가 충분하게 협의했음과 장내 소란으로 정상적인 토론을 진행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그것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는데 이 상황이 방송 3법을 통과시킨 법사위와 과방위의 모습과 매우 동일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서 '원외의 정치적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의 내용은 회의가 공개되는 위원회 절차 내에서 논의되고 토론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원외에서 정치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국회법상의 토론 등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입니다.

'또한 당시 장내 소란이 민형배 위원의 조정위원 선임 그리고 조정위원회에서의 표결처리 등 이 사건 조정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 등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장내 소란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토론 등의 절차를 생략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했고요. '그렇다면 피청구인 법사위원장이 토론 등의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표결을 진행한 것은 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정한 국회법 제58조제1항에 위배된다' 그러면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다수결 원리에 대해서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중의 하나인 다수결의 원칙은 의사 형성 과정에서 소수파에게 토론에 참가하여 다수파의 견해를 비판하고 반대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다수파와 소수파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서 다수의 의사로 결정하는 데 그 정당성의 근거가 있다' 그리고 '헌법 제49조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서 이는 단순히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에 의한 찬성을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헌법 제49조는 국회의 의결은 통지가 가능한 국회의원 모두에게 회의에 출석할 기회가 부여된 바탕 위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기회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라 볼 때 방송 3법의 통과 과정은 다수결의 원리를 위반하고 국민의힘 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방송 3법에 관해서 신동욱 위원이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질의하는 그런 동영상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역시 자막만 나옵니다.

(영상자료 상영)

신동욱 위원이 법사위원인데 이춘석 위원장이 토론 기회를 안 줘서 박탈당했지요. 그래서 노란봉투법 안건으로 출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방송 3법에 대해서 질의했던 장면입니다.

'김영훈 장관님, 민영방송에서 사장추천위원회 만드는 것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노동부장관이 역시 노조와 관련돼 있으니까 '민영방송에 사장추천위원회 만들어서 사장

함부로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것 맞습니까?' 그러니까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알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알지 못한다'.

PPT 6번이요.

그래서 김영훈 장관이 핵심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동조합의 방송장악 시도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전혀 할 수 없음을 보여 주고 있는데, 헌법과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권리를 인정받고 있을 뿐 방송사업의 핵심 영역인 방송편성 및 사장·이사의 선임에 대해서 전체 방송종사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걸 물어보니까 김영훈 장관이 모른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노총의 정체성에 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PT 8번이요.

민주노총 창립선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언론노조가 소속돼 있는 창립선언문에 보면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자주성과 조합 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전체 노동조합 운동의 통일 단결을 위해 매진할 것이며 제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정치세력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창립선언문이 이렇게 돼 있고, 민주노총 강령에서도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 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민족의 자주성과 건강한 민족문화를 확립하고 민주적 제 권리를 쟁취하며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치적 목적을 위해 창립한 정치단체입니다. 민주노총 정치세력화 교안을 보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라는 말 그대로 노동자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힘 있는 세력으로 조직되는 것을 말한다', '노동자의 이익을 사회·정치적으로 관철하고 나아가 보수 정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가권력을 바꿔 내서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를 바꿔 내는 근본적인 변혁을 이뤄 내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PPT 9번.

민주노총의 성향은요 굉장히 친북적이고 반미 성향을 그동안 보여 왔습니다. 민노총은 창립 이후부터 정기적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해 왔습니다. 2007년 8월 8·15 민족통일대회 참가선언문, 노동자통일토론회 자료, 공식 결의문 이런 걸 보면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철폐를 자주적 평화통일의 선결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연방제 통일 방안만이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능케 한다, 두 개의 나라로 고착하는 연합제는 용인할 수 없다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8·15 남북노동자대회에 연방제 통일 합의 확산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합제는 외세 개입을 용인한 것이라면서 소위 민족 자주 실현과 미군 철수를 연방제 통일 실현의 선결 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친북·반미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번 볼까요?

민주노총의 친북·반미 성향에 대해서 사드 배치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기지 공사, 군기지 공사에 전면 반대 운동을 펴 온 것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16년 이후에 경북 성주·김천 등의 사드 배치 지역에서 전국 단위로 조합원을

동원하여 반대 집회, 기자회견, 법적 소송, 미대사관 포위 시위 등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2017년과 2021년부터 2023년에도 사드 공사 반대 시위, 불법 공사 중단 요구, 정부·미군 규탄을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매주 소성리에서 주민과 연대해서 시위를 이어 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집회 중 경찰과의 대치, 연행, 부상자 발생도 빈번했습니다.

각종 성명에서 사드는 한반도를 미국의 대중국 전략 전초기지로 만들어서 전쟁 위험만 가중시킨다,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상징 등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정부와 함께 맹렬히 비판했었고…… 우리 정부를 비판했지요.

2022년 8월에는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시위도 벌였습니다. 민노총은 2022년 8월 15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서 최근 10년간 대규모 집회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한미동맹 해체,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를 내세웠습니다.

2022년 남북 노동자 3단체, 민노총·한국노총·북한직총 이런 공동 결의대회에서는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한미일 군사동맹은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 세력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각종 선언과 시위, 캠페인, 집회를 주최했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시지요.

이 친북·반미 성향은 통일선봉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결성해서 미군 기지, 미대사관 등 전국을 순회하면서 한미연합훈련 해체와 한미일 군사협력 저지를 내건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2022년 서울, 2023년 부산 미8부두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반미·반군사 동맹 집회를 열었고 결의문, 피켓, 퍼포먼스 등을 통해서 정부의 대미 군사정책을 공개적으로 규탄했습니다.

작년에는 중앙통일선봉대 전국 반미 투쟁 시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해서 선봉대로 나서서 한반도를 전쟁의 포화 속으로 점차 끌고 가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국민의힘 대구시 당사에 물풍선을 투척했습니다. 이 문구 보면요 북한의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자' 뭐 이런 문구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다음 것 볼까요, 12번.

간첩 사건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민노총 간부 4명이 1심에서 징역 15년, 항소심에서는 9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민노총 간부 4명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서 총 102차례에 걸쳐서 북한 지령문을 수신하고 대북 보고문을 발신했고요.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시설 등에서 군사정보를 수집해서 북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된 김영훈 전 민주노총위원장의 종북 행적을 보겠습니다.

김영훈 현 고용노동부장관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강한 친북·반미 성향을 보여 왔습니다. 방북을 하겠다 여섯 번 신청했습니다. 2011년 김정일 사망 당시에도 조문을 위해서 방북을 신청했습니다. 그 외에도 한미FTA 반대, 제주해군기지 반대, 한미연합훈련 반대, 지속적으로 반미 인식을 가진 그런 행동을 했고 반미·친북의 대표 주자로 보여집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15번 볼까요?

김 장관이, 그러니까 민주노총위원장 시절이지요, 연북의식에 대해서 '부를 때 그냥 김일성이라고 하면 안 된다. 북에서는 김일성을 부를 때 꼭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그리고 김정일이는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 장군님이라고 부르는데'라고 하면서 북한 지도자에

대한 경칭 사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연북의식이 없다면 김일성 주석은 김일성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일성 아들에 불과할 것인데’라고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조국의 최고지도자였던 김일성 주석’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해서는 ‘단순히 남쪽의 경험에 비추어서 군대=독재권력=나쁜 것 이런 등식화를 스스로 내리고 북을 재단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 본다’ 이렇게 하면서 선군정치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영훈 민노총위원장 이야기입니다.

16번.

그러면 민노총은 과연 종북단체일까요? 민노총이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열었는데 여기서 다음과 같이 친북·반미 문제들을 노출한 적이 있습니다.

퀴즈 내용입니다. ‘미군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러 온 날짜는 언제냐?’, ‘2008년부터 미국 놈들이 해 온 전쟁 연습이 무엇이냐?’, 이건 키리졸브 훈련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나이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원수 이명박과 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엑스의 나이를 모두 더하면 몇 살이냐?’ 이런 게 민노총 행사장에서 퀴즈에 나왔습니다. ‘북한과 교역하는 걸 미국이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만든 협정은 바세나르 협정이다’, 이것 오엑스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리마운동, 비날론을 비롯해서 북한 선전용 내용들이 여기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이 행사장의 사회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전교조 광주지부 소속 백금렬 교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명박 대통령을 국민의 원수—원수(元首)가 아니라 원수(怨讐)겠지요—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엑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제 근거는 대부분의 문제는 민노총이 발간한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라는 책에서 출제됐는데 이 책은 북한 3대 세습과 핵 개발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요, 이적 교재로 고발된 바가 있습니다.

조지연 의원님이 질의하는 내용 역시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시 자막으로 보시고 법상 오디오는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전공이 아니라고 지금 발을 빼고 있습니다. 조지연 의원님이 물어보는 것은 전공이 아니라 그러고, 그러면 반미 활동은 전공인지 좀 의문스럽네요.

그리고 PPT 18번.

여기 이것은 송언석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통일골든벨 행사 관련해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천리마 운동, 비날론 등 북한 선전용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영훈 장관—그 당시 민노총 위원장이었지요—‘행사 후에 보고받았다.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알았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북한 체제 선전용 내용을 대한민국 국민이 알아야 하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북한 체제 선전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 지금은 충분히 공감한다’, 이 공감…… 민노총, 언론노조가 소속된……

(「그것하고 언론하고 뭔 상관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언론……

(「법사위원장 얘기 좀 해 보세요, 법사위원장 얘기. 그것 좀 자세히 얘기…… 모르

는 국민들 아직 많아요」 하는 의원 있음)

(「원래 의도대로 얘기를 하셔야지. 방문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얘기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얘기만 하십니까? 아직도 북한 추종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 하러 나오셨어요?」 하는 의원 있음)

언론노조가 소속된 민노총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리버스터 하실 거면 제대로 내용을 좀……」 하는 의원 있음)

제대로……

(「의장은 본 내용을 얘기하지 않으시면 제재 좀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저 의원님은 성함이 앞에 안 계시네, 없네. 성함이……

(「아니, 성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성함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광희 의원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광희 의원님, 지역구는 어디십니까?

(「그냥 토론하세요, 좀」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말씀을 하시니까.

이광희 의원님, 이광희 의원님 지역구에서 이렇게 앞에서 소리 빽빽 지르고 이런 것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지역구민들은.

(「왜 다른 얘기를 하시냐고. 의장님이 저거 제재 좀 해 주세요. 본 내용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그거 얘기하려고 필리버스터 하시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민노총 소속 언론노조가 지금 모든 공영과 민영방송을 장악하게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법을 만드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언론노조와 민노총의 실체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것 끝나면 언론노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 좀 조용히 하세요! 의장님, 조용히 시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알았다고. 조용히 하잖아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저 뒤에 계신 분은 부승찬 의원님이시지요?

(「왜요?」 하는 의원 있음)

목소리 크네요. 목소리 커요.

(「어디다 시비예요? 발언이나 똑바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시비가 아니고 목소리가 굉장히 크다고.

국민 여러분, 지금 소리치는 분은 부승찬 의원이고……

○부의장 이학영 김장겸 의원님, 의원님 개개인 성함은 부르지 마시고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겸 의원 예.

○부의장 이학영 의원님 개개인하고 싸우지 마세요.

○김장겸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9번 PPT로 바꿔 주시지요.

(「몇 시간 동안 들어 드렸으면 됐지. 뭐 이상한 말만 계속하고……」 하는 의원 있음)

듣기 싫으시면 나가시면 되지.

(「아니, 듣기 싫다는 게 아니고 방문진법 얘기하라는 것 아니에요, 왜 반대하는지」 하는 의원 있음)

곧 나올 거예요, 곧. 아니, 그 배경을 지금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민주노총은 종북단체인가? 이것은 우재준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김정일 조문을 대한민국 정부도 안 갔는데 왜 가려고 했나?' 이렇게 보니까 '당시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정부 대신 남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으로 순직한 대한민국 장병 조문은 간 적이 있냐?' 하니까 '간 적이 없다. 국무위원이 된다면 살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동부장관을 신문하고 계세요?」 하는 의원 있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그냥 신경쓰지 마시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다른 얘기 하고 있잖아,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이광희 의원님, 지금……

자, 20번 바꿔 주세요.

민주노총은 종북단체인가?

이것은 저희 당 김소희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장내 소란)

알차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김정은은 대한민국 족속들은 우리의 주적들이라고 했다. 김정은이 주적인가?' 이렇게 김소희 의원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김영훈 장관이 '그것은 김정은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북한에서 종종 미사일로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러니까 '위협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김정은이 위협이지 않나? 답을 예 하면 된다' 하니까 김영훈 장관이 억지로 '예, 맞습니다' 했다고 합니다.

21번.

(「무슨 억지로야, 억지로는」 하는 의원 있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하는 의원 있음)

상관이 있으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노동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노동자들을 이용한 것이다' 이게 지금의 김영훈 노동부장관이 민노총을 바라보는 내용입니다.

(「방문진법 얘기를 하셔야지」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얘기 좀 다시 해 주세요, 법사위원장 얘기」 하는 의원 있음)

(「전한길 이야기해 주세요, 전한길 이야기」 하는 의원 있음)

(「법사위에서 그 문제를 못 하게 하시던데……」 하는 의원 있음)

법사위……

그다음에 언론노조의 정치적 목적과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사위원장님이 토론을 막고 못 하게 하고 한 것은 내가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은……

(「주식 얘기를 자세히 해 주세요. 내용을 잘 모르겠어, 국민들이」 하는 의원 있음)

아, 주식 이야기를?

(「전한길 주장도 이야기해 주세요, 전한길 주장. 맞는 것도 많다던데」 하는 의원 있음)

(「본질을 찾아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방송 3법 저지를 위해서……

PPT 23번 보여 주세요.

그러면 언론노조하고 민주노총은 다른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언론노조요,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인데 이 언론노조가 지금 사실상 방송의 하부구조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2012년을 보십시오. 언론노조가 해산 정당 통합진보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합니다. 언론노조는 북한에 동조하고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통합진보당과 20개 조항의 정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언론장악 진상규명 청문회, 친정권 낙하산 사장 퇴출 그리고 공영언론 지배체제 개선, 방송통신위원회 전면 개편, 이게 지금 2025년에 실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해산 정당인 통합진보당과 언론노조가 체결합니다.

24번 볼까요?

(「이것 말고 주식 좀 이야기해 달라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아마 어제 법사위에서 긴급히 우리 의원님들의 토론을 막은 게 주식 빨리하려고 그러신 건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런 건가요?

그렇게 해서 빨리하고 와서 주식 하려고……

○부의장 이학영 의원님,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 주십시오.

○김장겸 의원 알겠습니다.

MBC를 한번 보겠습니다, MBC의 북한 미화 보도. MBC는, 역시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MBC는 2025년 6월 북한 리설주를 '리설주 여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2년 연속 시가행진' 그리고 '군사정부 시절 국군의날 연상'이라고 전두환 군사정권과 비교해서 MBC는 보도를 합니다. 소위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핵심 방송사라고 볼 수 있는데, 반면에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병식과 콘서트를 합쳤다'.

자리를 뜨시는군요, 이광희 의원님.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왜 얘기를 안 하시고…… 방문진법 얘기를 안 하시고, 배도 고프고. 열심히 하세요.)

예.

'화려해진 김정은 찬양식'이라며 비교적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25번 볼까요?

어떻게 보면요 언론노동조합과 권력은 자발적 권언 협력이라고 봐집니다. 언론단체들이 언론노조 이중대임을 부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언론개혁시민연대 이런 데 보면요 다

같이, 소위 진보좌파 언론단체들이 모일 때 이런 단체들이 다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중대라고, 아무리 부정해 봐도 저희 눈에는 이중대로 보여요. 그리고 보수 우파 정권 때마다 낙하산 사장이 내려오면 낙하산이라고 그래서 계속 파업을 반복했습니다. 본사 출신의 인물이 사장으로 와도 낙하산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노무현 시절에 최문순 사장이 부장대우에서 갑자기 사장이 됩니다. 부장대우에서 국장 뛰어넘고 본부장 임원 뛰어넘고……

(「임원 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최민희 위원장님 와 계시네요.

갑자기 사장이 됐는데 몇 단계를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건 착한 낙하산이라고 그럽니다. 이것 참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지요. 이게 언론노조의 본모습입니다.

26번 볼까요?

그래서 언론노조와 민노총과 다른가? 민노총 강령 2호, 전국언론노조 강령 4호, 정치세력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세력화가 목적이라면 사실 노조가 아니잖아요. 정치세력화가 목적이라면 정치집단이지요. 이걸 어떻게 노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언론노조의 주요 목적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이제 나옵니다.

PPT 28번.

여기 보면 강령 1호에 언론노조의 편집·편성권 쟁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목적인 거지요. 그래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민노총 산하조직으로서 노동자의 권익보호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언론노조 강령 1호를 보면 '우리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 보도를 가로막는 권력과 자본의 횡포에 맞서서 편집·편성권 쟁취를 위한 민주언론 수호투쟁에 나선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PPT 29번 볼까요?

언론노조의 주요 목적은 친민주노총 이사 추천권 법제화로 공영방송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사장추천위원회와 임명동의제로 민영방송 인사권까지 개입해서 편성위원회로 공영과 민영방송 편성권에 관여하는 게 언론노조의 방송장악 목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언론노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PPT 30번 보여 주십시오.

MBC의 편성규약 제정, 2001년에 제정한 건데 MBC는 당초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이 강력히 반발했는데 회사 측의 강력한 반발에도 편성권은 경영권 하위가 아니다라는 말과 함께 MBC 노조는 '노사 동수의 기존 공방협과 함께 운영할 경우 공정 방송 감시 활동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이렇게 포장해서 MBC를 장악하겠다라는 의도를 드러냈는데 지금은 뭐 완전 장악했지요.

그래서 PPT 31번을 보시면, 언론노조의 주요 목적이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통한 방송장악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방송법 개정안 제4조 및 제4조의2를 보면 방송편성규약의 제정과 개정은 편성위원회의 심의 의결 대상이며 편성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5명과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전부 10명이 그렇게 되면 종사자들, 직원들이 되는데 언론노조원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법 개정안 제21조는 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시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범위와 동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편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법 개정안 제46조는 KBS와 MBC의 이사 추천권을 가진 주체로 국회 교섭단체 6명—MBC 같은 경우는 5명이지요—시청자위원회 2명, 임직원 과반수 이상 추천 3명, 학회 추천 2명, 변호사단체 2명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시청자위원회와 방송사 임직원의 추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해서는 방송편성규약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편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위원회를 통해서 경영·편성 전반에 노조가 합법적으로 개입하도록 만든 법입니다, 민주당 여러분들이 만든 법이. 종편·보도전문채널까지 적용해서 민영방송까지 언론노조가 장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민주당 여러분이 주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사실상 언론노조의 주도성이 보장된 개정안이고 방송편성과 제작에 대한 권한을 경영 주체인 방송사업자에서 언론노조로 이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종사자 상당수가 가입하고 있는 언론노조는 방송사업자의 의무 기구로 도입된 편성위원회 구성과 보도책임자 선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직접 보도전문채널…… 그러니까 YTN이 민영방송이 됐는데도 민영방송의 사장 선임까지 간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백 사장이 갑자기 사표를 썼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마 민영화된 YTN의 대주주인 유진그룹을 손을 떼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벌써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오는데 보니까 유진그룹 본사 앞에서 이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 편성위원회를 통해서 경영·편성 전반에 노조가 합법적으로 개입해서 종편과 보도전문채널까지 적용해서 민영방송까지 노조가 장악하는 이런 건데, OECD 국가에서 과연 이런 나라가 있을까? 아마 없을 겁니다.

PPT 32번, 언론노조의 주요 목적.

방송법 개정안 제20조는 방송사업자 가운데 보도전문 방송사업자—이를테면 YTN입니다—대표자는 노동조합법상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를, 이거 협의가 아니고 합의를 통해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임명하고 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도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서 운영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YTN을 겨냥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모 의원의 한풀이 법안이라는 말이 지금 방송계 주변에 떠돌고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하는 의원 있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법을…… 방송계 주변에서 돌고 있습니다. 팩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송 3법으로 사실상 노조가 추천하는 이사를 포함해서 사장 선임에 영향력을 확대해서 임명동의제를 통해서 국장급 인사에 노조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BS MBC SBS 등 다수 방송사에서 임명동의제가 확산되게 됐습니다.

사실 이거요, 이미 이 법을 안 만들어도 단체협약으로 이렇게 된 데가 많습니다. 사실상 하부구조를 언론노조가 장악한 데가 많기 때문에 이미 인사권을 언론노조가 가졌다고 봐야 됩니다. 주요 국장, 보도국장, 편성국장 등에 대해서는 임명동의를 언론노조가 해 줘야 됩니다. 사실상 경영진은 인사권을 이미 내놓은 지 오래됐고 편성위원회까지 생기면 이제는 껍데기만 남고 책임은 또 경영진이 지고, 잘못되면 노조가 책임지는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방송법 개정안 제20조에 따르면 민영방송인 보도전문채널 YTN을 시작으로 사 측은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노조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스스로 선출하고 교체할 수 있는 경영자 아래에서 스스로 방송사업의 경영을 결정하고 국민의 눈, 귀, 입이 되어야 할 뉴스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방송에 노동자 자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그런 꼴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방송 노동자, 방송종사자들이 마치 국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혹은 공정성의 잣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공정성의 감시 대상입니다. 국민들로부터 공정 보도 하느냐, 안 하느냐…… 오히려 감시 대상인데 이 사람들이 거의 판관 역할을 하는 꼴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방송 3법으로 사실상 노조가 추천하는 이사를 포함해서 사장 선임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명동의제를 통해서 국장급 인사에 노조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사권을 사실상 가져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33번 보실까요.

이거 나중에 뒤에도 이야기할 텐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은 준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거나 이것은 민간기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국가기관이면 국가가 검열을 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민간기구로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이 구성원들 역시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심위 하부구조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방심위 장악을 통한 심의기관 지배를 위해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가 설립돼 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다를 수가 있는데 언론노조가 이 위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가지고 ‘방심위 직원들이 평가한 긍정평가 0%’ 이런 것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퇴를 요구합니다. 계속 사퇴를 요구해 가지고 심의기관 운영에 직접 언론노조가 압박을 가했습니다.

다음, 언론노조의 방송산업 하부구조 장악 실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35번 한번 볼까요?

KBS 현황인데요. KBS는 민노총 소속인 언론노조 KBS본부가 있고요. 그리고 언론노조의 정치 편향성을 비판하면서 설립된 KBS노동조합 그리고 기존 노동조합이 정치 이념과 진영에 편향되어 있음을 비판하면서 설립된 또 다른 노동조합인데 같이노동조합—이름이 좀 생소한데요—그리고 KBS공영노동조합, 이 4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현재 KBS 근로자 수는 한 5000명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그중에 각 노조별 조합원 수를 보면 민노총 언론노조 소속이 2000명이 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언론노조가 아닌 KBS노동조합은 조합원 수를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약 10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요. 그리고 이 두 노조가 싫다 이렇게 해서 설립된 같이노동조합은 370여 명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것은 작년 10월 기준으로 그런데 2023년과 비교해 보면 민노총 언론노조원 수가 약간 감소했고 같이노동조합이 늘어난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편향적이고 이념적인 데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36번, MBC 현황 한번 볼까요?

MBC에는 MBC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민노총 언론노조 MBC본부가 있고요. 그리고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출신 경영진의 일방적 탄압에 저항해서 만들어진 제3노조라고, 이게 공식 명칭은 MBC노동조합입니다. 그런데 구분해서 쉽게 제3노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언론노조의 가입을 거절당한 비정규직 출신 방송작가들로 구성된 차별없는노동조합 이렇게 해서 3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MBC노동조합 조합원 수는—그러니까 이게 제3노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는데 소송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된 수치를 취합해서 추정치를 보면 이게 좀 오래된 건데, 2018년 4월인데 언론노조가 한 1150여 명, 제3노조가 60여 명 그래서 언론노조원이 전체 구성원의 한 70%가 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비율은 아마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더 늘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MBC가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많은데 그걸 보면 뉴스의 핵심 조직 보도국 취재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얼마나 언론노조가 대단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17년에는 취재센터 전체 127명 가운데 언론노조원이 66명, 제3노조원이 24명, 비노조원이 3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달 말, 그러니까 2017년 12월 말 전체 111명 가운데—이게 취재센터 이야기입니다—언론노조원이 109명으로 갑자기 크게 늘어나고 제3노조원과 비노조원은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인사를 그렇게 한 거지요.

그게 뭐냐 하면 2017년도에는 제가, 이 시기가 제가 사장직에서 해임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임되고 난 뒤 인사권을 장악한 언론노조 출신 경영진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2019년 12월 말일에는 취재센터 105명 전원이 언론노조원으로 구성됩니다. 언론노조원이 아니면 설 수 없는 구조로 MBC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37번 볼까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언론노조 위원장이 반발을 했는데 MBC를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다 이런 말만 나오면 언론노조는 '아니다', '허위사실이다'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언론노조가 MBC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은 MBC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고 그래서 법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MBC가 제출한 노조원 관련 명부를 검토한 결과—이건 판결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경영진 대부분이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이라고 명백히 판결문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영방송임이 확실한 것은 MBC가 법원에 제출한 다른 자료를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MBC가 소속 직원과의 소송 과정에서 현재 모든 보직 부장 및 팀장이 전원 언론노조원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보직자 명단과 함께 제출된 자료인데 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월 기준 전체 보직자 148명 가운데 132명이 언론노조원이었습니다. 이 면면을 보면 노영방송임을 확실하게 보여 줍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인사부장, 이것 노조원입니다.

노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장, 이것 언론노조원입니다. 징계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본부장들도 다 언론노조원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언론노조원과 언론노조원이 만나서 언론노조원의 근로조건을 협의하고 언론노조원의 징계와 같은 인사 문제를 언론노조원이 결정하는 그런 구조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식구 감싸기 식 경계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언론노조는 경영에도 깊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사장 직속으로 경영정책을 담당하는 미래정책실의 실장하고 팀장들 모두 언론노조원들입니다. 경영을 직접 책임지는 경영본부장과 정책기획부장도 언론노조원이었습니다. 보도본부는 말할 필요도 없지요.

이럼에도 오늘 방문진법을 상정하셨는데, 보도 역시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보도국 정치국제에디터, 사회에디터, 경제산업에디터, 탐사기획에디터, 디지털뉴스에디터, 뉴스데스크에디터, 정치팀장, 인권사회팀장, 경제팀장 이것 다, 이 사람들 다, 보도국 간부 대부분이 언론노조원이었습니다.

민주당이 통과시키고 상정한 방송 3법 개정안에서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대부분의 방송사업자에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그 자체로도 민간방송사의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방송마저도 언론노조의 지배 아래 둘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런 단적인 예가 MBC에서 발생했습니다. 2021년 2월 당시 MBC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를 두고 있었습니다. 사 측 대표는 예능본부장, 시사교양본부장, 라디오본부장, 경영본부장이 모두 언론노조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장 밑에 바로 본부장이거든요, 부사장이 있지만. 여러분들, 일반 회사 같으면 이런 본부장이 노조원이라는 게 납득이 가십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본부장들이 다 노조원입니다. 노조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사동일체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걸 부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MBC 사장이 안형준인데 안형준 사장도 당시 메가 MBC 추진단장이었습니다. 간부였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언론노조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언론노조원을 왜 간부나 경영진이 유지하겠습니까? 그것 탈퇴하면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유지하는 게 훨씬 이익이 되니까 그것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노조가 언론노조를 심의하는 이해충돌 문제를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MBC의 사례에서는 사내에서 언론노조가 언론노조와 인사·경영·보도 모든 것을, 모든 부분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영방송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노조 간부를 해본 후배들이 '부족국가연합이다' 이런 자조 섞인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렇게 노조의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 신입사원, 그러니까 기자가 모자란다, 10명 뽑겠다 하면 경영진이 마음대로 10명을 못 뽑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측에다가 우리 이번에 신입사원 10명 뽑겠다…… 뭐 사실 그렇게 협의하는 경영진도 우스꽝스러운 건데 안 그러면 또 언론노조한테 봉변당할 것 같으니까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아니, 기자 10명을 뽑아? 피디도 10명 뽑아야지, 엔지니어도 10명 뽑아야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경영진에게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그 경영진

도 잘못이 있지요. 강단이 없습니다. 그것을 그냥 수용하는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노조 간부로 있는 후배가 저한테 '선배, 우리 회사는 완전히 부족국가연합이야'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방송 이해충돌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옆길로 샜는데 방송산업에서는 이보다 더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하는 일이 방송사업자의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공적 책임성 여부와 그리고 방송법 위반 행위가 없는지를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방통위원회에 올라가서 결정이 될 텐데요.

그런데 여기에 민노총 언론노조가 있습니다. 전체 방심위 직원 가운데 휴직자·보직자를 제외하면 약 170명 정도가 일반 직원인데 이 가운데 128명, 약 76%가 언론노조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민주노총 언론노조원이 제작한 방송을 심의하는 겁니다. 이것 언론노조의 셀프 심의로 이해충돌 여지가 다분합니다. 이 이해충돌 부분은 저희 과방위에서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민주당 위원님들이 문제를 삼았는데 사실상 이게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폐단이요 얼마 전에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유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노조원들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민원을 사주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것 아마 지금 고발해서 수사 중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언론노조원들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겁니다. 이것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민원신청인의 이메일 그리고 전화번호 이걸 구글링했다……

이걸 사실 보도한 뉴스타파가, 이게 아마 뉴스타파였지요? 뉴스타파 봉지욱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상임위에서 그게 들통났지요. 사실 자기들이 줬다라고 시인했습니다, 그 방심위 간부가.

(「사실상 시인한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렇지요. 사실상 시인한 거지요, IP 추적을 해서 받아 냈다. 아마 이것도 수사 중이지요? 이것도 수사 중인데 수사 중이면 결과가 나올…… 정권이 바뀌어서 수사가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명백히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 사용하는 것과 제삼자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 사실 민원인 또는 자신이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문제는 여러 문제가 야기되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된 경우도 있었고 n번방 사건에도 이용된 적도 있었고 이런 범죄로 발전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데 그럼에도 지난 우리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 그렇게 말했네요. 여기 있네요. '자신들이 정보를 넘긴 그 기자와 함께, IP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통해 추적했다', 자기들이 도와줬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이 범죄행위를 자랑하는 발언까지 하면서 직업윤리와 보안의식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자 이것이 마치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수사이고 자신들이 피해자인 양 지금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산업의 하부구조 자체가 방송사 자체부터 소위 그걸 심의하는 방심위까지 모두 언론노조에 장악돼 있다 이렇

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노조는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드는 경영진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온갖 불법 시위와 폭력적인 행동을 다 합니다. 이거 2017년도에 있었던 언론노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YTN 사장을 쫓아내기 위한 언론노조의 시위 혹은 KBS 강규형 이사를 쫓아내기 위한 언론노조원들의 시위, 이걸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음성은 안 나오고요, 자막으로 나옵니다.

틀어 주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제가 질의하는 장면입니다. 저기에 서 있는 사람은 YTN 전 노동조합위원장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가 청문회를 위해서 들어오는, 과방위에 들어오는 장면인데 이 앞에까지 와서 시위를 벌였어요.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 임명 못 하게 막기 위해서는 온갖 범법행위를 해도 좋다 이런 태도인데, 그러니까 법 따위 안 무서우니까 한번 마음대로 해 봐라.

이건 아까 여기자가 YTN 최남수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얼굴에 침 뱉고 하는 욕인데 그 욕도 아주 쌍욕을 하더라고요, 참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YTN 언론노조 지부장, 전 지부장이 이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한테 욕하고 침 뱉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뭐 공중도덕 하나 어겼다고 혐오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공중도덕 좀 어긴 거 어떠냐 이런 태도였습니다, 우리 과방위에 나와서.

그리고 아까 그 언론노조 위원장, 이진숙 후보자가 과방위에 들어오는데 막아섰던, 말하는 거 보십시오. 법치는 안중에 없지요.

이 민주노총 언론노조, 이런 폭력성과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이런 조직에 이제 아주 고착화된 권한을 주기 위한 것이 민주당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방송 3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겠지요.

방송산업 하부구조를 장악해서 방송을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자, 사실 아까 그 폭력적인 영상을 보면 언론노조원들에 대해서는 거의 치외법권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심위 언론노조원들이 개인정보 유출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또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이렇게 법치주의를 무시합니다.

이들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고대영 KBS 사장과 저를 물러나라며 폭력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사실 이 폭력 시위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저희 아파트가 복도식인데 저희 아파트까지, 그 근처까지 몰려왔고 거기에 보니까 갑자기 문을 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방문진 이사, 이화여대 교수분이셨는데 그분 학교까지 찾아갑니다, 시위하러. 그리고 또 다른 이사는 대학 총장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까지 찾아갑니다. 교회까지 가 가지고 온 데 포스터를 붙이고 '물러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것 다 사진으로, 영상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41번.

그러니까 자신들과 생각과 이념과 정치 성향이 다르다 하면 언론노조가 장소, 수단을 안 가립니다,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사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목적 달

성을 했지요. 뭐 KBS 이사가 한양대 교수로 계시니까 그 학교까지도, 한양대까지도 찾아갔지요. 그래서 사퇴합니다. 이 교수님들이 압박에 굴복해 가지고 사퇴하고, 그러면 또 이사 수가 역전돼서 사장을 해임 가능하게 하는 거지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사진은 뭐냐 하면……

아니, 41번요. 41번 다시.

이 사진은 KBS 언론노조의 행태인데 시설 방호를 맡은 보안직원들을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참석을 위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강규형 이사에게 집단 린치를 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강규형 교수요, 당시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지금도 명지대에 계신데……

42번 보실까요?

명지대 캠퍼스까지 찾아갑니다. 가 가지고 막 플래카드 걸어 놓고 사퇴 촉구 기자회견합니다. 아니, 거기 소속되어 있다고 그래도 명지대하고 강규형 이사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KBS 이사와 명지대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그 학생들이 이런 장면을 왜 봐야 하는지, 이게 지성인이라고 하는 언론노조에 소속된 기자와 피디들의 폭력성, 행태……

43번.

김경민 전 KBS 이사가 재직하는 한양대학교 앞에 가서 시위를 벌이는 왼쪽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원일 전 KBS 이사가 재직하는 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 바른까지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사가 강의하는 대학과 심지어 그 제자 직장까지 찾아가서 농성을 벌입니다. 이게 언론노조원들의 행태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시위를 가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KBS 언론노조고요. 언론노조 KBS본부고, MBC 언론노조 수법이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았지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가운데 한 명이지요, 이화여대 유의선 교수를 이사직에서 사퇴시키기 위해서 또 학교까지 찾아가지요. 또 김원배 이사가 다니는 교회까지 찾아갑니다. 이 교회는 대전에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대전까지 찾아가는 거지요. 대전의 교회에 가 가지고 교회 옆에 온갖 포스터 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가족의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김원배 이사가. 그러면서 사퇴를 합니다. 유의선 교수도 결국은 이사직을 사퇴하는데 그렇게 사퇴하니까 이제 그 자리에 문재인 정권과 언론노조에 맞는 보궐이사를 선임해서 김장겸 사장을 해임하게 됩니다. 이런 폭력성, 폭력 집단이지요.

44번.

아까 동영상에서 봤는데 작년 7월 24일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위력행사, 항의 방문인데 이걸…… 아니, 아무리 그래도 청문회장 앞에, 바로 과방위 사무실 입구에 구호를 외치고 피케팅을 하고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그러고. 이 화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어느 의원실을 찾아왔다고 해 놓고 그 의원실에서 안 나가고 몰래 이쪽으로 올라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파악이 됐는데, 국회사무처도 이것 제대로 대응해야 됩니다. 이것 동영상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했는데 이게 지금 아직 답이 없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아니, 국회 본관의 사무실 앞에 이러면…… 민주당 의원

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의원님들조차 어떻게 함부로 이렇게 다닐 수가 있겠어요? 이것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성향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옵니다.

사실 그때 저기 앉아 계신 이진숙 위원장이 굉장히,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당당하지만 '야, 어떻게 여기까지……' 이런 표정이었는데, 이것 국회 내에서 구호와…… 국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구호와 피켓을 동반한 집회와 시위는 법으로 금지된 불법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사실을 제가 과방위에서 지적을 하니까 답하는 것 보십시오. '불법임을 알았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의 임명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 목적을 위해서는 불법적인 일도 그냥 한다 이것 아닙니까?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그 어떤 불법적 행위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YTN 한번 볼까요?

언론노조 YTN지부, 아마 김백 사장이 전격 사퇴한 것은 제가 알 바는 아니지만 그냥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만 하고 있는데 사실 2017년도를 생생히 기억할 것 아닙니까. 사장한테 침 뱉고 여기자가 쌍욕을 하고 이런 것이 곧 자기한테 들이닥칠 것으로 예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지난달 28일 날 김백 사장이 사퇴를 했는데, 그런데 사장이 사퇴했으면, 법안도 오늘 통과됐고 했으면 그 목적을 일부분 달성했고 또 돼 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언론노조 YTN지부가 지난 1일부터 또 갑작스럽게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요구 조건은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 박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진그룹이 YTN 민영화할 때 굉장히 많은 돈을 써내 가지고 그렇게 낙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몇천억 써낸 것 같은데 아니, 자본주의사회에서 소위 이렇게…… 이것은 그냥 민간회사를 뺏는 것 아니겠어요? 최대주주의 그 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은 그냥 남의 회사를 뺏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80년 신군부가 '신문사 가져와', '방송사 가져와' 이것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신군부가 자행한 언론 통폐합을 법으로 그냥 해 가지고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위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는 나라는 없다, 전체주의국가 아니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행 노동조합법, 민주당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으면 또 법을 바꾸려고 그럴 텐데, 이 노동조합법에 따르면요 근로조건 이외의 파업은 불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장겸 사장 퇴진, 고대영 사장 퇴진, 최남수 사장 퇴진, 김백 사장 퇴진, 사실은 이렇게 해서 파업하는 것은 이것은 불법 파업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법 위에 있는 거지요, 법 위에. 지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더더욱 그러겠지요. 이게 언론노조의 모습입니다.

45번 넘어가 주시지요.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이중성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위법이라도 자행하는 편향적 정치활동을 보면, 보시면 '방심위 등 정부기관 곳곳 민주당의 예산 삭감 횡포 후폭풍 현실화' 또 '국정마비 현실화 대책 시급' 이렇게 했는데, 사실 민주당이 그때 우리 과방위에서도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언론노조 원들이 농성은 류희림 위원장 집무실 앞에서 하고 있어요. 이 사진이 그런 건데……

지난겨울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여러분들이,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들이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방적으로. 그 삭감 대상에는 당연히 방심위 예산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과방위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경상비를 30%가량 깎고 그래서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심위가 주로 하는 일이 제재나 심의를 하는 건데, 그러면 모니터링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 모니터링을 하는 업무를 비롯해서 주요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깎이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빌려 쓰던 사무실 일부를 반납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몰렸습니다. 위원장하고 사무총장을 비롯해서—방심위 이야기입니다—고위직은 임금하고 업무추진비 삭감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세목 변경 불가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어떤 답변을 보내 왔냐면 '전용이 불가하다', 그래서 이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처럼 민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이 문제였는데 언론노조원들은 위원장실, 그러니까 방심위 위원장실 앞에서, 농성을 하려면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앞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방심위 위원장실 앞에서 농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정치세력화를 목표로 하는 정치적 집단임을 사실은 자인하는 겁니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그 민노총 언론노조는 저희들이 알다시피 2017년에 민주당 전문위원이 작성한 방송장악 문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의 충실한 파트너가 됐는데 2017년도에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민주당의 안정상 전문위원이 작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문건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목표는 뻔하지요. 고대영·김장겸 사장을 퇴진시키기 위한 건데 여기에서도 언론노조원들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MBC·KBS 사장 퇴진 로드맵 해 가지고 MB 비판 영화지요, '공범자들'. 이것 제 후임으로 MBC 사장된 최승호가…… 최승호가 지금 부당노동행위로 재판받고 있는데 1심에서 유죄 받았지요. 최승호가 만든 영화인데, 이 영화를 단체 관람한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러 사람들이 국회에서 단체 관람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김장겸·고대영 사장 발언에는 즉각 대응한다. 그리고 민주당 적폐청산위 활동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이것은 박범계 위원장이 당시에 언급한 내용이고.

그리고 네 번째 보면 로드맵 중에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 전개, 그래서 이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이 로드맵에 따라서 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언론노조와 민주당이 한 몸인 셈입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퇴진 운동을 전개한다. 고대영·김장겸 나가라 그러면 사백 몇십 개 단체가 우루루 서명하고 그러지요. 그런 성명서 발표하고, 그리고 촛불집회를 검토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 측 이사들 퇴출한다. 그러니까 야당 측은 저희 당 소속 이사들 이야기인데 그래서 유의선 이사, 김원배 이사, 김경민 이사 이런 분들이, 강규형 이사처럼 끝까지 버틴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결국은 사표를 냅니다.

이게요, 행동대원은 누구겠습니까? 아까 다들 보셨겠지만 행동대원은 언론노조원들이

었습니다. 언론노조원들이 학교 찾아가고 교회 찾아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방송사 주변에다가 온 플래카드 막 붙이고 그럽니다. 또 사장 출근하면 뒤에서 욕하면서 옷도 붙잡고……

이런 사람들이 지성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보도를 하고 이게 과연 서로 이렇게 매치가 되는지, 이것은 아마 경험해 보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국민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노조원 이전에 기자였고 피디였고 그게 먼저였을 것 아니냐 그렇게들 생각을 하실 텐데 그 집단의 힘이 무섭습니다. 아까 침 뱉고 욕하고 하는 것…… 순식간에 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이렇게 말을 아무리 해도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는 과방위 입구에까지 어떻게 어떻게 하든, 어디 뭐 거짓말한 거지요. 어디 간다 해서…… 어디 시위하러 간다 그러면 국회에서 출입허가증 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아니, 어떻게 상임위가 열리는 문 앞에까지 와서 협박하는 듯한 그런 시위를, 겁박하고—사실 겁박하는 거지요—그런 시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언론노조원이고, 그 언론노조원은 취재·보도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자나 피디,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 여러분 이것 아셔야 됩니다. 민주당 방송 3법 이걸 왜 장악법이라고 하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영구적으로 소위 경영진을, 그러니까 노사 동일체, 경영진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그런 법이다 이겁니다. 영구장악법이지요. 이것은 공영방송뿐만 아닙니다. 이제 편성위원회를 통해서 민영방송까지 다 장악할 수 있는 이런 구도를 만들어 냈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무슨 방송에만 그치겠습니까? 이제 유튜브, 신문, 아마 착착 진행될 겁니다. 저는 80년대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처럼 거대한 밑그림하에 이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2017년도의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을 설명하다가 옆길로 샜는데 감사원에 사장 비리 국민감사청구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를 활용해라, 사장 경영 비리를 조사하라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것은 추진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 재허가를 통해서 문책하라, 이것도 추진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진되기 전에 경영진을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건대로 된 거지요. 문건대로 MBC 같은 경우…… KBS·MBC, MBC가 특히 다 됐고 지금은 문건이 아닌 법으로 이걸 하려고 여러분들이, 법 하나는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일방 통과시켰습니다.

46번 볼까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이중성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법이라도 자행하는 편향적인 정치활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노조 성명을 한번 보면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저희 당 미디어특위에 대해서 '적반하장 대신 대화의 문을 열라' 이런 성명을 발표했는데 민주당의 당시 예산 삭감으로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에는 항의 한마디 못 하고 임금 삭감안까지 제시한 방심위원장을 감금, 협박하더니 언론노조가 성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수구 보수 궤멸의 몽둥이를 들겠다. 그러니까 보수면 싫은 거예요. 싫은 건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이게 중립성을 강조

하는 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노조, 소위 언론노조에 속한 단체에서 이런 편향적인 정치세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면을 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의해 방송산업 자체는 하부구조가 완벽히 장악돼 있다. 그리고 법 위에 서서 극도의 정치 편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언론노조의 경영권 장악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 48번 한번 볼까요?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하나 보겠습니다. 언론노조가 소위 성경처럼 받드는 판결문인데, 언론노조가 '방송의 공정성이 노동 조건의 근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 단체협약에서 방송의 공정성이 근로조건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방송의 공정성은 근로조건이라고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MBC 단체협약 제24조 4호에서는 '사용자는 공정 방송이 중요한 노동 조건임을 인정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가 확장되면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으로 가면 MBC 단체협약에서 '사용자는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이 중요한 노동 조건임을 인정합니다'라고 정해 놓으면 언론노조가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 파업을 하더라도 적법한 파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적법이 무엇인지 정하는 것은 입법권이 있는 입법부의 권한입니다. 어떤 행동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법 해석 권한이 있는 사법부의 권한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언론노조가 적법한 파업이 무엇인지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노조가 상하부 구조를 모두 장악하고 있기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론노조 출신이 경영권을, 경영진을 장악하고 있고 노사 협상을 담당하는 회사 측 인사까지, 노무부장 이런 사람들까지, 인사부장까지 언론노조원입니다. 결국 언론노조가 하고 싶은 파업이 있으면 언론노조와 언론노조가 만나서 규약을 개정하고 적법하게 파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룰을 만들고 심판까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법 말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파업 조장법, 노란봉투법 이렇게 부르지요, 민노총 언론노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법이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10년 전부터 이미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파업을 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파업 조장법의 영감을, 생각을 언론노조로부터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판결이 정정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에 이 판결이 상고가 됐는데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 판결을 다시 뜯어보고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건데…… 그러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살펴보고 다시 한번 뜯어보겠다 심리불속행 기각, 그렇게 기한 지나고 보려고 하는데 언론노조원이 사장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상고를 취하해 버렸어요. 그래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지 못했어요.

그 언론노조 사장이 언론노조 출신 제 후임 사장 최승호입니다. 최승호는 왜, 뭐가 무서워서 상고를 취하했을까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고 했지만 최승호 사장은 언론노조원이 아닌 방송국 구성원을 배제하고 차별하다가 1심에서 지금 유죄를 받고 아마 항소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노조가 이제……

49번 볼까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법이 통과되니까 아마 KBS 사장은 법에 따라서 3개월 이내에 바뀌고, YTN 사장이 물러섰지만 3개월 이내에 또 새 사장을 뽑기 위한 그런 사추위를 노조와 합의해야 되고, 협의가 아니고 합의해야 되고 이러면 2017년도, 2018년도에 인민위원회라고 불러도 무방할 소위 적폐청산위원회가 각 방송사에 또 설치가 될 겁니다.

2017년 제가 나오고 난 뒤에 소위 적폐 정상화위원회, 아마 그쪽의 구성원들은 거의 일제시대 고등계 형사라고 표현하던데, 그냥 부른대요. 불러 가지고…… 사실 감사실이 따로 있는데 정상화위원회 만들어 놓고 불러 가지고 '야, 이것 보도 마음에 안 드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마음에 안 드는 보도지요, 언론노조의 마음에 안 드는 보도. '이 보도 어떻게 나갔냐? 이거 누가 시켰냐?', '누가 시킨 게 아니고 제가 알아서 했다. 제보받은 거다' 이러면 '김장겸 사장이 시켰다고 한마디만 해라' 이런 식으로 일종의 주리를 튼 거지요. 그렇게 계속 시달리다가 명예퇴직하고 회사를 나간 후배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회사를 상대로, 그런 소위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그 소송을 해서 2000만 원 배상금을 받아 내고 그런 후배도 있고요.

그리고 정상화위원회 조사실장이라는 친구가 아주 대담하게 지난번, 작년에 저희 과방위에 나와 가지고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해 가지고 위증죄로 고소·고발당해서 검찰에 송치됐는데 그 친구가 바로 정상화위원회 조사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49번 PPT를 보시면 이게 판결…… '조사협력 요구에 불응할 경우 앞서 조사에 불응한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대기발령,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거나 허위자료 제출을 이유로 징계 요청될 구체적·현실적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의사에 반해서 어쩔 수 없이 조사에', 그러니까 조사하러 나오라고 하니까, 정상화위원회, 인민위원회에서 오라고 그러니까 일하다가도 가는 거예요. 가 가지고……

이거 무소불위지요. '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비위행위를 묻는 질문에 부인 답변을 하거나—안 했다—또 진술 거부를 해도 징계처분 또는 수사 의뢰를 도구로'…… '너 징계받을 거야', '너 수사 의뢰할 거야' 자백을 강요한 거예요. 계속 자백을 강요한 거야, 이거. 이게 일제 고등계 형사지.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게 판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영진과 언론노조가 협력해서—사실 한 몸이지요—조사 대상자를 정상화위원회 사무실로 대기발령 내고 무한 대기를 시킵니다. 배현진 의원님 안 계시는데 배현진 의원님도 그때 골방에 거의 감금당하…… 갇혀 있었지요. 그리고 그 장소에 대기하지 않는다 이러면 또 무단결근을 시켜 가지고 징계하겠다. 그리고 결론을 딱 정해 놓고, 답정너라고 그러지요,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5일 동안 다섯 번 불러서 자백을 강요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몰상식한 일이 이제 또 불어닥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행위들은 법원에 의해서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MBC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 할까요? 이걸 해서…… 2017년, 18년에 불법행위로 했다고 이번에 이재명 정권하에서 지금 방송법 통과되고 안 할까요? 저는, 아까 그 동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법원의 판결을 두려워할 사람들이 아닐 걸로 봅니다.

이 판결문을 내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면 언론노조의 불법행위와 반인권적 행위를 법원이,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된 겁니다. 대법원에서 2022다221123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 별첨을 보면 '원고 A는—이건 MBC 직원입니다. 제가 아는 기자입니다. 후배입니다—F 위원회—F 위원회라고 하지만 이게 정상화위원회예요—조사협력 요구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을지라도 그 사유를 소명하여 위 조사협력 여부에 불응할 경우 앞서 조사에 불응한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대기발령,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거나 허위자료 제출을 이유로 징계 요청될 구체적·현실적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잠깐 여기서 임금 삭감이 나와서 제가 한말씀드리면 노영방송이라고 하는 게, 제가 나오고 언론노조 위원장을 했던 최승호가 사장으로 들어간 뒤에 어떻게 했냐 하면, 이게 고과에 따라서 진급이 빠르고 늦은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은 해에 입사를 해도. 그런데 그거를 입사 연도에 따라서 부장, 차장 이렇게 동일화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부장이 돼 있는데 자기 입사 동기들은 차장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입사가 90명이다 하면 다 같이 차장, 다 같이 국장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체제인지 여러분들 짐작이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강등된 사람들은 직급수당도 줄어들고 임금 삭감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의사에 반하여 어쩔 수 없이 조사에 출석한 것이고 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비위 행위를 묻는 질문에 부인 답변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 또는 수사 의뢰를 도구로 비위 행위를 자백하도록 강요받음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F 위원회—F 위원회는 정상화위원회입니다—조사 과정에서 원고 A에게 행한 위와 같은 절차상 위법은 곧 피고의—회사 측 이야기지요, F 위원회—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A는 이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직접 조사 담당한 일제 고등계 형사한테도 형사 고발을 하고 배상소송을 걸었을 텐데 이 친구는 아마 회사 측한테만 해서 배상금을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원고 A는 F 정상화위원회 조사협력 요구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불응할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2018년 7월경부터 10월경까지 수개월에 걸쳐서 다섯 차례나 조사에 응했고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거부권 등 이런 것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 친구 A가 2018년 11월 인사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데, 원고 A가 최종적으로 징계처분을 받지는 않았으나 같은 기간 동안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동료 기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해고, 정직 등 중징계를 받는 것을 지켜보면서 징계처분에 대한 압박과 심리적 불안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에 최승호가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본인이 주장을 했는데 자기가 사장이 되고 난 뒤는 제가 알기로는 19명인가, 한 20명 가까이 해고를 시켰어요.

원고 A는 결국 2019년 12월경 명예퇴직 신청을 합니다. 못 견뎌 가지고 회사를 떠납니다. 아마 언론노조원들은, 노조에서는 이거를 원했는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약 19년간 몸담았던 직장을 스스로 떠나기에 이르렀는데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판결문 내용입니다.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통하여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니까 판결문에서 보듯이 언론노조가 상하부 구조를 장악한 결과 반대파의, 반대파라는 것도 같은 회사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과 인권은 굉장히 가볍게 짓밟는 그런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장악 3법은 결국 언론노조로 하여금 경영권을 장악하게 하는 건데 언론노조의 경영권 장악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번 띄워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상하부 구조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니까 내부 견제가 안 됩니다. 광주MBC 프리랜서 아나운서 사례인데 우리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보시면 MBC의 한 아나운서는 2021년 프로그램 개편으로 하차한 뒤 진정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노동청과 노동위원회로부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회사와의 분쟁 끝에 근속연수를 줄이는 조건으로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언론노조 광주MBC 지부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반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채용 시 노조와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는 단체협약 조항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유를 들어서 노동자에게 등을 돌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노조의 텃세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근로자에게,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언론노조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 그냥 무소불위지요.

그래서 해당 아나운서는 2022년 8월 노동청에서 근로자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도 언론노조의 몽니 탓에 근로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견제 세력이 없이, 사실 국가도 독재국가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듯이 회사도 주인 없는 회사일 텐데 주인 없는 회사에 견제 세력이 없고 한쪽이 힘이 세지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보면 해당 언론노조 지부장이 만남을 계속 피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고용 과정에 조합은 근무환경에 변동이 생기는 일은 없는지 감시하는 것에 충실하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상하부 구조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언론노조의 견제 없는 독주인데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노동약자의 권익보다 혹시 모를 조합원, 지금 현재 있는 조합원의 손해 발생에 더 신경 쓰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듯이 언론노조는 방송사 구성원의 대표가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단체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에 문제가 됐지요. 51번 고 오요안나 사건 한번 보시지요. 역시 이것도 언론노조의 경영권 장악 문제점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 오요안나 양이 기상캐스터였는데 MBC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 기상캐스터가 있는 그 조직도 상하부 구조를 완전히 장악한 언론노조 독주 체제입니다.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MBC는 비언론노조원들에 대해서는 차별과 따돌림, 보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노조가 상하부 구조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까닭에 이게 문제 제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과방위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마는 설령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진상조사와 사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요안나 어머니께서 당시 현안질의가 있던 과방위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눈물로 호소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MBC 관계자들은 이 현안질의에 대거 불참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실 진실된 사과는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다고 발표는 했지만 핑계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 이 핑계 저 핑계 계속 댑니다.

MBC는 이것뿐만이 아니지요. 권태선 이사장 임기가 지금 1년 넘게 지났지요. 한참 지났어도 방문진 이사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방문진 이사회에서도 고 오요안나 사건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당사자들만 알겠지만 결과보고서는 공개하지 않고 그리고 괴롭힘 당사자로 지목된 가해자들은 계약이 연장되고 그리고 방송도 또 계속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게 소위 언론노조의 제 식구 지키기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 문제 역시 언론노조의 정치적 지향성과 편향성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일 수도 있다 이런 점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사건 진실을 위해서 청문회를 요청했었지요. 그런데 과방위에서 소위 민주당 거대 여당이 현안질의로 그것도 오전에만 잠깐 진행하는 것으로 축소 진행됐습니다.

그마저도 사실 여기 민주당 위원님들 있지만 거의 질문을 안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이게 을을 지킨다, 2차 가해가 우려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을을 지킨다라는 민주당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질의를 하고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민주당이 오늘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상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현안질의로 축소하고 한 게 MBC하고 언론노조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축소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걸 더 경계하고,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MBC를 얼마나 지키고 싶겠습니까.

제가 정치부장 때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제가 정치부장 때 학교 선배인 민주당 의원님이 친한 분인데 저를 한번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말씀의 취지가 이거예요. MBC가 전통적으로 민주당 편이었다, 말씀의 취지가. 제가 말씀드리는 그 워딩 자체는 정확하지 않지만 취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에서 제가 정치부장으로 온 뒤로 전혀 협조가 안 된다, 그래서 당신이 친한 학교 선배라고 하니까 가서 좀 만나 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MBC가 그동안 어떤 보도를 해 왔습니까? 김대업 병풍 보도 몰빵 하고요, 광우병 보도하고요, 미선·효순 사건 집중 몰빵 보도하고요. 선거 때마다, 고비 때마다 MBC가 어떤 보도를 했습니까?’ 제가 그 선배님한테 ‘아니, 이런 것을 제가 균형을 못 잡고 계속하라는 말씀일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배님이 가만히 들으시더니만 ‘그래, 듣고 보니 네 말이 맞네. 네 소신껏 해라’ 그러셨어요. 그런 의원님들이 우리 민주당에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2번 볼까요?

민주당이 MBC와 언론노조를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는지 정확히 설명해 주는 사례가 있는데 지난 20대 대선 사흘 전에 뉴스타파에서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공개하고 소위 공영방송이면서 지상파인 MBC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다음 날 보도한 사건입니다.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으면서, 이것은 MBC 내의 어떤 보도준칙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MBC는 사실관계 확인조차 안 된 내용을 그대로 제목에 쓰면서 '뉴스데스크'에서 네 꼭지를 보도하고 녹취록을 일곱 번 방송했습니다. 이것만 해서 성에 안 찼는지 대선 하루 전 'PD수첩'에서 또 이 녹취록을 보도를 합니다, 방송을 합니다.

결국 뉴스타파가 편집해서 보도한 녹취록을 그대로 인용을 했고 사실관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시인했습니다만 역시 MBC는 사과 안 합니다. 보도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는 어설픈 핑계로 어물쩍 넘어갑니다.

이게 패턴화가 되어 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뉴스타파나 '뉴스공장' 같은 성향의 매체에서 그럴싸한 의혹을 제기하고 MBC가 이를 받아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슈 메이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공중파에서 보도했다 해서 신뢰성을 실어 주는 거지요. 그런 전형적인 특정 정치세력식 어젠다 세팅의 표본입니다.

이렇게 언론노조가 장악한 방송이 특정 정치세력을 대변해 주고 있으니, 민주당을 대변해 주고 있으니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래서 그 특정 정치세력, 민주당 의원님들이 MBC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지요.

그리고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신학림 역시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입니다. 뉴스타파도요 사실상 언론노조가 만든 회사고요, 언론노조 출신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53번.

이것 생태탕 아직도 끓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대표적인 가짜뉴스로 선거 때 상당히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지요. 김어준 유튜브가, 김어준 씨가 하면 이걸 또 공영방송, 언론노조가 장악한 공영방송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MBC의 소위 왜곡·편파·편향 보도는 본사와 지방 계열사를 가리지 않습니다.

54번을 보시면, MBC 경남에서 총선 당일 아침 뉴스에서 보도한 겁니다. 조국혁신당 돌풍이 관전 포인트라고 MBC 경남에서 띄웁니다, '조국혁신당 돌풍 경남에서도 부나?' 이렇게.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에 투표한다면 여당과 민주당에도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가 될 것이다라는 보도를 합니다. 이 정도 같으면 거의 선거운동입니다. 이걸 역시 MBC가 합니다.

그런데 선거 당일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보면 정혜경 후보, 아마 의원 배지를 다셨던 것 같은데 '정혜경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경남의 비례대표로 당선이 확정되면—이분은 조국혁신당은 아니고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인데—경남의 국회의원 수가 17명으로 사실상 1명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이렇게 해서 경남 출신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더불어시민연합을 찍으면 경남 출신 의원이 늘어난다 이런 광고지요. 이런 광고를 뉴스로 포장해서 선거 당일 아침에 보도를 하는데……

그런데요, 제가 비례대표로 여기 들어왔는데 제가 경남 출신입니다. 제가 창원 출신이고 마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여기에 제 이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나 편향된 편파 방송입니까? 이것 더불어시민연합은 선전을 해 주면서 우리 국민의미래는—그 당시의 정당이지요—일체 뺀 거예요. 이런 편파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MBC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MBC입니다, 여러 민주당 의원님들이 좋아하는, 지키고 싶은.

자, 55번 총선 편파 보도 사례 한 번 더 볼까요?

이것 서울, 경남 어디 가리지 않아요. 이번에는 울산입니다. 울산 북구 후보자를 다루는 꼭지에서 민주당은 36초 보도했는데 국민의힘은 2초 보도합니다. 이게 뭐 그냥 내놓고 하는 거지요, 내놓고 그냥. 그래서 민주당이 많이 당선된 것 같습니다.

(「울산에서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울산에서 말고요. 이런 식의……

(「울산에 대해서……」 하는 의원 있음)

아, 이 부분은 울산이지요. 이런 편파 방송은 울산, 마산 떠나서 전국 MBC 본·계열사를 통해서 자행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울산MBC ‘뉴스데스크’는 2024년 1월 18일 보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동권 전 북구청장이…… 이게 당선됐다고, 안 됐다고, 낙선됐다고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보도 행태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동권 전 북구청장이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라면서 예비후보 소개로 시작해서 출마 선언 인터뷰까지 36초, 그리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나머지 예비후보들은 그 밑에 보이지요. 이름 저거 쫙 2초 하면 보이겠습니까? 이런 편파 방송을 그냥 하는 거예요.

대전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대전MBC 역시 또 빠지지 않습니다. 56번이요.

대전MBC는 국민의힘, 저희 당 성일종 의원에 대해서 공약 이행률 0%라고 강조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상대 당인 민주당 후보가, 이것 정말 좋은 호재 아닙니까? 이를 받아 가지고 카드 뉴스로 만들어서 배포를 했대요, 이 뉴스를.

그런데 보니까 사실은 대부분 예산이 반영되고 행정 절차를 거쳐서 확정되고 있었고 정상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MBC는 소송을 당할 것 같으니까 결국 3일 뒤에 항의를 받고 내용 정정을 합니다. 어떻게? 그 밑에 보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21대 총선공약 정상 진행 중’ 이렇게. 자기들이 봐도 이것 나중에 좀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일단 마구 보도하는 거지요.

57번 보실까요?

권순표라는 인물, 제 밑에서도 일을 했는데 아주 문제의 논란, 편향성의 표본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지요.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이것도 보면 과장 보도 그냥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청와대 딱 들어갔더니—그냥 악마화시키는 거예요—거울방이 있더라. 진짜 사방팔방에 다 거울을 붙여 놓고’……

그런데 실제로는 들어가 본 사람으로서 정확히 얘기하면 거울은 한쪽 벽만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가짜뉴스입니다. 청와대 거울방, 이름을 또 청와대 거울방으로…… 네이밍은 또 잘해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악마화시킨 것 아닙니까? 이 가짜뉴스 유포를 이 프로에서……

이것 사실 가짜뉴스로 이미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올 4월에 또 그냥 돌리는 거예요, 또 올 4월 7일 날.

(「쉽게 못 넘긴다는……」 하는 의원 있음)

예?

(「쉽게 못 넘길 주제라고……」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여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정상적인 언론인이라면 사실 어떻게 이런…… 자기가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 나중에 해명 보도나 해명 방송이나 이런 걸 해야지요. 그런데 그냥 뭐……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이미 가짜뉴스라고 밝혀진 것을 올해 4월 달에 다시 또 거론해서…… MBC가,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이 가짜뉴스의 소위 확성기, 편파·조작·편향 보도의 증폭기 역할을 한 사례는 너무 많지요.

58번 한번 볼까요?

보면 광우병, 미국산 소고기는 공기로도 전염되는 광우병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허위·왜곡 보도. 또 검언 유착, 검사와 기자의 유착 의혹을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권언 유착이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리고 앞에 나온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관련 의혹을 받는 도중 한 식당에 방문했다고 또 허위·왜곡 보도, 생태탕 뭐 어쩌고저쩌고했지요.

그런데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그런 우리나라에서…… 이게 다른 나라, 그런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면 이렇게 언론노조가 헤게모니를 잡고 정치세력화되고 그런 게 있을까?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전체주의국가나 그러면 모를까.

그리고 내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는데 전가의 보도처럼 우리가 BBC의 예를 듭니다. BBC도 노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BBC 노조는 후생복리 외에는 근로조건 협상…… 그게 자기들이 공정성의 잣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협상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그것은 박지순 고대 교수가 유럽을 한 바퀴 돌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건.

그래서 왜 그러냐? 아니, 노조는 그냥 이익단체 아닙니까? 이익단체가 무슨 책임을 지고 뭘 어떻게 한다고 자기들이…… 그리고 특히 '자기들이 하는 게 공정성의 잣대다'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보수 궤멸 운운하면서 자기들이 공정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진보좌파라야만 공정한 세상이다' 이런 목표가 확실히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편파·왜곡 보도를 한다 그런 걸로 보입니다. 제가 회사에 있을 때 경험을 해 본 바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급간부 시절에 언론노조가 보도본부장이 보수적이라고 성명서를 씁니다. 아니, 보도본부장이 보수적이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보수든 진보든, 좌파든 우파든 공영방송이라면 모든 걸 끌어안고 균형하에서 사실 움직여야 되는데 보도본부장의 생각이 보수적이다 그러면, 보도본부장의 생각이 보수적이라고 그 보도 자체가 보수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MBC 같은 경우는 보도국장이 한 90% 이상의 기사 결정을 합니다, 부장하고. 그래서 보도본부장은 어떤 면에서는 인사와 행정만을 거의 책임지는 부분인데 그런 인물에 대해서 보수적이라고 언론노조가 공격을 합니다. 거기에서도 편향성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소위 저희를 비꼬아서 저희 당을 방송에서 '내란의힘' 탱크 로고 이것 그대로 보도한 적도 있고요. 얼마 전에 날씨예보 가운데 MBC는 '파란색 1' 강조를 선거 때 하지 않았습니까? 또 민주당 의원님들의 막말 발언은 거의 외면하지요. 그리고 민주

당 의원님들 막말에 국민의힘 로고를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59번이요.

계속해서 언론노조의 경영권 장악 문제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노조,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비언론노조에게 가하는 차별행위에 대해서 보시면 아주 체계적으로 차별합니다. 최승호 제 후임 사장, 언론노조 출신 최승호 사장이 '2017년 12월 7일 사장으로 취임해서 경영권을 장악하고 2017년 9월에 있었던 언론노조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직원들의 업무를 모두 박탈했다', 이것은 MBC 제3노조 직원이 최승호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직원은 얼마나 자기가 차별을 받았다고 설명을 하는데 '급작스럽게 옮기게 된 편성국에서 맡게 된 업무는 주조정실 MD였다', MD가 뭐냐 하면 마지막에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새벽과 낮 근무, 밤샘 근무를 이어 가는 근무 형태로 닷새마다 꼬박 밤을 새워야 한다'. 이런 환경에서 6년 가까이 근무하다 병을 얻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눈의 망막이 떨어져 나가서 출혈이 발생했고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러는데 대개 이런 데는 일이 년 이렇게 바꿔 주는데 6년 가까이 속된 말로 그냥 내버려둔 거지요, 인사이동도 안 시켜 주고. 그렇게 차별을 당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60번 볼까요?

비언론노조에게 가하는 차별행위요, 사실 저도 특파원을 갔다 왔는데, 여기 앉아 계신 이정헌 의원님도 특파원을 갔다 오셨는데, 특파원을 가는 것은 가족 전체가 이사를 가는 겁니다, 가족 전체가. 그러니까 대개 자녀들이 어리고 하면 새로운 환경 그리고 학교에 또 알아보고 적응하고…… 아니, 국내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도 힘든데 예를 들어서 워싱턴, 도쿄 이런 데로 간다면 그 아이가 학교에 적응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요. 그것을 또 적응하는 기간은 상당 기간 걸립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그 말을 배울 때까지. 물론 어린애들은 솜처럼 언어를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최승호 내 후임 사장이,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이 들어오고 난 뒤에 자기가 특파원 강제 전원 소환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도쿄 특파원, 제가 기억하는데 간 지 4개월간 특파원이 있었어요. 3년 임기로 갑니다. 그러면 집도 여기 세를 놓고 가서 또 집을 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원 소환 명령을 내려 가지고 다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러면 부리나케 들어와야 되는데 가족들은 또 두고 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 겪는 고통은 아주 말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또 집은 세놓고 갔는데 당장 들어갈 수도 없고 임시 거처를 또 구해야 되고 애들 다 데리고 오면 또 학교도 다시 알아봐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을 최승호가 자행합니다. 그것 왜 그렇겠어요? 다 언론노조원들로 물갈이하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건 우리가 사장이 바뀌어도 MBC에서 사실은 이런 예는 없었습니다. 이런 예는 아마 최승호 때가 처음이었는데 그만큼 가족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을 두고, 부인과 자녀를 두고 온 사람들은 경제적인 출혈도 심하고요. 그런데 이런 일을 자행했습니다. 이게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 본부장 출신 사장이 들어와서 자행한 겁니다.

그래서 저 증언을 들어 보면 '최승호 사장 취임한 그날 특파원 강제 전원 소환 통보

후—어느 특파원의 이야기입니다—큰아들은 성격이 극도로 내성적이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들어왔는데—가족이 다 들어온 모양이에요—'낮에는 회사에서 소위 언론노조의 무시와 조롱을 견뎌야 했고 밤에는 환경이 바뀐 아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서 잠을 줄여야 했다. 결국 몸이 반응했다'. 아팠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뼈만 앙상하게 남은 큰아들이 특파원 소환돼서 온 사람한테 물었다고 그럽니다. '최승호가 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아빠, 우리는 3년 임기인데 왜 이렇게 몇 달 만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새로 최승호라는 사장이 왔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발령을 냈다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래서 그 아들이 최승호가 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다면 자신을 사내 식당으로 불러 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최승호 사장한테 뺨을 한 대 때리기 위해서라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그랬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언론노조가 경영권을 장악한 MBC의 사실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계속 보면, 또 다른 기자는 2012년 MBC 경력 기자 채용을 통해서 방송기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MBC 입사 이후 사회부에서 기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던 저는 2017년 12월 아무런 이유 없이—2017년 11월에 제가 해임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임되고 난 뒤에—보도국 사회2부 수원지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노조원이 아니라는 이유 그리고 김장겸 사장 퇴진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를 포함한 3명의 기자는 모두 출퇴근 시간이 4시간 걸리는 수원으로 출근해야 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그게 2017년 12월이었는데 1년 뒤에—이 2012년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 위협을 해 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기자인데 개인적으로 강제 비전 클래스 교육, 일종의 언론노조가 경영진을 장악하고 난 뒤에 재교육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제 비전 클래스 교육이 이루어지는 동안 임신 사실을 알았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 찾은 산부인과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이유로 아이가 유산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여기자는 학교 후배라서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MBC 구성원으로 버텨 보겠다던 저는 참담함과 아이를 잃은 슬픔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원 다수라는 그런 무기를 당연히 여기는 제1노조, —그러니까 언론노조에—지배당한 MBC가 다수인 언론노조원이 아니라고 하면서 방송기자라는 직무를 빼앗았습니다. 소중한 목숨도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62번, KBS 한번 볼까요?

KBS도 사실 진실과미래위원회라고 역시 인민위원회 같은 걸 뒀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피해자들이 소감을 적어 놓은 것, 백서를 흑서라고 그러지요. 흑서를 자기들이 이름 붙여 가지고 발간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읽어 보니까 '당시 김의철 사장과 손관수 보도본부장, 김현석 보도국장 등—당시 문재인 정권 때—KBS 현재의 보도를 무기력하게 이끄는 보직자들은 당시 보도국을 돌면서 파업을 참여하지 않고 있던—그러니까 이 파업은 고대영 사장 퇴진 요구 파업입니다—선후배 동료 기자들 가슴에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역자라는 주홍 글씨를 새겨 넣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업이 끝난 뒤에 보도국에 다시 입성한

그들은 부역자를 단순 프레임이 아닌 신념적인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당시 정필모 부사장, 김의철 본부장 등을 중심으로 상식과 법규를 넘어서는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또 다른 분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미위 흑서는—백서가 아니고요—피해자들의 기록인데 목표는 소위 진미위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기록하는 것으로 삼는 데 의견을 모았고, 그러나 일부는 그때의 기억이 너무 치욕스러워서, 얼마나 모욕을 당했으면 답변 자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일부는 그동안 그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 정신과를 다녔는데, 정신과 상담도 하고 또 종교에 귀의하면 혹시 괜찮을까 싶어서 종교에 귀의도 했고 이런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겨우 잊었는데 그런데 답변서를 쓰라고 하니까 기억이 다시 되살아날 것이라고 거절하는 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답변은 하지만 또다시 논란의 근처에 가고 싶지 않다며 익명으로 처리해 달라,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63번 역시 KBS 관련 내용입니다.

(「MBC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MBC나 KBS나 언론노조가 다 장악돼 있기 때문에, 또 그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왜 혀를 차고 그래요?」 하는 의원 있음)

혀 차면 안 됩니까? 거대 여당이 혀 차는 것까지 통제하시는군요. 참, 나 그거 몰랐네. 혀 차기 방지법을 또 발의하는 것 아닌가……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예의를 지키세요! 왜 비꼬고 그러세요.)

조계원 의원님 또 소리 지르시네. 늘 소리 지르시더만, 오늘 조용히 계시더니만……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예의를 지키시라고요. 지를만 하니까 지르지요!)

조계원 의원님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거 지역구에서 알고 계십니까?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한다고 해요!)

적당히 하세요.

(「예의를 지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의는 제가 안 지킨 게 뭐가 있습니까.

(「국민이 보고 있어요, 방송에서」 하는 의원 있음)

방송에서 보고 계신데 국민들께서 제가 혀 찼다고 예의를 안 지켰다고 판단하실지는 제가 좀…… 저는 예의를 무례하게 하기 위해서 혀 찬 적이 없습니다.

(「계속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하던 거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지금 중간에 막아 놓고 갑자기 또 ‘하던 거 하세요’ 그러니까…… 하던 거 하겠습니다.

아니, 그 법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그런 거 다…… 하던 거 하라는 법도 발의하시지요.

63번 나왔습니까, 63번?

(「왜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하십니까. 그냥 진행하시면 되지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진행하는데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냥 하시고 싶은 말씀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데 KBS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예의에 어긋난 것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민이 보고 계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민이……

(「알아서 판단해서 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계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조계원 의원님은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할 때 소리를 지르셔 가지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기 소리 지르는 조가 또 짜여 있겠지요. 그런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언론노조 소속 박태서 KBS 기자가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장이 던져 준 보직에 감사하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일하고 있던 당신들이다. 언제까지 부역할 것인가'라면서 70명에 달하는 보도본부 기자들의 실명을 나열한 성명서를 올립니다. 이 명단에 오른 기자의 90% 이상이 보직을 박탈당했습니다. 당시 KBS 상황인데, 오늘 통과시킨 방송법에 따라서 KBS 사장이 또 바뀌게 되면 이런 후폭풍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소위 그렇게 해서 보직을 박탈당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정의로운 보도를 앞세워서 특정 진영 이익을 대변해 온 언론노조원들이 진격을 했습니다.

64번.

그리고 이와 같은 MBC에서…… MBC로 돌아가겠습니다. 차별과 보복 행위를 주도한 언론노조 출신 최승호, 최승호 다음에 '딱 보니 100만 명', 조국 수호 집회를 가리켜서 '딱 보니 100만 명'이라고 유명한 어록을 남긴 박성제 전 MBC 사장인데 이 두 사람이 법원에서, 일단 1심에서 부당노동행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것 발췌한 것을 보면, 판결문을 보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피고인들은 공영방송인 문화방송의 사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판시와 같이 상당수 MBC노동조합들을 소속 노동조합을 이유로 취재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MBC노동조합의—그러니까 이것 MBC노동조합은 제3노조를 가리키는 겁니다—조직과 운영에 개입하였다. 공영방송의 경영진으로 소속 직원 내지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하거나 이에 가담함으로써 취재 업무에서 배제된 조합원들 및 해당 조합원이 입었을 유무형의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인사발령에 의해 취재 업무로부터 배제된 MBC노동조합—제3노조—등의 규모와 그와 같은 인사조치가 유지된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그러면 이 언론장악의 최종 목표가 뭘까요?

66번.

언론노조의 언론장악 최종 목표, 민주노총 정치노선 관철을 위한 언론 도구화 이게 첫 번째겠지요. 그리고 언론노조와 언론학회 등 카르텔을 형성해서 방송·언론을 장악하는 것을 두 번째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편집권 독립을 명분으로 실질적인 경영권 확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 3법으로 인해서 책임은 없는 경영권을 영구장악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3법을 통해서 노조 중심 구조로 방송장악 법제화를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고 파악됩니다.

이 방송 3법은 단순한 방송개혁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소위 민주노총과 언론노조가 주도하는 체계적인 언론장악 시도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방송 3법에 대해서 '모릅니다'라고 답했지요. 노동부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물론 알기도 어렵겠지요. 그리고 2012년 노동자 통일 골든벨 행사에서 천리마운동, 비날론을 비롯해서 북한 선전 내용을 포함한 친북·반미 퀴즈를 주도했던 김영훈 장관의 과거는 현재의 방송 3법, 상법, 노란봉투법 추진과 맞물려서 대한민국의 언론과 기업을 비롯한 사회 전반을 노조가 장악하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잠깐 화장실 갔다 와도 됩니까?

○부의장 이학영 예.

○김장겸 의원 고맙습니다.

이제부터는 방송 3법이 왜 민주당과 민노총의 방송장악법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국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한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경험과 사고를 외부에 자유롭게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함으로써 공동체의 일원으로 통합되고 동시에 자신의 인격을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과 헌법재판소는 1999년 5월 27일 98헌바70 결정에 따르면 언론·출판의 자유는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과 의사표현의 여론형성, 정보 전달을 통해서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객관적 규범 질서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송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PPT 2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의사 형성 과정의 매개체로서 그 자체가 의사 형성의 요소가 됩니다. 이 가운데 공영방송은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른 다매체·다채널 경쟁이 격화된 디지털 시대 속에서도 선정성과 상업성을 배제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적 공론장을 조성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비롯해서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공영방송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공익 추구라는 기본이념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MBC·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은 사회적 유대 기반 강화와 사회통합이라는 헌법적 임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표를 보시면 언론·출판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본질적 요소지요. 개인이 스스로를 표현, 타인과 소통하며 인격 발현 유효 수단입니다.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객관적 규범 질서 이렇게 해서 공영방송이 언론 자유 실현의 핵심적 매개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방송 통합,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공영방송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KBS·MBC·EBS, 공영방송이지요. 공영방송으로 분류됐는데, 먼저 다 아시겠지만 방송과 공영방송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일반적으로 소유와 운영, 재원의 확보 형태에 따라서 국영방송—국영방송은 전체주의국가나 이런 데 존재합니다—공영방송, 민영 또는 상업방송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공영방송의 개념은 사실 나라마다 조금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정의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공영방송을 상업방송의 어떤 대칭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방송 자체를 공공서비스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공공의 소유다, 그 운영 재원은 방송의 주인인 국민 각자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수신료 등을 통해서 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의 주인은 국민이지 방송종사자들이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문화의 발전과 공공복지의 향상을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요.

공영방송의 특징을 PPT로 한번 볼까요? 4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까지 KBS·MBC·EBS 이렇게 공영방송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공공 소유와 재원 이것은 수신료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KBS·EBS는 수신료로 운영되는데 MBC는 특이하게 광고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라는 게 있고요. 균형 잡힌 프로그램 제공을 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다원주의, 내부적 다원주의,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색깔이 일원화되면 그 하는 방송보도 자체도 일원화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부적 다원주의를 달성할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모든 시청자가 납부하는 수신료를 주된 재원으로 삼아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정성과 공익성, 소외계층과 소수의 권익보호 등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이원적 방송체제의 한 축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활동의 특징과 범위가 법률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법자는 공영방송이 방송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조직적·규범적 절차를 법률에 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국민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적 공급 의무가 있고 이는 의사 형성, 정보·오락·문화 요소 등 네 가지 개념을 특징으로 합니다. 공영방송은 대중에게 매력적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실 보도 또 광범위한 배경 보도 그리고 비평까지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은 외적 다원주의를 달성해야 하는 민영방송과는 달리 사회의 각계각층이 참여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내부적 다원주의를 달성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사실 언론의 4이론에 보면 자유주의 이론을, 민영방송의 외적 다원주의는 자유주의 이론에 충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독립된 다양한 사업자가 서로 경쟁하고 그래서 방송을 제작·공급함으로써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정보가 자연스럽게, 다양한 의견·정보 이런 게 시청자들에게 제공되는 구조 이것을 민영방송의 외적 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서 CNN이 있으면 FOX가 있고 이런 거겠지요.

이렇게 공영방송에는 시청자들에게 다양하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내적 다원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다양성을 통합해야 될 임무가 내적 다원주의를 통해서 부여되어 있습니다, 민영방송에는 외적 다원주의라고 본다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판시한 것을 한번 읽어 드리면, '공영방송의 통합 의무가 의사의 다양성 보장, 모든 사회적·문화적·정치적 사조의 묘사 그리고 모든 국민에 대한 방송 공급 의무 등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송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방송법은 제43조제1항에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를—그러니까 이게 KBS입니다—설립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KBS 외에도 방송문화진흥회법, 오늘 상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과 또 여러분들이, 민주당 의원님들이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도 MBC, EBS를 공영방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현황 PPT 5번, KBS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KBS는 언론노조원들의 방송이 아니고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대표적인 공영방송이자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에서 방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방송법 제43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KBS는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고 수신료와 광고 수익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KBS2가 광고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지요. 수신료로 다 충당이 안 되니까……

PPT 6번이요.

공영방송 현황, MBC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MBC가 이게 참 독특한 회사인데요. 신군부에 의해서 언론 통폐합이 되다 보니 이런 기형적인 형태가 지금 생겨났습니다. 이건 나중에…… 원래는 신군부에 의해서 통합될 때 주식의 70%를 KBS에 위탁을 했었는데 나중에—김대중 정권 시절인가요—방송문화진흥회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방송문화진흥회가 주식의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학회가 30%의 지분을 가진, 이게 지금 상법상은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주요 운영 재원은 광고 수익입니다. 수신료를 KBS에서 받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게 사실 방송문화진흥회가 70%, 정수장학회가 30%를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개정된, 지금 상정된 법 말고 지금 현행 시행 중인 법으로는 사실상 방송문화진

홍회, 방문진이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방문진 이사를 뽑고 하는데 정수장학회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감사를 뽑을 때는 일대일의 어떤 투표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정수장학회가 제가 알기로는 인사권을 행사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정수장학회는 제가 입사한 이후로는 장학금 수입만 받고 거의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데 그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MBC가 61년 창사 이래 전국 지방 계열사를 통해서 전국 네트워크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여러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위성시대에 지방 계열사가 16개 회사고 자회사가 7개 회사인가 그런데요. 계열사는 그래도 몇 개 통합을 했습니다. 지금 위성시대에 원래는 강원도에도 3개 방송사가 있었나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에 비해서 좀 맞지 않다 해서…… 3개가 아니지요. 3개가 아니고 4개가 있었나요? 그것을 통합하는 데, 통폐합하는 데 노조원들의 저항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너무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국 MBC 언론노조가 단일화되다 보니까 임금협상도 서울 본사와 비슷하거나 약간 적게 이렇게 가고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언론노조, 단일 노조 파업할 때도 같이하고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7번.

EBS를 보면 2000년에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국민 평생교육 및 민주적 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 목적의 공영방송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한국교육방송 EBS는 2000년에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서 설립이 됐고요. 교육 목적의 공영방송인데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재는 지금 지상파를 보면 다공영, 그러니까 MBC·KBS·EBS 다공영 1민영—1민영은 SBS지요—이 방송체제는 어떻게 보면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면…… 내가 왜 이것을 소개해 드리냐고 하면 지금 이 방송법이 어떤 거버넌스의 헤게모니 이런 이념적 문제가 아니고 좀 색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첫 번째, 공영방송의 재구조화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우리 한국의 지난 정치 과정 속에서 왜곡되게 형성된 공영방송 구조의 필연적인 과제, 재구조화가 과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둘째, 구조적 관점에서 보면 공영방송은 경직된 운영구조와 비효율적인 지배구조로 인해서 경쟁력과 독립성을 동시에 상실하는 이중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고비용 저효율, MBC·KBS의 직원 구조가 항아리 구조 이런 게 아니고 역피라미드 구조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고비용 구조고, 그게 어떻게 보면 국민 혈세 혹은 국민의 재산을 축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KBS나 MBC를 보면 그런 비아냥이 일었습니다, 창가족이라고. 창가족이 뭐냐 하면, 직급이 올라갑니다.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간 직급에 걸맞은 직위는 한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보낼 수도 없고. 그러면 주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굉

장히, 호봉에 따라서 월급을 받고 올라가서…… 그리고 하는 일이 없으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창가에 앉아서 신문이나 보면서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걸 궁리하는 창가족이라고 그런 게 우리 공영방송 내에서 한때 비판이 일었습니다. 요즘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미디어 환경 이것 정말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요. 그래서 미래에는 소위 경제적 관점에서 왜곡된 일부 공영방송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겁니다.

세 번째, 경제적 관점에서 미디어 시장에 수평적 규제체계가 도입됨에 따라서 그동안 보호 대상으로만 여겨 왔던 방송시장인데 어쩔 수 없이 경쟁 논리가 도입됨과 동시에 공영방송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굉장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지금 OTT가 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를 비롯한. 그 OTT와 또 유튜브로 대변되는 글로벌 미디어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공영방송 역시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실 정치적 관점, 이것 내 편이다 우리 편이다, 그래서 언론노조가 영구히 장악하게끔 그렇게 법을 바꾸자 이런 정치적인 관점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산업적인 관점에서 변화와 혁신이 필수적인 것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사실 공영방송은 민영방송과 달라서 단순히 시청률 경쟁이나 시장논리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의 NHK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프로야구 같은 것은 중계 않고 핸드볼이나 소위 비인기 종목을 중계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술적·경제적 진입장벽이 높은 그런 방송산업인데 공영방송의 존재는 인위적인 다양성 보장 장치로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제작 콘텐츠의 상품화와 기술발전으로 사실 지금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경계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독점적 위상은 BBC나 NHK나 봐도 그대로 당연시되고 있는 것도 또 현실입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문제지요. 하나 정도 재난방송이나 공영방송의 역할로 필요할 그런 위상은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민영방송은 사실 본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하고 시청자의 기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비용으로 높은 시청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또 집중하고요. 그래서 수익 극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은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성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공영방송이 존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1공영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영방송이 너무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영방송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의 폭과 균형 잡힌 다양성을 공영방송 수준으로 요구하지 않는 것은 사실 공영방송이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으니까 민영방송에까지 이런 역할을, 이런 과업을 부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은 기본 공급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공영방송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이 헌법상 요청되는 방식으로 보장되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그런 책무를 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4차 방송 판결에서 이런 공영방송의 기본 공급 의무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사실 이것 동일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방송이 국

가나 특정 사회적 세력·집단으로부터 직접·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인적이고 물적인 독립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조직과 절차에 있어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됩니다.

그러면 방송 3법 개정안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8번 좀 보여 줄까요?

특정 단체, 그러니까 언론노조와 특정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굉장히 확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단체들의 영향력을 키워서 공정한 이사 선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론노조의 방송, 민언련 방송을 만드는 악법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영방송 3법 개정안은 사실 경쟁과 혁신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요? 제 후임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고 난 뒤에 직급 빨리 진급한 사람은 소위 강등시키고 그래서 동일하게 만들었어요. 입사 연도에 따라서 동일하게 계급을, 예를 들면 직급을 동기가 부장이면 다 부장이고 앞서 나갔던 사람들은 '벌써 국장 됐어? 다시 부장 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쟁하고 혁신 노력하겠습니까? 그게 MBC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에 의해서 공영방송이 장악되는 구조를 초래하는 그런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언론노조 방송, 민언련 방송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헌법 이론적 관점에서 방송 3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위헌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9번이요.

이번 오늘 상정한 방송문화진흥회법과 아까 통과된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해서 방송 3법 개정안은, 그러니까 공영방송 KBS·MBC·EBS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절차에서 국회가 직접 추천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사회 구성에서 KBS는 6명, MBC는 5명…… 이것은 사실 진보좌파 진영에서 그동안, 제가 87년 MBC에 입사한 이래 노래를 부르고 들었던 게 정치적 후견주의의 배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아예 국회에서 각 정당이 직접 추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영과 학자들의 위선과 민낯이 드러난 그런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학자들 제가 보기에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이 내용 비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못 들은 것 같아요.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는데 오히려 여기 전문위원을 하셨던, 안정상 민주당 전문위원 하셨던 분이 비판하는 자료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던데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학회가 이사를 추천하게 해 줘서 그런지 그냥 떡 하나 먹어서, 꿀 먹어서 그런지 비판 안 해요. 여태까지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이것 정치적, 직접적으로 정치권이 추천하게 돼 있는데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비판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정말 위선적이고 이중 잣대입니까? 겁을 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국회 직접 추천과 노조와 시민단체 등의 영향력을, 그러니까 결국은 임직원들이 추천하게 돼 있고 학회가 추천하게 돼 있고 또 법률 단체에서 추천하게 돼 있고 이것

은 종국에는 노조와 시민단체 등의 영향력을—시민단체라는 게 진보좌파 진영이지요—크게 확대하는 그런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굉장히 심각한 위헌성과 제도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 방송 3법의 위헌적 요소와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세계 주요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제도 이것 어떤지 한번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미국은 사실은 자유주의 이론이 매스컴 이론을 지배하고 있는 사회인데 공영방송 제도가 아주 약하지요. PBS인가요? 그것 하나 있습니다. 아주 약하고, 민영방송으로 다 각각 색깔도 다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색깔을 띠는 FOX TV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매번 싸우는 CNN이 있고 그렇습니다, 색깔별로 다 다르고.

영국과 유럽 각국, 아시아 국가들이 공영방송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영방송 이사 임명 제도는 크게 영국식하고 독일식, 두 가지 모델로 구분이 됩니다. 영국식은 BBC의 이사들을 문화부장관의 추천으로 국왕 또는 이사회가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 직간접적으로 국가의 행정체계 내에서 작동하는 그런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10번,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영국 공영방송 BBC의 이사회는 비상임이사 10명 그리고 경영진에 속하는 상임이사 4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사장은 1명이고, 소위 영국은 알다시피 연방체 아닙니까?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이 각각의 국가에서 이사 4명, 대표 하나 그렇게, 또 나머지 비상임이사 5명 그리고 경영진에 속하는 상임이사 4명으로 구성되는데 소위 BBC 이사장하고 각 지방, 그러니까 국가지요. 스코틀랜드, 웨일스 다 자치정부…… 그렇게 해서 추천된 이사는 정부의 공직 수행 원칙에 의한 공직자 선임 절차에 따라서 문화·미디어·스포츠부 인선위원회의 공모를 거쳐서 인선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사들을 국왕이 임명합니다.

정부부처의, BBC 이사들은 인선위원회가 선임하고 그리고 국왕이 임명하는데 이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나라 지금까지 보면 방통위가 선임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거나—KBS는 대통령이 임명하지요—혹은 방문진 이사들은 방통위가 임명하지요. 이런 방식과 거의 유사합니다.

일본도 영국과 유사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일본 NHK는 총무성 소관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방송협회법, 그러니까 NHK 법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11번으로 바꿀까요?

NHK의 이사회는 총 10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는데 이사 중에는 사장, 부회장, 방송총괄이사, 경영기획이사, 편성이사, 기술이사 등이 포함됩니다.

최고 경영자 회장은 NHK 경영위원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으로 선출이 되고 경영위원회 위원 수는 12명인데 이 경영위원들은 수상이—일본의 중의원·참의원 있지요—양원의 동의를 거쳐서 임명합니다.

우리 같으면 KBS 사장인데 NHK의 최고 책임자인 회장은 NHK 경영위원회가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이사회 이사들은 회장이 이사 후보자들을 지명하고 경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정식으로 선임됩니다. 이 이사들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 역시 가능합니다.

12번.

NHK 경영위원회는, 우리의 뭐에 비교할까요. NHK 운영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데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말씀드렸듯이 됐고, 총무성 장관이 추천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총리가 임명하는데 임기는 3년이고. 이 경영위원회에서 모든 게 사실은 이루어집니다. 회장 선출도 하고요, 이사회 선임·해임 등에 대한 중요한 권한을 가집니다.

BBC나 NHK의 경우에는 국가 행정기관이 이사를 선임하고 국회가 이를 견제하는 기능을 행사하고 있는 소위 권력 분립적이라고 할까요, 견제의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행정 작용하고 입법 작용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체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상 지금 우리는 영국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KBS는 지금 현재 11명이지요, 지금 법이 통과됐으니까 아마 바뀌겠습니다마는. 그리고 MBC 방문진 이사들은 방통위가 스스로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우리가 법 규정에는 없으나 관행적으로 정치권의 추천을 받아 온 건 사실입니다. 직접 추천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상혁 방통위원장 있을 때는 아예 추천을 안 받겠다 해서, 누구는 너무 보수적이다, 빼라 이렇게 요구하고 또 선임을 안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되지 않은 현행 제도가 위헌성도 낮고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을 그때그때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방송 3법 개정안은 그 방향이 정반대라고 저는 봅니다. 이 개정안 보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의 관여를 축소한다고 했지만 직접 추천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특정 시민단체, 일부 학회, 변호사단체 등 사회적 대표성이 편향된 단체……

변호사단체 이것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대한변협은, 사실 그것은 법적인 기구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들이 보니까 변호사 등록을,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먼저 해야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 기구라고 봐야지요. 그런데 이 변호사단체에 2명을 준다 그러면 민변에 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 법을 성안하는 데에서도 민변이 큰 역할을 했다, 오랜 기간 동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편향된 단체에, 그러면 민변을 주면 한변을 주든 헌변을 주든 반대쪽 정치 성향에 있는 단체에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균형이 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단체가 왜 방송사 이사들을 추천해야 되는지 납득이 안 가요. 이것 왜 들어가는 거예요? 변호사단체가 국민들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방송 전문가들입니까, 그분들이? 전혀 납득이 안 가는 구조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민변의 요구, 청구서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에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결국 정파적 이해관계를 가진 특정 세력에게 공영방송 지배권을 넘겨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자체로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과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 발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첫째, 방송 3법 개정안은 헌법적 차원에서 고찰해 보면 국가 구성 원리와 배치됩니다. 이건 제가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은 겁니다. 이것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헌법학자들한테 받은 겁니다.

공영방송은 헌법상 영조물로 분류가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국가가 공공 목적을 위해서 법률로 설립한 인적·물적 종합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행정기관과 민간기업의 중간 형태인 공법상 조직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특성은 공익 실현을 위한 자율성과 독립적 운영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특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그런 법인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조폐공사나 한국방송공사(KBS) 이런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공영방송이 이런 법적 성격으로 인해서 소유구조와 운영원리 측면에서 국영방송 그리고 민영방송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 부분이 공영방송의 본질적 특성과 역할을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행정 기능이나 입법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영조물로서의 행위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당연히 합헌적이어야 되지요. 그리고 합리적인 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MBC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이게 참 기형적인 구조인데 이런 구조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공영방송으로 분류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법상의 규제와 상법상의 규제를 동시에 받는데 이게 참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사장이 될 때 방문진에서 투표로 사장이 됐고, 그런데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주주총회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진 70%와, 물론 주주총회가 형식적인 면이 있지만 상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마쳐야만 MBC 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MBC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는 방문진,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을 보면 영국 BBC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행정권, 즉 방통위와 입법권이 교차하고 중첩되는 견제와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사실 공영방송이 가지는 헌법적이고 제도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당연한 전제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MBC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그 역할을 정당화하려면 KBS에 준하는 수준의 공적 감독체계를 적용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영방송은 본질적으로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지요. 그래서 정부와 기업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유구조 측면에서 공영방송은 국가나 민간자본과는 다른 법적 테두리 안에서 소유 및 운영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요. '공영방송 선임 시에 국가나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공영방송의 소유구조와 경영이 독립돼 있지 않느냐, 이거요 새빨간 거짓 주장입니다. 특히 선진국 BBC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국식을 닮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영국식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제도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권력작용의 하나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지

금 우리나라의 개정되기 이전 방송법 등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제도가 정치권의 영향력하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 이것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고요.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했던 분들이 아예 정치권이 직접 추천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꿀 먹은 듯이 조용히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13번 볼까요?

그래서 영국과 일본 비교를 해 보면 지금 개정되기 이전 우리나라의 제도가, 방송법이 영국하고 일본하고 굉장히 유사하고 위헌성이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정되기 이전 방송법상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제도가 영국 BBC, 일본 NHK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방송 제도가 잘못됐다고 하려면 먼저 BBC나 NHK의 제도 역시 잘못되었다 이런 논리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에 관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4번.

그래서 해외 사례를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공영방송 사장 임명 구조, 전 세계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정치권의 영향력하에서 정파 간의 타협과 합의를 통해서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숙의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3법 개정안이 외부적 간섭 금지라는 공영방송에 관한 헌법이론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헌법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방송사 독립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인데 대표적인 게 지난 2021년에 방송편성 간섭 금지 및 처벌 사건입니다. 이 판례를 분석해서 방송 3법 개정안과 비교해 보면 위헌성이 있음을, 이 방송 3법 개정안이 위헌적이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8월 31일 결정을 선고했는데 보시면 외부 세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이 간섭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방송 3법 개정안은 여기에 정면으로 위반돼서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게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당시 사건 개요, 앞서서 다른 분들이 필리버스터 하면서 많이 거론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 KBS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했지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읍소라고 들었는데 제발 좀 봐 달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걸 비판적인 보도를 멈추라고 또 전화를 받았던 사람은 그렇게 들었다 해서 방송법 4조 제2항 위반 혐의로……

방송법 제4조 2항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겁니다.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이 기소됐지요. 그래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항소심에서 방송법 제4조 2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했고, 그래서 헌법소원심판이 시작이 됐는데……

이 사건을 보면 당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조항, 그러니까 방송법 제4조 2항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이걸 규정하는 겁니다. 그걸 규정하는데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간섭행위 주체에 방송 3법이 권한을 확대하고자 의도하는 기관들이 소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은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결정의 원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 방송편성의 자유에 대한 보장과 그 제한에 대한 건데요. '헌법 제2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방송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 중 하나로 인정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고 누구도 방송편성에 관하여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방송법 제4조지요.

'그런데 방송의 자유에 대하여는 방송의 공익성과 같은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여러 유형의 제한 내지 규제가 행해지고 있는바 방송법에는 진입 규제, 소유 규제, 시장점유율 규제, 편성 규제, 광고 규제 등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두 번째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 금지 조항은 간섭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물론 그 주체와 객체, 간섭의 시점, 결과 발생 요부 등의 문제에 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해석을 통해서 규정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그래서 나 항에 보면 '우선 금지 조항은 누구든지 간섭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므로 그 행위의 주체는 가리지 아니한다. 그러나 일차적으로는 국가권력을 가리키고 나아가 다양한 사회의 제 세력을 모두 포괄하는바 여기에는 정당—여당·야당, 정당이 들어가 있어요—과 같은 정치권력은 물론 시민단체, 노동조합(언론노조 및 기타 노조)—노동조합이 들어가 있습니다—대기업이나 광고주 등 방송편성의 자유에 영향을 끼칠 만한 존재가 모두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방송법이 간섭이라는 용어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는…… 그 통상적인 용례에 따라 의미를 알 수 있어서 굳이 정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입법자가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간섭행위의 시점에 관해 보자면 간섭은 방송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인바 방송이 이미 이루어진 후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을 하거나 그 내용에 대해 비평·의견표명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간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금지 조항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방송사 외부에 있는 자가 방송편성에 관계된 자에게 방송편성에 관해 특정한 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송편성에 관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일체를 금지한다는 의미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도 내렸는데요. '청구인은 주장하기를 시청자는 왜곡된 보도에 대해 의견 개진 내지는 비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 조항이 그것을 간섭행위라고 하여 금지·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는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있는지 문제 된다.

방송법 규정들의 입법 취지와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 목적은 국가권력을 비롯한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이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방송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엄격히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은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한 심판대상 조항을 통해서 방송편성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나아가 형사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므로 그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에서는 ‘심판대상 조항은 방송편성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만을 규율한다. 즉 방송편성에 관한 모든 의견 개진이나 비판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금지 조항이 규정하는 간섭행위에 이르렀을 경우에만 금지·처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지 조항은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규제나 간섭인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방송법과 기타 방송 관련 법률은 시청자가 방송편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방송사업자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특히 청구인과 같이—이정현 수석이지요—특수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방송 내용에 대해 이견을 표명하기 위해 보도자료 내지 해명자료를 내거나 브리핑을 하는 등의 공식적인 방법을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 방송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초인바 국가권력은 물론 정당, 노동조합, 광고주 등—노동조합이 들어가 있습니다—사회의 여러 세력이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방송편성에 개입하여 자신들의 주장과 경향성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여론화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 의사가 왜곡되고 사회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어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심판대상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공익에 비해서 청구인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역시 충족한다’.

지금까지 제가 읽어 드린 것은 다소 장황했는데 판결문입니다. 이 판결문 설명을 좀 드리자면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런 결정이 1963년 방송법 제정 이래 심판대상 조항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이고 같은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해 처음으로 판단을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권력과 방송이 유착되어 온 우리 방송법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청구인인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2014년 4월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건 당시 KBS 뉴스 보도에 관해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하여 개입한 행위는 방송편성의 자유에 대한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외부의 간섭은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는 점을 사실상 재확인했고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고 헌법재판소는 또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방송편성에 대한 간섭 금지 조항은 누구든지 간섭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므로 그 행위의 주체는 가리지 아니한다. 그러나 일차적으로는 국가권력을 가리키고 나아가 다양한 사회의 제 세력을 모두 포괄하는바 여기에는 정당과 같은 정치권력은 물론이고 시민단체, 노동조합, 대기업이나 광고주를 비롯해서 방송편성의 자유에 영향을 끼칠 만한 존재가 모두 포함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방송편성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지금 법은 정당에서 직접, 국회에서 직접

추천하게 만들고 또 노동조합의 영향을 극대화하고 이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헌재는 헌법상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외부 간섭 주체에 시민단체나 언론노조도 포함된다라는 점을 굉장히 분명히 했습니다.

이게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판결이 난 거고요. 방송의 자유는 방송의 설립·운영·편성의 자유를 포함해서 이 중에서도 방송편성의 자유야말로 방송 자유의 핵심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방송 주체가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언론적 과제나 방식, 즉 방송프로그램의 선정, 내용, 그 형식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결정문에 따르면 간섭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된 행위의 주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섭 금지 주체는 앞서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국가권력은 물론이고 노조, 시민단체 등 다양한 사회의 제 세력을 모두 포괄합니다. 따라서 방송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금지된 다양한 사회세력이라는 것이 단지 국가권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당과 같은 정치권력은 물론이고 시민단체, 노동조합 그리고 대기업이나 광고주 등을 포함해서 방송편성의 자유에 영향을 끼칠 만한 존재를 모두 가리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자유를 비롯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초인바', 사실 이것 당연한 말씀이지요. '국가권력은 물론 정당, 노동조합, 광고주 등 사회의 여러 세력이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방송편성에 개입하며 자신들의 주장과 경향성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여론화하는 일이 발생하면 국민 의사가 왜곡되고 우리 사회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돼서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결정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헌법과 헌법재판소는 국가권력은 물론이고 노동조합, 광고주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세력이 방송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거나 개입할 경우 위헌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섭을 철저히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방송3법 개정안은 이러한 위헌적 요소들을 다 내포하고 있다는 거지요.

PPT 15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법이 하나가 통과됐는데 이게 발효가 되면, KBS를 보겠습니다. 현재 KBS 사장 임명 구조는 정치권의 직접 추천은 아니지만 관행으로서 여당 성향 7, 야당 성향 4, 그래서 이사회를 구성했고 여기서 사장을 뽑지요.

그런데 민주당 법, 오늘 통과된 법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의석수대로 하면 여당 4명, 야당 2명 그리고 법률 단체, 변호사단체 2 하면 민변이 하나 들어가지요, 들어갈 것 같지요. 학회 2, 학회가 언론학회·방송학회·언론정보학회가 있는데 지금까지 보인 걸 보면 대단히 편향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지요. 예를 들면 2017년에 고대영·김장겸 사장 물러가라고 연판장 돌리고 성명서 발표하고 했던 분들이 그 이후에 문재인 정권 내내 일방적인 언론노조의 전횡과 경영 악화 이런 것에도 입도 뻥긋 안 했지요. 그런 분들이 포함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청자위원회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추천 2, 임직원은 사실상 친언론노조, 대표노조가 다 추천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는 노동조합, 방송 관련 학회, 공영방송사 노조, 변호사 등만 공영방송사 KBS—뭐 이것 MBC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만 다릅니다. MBC도 13명, KBS 15명

이지요—이사 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사 추천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소위 헌법과 헌재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정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일정한 사회세력이 공영방송과 방송편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매우 크다, 이게 헌법학자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제가 독자적으로 쓴 게 아니고요 헌법학자의 의견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위헌적이냐? 이 방송 3법 개정안이 그러니까 다양한 사회적 세력이 동등하게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성의 요건이 있는데 이 가운데 공영방송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그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적이다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방송사들은 외적으로 다원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회사마다 성격이 다르고 공영방송은 내적 다원성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지요. 공영방송의 내용의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공영방송 이사 구성의 다양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방송 3법 개정안은 이러한 사항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지적입니다.

공영방송의 다양성 개념을 살펴보면 단순히 이게 무슨 다양한 의견을 나열하거나 개진한다 이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성이라는 게 인권 존중, 공정, 균형, 소수자 배려 그리고 다양한 시청자층, 시청자층도 다양한 시청자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이해를 반영하는 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사실 공영방송에서 수행할 핵심적 책무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MBC 사례에서 보듯이 김장겸 사장 퇴진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어디 유배지에 보내 가지고 유산을 하거나 또 특파원 나간 사람을 전원 소환하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이것은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이것은 그냥 이상한 집단이지요.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자기들과 의견이 다르다고 내부에서 굉장히 탄압하고, 그래서 정상화위원회에 불러 가지고 계속 취조하고. 참 이게 국민소득 3만 달러인 나라에서 소위 방송사에서 감사기구도 아니고 그냥 인민위원회라는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누구 올라와, 조사받아’ 그렇게 해서 계속 괴롭히니까 결국 회사 관두고. 그때 계속 강요한 녹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 조사를 받으면서 다 녹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김장겸이 시켰다고 그러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그게 법원에 제출되어서 결국은 MBC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 원을 물어 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인권 존중…… 굉장히 거리가 멀지요.

배현진 의원님 안 계신데 또 이야기하면, 배현진 의원님 지나가면 옆에 복도에서 욕합니다, 뭐라 그러면서. 그런 식의, 소위 초등학생들도 요즘 그러지 않을 텐데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이 수행할 핵심적 책무와는 거리가 굉장히 먼 거예요.

다양성 이야기를 좀 더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미디어와 콘텐츠의 다원성을 통해 실현될 수 있으며 공영방송은 직접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상업방송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소위 워치독, 감시견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것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사실 유럽에서 우리가 굉장히 자주 인용하는 데가 영국하고 독일의 공영방송, 공영방송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로서 인용하는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방송 판결

에서 다양성의 의미를 언급하면서 단지 의견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보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권 존중, 공정…… 공정도 예를 들어서 언론노조가 보는 공정함, 그거야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방송이지요, 민주당 방송.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반면에, 그 안에서 그러면 그런 하나의 목소리만 나오면 되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아니, 보수라고 그러면 무조건 적대시하고……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여러 구성원들이 섞여 있고 이런 게 돼야, 또 연령별로도 그렇고 성별로도 그렇고 이런 다원성이 확보가 돼야, 생각도 그렇고요, 그래야 공영방송이지요.

그래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개인과 집단, 제도와 관련해서는 언급할 가치가 있는 사회 집단이나 정신적 노선에서 실제로 발언할 기회가 있어야 하며 그 외에도 소수의 의견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 지역 다양성과 관련해서는 개별 지역에 존재하는 의견의 다양성이 표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 요구되었고, 방송 대상의 다양성과 기본 공급과 관련된 장르의 다양성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공영방송의 다양성은 편성, 대상 등에 있어서도 다양성이 구현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편성이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존폐시키고, 이게 경영의 핵심인데 다양성이 사라지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이념적인 프로만 깐다든지 또 오락 프로만, 물론 우리 방송법에 규정이 돼 있겠지만 오락 프로만 잔뜩 깐다든지, 시청률을 좇아서,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 특히 공영방송 이사의 구성에 있어서도 사회의 여러 세력이 참여하고 다양한 경향을 반영하여서 일반 대중의 이해를 반영하여야 합헌적인 조직 구성이다 이렇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의 다양성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상 요청되는 원칙을 사실은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저렇게 헌법학자들의 지적입니다.

이 방송 3법 개정안의 위헌성은 독일식 공영방송 이사 제도를 살펴보면 더욱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 중의 한 분이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PPT 16번.

독일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그러니까 이것 우리나라…… 최근에 이 법안이 여러 개 나오면서 독일식에 가깝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라고 그럽니다.

내용을 보면 독일의 제2공영방송인가요, 이것을 ZDF라고 부르나요? 이사회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 60명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보면 소위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의 대표자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합니다. 거의 모두 참여하고, 60명의 이사인데 연방과 주정부에서 직접·간접적으로 34명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8명은 각 직능단체별로 할당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추천하는 인원 중 상당수도 직능단체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래서 독일식은 전 세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식 가운데 아주 독특하고 복잡한데 그것은 뭐냐, 길드인가요, 길드? 봉건시대 이래 직능단체들의 영향력이 강했던 그런 사회 구조의 반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역사의 반영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치 시대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특히 공영방송이 한 기관 또 한

단체 또 특정 이념에 편중되면 절대 안 된다,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역사적 경험과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단체에게 집중하고 있는 개정안을 국민 여러분들, 지금 법안 하나는 통과됐고요, 두 개를 또 거대 여당 민주당이 통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17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독일식 모델의 허구성을 제가 좀 지적하겠는데,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은 쉽게 요약하면 영국식을 독일식으로 변경한다는 것이지만 사실 독일식이라는 말은 겉 포장으로 흉내만 냈습니다. 독일식이라는 말이 조금 나오다가 요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위헌적이고 위험한 내용이라는 것이 독일에서 공부한 헌법학자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사 추천 권한을 일부 노동조합과 특정 시민단체, 방송 관련 단체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과연 진정한 사회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구현하는 건가? 이것 아니고요, 독일식 제도와도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그 무늬만 독일식이지요. 무늬만 독일식이고, 이사 추천 단체를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보다 개악된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언론학회, 변호사단체 이걸 딱 정해 놨지요, 법률에. 그래서 위헌이라는 점은 이사들 구성에 있어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게 왜 독일식 모델하고도 다른가? 그 허구성 17번 보십시오, 17번.

아, 18번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저희들은 영국식에 가까운데 영국식의 이사 선임 제도를 독일식으로 변경하려면 독일 ZDF처럼 이사 수를 대폭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50인 이상의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데 개정안은 많아야 현행 이사 수에서 서너 명 증원하고 그것을 특정 단체에 다 나눠 줘서 친민주당 이사 구조로 만드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사 수를 대폭 확대해 가지고 특정 단체나 집단이 공영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게 독일식의 근본 취지인데 그런 근본 취지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변호사, 방송학회, 언론 종사자 등 특정 단체만 추천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기득권을 오히려 공고화하고, 그래서 현행 제도보다 개악입니다, 이건. 이것은 위헌적 성격이 큽니다.

사실 언론 종사자들은 국민들로부터 공정성을 감시받는 대상자들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마치 국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저도 언론 종사자로서 30년 근무를 했지만 저희가 어떻게 국민을 대표합니까? 제가 공정하게 보도했냐, 안 했냐 이것을 국민들로부터 반응을 받는 거지요. 감시 대상인데 여기서 지금…… 그런데 이 감시 대상이 이사진을 추천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법입니다.

넷째, 그래서 이 방송법 개정안은 특정 이념에 편중된 단체들의 영향력이 커짐으로써 공정한 이사 선임이 원천적으로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 기관들의 방통위…… 사실 이걸 언론학회, 변호사단체 이런데 나머지를 뽑는 것을 또 방통위 규칙으로 특정하게 해 놓은 것, 법률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위헌이라고 합니다. ‘정치권은 개입해서 안 되는데 방통위는 또 개입해야 된다’ 약간 이게 모순인데요. 그래서 위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에도 60명 이사 가운데—ZDF 같은 경우에—각 직능단체를 대표하고 있어 가지고 독일 내 거의 대부분의 주요 직능단체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개정안은 어떤가요? 언론노조 그리고 해당 방송종사자 대표 그리고 변호사협회,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학회 이런 단체들만 지금 이사 추천권을 독점하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는 헌법상 공영방송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방안 가운데 이사 구성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건 명백한 위헌적 조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국식인데 이걸 독일식으로 개정하려면 좀 더 많은 직역군—예를 들면 소비자단체, 의사나 약사단체 이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지요—그리고 중소기업 대표, 소상공인 대표, 종교단체도 독일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40~50개 정도의 다양한 직군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지금 민주당 개정안처럼 공영방송 이사를 지금처럼, 개정안처럼 선출할 경우에는 사실 여태까지 죽 지난 몇 년 동안 내세웠던 그런 개정 취지는 모두 사라지고 몇 개의 직군만이 공영방송사에 의사를 전달하고 관철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출하는 직군들의 대표를 어떤 기관·단체로 할 것이냐에 관한 기준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합니다. 이건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9번이요.

그러면 독일의 예에서 독일 제2공영방송의 이사진이 60명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연방과 주정부가 3명—연방정부 2명, 각 주정부 1명 그리고 정당 대표가 12명. 종교단체가 5명이네요—개신교 2명, 가톨릭 2명, 독일 유대인 중앙협회가 또 1명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노동 및 고용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독일노총이 들어가 있고 고용단체도 들어가 있고, 3명이 들어가게 돼 있고. 산업 및 경제단체가 5명—독일 고용주 연합, 산업상공회의소. 우리처럼 지금 일방적으로 친언론노조 일색으로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그리고 산업 및 경제단체가 많은 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계와 출판계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독일 신문사 연합. 사회복지단체가 또 4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3명 그리고 기타 사회단체 6명—독일 올림픽 스포츠 연합, 환경 및 자연보호단체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네요. 독일 이민자 연합, 스탈린주의 피해자 연합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 이런 게 들어가 있고.

또 주별 분야 대표가 16명인데 각 주에서 다양한 분야, 예를 들면 교육·과학·문화·디지털·성평등 등에 대한 대표를 선출하게끔, 그러니까 이게 독일법에서는 각 사회단체를 지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직군에서 어떤 단체가 추천할지는 사회단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다양성이 이사직을 선임하는 데 어떻게 반영될까 이걸 보면 기본적으로 각 영역에 할당된 각 주의 주법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이사 파견 방법에는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첫 번째 모델은 각 주에서 어떤 조직이 대표자를 파견할 수 있는지 주의 법으로 규정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에른주에서는 텔레콤(Telekom)1의 로비 조직인 비트콤(Bitkom)2가

방송위원회에 대표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두 번째 모델은 서너 개의 단체가 한 이사직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즉 1명의 이사에 대해서 모든 관련 단체가 동의해야 됩니다. 한 자리만 채울 수 있는데 4개의 조직이 1명의 위원을 파견하는 데 모두 동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분야를 대표하는 3개의 단체가 한 명만 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면 3개의 단체가 모두 추천된 1인에 대해 동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기독교단체들이 추천될 이사에 모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추첨을 통해서 1명의 이사를 선정합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개정안에 보면 언론 관련 학회들끼리 서로 합의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보면 언론학회, 방송학회, 언론정보학회 중에서 언론정보학회가 가장 제가 보기에는 왼쪽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서로 합의해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서 2명을 뽑아야 되는데 언론정보학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지금 아마 독일식 그거를 차용한 것 같은데 언론정보학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3개 단체에서 2명을 선출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들의 최대의 선호 단체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디테일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내가 이 조항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델은 주의회가 위임할 수 있는 기관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회 또는 주의회의 소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할 권한을 가진 조직 또는 단체를 입법부에서 결정합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방송법 개정안의 원래 모델인 독일에서는 우리 식의 방통위원회나 국가기관이 추천할 기관이나 단체를, 그러니까 지정하지 않고 그 해당 직역 내에서 추천할 단체나 기관이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송 3법 개정안에는 이런 자율적인 단체·기관 지정 방식에 의하지 않고 행정기관, 특히 방통위에서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바로 직접적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타율적으로 국가기관인 방통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독일식에 가깝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는 전혀 독일식의 자율규제 모델이 아니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행정기관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간섭이 직접 미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제도를 개악하는 방송 3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법체계상 및 헌법적 평가를 하면 첫째, 공영방송 특히 그중에서도 KBS 이사회 구성권은 행정권의 일부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속합니다. 헌법의 조직 원리에 의하면, 헌법 66조제4항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이 개정안은 방통위의 KBS 이사 추천에 관한 심의·의결권을 규정한 방통위법 12조를 무력화합니다. 그래서 법체계적으로 부정합하고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개정안은 대통령과 국회라는 이중의 견제와 균형 장치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격사유 판단 여지는 방통위에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민단체나 언론노조 등에서 추천한 인사를 그대로 임명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방통위의 임명권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어서 헌법상 권력구조의 형성과 운영원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헌법학자들의 지적입니다.

심지어 일정 시점이 지나면 이사들이 해임된 것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이사들을 일정 시점 이후에 사실상 임명을 강제하는 간주 규정을 두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에 의해서 대통령과 방통위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입법권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면서 권력분립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PPT 20번 볼까요?

정권이 바뀌어도 친민주당 다수 구조가 계속되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네 번째 보면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4개의 추천 그룹은 책임 없는 공적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공권력을 행사한다는 거지요. 이를 견제할 행정상의 절차나, 기관에 권한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데 KBS나 MBC 방문진, EBS는 공영방송 또는 공영방송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감독하는 기구로서 사실 이사회를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사회의 구성은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요구되는 공적인 결정기관입니다. 그런데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사적 주체가 실질적인 인사 결정권을 갖는 것은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민주적 정당성 원리에 반합니다.

또 이 규정은 헌법상 법치주의의 원리의 하부원리 중의 하나인 체계정당성의 원리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11월 25일에 헌법원리의 하나로 체계정당성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체계정당성의 원리라는 것은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이것은 수평적 관계거나 수직적 관계거나 마찬가지입니다—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돼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규범 상호 간의 구조와 내용 등이 모순됨이 없이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입법자를 기속하는 헌법적 원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 체계정당성 위반이 곧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헌성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아닌 사적 단체에 의한 실질적인 공영방송 이사 선정은 이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노조나 시민단체 등의 추천권은 사실 추천에 그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방송 3법 개정안에 따르면 추천이 아니라 임명이라는 행정행위를 대신하게 됨으로써 권력분립주의에 위배되는 명백한 위헌 규정입니다.

권력분립의 원리, 이것은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권력을 여러 개의 독립된 기관에 분산시켜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정부 구성 원리입니다. 이게 또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기관이 서로를 견제하게 하는 거지요. 권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헌법이론인 현대적 권력분립론을 들여다보면 입법·사법·행정의 분립이라는 그런 고전적 삼권분립 이론을 현대사회의 복잡한 정치 현실에 맞게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고전적 권력분립론이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권한을 분리하여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현대적 권력분립론은 권력분립 외에도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 다양한 사회세력 간의 조절 등을 강조합니다. 또한 현대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고요. 권력분립의 범위를 확장하고 때로는 국가권력의 효율적인 행사와 통합의 필요

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 가운데 노조나 시민단체 등 제3의 국가 외적 또는 사적 권력이 어느 정도 국가권력의 행사와 관련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이런 사적 단체들은 대통령이나 정부의 인사권과 행정권을 보완·보충하는 위치에 있을 뿐이지 스스로 국가기구처럼 정부나 국회의 권한을 대신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 3법 개정안은 사적 단체들이 추천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단수추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추천권이 아니라 임명권을 행사하는 위헌적인 결과가 야기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천권은 임명권자의 선택권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사적 기관이 추천하는 것이 사실상 임명을 강제하거나 임명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됨으로써 임명권자의 선택권을 아예 박탈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는 물론이고 현재 대한민국헌법 체계 속의 법률들에서도 유례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고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합니다.

노조나 시민단체 등의 추천은 행정기관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되고 더욱이 이들 사적 단체의 추천권이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게 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방통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위헌입니다. 만일 MBC 방문진, KBS, EBS 이사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면 오히려 이사들의 임기를 보장하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임명에 대해 국회의 비토권 이런 것을 인정해야지, 그렇게 해서 국가권력구조 체계 내에서 타협적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아무래도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은 잠시 뒤에 다시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된 게 MBC 방문진법인데 제가, 방문진법이 통과되고 시행이 된다면 지금까지의 언론노조의 전횡보다는 굉장히 더 심하겠지요, 이제 영구장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MBC라는 회사가, 그리고 언론노조가 그러면 과연 어떤 상황이냐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 수년 전에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들한테 들은 건데 우리나라 언론인들과 함께 미국을 소위 뭡니까, 뭐라 그러나요, 참관이라고 하나요? 그걸로 CNN을 갔대요. CNN을 가 가지고 우리나라 기자님들하고 같이 쭉 도는데 어느 한 기자가 그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자기 인솔 CNN 관계자에게 CNN이 진보 성향의 매체인데 트럼프가 집권했는데 왜 파업을 안 하냐 그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러니까 CNN 관계자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지요. 왜 파업을 하지? 그러니까 우리 기자, 우리 언론노조원들은 아니,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당연히 파업을 하는 게 해마다 익숙해졌는데 파업……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가. 그 CNN 관계자도 잘 못 알아들었고 자기도 저런 질문을 왜 하지 하니까, 보니까 MBC·KBS, 보수 정권 들어서면 사장 퇴진운동 계속 벌이고 그리고 자기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최문순 부장이 사장이 되는 것은 착한 낙하산이라고 그러고. 소위 그런 의식구조를, 의식구조의 단면을 제가 그 말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MBC의 경우를 보면 언론이 제4부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언론노조가 제4부입니다. 언론이 4부가 아니고 언론노조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걸

조금 들려 드리고자 합니다.

헌법적·위헌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너무 재미없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재미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서비스라고요?

(「재미있다고요」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런 겁니다. 대개 여러, 여기 언론인 출신들이 많은데 제가 정치부장일 때의 경험을 하나—사회부장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들려 드리면, 그게 오늘 방문진법이 상정된 MBC의 현실인데요.

제가 정치부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때가 지방선거였을 때였습니다. 보통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면 차장이 데스크를 봅니다. 차장이 데스크를 보고 부장이 마지막으로 그걸 보고 고쳐서 출고를 합니다. 그런데 휴일이었어요. 휴일 날 선거 관련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언론노조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했던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뉴스데스크,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뉴스 시스템이 노조에서, 그러니까 MBC 언론노조지부에서 다 볼 수 있게끔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기사가 데스킹 되는 과정을 언론노조 간부가 계속 지켜본 거예요. 일요일 날 나와 가지고 계속 지켜봤는데 차장이 그 데스크를 보고, 그 차장은요 직전에 언론노조 간부를 했던 후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부 차장이 데스크를 보고 나한테 '부장, 한번 보시지요' 이렇게 넘겼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출고를 시키려고 하는데 아니, 밑에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간부가—그 친구도 제가 사회부장 할 때 데리고 있던 후배였는데—올라왔어요. '부장! 이렇게 데스크를 보시면 안 되지요'…… 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언론사에서 그렇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노조 사무실에서 눈이 빠져라 그것 어떻게 고쳐지는가를 보고 있다가 그게 제가 최종, 저는 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본 줄로 착각한 것 같아요, 그게 누가 고치고 했는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고쳤나 보려고 하는데 아, 이것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언론노조 간부의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기사를 고쳤냐 이거야.

여러분, 편집권·편성권이 보호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보호가 아니지요. 뭐 깡패나 마찬가지지요. 올라와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들 그 입장에 마음에 안 든다고 '부장! 이렇게 데스크 보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지르고 해서 도로 내려갔어요. 제가 그때 했던 말이 기억이 아니, 삼성에서 와서 이렇게 하면 뭐고,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해서 하면 뭐고, 그런데 너희들이 와서 이렇게 기사 간섭하는 거 이것 통제 아니냐는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사실 소리 지르고 이런 간부들이 없었던가 봐요. 그냥 순응하고, 워낙 무서우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말은 맞으니까 내려갔어요. 내려가 가지고 다음 날 사과하러 왔어요. 사과하러 왔는데……

이런 것은, 아무리 노조가 강한 회사라도 이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편성권 자체가, 편집권 자체가 보호되어야만 그게 언론 자유지요. 이게 MBC의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언론노조의 영향력을 영구적으로 아주아주 크게 강화하는 이런 법안을 통과시켜 준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뭐 언론노조의 눈치만 계속 보지 않겠어요? 그런 현실을……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제가 적당히 그 언론노조의 말을 듣고 했으면 아마 좀 나았을 텐데 그 이후로 이른바 언론노조에 찍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저한테, 소위 민실위라고 있습니다. 언론노조 기구 중에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이렇게 돼 있어서 언론노조에서, 언론노조 MBC본부—그것 아마 KBS에도 있을 거예요—거기서 비판을 아주 계속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 자조적으로 이것 민실위가 민주당방송실천위원회 아니냐 그런 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언론노조에 찍히다 보니까 언론노조의 기관지 중에, 기관지 격이지요, 언론노보로부터 출발한 '미디어오늘'. 아, 미디어오늘 여기자로부터 봉변을 당한 적도 있는데 어떻게 당했냐 하면 보도국장 시절에, 보도국장은 하루에 세 번 정도 편집회의를 항상 주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회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시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웬 여자가, 웬 여성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아마 여비서는 문밖에서 잠깐 한눈을 팔았던 것 같고, 그러면서 자기가 미디어오늘 누구누구 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제가 얼마 전에 뉴스타파 여자 피디한테 국회에서 당한 것처럼, 아마 그분들은 그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다짜고짜 무슨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야, 비판이 있는데.

야, 이것 미치겠더라고요. 그 느낌이 뭐냐 하면, 내가 여기서 욕설을 하거나 혹은 잘못 접촉이 있거나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나가 달라. 약속 안 했으면 나가 달라' 했더니만 안 나가. 못 나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경호, 방호하는 분들 불러 가지고 끄집어내라고 그랬어요. 우리 여비서가 막 밀어내도 안 나가려고 그래. 그냥 막무가내예요. 그래서 겨우 이렇게 들어냈는데, 그래서 2시 편집회의를 겨우 했지요.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조사를 시켜 봤어요. 조사를 시켜 보니까 MBC는 국가방호건물 나급이에요. 나급인데, 이건 함부로 들어올 수도 없는 건데 여의도 사옥에서 언론노조 사무실 뒷문으로 들어왔어요. 언론노조 사무실 뒷문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뭔가가 일이 있었겠지요, 올라가 보라는 둥, 아마 추측건대. 나도 제보받은 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출입증도 안 달고 막무가내로 5층 보도국장실로, 보도국으로 그냥 온 거예요. 언론사에 계신 분들은 알지만 보도국에는 오늘의 주요 큐시트, 소위 우리의 상품, 팔 상품거리가 다 메모로 돼 있고 또 보면 무슨 아이템이 잡혔는지도 다 돼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영업비밀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물론 좀 허술했지만 어떻게 언론노조 뒷문으로 들어와서, 그냥 와서 보도국장실로 와 가지고 막무가내로 막 안 나간다고 그러고 결국 경비가 끄집어내고 이랬는데 그걸 참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무단침입과 퇴거불응 이렇게 해서 회사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니까 그걸 또 회사 내부에서 취하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또 있었는데 안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저를 법정에 증인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자기는 정당한 취재행위다……

여기 얼마 전에 뉴스타파가 제가 여기 의원회관에 밥 먹으러 어떤 손님들하고 갔는데, 그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갑자기 그냥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후보자와 관련해서 뭐 어쩌

고저쩌고하면서 청문회 관련해서 마이크를 들이대고 난리를 치더라고. 우리 옆에 보좌진이 있어 가지고 '뭐냐고, 이게. 나중에 하자' 그래도 계속…… 이게 무슨 조폭도 아니고요. 그러면 의원회관조차도 우리가 안에 못 돌아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현상을 겪었는데, 그때 보도국장 때 미디어오늘 여기자, 사실 첫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당했지요. 당해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를 했는데…… 그러니까 언론노조의 공세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막 정당한 취재행위……

제가 그랬어요.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판사님, 지금 2시에 재판인데 법원 뒷문으로 몰래 들어와서, 사무실로 들어와서 그때 재판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것 해명을 막 요구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취재 관행 어쩌고저쩌고하는데 지금 세종시의 공무원, 국장급 공무원실에 함부로 예를 들면 약속 않고 쳐들어갈 수가 있느냐, 취재한다고. 아니, 시대가 변했다……

그렇게 해서 벌금형으로 결국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그 사람은 받았는데 이게 언론노조와의 어떤 MBC의 소위 협업, 유착, 연대 이런 걸 상징해 주는 제가 가진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위 언론노조의,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이런 공세가 굉장히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보도국장 때지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평생 그걸 겪었는데 의원이 된 뒤에도 뉴스타파한테 겪었지요. 뉴스타파도 사실 언론노조와 한 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금은 의원이 아닌데 조응천 의원, 민주당 하셨지요. 내가 보도본부장 했는데 당시에 조응천 의원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폭로를 국회에서 합니다. 대법원 행정처장을 불러놓고요. 제가 그때 보도본부장 할 때 대법원 양형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응천 의원이 제가 성추행으로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다 이런 폭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행정처장을 불러 놓고 막 질문하니까 대법원 행정처장은 제가 누구인지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양형위원으로 있는 MBC 보도본부장—제 이름을 실명을 거론했어요—회사에서 말이야, 성추행으로 몇 년 몇 달 징계받았는데 왜 그 사람을 양형위원으로 쓰고 있냐'……

제가 그때 중국 심양 특파원 지사를 개설한다고 심양에 가 있었는데 그 발언을 들은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도대체 이 의원이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후배 중에 저하고 성이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차이도 많이 나요. 저도 본부장이고 그 친구는 부장인데 그 친구가 나하고 같은 거는 성밖에 없어요. 김 모인데 그 친구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그런데 조응천 의원이 청와대에서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한 사람인데 그거 모르고 했겠습니까, 확인하지 않고. 보도본부장을 어떻게 하겠다는데……

저는요 그것도 일단 질러 놓고 괴롭히자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형사상으로 다 걸었지요. 그건 너무 명백한…… 그런데 나중에 조응천 의원이 잘못했다고 사과문 올리고 했는데 이게 소위 면책특권이라고 그래서 형사는 결국은 검찰에서…… 그런데 그게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그건 면책특권이 안 되는 줄로 아는데 하여간 그것까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했어요. 그리고 민사로 건 게 제가 배상금 얼마, 몇백만 원 받아 내고 그걸로 끝냈습니다. 이런 게 소위 MBC에서 언론노조와 코드가 맞지 않으면 일어나는 현상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언론노조가 2017년에 저를 쫓아내기 위해서 파업도 하고 그랬지요, 시위도 하

고. 그래서 이사들 해서 결국 제가 해임이 됐는데 그래서 소위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의, 노동청의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현직 공영방송사 사장을, 그때 체포영장을 방송의 날에 문재인 정권 때 발부했습니다. 이게 언론노조 고발 사건입니다.

아마 제3세계에나 있을 법한 일이…… 우리가 뭐 자료를 안 낸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제가 노동청에 결국 출석을 했는데 조사를 받는데 저는 과연 뭐를 위반했을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조사 담당자가, '뭘 잘못했어요, 대체?' 제가 그러니까 임신한 여직원에게 야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있을 때는 MBC가 임신한 여직원에게 야근을 시킬 정도로 그런 흉측한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리고 그것은 부장 전결 사안이다' 그랬더니만 그것을 어떻게 특별근로감독, 그 당시에 저를 몰아내기 위해서 언론노조가 고발한 사건에 특별근로감독을 몇 달 했어요. 거기서 노동청 조사관들이 역으로 역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출산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역산을 한 거예요. 최근에, 한 달 전에 출산을 했다 그러면 이 여직원이 야근을 한 기록이 있느냐, 그러니까 임신 초기에는 본인이 임신한지도 모르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기자나 피디 여성분들이 일 욕심이 많아요. 일하려고, 뭘 좀 프로그램을 만들고…… 약간 숨기고 또 말 않고—말만 하면 무조건 야근은 배제해 줍니다—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그걸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언론노조가 통째로 고발을 했는데 그 야근한 여성 직원들이 저를 고발했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노조의 충실한 하명을 받아서 노동청이 조사를 해서 역산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그랬습니다. '부장 전결 사안을 사장이 어떻게 아냐?' 이랬더니만 그 노동청 조사관이 '그게 법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법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검찰에 넘기고 그 노동청 조사관은 나중에 상도 받고 승진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만큼 언론노조에 관련됐다고 그러면 그렇게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제가 조사받으러 갔지요. 내가 이것도 오늘 말씀드려야 되겠네.

검찰의 수사검사 중의 한 사람이 점심을 같이 먹자고 그래요. 점심은 원래 조사받다가 변호사하고 같이 먹기로 했는데, 문재인 검찰이지요, 점심을 먹으면서 '사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정권 바뀔 줄 몰랐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그래도 정치부장을 하고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을 해서 사장까지 왔는데 2017년 그 상황에서 정권 바뀔 줄 모를 리가 있겠냐' 그랬더니만 '그러면 사장 지원을 왜 했냐. 사장 되면 정권 바뀌면 이럴 줄 몰랐나' 그랬습니다. 그런 꼴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검사 이름이 뭐예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은 옷을 벗었더라고요. 옷을 벗고……

(「그래서 그 검사 이름이 누구냐고요」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지금 어느 기업에 가 있는지도 아는데 제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검사로서 할 말이 아닌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길이 있다. 나라고 어디 지방사나

가서 편하게 지내리라고 생각을 안 해 봤겠느냐.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았는데요. 제가 그걸로 유죄를, 그렇게 해서 유죄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가짜뉴스, 이 가짜뉴스에 굉장히 시달렸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친언론노조 매체, 언론노조와 연계된 매체 이런 매체들이 가짜뉴스를 막 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팀으로 움직이는 듯한 그런…… 그렇겠지요. 팀으로 움직이겠지요.

그래서 그 사례를 좀 설명해 드리면, 이래서 우리가 과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필리버스터 할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해임될 때 즈음에 한겨레신문이 보도합니다, 제가 안철수 의원에게 구명 로비를 했다라는 그런, 뭐 도울 일 없나 접촉 시도. 안철수 의원님이 그때 설명하기를 제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걸로 해서 흠집을 내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구명 로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리고 미디어오늘, 이 미디어오늘 아시다시피 언론노조의 기관지 격이지요. 미디어오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17년 8월 25일 자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요 현직 MBC 사장인데 TV조선에 출연을 요청했다, 제가 제안했다. 아니, 상식적으로 현직 MBC 사장이 내 구명을 위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흠집을 내려고 그냥 작문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당시 TV조선 사장이 학교 선배였기 때문에 전화해 가지고 '이게 도대체가, 내가 그렇게 출연 요청하면 내가 선배한테 직접 하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본인도 사실무근이라고 회사 측에서 사고(社告)라 그러나요, 해명 그걸 띄워라 이렇게 해서 띄웠는데도 미디어오늘은 그다음에 사과도 없고 정정도 안 해요.

그리고 여당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MBC 출신인데 김성수 그 당시 민주당 의원이 한겨레신문 인터넷에 났는데 카더라를 막 퍼뜨려요. "김장겸 사장이 자유한국당 관계자를 만나서 '내가 무너지면 자유한국당도 무너진다. 내가 보수의 마지막 보루이다. 나를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게 정말 기자 출신이…… 아니,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게 도대체 몇 번을…… 아니, 이것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떠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대놓고 퍼뜨립니다. 이런, 이게 MBC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 MBC의 구조상 자기 자신들 마음에 안 들면 내쫓고 이런 구조가 체계화돼 있는데, 그런데 그게 견제 효과도, 아무 견제 작동도 안 되게끔 이런 법을 통과시키면…… 그게 민영방송이면 또 모르겠습니다. 민영방송이면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하는 사실 그런 공영방송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KBS하고 같이 그렇게 보는데.

아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 부분, 이것 사실 제가 쓴 책입니다. 제가 쓴 책인데, 사례를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방문진 이사 중에 유의선 이화여대 교수 이분은 사실 저한테 '마음 단단히 먹고 버텨라, 정권과 언론노조의 공세가 심해질 텐데' 그러던 분이, 그렇게 격려하던 분이 학교에 언론노조원들 찾아가고 하니까 그냥 약해져 가지고 사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사 3년 임기 가운데 11개월이나 그 당시에 남아 있었고요. 그러

고 난 뒤에 유의선 교수가 조선일보에 사퇴 과정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언론 한 놈 손보기에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기고문을 이분이, 유의선 교수가 쓴 적도 있는데 결국 굴복했지요.

그래서 언론노조의 행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데, 유의선 교수의 말입니다. 인터뷰 내용입니다.

'저는 보수적인 학자입니다. 제가 지향하는 가치는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교권이 망가질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왔어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언론노조는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언론노조에 속한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일차적으로 저를—그러니까 유의선 교수를—비방하고 미디어가 짜깁기한 내용에 재학생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자기가 당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반론을 제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저한테 배운 제자들이—그러니까 유의선 교수한테 배운 제자들이—학교에 찾아와서 이것 어떻게 된 거냐고 묻지만 매번 일일이 어떻게 만나서 설명할 수도 없고', 상당히 그 교수는 난감한 거지요. '결국은 학교에서도 언론노조가 원하는 대로 되겠구나, 교권 침해가 구체화될 수 있겠구나 하는 직감이 왔다' 이렇게 유의선 교수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또 사실 언론노조가, 저도 수없이 고소·고발을 당했는데 언론노조가 쓰는 수법 가운데 하나가 고소·고발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야 하도 당해 봐서 여러 의원님들이야 좀 그렇다, 견딜 만하지만 이 학자분들은 언제 이런 걸 당해 봤겠어요. 그러니까 언론노조가 고소·고발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예요. 심리적인 압박감이 굉장히 크겠지요. 그렇게 언론노조의 압박에 의해서 퇴진한 유의선 교수의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앞에서 장황하게 언론노조의 정체성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주인 없는 회사는, 특히 방송사가 굳이 아니더라도 그런 회사는 세월이 흐르면 결국 노동조합이 주인이 되고 상전이 됩니다. 이것을 내가 어느 분한테 들었는데 실감을 합니다. 뭐 노동조합이 저도, 저도 노조원이었고 노동조합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조는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노조가 정치적인 행위를 하게 될 때는 그것은 노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 주인 없는 MBC·KBS—EBS도 마찬가지겠지요—그런 경우에 경영진이요, 지금은 사실 언론노조와 노사 동일체니까 어차피 마찬가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경영진이 노조와 부딪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너가 있는 회사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또 노조가 집요하게 공격하고 하면 경영진은 골치만 아프지요. 그래서 이렇게 굴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 몇 대 앞의 사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런 단체협약을 체결했어요—그러니까 노조의 압박에 굴복한 거지요—공정방송협의회를 둔다, 그리고 구성은 5대 5로 한다. 제가 그래서 지금 편성위원회 5 대 5 하는 것, 이것 사실 위헌적이기도 하지만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제가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MBC에서 공정방송협의회를 두고 구성은 노사 5 대 5로 한다, 그리고 가부 동수일 경우 가로 한다, 그걸 써 놨어요. 그게 이천십몇 년도의 MBC 단체협상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는, 그래서 그 공정방송협의회에서 보직간부들의 인사이동을 요구하면, 두 차례 이상 요구할 때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이걸…… 그러니까 그것을 단체협상을 했었어요, 그게 2012년도인가, 아마 제

기억에.

자, 그러면 언론노조가 인사권까지 다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그게 파업으로 이어졌는데, 그래서 노영 회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부 동수면 가로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래서 언론노조가 마음에 안 든다, 김장겸 정치부장 마음에 안 든다, 한 번 요구합니다, 인사이동 시켜라. 두 번째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단체협상에 따르면 반드시 인사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구조를 만든 게, 그러니까 그걸 보고 노영 회사라고 하고요. 언론노조의 영향하에 두는 게, 이게 정말 편향되고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언론노조 강령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전체를.

‘우리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 보도를 가로막는 권력과 자본의 횡포에 맞서 편집·편성권 쟁취를 위한 민주언론 수호투쟁에 나선다.’ 그러니까 편집·편성권을 본인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정치부장 시절의 경험을 보면…… 아니, 그러니까 편집권 자체를 언론노조가 장악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소위 진보 진영에 유리하지 않게 편집을 했냐, 데스크를 봤냐, 노조 사무실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와서 항의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을 보면 ‘우리는 언론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권익의 보호 및 신장을 위해 앞장선다’ 그리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언론노동조합운동의 역사를 계승해서 조합원들의 폭넓은 참여를 통한 조직민주주의를 실현한다’. 그다음에 보면 ‘우리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기치로 비민주적 법·사회 제도의 개혁과 인간의 존엄성 보장, 자유평등 실현의 한길에 힘차게 나선다’,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가 모두 하나라는 인식 아래 국제연대운동을 실천하고 전쟁을 반대하며 항구적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이게 이 부분에서, 이 강령 가운데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기치로’, 제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늘 논란이 됐습니다. 내용이 정파성과 정치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민주노총이 아니고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 강령입니다. 그래서 공정 보도를 주장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공정 보도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게 공정 보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공정 보도가 아니고 불공정 보도를 판단한다는 건데 누가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공정이라는 것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보는 공정과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보는 공정이 다를 수가 있고요. 또 지역별에서도 다를 수가 있고 또 계층별에서도 다를 수 있고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언론노조가 자기들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시 월간조선에서 MBC 언론노조가 주장하는 공정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문구가 있는데 이때는 MBC 노조가, 언론노조가 장장 170일간 파업, 사장 나가라고 파업을 벌인, 그 당시 이유입니다.

‘170여 일간 계속되어 온 MBC 노조의 파업이 끝났습니다. 지난 1월 30일 MBC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내세운 가장 큰 명분은 공정 방송이었습니다. 파업 시작 한 달여가 지난 지난 2월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지역지부가 내놓은 공영방송 MBC 정상화를 위한 파업 돌입을 선언한다라는 성명서를 보면 공정이라는 말이 여섯 번, 공영

이라는 말이 아홉 번 등장합니다.

MBC 노조는—언론노조를 지칭합니다—일찍이 1996년 창립 선언문에서도 공정 방송과 방송 독립의 실현을 위한 방송 민주화의 완성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MBC 노조의 상급단체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강령에도 우리는 공정 보도를 가로막는 권력과 자본의 횡포에 맞서서 편집·편성권 쟁취를 위한 민주언론 수호투쟁에 나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공정이라는 개념의 진정성입니다.

언론노조는 위원장 직속으로 정치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선언하고 있는 강령에 따라서 조합의 정치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노총과 제 민주단체 및 진보 정치세력과 연대하여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구입니다. 이 정치위원회는—이름도 그렇지요—사업의 하나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및 진보 정당 활동 관련 교육 선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위원회 규정 제2조에 있다고 그래요.

'이들이 말하는 진보 정치세력, 진보 정당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긴말이 필요 없지만 그에 대한 가치 판단은 일단 유보하고, 언론이 공정을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진보와 보수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침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 맞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이면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민간방송이면 FOX가 있을 수 있고 CNN이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이라면 진보와 보수, 남성과 여성—당연하겠지요—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언론노조는 한편으로는 공정 보도를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편향성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언론노조가 그런 언론노조를 상급단체로 하고 있는 것은 그 강령에 동의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주장하는 공정 방송, 공정 보도라는 외침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MBC 노조의 파업이 국민적 호응을 얻지 못해 실패로 돌아간 것도 그런 이중성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선이지요, 위선. 공정하지 않으면서 공정이라는 말을 쓰는 것…… 요즘은 또 공정이라는 말도 잘 안 쓰더라고요. 자기들이 아무리 공정하다고, MBC가 공정한 방송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국민의 절반, 그렇게 따진다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절반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공영방송의 행태로는 맞지 않지요. 그것은 민영방송이 가능한 거고 국민의 재산인 민영방송은 가급적 보수와 진보 어느 한쪽에도 치우침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합진보당과 언론노조가 2012년도에 정책협약서를 체결합니다. 해산된 통합…… 그런데 MBC 내에서도 2013년에 당시 김종국 사장이, 이분이 MBC 노조위원장 출신이에요, 언론노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언론노조 산별로 안 됐지만 좌우지간 노조위원장, 지금의 언론노조지요, 언론노조 MBC본부. 그런데 그런 분이, 이분이 이걸 비판했어요. 문제를 제기했어요. 얼마나, 자기도 노조위원장을 했는데 '야, 이건 너무 심하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디어오늘에 실린 기사를 보면 '김종국 사장은 조합이 소속돼 있는 언론노조, 그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는 정치위원회가 있고 규약상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지향하는 정파적 정치성을 띤 만큼 조합과 공정 방송을 논의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면서 '단체협

상은 하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뒤로 물러서거나 타협할 여지가 없다', 당시 김 사장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뿌리가 깊습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과…… 이 정책협약서 내용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언론노조의 뜻대로 다 됐습니다. 뜻대로 지금 다 됐고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언론노조와 대척점에 있는 KBS 공영노조가 언론노조를 비판한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총선이나 대선에서 거의 대부분 총파업을 하거나 파업 결의를 했다'. 언론노조가 그랬다는 것이지요. 언론노조의 행태는 반복적입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이틀 동안 또 파업에 들어갔다. 명분은 임금교섭이었지만 탄핵에 대한 압박이었다.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을 가결하자 바로 그다음 날 업무에 복귀' 했답니다. 그러니까 정치파업인 거지요. '2012년 대선 전에는 100일 동안 파업을 했다.'

보통 제 경험에 선거 때가 되면 항상 언론노조는 파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리하게 인사를, 파업을 푸는 대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인사이동을. 주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보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때도 공정 방송, 2012년 대선 전에 100일 동안 파업을 했는데 내거는 것은 공정 방송 쟁취, 이건 명목이지요. 당시 6개월은 아까 말씀…… MBC는 6개월 파업했고요. KBS는 당시 사장이 2노조, 소위 언론노조와 타협해서 중간에 노조 측의 요구 조건을 들어줘서 사실상 노조에 항복한 셈이다라고 KBS 공영노조가 지적하고 있는데요.

MBC는 노조 측의 요구를 거부해서 끝까지 갔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으로 재정 압박에 시달리던 노조 측이 항복하고 들어와서 그 이후에 MBC는 그 당시에 정상화, 이건 사실상 정상화입니다, 언론노조가 주장하는 정상화가 아니고. 언론노조가 주장하는 정상화는 언론노조의 뜻대로 다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주 상습적이지요. 언론노조 대표 등이 보수 정당 당사에 찾아가서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농성하거나 시위하고, 노조 대표가 촛불집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세월호 사건 당시 외부 세력들을 회사 앞으로 데리고 와서 공동으로 집회를 열고, KBS의 경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월호의 문제점을 언론 보도의 문제로 치환하면서 기자들을 '기레기' 이렇게 비하하고 이렇게 했다고 KBS 공영노조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언론노조원이라고 그러면 기자나 피디이고 굉장히 지성인으로 그렇게 생각할 텐데, 사실 언론노조는 기자나 피디가 주축입니다. 그런데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사장한테 침 뱉고 욕하고 국회 본관까지 침입해서 시위를 벌이고. 사실 국회는 국회 앞에서 100m 정도 이내까지는, 이 안에는 시위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본관, 국회의사당 지금 제가 있는 이 건물의 6층까지 그냥…… 그거 동영상은 다 확보됐다는데, 그 CCTV 그거 진짜 한번, 아마 경찰에 고발했을 텐데 수사가 빨리 안 되는데 그게…… 아니, 그렇게 해서 폭력시위를 하는데 우리 일반 국민들은 '기자나 피디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자나 피디입니다. 언론노조원입니다.

제가 당한 내용인데요. 2017년 11월 18일 날 제가 방송문화진흥회에 해임안에 대해서 소명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여의도 이쪽 방문진이 있었던 데 가니까 건물 입구에 현직

사장인 저를 ‘김장겸 구속’ 이렇게 써 가지고, 제가 부장일 때 같이 일을 해 봤던 후배들인데 앞에서 그냥 완전 지시해요, 제가. 상급자, 상관, 군대로 치면 장교가 쫄병들한테 기잡듯이 이렇게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완전히 인민재판식이지요. 그렇게 당했는데, 그게 언론노조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이렇게 해서 뚫고 가도 거기서 어떻게 무슨 자유로운 의사 표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다가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이것은 뭐…… 오히려 이렇게 물리적으로 막으면, 난리를 치고 하면 돌아가겠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 또 그 친구들이 탔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못 내려가게 또 밖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언론노조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한 말이 ‘엘리베이터가 못 내려가면—아마 어디 동영상이 있을 것입니다—이거 감금 아니냐’ 이랬더니만 소위 MBC 기자라는 자가 ‘공인이잖아요’, ‘공인이잖아요’ 그러잖아요, 현직 사장인 저한테. 이거 사장이고 뭐고 위계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공인이면 감금당해도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언론노조원들의 행태입니다.

제가 그때 한 말이 ‘공인이면 감금해도 되냐’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아주 선심 쓰듯이 ‘야, 내려가게 해 줘’. 그거 아마 언론노조원들이 찍은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저희가 그때는 회사는 상암동에 있고 방문진은 여의도에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그런 꼴을 당했는데 이제 차를 타고 회사로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장 차인 줄 알고 옆에 언론노조원이 탔어요, 또. 타 있어.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진짜, 그게 무슨……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 조직, 그런 집단에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무한 영향력 확대를 할 권한을 주는 법안입니다.

이런 폭력 행위가…… 2018년 방송문화진흥회 새로 구성돼 가지고 첫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소위 보수 성향 방문진 이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마 최기화·김도인, 두 분인 걸로 기억하는데 이 방문진 이사를 언론노조가 적폐라고 규정합니다. 적폐로 규정하고 아예 방문진—그것도 영상, 사진 다 나와 있습니다—가는데 못 들어가게 막고 추궁하는 거예요. ‘당신 적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추궁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것 명백한 업무방해지요.

그리고 소위 보수 성향의 이사들을 상대로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노조의 정치성, 편향성 그런 행태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 성향의 추천 이사, 방통위에서 소위 민주당에서 관례대로 추천했던 이런 분들은 그냥 들어갑니다. 아무 손도 안 댑니다.

아니,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노조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보수 정권 시절 소위 야당 추천으로 방송문화진흥회에 여러 명이 선임됐어도 언론노조가 이들을 적폐로 규정하거나 반대했다는 이야기는 진짜 단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입만 열면 불법 경영, 불법 선임 이렇게 됐는데 아니, 방문진에서 정상적으로 선임됐는데 뭐가 불법이란 말입니까. 자신들의 성향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불법인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무조건 적폐인 거야.

그리고 뭐 부역자 명단이라고 발표하고요. 아니, 부역자, 부역이라는 말을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부역자의 사전적인 의미가, 국가에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이 부역자예요. 그런데 이걸 언론노조가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든다고, 자신들의 성향에 맞지 않는다고 부역자라고 발표했어요. 아니, 언론노조가 무슨 법원이나 국가기관입니까? 그래서 무슨 반역 행위를 했다고 부역자 발표를 합니까.

이것은 그거겠지요. 언론노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 대해서 반역되는 일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국가에 반역이 아니고. 그게 올바른 표현 아니겠습니까, 부역자가. 그러니까 자신과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부역자라는 단어로 덧칠을 일단 하는 거지요. 그래 놓고 소위 친언론노조 성향의 매체, 진보좌파 매체를 통해서 확산합니다. 그래서 선전·선동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소위 문재인 정권 때 문제로 삼았던, 이거야말로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블랙리스트지 뭐가 블랙리스트입니까?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부역자로 낙인찍고 이게 블랙리스트지요. 남이 만든 명단은 블랙리스트고 자신들이 만든 것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그것은 자신들만이 선하고 자신들만이 공정하고 친민주당 방송만이 올바른 방송이고 이런 주장입니다. 전형적인 소위 이중 잣대, 내로남불입니다.

부역자라는 말이 북한 선전매체들이 주로 사용한다 그래요. 이것은 한번 어떤 측면에서는 참 곱씹을 만한 겁니다.

의장님, 잠깐 화장실에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의장 우원식 예, 다녀오세요.

○김장겸 의원 의원님, 다녀오겠습니다.

(「천천히 다녀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우원식 천천히 다녀오지 말고 빨리 다녀오세요, 용건만 간단히.

(「의장님, 무제한토론할 때는 자기 개인사 얘기 못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루 종일 자기 개인사 얘기하고……」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려면 법 개정안을 내세요.

○김장겸 의원 의장님이 빨리 오라고 그러셔서……

(「한 시간 남았으니까요 본인 신상발언하지 마시고……」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아까 위헌성에 관해서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헌법학자들의 위헌성 지적 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해 왔는데 그 위헌성 부분에 대해서 여섯 번째, 아까 제가 다섯 번째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어차피 위헌소송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록에 좀 남기고 싶습니다.

국회 각 교섭단체가 의석 비율에 따라서 6인을 지금 나눠 갖는 그런 방식은 오히려 공영방송 이사회를 정파화하고 갈등과 대립을 영속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KBS는 6명이고 MBC는 5명, 민주적 책임을 묻기 위한 국회의 개입은 간접적 통제에 머물러야 하고 인사 추천과 같은 직접적 개입은 입법기관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특히 국회가 대통령에게 재량을 주지 않고 구속력 있는 인사 추천 행위를 하는 것은 위헌성이 매우 짙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헌법 제40조의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입법권을 행사할 뿐 구속력 있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원리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설령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교섭단체의 합의 혹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피추천인을 결정하도록 해야만 여야의 변경에 상관없이 보다 중립적인 인사를 확보할 수 있으며 대통령도 거부감 없이 임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합의에 의한 추천이 대통령의 동의를 쉽게 끌어내서 공영방송 이사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민주적으로 강화하는 실질적인 그런 방안입니다.

일곱 번째, 공영방송 이사의 추천 기관 가운데 특히 시청자위원회에 의한 이사 추천 내지 실질적인 임명 행위는—지금 그렇게 민주당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공영방송 조직의 독립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현재 방송사 사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노조의 영향력하에 있는 위원들이 절반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청자위원회에서 추천된 이사들은 실질적으로 방송사 노조의 영향력하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는 해당 방송사의 노조에 의해 추천되고 임명된 이사들이 그 구성원들, 특히 자신을 추천한 노조의 활동을 적정하게 견제하고 감독하는 것은 원천적이고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시청자위원회에 의한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사실상의 임명은 헌법상 공영방송 독립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게 지금 시청자위원회가 2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걸 지금 개정안에서…… 그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는 편성규약의 문제입니다.

만일 공영방송 내부의 편성규약에 의해 사원들에 의한 이사 추천 문제를 규정하게 된다면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편성규약은 방송사 내부의 내용 편성에 관한 자율규약인데 전혀 무관한, 그러니까 심지어 상위 경영·감독 주체의 조직과 인사에 관한 내용을—상위 경영·감독 주체라고 하는 것은 KBS 이사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MBC 방문진 이사—규율하는 것은 규약의 성격과 기능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방송편성규약은 내부 규범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법규범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회 구성은 조직법적 요소로서 외부 규범인 법령에 의해 규율되어야 합니다. 규약의 효력 면에서 불가능한 효력을 부여하는 꼴입니다.

국회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조직 구성에 관한 중요한 규율 사항을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어긋나는 방송편성규약에 위임한다면 이는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이상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방송 3법의 내용 가운데 노조나 시민단체 등에 의한 공영방송 이사들의 추천권이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방통위의 이사 임명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와 법치 원리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홉 번째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또는 사장추천위원회—이건 뭐 공영방송, 민영방송 다 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신설 문제입니다.

현행 방송 관련법들에 따르면 KBS는 이사회가 사장을 임명제청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오늘 상정된 MBC 같은 경우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과반수 사장을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합니다. EBS는 방통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의하면 KBS·EBS·MBC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추위는 100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되면서 이런 여론조사 기관의 구성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추위에서는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에서는 5분의 3이라는 절대다수에 의해 사장을 선출하도록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영 보도채널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되는데—이게 지금 민영방송도 장악하겠다는 의도입니다—그 전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를 해서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가 임명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방송관계법 개정안 중에서 직접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한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PPT 21번 보면, 이 규정들에는 다음과 같은 법체계상 헌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방송법 제46조에 따르면 공영방송 이사회는 방송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며 사장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정당,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의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집행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자율적인 방송편성권의 실질적인 주체입니다. 이게 우리 방송법 제46조에 따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2019헌바439 결정에서는 사실 9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국가권력이나 다양한 사회세력의 간섭으로부터 방송사의 방송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헌법의 명령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개정법안은 방송편성권의 실질적인 주체인 사장의 선임 과정에 다양한 사회세력을 직접 끌어들여서 복수 추천을 하게 하고 이사회는 그중에서 임명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방송편성권에 대한 사회세력의 간섭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서 위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사회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고의결기관입니다. 그 책무 수행을 위해서 사장 임명에 관한 자율적 선택권을 갖는 것이 이른바 권한과 책임 일치의 원칙이라는 조직 원리에 부합합니다.

개정법안은 책임을 지지 않는 모호한 사회세력이 사장 선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입니다. 특히 민영방송사의 보도채널에 사장추천위원회를 강제로 두게 하고 위원회가 추천한 복수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임명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민영방송의 경영권, 즉 기업 경영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노란봉투법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입법권 남용 위험성이 높습니다.

나아가서 위원회 구성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에 의하도록, 그러니까 협의가 아닙니다. 합의에 의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경영권, 즉 기업 경영의 자유의 침해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공동 결정권에 기반하는 것이라고 강변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사실 전혀 근거 없는 궤변입니다. 공영방송에서의 공동 결정은 공영방송의 운영 및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공정성, 다양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함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공영방송의 경우 시청자, 제작진,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 이런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프로그램 내용, 제작방식, 운영방향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최종결정을 함께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결정과 사장 선임에서의 책임은 이사회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이사회를 배제한 채 사장후보를 3인 이내로 추천해서 거의 확정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이 방송에 평소 관심이 없었던 일반 국민들은 도대체 이 사장추천위원회 100인에 포함될 가능성이 없고 그러다 보면 일부 시민단체 출신이나 특정 이념 성향의 국민들로만 구성된 사추위에서 사장을 3배수 이내로 압축할 가능성이 높지요.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헌법과 방송법에 위반됩니다.

사장 추천과 결정에 있어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와 정부에 의해 추천된 이사들이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다양한 시각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방송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고 의사 왜곡의 가능성도 적습니다. 이로써 사회적 문제 해결 및 공론 형성에 기여하며 공동체 발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시청자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서 후보자들을 공개하고 추천 내지 평가를 받는 방식이면 충분히 시청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방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시청을 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로도 충분한 공동 결정 절차에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굳이 100인 이상의 시청자들이 사장후보를 직접 선출하는 데 관여하게 하는 것은 다양성과 민주성 확보를 넘어서 입법권과 행정권에 대한 과도한 관여와 국가기관 의사 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야기합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는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고의결기관입니다.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장 임명에 관한 자율적인 선택권을 갖는 것이 이른바 권한과 책임 일치의 원칙이라는 조직 원리에 부합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개정법안은 책임을 지지 않는 모호한 사회세력이 사장 선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PPT 22번.

민영방송사업자의 경영권 침해에 관한 위헌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개정 추진되는 법안에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에 노조 동의를 강제했습니다. 그래서—오늘 통과됐지요?—그게 발효가 되면 YTN 같은 경우에는 사추위를 구성해야 될 텐데 노조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영방송에 사장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인사권을 빼앗겠다는 거지요.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복수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임명하도록 강요하는 것이고 민영방송사의 경영권, 이것 사실 기업 경영의 자유에 대한 중대 침해지요. 입법권 남용 위험입니다.

그리고 23번 보실까요?

민영방송사업자 경영권 침해에 대한, 위원회 구성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에 의해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경영권 침해에 해당하는 위헌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방송법 제46조에 의해서 공영방송 이사회는 방송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며 사장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정당,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집행하는 최고책임자로서, 그러니까 자율적인 방송편성권의 실질적인 주체입니다. 이건 아까 설명드린 헌법재판소 판결과도 연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노조 등은 외부 세력입니다. 외부 세력으로서 공영방송의 조직이나 운영에 조언하고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공영방송 운영에 참여하고 중대한 결정을 할 어떤 민주적 정당성도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책임도 지지 않잖아요. 경영 부실이 나면 무슨 노조위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장 나가라고 또…… 자신들의 권한은 다 누려 놓고 책임은 사장 나가라고 그럴 겁니다, 사장보고 지라고.

그래서 개정법안은 방송편성권의 실질적인 주체인 사장의 선임 과정에 다양한 사회세력을 직접 끌어들여서 복수 추천을 하게 하고 이사회는 그중에 임명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방송편성권에 대한 사회세력의 간섭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고, 앞에서 살펴봤듯이 위헌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는 2019헌바439 결정에서 국가권력이나 다양한 사회세력—그러니까 다양한 사회세력이라는 게 반복하지만 정당, 시민단체, 노동조합입니다—등의 간섭으로부터 방송사의 방송의 자유, 그러니까 방송편성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헌법의 명령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4번 보실까요?

민영방송사의 경영권 침해, 편성위원회를 지금 아주 강제하도록 규정했는데 이걸 한번 볼게요.

지금 개정법안에는 사 측 인사 5명, 직원 대표 5명 여기서 모든 핵심적 방송편성 관련 의사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 측 인사 5명이라고 해도 다 직원들일 것 아니에요? 직원 대표는 대표노동조합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언론노조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편성권이 중대한 경영권의 하나인데 편성 관련 의사결정을 편성위원회에서 다 하도록 강제,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에서 다 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민영방송사업자의 경영권 침해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25번.

그러니까 모든 방송사업자는—이건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다 들어갑니다—반드시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게 민주당 법안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안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이 조항도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습니다.

어제 신동욱 의원이 지적했듯이 벌금 몇천만 원 받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방송사 재허가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지요. 이건 엄청난 위협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노동조합의 주도성이 보장된 그런 내용인데……

26번 한번 볼까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방송법 개정안 제4조와 제4조의2를 보면 방송편성규약의 제정과 개정은 편성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대상이며, 편성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5명과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명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법 개정안 제21조는 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시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범위와 동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이것에도 편성위원회가 등장합니다—편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편성위원회가 사실은 온갖 것 다 관여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라 하면 지금 KBS나 MBC의 보도 분야 종사자의 과반수가 제가 알기로는 언론노조원인 것 같은데 언론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보도책임자 임명을 못 하는 거지요. 인사권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어요. 사실 이게 단체협약으로 대부분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걸 굳이 또 법제화까지 시키는 것은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송법 개정안 제46조를 보면 KBS와 MBC의 이사 추천권을 가진 주체로 국회 교섭단체 6명, 이게 KBS는 의석수로 하면 여야가 4 대 2고 MBC는 5명인데 3 대 2로 그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말,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고 온갖 노래를 불러 왔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다수 의석을 무기로 아예 정치권에서 직접 추천하게 만든 위선과 민낯이 드러난 그런 법안입니다.

제가 87년 MBC 입사 이후에 이런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리한 정치 지형이라고 하루아침에 이걸 바꿨어요. 하루아침에 바꿔 가지고 아예 정당이 직접 추천해서…… 그러면 정당이 15명 중에, KBS 15명 중에 민주당 추천 4명 들어가면요 그중에서는 다수, 제일 다수 아닙니까? 거기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겠지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입김을 불어넣으면 KBS 편성이나 KBS 보도에 어떻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법을 어떻게……

그러니까 여태까지 진보좌파 진영에서 한 말이 있고 학자들이 한 말이 있는데,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직접…… 이건 너무 기이한 것 아닙니까? 이것 아무리 우리가 입장을 바꿔도 이런 식의 입장을 바꾸는 것은 참 심하다, 심한 정도가 아니지요. 이것 정말……

그리고 시청자위원회에서 2명, 임직원 과반수 이상 추천 3명 이렇게 돼 있는데 임직원 과반수 이상, 언론노조지요. 또 학회 추천 2명, 변호사단체 2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시청자위원회와 방송사 임직원의 추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해서는 방송규약으로 정한다' 이렇게 또 해 놨어요, 그 법안을 보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편성위원회의 의결 아닙니까? 편성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지요? 노사 5 대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노조가 이것까지 다 관여하게끔 만든 거지요.

방송법 제1조는 방송법의 목적을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

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두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송법의 존재 이유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보장 및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있는데 방송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협하는 정치적·사회적 도전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이번 개정안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방송사업자의 대표자인—그러니까 사장이지요—사장 선임과 방송편성 및 제작에 관한 권한, 이것은 일반 기업으로 치면 경영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한을 경영 주체인 방송사업자에서 사실상 노동조합으로 이관시킨 겁니다. 사실상 종사자 상당수가 가입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방송사업자의 의무 기구로 도입된 편성위원회 구성과 보도책임자 선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설명해 드렸지요. 그뿐만 아니라 직접 보도전문채널—그러니까 YTN 같은 경우입니다—사장 선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이 발효된다면 언론사의 노동조합이 앞으로 방송사의 사장 선임과 방송편성 및 제작에 얼마나 큰 지배력을 행사할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법의 핵심 목적이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해서 민주적 여론형성과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데 있다면 그 독립의 대상은 정파적 권력집단이 될 것입니다. 특정 세력의 주장과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주체가 될 수 없음은 명약관화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은 사실 전형적인 이익집단 아닙니까? 또 정파적 조직입니다. 노조가 대표하는 그룹은 특정 경향성을 공유하는 그런 언론노조의 상황을 앞에서 살펴봤듯이 특정 경향성을 공유하는 조합원입니다.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조합원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개선에 대해서만 권리를 인정받고 있을 뿐 방송사업의 핵심 영역인 방송편성 그리고 사장 및 이사의 선임에 대해서 전체 방송종사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방송종사자의 조합원 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노조 강령에는 '권력과 자본의 횡포에 맞서 편집·편성권 쟁취를 위한 민주언론 수호투쟁에 나선다'.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추구한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 규약 제6조에서도 언론노조의 목적 사업으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가 가입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강령과 규약에도 살펴봤듯이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 강령과 기본 사업에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의미를 노동자 대표의 정치적 진출 확대 그리고 노동자정당 건설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언론노조는 한편으로 방송사의 편성권 쟁취를 통해서 노동자 자주관리를 실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정파적 이익을 대표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노동자정당을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이건 뭐 강령에 나오는 대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언론노조가 자주적인 단결체로서 조합원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추구할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존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인 전체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방송의 독립성을 구현할 주체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민주당 방송법은 방송사업의 경영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편성위원회 위원 구성에 각

분야 방송종사자 대표에게 50% 구성권을 부여하고, 보도 부문에 책임을 부담하는 보도책임자 선임과 관련해서는 방송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부문별 방송종사자 대표가 누군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책임자 선임에 사실상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송종사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도 편성위원회의 결정, 그러니까 편성규약에 넘겼습니다. 이는 종사자의 상당수를 조합원으로 하는 언론노조의 파워가 발휘될 수밖에 없는 조건임은 명확합니다. 사실상 노동조합, 언론노조가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결국 민주당 개정안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선출하고 교체할 수 있는 경영자 아래에서 스스로 방송사업의 경영을 결정하고 국민의 눈, 귀, 입이 되어야 할 뉴스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방송사의 노동자 자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한 보도를 위해서 민주적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할 방송종사자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방송종사자가 공정 방송과 관련한 민주적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스스로 방송권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헌법의 정신과 부합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업자의 경영을 견제하고 독단적 결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 방송종사자에게 적절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조합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대상입니다.

전체 방송종사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방송법이 가야 할 길은 특정 정파적 이해집단의 개입을 가능한 차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방송의 운영과 편성이 좀 더 시민의 편에 가깝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외 세계 선진 각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다시 신중하게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 가네요.

이러다가 제가 마무리 발언을 못 할 것 같아서 미리 좀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헌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실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격랑 앞에 서 있습니다. AI가 콘텐츠를 만들고 또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가 방송·미디어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방송미디어산업은 여전히 20년 전의 낡은 규제 틀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념 논쟁 이런 데 방송법안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 와중에 레거시 미디어는 각종 규제에 발이 묶여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 반면에 지금 글로벌 OTT는 규제 무풍지대에서 무서운 속도로 몸집을 불리는 중입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이런 걸 거론하지 않더라도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송미디어산업은 그야말로 고사 직전입니다. 과거 콘텐츠 시장을 주도했던 TV방송은 이미 시청시간 1위 자리를 OTT에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스크린이라는 지위마저 상실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 조사업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TV 시청시간 중에 스트리밍 비중이 46%

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통적인 방송 18.5%, 케이블 23.4%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스크린이라고 불리던 텔레비전의 주도권은 이제 글로벌 OTT로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대 초반 애국가 시청률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유독 낮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을 지칭할 때 쓰던 말인데, 당시 애국가 시청률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005년도 닐슨 자료에 따르면 평균 0.5% 수준이었습니다. 불과 20년 전에 애국가 시청률이라고 비웃었던 0.5% 시청률이 이제는 황금시간대 지상파 드라마 시청률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지상파방송 드라마 시청률이 애국가 시청률입니다. 시청률 보니까 0.3~1.7%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드라마 한 편 제작에 얼마나 들까요? 제가 사장 시절에 제작비가 많이 드는 수목드라마 이런 걸 하면 한 회 만드는 게, 한 편 제작이지요, 1회에 4억 내지 5억이었습니다. 그러면 20회 만들면 100억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요새 얼마인지 아세요? 15억~16억이라고 그럽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20부작 아니고 12부작으로 만들면 200억 원의 제작비가 듭니다. 최소 비용으로 한다고 그래도 100억 원 정도는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시청률도, 광고도 이 산업을 지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졌습니다. '오징어게임'이 세계를 열광시켰는데 K-콘텐츠의 대표작으로 불리지만 그 이면을 보면 참담합니다. 제작비가 253억 원이 들어갔는데 넷플릭스 수익 추정은, 1조 원 이상 아마 넷플릭스가 가져간 것 같아요. 국내 제작사가 받은 수익은 한 25억 원 된다고 그럽니다, 25억 원 수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노동력만 제공하고 지식재산권은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돈이 많이 드니까. 아니면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K-콘텐츠는 성공했는데 우리는 하청기지로 전락을 해 버렸습니다.

넷플릭스 좀 알아보니까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비가 보통 한 160억 정도 든대요, 넷플릭스가. 주연배우 출연료는 최대 10억 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장일 때 우리 탤런트의…… 아주 유명 탤런트지요. 고집을 해서 1회에 1억 원 정도 해서, 꼭 필요한 배우라고 그래서 1억 원 정도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주연배우 출연료가 이제 10억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지상파조차 제작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마 수가 급감을 했지요, 우리 지상파에서. 2012년에 보면 한 해에 91편이던 지상파 드라마는 2023년에는 32편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지상파 전체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이렇게 되면 조연배우들이 이제 설 자리가 없어요, 주연배우들이야 또 여전한 인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중소 제작자들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상파방송이 글로벌 OTT에 예속되는—이미 예속된 지 오래됐지요—모양새인데, 그러니까 보면 MBC 같은 경우에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드라마 '무빙'을 편성했고 SBS는 자사 드라마를 넷플릭스에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향후 방송사가 드라마 편성 시간을 팔거나 제작 후에 플랫폼에 납품하는 스튜디오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글로벌 OTT의 부상은 유료방송 산업을 정면으로 무너뜨렸습니다. 2009년에 13%였던 유료방송 가입자 증가율이 2023년에, 2년 전에 0%로 주저앉았습니다.

케이블TV 영업이익은요 2015년에 4052억 원에서 지난해 149억 원, 96% 감소했어요. 당기순이익은요 4367억 원에서 2707억 원, 순손실로 전환됐습니다. 케이블 지역사업자—이것 SO라 그러지요—SO가 77곳 가운데 38곳이 적자 상태입니다. 2015년에 12%에 달했던 SO 영업이익률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0.5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한계점에 도달한 거지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TV를 켜고 지상파를 보는 시대는 끝나 가고 있습니다. TV는 틀지만 방송은 안 본다 지금 이렇게 돼 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TV 제조사들도 OTT 시청 전용 TV를 주력 제품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TV는 남았지만 방송은 사라진 묘한 풍경이 우리 각 거실에서, 각 집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송미디어산업이 무너지는 현실은 철저히 외면한 채 소위 정권 창출 공신에게 방송을 전리품처럼 나눠 주려는 그런 추악한 거래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민주당이 단독 추진하는 방송법은 산업개혁과는 전혀 무관한 정치적 담합 법안입니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내민 청구서, 정치적 청구서를 갚기 위한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이런 법안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 방송을 정파의 소유물로 전락시키는 방송법은 사실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방송미디어산업을 위기에서 구하고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구시대의 낡은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스크린의 주도권, 지식재산권과 플랫폼의 주권 그리고 지상파·유료방송 제작 현장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디어 구조를 개편해서 1공영 다민영 체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우리 대선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공영방송답게 공공성과 신뢰를 회복하고 민영방송은 다양성과 창의 경쟁을 통해서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론노조나 특정 세력이 공영방송을 사유화하는 구조를 끊고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영방송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뉴미디어 시대에 꼭 맞는 통합 규제체계를 만들겠습니다.

OTT, 유튜브 방송을 비롯해서 제도는 나뉘어 있지만 현실은 이미 하나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규제의 틀을 보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텔레비전 채널을 누르는데 지상파에는 술 광고가 안 되고 그런데 이쪽으로 돌리면 술 광고가 되고, 그런데 지금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들이나 사실 그게 뭐가 다른지 잘 몰라요. 그 채널이 지상파인지 OTT인지 무슨 구분이 있겠습니까, 채널이 뭐 수백 개가 있고 스트리밍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규제의 틀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낡은 이런 틀을 걷어 내고 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맞는 틀을 새롭게 짜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또 철폐하겠습니다.

광고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네이밍 스폰서 도입,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앞에 어떤 타이틀을 붙여 주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지난번에 제작자나 종합편성채널 혹은 여러 다른 지상파의 광고 채널, 지상파에서는 어떻

게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이런 분들이 이런 새로운 광고 유형을 도입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에게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많은 방송 재허가·재승인 제도도 손질하겠습니다. 매번 사업자가 눈치 보게 하는 그런 구조로는 사실 혁신이 불가능합니다. 승인 기간 늘리고 재승인·재허가 평가기준 이것 합리화해야 합니다.

대기업 지분 제한 이거요, 겸영 제한 이것도 너무 우리가 옥죄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넷플릭스나 어디 애플이나 거대 자본을 통해서 막 돈을 뿌릴 정도로 제작비를 뿌리면서 밀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지분 제한을 너무…… 대기업은 지금 10조 이상이면 지상파 같은 경우는 10% 미만으로 돼 있지요.

○의장 우원식 김장겸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겸 의원 예.

○의장 우원식 곧 제427회 국회(임시회)가 종료됩니다. 5분 내로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글로벌 자본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 방송·미디어 생태계는 사실 구시대 기준에 손발이 묶여 있습니다. 제가 방송사 CEO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플랫폼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현행 대기업 지분 보유 제한, 겸영 제한은 사실 시원하게 풀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과감한 규제 완화는 우리 제작사들이 넷플릭스에 지식재산권을 넘기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과감한 규제 완화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유와 책임. 그래서 이런 게 방송법 개정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와 책임, 표현의 자유와 공적 책임은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 사실 가짜뉴스와, 민주당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계실 건데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는 이제 방치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우리 국민이 정보를 믿지 못하고 사회가 갈라지는 일은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플랫폼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플랫폼의 뉴스 알고리즘 외부 검증 의무화, 매체 입점 심사 등도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산업 종사자와 아동·청소년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디지털 유해 콘텐츠 지금 너무 많지요. 여기에 무방비로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호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아이들은 사실 온라인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온라인에서 마약, 심지어 총기 제조법 그리고 폭력적이고 성적인 콘텐츠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유해정보와 디지털 중독으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유해 콘텐츠 차단 기술을 강화해야 되고요. 실효성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콘텐츠 제작 현장의 불공정 관행 이것 여전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방송사의 비

정규직 차별,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겠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 미가입 조합원을 보호하고요. 출연료 개선 등 방송 현장 종사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K-콘텐츠가 진정한 주권을 가지고 세계 속에서 인정받으며 국민 여러분의 안방에 다시금 다채롭고 건강한 K-미디어가 가득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최근에 보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 93개국에서 넷플릭스 TOP 10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41개국에서는요 넷플릭스 영화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OST는 빌보드 등 글로벌 음악 차트를 싹 휩쓸고 있어요.

○의장 우원식 이제 마무리해 주시지요.

○김장겸 의원 예.

한국이 이제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나 정작 제작은 해외 대형 제작사에서 만들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배급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방송미디어산업의 쇠락을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권력의 분배가 아니고 방송미디어산업의 구조개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시간이 없으므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장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4시 51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23시 59분이어서 7시간 8분 동안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토론도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오늘이 7월 국회의 마지막 날이어서 회기가 종료되는 날입니다. 제427회 국회(임시회)가 오늘 자정에 종료되므로 무제한토론을 더 이상 실시할 수 없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8월5일 23시5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투표 의원(265인)

찬성 의원(173인)

강경숙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92인)

강대식 강명구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 건
김기웅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헌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천하람 최수진 최은석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9인)

찬성 의원(203인)

강경숙 강득구 강승규 고민정 곽상언 구자근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선민 김성회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장겸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영하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배숙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28인)

권성동 권영세 김 건 김기웅 김선교 김소희 박성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배현진 서지영 서천호 신동욱 윤재옥 윤한홍 이종욱 이주영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정성국 정연욱 조승환 조은희 최은석 추경호

기권 의원(28인)

강대식 강명구 고동진 곽규택 권영진 김민전 김성원 김용태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박대출 박덕흠 박성훈 서범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용원
이달희 이상휘 이철규 정희용 조지연 최수진 한기호 한지아

(김은혜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반대에서 기권으로 정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문정복 의원 외 32인 발의)

투표 의원(250인)

찬성 의원(162인)

강경숙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조계원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87인)

강대식 강명구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 건
김기웅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준석 이헌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천하람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기권 의원(1인)

안상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6인)

찬성 의원(161인)

강경숙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조계원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반대 의원(61인)

강대식 강명구 고동진 곽규택 권성동 김 건 김기웅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선교 김소희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나경원 박대출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헌승 인요한 임종득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천하람 최보윤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기권 의원(14인)

강승규 김성원 김승수 김정재 김형동 박덕흠 박상웅 엄태영 이만희 이철규

임이자 정동만 정희용 조정훈

(다른 의원이 착오로 배준영 의원석에서 표결기 조작, 배준영 의원 반대에서 불참으로 정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7인)

찬성 의원(205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승규 고민정 곽규택 권성동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상욱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장겸 김재원 김정재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형동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인요한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계원 조배숙
조승환 조인철 조정훈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지아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반대 의원(13인)

김민전 박수영 서지영 손 솔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헌승 전종덕 정혜경
천하람 한기호 한창민

기권 의원(19인)

고동진 김미애 김소희 김용태 김재섭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충권 신동욱
안상훈 엄태영 윤종오 이철규 정동만 조은희 조지연 최은석 추경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6인)

찬성 의원(199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승규 고민정 곽규택 권성동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상욱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원 김정재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형동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인요한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계원 조배숙 조승환 조인철 조정훈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지아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반대 의원(15인)

김민전 김재섭 박수영 서지영 손 솔 윤종오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헌승
전종덕 정혜경 천하람 한기호 한창민

기권 의원(22인)

고동진 김미애 김소희 김용태 김은혜 박상웅 박성훈 박정훈 박충권 서명옥
신동욱 안상훈 엄태영 용혜인 윤재옥 이성권 이철규 정동만 조은희 조지연
최은석 추경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10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승규 고민정 곽규택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영배 김영진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형동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조계원 조배숙 조승환 조인철 조정훈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반대 의원(5인)

나경원 박준태 임종득 한기호 한지아

기권 의원(9인)

고동진 권성동 김민전 김선교 박덕흠 정점식 정희용 조지연 최은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2인)

찬성 의원(228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성동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미애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섭 김재원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형동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기권 의원(4인)

김정재 서왕진 유상범 이인영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8인)

찬성 의원(224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승규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권성동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형동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계원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반대 의원(1인)

전종덕

기권 의원(3인)

손 솔 윤종오 정혜경

(추미애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3인)

찬성 의원(231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승규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권성동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형동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동욱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기권 의원(2인)

곽상언 최은석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2인)

찬성 의원(231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승규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성동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병주 김상욱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형동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동욱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기권 의원(1인)

고동진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6인)

찬성 의원(236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형동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동욱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주철현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강명구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4인)

찬성 의원(225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구자근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형동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동욱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희용 조계원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주철현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반대 의원(2인)

용혜인 정혜경

기권 의원(7인)

민형배 서왕진 손 솔 안상훈 윤종오 장종태 전종덕
(김은혜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8인)

찬성 의원(236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승규 강준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상욱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형동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동욱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기권 의원(2인)

고동진 김민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0인)

찬성 의원(240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형동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동욱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8인)

찬성 의원(236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형동 나경원 남인순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동욱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은석 최혁진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기권 의원(2인)

노종면 장종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78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환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 희

반대 의원(2인)

이주영 천하람

○출석 의원(291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개의 시 재석 의원(247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범수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은석 최혁진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정아 황 희

○산회 시 재석 의원(37인)

김교흥 김대식 김동아 김민전 김병기 김장겸 김준혁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형배 박상혁 박수현 박정훈 박충권 서삼석 서지영 서천호 송옥주 어기구
우원식 윤준병 윤한홍 이기헌 이양수 이정헌 이헌승 임미애 임오경 정성국
정희용 조계원 주철현 채현일 최형두 추경호 허 영

○출장 의원(1인)

주호영

○청가 의원(4인)

강민국 김기현 김민석 진종오

○국회 참석자

사무총장 김민기
입법차장 진선희
의사국장 김승묵

○출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통일부장관 정동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국방부장관 안규백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출석 정부위원

교육부
  차관(장관직무대리) 최은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구혁채
  제2차관 류제명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행정안전부

차관(장관직무대리) 김민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기타 참석자

헌법재판소

소장 김상환

【보고사항】

○의원 등록

의원명	선거구	소속정당	연월일
이주희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2025. 7. 23.

○의석 승계

의원명	선거구	소속정당	연월일
이주희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2025. 7. 23.

○의장직무대리 지정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이학영

7월 24일 의장 출국 시부터 귀국 시까지

(2025. 7. 24.)

○상임위원 선임 및 개선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선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법제사법	장동혁	박형수	국민의힘	2025. 7. 29.
기획재정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박형수	장동혁	국민의힘	

○교섭단체 가입

의원명	선거구	교섭단체	연월일
이주희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2025. 7. 23.

○의안 제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5)

이상 2건 7월 24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5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2)

이상 3건 7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5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8)

이상 2건 7월 2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3)

이상 3건 7월 2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56)

7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8)

7월 24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59)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0)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6)

이상 6건 7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5)

7월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5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5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0)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5. 7. 23.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4)
이상 5건 7월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7)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2025. 7. 23.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7)
이상 3건 7월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5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5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9)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
(2025. 7. 23.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1)
이상 5건 7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9)
이상 2건 7월 2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166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권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6)
이상 4건 7월 2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4.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9)
7월 25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4.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4.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4.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2)
이상 3건 7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4.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4.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5)
이상 2건 7월 2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4.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4. 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4.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7)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4.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6)
이상 4건 7월 2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4.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0)
7월 25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4.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4)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4.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3)
이상 2건 7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4.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2)
7월 25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4.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4. 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5)

이상 2건 7월 2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4.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6)

7월 2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4.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0)

7월 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4. 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4. 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4.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4.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4)

이상 4건 7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2025. 7. 24.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4.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7)

이상 2건 7월 25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4.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3)

7월 25일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회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7)

이상 2건 7월 28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23)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2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5)

이상 5건 7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26)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

(2025. 7. 25.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8)

이상 2건 7월 2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3)

이상 2건 7월 28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7)

7월 2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20)

7월 2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1)

7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0)

이상 2건 7월 2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2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1)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2)
이상 9건 7월 2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0)
이상 2건 7월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8)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21)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발전 대책 촉구 결의안
(2025. 7. 25. 정희용 의원 등 17인 발의)(의안번호 2211724)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7. 25.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9)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3)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요구 철회 및 식량 주권 수호 결의안
(2025. 7. 28. 전종덕 의원 등 14인 발의)(의안번호 2211792)
이상 10건 7월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8)
7월 2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8)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4)
이상 3건 7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5. 7. 24.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6)
이상 4건 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7)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3)
이상 5건 7월 2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
(2025. 7. 28.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3)
7월 29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9)
이상 2건 7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2)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
(2025. 7. 28.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7)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2025. 7. 28.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4)
이상 3건 7월 2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8)

이상 10건 7월 2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2025. 7. 28. 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8)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5)

이상 5건 7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0)

7월 2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7)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2)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4)
이상 2건 7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6)
이상 2건 7월 2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1)
이상 2건 7월 2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감사원의 감사권 오남용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2025. 7. 29. 김선민 의원 등 15인 발의)(의안번호 221180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3)
이상 2건 7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4)
7월 3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0)
이상 3건 7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1)
7월 30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7)
이상 2건 7월 3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1)
7월 30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9)
이상 5건 7월 3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7)
미디어광고산업진흥법안
(2025. 7. 29. 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2)
이상 3건 7월 3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8)
이상 5건 7월 3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2)
아동건강기본법안
(2025. 7. 29.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8)

이상 5건 7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5)

이상 6건 7월 30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3)

7월 30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강대식 등 45인) 제명 촉구 결의안

(2025. 7. 30. 박찬대 의원 등 45인 발의)(의안번호 2211837)

7월 31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9)

이상 2건 7월 3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1)

이상 4건 7월 3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3)

7월 3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5)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25. 7. 30.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025. 7. 30.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7)
이상 8건 7월 3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5)
7월 3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1)
7월 3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5)
이상 2건 7월 3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2)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2)
이상 6건 7월 3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9)
이상 4건 7월 3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0)
7월 3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7)
국회의원(박찬대 등 10인) 제명 촉구 결의안
(2025. 7. 31. 주진우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211901)
이상 2건 8월 1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9)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
(2025. 7. 31.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6)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0)
이상 3건 8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
(2025. 7. 31.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1)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6)
이상 2건 8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8)
이상 8건 8월 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2025. 7. 31.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5)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7)
이상 2건 8월 1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1881)
8월 1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5)
이상 4건 8월 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2)
8월 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4)
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2025. 7. 31.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3)
이상 3건 8월 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0)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2)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7. 31.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5)

이상 5건 8월 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8)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4)

이상 6건 8월 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5. 7. 31.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3)

이상 3건 8월 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5)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9)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6)

이상 3건 8월 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52)

국회의원(강선우) 징계안

(2025. 7. 24. 유상범 의원 등 20인 요구)(의안번호 221170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8)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0)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
(2025. 8. 1.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7)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
(2025. 8. 1.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2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2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2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3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3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3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3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9)

이상 33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25. 7. 29. 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819)

한·미 통상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식량안보 확보 촉구에 관한 결의안(대안)

(2025. 7. 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84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8. 1. 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8. 1. 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3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8. 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3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8. 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3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8. 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3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8. 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8. 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2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8. 1. 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8. 1. 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2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8. 1. 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3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8. 1. 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3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8. 1. 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4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8. 1. 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42)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2025. 8. 4. 문진석 의원 등 167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11959)

○**의안 심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5.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5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7.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8.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4.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5.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4)

(이상 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건 교육위원장 보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29. 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8.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8.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9.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9.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0.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0.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3.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3. 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4.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7. 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1.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3. 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6. 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7. 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8.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9.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6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5.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4. 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8.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9.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0.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0.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3.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3. 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4.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7. 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1.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9)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3. 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6. 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8.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5.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7)
(이상 3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2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보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2.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0.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0.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2. 박정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770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3. 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7.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24)
(이상 7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7건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0.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5.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2.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4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7.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8.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7.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7.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1.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0)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0.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9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2.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7.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5.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9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7.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8.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7.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7.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0.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2.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5.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9.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8.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7.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0.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7.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1.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2)
(이상 3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2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4)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6.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16.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2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2)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8.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8)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6)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4.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21. 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0.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8.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6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4.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6.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30.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1.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1.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3.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0.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4.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2. 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9.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9.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7.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0.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6.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7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2.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8.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5)

(이상 2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9건 국토교통위원장 보고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인사청문요청안

(2025. 6. 30. 대통령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고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인사청문요청안

(2025. 6. 30. 대통령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고

이상 2건 7월 23일 정부에 송부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인사청문요청안

(2025. 7. 16. 대통령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고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인사청문요청안

(2025. 7. 16. 대통령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국토교통위원장 보고

이상 2건 7월 30일 정부에 송부

○의안 철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52)

7월 24일 발의자 철회 요구

○심사기간 통보

2024회계연도 결산

(2025. 5. 3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35)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5. 5. 3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36)

이상 2건 7월 23일 정보위원회에 심사기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결 전까지로 통보함

○**예비심사기간 통보**

2024회계연도 결산

(2025. 5. 3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35)

7월 23일 소관 상임위원회(국회운영·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여성가족)에 예비심사기간을 8월 25일 09시 30분까지로 통보함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5. 5. 3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36)

7월 23일 소관 상임위원회(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에 예비심사기간을 8월 25일 09시 30분까지로 통보함

○**청원 제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에 관한 청원

(2025. 7. 27. 박정윤 외 53,08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7)

7월 2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2025. 7. 25. 이태성 외 50,22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6)

7월 2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

(2025. 8. 1. 박민진 외 116,19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8)

해병대 비비탄 난사 사건 등 동물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

(2025. 8. 3. 남언호 외 50,28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9)

이상 2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서면질문서 제출**

역사왜곡 도서의 진중문고 선정 및 폐기 관련에 관한 서면질문

(2025. 8. 1. 정을호 의원 제출)

○**보고서 제출**

수사 개시 가능 부서 현황(비공개)

(2025. 7. 22. 대검찰청 제출)

7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송부

2024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 등

(2025. 7. 30 기획재정부 제출)

7월 31일 개획재정위원회에 송부

○**통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승계 결정 통지

2025. 7. 23.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 임광현 의원의 퇴직으로 궐원된 의석 승계자로 이주희 의원이 결정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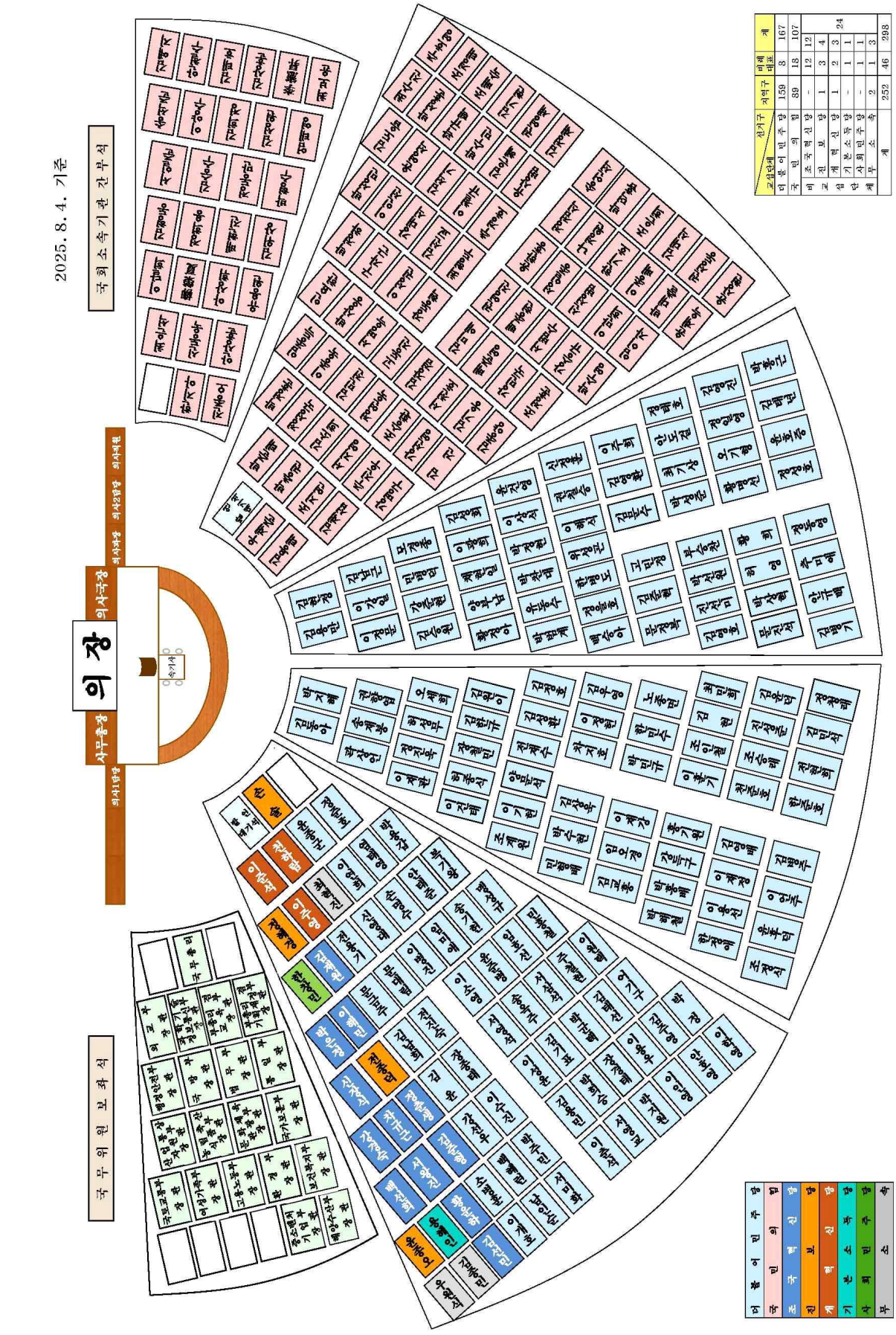
○**제428회국회(임시회) 집회 요구**

일시	2025년 8월 6일 오후 2시
집회근거	헌법 제47조제1항
이유	민생법안 처리 등
요구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외 272인

(2025. 7. 31.)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본회의장 의석표


2025. 8. 4. 기준
국회소속기관 간부석
국무위원 보좌석
의 장
사무총장
의사국장
의사과장
의사관리관
의사처원
속기사
교섭단체
의석구
지역구
비례대표
계
더불어민주당 159 8 167
국민의힘 89 18 107
조국혁신당 - 12 12
진보당 1 3 4
개혁신당 1 2 3 24
기본소득당 - 1 1
사회민주당 - 1 1
무소속 2 1 3
계 252 46 298